

## 충청남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 발 간 사 \_ 실수요자 시각의 인프라 연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건설산업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18.6%를 차지하고 200만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지역경제의 중추 산업입니다. 그러나, 지역 내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물량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 환경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인프라 예산 축소 때문입니다. 정부의 인프라 예산 축소는 인프라가 적정 스톡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과거에 비해 낮다는 근거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객관적인 실태조사에 기반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인프라 스톡에 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각, 양적·질적 인프라 현황, 투자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진단되어야 하지만, 중앙정부의 국정 방향에 따라 인프라 관련 예산 등 정책이 좌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민들이 현재의 인프라에 대해 정말 만족하는지, 얼마나 인프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설문조사를 통해 담았습니다. 또한, 인프라 재고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성능과 안전이라는 질적 측면의 분석 또한 수행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의 투자 상황이나 앞으로의 투자 계획이 과연 적절한지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종합적인 관점의 인프라 진단이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가 아닌 실수요자인 지역민의 시각으로 인프라 실태를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민들은 인프라를 삶의 질과 보다 맞닿아 있고 지역에 보다 밀착되어 있는 시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 측면을 강조해 온 과거 방식의 시각이 변화해야 하며, 중앙 주도의 획일적 투자 방식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역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의 top-down 방식이 아니라 bottom-up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지역에서부터 프로젝트의 논의가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실현되면 지역민들이 느끼는 인프라 개선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 발간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정치적 시각이 아닌 지역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인프라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파악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 인프라 관련 예산 등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7월  
대한건설협회 회장 유주현

## 발 간 사 \_ 지역 발전, 국민 안전과 삶의 질 높이는 연구 성과 기대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한된 시간과 자원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연구에 힘써 주신 이상호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연구는 지역별 인프라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한편, 제도 개선 과제와 인프라 재원 확보 방안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전국 모든 지역의 각종 인프라 시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으며,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지역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연구자문단 운영, 인프라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정책화를 위한 활동 등으로 연구 결과가 한층 내실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인프라는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성장,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이 기여한 바는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SOC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데서 여실히 드러나듯, 최근 정부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인프라 투자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시의 적절하고 연구원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인프라 예산의 축소는 그 영향이 비단 건설업계의 일감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 감소와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인식, 인프라의 노후화, 지역별 인프라 편차, 인프라 부족의 장기적인 영향 등을 세부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한 이 연구 결과가 더욱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정부 예산과 관련되고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어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었어야 할 일입니다. 정부의 관심과 여력이 미치지 못하여 건설업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지만, 이 연구가 건설업계만의 사업으로 오해되거나 가치가 절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예산 운용에 연구 성과가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원과 건설업계는 풍부한 근거 자료와 정치한 논리를 개발하고, 정책 당국자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인프라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가 지역 발전과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산업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일진월보(日進月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박승준

## 소 개 글 \_ 지역 인프라 실태를 기반으로 한 정책과 투자 필요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과 급감하는 SOC 예산이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오해가 존재하는 가운데 급증하는 사회복지 예산과 줄어드는 인프라 예산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적 시각은 인프라는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건설업계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복지와 반대되는 것으로, 사람이 아니라 콘크리트에 투자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매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프라에 대한 허상을 다양한 경로로 밝혀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프라에 대한 논의는 거시경제적 맥락에서 복잡한 수치에 기반한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지역별로 주민들의 실제 일상생활 영역에서 절실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그 인프라가 얼마나 부족한지, 일반 국민들이 인프라에 대해 갖고 있는 생생한 목소리와 눈높이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 연구는 바로 지금까지 논의되지 못했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를 처음으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실증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인프라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할 기회를 주신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님과 건설공제조합 박승준 이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는 16개 시도별로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몇 차례에 걸쳐 연구진과 지역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이만큼 많은 프로젝트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완공위주 집중투자' 정책의 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역의 인프라는 부족하며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프로젝트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시된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는 인프라 예산 확대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완공위주' 투자정책을 바꾸는 기초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많은 참여자들과 협업을 통해 수행했다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의 적극적 지원은 물론이고, 건설협회 시도회, 지역 연구원, 지자체 공무원, 지역 학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온 경험과 네트워크는 향후의 연구와 정책 활동에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8,500명이 넘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보고서에 담은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우리 인프라의 성능과 안전도는 보통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인프라 정책과 투자 수준은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인프라 정책도 ‘국민 눈높이’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를 못 따라가는 인프라 정책과 투자는 삶의 질을 위협하고 지역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될 것입니다.

인프라 연구는 이번 보고서 발간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해야 합니다. 인프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재원이 많더라도 인프라에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적절한 투자를 유도하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이상호

발주기관 /



연구참여기관 /



후원기관 /





**자 문 단 / 박해상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 회장**

강일권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장

임옥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 수석전문위원

이구영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수석전문위원

도순구 충남개발공사 관리이사

김주진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찬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  
윤리위원장

정원웅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 운영위원

송광석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 운영위원

방정혁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 사무처장

**참여연구진 /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산업정책연구실장

김영덕 연구위원

나경연 부연구위원

전영준 부연구위원

최은정 부연구위원

이가진 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

이관률 연구위원

오혜정 연구위원

김원철 책임연구원

김지훈 연구원

※ 자문단의 직위는 자문회의 개최 시점의 직위임.

## 차 례

요 약(Executive Summary)	i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구성	8
3. 기대 효과	10
(1) 본 연구의 특성	10
(2) 연구 결과의 파급 효과	11
제2장 충남지역 현황 및 여건분석	13
1. 일반현황 분석	13
(1) 충남지역 사회·경제 현황	13
(2) 충남지역 도시안전 실태	18
(3) 충남지역 재정 운용 현황	25
2. 지역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29
(1)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 진단	29
(2) 지역민의 행복과 인프라	34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38
(1) 충남도민의 분야별 삶의 질	38
(2) 충남지역 인프라 분야별 현황	55
제3장 해외 인프라 투자정책 및 사례	89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89
(1) 국가별 인프라 투자 추이	89
(2) 국가별 장기 인프라 계획상의 질적 제고 방향	95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108
(1) 미국	108





(2) 프랑스	122
(3) 독일	129
(4) 영국	131
(5) 아일랜드 더블린	134
(6) 벨기에	135
(7) 일본	140
(8) 싱가포르	145
3. 요약 및 시사점	148
(1) 요약	148
(2) 시사점	149
<b>제4장 충남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b>	<b>151</b>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151
(1) 도로·도로시설물	151
(2) 철도 및 항만	163
(3) 산업단지	166
(4) 전통시장 및 상가	170
(5)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188
2. 진단결과 요약 및 시사점	197
(1) 진단결과 요약	197
(2) 시사점	200
<b>제5장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b>	<b>203</b>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203
(1) 총괄 현황	203
(2) 주요 부문별 인프라 투자 현황	207
(3) 중기 인프라 투자 정책 전망	221
2.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232
(1) 인프라 사업 총괄	232
(2)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233

3. 충남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240
(1) 인프라 투자 정책의 문제점	240
(2) 인프라 사업 추진의 문제점	243
<b>제6장 지역 인프라 투자 수요 분석 및 대응방향</b>	247
1. 지역민 설문조사 개요	247
(1) 설문조사 목적 및 설계	247
(2) 설문조사 내용	248
2. 설문조사 결과	249
(1) 응답자 기본 정보	249
(2) 충남 인프라 만족도 평가	249
<b>제7장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 및 핵심사업 발굴</b>	279
1. 지역 인프라 투자정책의 기본방향	279
(1) 인프라와 지역 발전	279
(2) 지역 인프라 투자 축소에 따른 문제점	281
(3)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기본방향	283
2. 지역 인프라 투자정책 및 프로젝트	286
(1) 풍요로운 지역경제 구축을 위한 산업인프라 확충	286
(2)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 인프라 혁신	311
(3)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민의 삶의 공간 조성	337
(4) 국토의 중심지에서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351
(5) 지역민 행복 증진을 위한 생활공간 재창조	367
3. 부문별 프로젝트 요약 및 기대효과	386
(1) 부문별 인프라 정책 및 프로젝트 요약	386
(2)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의 경제적 효과 분석	388
<b>제8장 정책과제 및 시사점</b>	401
1. 인프라 투자역량 및 투자확대를 위한 제언	401
(1)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자원 확보	401



(2) 인프라 사업 발굴 및 투자관리 조직 보완, 관련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	414
(3)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 진단과 재투자 실행체계 구축	416
(4) 도시재생 사업 추진 확대를 위한 투자자원 다변화 필요	419
2.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 과제	423
(1) 충남지역 건설산업의 위상과 현황	423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제도·정책 운영 현황	427
(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432
 참고문헌	 435
 부록 1. 설문지	 439
 부록 2. 세미나 발표자료	 449

## 표 차례

표 1-1 내진보강 기본계획 1단계 추진실적(2015년 12월말 기준)	4
표 1-2 연구 범위	6
표 1-3 연구의 구성	8
표 2-1 충청남도 주요 인구통계	15
표 2-2 지역별 GRDP 추이	16
표 2-3 광역도의 자연재해 피해(금액) 현황	19
표 2-4 충남 시·군별 안전지수 현황(2016년)	20
표 2-5 최근 5년간 충남 화재피해 현황	20
표 2-6 최근 5년간 지역별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22
표 2-7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23
표 2-8 전국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추이	30
표 2-9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2016년도)	31
표 2-10 통근 및 통학 소요시간	33
표 2-11 교통부문 인프라 투자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의 유형	35
표 2-12 시군별 공교육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42
표 2-13 시군별 학교시설 및 설비에 대한 만족도	43
표 2-14 충남지역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46
표 2-15 시군별 도로 연장 현황	55
표 2-16 충남 도로시설물 설치 현황	56
표 2-17 시군별 교량 설치 현황	56
표 2-18 충남지역 산업단지 현황	58
표 2-19 노후 산업단지 현황(조성된지 20년 이상된 산단)	58
표 2-20 충남지역의 조성중 혹은 미개발단계의 산업단지 현황	59
표 2-21 전국 상수도 보급률 현황	59
표 2-22 충남 상수도관 설치 현황	60
표 2-23 충남 수도관 경과연수별 현황	61
표 2-24 충남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 현황	62
표 2-25 충남 시군별 하수관로 보급 현황	63
표 2-26 충남 향만 현황	63



표 2-27 항만별 면적 및 선석수, 물동량 현황	64
표 2-28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개발계획 현황	65
표 2-29 충남 어항 현황	66
표 2-30 충남 사회복지시설 현황	66
표 2-31 충남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67
표 2-32 충남 보육시설 현황	68
표 2-33 충남 의료기관 현황	69
표 2-34 충남 문화예술시설 현황	71
표 2-35 충남 지역별 도서관 설치 현황	71
표 2-36 지자체별 도서관 설치 현황 비교	72
표 2-37 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현황	73
표 2-38 충남 지역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	74
표 2-39 충남 관광시설 설치 현황	75
표 2-40 충남 하천정비 사업 추진현황	76
표 2-41 충남 소하천정비 사업 추진현황	76
표 2-42 충남 유수지 시설 현황	77
표 2-43 충남 학생 1인당 학교시설 면적	78
표 2-44 충남 지역별 폐교 현황	79
표 2-45 시·군별 기타 교육시설 현황	80
표 2-46 건축물 현황(2016년)	81
표 2-47 경과연수별 건축물 현황(2016년)	81
표 2-48 충남지역 주거유형별 현황	82
표 2-49 전국 노후 주택 현황	83
표 2-50 시군별 노후건축물 비중	84
표 2-51 노후건축물의 용도별 현황	85
표 2-52 전국 빈집 현황	85
표 2-53 전국 1, 2종 시설물 노후화 현황	86
표 2-54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87
표 2-55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현황	88
표 3-1 독일의 SOC 예산 규모	92

표 3-2 독일의 부문별 SOC 배분 현황	92
표 3-3 호주의 인프라 투자 규모	93
표 3-4 호주의 교통 부문별 투자 규모	94
표 3-5 일본의 SOC 예산 규모	95
표 3-6 일본의 부문별 SOC 예산	95
표 3-7 미국 부문별 정부 예산 계획	96
표 3-8 영국 2016~17년 분야별 인프라 프로그램과 규모	100
표 3-9 FTIP 2030의 목표 및 세부 전략	102
표 3-10 FTIP 2030의 교통 분야별 투자 계획	103
표 3-11 호주의 인프라 투자 계획 도크랜드 각 지구별 특징	106
표 3-12 도크랜드 각 지구별 특징	132
표 3-13 브뤼셀 도시 재생 관련 기관	138
표 3-14 Remourban 도시재생 프로젝트 도시	139
표 3-15 동경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례	142
표 3-16 싱가포르 건설산업 예측 (2017~22)	146
표 4-1 충남 도로 현황	152
표 4-2 충남 도로 지방도 현황	153
표 4-3 충남 시군도 현황	154
표 4-4 충남 지방도 교량 및 터널 현황	156
표 4-5 충남 시군도 교량 및 터널 현황	157
표 4-6 2016년 시도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현황	158
표 4-7 충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현황(2016년)	159
표 4-8 충남 교량의 노후화 현황	160
표 4-9 충남 시군별 교량 노후화 현황	161
표 4-10 충남 터널의 노후화 현황	162
표 4-11 충남 시군별 터널 노후화 현황	162
표 4-12 충남 철도노선별 현황	164
표 4-13 충남 항만의 일반 현황	166
표 4-14 충남 산업단지 현황	167
표 4-15 충남 시군별 노후 산업단지 현황	168



표 4-16 충남 산업단지의 휴폐업 현황	168
표 4-17 전통시장법 지원 정책 현황	170
표 4-18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2016년 기준)	172
표 4-19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체 편의시설 노후도	174
표 4-20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체 소방시설 노후도	176
표 4-21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체 일반시설 노후도	176
표 4-22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체 홍보시설 노후도	178
표 4-23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편의시설 노후도 비교	179
표 4-24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방시설 노후도 비교	180
표 4-25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일반시설 노후도 비교	182
표 4-26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시설 노후도 비교	183
표 4-27 시장별 평가 결과	185
표 4-28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수준 현황	187
표 4-29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D, E 등급 현황	187
표 4-30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분포	189
표 4-31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공사 중단 기간별 현황	191
표 4-32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용도별 현황	192
표 4-33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규모별 현황	193
표 4-34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원인별 현황	194
표 4-35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안전등급별 현황	195
표 5-1 충남 세입 예산 추이	205
표 5-2 특별회계 현황	207
표 5-3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예산의 주요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208
표 5-4 항만·해운 및 해양 관련 인프라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210
표 5-5 산업·경제 분야 인프라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211
표 5-6 도시 및 주택 관련 인프라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212
표 5-7 공원·녹지 관련 인프라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214
표 5-8 환경 관련 인프라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216
표 5-9 안전 관련 인프라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217
표 5-10 2018년 재해위험지역 정비 계획	218

표 5-11 문화관광·체육 분야 인프라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219
표 5-12 2018~2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부문별 투자계획	221
표 5-13 2013~17 부문별 예산 편성 현황	222
표 5-14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SOC 투자 계획	223
표 5-15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SOC 세부항목별 투자 계획	223
표 5-16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산업·경제 분야 인프라 투자 계획	224
표 5-17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농림·해양수산 분야 인프라 투자 계획	225
표 5-18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안전 분야 인프라 투자 계획	226
표 5-19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문화관광·체육 분야 인프라 투자 계획	227
표 5-20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산림 및 공원·녹지분야 인프라 투자 계획	228
표 5-21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환경 분야 인프라 투자 계획	229
표 5-22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도로 분야 인프라 투자 계획	230
표 5-23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하천정비 분야 인프라 투자 계획	230
표 5-24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 인프라 투자 계획	231
표 5-25 2018년 국토교통국 주요 인프라 사업 현황	232
표 5-26 도로사업 총괄	233
표 5-27 충남지역 고속도로 건설사업 현황	233
표 5-28 충남지역 신규 국도사업 현황	234
표 5-29 충남지역 국도 계속사업 현황	234
표 5-30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	235
표 5-31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236
표 5-32 내포신도시 사업 개요	237
표 5-33 충남지역 철도 인프라 사업 현황	238
표 5-34 기타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239
표 5-35 세출 예산 편성 현황(일반회계)	240
표 6-1 설문조사 개요	248
표 6-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49
표 7-1 지역발전 설정지표 사례	279
표 7-2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개념과 요소	280
표 7-3 우리나라의 시기별 인프라 투자전략	281





표 7-4 천안아산역주변 R&D 집적지구 세부사업 현황	289
표 7-5 서해 해수담수화사업 집적단지 연도별 사업비 투입 계획	302
표 7-6 국방산업단지 연도별 사업비 투입 계획	306
표 7-7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 연차별 사업비 투입 계획	308
표 7-8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 계획	313
표 7-9 충청산업문화철도사업의 사업비 투입 계획	315
표 7-10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사업비 투입 계획	318
표 7-11 천안역 개선사업 사업비 투입 계획	320
표 7-12 독립기념관 수도권 전철 연결사업의 사업비 투입 계획	322
표 7-13 해삼산업 복합단지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 계획	333
표 7-14 환경부 하수관로 조사 광역시도별 조사결과	340
표 7-15 노후 하수관로 손상에 따른 지반침하 현황	341
표 7-16 금강 생태복원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시설관련 사업 개요	343
표 7-17 외연도항 재정비 사업의 투자계획	345
표 7-18 아산호~삼교호~대호호 수계 연결사업의 투자계획	347
표 7-19 사업비 투자계획	350
표 7-20 백제왕도 복원사업의 재정투자계획	354
표 7-21 충남지역 11개 사업 현황	356
표 7-22 시군별 사업명 및 투자계획	359
표 7-23 해양라이프케어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비 투자계획	362
표 7-24 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의 사업비 투자계획	363
표 7-25 태안 해상관광테마 특구사업내용	366
표 7-26 시군별 도시재생 수요 현황	371
표 7-27 시군별 도시재생 사업 신청 현황	372
표 7-28 2018년 도시재생분야 예산 현황	380
표 7-29 국립해양 수산대학교 설립 사업비 투입계획	383
표 7-30 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설치 사업비 투자 계획	385
표 7-31 본 연구의 인프라 프로젝트 개요	386
표 7-32 충남 경제비전 2030 관련 100대 중점사업	389
표 7-33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	392

표 7-34 아산만 프로젝트 관련 사업 현황	394
표 7-35 청색산업 육성 프로젝트 관련 사업	397
표 7-36 행복공동체 프로젝트 관련 사업	400
표 8-1 SOC 예산상 신규사업 예산 편성 추이	403
표 8-2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대상 지자체 사업의 재원조달 현황	408
표 8-3 사업종류별 구가재정분담비율 현황	409
표 8-4 지자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촉진 조례의 내용 비교	418
표 8-5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구분	420
표 8-6 조세담보금융 활용 사례	421
표 8-7 광역지자체별 상위 5위 내 산업 생산 현황	424
표 8-8 전국 대비 충청남도 건설수주액(경상)	424
표 8-9 전국 광역시·도별 역내 공사 수주 비중 추이	425
표 8-10 전국 광역시·도별 역내 공사 수주 의존도 추이	426
표 8-1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방법 중 지역경제기여도 심사 산식	428
표 8-12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현황 (광역시·도 기준)	430
표 8-13 광역시·도별 지역건설산업 의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431
표 8-14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지원 내용	433



## 그림차례

그림 1-1	우리나라의 과거 SOC예산 추이(2004~18년)	1
그림 1-2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정부 SOC예산 추이	2
그림 1-3	우리나라의 1시간 이상 통근 인구 비율	3
그림 2-1	충청남도 추계인구수 추이	13
그림 2-2	충남의 인구의 순 증감 추이	14
그림 2-3	세종시 추계인구수 추이	14
그림 2-4	충남 합계출산율 추이	15
그림 2-5	충남 지역내총생산액(GRDP) 추이	16
그림 2-6	전국 대비 충남의 서비스업 비중 추이	17
그림 2-7	전국 대비 충남 경제활동참가자 추이	17
그림 2-8	전국 대비 충남 구인배수 추이	18
그림 2-9	도단위 광역지자체 인구 1만명당 화재발생건수	21
그림 2-10	충남 시군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2016년)	22
그림 2-11	충남지역 산불 발생원인	24
그림 2-12	충남 예산 규모 추이	25
그림 2-13	충남 전체 수입 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비중	25
그림 2-14	충남 기능별 세출 예산 추이	26
그림 2-15	도단위 광역지자체 재정자립도 추이	27
그림 2-16	도단위 광역지자체 재정자주도 추이	27
그림 2-17	타 광역도, 전국 대비 충남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추이	28
그림 2-18	2016년도 삶의 만족도	29
그림 2-19	OECD 회원국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0
그림 2-20	OECD 회원국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2015년도)	31
그림 2-21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추세	32
그림 2-22	'삶의 질' 부문별 기준년도(2006년) 대비 2015년 증감율	32
그림 2-23	시도별 통근·통학 소요시간	33
그림 2-24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만족도	34
그림 2-25	행복과 인프라 관계도	35
그림 2-26	지역민들의 24시간 필요한 요소들	36

그림 2-27 지역민들의 필요 요소에 대한 지원 인프라 구축	36
그림 2-28 지역민들의 의무생활시간 감소를 위한 행복감 증대	37
그림 2-29 지역민들의 의무생활시간 감소를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37
그림 2-30 충남 1인당 GRDP와 1인당 개인소득 추이	38
그림 2-31 충남지역 가구 월평균 소득 변화 추이	39
그림 2-32 전국 대비 충남의 실업률 추이	39
그림 2-33 충남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변화 추이	40
그림 2-34 충남지역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변화 추이	40
그림 2-35 충남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 추이	41
그림 2-36 충남 취업자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 추이	41
그림 2-37 전국 대비 학교시설 면적 비교	44
그림 2-38 충남지역 졸업생 취업률 현황	44
그림 2-39 충남지역 거주형태 현황	45
그림 2-40 충남지역 주거환경 항목별 만족도 변화 추이	45
그림 2-41 충남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46
그림 2-42 충남지역 대중교통수단별 만족도	47
그림 2-43 충남지역 1일 평균 일반폐기물 발생량 추이	48
그림 2-44 충남지역 1일 1인당 급수량 현황	49
그림 2-45 충남지역 용도별 전력사용량 비중	49
그림 2-46 충남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원별 생산량 현황	50
그림 2-47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 인식	51
그림 2-48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인식	51
그림 2-49 화재에 대한 안전 인식	52
그림 2-50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 인식	52
그림 2-51 충남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적 경험	53
그림 2-52 충남도민의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정주의사	54
그림 2-53 충남 도로 총연장 현황	55
그림 2-54 타 도단위 지자체의 도로포장율 현황(2016년)	57
그림 2-55 충남 및 시군별 상수도보급률 현황	60
그림 2-56 지자체 하수도 보급률 현황	61



그림 2-57 충남 하수관로 계획연장 대비 시설연장 추이	62
그림 2-58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계획 평면도	65
그림 2-59 지자체별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 시설 현황	67
그림 2-60 지자체별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현황	68
그림 2-61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현황	69
그림 2-62 지자체별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현황	70
그림 2-63 지자체별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현황	73
그림 2-64 지자체별 인구 십만 명 당 체육시설 수 현황	75
그림 2-65 내진보강을 마친 충남 홍성중학교 전경	80
그림 2-66 전국 주택보급률 현황	83
그림 3-1 미국의 총지출 대비 SOC 투자 규모	90
그림 3-2 미국의 부문별 SOC 자원 배분	90
그림 3-3 영국의 부문별 SOC 자원배분 현황	91
그림 3-4 호주의 인프라 분야별 기성 추이	94
그림 3-5 영국 2016~21년까지의 부문별 인프라 투자 계획	99
그림 3-6 영국 2020~21년까지 경제적 인프라와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	101
그림 3-7 FTIP의 예산 배분	103
그림 3-8 Sound Transit(시애틀 시 전철 시스템)의 미래 계획	114
그림 3-9 벨트라인 프로젝트	118
그림 3-10 실리콘밸리 내 고용, 인구 및 주택공급 증가율	119
그림 3-11 실리콘밸리 교통 정체 상승분	120
그림 3-12 LA의 향후 40년간 지하철 및 고속도로 건설과 투자 계획	121
그림 3-13 'Measure M' 투자계획	122
그림 3-14 마세나 남부 재개발 지역	124
그림 3-15 Zac Clichy - Batignolles 재개발 지역	125
그림 3-16 BAT	127
그림 3-17 개발 완료 후 그랑모또 휴양지 풍경	128
그림 3-18 독일 철도 프로젝트 사업별 예산 조달 현황	129
그림 3-19 Stuttgart 21 도심지 개발 계획	130
그림 3-20 개발 전후의 워핑 지구 광경	132

그림 3-21 영국 세인트오스텔시의 에덴 프로젝트	133
그림 3-22 더블린 디지털 허브 내 집적한 우수 글로벌 기업	135
그림 3-23 브뤼셀 주택개발 및 재생강화지구(EDRLR) 현황도	137
그림 3-24 오테마치지구 재생 1-1 개발사업 구역	143
그림 3-25 도쿄 미드타운 전경	143
그림 3-26 토라노몬 힐즈 전체 구역 개념도 및 재생 개념	144
그림 3-27 오모테산도힐즈 전경	145
그림 3-28 싱가포르 건설 산업 가치와 성장률 예측	147
그림 4-1 충남 도로망 현황	155
그림 4-2 충남 철도 노선도	164
그림 4-3 충남 항만 위치도	165
그림 4-4 공공과 민간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사업화 전략	172
그림 4-5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	189
그림 4-6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분포	190
그림 4-7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공사 중단 기간별 현황	191
그림 4-8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용도별 현황	192
그림 4-9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규모별 현황	193
그림 4-10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원인별 현황	194
그림 4-11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안전등급별 현황	195
그림 5-1 충남지역 SOC 예산 편성 추이	203
그림 5-2 SOC 예산 중 수송 및 교통 예산 편성 추이	204
그림 5-3 SOC 예산 중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편성 추이	205
그림 5-4 충남 세입 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비중 추이	206
그림 5-5 지방세 수입 비중 증감률 추이	206
그림 5-6 도로 및 도로시설물 예산 편성 추이	207
그림 5-7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예산 편성 추이	208
그림 5-8 서산공항 민항 유치사업 계획	210
그림 5-9 산업단지 조성 관련 예산 편성 추이	211
그림 5-10 충남 권역별 특화개발 계획	212
그림 5-11 태안관광레저 기업도시 조성 조감도	213



그림 5-12 내포신도시 조성 조감도	213
그림 5-13 도시숲, 명상숲,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예산 편성 추이	214
그림 5-14 아산 도시숲, 전경	215
그림 5-15 충남도서관 전경	220
그림 5-16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구간	220
그림 5-17 사회복지 및 SOC 예산의 전체 세출 대비 비중 추이	241
그림 5-18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수송 및 교통 분야 실제 투자액 현황	242
그림 5-19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사회복지 분야 실제 투자액 현황	243
그림 6-1 시군별 인프라 성능 수준 평가 결과	250
그림 6-2 연령대별 인프라 성능 수준 평가 결과	250
그림 6-3 인프라 시설별 성능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	251
그림 6-4 시군별 공원녹지 시설의 인프라 성능 수준 평가 결과	252
그림 6-5 시군별 주거시설에 대한 성능 수준 평가 결과	252
그림 6-6 시군별 철도부문에 대한 성능 수준 평가 결과	253
그림 6-7 시군별 지역경쟁력과 인프라 시설간 연관성에 대한 인식	254
그림 6-8 연령대별 지역경쟁력과 인프라 시설간 연관성에 대한 인식	254
그림 6-9 인프라시설별 지역경쟁력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255
그림 6-10 시군별 의료시설의 지역 경쟁력과의 연관성 인식	256
그림 6-11 시군별 교육시설의 지역 경쟁력과의 연관성 인식	256
그림 6-12 시군별 도로의 지역 경쟁력과의 연관성 인식	257
그림 6-13 시군별 터미널/정류장시설의 지역 경쟁력과의 연관성 인식	257
그림 6-14 시군별 인프라시설과 삶의 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258
그림 6-15 인프라 시설물별 삶의 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259
그림 6-16 연령대별 주거시설의 삶의 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260
그림 6-17 연령대별 산업/물류단지의 삶의 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260
그림 6-18 시군별 인프라의 노후도 및 안전수준에 대한 설문 결과	261
그림 6-19 연령대별 인프라의 노후도 및 안전수준에 대한 설문 결과	261
그림 6-20 충남 인프라 시설별 노후도와 안전수준 평가 결과	262
그림 6-21 충남 시군별 철도의 노후도와 안전수준 평가 결과	263

그림 6-22 충남 시군별 교육시설의 노후도와 안전수준 평가 결과	263
그림 6-23 충남 시군별 산업/물류단지의 노후도와 안전수준 평가 결과	264
그림 6-24 충남 시군별 사회적 재산으로부터의 안전 인식	264
그림 6-25 충남 연령대별 사회적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인식	265
그림 6-26 사회적재난 유형 중 위협의 우선순위 평가	265
그림 6-27 충남 연령대별 사회적 재난 유형 중 가장 위협이 되는 재난	266
그림 6-28 충남 연령대별 사회적 재난 유형 중 가장 위협이 되는 재난	267
그림 6-29 충남 지역별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인식	267
그림 6-30 충남 자연재해 유형 중 가장 위협이 되는 재해	268
그림 6-31 충남 연령별 자연재해 유형 중 위협이 되는 재해	268
그림 6-32 충남 지역별 현행 인프라 시설 투자 수준에 대한 평가	269
그림 6-33 충남 연령대별 현행 인프라 시설 투자 수준에 대한 평가	269
그림 6-34 충남 인프라 시설별 투자방향에 대한 의견	270
그림 6-35 충남지역 지역별 도로부문 투자 필요성 인식 정도	271
그림 6-36 충남지역 지역별 항만시설 투자 필요성 인식 정도	271
그림 6-37 충남지역 지역별 의료시설 투자 필요성 인식 정도	272
그림 6-38 충남지역 지역별 산업/물류단지 투자 필요성 인식 정도	272
그림 6-39 충남 인프라 시설 정책과 제반활동 평가	273
그림 6-40 인프라 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에 대한 인식	274
그림 6-41 충청도민의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인식	274
그림 6-42 타 광역시·도 대비 충남의 인프라 시설의 충족도 인식	275
그림 6-43 충남의 인프라 시설의 충족도가 부족하다는 인식의 사유	276
그림 6-44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현안에 대한 평가	276
그림 6-45 충남의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적인 인프라 투자 분야	277
그림 6-46 충남의 향후 중점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278
그림 7-1 인프라 투자 축소의 문제점	282
그림 7-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목표 및 정책방향	285
그림 7-3 산업·경제 인프라 확충의 목표와 전략	286
그림 7-4 천안아산역주변 R&D 집적지구 대상부지	288
그림 7-5 천안아산역주변 R&D 집적지구 세부사업 연계도	290





그림 7-6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부지 전경	294
그림 7-7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조감도	296
그림 7-8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사업 추진계획	297
그림 7-9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 위치도	299
그림 7-10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 부지 조성계획	300
그림 7-11	대산산단 및 해수담수화사업 부지 전경	303
그림 7-12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위치도	305
그림 7-13	가로 림만 국가해양공원 부지	307
그림 7-14	가로 림만 개발계획(안)	308
그림 7-15	사업 추진절차	308
그림 7-16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 합도	310
그림 7-17	교통·물류 분야 인프라 확충의 목표 및 전략	311
그림 7-18	장항 선 복선전철화 사업 위치도	313
그림 7-19	사업 추진절차	314
그림 7-20	충청 산업문화철도사업의 노선도	316
그림 7-21	충청산업문화철도사업 추진계획(안)	316
그림 7-22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노선도	318
그림 7-23	천안역 개선사업 사업비 투입 계획	321
그림 7-24	사업 추진 절차	323
그림 7-25	독립기념관 수도권 전철 연결사업 위치도	323
그림 7-26	당진~아산 고속도로 위치도	325
그림 7-27	국도 38호 노선 연장 구간 위치도	327
그림 7-28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간) 위치도	329
그림 7-29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에 따른 이동거리 비교표	330
그림 7-30	해삼산업 복합단지의 목표 및 전략과제	332
그림 7-31	해삼산업 복합단지의 사업부지 현황	332
그림 7-32	당진 복합물류단지 조성계획	336
그림 7-33	환경·안전 분야 목표 및 전략	337
그림 7-34	안흥항 내진보강 대상 구간	339
그림 7-35	(구)장항제련소 인근 송림숲단지 전경	343

그림 7-36 외연도항 위치도	346
그림 7-37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 연결 사업의 위치도	348
그림 7-38 관광문화 분야 인프라 투자 목표 및 전략	351
그림 7-39 사업 추진 절차	353
그림 7-40 공주 공산성 및 부여 왕흥사지 복원 조감도	353
그림 7-41 사업 추진 절차	355
그림 7-42 충남지역 11개 사업의 위치도	357
그림 7-43 충남 18개 사업의 위치도	359
그림 7-44 해양치유관광산업 유치 여건	361
그림 7-45 사업 추진 절차	362
그림 7-46 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의 위치도	364
그림 7-47 태안 해상관광테마특구 위치도	365
그림 7-48 태안 해상관광테마특구 구상도	366
그림 7-49 주거·교육 부문 인프라 목표 및 전략	367
그림 7-50 국립해양수산물대학 잠정 입지 현황	382
그림 7-51 국립해양수산물대학 사업추진절차	382
그림 7-52 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설치 잠정 부지	384
그림 7-53 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설치 사업추진절차	384
그림 7-54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388
그림 7-55 아산만 프로젝트 개요	393
그림 7-56 청색산업 육성 프로젝트	396
그림 7-57 행복공동체 프로젝트	399
그림 8-1 지자체 자체사업 대비 보조사업 비중 추이	407
그림 8-2 민간투자사업 추진 건수 및 금액 추이	413
그림 8-3 공공투자사업 추진절차	415
그림 8-4 저소득층주택 세금감면 프로그램 개념도	422
그림 8-5 충남지역 공종별(건축, 토목) 건설수주액 추이	425
그림 8-6 부실·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34

## 요 약(Executive Summary)

---

### Part 1 : 연구의 배경 및 개요

- 정부는 2018년 SOC 예산을 2017년의 22.1조 원보다 20% 감소한 17.7조 원으로 계획함. 이후 국회에서는 동 예산을 19.0조 원(전년대비 14.0% 감소)으로 최종 확정하며 급격히 축소
- 충남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환경에 대한 실태 진단을 통해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 제시
  - 지역의 노후인프라 실태에 대한 진단과 인프라 투자 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지역민의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핵심 인프라 투자 발굴 및 개선방향 도출
  - 최근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및 노후 인프라 대응 움직임에 발맞추어 충남지역의 인프라 투자 및 개선 유도
  - 인프라 투자 및 지역 건설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촉진
- 본 과제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충남연구원과 협력 연구를 통해 인프라 실태 파악, 투자수요 진단, 투자 방향, 정책 과제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
  - 충남의 사회, 경제 현황과 인프라 수요 분석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인프라 수요 분석
  - 부문별 인프라 실태 진단 : 주요 인프라 시설별(도로 및 철도, 상·하수도, 주택, 산업단지,
  - 충남지역 인프라 정책에 대한 진단 : 인프라 투자정책 현황 및 부문별 인프라사업 현황 진단, 중장기 인프라 투자전망
  - 충남도민의 인프라 수요 진단 : 인프라의 지역경쟁력 및 삶의 질에 대한 영향도, 인프라의 노후화 및 성능 평가, 향후 인프라 공급의 우선순위 등

- 향후 인프라의 투자방향 및 부문별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정책) : 산업·경제, 교통·물류, 환경·안전, 주거·지역, 문화·관광 등
- 인프라 투자정책방향 및 재원조달 방안

## Part 2 :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시설

- 충남은 최근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생활과 지역경제 성장과 직결된 인프라 수요 증대 예상
  - 충남지역 인구는 2012년 세종시 분리 이후 축소. 그러나,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sup>1)</sup>로 2016년 세종시 분리 이전 수준 회복
  -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속 증가해 지난 5년 간 전국 평균을 상회함.<sup>2)</sup> 그러나, 최근 증감률은 다소 축소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sup>3)</sup>로 지역경제 성장 견인. 그러나, 첨단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sup>4)</sup>은 문제
  -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음.<sup>5)</sup> 사업체 수 증가로 일자리 여건도 개선<sup>6)</sup>

→ 인구 증가 및 지역 성장에 따른 교통 및 물류, 생활 인프라 수요 증대 예상  
 → 제조업 중심의 지역적 특성상, 산업 인프라 수요 증대 및 첨단 산업의 육성 필요성 증대에 따른 산업시설의 집적화 수요 증대

- 충남의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 등에 의한 지역 안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큰 상황
  - 강풍 및 호우/태풍 피해 등 자연재해 피해는 건수로는 많지 않으나, 피해금액 규모는 타 광역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 사회적 재난(화재<sup>7)</sup>, 교통사고<sup>8)</sup>, 범죄, 안전사고<sup>9)</sup> 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도 지속
  - 서산시, 보령시의 종합 안전등급 9등급, 청양군 등 안전등급 10등급
  - 최근 5년 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모두 여전히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2017년 39.3%). 1인당

1) 2003년 이후 지난 14년 동안 충남 순증가인구 18만 4,169명

2) 최근 5년 간(2011~2016년) 충남 GRDP 5.0%, 전국 평균은 4.2%

3) 2016년 기준 제조업 비중 44.9%, 전국 평균은 26.5%

4) 첨단 제조업(전자부품, 영상 및 음향, 통신장비제조업 등) 비중 : 2010년 43.6% → 2016년 39.5%

5) 최근 10년 간 경제활동참가율 63.5%(전국 평균 62.0%), 고용률 61.5%(전국 평균 60.4%)

6) 충남 구인배수(신규 구인인원/신규 구직건수) 변화 : 2007~11년 연평균 0.79 → 2012~16년 0.8

7) 충남지역 5년 간 연평균 화재발생 건수는 2,900여 건, 인명 피해는 연평균 102명

8) 충남지역 교통안전등급 중하위 등급. 특히,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에 있어 청양군(45.0명), 부여군(42.0명), 태안군(36.8명)은 매우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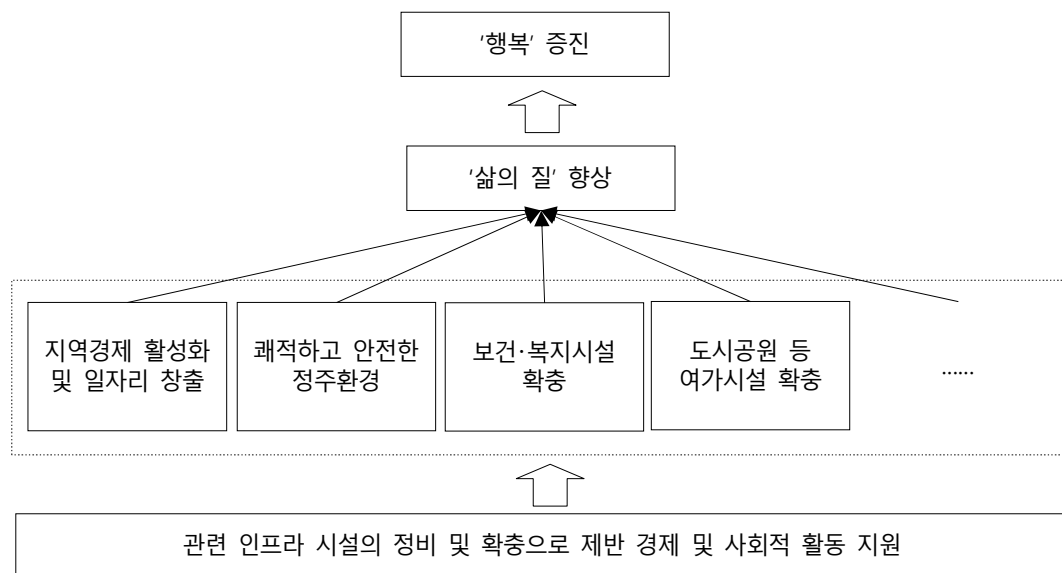
9) 충남지역 안전사고 안전등급은 4등급으로 낮은 수준. 특히, 공주, 보령, 당진은 5등급

지방세 부담액은 매우 높은 상황

- 지속되고 있는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 피해를 감안 시, 방재시설 및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 필요
- 기업 및 개인의 세 부담 증가는 경제 및 생활 부문의 인프라에 대한 질적인 수요 증대 예상

-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의 중요한 요인은 ‘삶의 질’ 향상이며, 이는 ‘인프라’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생활기반 시설, 충분한 문화·여가활동의 지원, 보건·복지시설 확충 등 인프라 투자 필요

#### <인프라 투자와 지역민의 삶의 질>



- 충남도민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투자와 삶의 질, 지역 경쟁력 간의 관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조사(529명 응답)
- 인프라 투자가 충남 지역민의 삶의 질에 영향에 대한 설문결과, 충남도민들은 3.82점(5점만점)으로 평가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
- 또한, 인프라 투자와 지역경쟁력 향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3.56점으로 평가해 지역경쟁력 향상에 있어 인프라 투자 수준이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인식

### Part 3 :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 [도로 및 교통]

- 충남의 전체 도로 포장률은 타 광역도보다 높은 반면, 시·군도의 포장률은 낮고, 폭원도 좁은 상황. 또한, 도로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노후화 진전 ⇒ 도로 유지관리비 급속히 증대
  - 도로포장률에서 충남 전체 도로연장의 52.5%를 차지하는 시·군도의 경우, 시도는 76.9%, 군도는 80.5%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음.
  - 폭원별로는 2016년 기준으로 폭원이 12m 미만 소로가 전체의 48.0%이고, 중로(12~25m)를 포함할 경우, 전체의 80.4% 차지
  - 전체 교량 중 30년 이상 교량이 전체의 27.6%를 차지함(※ 20년 이상은 64.5%를 차지).
  - 충남도내 소재 29개 터널 중 20년 이상된 터널은 17.2%로 조사됨.
  - 이에 따라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련 유지관리비 비용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대<sup>10)</sup>되고 있음.
- 충남을 통과하는 철도는 고속철 2개, 광역철 3개, 기타 2개 노선이 있으나, 시·군간 철도 연계성이 낮아 확충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장항선이 유일한 주요도시 연결 철도이나, 단선이며, 저속철도로서 현저히 기능이 떨어짐.
  - 이에 따라 철도 이용자가 계룡, 천안, 보령 및 예산군 등 일부 지역에 집중적임.
  - 문화 및 관광 등과 연계한 철도의 이용도 제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요원한 상황
- 항만의 경우, 당진항 등의 가파른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항만 확충은 늦어지고 있으며, 노후화된 국가어항의 정비 미흡
  - 당진항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빠른 물동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7년 배후단지 개발계획이 확정, 빠른 대응이 어려운 상황
  - 홍원항, 외연도항 등 국가어항의 노후화가 심한 상황이나, 정비사업이 실행되고 있지 못함.<sup>11)</sup>

→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 필요  
→ 충남지역 내 철도의 이용도 제고를 위한 시군간 및 거점지역 연계 노선 확충이 조속히 필요  
→ 충남 항만에 대한 종합적인 확충 및 노후 항만 재정비 이행 필요

10) 2016년 기준으로 도로 유지보수비용은 1,025억원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수준

11) 외연도항의 경우, 1994년 조성되어 20년 이상 경과,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황

## [산업·경제]

- 충남의 산업단지는 총 150개로서 지정면적은 109,068천㎡, 고용인원만 13만 8,000여 명에 달함. 그러나, 농공단지의 55.8%가 개소된 지 20년이 지나는 등 노후 산업단지가 큰 비중 차지
  - 기 조성된 126개 산업단지 가운데 52개소가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41.3%). 농공단지가 48개소이며, 일반산단도 4개소임.
  - 충남의 경우 최근 5년 간 새롭게 조성이 완료된 산단이 42개소이며, 현재 조성 중인 산단도 24개소임.  
⇒ 현 산업단지 정책이 신규 조성에만 초점
  - 2017년 현재, 휴폐업 업체 수는 38개 업체이고, 이 중 4년 이상 장기 휴폐업 업체도 34.2%를 차지
- 충남도 전통시장 및 상가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속. 그러나, 시설 노후화는 지속
  - 충남지역 58개 전통시장 중 C등급이 21개소, D등급 8개소, E등급도 2개소로 조사됨.<sup>12)</sup>
  -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평균적으로 5년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D등급인 8개소 등에 대한 우선적인 현대화 사업이 시급
- 충남도내 공사 중단 중 방치 건축물은 56개 현장으로 전국의 14.5% 차지. 예산군, 천안시, 당진시 등에 집중
  - 전국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중 안전등급상 B등급, C등급, D등급이 가장 많이 소재한 곳이 충남<sup>13)</sup>
  - 현재 정비계획도 전무한 상황. 특히, 명확한 실태 파악도 되고 있지 못해 실질적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함.

-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정비가 조속히 필요. 특히, 노후 농공단지에 대한 대응책 시급
- 전통시장 중 안전등급 D등급과 E등급 시설물에 대한 우선 정비
-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이 가장 많은 충남의 특성상 대응책 마련 필요

## [환경·안전]

- 충남의 상수도보급률은 전국 최저이며, 일부 시·군 지역은 50%에도 미달하는 상황. 또한, 노후화도 급속히 진전
  -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5년 기준 84.4%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수도 보급률<sup>14)</sup>을 나타내고 있음. 시·군별로도 큰 차이<sup>15)</sup>를 보이고 있음.
  - 충남의 유수율은 2015년 기준 80.0%로 전국 평균 84.0%에 미달
  - 경년별로는 전체 상수도관 중 19.5%가 20년을 초과한 상태로서 노후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

12) 전국적으로 E등급 전통시장은 61개소. 이 중 2개가 충남에 소재.

13)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등급은 C등급이 46.4%(26개), B등급이 21.4%(12개), D등급이 17.9%(10개)임.

14) 2015년 상수도보급률은 전국적으로는 96.5%, 광역도 평균 92.0%

15) 계룡시는 96.4%인 반면, 청양군은 44.1%. 충남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시·군이 10개임.

- 충남의 하수도보급률도 전국 최저. 이는 계획연장 대비 73.1%에 불과한 하수관로 시설 보급률 때문
  - 2015년 기준으로 하수도보급률은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74.3%임. 특히, 전국 평균 92.9%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
  - 하수도 재이용률도 14.7%에 불과. 제주, 대전보다 낮은 수준.
- 충남지역 내 하천(국가+지방)은 500개소의 제방정비 필요 구간 중 31.5%가 아직 미정비 상태
  - 국가 및 지방하천 중 제방정비가 필요한 총구간 3,625km 중 2017년 말까지 1,684km 완료, 제방 보강 및 신설 필요 구간이 1,141km임.
  - 소하천 중 미정비 상태인 소하천은 1,176개소, 연장 1,633km임.
- 충남 우수지는 우수시설 43개, 저류시설 93개로 총면적은 1,321,895㎡임. 시설 수로로는 전국 4번째, 그러나 시설 대비 면적으로는 하위권임.
- 공원·녹지에 있어서 충남지역은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
  - 2016년 기준으로 충남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18.57천㎡로서 전국 평균인 18.23천㎡에 비해 약간 높은 편
  - 그러나 9개의 광역도 중에서는 제주, 경기 다음으로 낮은 수준

→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노후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  
 → 지방하천 및 도내 소하천 정비 구간이 아직까지 많이 남은 상황으로 조속한 정비 필요

## [문화·관광]

- 충남도내 체육시설은 2,977개가 있으나, 이 중 공공시설은 29.9%에 불과. 민간시설이 대부분을 차지. 시군 간 차이도 큼.
  -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체육시설 수는 107.9개소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9대 도단위 광역지자체 중 경남 다음으로 낮음.
  - 체육시설도 시·군별로 양적 차이가 커, 천안시, 아산시에 집중된 반면, 청양, 태안, 서천군은 상대적으로 부족
- 관광시설에 있어서도 2014~2017년까지 4년 동안 숙박시설, 휴양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등이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
  - 숙박시설의 경우, 2014년 36개소에서 2017년 41개소로 늘어나는 데 그침. 관광식당업, 시내 순환관광, 도지정 외국인이용식당 등 편의시설업종은 187개에서 164개소로 오히려 줄어든 상황

→ 체육시설, 문화·관광시설의 지역간 편중이 심하고, 공공 시설물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



### [주거·생활]

- 충남도 내 유, 초, 중·고교 가운데 30년 이상된 학교 건물은 1,411개동. 이 중 보강 및 개축이 시급한 C등급 건물은 25개동임.
  - 또한, 충남도내 폐교는 44개교이며, 이 중 63.6%인 28개교가 미활용 중에 있는바, 이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
  - 2017년 현재, 내진보강 대상 학교 건물 2,113동 가운데, 534동만 내진보강이 적용. 내진화율은 25%에 불과
- 충남도 내 20년 이상된 주택은 전체 주택 대비 42.1%로서 전국 평균 43.8% 대비 낮은 편. 그러나, 30년 이상의 주택 비중은 21.4%로서 전국 평균인 16.3% 대비 5%p 이상 많이 보유
  - 특히, 단독주택 비중이 33.5%로서 전국 평균 24.3% 대비 크게 상회.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충남도 내 빈집은 7만 4,000호로서 전체 주택의 9.8%를 차지. 전국 평균 6.5%를 크게 상회

→ 학교시설물의 노후화가 큰 상황. 특히, 보강 및 개축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학교시설에 대한 우선 조치 필요  
→ 주택의 노후화도 심한 상황으로 30년 이상 주택에 대한 대응 필요

### [시설물 노후화]

- 충남도 내에 위축한 건축물 중 54.1%에 해당하는 총 27만 2,945동이 20년 이상된 건축물임.
  -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중 73.1%인 20만 4,049동이 주거용 건축물
  - 시·군별로는 건축물의 노후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군지역에서 노후도가 심함.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중이 부여군 47.8%, 청양군 43.7%, 금산군 33.1% 등으로 매우 높음.
- 1·2종 시설물 중 30년 이상된 시설물은 130개소로 전체 시설물의 4.4%로 전국 평균 4.0% 상회. 특히, 2030년 기준으로 추정된 30년 이상 1·2종 시설물은 908개소로 전체의 30.4%에 이를 전망
  - 또한, 충남 지역 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41.4%가 미흡 혹은 불량 판정 ⇒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반면, 후속조치 대상 시설 중 2016. 9월 기준으로 91.0%가 미조치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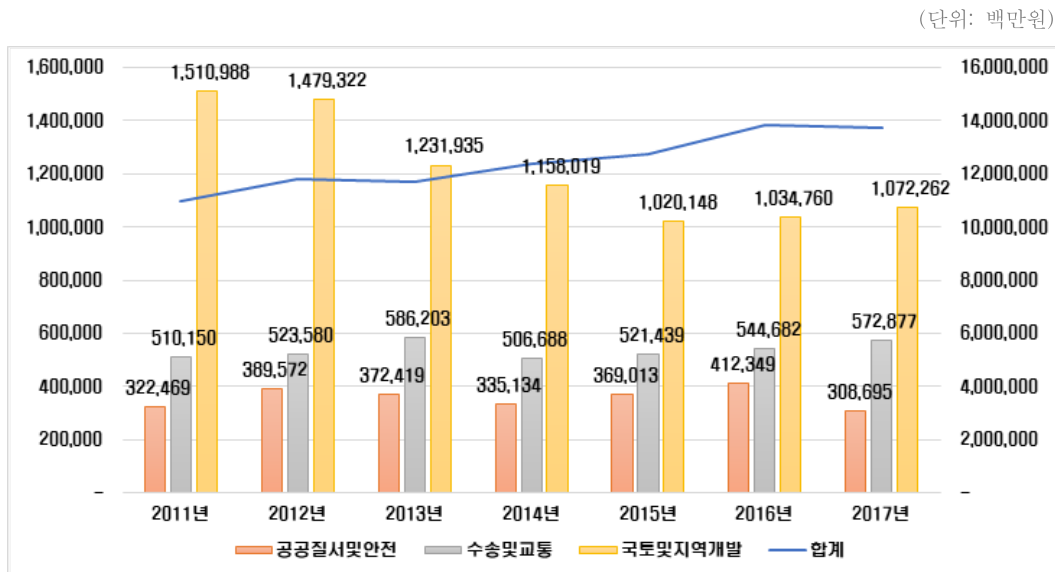
→ 노후 건축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건축물 노후화에 대한 대응 필요  
→ 특히, 1·2종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한 조기 대응이 필요. 향후 늘어나는 노후시설물에 대한 단계적 대응책 마련 필요

## Part 4 :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 [총괄 현황]

- 충남의 인프라 예산 편성은 지속적으로 축소. 지난 7년 동안 ‘수송 및 교통’예산은 연평균 2.0%p씩 증가하는 데 그침.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연평균 5.6%p씩 감소
- 특히, 제조업 중심의 충남 특성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예산<sup>16)</sup>의 급감과 지역 및 도시 관련 예산<sup>17)</sup>의 축소 편성은 노후 건축물 증대 등을 감안할 시 지역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충남 인프라 예산 편성 추이>



자료 : 지방재정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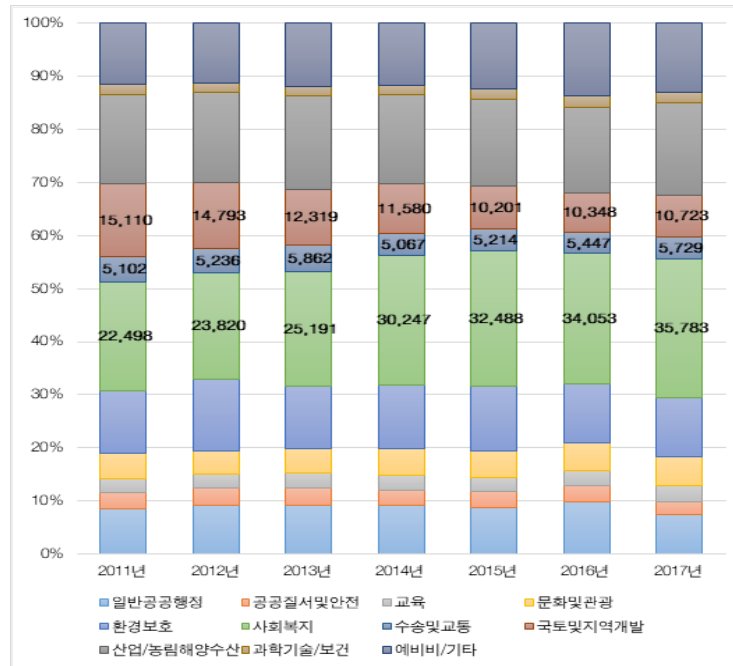
- 이러한 인프라 예산의 축소 편성은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16) 산업단지 예산은 최근 7년 간(2011~17년) 연평균 5.5%p씩 감소.

17) 지역 및 도시예산은 최근 7년 간(2011~17년) 연평균 17.0%p씩 감소.

### <충남 예산 편성 추이>

(단위 : 억원)



자료 : 지방재정 365

### [부문별 인프라 투자 현황]

- 주요 도로 및 교통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 정비 예산 규모도 크지 않아 도로 안전도 제고에 대응 늦어질 우려
  - 지방도 건설 등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예산<sup>18)</sup>은 2014년 1,147억원에서 2017년에는 1,007억원으로 축소. 유지관리 및 정비 예산은 증가<sup>19)</sup>
  - 노후 포장구간 337km에 대한 예산 396억원에 대해 매년 50억원 투입 시 8년 이상 소요 예상
  - 교량 등 도로시설물 내진보강 대상이 540개소 남은 상황 하에서 현행 100억원 규모의 예산은 많은 시간 소요 예상
- 연안정비와 항만 및 해양레저 기반 구축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연안정비 62억원, 해양레저 기반 구축 32억원에 불과(2018년)
- 산업단지 관련 예산의 축소는 제조업 중심의 충남 특성과 최근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24개소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할 시, 조속한 마무리에 어려움 예상

18) 지방도 건설 예산 : 2014년 604억원 → 2017년 346억원 / 도로안전시설 확충 예산 : 2014년 182억원 → 2017년 72억원 등.

19)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 : 2014년 40억원 → 2017년 102억원 /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 : 302억원 → 2017년 420억원.

- 산업단지 예산은 2014년 342억원에서 2018년 196억원으로 크게 축소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도 2014년 75억원에서 2018년 31억원으로 축소, 시장 현대화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D등급 시장 등 대응 미흡

- 도시 및 농촌 생활환경 정비예산은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그 수요가 많다는 점(도시재생 신청건수 102건)에서 예산 확대 시급

- 도시 생활환경 개선, 취약지역 개조,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 농촌생활환경 정비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 중이나, 규모가 작음.

#### <도시 및 주택 관련 인프라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사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	-	-	2	2
취약지역 개조사업	-	-	7	22	24
도시생활환경 개선	9	7	12	11	22
기초생활기반 확충	-	-	-	-	20
도시재생사업(선도/일반)	-	44	50	17	3
농촌생활환경 정비	46	43	39	41	39
계	55	94	108	93	110

주 : 각년도 본예산 기준.  
자료 : 충청남도 재정공시.

- 노후 상수도 및 노후 하수관거 정비 예산을 투입 중이나, 현행 예산으로는 조속한 정비가 어려운 상황
- 최근 노후 상·하수도에 대한 우선 정비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 편성 확대는 없는 상황. 오히려 전체 예산은 축소

#### <환경 관련 인프라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사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노후상수도 정비	-	-	-	73	139
하수관거 정비	748	508	634	665	664
공공하수처리시설	470	393	341	251	246
도시침수대응	316	592	377	209	94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335	336	396	314	314
계	1,869	1,829	1,748	1,512	1,457

주 : 각년도 본예산 기준.  
자료 : 충청남도 재정공시.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우수 저류시설 설치,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주요 시설 안전예산도 지속적으로 축소<sup>20)</sup>되고 있는 상황

### [중기 인프라 투자 전망]

-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투자는 전체 예산 대비 각각 4.7%, 4.2%에 불과 전망
  - 수송 및 교통 예산은 연평균 16.0%의 증가율을 기록할 예정이나, 예정 철도 및 도로사업 착수가 불투명하여 실제 투자계획 실행 의문시
  -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연평균 1.5% 증가율에 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SOC 세부항목별 투자 계획>

(단위 : 십억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송 및 교통	284	310	403	233	513	1,742	4.7
도로	242	224	334	163	442	1,405	3.8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41	86	69	69	71	337	0.9
국토 및 지역개발	293	308	296	321	311	1,530	4.2
수자원	119	120	121	122	124	606	1.6
지역 및 도시	152	159	145	169	157	782	2.1
산업단지	21	30	30	30	30	142	0.4

자료 : 충청남도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산업·경제, 안전, 문화·관광 등 대부분의 부문별 인프라 투자 확대는 기대기 어려운 상황
  -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우수저류시설 확충 등 안전 분야, 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 등에 대한 예산 규모는 여전히 현행 수준

20) 우수저류시설 설치 : 2014년 251억원 → 2018년 33억원 / 재해위험지역 정비(시·군, 도) : 2014년 486억원 → 2018년 395억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분야별 인프라 투자 계획>

(단위 :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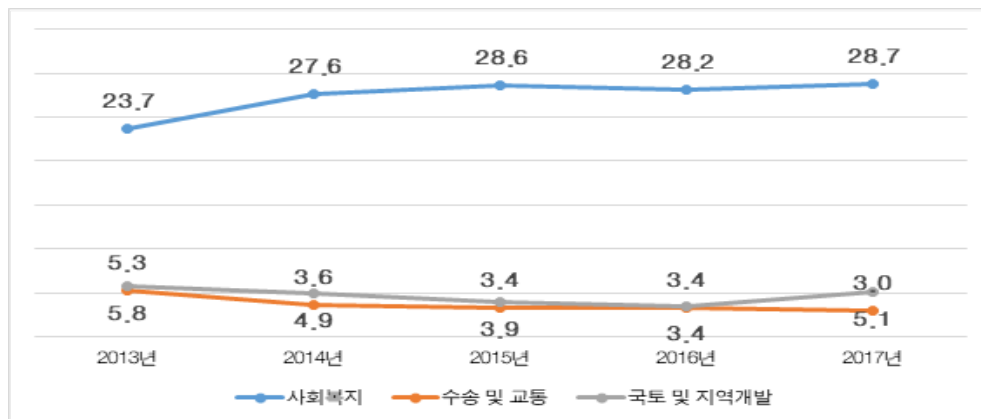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농촌생활환경 정비	872	1,075	1,205	1,195	1,077	5,425
우수저류시설 설치	33	33	34	36	37	173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30	30	30	30	30	150

[인프라 투자 정책의 문제점]

- 사회복지 투자 확대를 위해 인프라 투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지역 발전 저해 우려

<사회복지 및 SOC 예산의 전체 세출 대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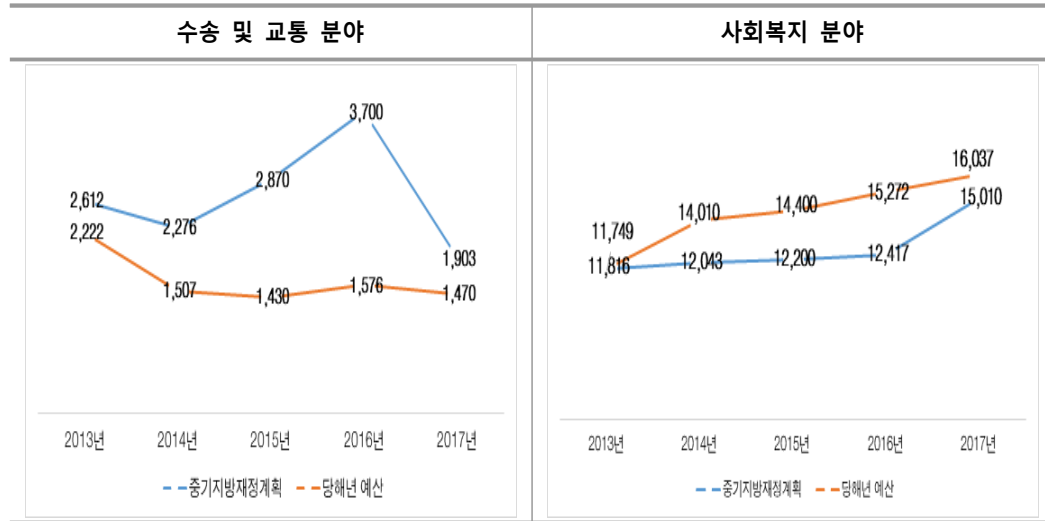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충남도청 재정공시(2017년).

- 지역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도로 등 인프라 공급을 더디게 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성장 저해 우려
  - 또한, 지역민의 삶의 질에 있어 인프라 시설 수준이 직결되는바, 지역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 부작용 우려
- 인프라 정책 부재로 당초 인프라 투자 예산도 실행력이 부재하여 의도한 인프라 투자 목표 달성 미흡
  - 2013~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실제 투입된 수송 및 교통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투자 추이를 비교해보면,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축소 실행하였고, 사회복지 예산은 오히려 확대 편성

<2013~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수송 및 교통 분야, 사회복지 분야 실제 투자액 현황>



자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각년도 예산서.

- 인프라 분야 투자의 일관성 저하로 인프라 사업들의 공기 지연<sup>21)</sup> 및 사업 지연<sup>22)</sup> 발생. 이로 인해 조기 안전 확보도 미흡<sup>23)</sup>

## Part 5 : 지역민 설문조사 결과

-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529명),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 시설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나, 만족도와 안전도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인프라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
- 인프라 성능에 관해서는 보통 이하의 평가를 하고 있으며, 노후도 및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의 평가를 하나,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인프라 성능 : 5점 만점에 2.95점으로 보통 이하의 평가
  - 인프라 안전 수준 : 5점 만점에 3.07점으로 보통 평가
    - 그러나, 지역별로 차이가 큼. 계룡시 4.00점, 아산시 3.06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평가했으나, 청양군 2.50점, 공주시 2.68점 등으로 낮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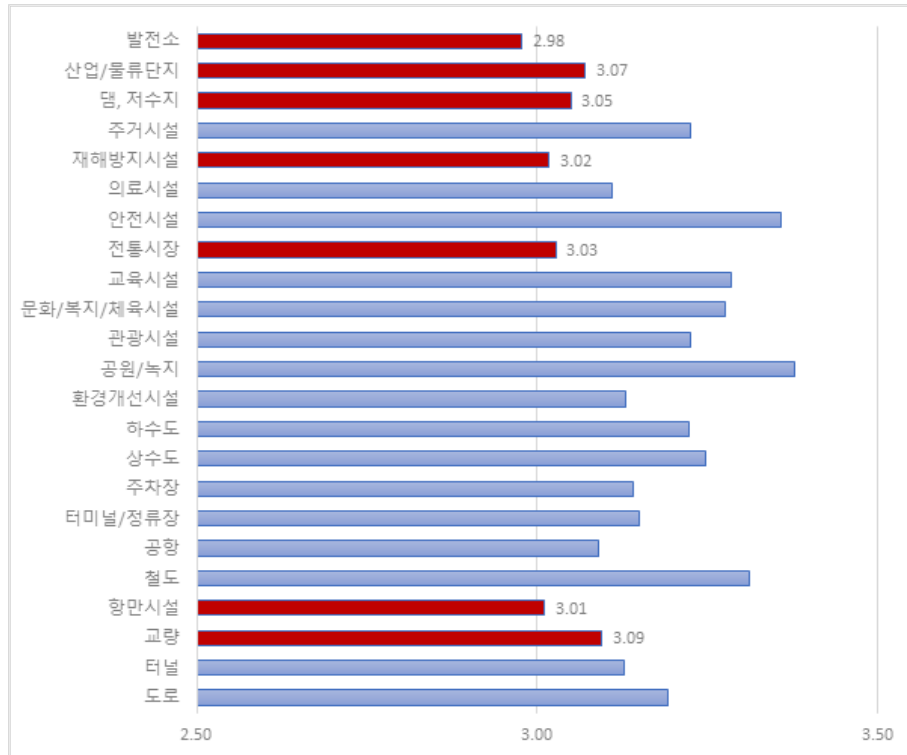
21)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인 '선장~염치 지방도 건설사업'(당초 2010~2017), 대술~정안 지방도 도로개설사업(2014~2017년)' 등 다수의 공사가 지연 중.

22) 지방도 615(당진~석문), 지방도 618호(내포신도시~세종시), 지방도 645호(계룡~논산) 등 다수의 지방도 사업들도 열악한 충남의 재정 여건으로 제때 착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

23) 노후 상·하수도 시설(상수관로, 하수관거 등)에 대한 개선사업도 높은 누수율과 안전 저해에도 불구하고, 조기 시설 개선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

- 발전소, 재해방지시설, 항만시설, 전통시장, 산업/물류단지 등 시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도를 낮게 평가

<충남 인프라 시설별 노후도와 안전수준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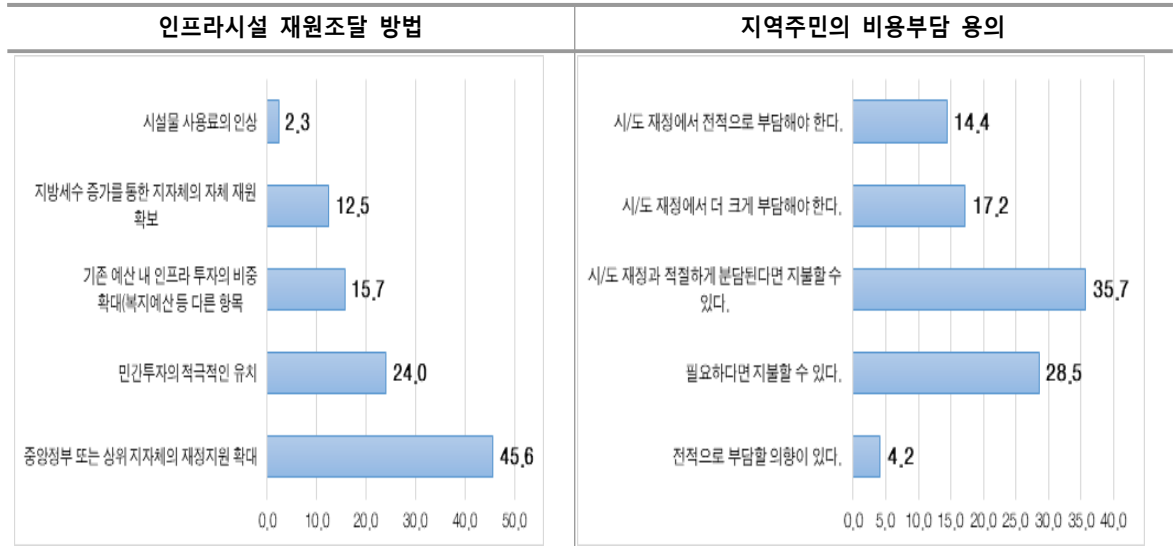


- 충남지역의 인프라 투자 수준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해 인프라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
  - 인프라 투자 수준 : 5점 만점 기준으로 2.72점에 불과해 인프라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
- 사회적 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도
  - 사회적 재난(화재, 교통사고, 오염, 붕괴, 기타 사고 등)에 대한 안전도는 5점 만점에 3.03점, 자연재해(지진, 풍수해 등)에 대한 안전도는 5점 만점에 3.05점으로 보통으로 평가
- 비용 부담용의 및 재원조달 방법
  - 시/도 재정과 개인 부담이 적절하게 분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5.7%로 가장 높음.
  - 중앙정부 또는 상위 지자체의 재정지원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5.6%로 가장 높음. 민간투자의 적극적인 유치가 2순위인 24.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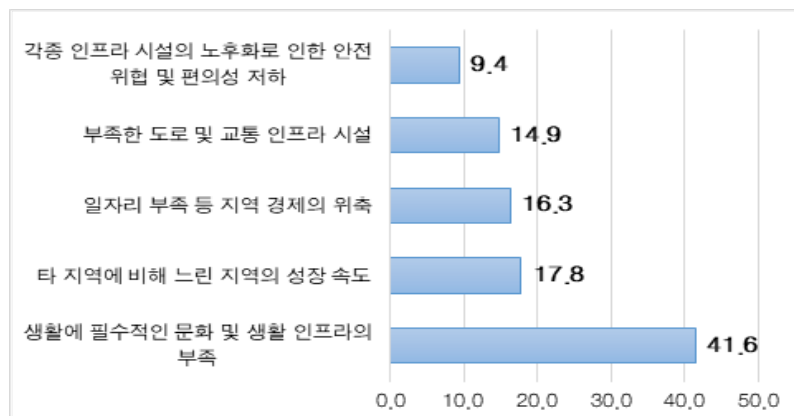
### <지역 주민의 비용 부담용의 및 재원조달 방법 평가>

(단위 : %)



- 타 지역에 비해 충남지역의 인프라 시설 충족도 조사 결과, 부족하다는 의견이 38.1%로 나타남(충분하다는 의견은 13.3%에 불과). 부족하다는 인식은 문화 및 생활인프라 부족에 기인함.
-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생활에 필수적인 문화 및 생활 인프라의 부족’이 41.6%로 가장 많았고, ‘타 지역에 비해 느린 지역의 성장 속도’ 17.8%, ‘일자리 부족 등 지역경제의 위축’ 16.3%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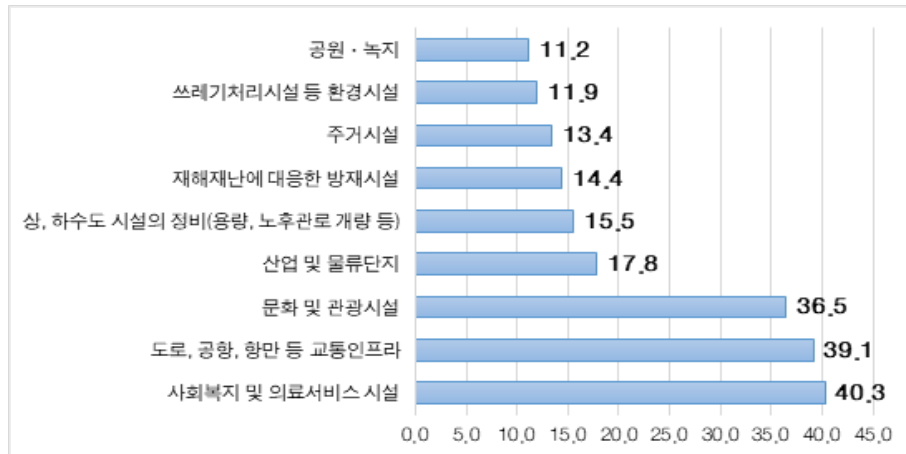
### <충남 인프라시설의 충족도가 부족하다는 인식의 사유>



- 충남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인프라 투자 분야에 대해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시설’이 40.3%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도로, 공항, 항만 등 교통인프라’ 39.1%, ‘문화 및 관광시설’ 36.5%, ‘산업 및 물류단지’ 17.8%, ‘상·하수도 시설의 개선’ 15.5%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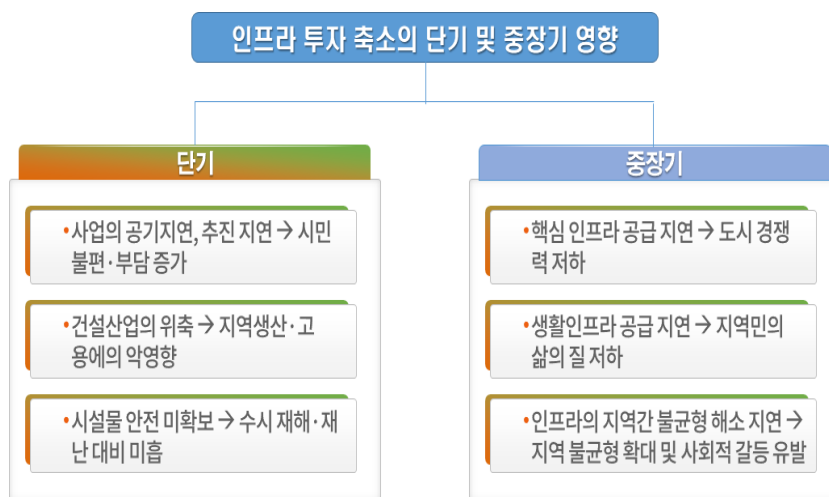
〈충남의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적인 인프라 투자 분야〉



Part 6 :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 및 핵심사업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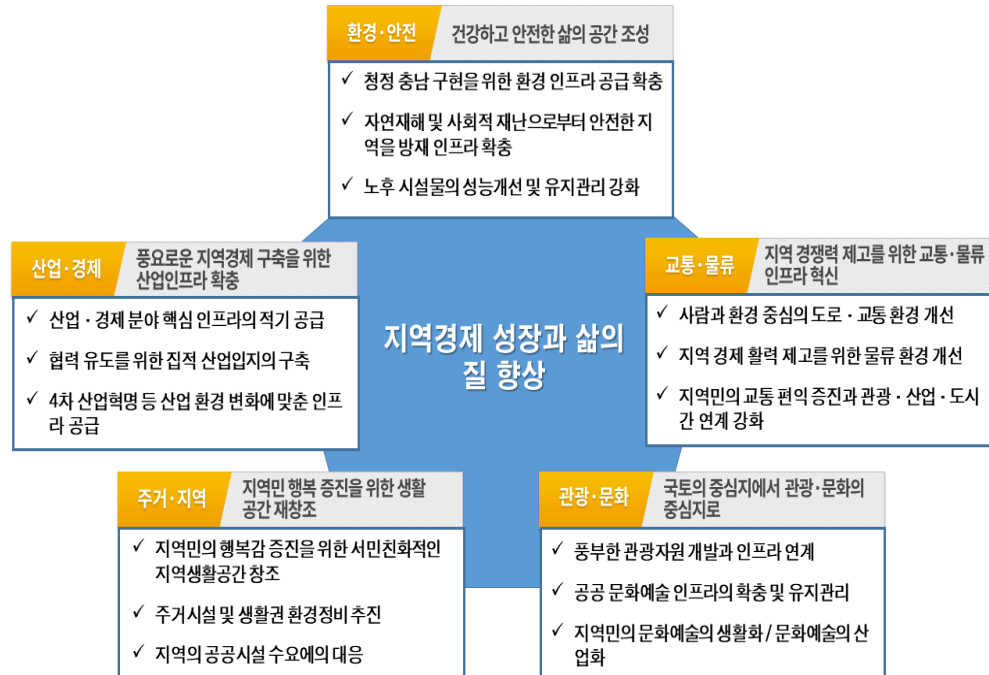
- 충남지역에서 인프라 투자 축소는 단기적으로 지역민 불편 및 부담 증가, 지역생산 및 고용에의 악영향 등을 유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와 지역 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음.

〈인프라 투자 축소의 문제점〉



- 충남의 인프라 실태 진단, 인프라 투자정책,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도출된 인프라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물류 분야의 혁신적인 인프라 전략이 요구됨.
  - 둘째, 충청남도가 향후 발전 모델로 지향하고 있는 행복하고 새로운 충남 실현을 위한 인프라의 투자가 필요
  - 셋째,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삶의 공간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확대가 필요
  - 넷째, 지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지역민 친화적인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
  - 다섯째, 다시 찾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제반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

###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목표 및 정책방향>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하였음. 총 프로젝트 수는 35개 프로젝트이며, 총금액은 14조 5,972억원 규모임.
  - 산업 및 경제분야,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8개, 2조 479억원
  - 교통 및 물류분야, ‘장항선 복선전철화 조기 추진’ 등 10개, 9조 3,162억원
  - 문화 및 관광분야,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개발’ 등 6개, 1조 8,759억원
  - 환경 및 안전분야, ‘안흥항 내진보강’ 등 6개, 9,180억원
  - 주거 및 도시분야,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등 5개, 4,392억원

(단위 : 억원)

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산업 · 경제	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	2018~22	3,000	
	미래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구축	2018~22	500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2018~22	1,684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	2017~22	2,000	
	서해 해수담수화사업 집적단지	2018~27	9,600	
	국방산업단지 개발	2016~20	806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2018~23	2,500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2017~22	389	
	소계		20,479	
교통 · 물류	장항선 복선전철화 조기 추진	2018~22	6,765	
	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 추진	2019~24	18,760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2019~미정	42,700	
	천안역 개선사업	2018~21	170	
	독립기념관 수도권전철 연결	2018~미정	3,300	
	당진~아산 고속도로	2018~미정	10,702	
	국도 38호노선 연장 및 교량 건설	미정	2,000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2018~23	2,235	
	해삼산업 복합단지	2018~20	5,210	
	당진 복합물류단지	2016~20	1,320	
	소계		93,162	
환경 · 안전	안흥항 내진보강	2018~20	120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시설 확충	2018~	655	
	금강 생태복원 클러스터 조성	2018~미정	6,800	
	외연도항 재정비	2019~24	327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 연결	2018~21	830	
	충남지역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018~21	448	
	소계		9,180	
문화 · 관광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	2017~38	10,370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2017~26	2,129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2018~	3,300	
	해양 라이프케어단지 조성사업	2020~25	1,000	
	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	2018~22	400	
	태안 해상관광테마특구 조성사업	2018~21	1,560	
	소계		18,759	
주거 · 도시	AI 구제역 체험형 교육홍보센터 건립	2018~20	140	
	4차산업 대응인력양성센터 건립	미정	1,500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2018~	2,000	
	국립 해양수산대학교 건립	2018~25	552	
	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설치	2019~20	200	
	소계		4,392	

## Part 7 : 정책과제 및 시사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노력 필요
  - 지역 핵심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정비를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안정적 재정 확보 장치가 필요
  - 시설물 종류별 성능(효율성)지수를 측정하고, 성능 미달 분야/지역부터 투자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방식의 도입 필요
  -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의 부담비율 상향 조정 방안 검토 필요
  - 특히 조건부 보조금(Matching Fund)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반납 사례 최소화 필요
- 지자체 스스로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 총량과 과세자주권을 높이고, 지자체의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과 주민요구의 대응 능력 제고 필요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부여 권한 이양 등에 대해 지속 추진 필요
  - 지방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방채 발행 효율화 필요
  - 국가발전과 지역개발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조정하고 계약 방식을 통해 공동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활성화 검토
  - 도시재생사업 추진 활성화와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운용 필요<sup>24)</sup>
-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와 신뢰 구축을 통한 정부·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사업인 민간투자사업 정상화 필요
  - 민자 대상 사업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 필요
  - 정부고시사업(민간투자 사업 사전 고시) 활성화 필요
  - 부족한 SOC 투자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유형의 민자사업 활성화 필요
-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 진단과 개량·재투자 실행 체계 구축
  -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2017.11.15)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필요(서울, 부산, 대구, 전남은 기 제정)
  -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안전 특별회계」 설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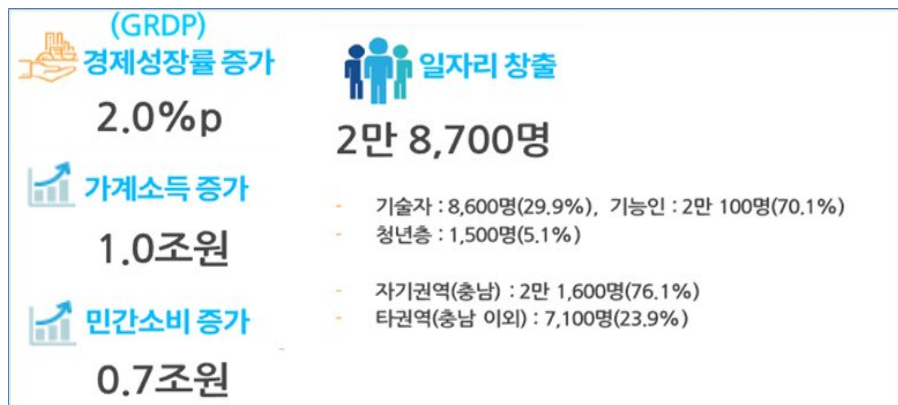
24)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도시재생법」에 의거 특별회계(기금)를 운영 중이며, 이 외에도 노후인프라 성능개선을 위한 ‘시설안전 특별회계’ 설치 검토 가능.

-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충남의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의 약 20.2%를 차지하며, 지역 내 건설업 종사자는 약 7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6.3%를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중추 산업임.
- 최근 충남 건설기업의 경우 수주 물량 감소와 더불어 역내 발주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이중고(二重苦) 현상 만연
  - 도내 건설기업은 역내 발주공사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52%)이나, 최근 7년 평균 역내 공사 수주 비중은 21.2%에 불과
- 수주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지역 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조차 지역 건설기업이 해당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실질적인 시공참여 유도 등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내실화, 공공공사 분할발주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지역 중소 건설업 보호 육성 정책 운영 필요
- 공사비 정상화 및 공사 품질 확보 : 적정 수준의 기초금액 산정 및 예정가격 작성 시 합리적 이유 없는 금액 삭감 금지, 기초금액이 부당하게 산정된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실효성 제고 : 지역 건설업 활성화 계획을 1~2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 필요, 정기적인 계획 수립·이행 체계 및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포함하는 등 조례 내용의 실효성 제고

- 충남지역 핵심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추진 시 경제적 파급효과

- 현 인프라 프로젝트 중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들의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는 1년 2만 8,700명으로 예상됨.
-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 1년에 2.0%p 증대 효과 발생 예상



주 : 취업유발계수는 한국은행(2017), 2014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추정.

## Part 8 : 사업조서 샘플

### 1) 교통·물류 : 천안역 개선사업

#### [사업 추진 배경]

- 전국 주요 철도역사 중 천안역은 일반철도 기준 이용객 규모 7위, 유일한 선상임시 역사이며, KTX 개통 이전보다 이용객 1.8배 증가(37,589인/1일, 2015년 기준)
- 현재 천안역은 대합실 용량과 휴게편의시설 부족, 보행 연결통로 협소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크고, 철도·전철과 기타 대중교통 간 복합연계 환승 기능이 미비
- 또한, 선로 등 철도 관련 시설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어 선로로 인한 동·서 지역 간 단절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현재의 철도시설 재배치를 통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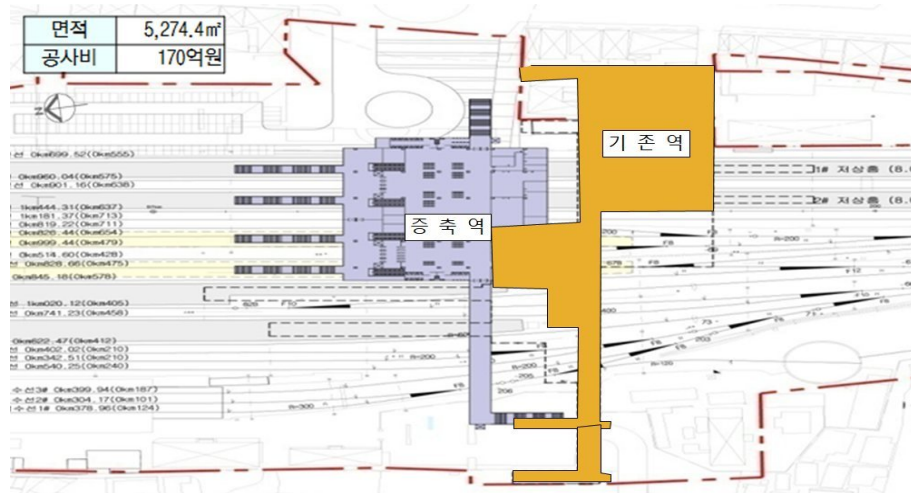
- 비좁고 불편한 임시 천안역사를 증·개축하는 사업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바, 조속한 사업 착수가 필요한 상황
- 위치상으로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기존 천안역으로서 면적으로는 5,274.4m<sup>2</sup> 규모의 부지
- 추정 사업비는 170억원으로서 천안역사(임시역사)의 증·개축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임.

(단위 : 억원)

재원별	총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비고
합 계	170	10		50	110		
국 비	170	10		50	110		

- 국토교통부는 천안역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천안역 증·개축사업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천안역 개선사업 사업비 투입 계획>



자료 : 충청남도.

-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18년에 설계비 5억원을 반영하고, 2019년 이후에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

#### [기대 효과]

- 천안역사의 재정비 사업을 통해 천안역의 철도시설 재배치를 기본으로 하여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원도심 활성화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시너지효과 기대

- 천안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균형적 발전 기대

### 2) 환경·안전 : 충남지역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사업 추진 배경]

- 생활하수를 모아 고도의 위생과정을 거친 하수처리수는 물고기가 살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화됨. 문제는 정화된 물이 하천으로 방류돼 그대로 바다로 흘러드는 것임.

- 이에 따라 충남도는 시·군마다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수를 농업 또는 공업 용수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충남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음. 최근 1년 누적 강수량이 전국 대비 최



저치를 기록하는 등 다각적인 용수 공급방안 대책이 필요해 수자원의 재처리는 더욱 시급함.

#### [사업 내용]

- 장기적인 가뭄 등을 고려해 재이용사업이 시급한 시·군을 우선 선별하였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예산군 등 도내 5개 시·군에 추진됨.
- 총사업비는 국비 314억원과 지방비 134억원을 매칭 모두 448억원이 소요될 예정임. 하수처리수의 하천 방류에는 문제가 없지만, 식용 작물 재배와 직접 사람 및 동물이 이용하려면 추가적인 재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

(단위 : m<sup>3</sup>,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18년			향후 계획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계	448	314	134	107	74	33	341	240	101
천안시 성환 하수처리수 재이용 (19,500/30,000)	59	41	18	33	23	10	26	18	8
아산시 아산 하수처리수 재이용 (20,000/72,000)	155	109	46	6	4	2	149	105	44
논산시 연무하수처리수 재이용 (6,200/8,400)	37	25	11	2	1	1	135	25	10
홍성군 홍성 하수처리수 재이용 (4,000/17,000)	42	29	13	15	10	5	27	19	8
예산군 예산 하수처리수 재이용 (15,000/22,000)	155	109	46	51	36	15	104	73	31

자료 : 충청남도

- 지역별로 천안에서 성환하수처리수를 하루 1만 9,500t씩 재이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59억원(국비 41억원 포함)이 필요.
- 아산도 아산하수처리수 2만t(사업비 155억원), 논산은 연무하수처리수 6,200t(사업비 37억원), 홍성은 홍성하수처리수 4,000t(42억원), 예산은 예산하수처리수 1만 5,000t(사업비 155억원)씩을 각각 재이용한다는 내용임.
- 이와는 별도로 추진 중인 보령시 대천동 하수처리수 방류수 재처리시설(하루 1만t) 설치사업도 조속히 추진 필요(국비 90억, 지방비 39억 등 129억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추진 중)
  - 하수재처리시설에서 보령시 주교면 보령·신보령 화력발전소까지 8km에 관로를 설치해 보령과 신보령 화력의 탈황 용수로 공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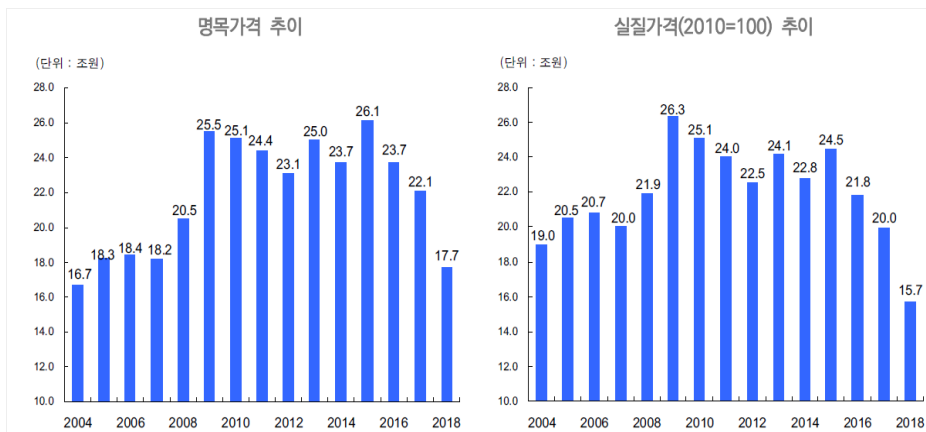
**[기대 효과]**

- 충남지역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사업은 상시적인 물 부족 대응 대책으로서 효과가 클 것임.
- 타 지역이 민자사업 등을 이용하여 추진 중인 데 반해, 충남은 국비와 지방비를 이용하여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안정적이고 빠른 사업 추진이 기대됨.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18년도 SOC예산<sup>25)</sup>을 2017년도의 22.1조원보다 20%나 감소한 17.7조원<sup>26)</sup>으로 계획하였으며, 국회에서 19.0조원(전년대비 14.0% 감소)으로 최종 확정함.
- 과거 우리나라는 2010년대 중반 까지 연간 약 25조원 수준의 SOC 예산 규모를 유지하였음.



주 : 추경이 포함된 예산 추이이며, 실질가격은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2010=100)를 사용.  
자료 : 박용석 외(2017)

- 25) 본 보고서에서는 '인프라(infrastructure)' 또는 '인프라 시설' 이라는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정부 예산에서는 'SOC예산'이 공식적이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정부 예산에 대한 논의 부분에서는 'SOC' 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26) 이는 과거 14년(2004년~2018년)간 최저 수준임.

그림 1-1  
우리나라의  
과거 SOC예산  
추이(2004~18)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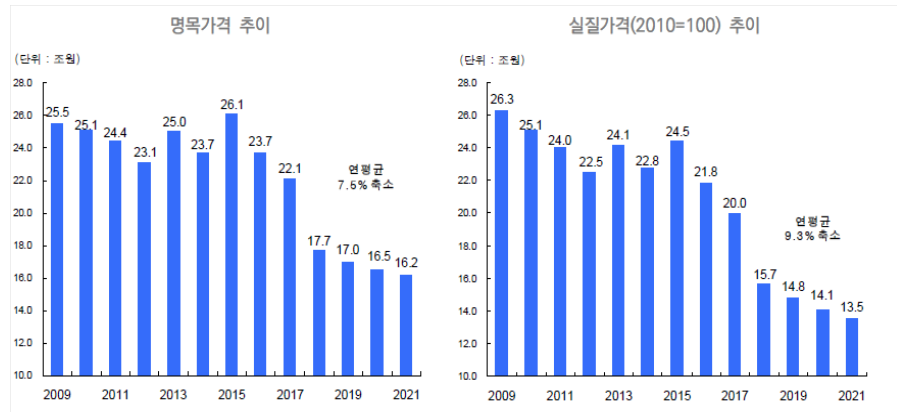
## 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정부가 SOC 예산을 급격하게 감축하고 있는 원인은 SOC 스톡의 규모가 충분히 갖추어 졌으므로 투자를 줄여도 된다는 시각 때문임.
- 정부는 2019년 이후에도 SOC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중기 재정운 영계획을 발표함.
-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SOC 연장’은 G20 국가 중 고속도로 1위, 국도 3 위, 철도 6위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일 수 있음.
- 하지만 ‘국토면적당 SOC 연장’ 지표는 혼잡도(인구밀도)와 시설물(노후화 정도를 포함한) 실제 시설물의 성능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SOC 스톡의 충 분성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그림 1-2

중기국가재정운용  
계획상 정부  
SOC예산 추이



주 : 추경이 포함된 예산 추이, 실질가격은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2010=100)를 사용, 2017~2018년 물가성장률 1.9% 가정 (2017년 7월 한국은행 전망치), 2019년 이후는 2%의 물가성장률 가정

자료 : 박용석 외(2017)

- 우리나라는 SOC의 양적 투자성고가 과대평가 되었으므로 인프라 투자를 급속하게 줄이면 안된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 있음.
- 우리의 ‘국토계수당 도로밀도<sup>27)</sup>’ 순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위 평가와 상반된 결과임.
- 2016년 기준 세계은행이 평가한 ‘Global Rankings 2016’에서 우리나라의 인프라 평점은 3.79로 20위로 평가됨.<sup>28)</sup>
- 동 순위에서 물류 경쟁력은 더 떨어지는 3.69점으로 25위 수준으로 타 아

27) 도로 연장(km)을  $\sqrt{\text{인구수} \times \text{국토면적}}$  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지수.

28) 이는 싱가포르(4.2), 홍콩(4.1), 일본(4.1) 등과 비교하여 매우 떨어지는 수준이며, 이태리, 중국, 아일랜드 등과 유사한 수준임.

- 시아 선진국인 싱가포르, 홍콩, 일본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됨.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은 33.4조원으로, GDP 대비 2.13%에 이름.
  -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 주요국 출근 소요시간 중 가장 길게 조사됨.
  - 특히, 1시간 이상 통근·통학하는 인구 비율이 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는 아직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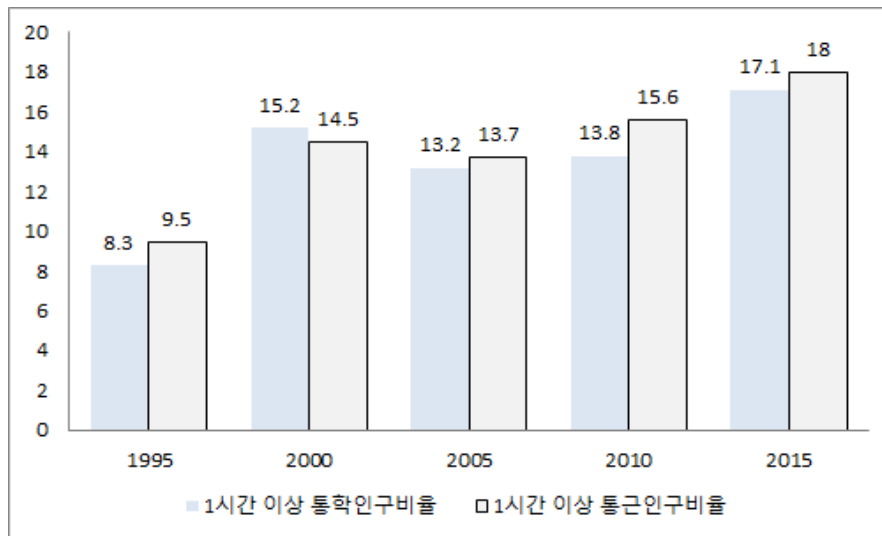


그림 1-3  
우리나라의  
1시간 이상 통근  
인구 비율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1시간 이상 통근통학 인구 비율)

- 인프라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하여 충분한 투자재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미래 경제성장 동력 상실, 단기 산업생산액 및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상향 방식(bottom-up)에 의하여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수요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인프라 투자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사회기반시설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규모로 재투자과 개량의 시대가 도래 함.
- 우리나라 인프라 시설물은 1970~8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단기간에 걸쳐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되면서, 40여년이 지난 현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임.

- 현대경제연구원(2013)에 따르면 2014년 1월 기준, 재령 30년 이상의 시설물은 전체의 9.6%수준이며, 2024년에는 21.5%로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된다.
- 서울시를 예로 들면, 하수관로(총 10,392Km) 중 사용연수 30년 이상의 노후 하수관로가 48.3%에 해당하는 약 5,000Km이고, 연간 평균 260km씩 증가함(50년 이상인 노후 하수관로도 3,173Km(30.5%)에 달함).
- 서울시 상수관로의 총연장길이는 13,793km(2013년말 기준)로, 사용 연수 20년 이상인 노후 상수관로는 약 7,054km로 51.1%에 달하며, 매년 평균 438km씩 증가하고 있음.

- 더 심각한 문제는 (구법인 시·특법의 1·2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은) 종외 시설물들은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미흡한 실정임.
- 전국적으로 7만 6천여 개의 소규모취약시설<sup>29)</sup>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설 점검을 받은 시설물은 1만 4천여 개에 불과함.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내진보강 기본계획 추진실적이 중앙정부 보다 저조함.
- 「1단계(2011~2015)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의 재정투자 실적은 그나마 중앙정부가 계획대비 54.7% 인데 비하여 지방자치 단체는 계획 대비 7.8%에 불과함

(단위 : 백만원, %)

표 1-1

내진보강  
기본계획 1단계  
추진실적  
(2015년 12월말 기준)

기관별	계획금액	추진실적						달성율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중앙부처	825,300	473,599	109,322	145,320	74,692	61,468	82,794	57.4%
지자체	2,199,824	171,061	49,134	32,971	21,434	37,395	30,126	7.8%

- 이에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인프라 투자정책을 파악하고 투자 필요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예산배분 결과에 따라 인프라 투자수요를 파악하는 하향식(top-down) 방

29)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 도로 및 교량, 육교, 지하도, 옹벽, 절토사면 등

식이 아닌, 상향식(bottom-up) 방식에 의하여 인프라 투자수요를 조사하고, 이 결과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자문회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지역별 인프라 실태 분석과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핵심 의사결정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제공함.
  - 2018년은 지방선거 이후 신규 인프라 투자 및 노후 인프라 투자 대책에 대한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연고를 배제한 객관적 평가와 분석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지역 별 인프라 투자전략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지역 별 건설업 실태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건설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유도함<sup>30)</sup>.
  - 양이 아닌 질적 성과 달성을 위한 투자 방향과 우선투자과제 제시함.
  -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투자정책 및 투자우선 순위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노후화 된 인프라의 실태 진단을 통하여 선제적인 투자전략 및 우선 투자 필요시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안전 향상 및 재정절감에 기여함.
  - 우리나라의 인프라 시설은 고도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도시의 기능 및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인프라 기능을 주기적으로 복원하는 정책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
- ☞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선제적인 유지·관리 및 개량을 통하여 총 유지관리 예산(생애 주기 비용) 절감이 기대됨.

30)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 또는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조례’ 신설 등이 그 사례임.

## 2.

###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1) 연구의 범위

- 지역별 인프라 실태 진단을 통해 인프라 시설물 별 신규 건설 또는 성능개선 소요를 종합적으로 진단함.
  - 분석 대상 인프라의 범위는 전통적 인프라 시설인 도로, 철도, 수자원, 안전, 환경 외에도 생활형 인프라 및 노후 인프라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함.
- 지역 간 필수 인프라 격차 해소 및 주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 대상을 시설물 별로 파악함.
  -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그 동안 중앙정부 및 각 지역에서 검토해 온 각종 발전계획을 비롯해 선거공약 등을 통해 나타난 지역 숙원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노후화 된 인프라의 실태 진단을 통하여 선제적인 투자전략 및 우선 투자 필요시설 정보를 제공함.
-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조례 개선 등 지역 내 주요 건설정책 방안 개선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마련 방안, 정부의 효율적 지원 전략, 현행 건설 정책·제도의 합리화 방안 등을 모색하여 제시함.

표 1-2

### 연구 범위

구 분	연구 범위
지역경제와 건설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제 일반현황 및 동향 분석</li> <li>•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 및 지역 건설산업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인프라 투자동향</li> <li>- 인프라 투자의 지역경제 성장기여도</li> <li>- 지역 건설 산업의 이슈 등</li> </ul> </li> </ul>
지역별 인프라 실태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유형별 현황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철도, 안전, 환경, 상·하수도, 문화·관광, 생활 인프라 등</li> </ul> </li> <li>• 지역 인프라 스톡의 수요 파악 및 노후 인프라 재투자 필요성 진단</li> </ul>
지역 인프라 정책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인프라 유형별 투자 정책 및 추이 분석</li> <li>• 지역 핵심 인프라사업 추진 현황 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지역 인프라 정책 및 투자 사례 벤치마킹</li> <li>• 지역 인프라 건설 정책 또는 제도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투자/예산제도, 지역건설 육성 및 투자 확대와 관련된 문제점 등</li> </ul> </li> </ul>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인프라 정책 기본방향 및 인프라 유형별 투자 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별 인프라 투자 및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성능제고 관련 과제 제시</li> <li>- 인프라 투자 및 개량계획의 수립 및 자원 확보 등 실행력 제고 방안</li> </ul> </li> </ul>
핵심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 및 노후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우선 투자대상 제안</li> <li>- 프로젝트별 사업내용 예시</li> </ul> </li> </ul>

##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2.

###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2) 연구의 구성

-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보고서가 구성됨.

표 1-3

#### 연구의 구성

장(Chapter)	핵심내용
I.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발전과 인프라</li> <li>2. 연구의 배경과 목적</li> <li>3. 연구 범위 및 구성</li> </ol>
II.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 일반현황 : 지역 일반현황 검토</li> <li>2. 지역경제 성장과 인프라 : 인프라 투자가 지역경제 성장이 미치는 영향 이론적 고찰</li> <li>3. 주민행복, 삶의 질 그리고 인프라 : 효율적 인프라 투자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행복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연구</li> </ol>
III. 해외 인프라 투자정책 및 사례	해외 인프라 투자정책과 프로젝트 사례 조사를 통하여 벤치마킹 시사점 도출
IV. 지역 인프라 실태 분석	<p>다음 7가지 시설 그룹별로 인프라 실태 (양적·질적 KPI<sup>31)</sup>) 파악 → 신규투자 및 노후시설 수요 파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 물류부문</li> <li>2. 산업, 경제시설 부문</li> <li>3. 환경시설 부문</li> <li>4. 교육, 의료, 복지 부문</li> <li>5. 문화, 관광, 체육시설 부문</li> <li>6. 도시 및 생활환경 부문</li> <li>7. 안전부문 및 노후시설 현황</li> </ol>
V. 지역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 인프라 예산 분석</li> <li>2. 지역 인프라 정책의 현안 파악</li> <li>3. 노후인프라 개량 및 재투자 정책 도출</li> </ol>

VI. 지역 인프라 투자 수요 분석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인프라 만족도 및 수요를 조사하고 투자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VII. 지역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와 정책과제	다음 7가지 시설물 그룹별로 지역발전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핵심 투자 프로젝트 제시 1. 교통. 물류부문 2. 산업. 경제시설 부문 3. 환경시설 부문 4. 교육. 의료. 복지 부문 5. 문화. 관광. 체육시설 부문 6. 도시 및 생활환경 부문 7. 안전부문 및 노후시설 현황
VIII. 정책과제 및 시사점	1. 핵심 인프라 투자대상 요약 및 기대효과 2.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1) 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

### 3. 기대 효과

#### (1) 본 연구의 특성

- 그동안의 지역의 인프라 연구 및 실행계획들은 부족한 인프라의 확충과 인프라 수요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정책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민의 수요에 특화된 맞춤형 인프라 투자 정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기존 인프라 공급 정책 및 실행계획들은 ‘제4차국토종합 수정계획(2011~2020)’, ‘국가도로종합계획’ 등 국가상위계획과 ‘2030 충남 발전전략’, ‘충청남도종합계획(23012~2020)’,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내륙권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충청남도 주택종합계획’, ‘행복한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 등 충청남도 자체 계획 등에서 제시되어져 왔음.
- 그러나, 이러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들은 대부분 그 수립범위가 단일 시설물(관광 등) 대상 이거나, 대규모 전통 SOC(도로, 항만, 공항) 시설의 신규 사업에만 초점이 맞추어 있어, 노후시설 성능개선 및 기타 시설물(생활인프라 등)의 사업계획은 상대적으로 부실하였음.
- 본 연구는 이러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적인 수요의 파악 및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지자체에는 향후 지역 내 인프라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정책 수립 및 사업 실행에 있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와 사업들에 대한 지역적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2) 연구 결과의 파급 효과

- 본 연구를 통하여 지자체에 있어서는 지역 내의 다양한 인프라 시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지역의 인프라 정책방향에 대한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지역경제에 있어 중요한 핵심 산업인 건설산업의 역할 확대 방향과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생활인프라, 경제 및 산업기반 인프라, 안전 인프라 등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지역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측면의 인프라 공급 정책을 균형적으로 수립토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함.
- 보다 구체적으로는 충남지역의 인프라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수요 조사를 포함하고 있는 바, 향후 인프라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인프라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인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확보 방향 수립에 도움이 될 것임.
- 중앙정부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책자료집으로서의 기능도 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 수립에 있어 보다 지역민 친화적이고 지역의 발전에 직결된 인프라 정책 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3.

###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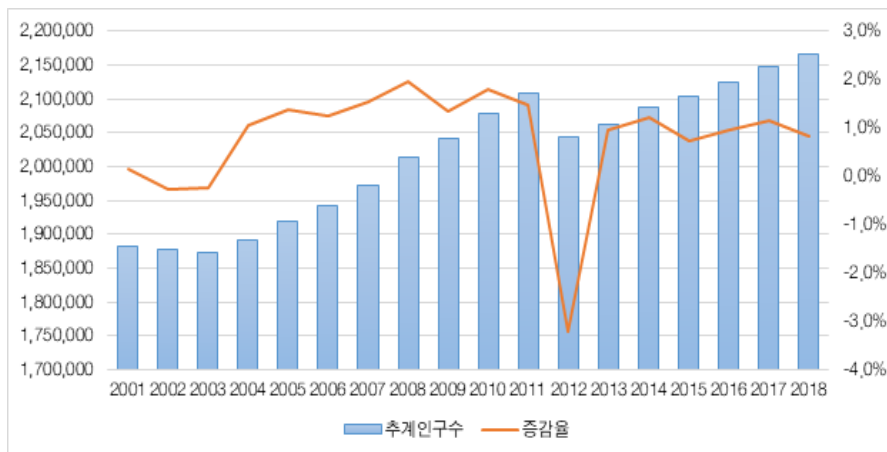
## 제2장 충남지역 현황 및 여건분석

### 1. 일반현황 분석

#### (1) 충남지역 사회·경제 현황

##### 1) 충남의 사회 여건 변화

- 충남의 인구는 2016년 세종시 분리 이전 인구 수준으로 회복
  - 2012년, 세종시의 분리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 4년만인 2016년에는 세종시 분리 수준 전으로 회복됨.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자료 :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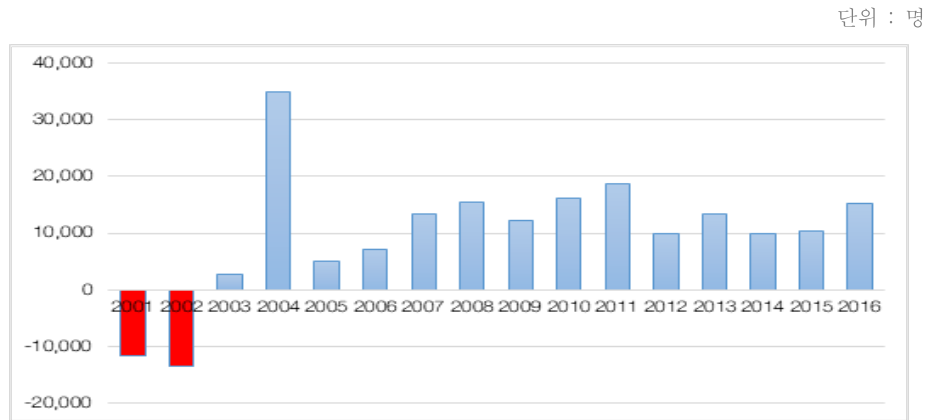
충청남도  
추계인구수 추이

1.  
일반현황  
분석

# 1. 일반현황 분석

그림 2-2  
충남의 인구의  
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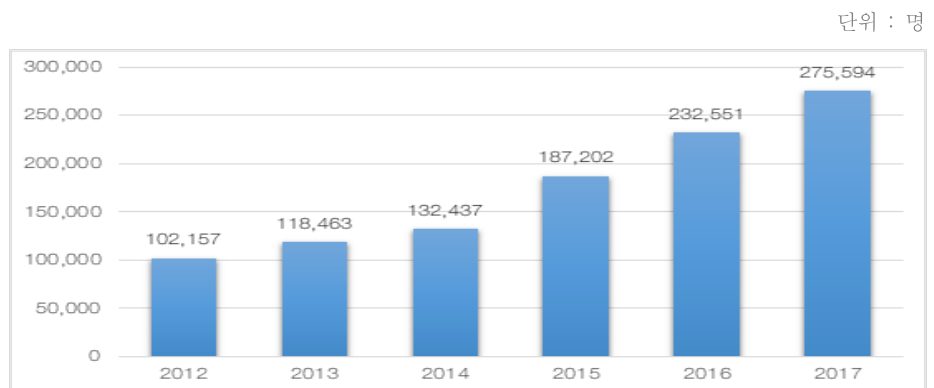
- 2003년 이후 지난 14년 동안 충남의 순증가인구는 18만 4,169명로서 연도 별로 등락폭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자료 :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 이와 함께 세종시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충남지역의 인구이동은 세종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세종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22.4%의 성장세를 보였음.

그림 2-3  
세종시  
추계인구수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 충남지역의 현재 추계인구는 2,165,972명임. 이는 9개 광역도 중 경기도, 경남, 경북 다음으로 많은 것임.
- 충남의 저출산 경향도 심화되고 있는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합계출산율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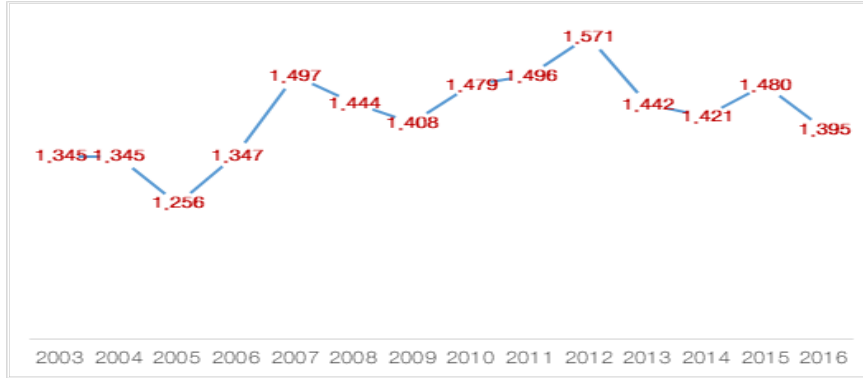


그림 2-4

충청남도  
합계출산율  
추이

-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시 사회의 고령화가 충청남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가구 형태와 구성의 다양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한 가구 구성의 사회적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음.
  - 노인인구비율은 2016년말 기준으로 16.7%로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임. 그러나, 제주, 경남, 충북 다음으로 낮아 비교적 젊은 도시임.
  - 특히, 1인 가구의 비율은 30.0%로서 9대 광역도 중 강원도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노인인구비율은 17.0%임.
- 충청남도의 경우, 청년세대 비중이 타 광역도들 보다 높아서 상대적으로 젊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청년 고용률은 전국에서 1위를 기록 중에 있음.

구분	내용
총인구수(2017년)	2,165,972명
합계출산율(2016년)	1.395명
노인비율	16.7%
1인가구	30.0%

표 2-1

충청남도 주요  
인구통계

## 2) 충청남도의 경제 여건 변화

-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증감률은 2010년 이후 다소 축소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증감률 4.2%보다 1.4%p 높음(2015년 기준 :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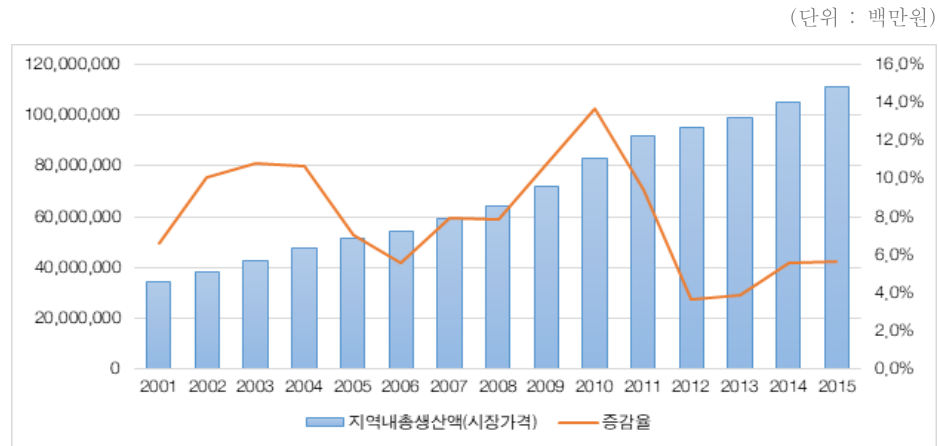
1.  
일반 현황  
분석

# 1.

## 일반 현황 분석

그림 2-5

충남  
지역내총생산액  
(GRDP)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액은 2016년 기준으로 117조 1,274억원으로 전국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9개 광역도 중 경기도 다음으로 높음. 특히, 2014년부터 경남을 추월한 이래 지속적으로 격차가 커지고 있음.
-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0%로서 전국 평균에 4.2%에 비해 높고, 제주, 경기, 충북, 강원 다음으로 높음.

표 2-2

지역별 GR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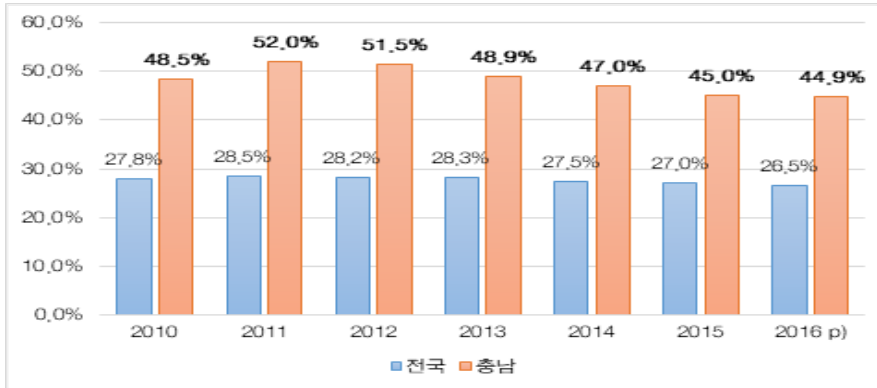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2~2016년
충남	91,816	95,308	99,154	105,002	111,265	117,127	5.0%
경기	276,155	288,147	313,671	329,559	352,857	372,344	6.2%
강원	32,438	33,853	35,357	37,170	39,566	41,709	5.2%
충북	42,489	43,628	47,402	49,791	52,656	56,122	5.7%
전북	39,960	40,432	42,513	44,243	45,641	46,880	3.2%
전남	62,689	64,642	62,289	62,457	65,454	68,209	1.7%
경북	82,276	85,401	89,132	92,697	94,988	98,815	3.7%
경남	91,233	95,635	99,619	101,028	103,995	107,795	3.4%
제주	11,847	12,707	13,198	14,087	15,366	16,911	7.4%
전국	1,330,888	1,377,041	1,430,255	1,485,505	1,565,248	1,635,555	4.2%

자료 :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 충남의 사업구조의 가장 큰 특성은 타 지역에 비해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국 평균 26.5% 대비 충남의 제조업 비중은 44.9%로서 매우 높음. 2016년 기준으로 9개 광역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임.

-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



자료 :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그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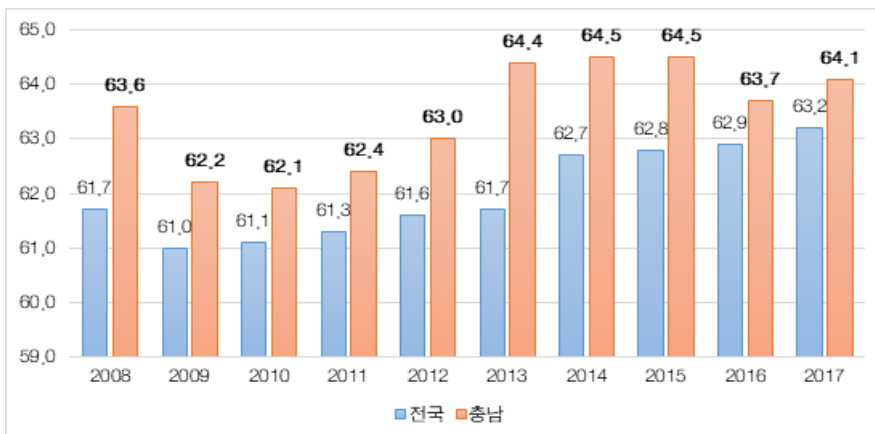
전국 대비 충남의  
서비스업 비중  
추이

- 그중에서도 최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등 첨단 제조업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음. 그러나, 지속적으로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첨단산업의 쇠퇴를 의미

※ 첨단제조업 비중 : 2010년 43.6% → 2013년 40.4% → 2016년 39.5%

- 충남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184만 3천명으로 경제 활동참가율은 6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63.5%로서 전국 62.0%에 비해 높은 수준임.

(단위 : %)



자료 :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그림 2-7

전국 대비 충남  
경제활동참가자  
추이

- 2017년 12월 기준으로 충남지역의 고용률은 61.5%로 전국의 고용률

## 1. 일반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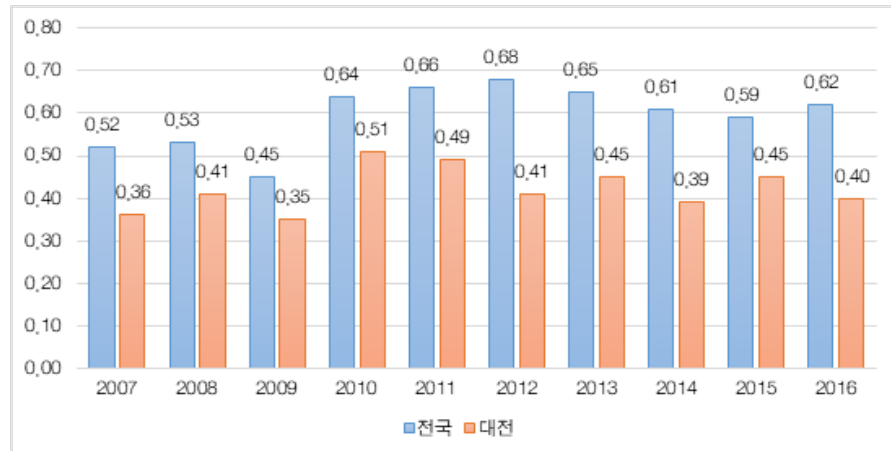
# 1. 일반 현황 분석

60.4%보다 높은 수준이며, 실업률도 3.2%로서 전국 평균(3.2%)이나, 9개 광역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임.

- 일자리를 나타내고 있는 구인배수(신규구인인원/신규구직건수)를 볼 때, 2007~2011년 연평균 0.79에 비해 2012~2016년까지 최근 5년간 0.86으로 일자리의 여건은 다소 개선되고 있음.
- 전국 대비 일자리는 다소 풍족한 상황에 있음. 2016년 기준으로 전국의 구인배수는 0.622인데 비하여 충남은 0.89로 나타나고 있음.
- 인구 천명당 사업체 수는 2016년 기준으로 77.1개로 전국 평균 76.4개보다 많으며, 특히, 2013년까지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최근 3년간(2014~2016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지역내 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

그림 2-8

전국 대비 충남  
구인배수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

## (2) 충남지역 도시안전 실태

### 1) 자연재해 현황

- 충남지역은 9개 광역도 중 피해금액으로 볼 때 타 지역에 비해 피해가 크지는 않으나,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타 도단위 광역지자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큼.

(단위 : 백만원)

지역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지진	계
경기	39,316	1,013,741	6,691	1,091	317	-	1,061,156
강원	21,792	471,951	43,765	2,143	2,023	-	541,674
충북	18,027	105,041	11,550	1,161	18	1	135,798
충남	181,258	187,522	10,909	3,238	17,785	-	400,712
전북	338,368	326,090	11,667	2,324	1,012	-	679,461
전남	985,940	255,158	12,495	3,266	11,099	2	1,267,960
경북	426,444	124,023	15,114	2,564	18,155	13,782	600,082
경남	731,969	436,492	1,159	1,727	688	8	1,172,043
제주	348,327	4,735	5,902	1,916	245	-	361,125

자료 : 2016년 재해연보, 주 : 금액은 2016년 환산금액

표 2-3

광역도의  
자연재해  
피해(금액) 현황

- 자연재해 피해 중에서는 호우, 태풍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10년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고, 2009년~2011년 까지 피해액 규모가 컸음. 호우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2016년 에도 호우에 의한 피해가 51억 5,841만원의 피해 발생
- 또한, 상대적으로 강풍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는 타 도단위 광역지자체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충남에는 당진항, 대천항을 비롯하여 다수의 항구가 존재하는 바, 태풍 및 강풍 등의 피해로 인한 인명, 물적 피해 우려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지역임.
- 2016년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를 진단한 결과, 충남은 3등급으로 중위 등급에 속해 있음.
- 종합적인 안전등급에 있어서는 서산시와 보령시 그리고 청양군은 각각 9등급과 10등급으로서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으며 위험환경, 방재성능, 위험관리능력 등 각 분야별 평가에 있어서는 충남 시, 군 중 일부 지역들은 취약한 상황에 있음.

## 1. 일반 현황 분석

# 1. 일반 현황 분석

표 2-4  
충남 시·군별  
안전지수  
현황(2016년)

구분	위험환경	관리능력	방재성능	안전도	등급
공주시	0.365	0.825	0.770	0.465	3
계룡시	0.251	0.896	0.690	0.484	3
아산시	0.347	0.869	0.667	0.493	3
예산군	0.409	0.865	0.653	0.529	4
논산군	0.460	0.677	0.910	0.559	5
금산군	0.463	0.657	0.864	0.569	5
서천군	0.507	0.904	0.636	0.631	6
부여군	0.491	0.553	0.820	0.688	7
당진시	0.453	0.761	0.536	0.691	7
태안군	0.467	0.697	0.583	0.696	7
천안시	0.348	0.622	0.460	0.716	8
홍성군	0.403	0.680	0.458	0.726	8
서산서	0.416	0.863	0.373	0.765	9
보령시	0.481	0.708	0.407	0.773	9
청양군	0.450	0.729	0.269	0.930	10

자료 : 충청남도,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

## 2) 인적·사회적 재난 현황

- 충남지역은 타 광역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재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인적· 사회적 재난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재난·안전사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

### ① 화재

- 충남의 화재피해는 발생건수 및 금액 측면에서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임. 특히, 시·단위 지역일수록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큼.

(단위 : 천원, 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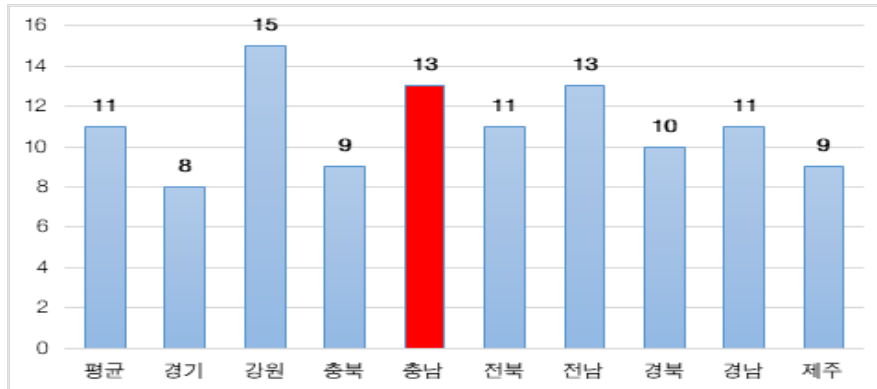
표 2-5  
최근 5년간  
충남 화재피해  
현황

	발생건수	피해액	인명피해			이재민수
			소계	사망	화상	
2010년	2,994	27,140	135	26	92	250
2011년	3,089	17,956	124	18	117	207
2012년	3,098	21,740	95	17	107	165
2013년	2,784	24,509	108	13	82	210
2014년	2,838	20,476	86	26	70	206
2015년	3,031	17,281	62	17	45	232

자료 : 충청남도 「2016 충남통계」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피해액은 다소 축소되었으나,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연평균 2천1백만원, 인명피해는 102명에 달하고 있음.
- 특히,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만명당 화재발생건수는 강원도 다음으로 높은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음.

(단위 : 건)



자료 :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그림 2-9

도단위  
광역시자체  
인구 1만명당  
화재발생건수

## ② 교통사고

- 충남의交通安全등급은 광역시도 중 광주, 울산, 경북과 같은 등급으로 중하위 등급에 속함.
- 최근 5년간 충남의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전국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안전등급은 낮은 반면, 발생건수는 적다는 것은 교통량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됨.

## 1. 일반 현황 분석

# 1. 일반 현황 분석

표 2-6

최근 5년간  
지역별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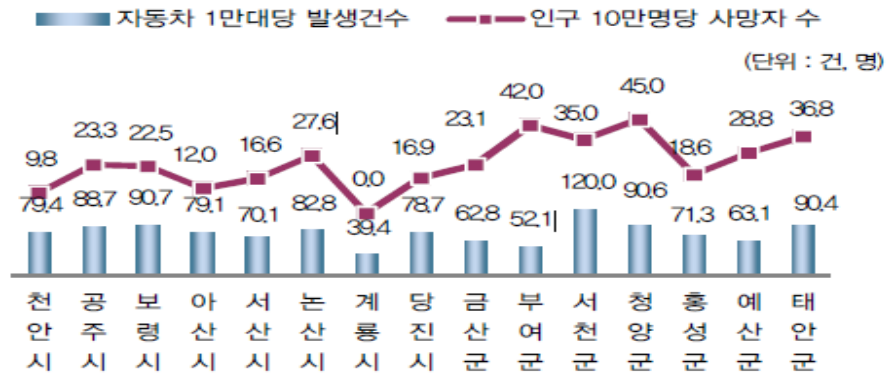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10.47	9.72	11.11	11.05	10.13
서울	11.62	11.14	13.54	13.63	12.99
부산	11.29	9.43	10.45	10.16	9.41
대구	12.43	11.29	13.54	12.86	11.58
인천	8.31	7.00	7.09	6.44	5.94
광주	13.94	12.76	13.90	12.86	11.61
대전	8.82	8.45	9.50	10.90	11.63
울산	9.02	8.77	10.27	10.22	8.35
세종	6.51	6.74	7.09	5.75	4.72
경기	9.28	8.70	10.25	10.77	9.88
강원	12.84	11.89	12.90	12.84	12.24
충북	11.62	11.12	12.77	12.79	12.35
충남	8.50	7.80	9.04	9.72	8.83
전북	11.87	10.81	11.85	10.57	9.03
전남	11.55	10.80	12.00	11.61	9.98
경북	11.57	10.88	12.22	12.05	10.81
경남	8.59	8.11	8.88	8.74	7.70
제주	11.43	11.12	11.67	10.68	9.49

자료 :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 시군별로는 공주, 아산, 서천이 2016년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계룡시와 부여군은 다른 시군에 비하여 교통사고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10

충남 시군별 교통  
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2016)



## ③ 범죄

- 충남은 범죄안전등급은 대구, 대전, 경기, 경남과 함께 3등급에 속하고 있으며, 부산, 강원, 충북의 4등급, 서울의 5등급보다는 양호한 중위 그룹에 속하고 있음.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34.30	35.31	34.40	35.61	35.19
서울	35.17	36.34	35.24	35.58	34.55
부산	37.16	37.88	38.01	40.04	36.93
대구	39.08	38.45	38.40	39.75	34.67
인천	31.61	33.08	32.46	34.15	34.11
광주	45.79	46.15	43.92	41.59	36.94
대전	29.62	31.63	31.05	32.65	32.38
울산	32.57	35.32	35.29	37.98	33.95
경기	31.90	32.85	32.72	34.40	37.46
강원	38.40	37.95	34.78	36.74	37.92
충북	32.24	33.10	32.21	33.90	35.30
충남	31.54	32.53	32.07	32.08	30.80
전북	33.20	31.98	30.26	30.67	28.62
전남	33.09	34.55	33.16	34.91	32.98
경북	34.49	36.36	32.93	33.99	32.61
경남	33.80	34.98	33.51	35.32	33.91
제주	45.03	52.58	51.46	54.16	54.56

표 2-7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자료 :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 시군별로는 계룡, 공주가 1등급으로 범죄안전등급이 가장 높으며, 당진, 서산, 청양, 부여, 서천이 2등급, 홍성 아산, 논산이 3등급, 천안, 보령, 예산, 태안이 4등급에 속하고 있음.

#### ④ 안전사고

- 충남의 안전사고 안전등급은 4등급으로 가까운 대전(3등급), 충북(3등급)에 대비하여 낮은 등급이며, 경기(1등급), 전북(2등급) 등 보다 낮아 전국에서 낮은 등급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는 계룡이 1등급, 천안, 홍성, 부여, 예산 2등급, 서산, 아산, 서천, 청양이 3등급, 논산, 태안 4등급, 공주, 보령, 당진이 5등급임
- 충남의 최근 년(2012-15년) 총 구급사고 중 정상 출동건은 279,409건으로 이 가운데 200,097건(71.6%)의 구급사고가 시 소재지에 집중되어 있음
- 시군별로는 천안시(21.2%), 아산시(12.3%), 서산시(8.0%)에서 발생 빈도가 높으며, 구급사고 발생은 농촌지역이 66.2%로 도시지역보다 많이 발생함.

## 1. 일반 현황 분석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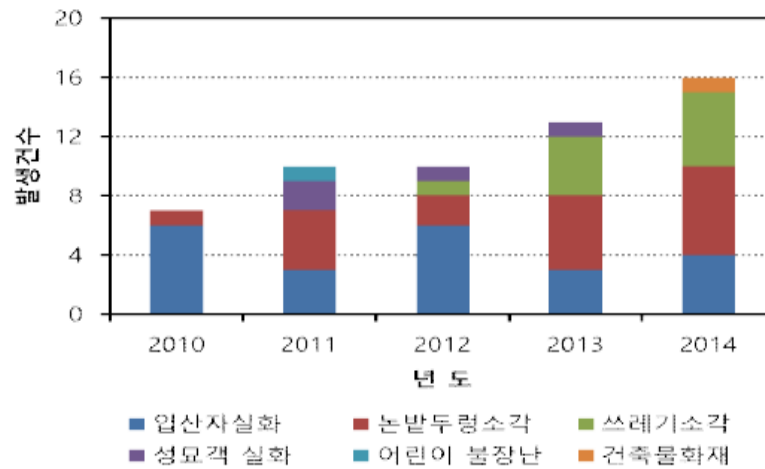
## 일반 현황

### 분석

- 사고의 종류별로는 질병사고(39.6%), 사고부상(20.8), 교통사고(11.9%)로 나타남
- 또한 충남의 경우, 2015년 기준 산불발생건수는 23건으로 최근 10년 평균(2005-14년) 16.5건의 약 7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불관리에 대한 관심이 함께 요구됨.

그림 2-11

충남지역 산불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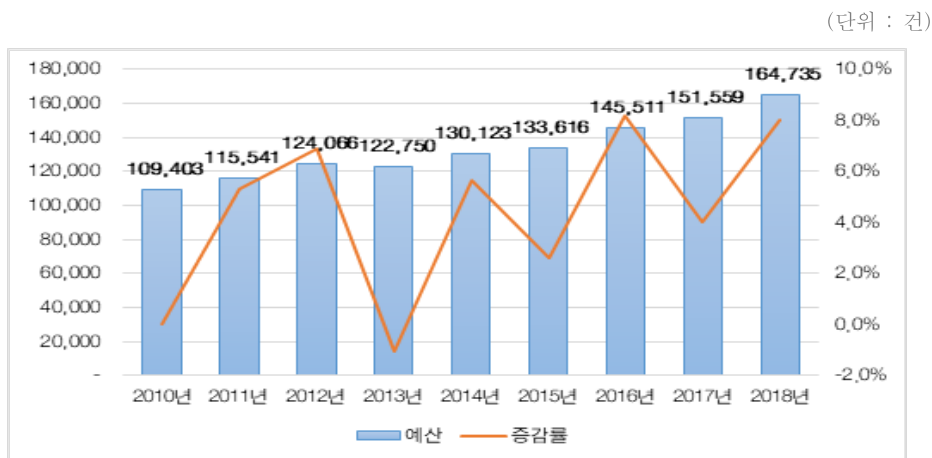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

### (3) 충남지역 재정 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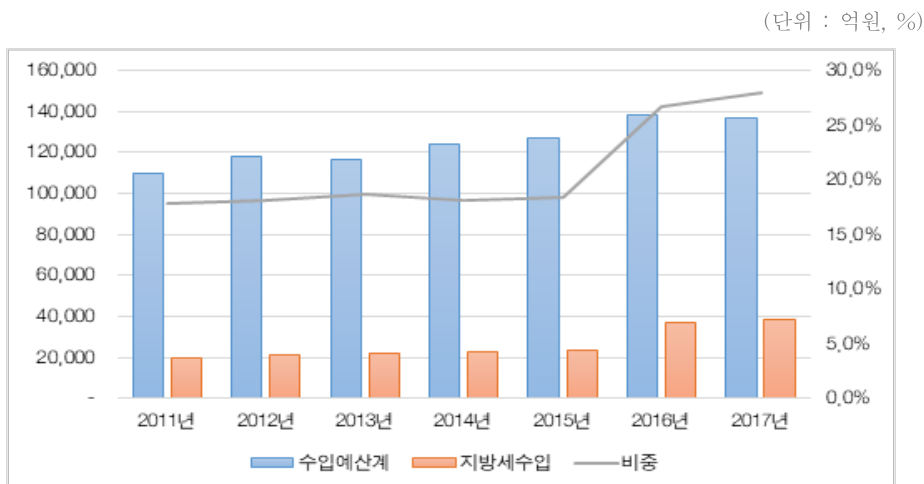
#### 1) 예산규모

- 충남의 2018년 예산규모는 16조 4,735억원으로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지난 8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5%임.
- 최근 충남의 예산규모의 성장률은 점차 축소되고 있음.



자료 : 충청남도

- 지자체의 수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의 경우, 충남(도청+시군)은 지난 20.9%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자료 : 지방재정 365

그림 2-12

충남 예산 규모  
추이

그림 2-13

충남 전체 수입  
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비중

1.  
일반 현황  
분석

# 1. 일반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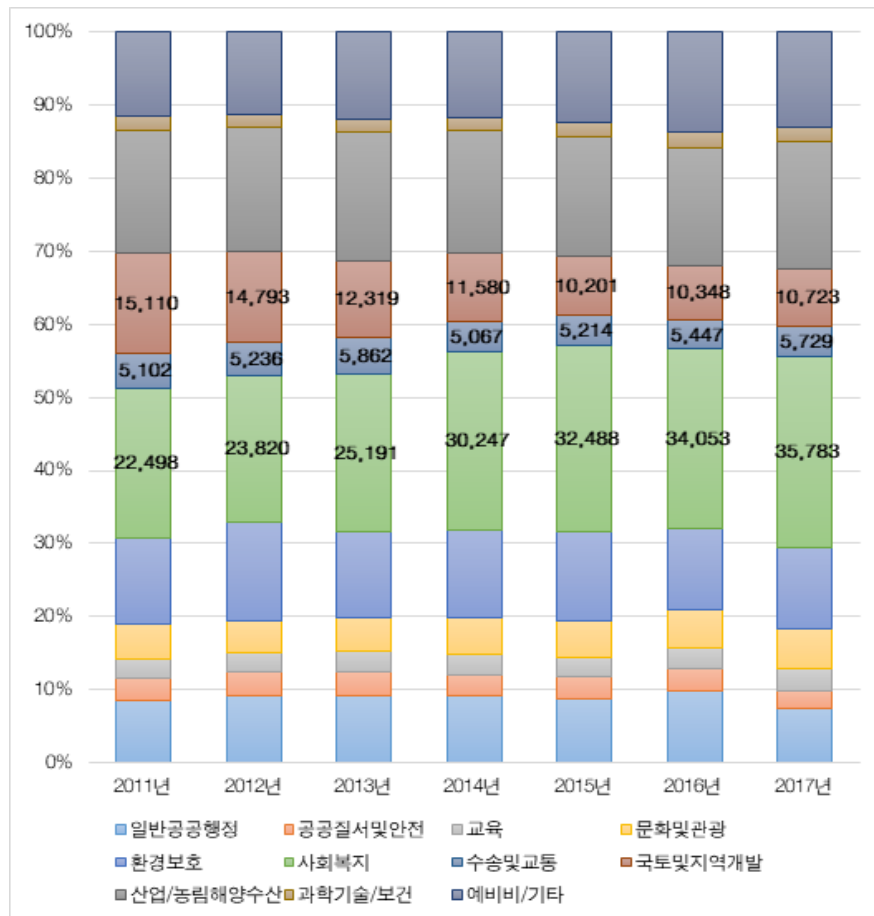
-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지방세 수입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6년 이후 지방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예산 기준으로 전체 지자체 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비중이 27.8% 점을 고려할 때, 충남의 28.0%는 비슷한 규모임.

- 지출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반면, 상대적으로 SOC 예산 중 국토및지역개발 예산과 공공질서 및 안전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4

충남 기능별 세출 예산 추이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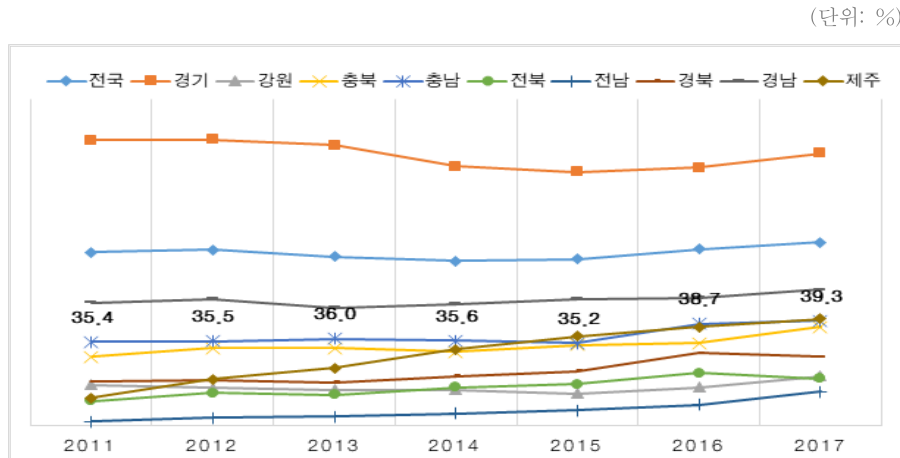
자료 : 지방재정 365

-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은 2011년에서 2017년까지 지난 7년간 연평균 2.6%의 증가를 보인 반면, 국토및지역개발 지출은 연평균 -5.6%,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0.7%을 나타냄.

- 결국, 타 분야의 지출에 큰 변동이 없는 바, 국토및지역개발 예산 감소를 통해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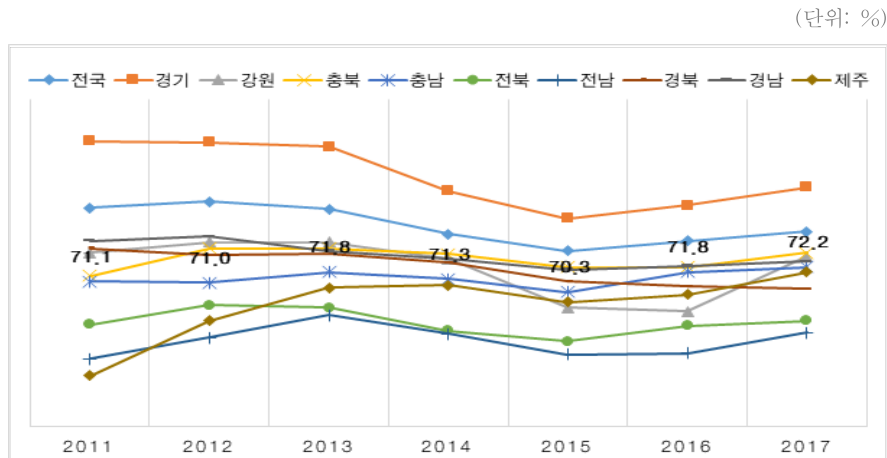
## 2) 재정여건

- 충남의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sup>32)</sup>는 2015년 이후 다소 회복세에 있음. 그러나 전국 평균에는 크게 못미치는 상황



자료 : 지방재정 365

- 충남의 최근 2년간(2016~17년) 재정자주도는 회복 양상을 보임.



자료 : 지방재정 365

32)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자체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낼 수 있음. 즉,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계에서 지방채를 제하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나눔.

그림 2-15

도단위  
광역지자체  
재정자립도 추이

그림 2-16

도단위  
광역지자체  
재정자주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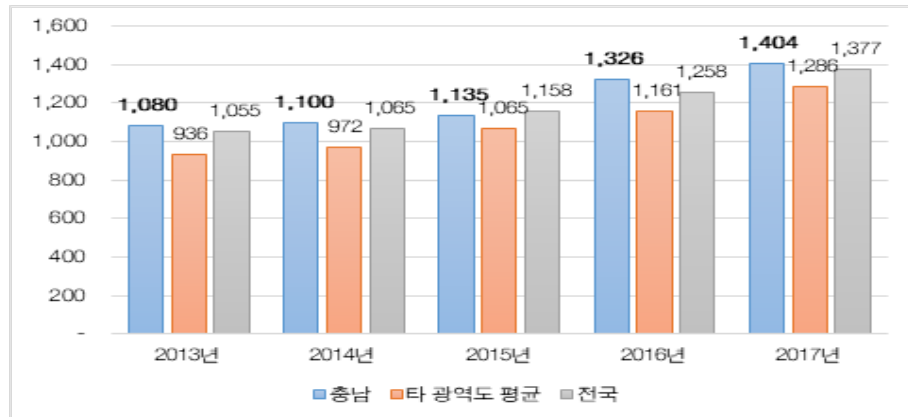
## 1. 일반 현황 분석

# 1. 일반 현황 분석

그림 2-17  
타 광역도, 전국 대비 충남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추이

- 충남지역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17년 기준으로 1백40만4천원으로 도단위 광역지자체 중 제주 다음으로 높은 상황임. 특히 충남을 제외한 타 7개 광역도의 평균(1백25만8천원)을 크게 웃돌고 있음.

(단위: 천원)



자료 : 지방재정 365

- 또한, 충남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평균 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지역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타 광역시·도의 비교시 중간 정도의 재정여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최근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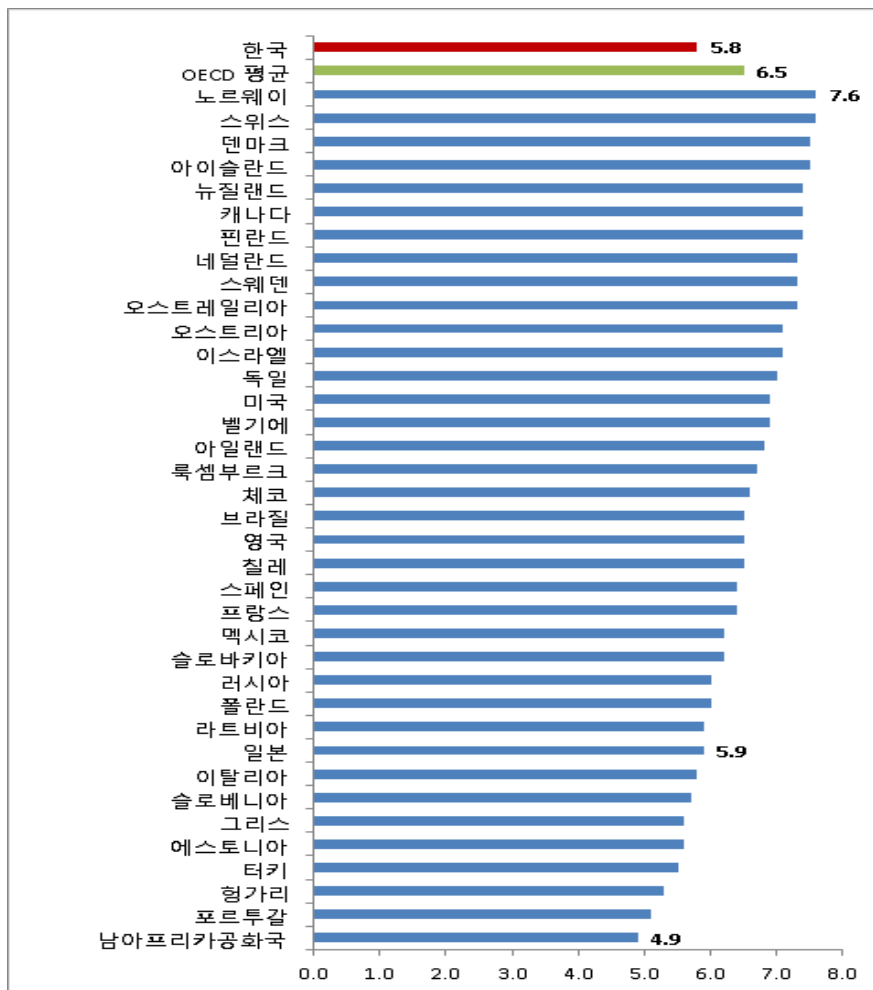
## 2. 지역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 (1)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 진단

#### 1) 삶의 만족도

-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 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
-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한 2016년도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8점으로 OECD 회원국 평균 6.5점에 미치지 못하였고, 조사대상 38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에 속함.

단위: 10점 만점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그림 2-18

2016년도 삶의  
만족도

2.  
지역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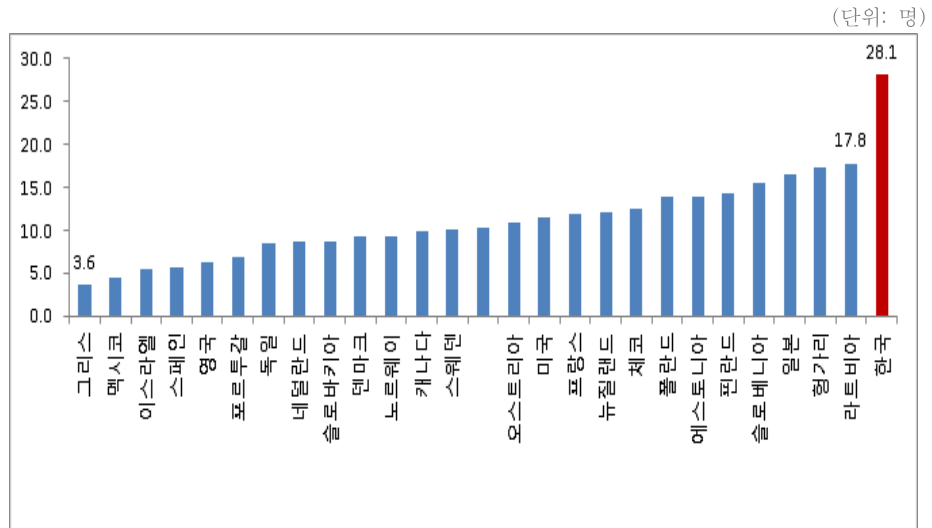
### 지역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그림 2-19

OECD 회원국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 2) 자살율과 교통사고 사망률

-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6년에 25.6명으로 2013년 28.1명 보다 줄기는 했지만,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표 2-8

전국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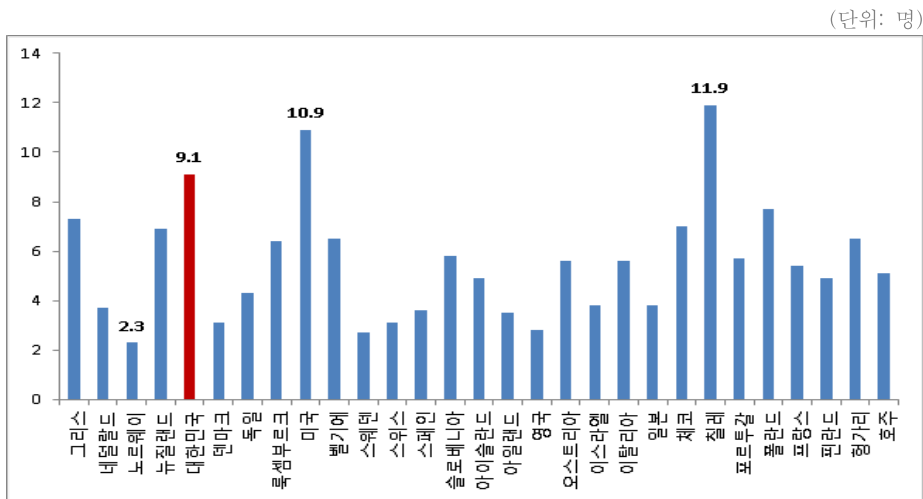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 평균	27.3	26.5	25.6
서울특별시	24.7	23.2	23.0
부산광역시	28.7	29.0	27.2
대구광역시	25.2	26.8	24.2
인천광역시	29.1	27.4	26.5
광주광역시	23.8	21.4	23.2
대전광역시	26.8	27.0	24.8
울산광역시	25.4	24.3	23.5
세종특별자치시	18.1	22.5	23.9
경기도	25.7	25.3	23.0
강원도	36.8	35.3	32.2
충청북도	31.5	30.4	32.8
충청남도	36.5	35.1	32.1
전라북도	28.8	26.6	28.5
전라남도	29.4	30.8	29.7
경상북도	28.4	27.5	28.8
경상남도	26.5	26.3	27.2
제주특별자치도	27.2	24.5	24.0

자료 : 통계청(www.kosis.kr)



- 도로의 신설, 선형개선, 도로안전투자 확대 등으로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5년 13.2명에서 2016년 8.4명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듦.
- 그러나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9.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칠레(11.9명), 미국(10.9명) 다음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지역별로 보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제주(747건), 사망자수는 전남(19명), 부상자수는 제주(1,160명)이 가장 높게 나타남.



자료 :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그림 2-20

OECD 회원국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2015년도)

순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시도	발생(건)	시도	사망(명)	시도	부상(명)
평균	-	434.86	-	8.45	-	652.97
1	세종	229.21	서울	3.54	세종	348.43
2	인천	292.85	부산	4.69	인천	433.53
3	부산	359.79	인천	4.94	부산	493.95
4	경남	379.82	광주	5.6	경남	553.77
5	울산	392.04	경기	6.23	서울	566.05
6	서울	407.12	대전	6.46	울산	587.71
7	경기	407.48	대구	6.69	경기	627.08
8	충남	425.82	울산	7.06	충남	631.85
9	전북	436.08	세종	11.00	전북	681.11
10	광주	484.73	경남	11.31	대전	737.91
11	대전	491.39	제주	13.48	대구	766.59
12	대구	534.68	강원	14.49	광주	788.72
13	전남	541.58	충북	14.74	경북	846.39
14	경북	553.58	전북	15.78	전남	883.88
15	강원	585.10	충남	18.44	충북	966.62
16	충북	599.48	경북	18.73	강원	983.38
17	제주	747.15	전남	19.20	제주	1,160.16

자료 :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표 2-9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2016년  
도)

## 2. 지역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 2.

### 지역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 3) 삶의 지표

- 통계청은 2006년부터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총 12개 영역의 80개 지표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들 지표와 측정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음
  - '삶의 질'은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
  - 12개 영역은 물질부문(소득·소비·자산, 고용·노동, 사회복지, 주거)과 비물질(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지역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 한국인의 '삶의 질' 지수는 2006년 100을 기점으로 2015년 118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영역별로 보면, 교육, 안전, 소득·소비, 사회복지, 종합지수 개선을 견인하지만, 가족·공동체, 고용·임금, 주거 등의 영역은 낮은 증가율을 보임

그림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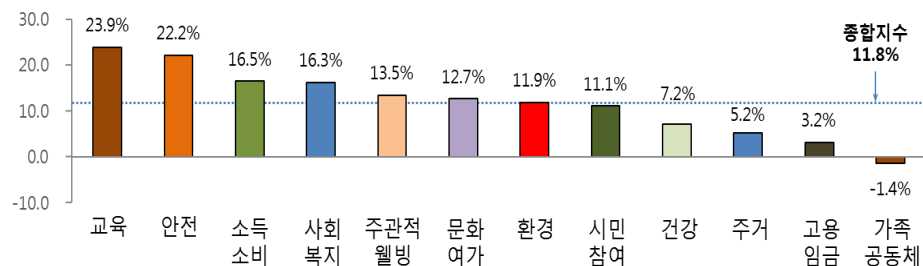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추세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결과), 2017.3.15

그림 2-22

'삶의 질' 부문별  
기준년도(2006년)  
대비 2015년  
증감율



자료 : 전개서

- 1인당 주거면적은 2014년 33.5㎡에서 2016년 33.2㎡로 0.3㎡ 감소
  -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비율 2016년에 5.4%(102만 7천 가구)로 2014년과 동일
- 통학 및 통근 소요시간은 2015년 30.9분으로 2010년 1.7분 증가
  - 통근·통학시간은 개인의 하루 일과중 중 매일 반복되는 시간으로 장시간 출퇴근은 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통근·통학소요 시간이 가장 긴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와 같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와 같은 대도시 지역으로 조사되고 있는바, 이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

단위: 분

구분	전국	읍면부	동부	수도권	비수도권
2010년	29.2	20.4	31.1	35.4	23.1
2015년	30.9	21.1	33.2	37.7	24.2

자료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17, 2017.12

표 2-10

통근 및 통학  
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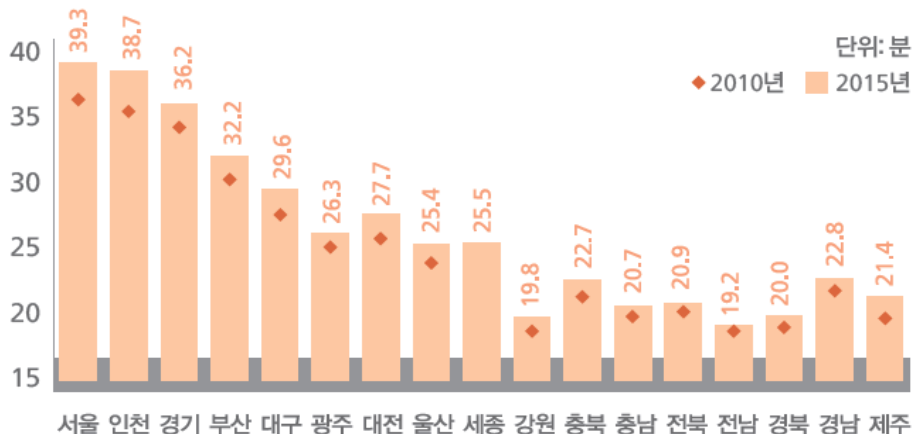


그림 2-23

시도별 통근·통학  
소요시간

-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과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부문도 상당 부문 포함, ‘인프라 개선’은 삶의 질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1인당 소득, 빈곤율, 소득만족도, 고용률, 실업률, 일자리 만족도, 1인당 주거면적, 통근·통학 소요시간, 주거비용, 주거환경만족도, 도로사망율, 1인당 도시공원 면적, 하수도 보급률 등

## 2. 지역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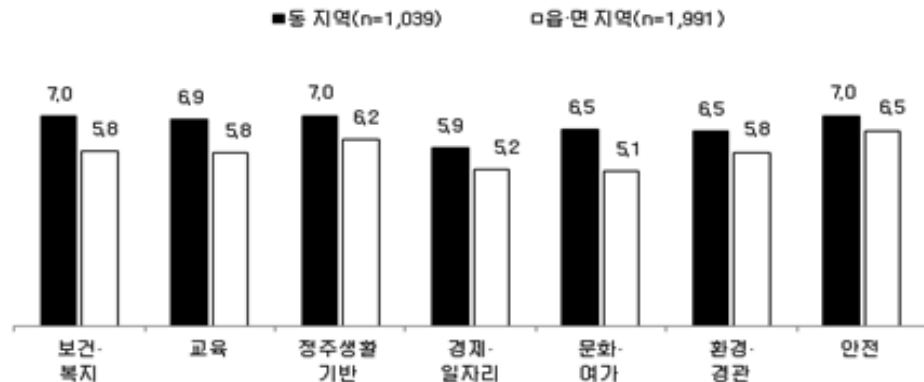
### 지역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 4) 삶의 질에 대한 도시와 농촌 비교

- 삶의 질 위원회는 2017년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 만족도 조사를 실시, 모든 부문에 있어서 농촌주민이 도시주민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보건·복지(격차 1.2), 교육(1.1), 정주생활기반(0.8), 경제·일자리(0.7), 문화·여가(1.4), 환경·경관(0.7), 안전(0.5) 등 7대 부문 모두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들에 비해 만족도가 낮음
-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문화·여가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 구축과 응급상황 의료서비스, 양육보호지원, 통학의 편리함 등 대책 마련이 필요

그림 2-24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  
별 만족도



자료 : 삶의 질 향상위원회(<http://rurallife.kr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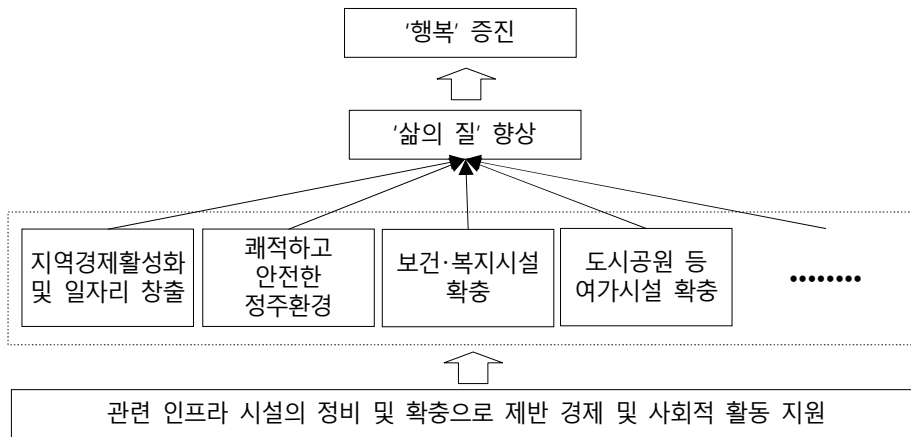
## (2) 지역민의 행복과 인프라

### 1) 행복 / 삶의 질과 인프라 관계

- 지역민들의 ‘행복’의 중요한 요인은 ‘삶의 질’ 향상이며, 이는 ‘인프라’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생활기반 시설, 충분한 문화·여가활동의 지원, 보건·복지시설 확충 등 인프라 투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보는 지역민들의 소득 확충에 기여하고 이는 행복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인프라 시설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음.

그림 2-25

행복과 인프라  
관계도



- 예를 들어, 도로·철도·항만·공항과 같은 교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음.
- 직접적으로 수송비 절감, 수송시간 절감, 교통편리성 향상, 교통사고 감소 등 수송여건의 개선으로 관련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간접적으로 교통인프라 주변의 개발을 유도하고, 공장입지의 확대, 관광지 개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를 함

구분	항 목	내 용
직접 효과	수송비 절감	- 거리단축, 도로여건 개선으로 인한 유류, 인건비 등의 절감 효과
	수송시간 단축	- 교통시설개선에 의한 통행시간 단축
	교통사고 감소	- 안전시설에 의한 각종 교통사고의 감소
	교통공해의 변화	- 자동차 배기가스, 소음 등의 지역적 이전 또는 감소
	교통편리성 향상	- 안락감, 쾌적감, 신뢰도 증진
간접 효과	주변의 개발과 토지이용의 변화	- 접근도 향상지역의 토지의 전용, 지가의 상승, 생활권의 변화
	공장입지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 공사로 인한 효과, 공업입지의 확대, 지역경제의 특화, 농외소득의 증대와 생활시설의 확충
	유통구조의 변화	- 시장권의 확대, 산업의 특화
	관광지 개발	- 지역의 관광지 개발 촉진
	주민의 교류확대와 사회의식의 변화	- 지역간 인적 교류 촉진, 주민의 지방정책 기반 조성, 문화 및 사회가치관의 변화
	지방재정	- 지방세 수입의 증가

자료 : 양지청, 사회간접자본론, 서울프레스, 1994

표 2-11

교통부문 인프라  
투자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의 유형

2.  
지역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 2.

### 지역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 2) 지역민의 행복을 위한 지자체·국가의 역할

- 지역민, 각 개인의 24시간을 활용함에 있어 그 질을 높여 행복감을 증진시키려면,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 및 국가가 제공해야할 서비스 및 시설이 필요
- 통근·통학 소요시간이 지역민들의 이동시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양질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생활권내에 공급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음.

그림 2-26

지역민들의 24시간  
필요한 요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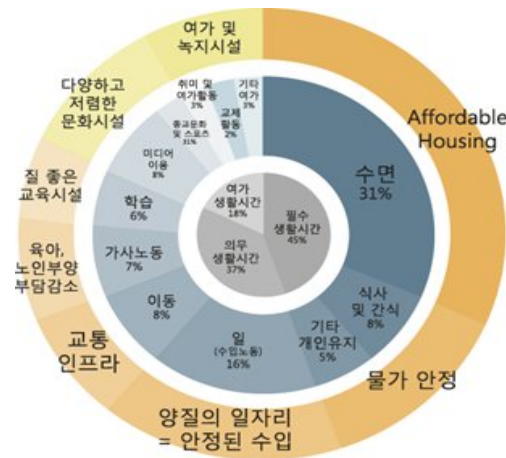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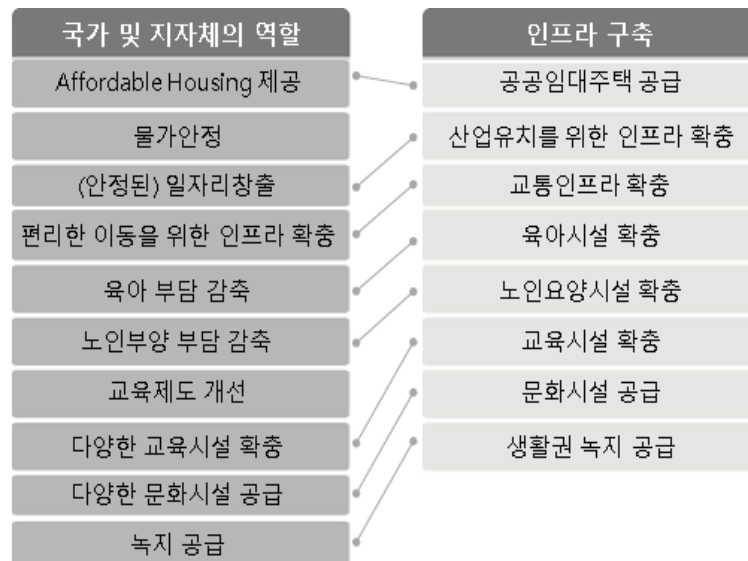


그림 2-27

지역민들의 필요  
요소에 대한 지원  
인프라 구축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서울대학교,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 방향 연구, 2013.8

- 지역민들의 시간 활용의 효율적 증대를 위해서는 필수 생활시간을 제외한 구성요소 중 여가시간 증대를 위해 의무생활시간 감축을 구상해야 함.
- 근무시간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단축 가능, 이동시간 감소는 혼잡구간의 도로 및 교통시설의 확충으로 혼잡도 개선 및 접근성 확대 가능
- 생활에 필요한 가사노동을 제외하면 보육과 노인부양이 큰 부분을 차지, 이는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해 감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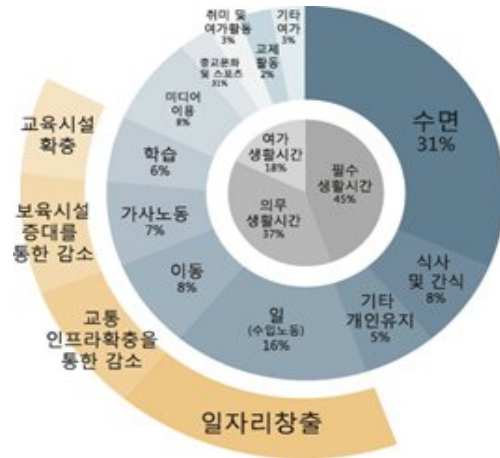


그림 2-28

지역민들의 의무 생활시간 감소를 위한 행복감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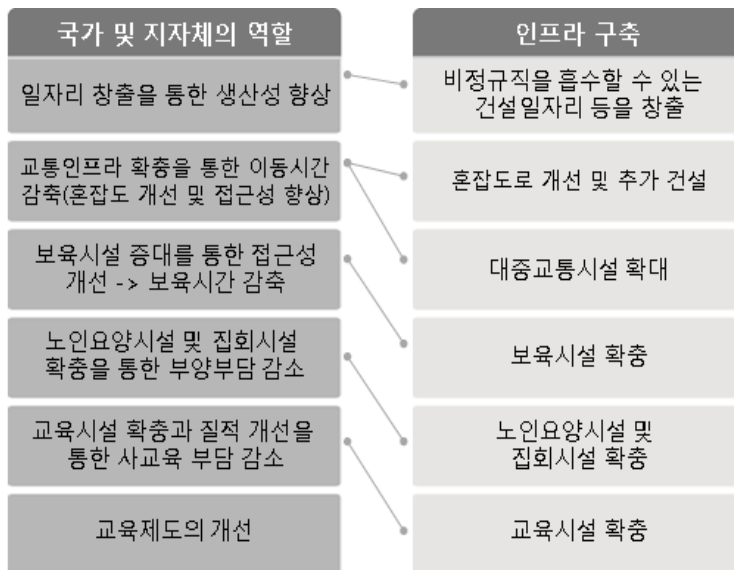


그림 2-29

지역민들의 의무 생활시간 감소를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자료 : 전개서

- 이와 같이 지역민들의 '행복'에 있어 '인프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바, 인프라 시설의 적정 공급과 운영을 위한 지자체 및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

## 2. 지역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 3.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1) 충남도민의 분야별 삶의 질

##### 1) 경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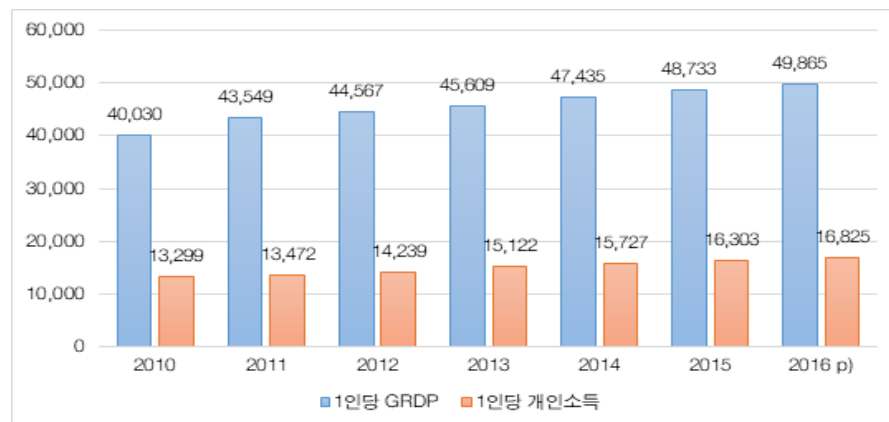
##### ① 소득 및 소비생활

- 충남도민의 1인당 GRDP(48,682천원)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 30,682천원을 크게 앞서고 있고, 16개 지자체 중에서 울산 다음으로 높음. 반면,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17,222천원에 비해 낮고, 16개 지자체 중 8위로서 중간 위치에 있어 대조적임.
- 충남 지역 내에서 생산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도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음 ⇒ 충남 지역의 생산액이 지역외로 유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의 의미

(단위 : 천원)

그림 2-30

충남 1인당 GRDP  
와 1인당  
개인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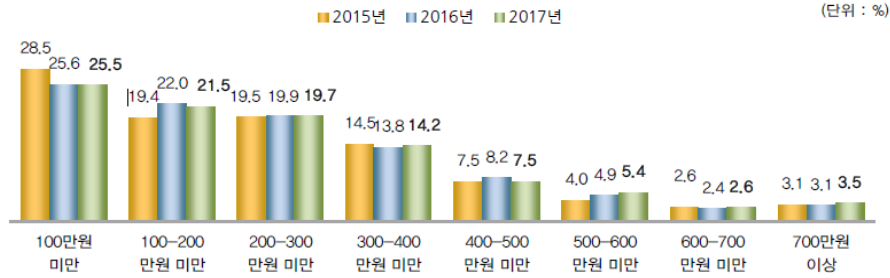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충남지역의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 비율(66.7%)은 전년 수준을 유지, 전체 가구의 2/3를 차지함
- 월평균 100만원 미만 가구(25.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600-700만원 미만 가구(2.6%)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시군별로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 비중은 서천군(83.6%), 청양군



(83.4%), 금산군(83.0%) 순으로 높으며, 계룡시(34.6%), 천안시(58.0%), 서산시(61.9%) 순으로 낮음



자료 : 충남 2017년도 사회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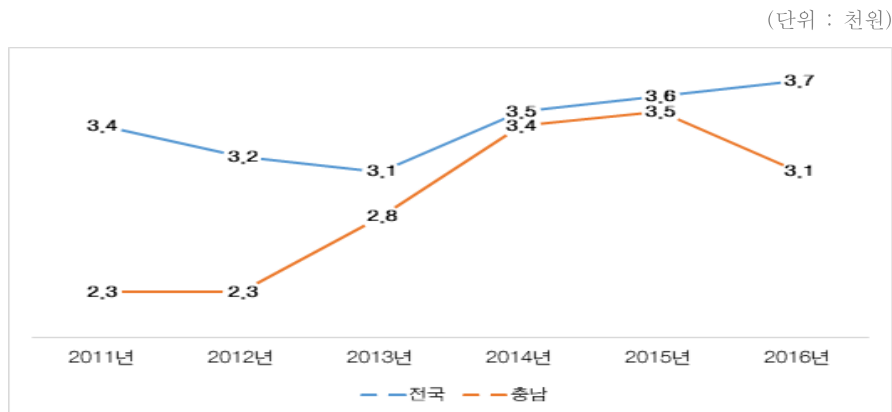
그림 2-31

충남지역 가구  
월평균 소득  
변화 추이

- 충남의 전체 가구 중 38.1%가 가계 부채가 있으며, 가장 주된 부채의 이유는 '주택 임차 및 구입(51.3%)'로 나타남.

## ② 일자리

- 충남의 경제활동인구 126만 8천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4.0%임. 이는 전국 평균(62.8%)보다 1.2%p 높음.
- 충남의 2016년 고용율은 62.0%로 전국(60.4%) 대비 1.6%p 높게 나타나고, 실업률은 3.1%로 전국 평균(3.7%)보다 0.6%p 낮게 나타나는데, 성별로 충남 남성의 실업률은 3.0%로 여성의 실업률(3.3%)보다 0.3%p 낮음



자료 : 2017년 충남사회조사

그림 2-32

전국 대비 충남의  
실업률 추이

##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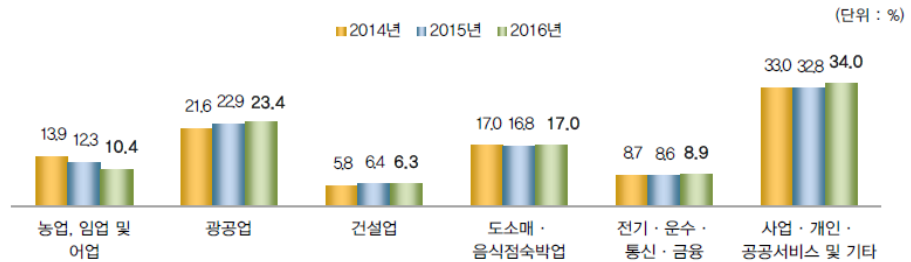
### 3.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그림 2-33

충남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변화 추이

- 충남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로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가 34.0%(41만 7천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광공업' (23.4%) > '도소매, 음식점숙박업' (17.0%) > '농업, 임업 및 어업' (10.4%)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8.9%) > '건설업' (6.3%) 순임



자료 : 2017년 충남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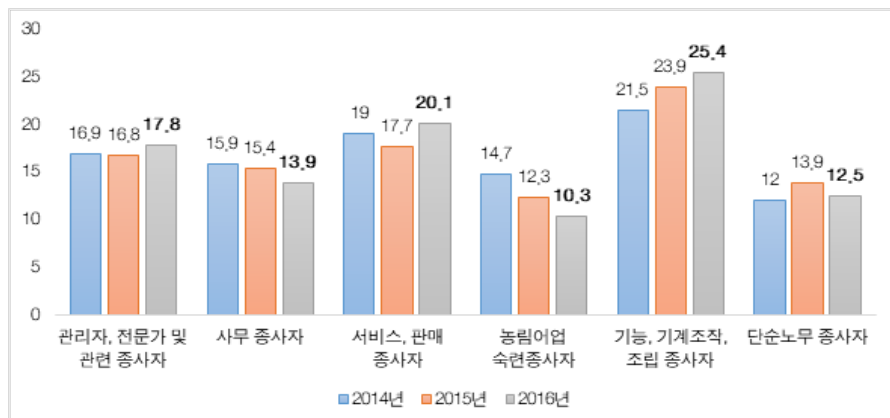
-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의 구성비는 전년(12.3%) 대비 1.9%p 감소하여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큼

- 충남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로 '기능,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의 구성비가 25.4%(32만 4천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그 뒤로 '서비스, 판매 종사자'(20.1%)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7.8%) > '사무종사자'(13.9%) > '단순노무종사자'(12.5%)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10.3%) 등의 순

(단위 : %)

그림 2-34

충남지역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변화 추이



자료 : 2017년 충남사회조사

- 종사상 지위는 임금 근로자가 62.0%, 자영업자가 29.8%로 이루어 짐
  - 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상용근로자(48.4%) > 임시근로자(8.6%) > 일용 근로자(5.0%) 순임
  -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남성(50.1%)이 여성(45.7%)보다 더 높음
  -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상용근로자의 비율도 높아짐
  - 상용근로자는 2016년 대비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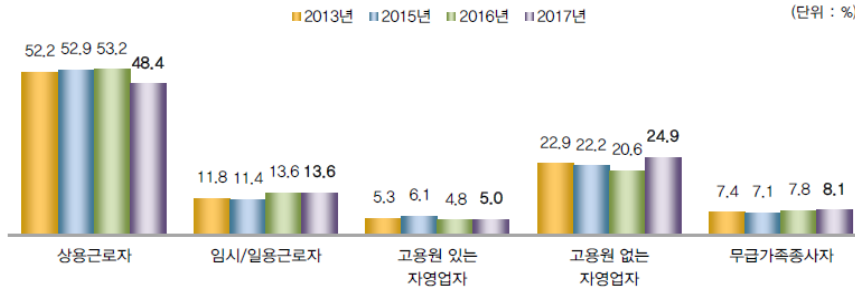


그림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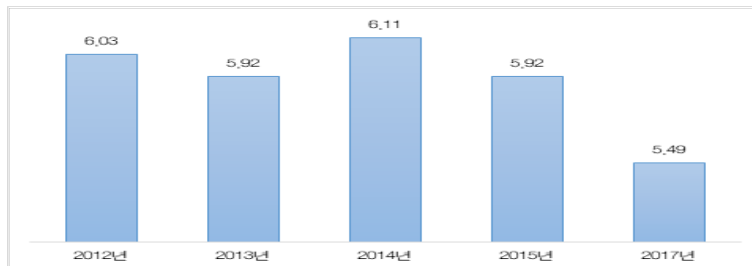
충남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  
추이

자료 : 2017년 충남사회조사

- 충남 이외 지역으로 직장을 다니는 이유로 '원래 다니는 직장이라서'라는 응답이 53.1%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충남 일자리가 적어서'(14.1%), '임금이 더 높아서'(11.6%) 순
  - 특히, '충남 일자리가 적어서'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26.3%),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37.5%), 직업별로는 기능/단순노무직(24.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2017년 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35.7%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하다는 의견도 20.2%로 나타났다.
- 그러나, 2014년 대비, 2015년, 2017년 모두 만족도가 하락하였음.

(단위 : 10점 만점)



자료 : 2017 충남사회조사

그림 2-36

충남 취업자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 추이

###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장래성에 대한 만족 응답은 28.3%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 응답은 27.9%로 나타나 만족 응답이 0.4%p 높음(10점 만점 4.99점)
-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 응답은 27.5%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 응답은 24.5%로 나타나 만족 응답이 3.0%p 높음(10점 만점 5.12점)
- 직장 내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 응답은 29.5%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 응답은 21.8%로 나타나 만족 응답이 7.7%p 높음(10점 만점 5.25점)
-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 응답은 28.8%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 응답은 21.1%로 나타나 만족 응답이 7.7%p 높음(10점 만점 5.25점)

## 2) 정주 환경

### ① 교육

- 2017년 충남 사회지표조사 결과, 학부모들의 공교육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에 4.78점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2016년 대비 하락한 상황(※ 2016년 5.13점 ⇒ 2017년 4.78점)
- 학부모는 공교육 교육환경에 대해 만족이 24.7%, 보통이 47.2%인 반면, 불만족은 28.1%임.

표 2-12

시군별 공교육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시군별	만족도 평가		평균(5점)	평균(10점)
	불만족	만족		
천안시	27.1	22.9	2.90	4.75
공주시	24.5	26.9	3.01	5.02
보령시	26.8	28.1	2.99	4.97
아산시	31.9	21.5	2.82	4.55
서산시	30.1	26.7	2.91	4.78
논산시	16.8	30.7	3.11	5.26
계룡시	21.4	27.7	3.06	5.15
당진시	42.3	11.7	2.55	3.87
금산군	18.2	32.3	3.15	5.38
부여군	19.2	45.3	3.33	5.81
서천군	18.2	40.3	3.21	5.52
청양군	57.6	14.4	2.40	3.51
홍성군	20.2	29.3	3.07	5.19
예산군	29.9	31.0	2.95	4.87
태안군	12.0	50.7	3.44	6.11

자료 : 2017 충남사회조사

-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만족한다는 응답이 시군별로 태안군(50.7%)이 가장 높고, 당진시(11.7%)는 가장 낮음.
-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6.34점 그리고, 교육내용(6.11), 교육방법(5.98) 등 다른 세부 부문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학교시설 및 설비에 대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5.66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중학교 이상 재학생은 학교시설 및 설비에 대해 만족 39.6%, 보통 40.0%인 반면, 불만족은 20.3%로 나타남.
- 또한,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금산군이 가장 낮았고, 공주시, 서산시, 서천군 등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시군별	만족도 평가(%)		평균(5점)	평균(10점)
	불만족	만족		
천안시	20.6	44.2	3.34	5.84
공주시	29.0	22.6	2.94	4.84
보령시	6.6	39.3	3.44	6.11
아산시	19.8	35.4	3.21	5.52
서산시	33.1	39.0	3.08	5.21
논산시	9.5	41.3	3.40	5.99
계룡시	8.4	46.1	3.41	6.02
당진시	14.6	23.2	3.13	5.34
금산군	36.8	28.3	2.82	4.55
부여군	10.8	37.8	3.27	5.68
서천군	26.7	40.0	3.17	5.42
청양군	10.5	49.1	3.42	6.05
홍성군	14.3	46.8	3.47	6.17
예산군	10.0	52.0	3.54	6.35
태안군	17.2	44.8	3.48	6.21

자료 : 2017 충남사회조사

표 2-13

시군별 학교시설  
및 설비에 대한  
만족도

- 2015년 충남 학교의 건물면적은 474만 3,359m<sup>2</sup>, 교사대지 면적은 763만 6,182m<sup>2</sup>, 체육장 면적은 654만 5,370m<sup>2</sup>임. 아울러 학생 1인당 면적은 건물 17m<sup>2</sup>, 교사대지 27m<sup>2</sup>, 체육장 24m<sup>2</sup>으로 전국 평균 대비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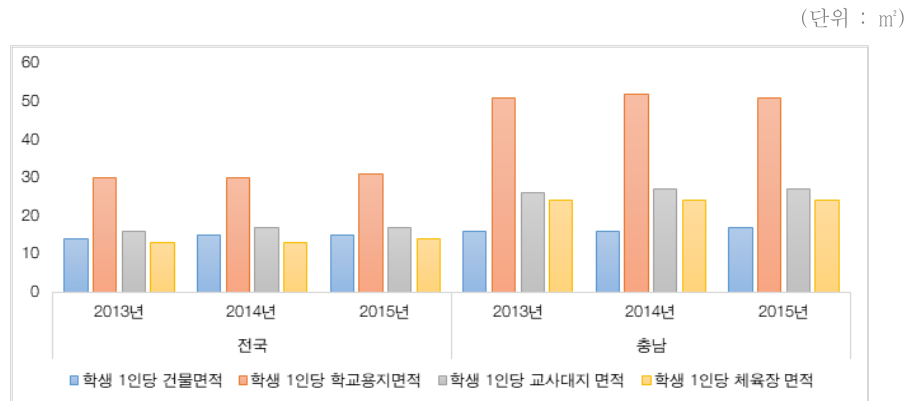
###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그림 2-37

전국 대비 학교시설 면적 비교

- 그러나, 천안시, 계룡시 등은 전국 평균 대비 열악하여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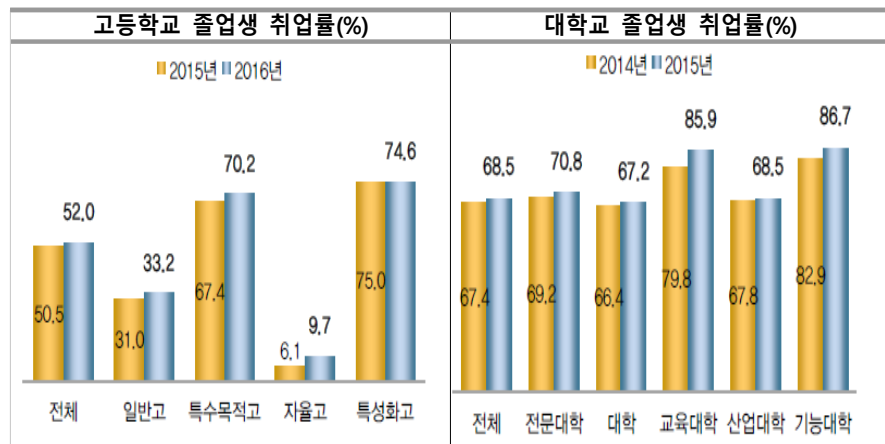


자료 : 2017 충남사회지표조사 결과

- 2016년 고등학교,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에 비해 2016년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음.

그림 2-38

충남지역 졸업생 취업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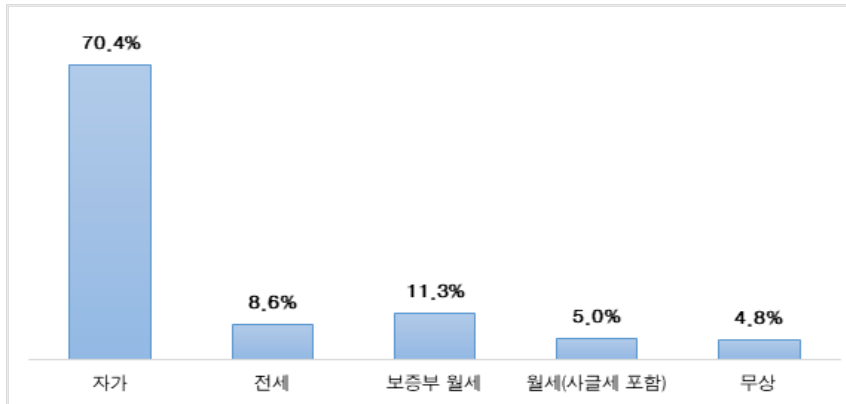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

## ② 주거

-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는 ‘자가’ 비율이 7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전세’는 8.6%, ‘월세’(보증부 월세+월세(사글세 포함))는 16.3%로 나타남.
  - 집의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는 부여군(92.5%)이 가장 높고, 계룡시(53.4%)

가가장 낮음

- 전세는 계룡시(15.0%) 이외 아산시(13.4%), 천안시(13.1%) 등 북부권 (11.5%) 지역에서 높음
- 보증부 월세는 천안시(16.8%), 아산시(13.7%) 등 북부권(14.1%)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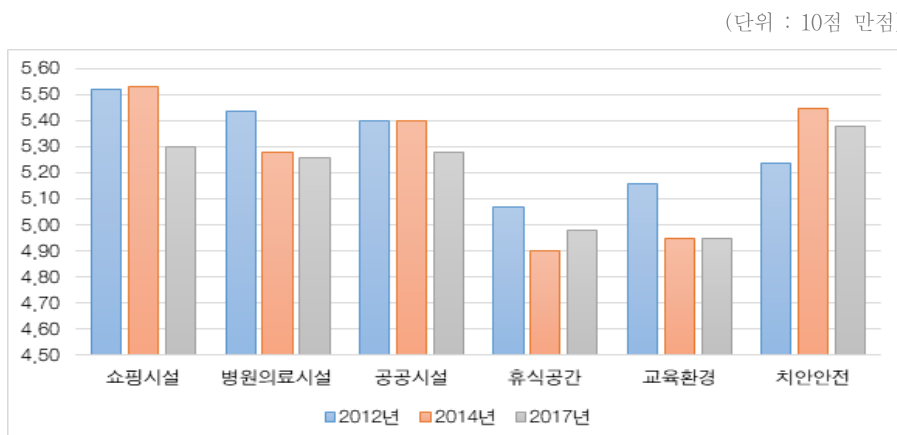


자료 : 2017 충남 사회지표조사 결과

그림 2-39

충남지역  
거주형태 현황

-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44점으로 나타남. 만족이 37.2%, 보통이 43.0%으로 나타나고, 불만족은 19.8%임.
- 그러나, 거주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하여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상대적으로 휴식공간과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타 부분에 상대적으로 비해 낮음.



자료 : 2017 충남 사회지표조사 결과

그림 2-40

충남지역  
주거환경 항목별  
만족도 변화 추이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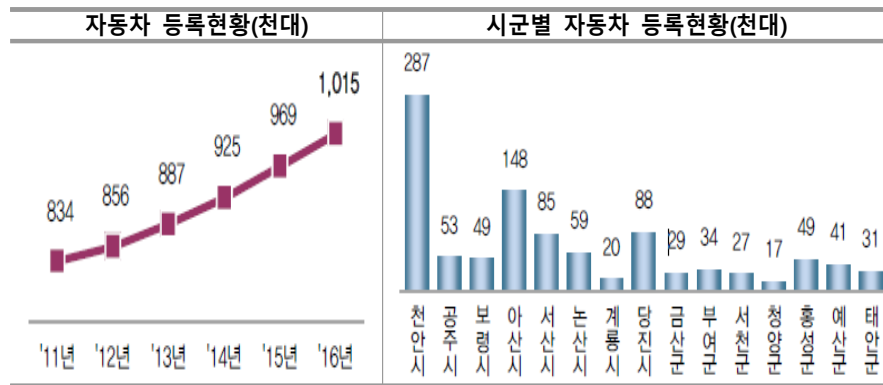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그림 2-41

충남 자동차 등록  
대수 현황

### ③ 교통

- 충남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016년 기준으로 총 101만 5,144대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시군별로 가장 많은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은 천안시(286,786대)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청양군(16,603대)임.



자료 : 2017 충남 사회지표조사 결과

-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하여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38.4%, 보통 48.2%인 반면, 불만족은 13.4%임.
-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응답은 시군별로 서천군(54.2%)이 가장 높고, 청양군(9.8%)이 가장 낮음

표 2-14

충남지역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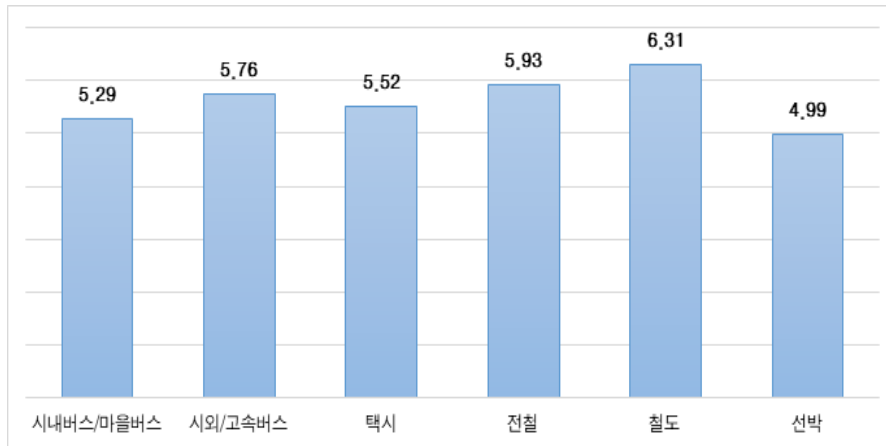
시군별	만족도 평가(%)		평균(5점)	평균(10점)
	불만족	만족		
천안시	12.9	38.8	3.31	5.79
공주시	11.2	30.4	3.20	5.50
보령시	7.6	48.3	3.54	6.34
아산시	13.3	37.7	3.28	5.71
서산시	22.8	31.9	3.12	5.29
논산시	8.2	51.2	3.54	6.35
계룡시	19.1	30.3	3.14	5.34
당진시	15.1	25.3	3.11	5.27
금산군	12.8	39.6	3.35	5.88
부여군	8.9	46.9	3.47	6.19
서천군	7.8	54.2	3.64	6.61
청양군	43.8	9.8	2.62	4.04
홍성군	11.3	41.2	3.35	5.87
예산군	10.8	45.0	3.54	6.36
태안군	8.4	50.6	3.52	6.31

자료 : 2017 충남 사회지표조사 결과



- 충남지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대중교통의 수단별로는 만족도 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선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고, 철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음.

(단위 : 10점 만점)



자료 : 2017 충남 사회지표조사 결과

-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자는 만족이 38.2%, 보통이 33.6%, 불만족은 28.3%임. 시군별로 홍성군(52.2%)이 가장 높고, 청양군(11.3%)이 가장 낮음
- 시외/고속버스 이용자는 만족이 40.8%, 보통이 42.5%, 불만족은 16.7%임. 시군별로 태안군(55.8%)이 가장 높고, 청양군(12.0%)이 가장 낮음
- 택시 이용자는 만족이 37.1%, 보통이 42.4%, 불만족은 20.5%임. 시군별로 서천군(63.9%)이 가장 높고, 계룡시(24.4%)가 가장 낮음
- 전철 이용자는 만족이 44.6%, 보통이 40.7%, 불만족은 14.6%임. 전철 이용자는 천안시(62.7%)와 아산시(58.8%)에 집중되어 있음
- 철도 이용자는 만족이 49.6%, 보통이 40.9%, 불만족은 9.5%임. 철도 이용자는 계룡시(63.6%), 천안시(59.3%), 보령시(55.9%), 예산군(52.7%) 등의 순임
- 선박 이용자는 만족이 25.4%, 보통이 51.8%, 불만족은 22.8%임. 선박 이용자는 보령시(13.2%), 천안시(11.3%) 등의 순임.

그림 2-42

충남지역  
대중교통수단별  
만족도

###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그림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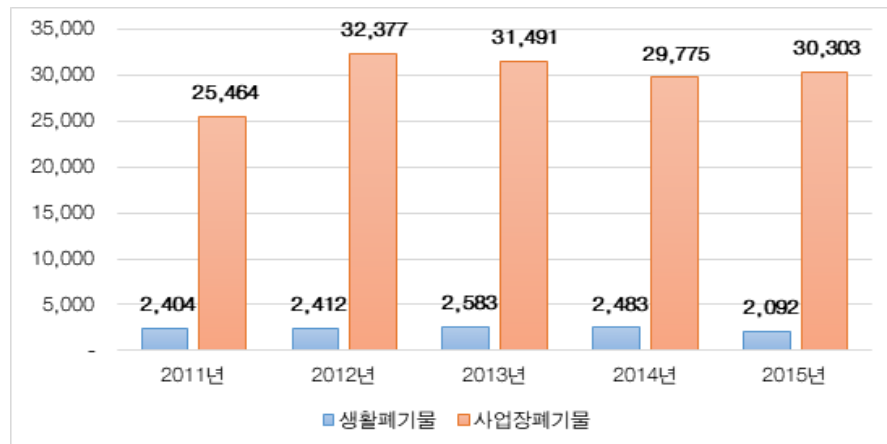
충남지역 1일  
평균 일반폐기물  
발생량 추이

### 3) 환경·안전

#### ①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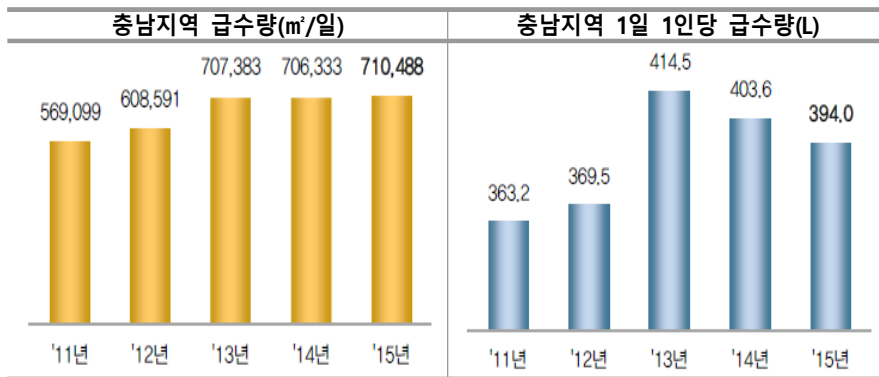
- 충남의 1일 평균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3만 2,395톤으로 이 중 생활폐기물은 2,092톤, 사업장폐기물은 3만 303톤임.
- 일반폐기물발생량 중 사업장폐기물비율이 93.5%로 대다수이며, 생활폐기물은 6.5%임
- 시군별로 생활폐기물발생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천안시(720톤)이며, 청양군은(25톤)이 가장 적음

(단위 : 톤/일)



자료 : 2017 충남 사회지표조사 결과

- 2015년 기준으로 충남지역의 1일 1인당 급수량 총합은 394.0 ℓ 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21.5 ℓ 감소함
- 급수량은 710,488m<sup>3</sup>/일로 전년(706,333m<sup>3</sup>/일) 대비 4,155m<sup>3</sup>/일 증가함
- 시군별로 1일 1인당 급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천군(473.8 ℓ)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청양군(319.3 ℓ)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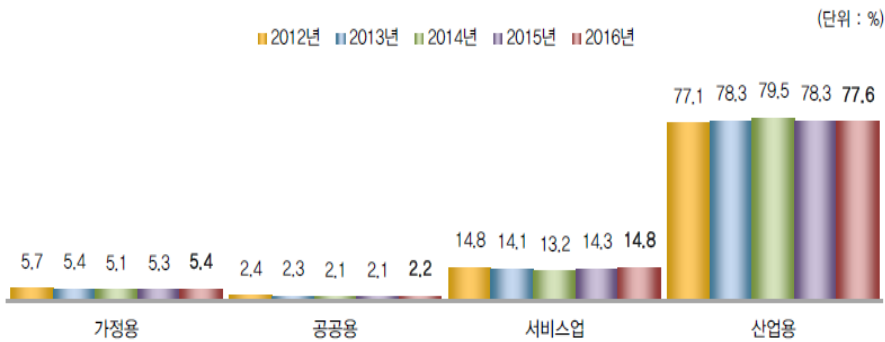


자료 : 2017 충남 사회지표조사 결과

그림 2-44

충남지역 1일 1인당 급수량 현황

- 2016년 충남의 전력 사용량은 4,845만 3,932MWh으로 최근 5년간(2012~16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인구 1인당 전력 사용량은 전년(22.8MWh) 대비 0.3MWh 증가함.
- 전체 사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도는 산업용(77.6%)이며, 비중은 전년 대비 0.7%p 감소함(※ 서비스업(14.8%), 가정용(5.4%), 공공용(2.2%)순)



자료 : 2017 충남 사회지표조사 결과

그림 2-45

충남지역 용도별 전력사용량 비중

-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총생산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4만 5,751toe로 전년 대비 13만 8,519toe(8.1%p) 증가
-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폐기물이 114만 8,352toe로 가장 많음
- ※ 신에너지 중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생산은 충남이 유일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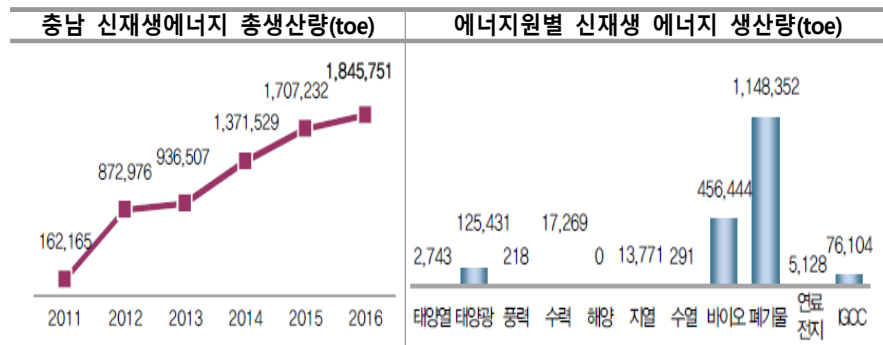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그림 2-46

충남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원별 생산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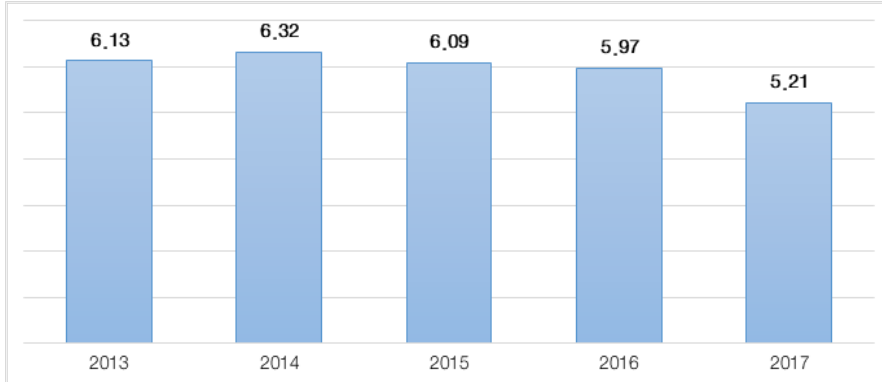
자료 : 2017 충남 사회지표조사 결과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체감도는 5.52점(10점 평균)으로 나타남.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 환경에 대해 ‘좋다’고 체감하는 응답은 35.6%이고, ‘나쁘다’(19.5%)는 응답은 16.1%p임.
- 전반적 환경에 대해 좋다는 응답은 금산군(69.6%)이 가장 높고, 당진시(14.7%)가 가장 낮게 나타남.

#### ② 안전

- 자연재해 안전 인식(10점 평균)은 5.07점으로 2014년 이후 하락 추세
  - 자연재해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응답이 30.1%로 나타난 반면, 불안하다는 응답은 28.0%로 안전 응답이 2.1%p 높게 나타남
  - 자연재해에대한 안전 인식도는 예산군(6.05점)이 가장 높고, 당진시(4.25점)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 인식(10점 평균)은 5.21점을 기록
  -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응답이 29.2%로 나타난 반면, 불안하다는 응답은 22.4%로 안전 응답이 6.8%p 높게 나타남.
  -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 인식도는 예산군(6.01점)이 가장 높고, 당진시(4.43점)는 가장 낮음.
  - 최근 5년 동안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하다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

(단위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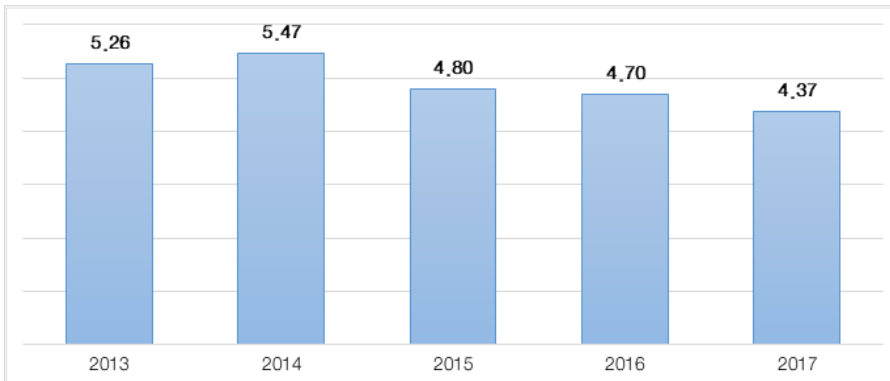
자료 : 2017 충남 사회지표조사 결과

그림 2-47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 인식

- 사회안전 중 교통사고 안전 인식(10점 평균)은 4.37점으로 2014년 이후 하락 추세
  - 교통사고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응답이 17.2%로 나타난 반면, 불안하다는 응답은 37.0%로 안전 응답이 19.8%p 낮게 나타남.
  -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인식도는 계룡시(5.30점)가 가장 높고, 당진시(3.74점)가 가장 낮게 나타남.

(단위 : 10점 만점)



자료 : 2017 충남 사회지표조사 결과

그림 2-48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인식

- 사회안전 중 화재 안전 인식(10점 평균)은 4.85점으로 2014년 이후 하락 추세
  - 화재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응답이 23.2%로 나타난 반면, 불안하다는 응답은 28.3%로 안전 응답이 5.1%p 낮게 나타남.
  - 화재에 대한 안전 인식도는 계룡시(5.39점)가 가장 높고, 서산시(4.06점)가

###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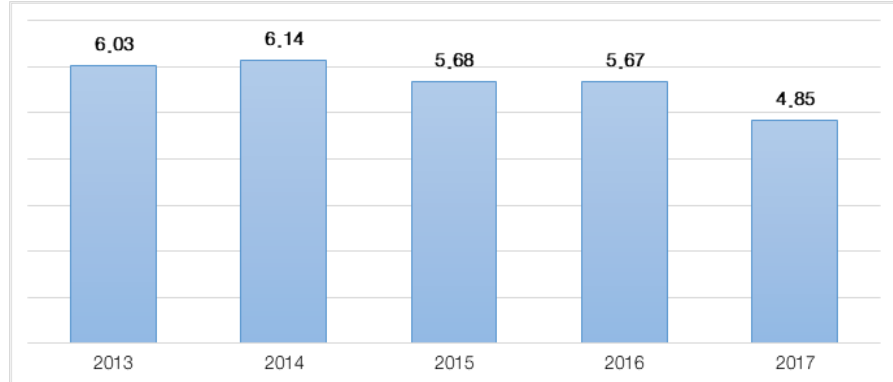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그림 2-49

화재에 대한 안전  
인식

가장 낮게 나타남.

(단위 :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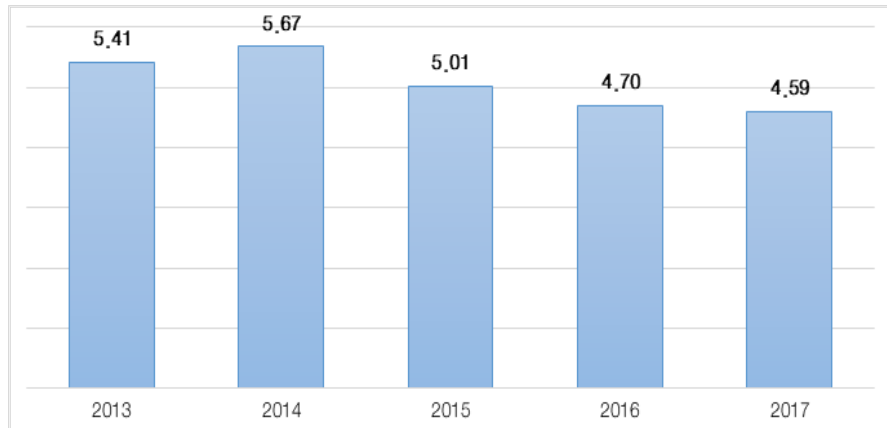
자료 : 2017 충남 사회지표조사 결과

- 사회안전 중 범죄위험 안전 인식(10점 평균)은 4.59점으로 2014년 이후 하락 추세
  - 범죄위험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응답이 21.7%로 나타난 반면, 불안하다는 응답은 34.0%로 안전 응답이 12.3%p 낮게 나타남
  -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 인식도는 계룡시(5.78점)가 가장 높고, 당진시(4.01점)가 가장 낮게 나타남.

(단위 : 10점 만점)

그림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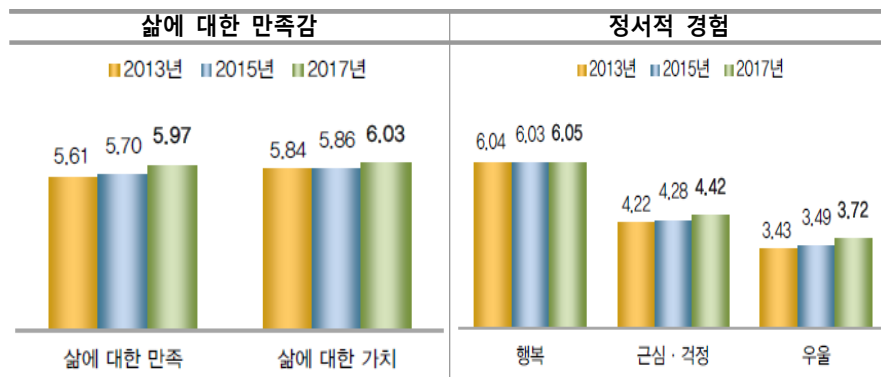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 인식



자료 : 2017 충남 사회지표조사 결과

#### 4) 행복도 및 사회적 정서

- 삶에 대한 만족감 항목에서는 ‘삶에 대한 가치’가 6.03점으로 ‘삶에 대한 만족’(5.97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3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임
- 정서경험 항목에서는 ‘행복’(6.05점), ‘근심·걱정’(4.42점), ‘우울’(3.72점)으로 나타남.
  - 삶에 대한 만족, 삶에 대한 가치, 행복 경험은 계룡시,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특히 높았음.
  - 근심·걱정 경험은 청양군에서, 우울 경험은 청양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여성,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자료 : 2017 충남 사회지표조사 결과

그림 2-51

충남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감  
과 정서적 경험

- 사회 발전방향에 대해서 ‘복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46.3%로 ‘성장’(26.2%)보다 높게 나타남.
  - 성장 추구 사회를 선호하는 응답은 4.12점(10점 평균)으로 2016년 대비 비슷한 수준임.
  - 복지 선호는 보령시,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저소득층 등에서 특히 높음.
  - 성장 선호는 예산군, 남성, 20대 이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음.
-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 20년 이상 거주한 가구주는 61.1%로 나타남.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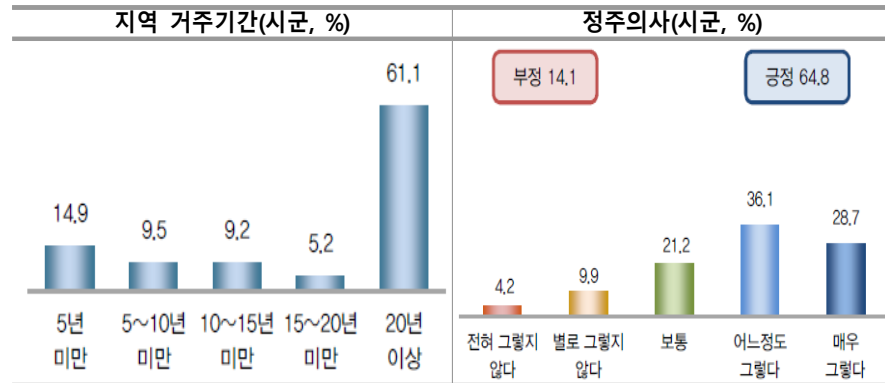
### 3.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그림 2-52

충남도민의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정주의사

- 10년 이후에도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정주의사는 64.8%로 나타남.
- 10년 이후에도 현재 거주 시군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은 시군별로 서천군(85.2%), 부여군(82.3%), 태안군(80.9%) 등에서 특히 높고,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정주의사가 높게 나타남



자료 : 2017 충남 사회지표조사 결과



## (2) 충남지역 인프라 분야별 현황

### 1) 도로·도로시설물

- 충남의 2016년말 현재 도로 총 연장은 7,122km로서 우리나라 전체 도로 총 연장의 6.5%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 km, %

구분	전국		충청남도		충남 점유율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합계	108,780	92.4	7,122	90.4	6.5
고속국도	4,438	100	430	100	9.7
일반국도	13,977	99.6	1,275	100	9.1
특별광역시도	4,761	100	-	-	-
지방도	18,121	91.5	1,675	86.8	9.2
시도	28,867	96.3	2,623	76.9	9.1
군도	22,796	75.3	1,118	80.5	4.9
구도	15,820	99.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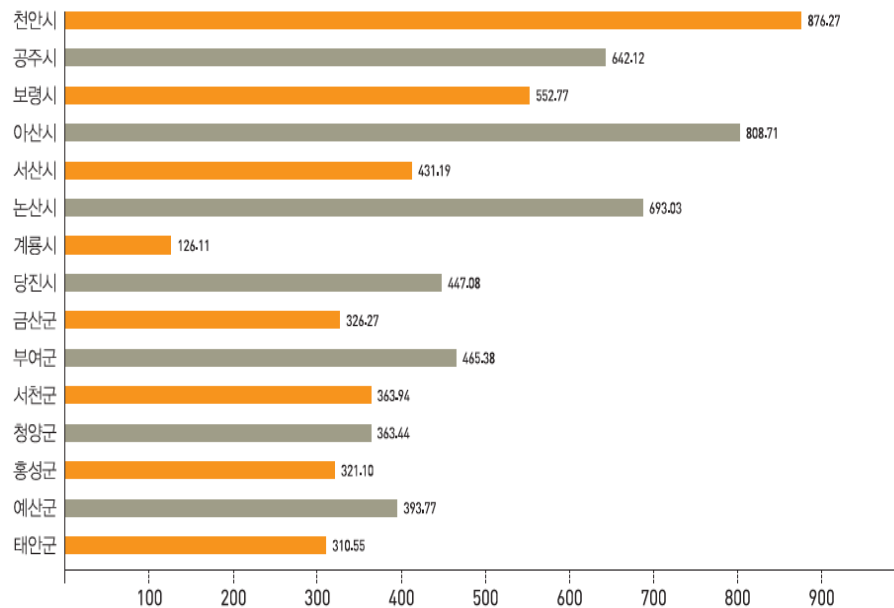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2017년 도로현황조사, 시도별 도로현황. (2016.12.31. 기준)

주 : 포장률은 개통 연장 중 포장연장 비율(%)을 의미함.

표 2-15

시군별 도로 연장  
현황

- 군별로는 천안시가 도로 연장 876.27km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산시 (808.71km), 논산시(693.03km) 순임. 계룡시가 126.11km로 가장 적음.



자료 : 2017년 충남통계연보

그림 2-53

충남 도로 총연장  
현황

##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표 2-16

충남 도로시설물  
설치 현황

- 충남의 도로시설물 중 교량 및 터널은 2017년 기준으로 교량 2,783개소, 터널 113개소임.

구 분	합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시.군도
교량현황	2,783	883	875	115	329	581
터널현황	113	36	52	2	13	10

자료 : 충남도청(2017년 하반기 도정 주요통계)

- 시군별로 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공주시에 교량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406개소의 교량이 있음. 다음으로 천안시(279개소), 예산군(255개소), 아산시(248개소)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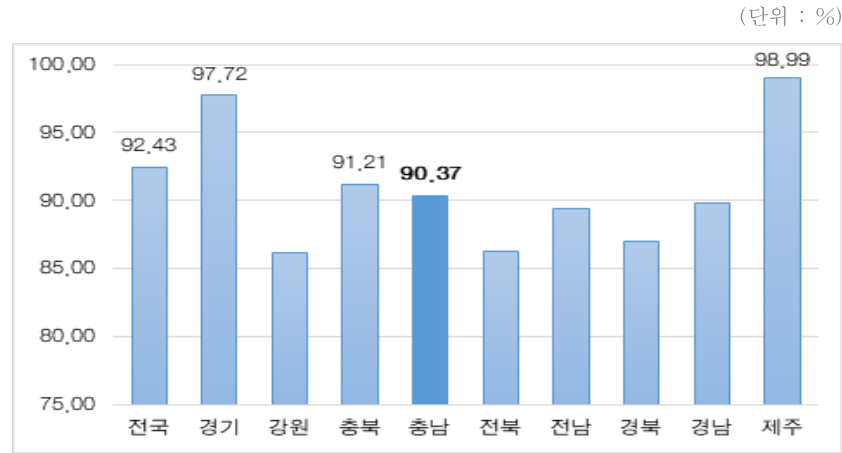
표 2-17

시군별 교량 설치  
현황

	합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합계	2,780	258,853	883	130,197	851	70,285.6	449	28,655.3	597	29,715
천안시	279	20,612.5	79	5,245.8	70	6,949	39	2,135	91	6,282.7
공주시	406	52,918.2	153	32,878.5	120	12,448.6	54	3,709	79	3,882.1
보령시	195	17,657.5	83	11,112	44	3,315.7	21	946.4	47	2,283.4
아산시	248	16,893.3	-	-	142	11,551.5	34	2,310.8	72	3,031
서산시	167	10,871.5	44	4,381	63	3,531.1	41	2,189.7	19	769.7
논산시	232	15,493	87	5,663.5	50	3,612.6	40	3,708.1	55	2,508.8
계룡시	7	609.8	1	8	3	269.8	-	-	3	332
당진시	233	32,946.6	94	24,055.4	70	5,913.3	50	2,267.1	19	710.8
금산군	136	12,132.1	47	7,506.6	23	954.3	38	2,584.2	28	1,087
부여군	170	15,641.9	48	5,955	61	6,172.7	26	2,196.5	35	1,317.7
서천군	166	12,154	95	9,220.8	43	1,881.7	13	361.2	15	690.3
청양군	136	11,415.4	31	6,126.5	27	1,420	31	1,494.4	47	2,374.5
홍성군	125	10,808.3	30	5,076	48	3,049.3	19	1,415.8	28	1,267.2
예산군	255	26,624.4	91	12,968	80	8,765	36	2,555.9	48	2,335.5
태안군	25	2,074.5	-	-	7	451	7	781.2	11	842.3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충남의 도로포장율은 90.37%로서 타 도단위 지치단체들에 비해 높은 편임. 제주(99.0%), 경기(97.7%), 충북 다음임. 그런, 경기도나 제주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임.



자료 : 국가통계포털

그림 2-54  
타 도단위 지자체  
의 도로포장율  
현황(2016년)

- 또한, 도로의 폭원별로 보면, 2016년 기준으로 12m 미만의 소로가 전체 도로의 4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로(12~25m 미만)를 포함할 경우, 전체의 80.4%를 차지함.

## 2) 산업단지

- 충남에는 2017년 3월 현재, 국가산업단지 5개소를 비롯하여 총 150개의 산업단지가 있음. 산업단지의 총 지정면적은 109,068천㎡에 달하고, 고용인원은 13만 8,233명에 달함.

##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표 2-18  
충남지역  
산업단지 현황

(단위 : 개, 천㎡, 명)

구분	단지수	지정면적	전체면적	분양면적	분양률	입주업체	고용
국가	5개	28,106	13,807	11,215	67.7	234	6,254
일반	53개	64,333	40,959	35,129	95.0	1,311	103,654
도시첨단	2개	1,299	688	31	100.0	-	-
농공	91개	14,449	10,979	10,500	97.0	1,033	32,589
합계	151개	108,187	66,433	56,875	90.0	2,578	142,497

자료 : 충남도청

- 이 중에서 현재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는 모두 126개로서 26개소는 현재 조성 중에 있음.
- 기 조성된 126개 산단 중에서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은 모두 52개소인데, 일반산단이 4개소이고, 그 외 48개소는 모두 농공단지임.
- 특히 농공단지의 경우, 기 조성된 농공단지 86개소의 55.8%가 20년 이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장 오래된 농공단지는 31년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소)

표 2-19  
노후 산업단지  
현황(조성된지  
20년 이상된  
산단)

구분	지정 산단수	조성된 산단수	20년 이상 산단	
			산단수	산단 비중
전체	150	126	52	41.3
국가	5	5	0	0.0
일반	52	34	4	11.8
도시첨단	2	1	0	0.0
농공	91	86	48	55.8

자료 : 충남도청

- 현재 조성중이거나 미개발단계에 있는 산업단지는 국가산단 1개 단지, 일반산단 31개 단지, 도시첨단산단 1개 단지 그리고 농공단지 4개 단지 등 총 37개 단지임.

구분		지정 산단수	비고
조성중	국가	1개	
	일반	19개	
	도시첨단	-	
	농공	3개	
	소계	23개	논산시 1개, 당진시 5개, 보령시 2개, 서산시 3개, 서천군 1개, 아산시 4개, 예산군 2개, 천안시 3개, 홍성군 1개
미개발	국가	-	
	일반	12	
	도시첨단	1	
	농공	1	
	소계	14개	공주시 3개, 논산시 1개, 보령시 1개, 서산시 2개, 아산시 3개, 예산군 1개, 천안시 2개, 홍성군 1개

표 2-20

충남지역의  
조성중 혹은  
미개발단계의  
산업단지 현황

### 3) 상수도

- 2015년 기준으로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은 84.4%로서 전국 평균 대비 96.5% 대비 다소 낮은 상황 특히,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수도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단위 : %)

전국	충남	도 지 역								비고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6.5	84.4	97.9	89.6	90.2	95.6	86.6	90.2	93.1	100	
		시 지 역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100	100	99.9	98.6	99.8	99.9	98.1	87.7	

자료 : 충남도청 2017년 하반기 도정주요통계

표 2-21

전국 상수도  
보급률 현황

- 특히, 지역별로는 청양군이 가장 낮은 44.1%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충남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전체 15개 시·군 중 10개에 이르는 상황

###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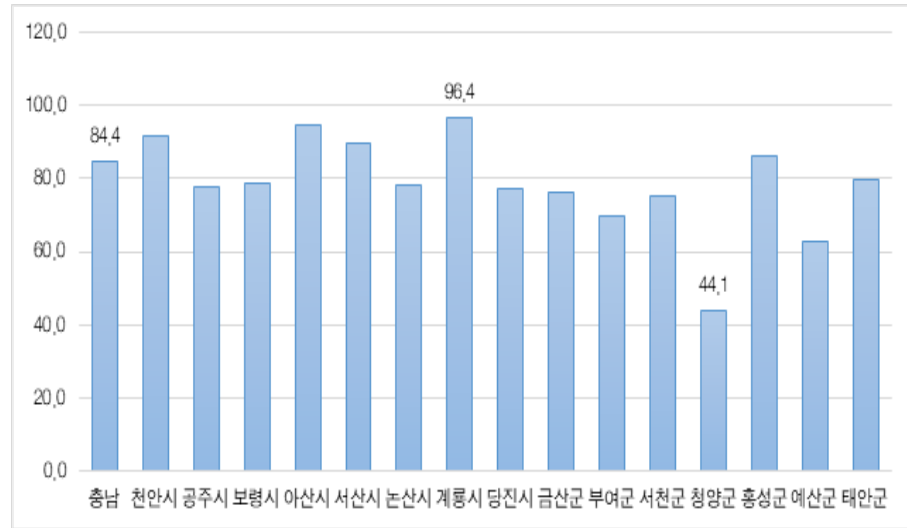
### 3.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그림 2-55

충남 및 시군별  
상수도보급률  
현황

(단위 : %)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충남 전체의 유수율은 2015년 기준으로 80.0%로서 전국 평균 84.0%에 비해 낮은 상황이며, 광역도 중에서는 경기, 충북 다음으로 유수율이 높은 상황에 있음.
- 2015년 현재 충남의 수도관 총 연장은 11,880,866m로서 도수관 85,109m, 송수관 509,724m, 배수관 6,986,689m, 급수관 4,299,284m로 구성

표 2-22

충남 상수도관  
설치 현황

(단위 : m)

총계		m	11,880,866
도수관	소계	m	85,169
	강관	m	40,206
	주철관	m	32,036
	기타		12,927
송수관		m	509,724
배수관		m	6,986,689
급수관		m	4,299,284

자료 : 국가통계포털

- 경년별로는 전체 상수도관 중 19.5%가 20년을 초과한 상태로 노후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

(단위 : km)

구 분	계	경과년수				
		5년 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도수관로	85	0.0	3.3	1.2	15.9	64.8
송수관로	549	58.7	83.2	159.3	92.6	154.8
배수관로	7,899	2,694.4	2,302.5	1,340.0	513.3	1,048.6
급수관로	4,888	1,792.7	1,029.0	518.0	195.0	1,353.5

자료 : 지방노후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저지원체계 수립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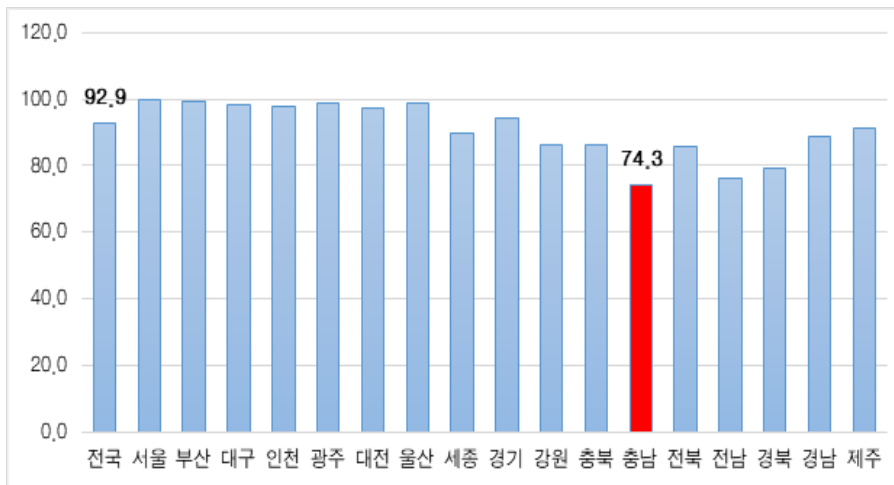
표 2-23

충남 수도권  
경과년수별 현황

#### 4) 하수도

- 2015년 기준으로 하수도보급률은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74.3%임. 특히, 전국 평균 92.9%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

(단위 : %)



자료 : 국가통계포털

그림 2-56

지자체 하수도  
보급률 현황

- 특히 시군별로 보면, 시 지역의 경우에는 78.9%의 하수도 보급률을 보이나, 논산시, 보령시와 공주시 등은 매우 낮은 하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음. 또한, 군 지역의 경우에는 58.1%로서 부여군, 태안군의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상황

###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표 2-24

충남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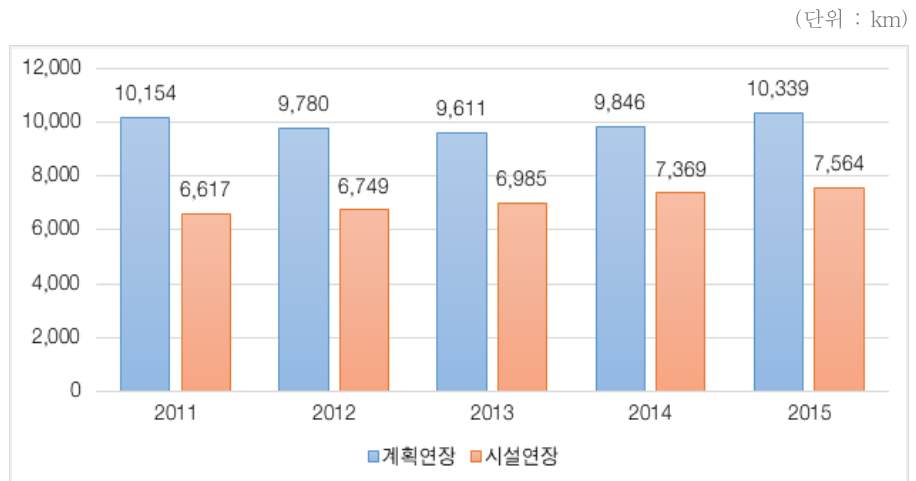
구분	총인구	처리인구	면적(km <sup>2</sup> )	보급률(%)
<b>시 지역</b>	<b>1,667,944</b>	<b>1,315,584</b>	<b>4,651.7</b>	<b>78.9</b>
천안시	622,836	597,885	636.3	96.0
공주시	113,057	77,184	883.0	68.3
보령시	107,279	71,126	569.0	66.3
아산시	311,143	220,912	542.3	71.0
서산시	173,715	124,426	741.1	71.6
논산시	127,735	79,185	554.7	62.0
계룡시	41,920	40,157	60.7	95.8
당진시	170,259	104,709	664.7	61.5
<b>군 지역</b>	<b>466,288</b>	<b>271,139</b>	<b>3,529.9</b>	<b>58.1</b>
금산군	56,417	41,787	576.3	74.1
부여군	72,257	36,586	624.5	50.6
서천군	58,143	29,723	358.0	51.1
청양군	33,038	16,638	479.2	50.4
홍성군	96,463	63,928	444.0	66.3
예산군	85,257	48,667	543.0	57.1
태안군	64,713	33,810	505.0	52.2

자료 : 충남도청

- 또한, 현재 충남지역의 하수관로 연장은 계획연장 대비 73.1%를 보급하고 있어 타 지자체들에 비해 매우 낮은 하수관로 시설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림 2-57

충남 하수관로  
계획연장 대비 시  
설연장 추이



자료 : 충남도청

- 특히 시군별로 보면, 시 지역의 경우에는 78.1%의 하수관로 보급률을 보이



고 있으나, 서산시, 논산시 등의 경우에는 현저히 낮은 하수관로 보급률을 기록. 군 지역의 경우는 63.7%로서 이는 예산군 34.9%, 태안군 37.3% 등 낮은 보급률에 따른 것임.

(단위: m,%)

구분	계획연장	시설연장	향후계획	보급률
<b>시 지역</b>	<b>6,782,163</b>	<b>5,298,117</b>	<b>1,484,046</b>	<b>78.1</b>
천안시	1,745,062	1,426,079	318,983	81.7
공주시	503,343	403,500	99,843	80.2
보령시	605,946	463,653	142,293	76.5
아산시	1,079,086	1,017,422	61,664	94.3
서산시	1,313,028	809,799	503,229	61.7
논산시	807,978	594,343	213,635	73.6
계룡시	179,352	174,224	5,128	97.1
당진시	548,368	409,097	139,271	74.6
<b>군 지역</b>	<b>3,556,697</b>	<b>2,266,044</b>	<b>1,290,653</b>	<b>63.7</b>
금산군	437,282	371,576	65,706	85.0
부여군	723,922	464,272	259,650	64.1
서천군	375,177	280,791	94,386	74.8
청양군	390,899	338,367	52,532	86.6
홍성군	586,275	432,748	153,527	73.8
예산군	460,858	160,924	299,934	34.9
태안군	582,284	217,366	364,918	37.3

자료 : 충남도청

### 5) 해양·항만

- 국가 또는 지방 관리로 지정되어 있는 항만은 총 7개항임. 이중 국가관리 항만은 3개항, 지방관리 항만은 4개항임.

구분	관리	항만수		항만명
		전국	충남	
계	계	60개항	7개항	
무역항	소 계	31개항	5개항	
	국가관리	14개항	3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지방관리	17개항	2개항	태안항, 보령항
연안항	소 계	29개항	2개항	
	국가관리	11개항	-	
	지방관리	18개항	2개항	대천항, 비인항

자료 : 충남도청

표 2-25

충남 시군별  
하수관로 보급  
현황

표 2-26

충남 항만 현황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표 2-27

항만별 면적 및  
선석수, 물동량  
현황

- 이 중에서 무역항 물동량은 우리나라 전체 항만의 14.9%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중 88%를 평택·당진항과 대산항에서 담당하고 있음.

구 분			항만구역(천㎡)		선 석 수				물동량(천톤/년)	
			해상	육상	계	완료	공사중	장래	2016	2020
계			(234,871)	(7,354)	102 (138)	73 (104)	2 (3)	27 (31)	165,865 (224,569)	194,740 (260,992)
무 역 항	국 가 관 리	소계	(168,495)	(6,886)	90 (126)	64 (95)	1 (2)	25 (29)	140,708 (199,412)	149,431 (215,683)
		평택·당진항	(94,254)	(6,350)	41 (77)	31 (62)	1 (2)	9 (13)	54,244 (112,948)	61,973 (128,225)
		대산항	69,343	365	47	31	-	16	85,890	86,798
		장항항	4,898	171	2	2	-	-	574	660
	지 방 관 리	소계	42,924	9	12	9	1	2	25,157	45,205
		태안항	8,245	-	4	4	-	-	12,205	19,370
		보령항	34,679	9	8	5	1	2	12,952	25,835
연 안 항	지 방 관 리	소계	23,452	459	-	-	-	-	-	104
		대천항	21,825	337	-	-	-	-	-	104
		비인항	1,627	122	-	-	-	-	-	-

주 : ( ) 내서 : 평택항 포함 / 우리나라 전국 물동량(16년:1,509,479천톤)의 11% 처리  
자료 : 충남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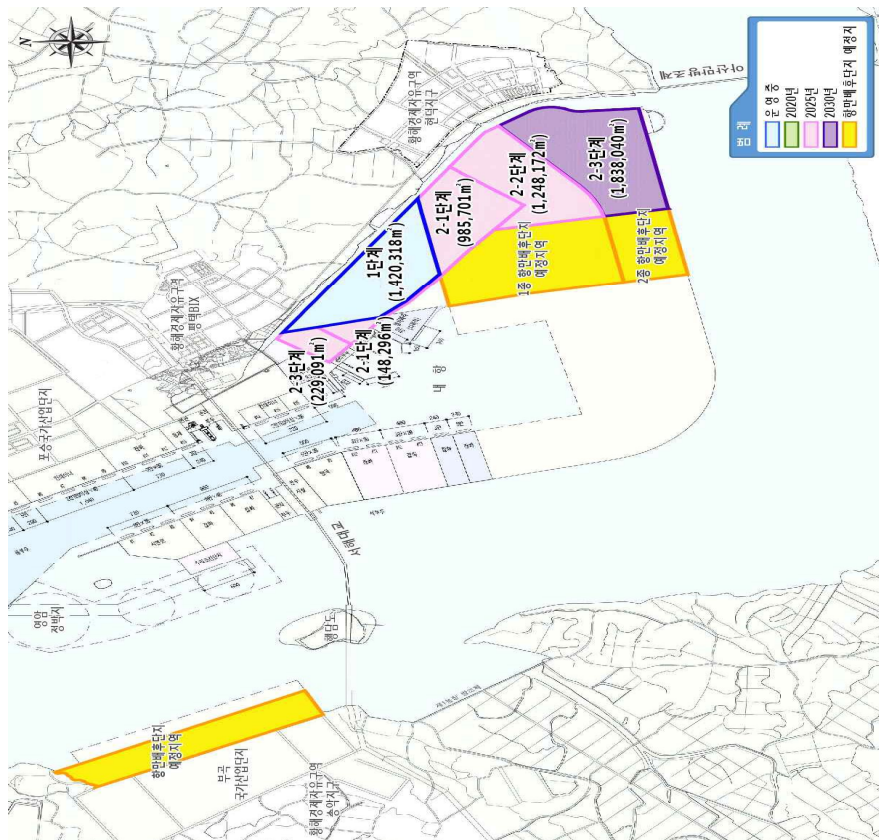
- 특히, 당진항의 경우, 가파른 인구 증가세와 물동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당진항 확충 필요성 지속 제기
  - 충남지역의 15개 시·군 중에서 당진시는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전국 항만 중 최단기간 내 물동량 1억t을 달성하고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에서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
  - 2017년 확정, 고시된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별 배후단지개발계획’에서도 신규 배후단지 지정 항만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

구분	목표연도(천㎡)			비고
	2020년	2025년	2030년	
수요면적 (A) (누계)	2,919	3,257	3,701	
공급계획 (B) (누계)	1,420	4,031	5,869	
1단계 항만배후단지(1종)	1,420	-	-	운영중
2-1단계 항만배후단지(1종)	-	1,134	-	투기중
2-2단계 항만배후단지(1종)	-	1,248	-	투기중
2-3단계 항만배후단지	-	229	1,838	투기중
● 1종 항만배후단지	-	229	-	
● 2종 항만배후단지	-	-	1,838	
소계	1,420	2,611	1,838	
과부족(B-A)	-1,499	774	2,168	
확보율(B/A)		123.8%	158.6%	

자료 : 제3차 항만 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표 2-28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개발계획 현황



자료 : 제3차 항만 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그림 2-58

평택·당진항 항만  
배후단지 계획  
평면도

- 충남 내 어항은 전국대비 6.1%에 해당되는 61개 어항이 있으며, 지방관리 어항이 28곳, 어촌정주형 어항이 24곳 등임.

###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표 2-29

#### 충남 어항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국 가	지 방	어촌정주	비 고
충 남	61	9	28	24	
전 국	1,003	110	282	611	
대 비	6.1%	8.2%	9.9%	3.9%	

자료 : 충남도청

#### 5)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은 총 411개소로서 노인복지시설이 304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이 62곳 등임.

표 2-30

#### 충남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정신요양시설
충남전체	35	304	62	-	10
천안시	12	63	11	-	2
공주시	0	21	9	-	1
보령시	2	12	4	-	0
아산시	7	32	7	-	1
서산시	2	21	5	-	0
논산시	3	28	5	-	3
계룡시	0	8	1	-	0
당진시	1	20	6	-	0
금산군	3	21	5	-	0
부여군	1	16	1	-	1
서천군	0	9	3	-	0
청양군	0	7	-	-	0
홍성군	1	14	3	-	1
예산군	2	17	1	-	1
태안군	1	15	1	-	0

자료 : 충남도청, 충남 통계 DB

-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수는 2015년 기준으로 총 5,700개소가 있으며, 이중 경로당이 5,617개로 대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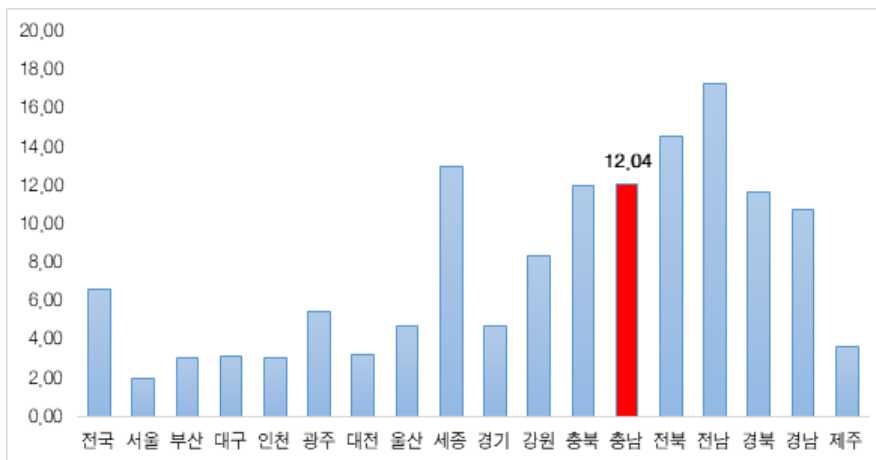
(단위: 개소)

구분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충남 전체	5,700	14	5,617	69
천안시	702	2	694	6
공주시	415	1	411	3
보령시	394	2	392	-
아산시	513	1	512	-
서산시	381	-	373	8
논산시	518	-	509	9
계룡시	36	1	35	-
당진시	344	2	323	19
금산군	323	-	322	1
부여군	460	-	457	3
서천군	336	1	327	8
청양군	303	1	302	-
홍성군	374	1	365	8
예산군	368	1	366	1
태안군	233	1	229	3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충남의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12.04개소)는 전남(17.26개소), 전북(14.57개소), 세종시(12.95개소) 다음으로 많은 상황

(단위: 개소)



자료 : 국가통계포털

- 2016년 기준으로 충남의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는 대전, 전북, 강원, 경남 다음으로 많음.

표 2-31

충남  
노인여가복지시  
설 현황

그림 2-59

지자체별  
노인 천명당 노인  
여가복지  
시설 현황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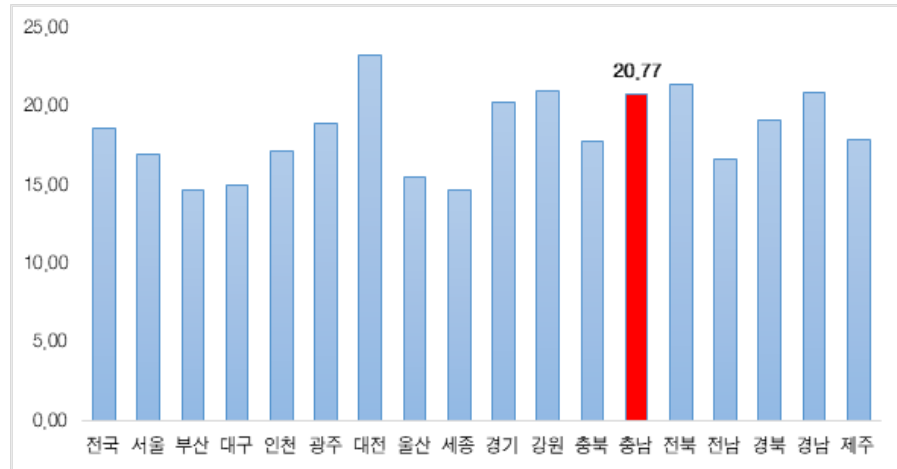
### 3.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그림 2-60

지자체별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현황

(단위: 개소)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충남 내 총 보육시설은 1,974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국공립은 77개소에 불과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황.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함.

표 2-32

충남  
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법인단체	부모협동	직장	가정	국공립 시설 비중
충남	1,974	77	125	647	55	1	40	1,029	4
천안시	703	19	12	205	8	1	8	450	3
공주시	81	7	6	29	6	0	1	32	9
보령시	67	4	8	29	4	0	1	21	6
아산시	442	11	11	118	3	0	9	290	2
서산시	155	2	16	64	7	0	6	60	1
논산시	91	4	10	32	7	0	1	37	4
계룡시	46	1	3	11	1	0	1	29	2
당진시	162	8	9	72	4	0	4	65	5
금산군	34	6	4	18	2	0	2	2	18
부여군	31	1	11	7	1	0	0	11	3
서천군	26	3	10	7	4	0	0	2	12
청양군	15	3	2	6	0	0	0	4	20
홍성군	63	6	9	27	2	0	2	17	10
예산군	32	1	9	9	4	0	2	7	3
태안군	26	1	5	13	2	0	3	2	4

자료 : 충남 2017년 사회지표조사결과

- 충남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는 전국 평균을 넘고 있으나, 전남·북, 경남·북 등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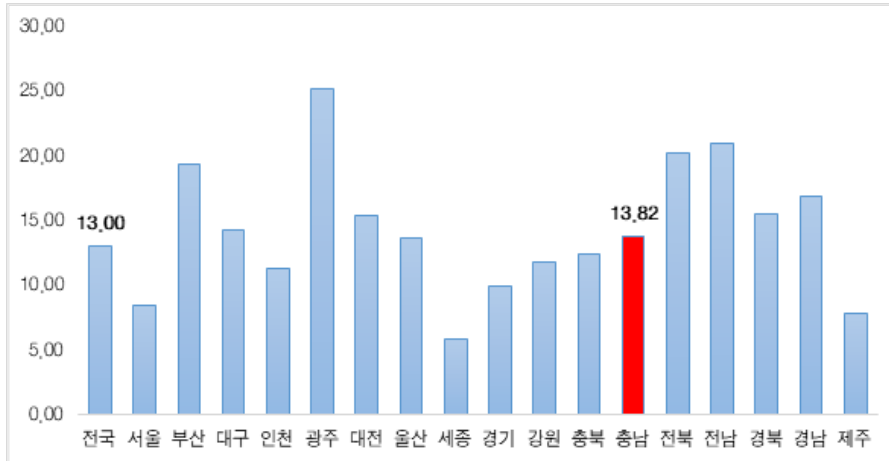


그림 2-61

인구 천명당 의료  
기관 병상수 현황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충남의 의료기관 수는 총 2,202개임. 이중 종합병원은 13개, 동네의원은 1,029개임.

(단위: 개)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의원
	총병원수	10만명당					
전체	2,202	105.0	13	129	1,029	522	509
천안시	678	109.7	4	35	311	168	160
공주시	133	121.0	1	12	65	24	31
보령시	115	110.7	1	7	55	22	30
아산시	283	93.4	1	18	129	75	60
서산시	149	87.2	2	2	72	40	33
논산시	164	133.1	1	14	81	31	37
계룡시	45	105.5	-	3	17	12	13
당진시	165	99.0	1	7	78	46	33
금산군	66	120.9	-	4	33	14	15
부여군	70	99.7	-	7	31	15	17
서천군	67	119.6	-	5	33	11	18
청양군	25	76.3	-	3	10	6	6
홍성군	95	95.0	1	7	42	23	22
예산군	90	110.6	1	2	44	21	22
태안군	57	89.2	-	3	28	14	12

자료 : 충남 2017년 사회지표조사결과

표 2-33

충남 의료기관  
현황

###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 충남도민의

## 삶의 질

## 수준과

## 인프라

그림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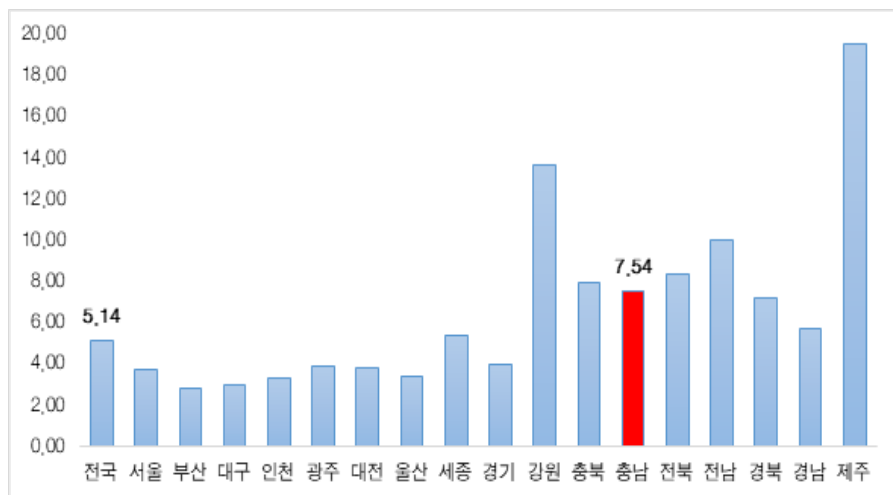
지자체별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현황

- 지역별로는 청양군, 서산시, 태안군 등의 경우 의료기관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소재하고 있음.

### 6) 문화예술시설

- 2016년 기준으로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는 전국 평균 보다는 높은 7.54개로 나타나고 있음. 도단위 광역지자체로 한정하면, 제주, 강원, 전남, 전북, 충북 다음으로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단위: 개)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충남지역 내 공연시설은 53개, 전시실은 10개 그리고 문예회관(군민회관) 등 지역문화복지시설은 47개가 있음.



(단위: 개)

	공연시설			전시실		지역문화복지시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문예 회관	종합복지 회관	청소년 회관
전체	35	2	16	8	2	17	19	11
천안시	11	1	4	1	1	3	2	2
공주시	2	0	1	1	0	1	3	0
보령시	1	0	2	1	0	1	2	1
아산시	9	1	1	1	1	1	5	1
서산시	1	0	2	0	0	1	2	1
논산시	1	0	1	1	0	1	1	1
계룡시	1	0	0	0	0	1	0	0
당진시	1	0	3	1	0	1	3	0
금산군	1	0	0	0	0	1	0	1
부여군	1	0	1	0	0	1	0	0
서천군	1	0	0	0	0	1	0	1
청양군	1	0	0	0	0	1	0	0
홍성군	2	0	1	1	0	1	1	1
예산군	1	0	0	1	0	1	0	1
태안군	1	0	0	0	0	1	0	1

자료 : 2017년 충남 사회지표 집계표

주 : 청소년회관은 청소년수련관임.

- 충남 지역 내 도서관은 사립 1개소를 포함하여 시·군이 관리하는 40개, 교육청이 관리하는 19개소를 포함하여 총 60개임. 각 지역별로는 천안시에 10개, 아산시에 7개 등이 소재해 있으나, 부여군, 서천군에는 2개에 불과하여 지역 간 편차가 큼.

(단위: 개)

	계	지 역 별														
		천 안	공 주	보 령	아 산	서 산	논 산	계 룡	당 진	금 산	부 여	서 천	청 양	홍 성	예 산	태 안
계	60	10	4	5	7	5	3	2	4	5	2	2	2	3	3	3
시·군	40	7	2	3	6	3	2	2	3	4	1	1	1	1	2	2
교육청	19	3	2	2	1	2	1	-	1	1	1	1	1	1	1	1
사 립	1	-	-	-	-	-	-	-	-	-	-	-	-	1	-	-

자료 : 2017년 하반기 도정주요통계

표 2-34

충남  
문화예술시설  
현황

표 2-35

충남 지역별  
도서관 설치 현황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표 2-36  
지자체별 도서관  
설치 현황 비교

- 2016년 기준으로 충남의 총 도서관 수는 59개관으로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적은 편이 아님. 그러나, 1관당 평균 좌석수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밑에서 3번째로서 규모가 작은 상황

	도서관 수 (개)	총 연면적(천㎡)	총 좌석 수(석)	1관당 평균 좌석수(석)
전국	1,010	2,583	359,490	356
서울	147	303	42,926	292
부산	40	114	18,014	450
대구	35	89	14,055	402
인천	47	109	18,033	384
광주	22	93	11,460	521
대전	24	73	10,189	425
울산	17	35	7,898	465
세종	5	8	850	170
경기	244	788	101,470	416
강원	54	115	14,750	273
충북	44	106	10,293	234
충남	59	122	16,565	281
전북	58	127	18,629	321
전남	64	146	20,070	314
경북	64	141	25,313	396
경남	65	166	21,757	335
제주	21	49	7,218	344

자료 : 국가통계포털 전국도서관통계

- 충남지역 내 작은도서관은 공립 60개관, 사립 256개관 등 총 316개관이 조성되어져 있음.

## 7) 공원·녹지

- 2016년말 기준으로 충남지역의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18.57천㎡로서 전국 평균 18.23천㎡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나, 9개 도단위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제주, 경기도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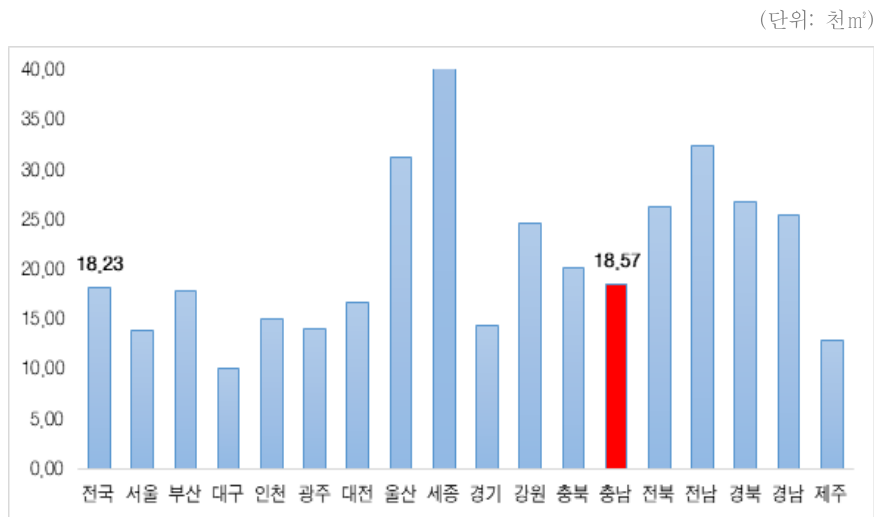


그림 2-63

지자체별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  
적 현황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충남의 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현황을 보면, 2016년 휴양림 14개소 그리고 수목원이 9개소임. 이중 국립 휴양림은 없는 상황이고, 지자체에서 조성한 휴양림이 12개소임.

(단위: 개소)

	휴양림1)					수목원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계	국립	자치단체	사립			
2011	12	0	11	1	1,927	6	185
2012	12	0	11	1	1,927	7	237
2013	12	0	11	1	1,927	7	233
2014	16	0	14	2	-	8	-
2015	13	0	11	2	-	9	-
2016	14	0	12	2	-	9	-

자료 : 2017 충남 사회지표 집계표

표 2-37

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현황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표 2-38

충남 지역별  
체육시설 설치  
현황

### 7) 체육·관광시설

- 2015년 기준으로 충남 도내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 891개, 민간체육시설 (신고 및 등록 체육시설)이 2,086개임.

(단위: 개)

	총계	공공체육시설	신고및등록체육시설		
			소계	신고체육시설	등록체육시설
합계	2,977	891	2,086	2,064	22
천안시	821	116	705	701	4
공주시	172	95	77	74	3
보령시	106	34	72	71	1
아산시	504	110	394	392	2
서산시	231	143	88	87	1
논산시	167	41	126	125	1
계룡시	81	36	45	45	0
당진시	203	50	153	151	2
금산군	61	26	35	34	1
부여군	162	107	55	53	2
서천군	63	24	39	39	0
청양군	46	31	15	15	0
홍성군	126	27	99	99	0
예산군	173	37	136	136	0
태안군	61	14	47	42	5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천안시, 아산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청양군, 태안군, 서천군은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

- 2016년 기준으로 인구 십만 명 당 체육시설 수는 107.93개소로서 전국 평균 112.81개소에 비해 적고, 9대 도 단위 광역지자체들 중에서는 경남 다음으로 적은 상황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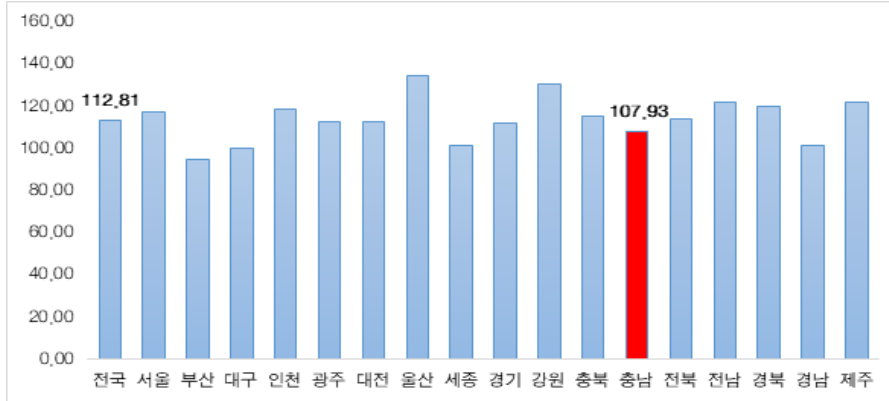


그림 2-64

지자체별 인구  
십만 명 당  
체육시설 수 현황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충남지역의 주요 관광시설인 숙박시설과 휴양시설, 편의시설 등은 늘고 있지 못한 상황. 숙박시설은 최근 4년동안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며, 휴양시설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광편의시설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

(단위: 개소)

구 분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한옥 체험 업
	계	관광 호텔	가족 호텔	호스 텔	휴양 콘도	계	종합 전문 휴양 업	관광 유람선 업	오토 캠핑장	계	시내 순환 관광	관광 음식	관광 식당 업	관광 펜션 업	외국 인이 용 식당 (도지 정)	
2017 년	41	19	4	3	15	34	5	1	28	164	1	6	19	78	26	34
2016 년	36	17	3	2	14	32	4	1	27	172	1	6	60	79	26	27
2015 년	36	18	2	1	15	43	6	1	36	169	1	10	60	72	26	25
2014 년	36	18	2	1	15	16	6	4	8	187	1	10	60	72	26	22

표 2-39

충남 관광시설  
설치 현황

자료 : 2017년 하반기 도정주요통계

## 8) 방재시설

- 충남지역의 하천은 국가 및 지방하천 500개소로 총 하천 연장은 2,622km 힘. 이중에서 제방정비가 필요한 총 구간은 3,625km이고, 2017년말 기준으

##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표 2-40

### 충남 하천정비 사업 추진현황

로 현재 1,684km가 완료되었으며, 제방의 보강 및 신설이 필요한 구간이 1,141km임.

(단위: 개소, km)

하 천 별	하천 수	하천연장	하천정비(제방) 현황			
			합계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
계	500	2,622	3,625	1,684	1,106	835
국가하천	8	232	277	213	54	10
지방하천	492	2,390	3,348	1,471	1,052	825

자료 : 2017년 하반기 도정주요통계

- 충남 도내 소하천은 2,153개소로서 이중에서 2017년까지 977개소, 연장 1,471.59km가 정비되었으며, 정비가 필요한 소하천은 1,176개소로서 연장은 1,633.11km임.

(단위: 개소, km)

표 2-41

### 충남 소하천정비 사업 추진현황

구분	계	소하천 정비 현황		비고
		완료개소 (‘17년까지)	잔여개소 (‘17이후)	
개 소 수	2,153	977	1,176	
하천연장	3,104.7	1,471.59	1,633.11	-

자료 : 2017년 하반기 도정주요통계

- 충남지역의 우수지는 우수시설 43개로 597,235㎡의 면적과 저류시설 93개 총면적 1,321,895㎡임. 이는 전국 대비 시설수로는 7.8%, 면적으로는 6.1%에 해당함.

	계		유수시설		저류시설	
	시설수 (개)	면적 (㎡)	시설수 (개)	면적 (㎡)	시설수 (개)	면적 (㎡)
전국	1,735	31,269,759	528	12,537,409	1,207	18,732,350
충남 전체	136	1,919,130	43	597,235	93	1,321,895
천안시	15	127,640	2	827	13	126,813
공주시	11	45,407	1	2,792	10	42,615
보령시	7	43,903	3	12,733	4	31,170
아산시	19	358,605	12	226,089	7	132,516
서산시	13	72,558	12	50,999	1	21,559
논산시	14	217,859	5	176,955	9	40,904
계룡시	5	15,034	0	0	5	15,034
당진시	15	742,050	0	0	15	742,050
금산군	2	3,784	1	1,810	1	1,974
부여군	1	23,620	1	23,620	0	0
홍성군	14	73,136	0	0	14	73,136
예산군	13	162,151	4	95,307	9	66,844
서천군	7	33,383	2	6,103	5	27,280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시설수로는 전국 지자체 중 4번째이나 시설수 대비 면적으로는 하위권에 속하는 상황

## 9) 학교시설

- 충남 도내 총 학생수는 2015년 기준으로 27만 8,415명이며 학교용지 총 면적은 14,181,552㎡로서 학생 1인당 면적은 50.9㎡임. 이는 전국 평균 30.9㎡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임.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천안시는 25.8㎡로서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계룡시 30.4㎡, 아산시 31.2㎡ 등도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상황

표 2-42

충남 유수지 시설  
현황

##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표 2-43

충남 학생 1인당  
학교시설 면적

(단위: 개소, km)

구분		학생 수 총계	건물면적		학교용지 면적					
			총 면적	학생 1인당	전체		교사대지		체육장	
					총 면적	학생 1인당	총 면적	학생 1인당	총 면적	학생 1인당
전국	2012	7,187,384	94,532,048	13.2	207,623,443	28.9	112,610,242	15.7	95,013,201	13.2
	2013	6,986,116	96,535,229	13.8	207,717,916	29.7	114,512,775	16.4	93,205,141	13.3
	2014	6,819,927	100,749,881	14.8	205,782,134	30.2	114,295,743	16.8	91,486,391	13.4
	2015	6,635,784	100,850,893	15.2	204,977,719	30.9	115,215,105	17.4	89,762,614	13.5
충청남도	2012	293,135	4,473,492	15.3	14,232,135	48.6	7,314,109	25.0	6,918,026	23.6
	2013	287,977	4,570,853	15.9	14,556,282	50.5	7,599,868	26.4	6,956,414	24.2
	2014	282,996	4,653,300	16.4	14,680,879	51.9	7,749,082	27.4	6,931,797	24.5
	2015	278,415	4,743,359	17.0	14,181,552	50.9	7,636,182	27.4	6,545,370	23.5
시군별	천안시	93,937	1,216,318	12.9	2,422,701	25.8	1,379,744	14.7	1,042,957	11.1
	공주시	14,209	347,611	24.5	1,139,022	80.2	664,165	46.7	474,857	33.4
	보령시	11,568	260,472	22.5	883,831	76.4	445,819	38.5	438,012	37.9
	아산시	44,935	623,156	13.9	1,401,862	31.2	805,218	17.9	596,644	13.3
	서산시	23,022	375,242	16.3	1,145,540	49.8	650,069	28.2	495,471	21.5
	논산시	15,366	365,123	23.8	1,237,126	80.5	619,201	40.3	617,925	40.2
	계룡시	7,497	100,192	13.4	227,978	30.4	159,643	21.3	68,335	9.1
	당진시	20,359	297,597	14.6	1,070,842	52.6	648,608	31.9	422,234	20.7
	금산군	5,294	129,446	24.5	488,045	92.2	181,963	34.4	306,082	57.8
	부여군	6,797	181,248	26.7	788,950	116.1	326,803	48.1	462,147	68.0
	서천군	5,302	157,105	29.6	633,390	119.5	284,800	53.7	348,590	65.7
	청양군	2,735	87,794	32.1	373,592	136.6	185,039	67.7	188,553	68.9
	홍성군	12,699	240,383	18.9	885,281	69.7	474,921	37.4	410,360	32.3
	예산군	8,598	210,702	24.5	880,811	102.4	494,919	57.6	385,892	44.9
	태안군	6,097	150,970	24.8	602,581	98.8	315,270	51.7	287,311	47.1

자료 : 국가통계포털

- 2017년 11월 20일, 충남도의회는 충남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진환 의원은 충남도내 유·초·중·고교 가운데 30년 이상된 학교 건물은 총 1411개동에 달하고, 이 가운데 보강 또는 개축이 시급히 요구되는 C등급의 안전등급을 받은 건물이 25개동(총 1.8%)에 이른다고 지적
- 또한, 충남도내 폐교는 44개교로서 이중 16개교는 대부분이고, 28개교가 미



활용 중. 대부분은 주로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로 활용

(단위: 개교)

교육지청	급별	개교수	활용현황		비고
			대부중	미활용	
천안시	초등학교	2	1	1	
공주시	초등학교	6	2	4	
보령시	초등학교	1	-	1	
서산시	초등학교	3	3	-	
계룡시	초등학교	7	4	3	
당진시	초등학교	1	-	1	
금산군	초등학교	3	1	2	
부여군	중학교	1	1	-	
	초등학교	4	1	3	
서천군	초등학교	2	2	-	
청양군	고등학교	1	-	1	
	초등학교	1	-	1	
홍성군	중학교	1	-	1	
	초등학교	5	-	5	
예산군	초등학교	4	1	3	
태안군	초등학교	2	-	2	
계		44	16	28	

자료 : 충남교육청

표 2-44

충남 지역별 폐교  
현황

- 충남은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2017년부터 본격 추진 중. 2020년까지 576억원을 투입(대상은 93개 건물)
- 충남에서는 2010년부터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매년 30억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지난해까지 전체 내진 대상 학교건물 2113동 가운데 534동만 내진보강이 적용돼 내진화율은 25%에 그치고 있음.
- 2017년 내진보강사업 계획은 1차 대상 26개교의 총 26동으로 총 사업비는 126억원 규모

###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그림 2-65

내진보강을 마친  
충남 홍성중학교  
전경



- 기타 교육시설인 사설학원 및 독서실은 충남 시·군별로 수량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단위: 개)

표 2-45

시·군별  
기타 교육시설  
현황

	2015			2016			2017		
	사설학원		독서실	사설학원		독서실	사설학원		독서실
	학원수	평생직업 교육학원		학원수	평생직업 교육학원		학원수	평생직업 교육학원	
합계	2,758	196	110	2,782	205	113	2,883	208	128
천안시	1,138	78	40	1,113	79	39	1,188	83	41
공주시	137	11	7	131	11	6	133	10	7
보령시	124	6	8	130	6	7	131	7	8
아산시	372	19	7	394	20	8	398	22	8
서산시	215	19	15	205	16	17	229	18	15
논산시	111	12	7	124	15	7	130	14	6
계룡시	60	4	4	58	6	4	55	5	3
당진시	187	12	3	202	13	4	198	13	18
금산군	40	2	1	36	2	1	36	1	1
부여군	59	5	4	57	5	4	53	4	4
서천군	60	5	3	59	5	3	56	4	4
청양군	21	1	-	22	2	-	20	2	-
홍성군	103	11	5	117	11	6	124	12	6
예산군	81	8	4	85	11	4	82	10	5
태안군	50	3	2	49	3	3	50	3	2

자료 : 충남교육청

## 8) 건축물

- 2016년 기준으로 충남에 위치해 있는 총 건축물의 수는 51만 5,202동으로 이중 주거용이 63.1%인 32만 4,421동을 차지하고 있음.

시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충남(동)	515,202	324,401	79,538	21,932	13,424	75,907
연면적(천㎡)	179,178	74,164	29,685	30,278	15,707	29,344

자료 : 국토교통부

표 2-46  
건축물  
현황(2016년)

- 충남에 위치한 건축물 중 54.1%에 해당하는 총 27만 8,945동이 20년 이상 된 건축물들임. 20년 이상 건축물 중 73.1%인 20만 4,049동이 주거용 건축물임.

(단위: 개)

시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충남	515,202	324,401	79,538	21,932	13,424	75,907
10년미만	95,921	45,391	19,981	8,919	3,411	18,219
10 ~ 15년 미만	48,297	20,037	11,190	3,609	2,080	11,381
15 ~ 20년 미만	47,693	21,215	10,309	2,519	1,998	11,652
20 ~ 25년 미만	67,200	33,244	12,304	3,109	1,729	16,814
25 ~ 30년 미만	29,838	17,394	6,492	1,662	781	3,509
30 ~ 35년 미만	25,634	17,981	4,156	384	674	2,439
35년 이상	156,273	135,430	11,402	1,130	1,463	6,848
기타	44,346	33,709	3,704	600	1,288	5,045

자료 : 국토교통부

표 2-47  
경과년수별  
건축물  
현황(2016년)

- 충남의 거주용 건축물은 2015년말 기준으로 86만 2,450동으로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415.1동임.
  - 충남의 2015년 기준 총 가구 수는 60만 2천가구로서 이중 45.4%인 27만 3천가구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주택 수로는 단독주택 비중이 33.5%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24.3%를 크게 상회

##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표 2-48

### 충남지역 주거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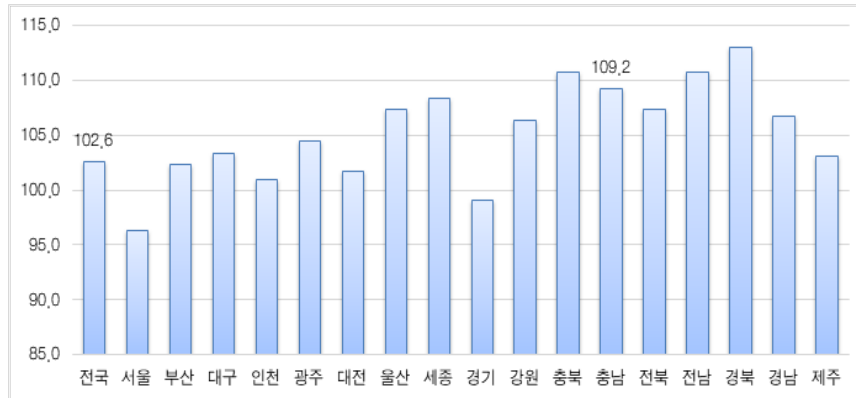
(단위: 동, %)

구분	주택 수							주택 보급률	천명당 주택수
	합계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 거주용 건물내 주택		
2011년	838,295	353,537	89,513	337,328	23,863	20,708	-	108.5	415.3
2012년	831,960	306,213	131,442	349,032	23,393	21,880	-	108.8	410.1
2013년	857,673	307,565	142,959	358,535	24,108	24,506	-	109.0	418.9
2014년	956,286	393,571	125,234	377,051	26,078	28,979	5,373	113.8	463.7
2015년	862,450	288,763	123,596	382,323	20,096	37,071	10,601	108.3	415.1
천안시	237,670	27,997	44,548	145,574	4,340	12,467	2,744	101.8	392.3
공주시	46,478	22,650	6,360	14,356	1,163	1,266	683	109.5	417.7
보령시	43,301	21,776	3,622	14,955	1,378	825	745	106.4	413.4
아산시	122,359	21,313	17,007	76,984	1,431	4,694	930	110.6	411.0
서산시	72,052	21,829	11,433	31,844	2,024	4,161	761	113.6	423.6
논산시	52,506	27,697	6,625	15,177	1,235	1,071	701	109.4	422.6
계룡시	15,496	1,236	406	13,336	256	229	33	114.4	371.3
당진시	72,825	20,843	18,834	26,865	2,241	3,295	747	116.2	441.0
금산군	24,137	15,628	1,720	4,849	588	1,017	335	105.8	439.8
부여군	29,643	22,763	1,089	3,555	889	873	474	106.4	416.7
서천군	25,391	18,423	872	3,546	1,119	1,004	427	109.7	446.2
청양군	14,098	11,257	374	1,612	244	428	183	108.4	434.0
홍성군	42,531	19,229	5,362	14,341	822	1,964	813	115.2	449.8
예산군	35,752	20,606	2,277	8,935	1,323	2,130	481	109.4	428.2
태안군	28,211	15,516	3,067	6,394	1,043	1,647	544	113.5	444.4

자료 : 2017 충남 사회지표조사

- 주택 보급률로 하면, 2016년 기준으로 충남은 109.2%로서 2015년 108.3% 대비 다소 상승

(단위: %)



자료 : 국가통계포털

주 : 신주택보급률 기준(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른 주택보급률)

그림 2-66

전국 주택보급률  
현황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준으로 충남지역의 20년 이상된 주택은 충남지역 전체 주택 대비 42.1%로서 전국 평균 43.8% 대비 낮은 편. 그러나, 30년 이상의 주택 비중은 21.4%로서 전국 평균 16.3% 5%p 이상 많이 보유

(단위 : 천호, %)

구분	주택	20년 이상된 주택		30년 이상된 주택	
		주택수	비율	주택수	비율
전국	16,367	7,164	43.8	2,669	16.3
서울	1,164	1,173	42.0	373	13.4
부산	738	546	46.9	248	21.3
대구	942	339	45.9	116	15.8
인천	487	425	45.1	105	11.2
광주	358	205	42.2	70	14.4
대전	469	241	51.5	62	13.1
울산	358	149	41.7	38	10.7
세종	81	15	18.0	8	9.4
경기	3,694	1,252	33.9	269	7.3
강원	570	278	48.7	130	22.8
충북	557	269	48.4	111	20.0
충남	754	317	42.1	162	21.4
전북	687	360	52.4	176	25.6
전남	748	439	58.8	254	33.9
경북	995	528	53.0	272	27.3
경남	1,135	536	47.2	232	20.4
제주	195	90	46.2	44	22.7

자료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 2-49

전국 노후 주택  
현황

###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표 2-50

시군별  
노후건축물 비중

- 충남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시 지역들보다 군 지역들에서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부여군, 청양군 등은 건축물들의 노후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되어짐.

(단위 : m<sup>2</sup>, %)

시군	전체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노후건축물 면적	비율	연면적	노후건축물 연면적	비율
천안시 동남구	20,045,494	2,377,860	11.9%	8,749,411	1,172,162	13.4%
천안시 서북구	27,700,248	1,370,291	4.9%	11,962,096	599,429	5.0%
공주시	9,713,091	1,738,154	17.9%	3,814,053	1,003,149	26.3%
보령시	7,995,938	883,870	11.1%	2,931,368	426,913	14.6%
아산시	26,225,508	1,875,352	7.2%	10,997,733	1,039,757	9.5%
서산시	13,808,865	1,512,051	10.9%	6,068,434	903,139	14.9%
논산시	10,074,127	1,779,400	17.7%	3,827,611	1,064,339	27.8%
계룡시	2,759,709	99,363	3.6%	1,321,685	34,573	2.6%
당진시	20,308,674	622,132	3.1%	8,895,048	307,302	3.5%
금산군	4,887,781	921,073	18.8%	1,771,875	586,535	33.1%
부여군	6,020,649	1,854,860	30.8%	2,408,154	1,150,656	47.8%
서천군	4,093,982	769,800	18.8%	1,501,771	396,185	26.4%
청양군	2,907,229	738,878	25.4%	1,179,790	515,070	43.7%
홍성군	9,378,527	554,300	5.9%	3,508,714	262,310	7.5%
예산군	8,137,788	1,462,922	18.0%	2,941,855	881,920	30.0%
태안군	5,120,434	651,450	12.7%	2,284,400	441,338	19.3%

자료 : 2016년 건축물대장 집계

-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멸실 주택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주택의 건축연도가 오래될 수록 멸실주택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위: m<sup>2</sup>)

시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합계	410,109	119,993	106,995	88,326	9,634	85,161
10년미만	36,991	5,375	18,413	5,381		7,822
10 ~ 15년 미만	38,246	7,591	14,251	4,641	122	11,642
15 ~ 20년 미만	59,262	9,889	24,367	9,087	1,715	14,204
20 ~ 25년 미만	128,038	11,161	27,444	49,545	3,041	36,846
25 ~ 30년 미만	45,942	14,361	9,150	17,886	651	3,894
30 ~ 35년 미만	69,011	50,774	6,917	951	3,451	6,917
35년 이상	32,620	20,841	6,452	835	655	3,837

자료 : 2016년 건축물대장 집계

- 주택 중에서 빈집도 늘어나고 있는데, 충남지역의 빈집은 7만4천호로서 전체 주택의 9.8%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6.5%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30년 이상된 빈집도 3만호에 이르고 있어 30.8%를 차지

(단위 : 천호, %)

구분	주택	빈집		30년 이상된 빈집	
		주택수	비율	주택수	비율
전국	16,367	1,069	6.5	314	29.3
서울	1,164	79	2.8	17	21.8
부산	738	87	7.4	22	25.8
대구	942	30	4.0	7	22.5
인천	487	47	5.0	8	17.5
광주	358	27	5.5	7	25.1
대전	469	26	5.6	5	18.1
울산	358	21	6.0	3	15.9
세종	81	16	20.3	1	3.9
경기	3,694	145	3.9	14	10.0
강원	570	59	10.4	17	28.4
충북	557	55	9.9	16	28.3
충남	754	74	9.8	23	30.7
전북	687	74	10.8	30	40.3
전남	748	103	13.8	51	49.0
경북	995	108	10.9	50	46.3
경남	1,135	99	8.7	40	40.4
제주	195	18	9.5	4	20.0

자료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 2-51

노후건축물의  
용도별 현황

표 2-52

전국 빈집 현황

###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9) 시설물 노후화

- 2015년 현재, 충남 소재 전체 1·2종 시설물 중 30년 이상된 시설물은 130개 소로 전체 시설물의 4.4%로 전국 평균 4.0%를 상회하고 있음. 특히, 2030년 기준으로 추정된 충남지역의 30년 이상 1·2종 시설물은 908개소에 달해 전체 1·2종 시설물의 30.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단위 : 개, %)

표 2-53

전국 1, 2종  
시설물 노후화  
현황

지역명	2015년		2030년(추정)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광주	82	3.7	1,011	45.6
서울	728	7.1	4,427	43.1
부산	165	3.2	2,218	43.0
대구	94	2.8	1,361	40.1
제주	16	8.1	79	39.9
인천	65	1.7	1,472	39.3
경북	327	8.0	1,535	37.5
대전	68	3.2	787	37.2
경기	176	0.9	7,123	35.8
강원	198	7.7	906	35.3
전북	148	5.6	890	33.9
전남	195	6.7	921	31.8
충북	172	7.9	674	30.8
충남	130	4.4	908	30.4
경남	231	5.0	1,390	29.8
울산	52	3.2	479	29.6
세종	15	3.1	28	5.7
합계	2,862	4.0	26,209	36.9

- 주: 1. 2030년 기준 30년 이상 시설물 비율이 높은 지역순으로 나열함.  
 2. 2016년 이후 신축되는 건물은 포함하지 않음.  
 3. 비율=30년 이상된 1·2종시설물 수/전체 1·2종시설물 수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최근 5년간(2011년~15년) 충남 지역 내 소규모 취약시설(옹벽, 육교, 전통시장, 지하도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점검시설 471개 시설 중 195개 시설이 미흡 혹은 불량 판정(41.4%) →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시설물이 미흡 혹은 불량 판정을 받음.



(단위 : 개, %)

지역	점검시설	미흡+불량	미흡·불량 비율
세종	29	13	44.8
충남	471	195	41.4
강원	507	182	35.9
경북	553	195	35.3
부산	498	171	34.3
경남	637	213	33.4
대전	313	103	32.9
인천	539	163	30.2
전북	483	133	27.5
울산	118	28	23.7
충북	522	118	22.6
경기	2,186	494	22.6
제주	138	31	22.5
대구	367	82	22.3
전남	589	121	20.5
광주	309	53	17.2
서울	1,909	309	16.2
합계	10,168	2,604	25.6

주: 미흡, 불량 비율이 높은 지역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표 2-54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결과

- 이러한 점검 결과에 따른 지자체 후속조치 대상 시설 중 충남의 후속조치 대상 145개 시설임. 이중에서 2016년 9월까지의 후속조치 현황을 보면, 충남은 91.0%가 미조치된 상황

※ 지자체들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보수·보강 관련 의무이행의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

### 3. 충남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인프라

### 3.

#### 충남도민의

#### 삶의 질

#### 수준과

#### 인프라

표 2-55

#### 소규모 취약시설

#### 안전점검 결과

#### 후속조치 현황

(단위 : 개, %)

	조치 대상 (A)	미조치 (B)	일부 조치 (C)	조치 완료	기타	미조치+ 일부조치 (D=B+C)	비율 (D/A)
제주	40	39	0	1	0	39	97.5
부산	141	134	2	5	0	136	96.5
울산	26	25	0	1	0	25	96.2
광주	50	48	0	2	0	48	96.0
대전	96	90	2	4	0	92	95.8
충북	99	90	4	4	1	94	94.9
경기	357	333	3	21	0	336	94.1
인천	117	103	7	7	0	110	94.0
경북	186	170	4	12	0	174	93.5
강원	142	126	6	9	1	132	93.0
경남	176	158	4	14	0	162	92.0
충남	145	131	1	13	0	132	91.0
전남	142	123	6	13	0	129	90.8
서울	322	285	5	32	0	290	90.1
전북	133	119	0	14	0	119	89.5
대구	95	83	1	10	1	84	88.4
세종	16	13	1	2	0	14	87.5
합계	2,283	2,070	46	164	3	2,116	92.7

주: 1. 2008년부터 2016년 9월까지의 후속조치 현황임.

2. 미조치 및 일부조치 시설비율이 높은 지역순으로 나열함.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FM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제3장 해외 인프라 투자정책 및 사례

###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sup>33)</sup>

#### (1) 국가별 인프라 투자 추이

##### 1) 미국

- 미국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예산에서 SOC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해 왔음.
  - 그 후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2009년부터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나 2012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SOC 투자는 다시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이 미국은 경기 변동에 따라 SOC 투자에 대한 증감을 반복해 왔는데 2015년부터는 기존 인프라의 재건을 위해 다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임 (<그림 3-1> 참조).
  - 분야별 SOC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2009년에 「미국의 복구 및 재투자법(ARRA :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제정해 교통 및 물류 부문에 중점 투자하기 시작하였음.
  - 이로 인해 2006년에는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액이 각각 52.8%, 47.2%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2015년 교통 및 물류 부문의

33)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7),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프라의 질적 제고 방향과 전략」에서 발췌 및 정리

# 1.

##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그림 3-1

미국의 총지출  
대비 SOC 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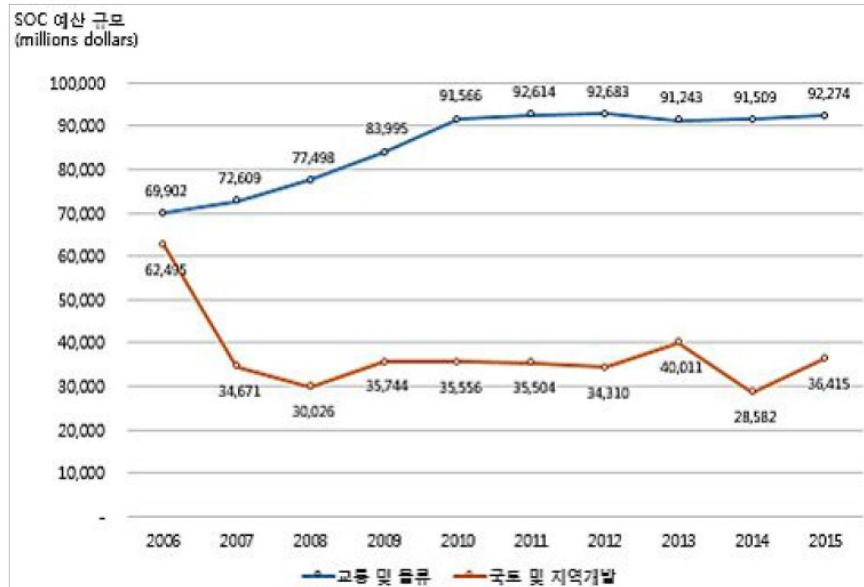
투자는 71.7%까지 증가하였음(<그림 3-2> 참조).



자료: 미국 예산관리국(2015), 국토연구원(2016)에서 재인용.

그림 3-2

미국의 부문별  
SOC 자원 배분



자료: 미국 예산관리국(2015), 국토연구원(2016)에서 재인용.

## 2) 영국

-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악화로 인해 전체 지출에서 SOC 투자 비중을 2010년 3.4%에서 2012년 2.9%로 감소시킴.
  - 그러나 2013년 이후에는 SOC 투자 비중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 2014년에는 전체 예산의 3.1%까지 회복됨.
- 부문별 SOC 자원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 및 물류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체 예산의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함(<그림 3-3> 참조).
  - 특히, 교통 부문에서 철도가 전체 예산의 약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방도로가 약 24%, 국가 도로가 약 16%, 대중교통이 약 1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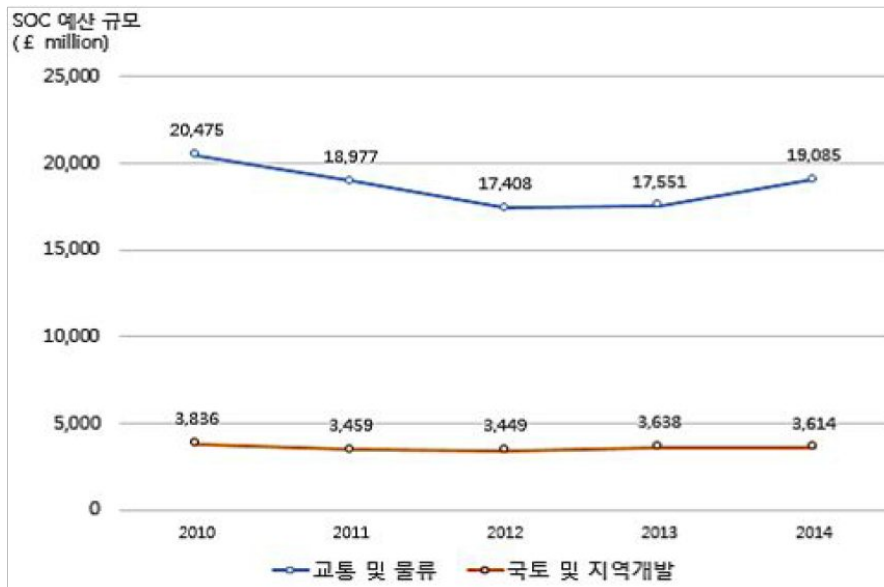


그림 3-3

영국의 부문별  
SOC 자원배분  
현황

## 3) 독일

- 독일은 전체 예산에서 SOC 투자 비중이 2013년 6.2%, 2014년 5.9%, 2015년 6.3%로 평균 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4년에 SOC의 투자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2016년 SOC 예산은 크게 증가하여 전체 예산에서 7.1%를 차지하고 있음.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표 3-1

독일의 SOC 예산 규모

- 이는 전년 대비 19.2% 증가한 것으로 독일의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표 3-1> 참조).

(단위 : 백만 유로(€), %)

구분	2013	2014	2015	2016
SOC 예산	18,200	18,212	18,972	22,607
총지출 대비 비중	6.2	5.9	6.3	7.1
SOC 예산 증감률	-	0.1	4.2	19.2

주 : 2016년은 추정 값을 사용함.

자료 : 조정식(2016. 9), 국내 SOC 확충 및 노후 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방안,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SOC 예산의 부문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에 대한 투자가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함.
  - 도로가 SOC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철도 및 대중교통이 20% 정도임.
  - 반면, 주거, 지역 계획, 지역 공동체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는 10%대로 낮은 비중을 차지함.
- 한편, 에너지 및 수자원 공급 서비스 관련한 투자는 2013년 21.4%에서 2016년 26.4%로 증가하는 양상임(<표 3-2> 참조).

(단위 : 백만 유로(€), %)

표 3-2

독일의 부문별 SOC 배분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SOC 예산		18,200	100.0	18,212	100.0	18,972	100.0	22,607	100.0
교통	도로	7,399	40.7	7,852	43.1	7,859	41.4	8,786	38.9
	철도 및 대중교통	4,597	25.3	4,274	23.5	4,953	26.1	5,349	23.7
	소계	11,996	65.9	12,126	66.6	12,812	67.5	14,135	62.5
주거, 지역 계획, 지역 공동체서비스		2,304	12.7	2,010	11.0	2,004	10.6	2,502	11.1
에너지 및 수자원 공급, 거래, 서비스		3,900	21.4	4,076	22.4	4,156	21.9	5,970	26.4

주 : 2016년은 추정 값을 사용함.

자료 : 조정식(2016. 9), 국내 SOC 확충 및 노후 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방안,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4) 호주

- 호주의 전체 GDP 예산에서 인프라 투자 금액은 최근 6년 간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도로, 철도 등 교통 분야는 전체 인프라 투자 금액의 50% 가까이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기통신이 약 30%, 에너지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 : 백만 호주달러, %)

분야	2011-12년	2012-13년	2013-14년	2014-15년	2015-16년
교통	73,044	75,538	75,105	74,323	74,811
에너지	전기	25,771	25,576	24,973	25,141
	가스	1,681	1,831	1,805	2,019
전기통신	42,321	41,983	42,905	46,968	50,214
상하수도	16,454	16,912	16,460	16,674	17,068
GDP	1,509,109	1,545,932	1,584,578	1,621,350	1,668,711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	10.6	10.5	10.2	10.2	10.2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Key Australian infrastructure statistics 2016.

표 3-3

호주의 인프라  
투자 규모

- 교통 분야의 경우 도로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는데 2014-15년에는 전체 교통 투자 금액의 30.3%인 227억 호주달러(AUD)를 지출함.
- 다음으로, 운송 수단 및 철도 등에 대한 투자가 뒤를 이음.
- 전체 GDP에서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10% 수준을 유지하여 왔는데, 이 중 교통 분야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대로 절반 정도를 차지함.
- 최근 6년 간 추이를 살펴볼 때 교통 분야에 대한 투자가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인프라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이 발간한 'Engineering Construction Activity'에서 인프라 분야별 기성 추이를 분석하면, 2001년 이후 교통, 수자원,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통 인프라의 경우 2009~10년부터 2011~12년까지 성장한 뒤 2012년 이후 감소하였음.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표 3-4  
호주의 교통  
부문별 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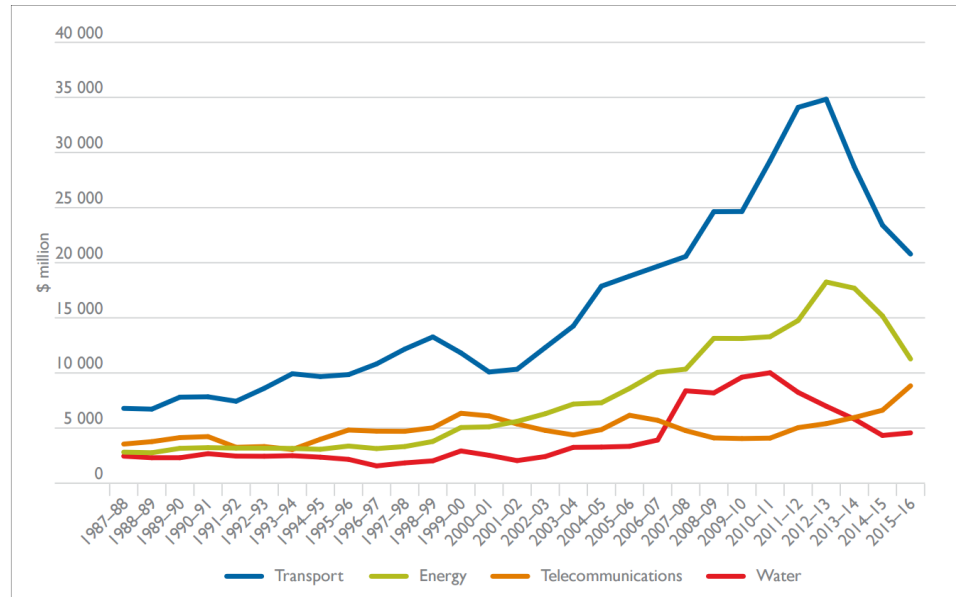
- 수자원 부문의 기성 규모는 2007~08년에 급격히 증가한 후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South East Queensland Water Grid’ 등의 공사 완료 후 그 규모가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 호주달러, %)

분야	2011-12년	2012-13년	2013-14년	2014-15년	2015-16년
교통	73,044	75,538	75,105	74,323	74,811
도로	22,661	22,578	23,040	22,790	22,693
공항	6,818	6,854	6,758	6,746	7,230
철도 등 기타 교통수단	10,507	10,994	10,940	11,398	11,127
운송	33,085	35,151	34,367	33,389	33,760
GDP	1,509,109	1,545,932	1,584,578	1,621,350	1,668,711
GDP 대비 교통 투자 비중	4.8	4.9	4.7	4.6	4.5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infrastructure statistics 2016.

그림 3-4  
호주의 인프라  
분야별 기성 추이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Key Australian infrastructure statistics 2016.

## 5) 일본

- 일본의 SOC 예산 비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 기준 전체 예산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음.



- 부문별 투자를 살펴보면, 교통 부문이 7조 7,500억엔으로 SOC 투자 금액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커뮤니티 발전부문이 2조 1,500억엔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음.
- 교통 부문에 대한 높은 투자는 일본의 노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단위 : 백만엔(¥),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SOC 예산	10,054,300	9,273,500	9,125,200	9,067,400	10,118,200
총지출 대비 비중	5.1	4.7	4.6	4.5	5.0
SOC 예산 증감률	-	-0.077	-0.015	-0.006	0.115

자료 : 국토연구원(2016) ; 조정식(2016. 9), 국내 SOC 확충 및 노후 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방안,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표 3-5

일본의 SOC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엔(¥),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SOC 예산	10,054,300	9,273,500	9,125,200	9,067,400	10,118,200
교통	7,371,000	6,657,400	6,895,800	6,906,700	7,756,500
수자원 공급	274,800	197,700	186,500	186,000	201,800
커뮤니티 발전	2,408,500	2,418,400	2,042,900	1,974,700	2,159,900

자료 : 국토연구원(2016) ; 조정식(2016. 9), 국내 SOC 확충 및 노후 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방안,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표 3-6

일본의 부문별  
SOC 예산

## (2) 국가별 장기 인프라 계획상의 질적 제고 방향

### 1) 미국

-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하면, 미국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2006년 6.2점에서 2016년 5.9점으로 소폭 하락하였음.
- 또한, 2016년 기준으로 교통 분야별 질적 수준 점수는 7점 만점을 기준으로 항공 6.2점, 항만 5.7점, 도로 5.7점, 철도 5.0점임.<sup>34)</sup>

34) White Hous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2016), 2016 Economic Report of President, p.259.;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Survey.

#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 미국토목학회(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에서 발간한 인프라 평가 보고서에서도 2013년 미국의 인프라 투자 수준은 ‘D+’ 등급으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sup>35)</sup>
- 이처럼 미국은 현재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와 품질 저하 등으로 이에 대한 재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sup>36)</sup>

(단위 : 백만 달러)

표 3-7

미국 부문별 정부 예산 계획

분야	2017 (추정)	2018 (추정)	2019 (추정)	2020 (추정)	2021 (추정)
<b>교통</b>					
육상	78,503	91,645	94,619	103,861	100,471
항공	19,779	19,701	20,058	20,313	21,195
수자원	10,045	10,247	10,484	10,731	10,991
기타	496	503	516	525	534
소계	108,823	122,096	125,677	135,430	133,191
<b>도시 및 지역 개발</b>					
도시 개발	4,492	4,268	4,351	4,438	4,526
지역 개발	13,040	3,058	3,128	3,218	3,251
재난 구조 및 사회보장	12,067	5,625	5,998	6,323	6,485
소계	29,599	12,951	13,477	13,979	14,262

자료 : 미국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 미국의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서 발표한 미 연방정부의 예산 계획을 살펴보면, 교통부문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
- 특히, 도로 등과 같은 육상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가 전체 교통부문에서 7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교통 분야와 관련, 미국은 2015년 국가교통 예산법인 「육상교통정비법(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FAST)」을 제정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 간 약 3,050억 달러를 도로, 안전, 대중교통, 철도,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 투자하기로 하였음.<sup>37)</sup>

35) 강상혁·이영환, 영미 선진국 인프라 평가 체계의 이해와 국내 도입 방향, 연구보고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

36) 조정식(2016. 9), 국내 SOC 확충 및 노후 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방안,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7) 조정식(2016. 9), 국내 SOC 확충 및 노후 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방안,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향후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21세기청정교통계획(21st Century Clean Transportation Plan)’ 기조 하에 이뤄지고 있음.
  - 즉, 미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새롭고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2017년 예산에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96억 달러가 증가한 총 730억 달러가 편성되었는데, 인상분의 대부분인 179억 달러가 ‘21세기청정교통계획’에 투자되었음.<sup>38)</sup>
  - 예산 투자 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10년 동안의 목표로 설정되었음.<sup>39)</sup>
    - ▶ 첫째, 일상생활에서 교통 체증을 감소하기 위해 10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도심, 시골 등에 교통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경제 회복을 위한 교통 투자(Transportation Investment Generating Economic Recovery, TIGER)’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임.
    - ▶ 둘째, 이산화탄소 감소, 효율성 극대화, 공공투자에 대한 수익 극대화를 위해 10년 동안 매년 100억 달러를 투자해 스마트하고, 더 깨끗한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 셋째, 스마트하고 깨끗한 운송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10년 동안 매년 2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으로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저탄소 운송 수단 등 현재의 교통 연료 수단의 대체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 ▶ 새롭게 변화하는 기술이 교통 시스템에 안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10년 동안 매년 4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전기 자동차, 무인 자동차 등이 빠르게 우리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등을 만들 것임.
    - ▶ 그 외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현재 정유 회사에 배럴당 1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음.
-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였고 향후 10년 간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함.
- 미국은 주요 인프라 시설 노후 연수가 평균 27년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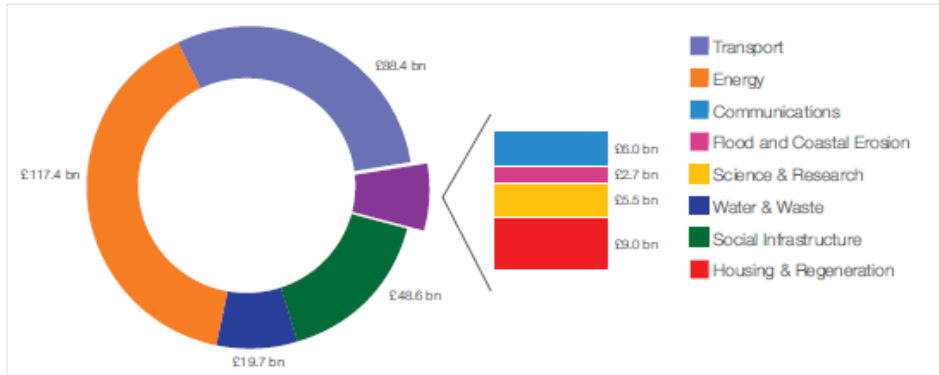
38) ARTBA(American Road & Transportation Builders Association, 2016), Analysis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FY2017 Budget Proposal for Transportation : 1쪽.

39)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Investing in American Infrastructure.

(2015년 기준 도로 및 고속도로 28.4년, 상수도 25.6년, 하수도 26.5년) 트럼프 인수위는 이미 대통령 취임 이전 전국주지사연합(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으로부터 해결이 시급한 인프라 프로젝트 목록을 받아 1,375억 달러 규모의 50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리스트를 작성한 바 있음.

## 2) 영국

-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국가 인프라 투자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lan, 이하 NIP)’을 수립하였음.
  - NIP에 따라 인프라 투자를 위해 2005~06년부터 2009~10년까지 420억 파운드를, 2010~11년부터 2014~15년까지는 약 17% 증가한 490억 파운드가 지출되었음.
  - 영국은 2010년 이후부터 인프라에 총 2,50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해 왔음.
  - 그 결과 주요 도로와 지역 교통, 수백 개의 전철 등 약 3,000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음.
  - 이후 2016년에 영국 정부는 NIP를 NIDP(National Infrastructure Delivery Plan)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2020~21년까지 인프라 개발을 위해 60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 4,830억 파운드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영국은 이 계획에 처음으로 사회적 인프라(학교, 병원, 교도소)와 함께 대규모 주택 재건 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며, 2020~21년까지 5년 동안 전체 예산에서 약 3,000억 파운드를 에너지, 교통, 사회적 인프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임(<그림 3-5> 참조).
  - 2016년부터 향후 5년 간 인프라 투자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1,174억 파운드)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교통(884억 파운드), 사회 인프라(486억 파운드), 수자원(197억 파운드) 부문임.



자료 : 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 Major Infrastructure Tracking Unit, "National Infrastructure Delivery Plan 2016~2021".

- 한편, 영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계획의 중기적(2020-2021년까지), 장기적(2050년까지) 관리를 위해 2016년 1월에 '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IPA)'와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이라는 2개의 기관을 설립하였음.
  - IPA는 2016년 1월 정부의 주요 인프라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감독, 자금 조달을 위해 Infrastructure UK(IUK)와 Major Project Authority(MPA) 두 기관을 합병하여 출범시킨 조직임.
  - IPA는 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2016년 3월 1,630억 파운드 규모의 중장기적 관점의 건설 전략인 'UK Government Construction Strategy 2016 ~ 2020'을 발표하였음.
  - 이는 2011년 발표된 '건설전략 2011~2015'의 2차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영국 정부는 '건설전략 2011~2015'를 통해 발주자로서 산업 참여자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sup>40)</sup>
-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NIC)경우 2015년 10월 효과적인 장기 인프라 계획을 위한 독립 기관으로 설립되었음.
  - NIC는 미래에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위해 ① 스마트 전력(Smart Power), ② 세계적 도시를 위한 교통(Transport for a World City), ③ 장기 계획을 위한 북쪽의 도로와 철도의 연결(High Speed North)이라는 3대 도전 과제를 만들

40) National Infrastructure Delivery Plan 2016~2021 ; 조정식(2016. 9), 국내 SOC 확충 및 노후 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방안,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그림 3-5

영국  
2016~21년까지  
의 부문별 인프라  
투자 계획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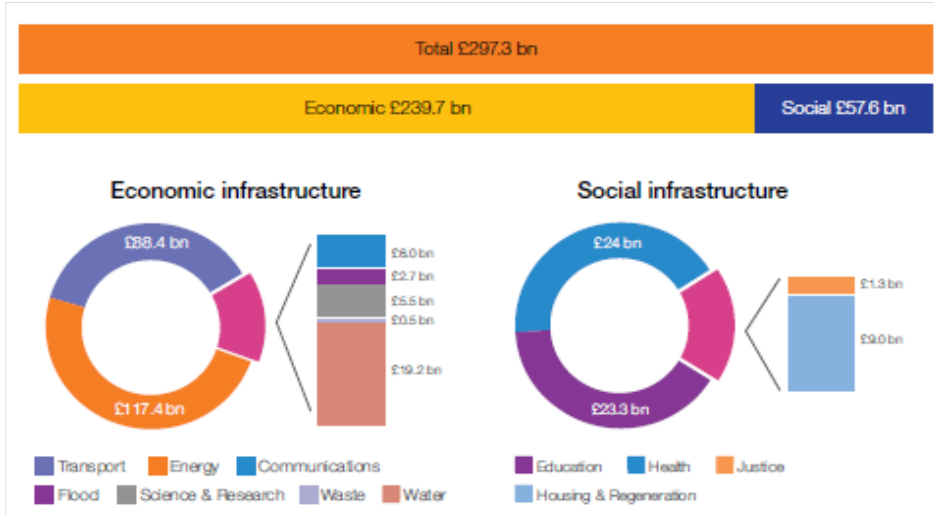
#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표 3-8  
영국 2016~17년  
분야별 인프라  
프로그램과 규모

- 있음.
- 여기에는 60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있으며, 그 규모는 약 4,250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사회적 인프라는 제외).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8>과 같이 교통,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재난, 수자원 등의 분야에서 약 4,000억 파운드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세웠음.

분야	프로젝트(개수)	프로그램(개수)	투자 규모 (십억 파운드)
커뮤니케이션	2	4	6.0
에너지	109	58	255.7
방재	6	23	4.1
과학 및 연구	25	7	5.5
교통	166	163	134.5
폐기물처리	10	0	0.5
수자원	1	28	19.3
전체	319	283	425.6

- NIDP에 따르면 영국은 연평균 590억 파운드씩 2020~21년까지 총 2,970억 파운드를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임.
- 전체 투자 금액인 2,970억 파운드 중 2,397억 파운드(80.7%)가 경제적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적 인프라(주택 개조, 교육, 교도소 등)의 경우 약 580억 파운드가 지출될 예정임.
- 영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상으로는 프로젝트의 50%가 2020~21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그림 3-6> 참조).



자료 : 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 Major Infrastructure Tracking Unit, National Infrastructure Delivery Plan 2016~2021.

그림 3-6

영국  
2020~21년까지  
경제적 인프라와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

### 3) 독일

- 독일은 2030년까지 교통부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으로 이를 위해 2003년 'FTIP(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를 수립함.
- 기존의 교통 전략이 1980년대에는 철도 네트워크 개발, 1990년대에는 도시 재건, 2000년대에는 주요 도시의 연결 등 부분적으로만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FTIP는 독일의 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FTIP 2030은 '교통 이용자의 이동성 촉진', '재화 공급의 명확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교통수단의 안정성 강화', '오염 배출 물질의 감소', '자연 보호', '소음 방지 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목표별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도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임.
- 연방정부의 교통부문 인프라 투자를 살펴보면, 2011~2015년에 도로의 유지보수 관련 지출 비중은 증가한 반면, 도로의 새로운 건설 및 교체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였음.
- FTIP에서도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약 100억 유로씩 총 1,500억 유로를 철도, 도로, 수로의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음.

##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표 3-9

FTIP 2030의  
목표 및 세부  
전략

목표	세부 전략
교통 이용자의 이동성 촉진	인프라 시설물의 유지 보수, 교체 및 현대화 교통 흐름 개선 및 병목현상 해결 교통의 접근성 향상
재화 공급의 명확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인프라 시설물의 유지 보수, 교체 및 현대화 교통 인프라 구축 원가 감소 교통 흐름 개선 및 병목현상 해결 교통수단 운영의 신뢰성 향상 공항, 항구 등 각종 운송 수단을 통합한 허브 구축
교통수단의 안정성 강화	인프라 시설물의 유지 보수, 교체 및 현대화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가진 교통수단으로 이동
오염 배출 물질의 감소	교통 흐름 개선 및 병목현상 해결 오염 물질 배출을 낮추는 교통수단으로 이동 인프라 시설물의 유지 보수, 교체 및 현대화
자연 보호	토지 개발 제한
소음 방지 등 삶의 질 향상	소음 방지

- 즉,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유지·보수하고 대체하는 데에도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 FTIP 2030에서도 인프라 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기존 인프라 시설의 유지보수 및 대체를, 다음으로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을 꼽았음.
  - 이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FTIP 2030에서는 첫째,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최우선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둘째, 지속적으로 계획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의 기준을 바탕으로 공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있음
  - FTIP 2030에서는 <표 3-10>에서와 같이 2,696억 유로의 자금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 중 2,267억 유로는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성능 향상 및 최우선 프로젝트로 선정된 신규 인프라에 투자될 예정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TIP에서는 2030년까지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교체를 위해 1,416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임.
  -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은 FTIP가 당초 세운 계획 대비 약 69% 정도만 달성할 수 있는 금액으로 독일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830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더 편성할 예정임.
  -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교체는 도로(670억 유로)와 철도(584억 유로)



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전체 예산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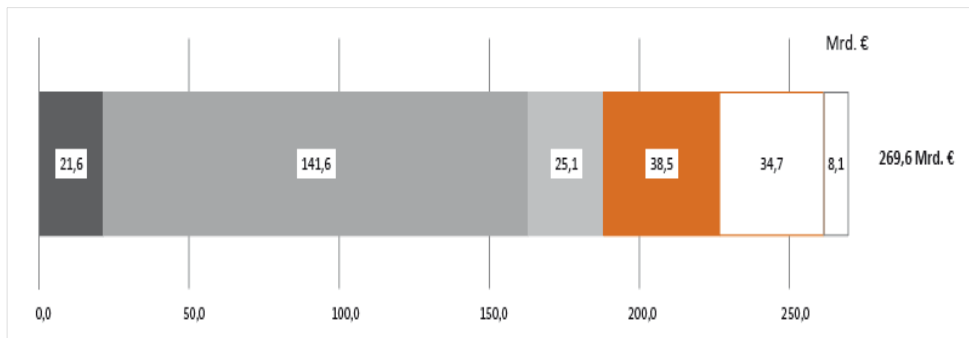
(단위 : 십억 유로)

분야	총 투자	기타 투자 (2016 ~ 2030)	시설물 유지/교체 (2016 ~ 2030)	성능 향상 및 신규 인프라(2016 ~ 2030) (시설물 유지/교체 제외)		성능 향상 및 신규 인프라 '준비' (2031년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체 투자	지속적이고 명확히 계획된 프로젝트	일정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된 프로젝트	시설물 유지 및 교체가 포함된 새로운 프로젝트
간선 도로	132.8	12.0	67.0	15.8	18.3	19.6
철도 인프라	112.3	7.4	58.4	8.4	18.3	19.7
운하	24.5	2.2	16.2	0.9	1.8	3.5
전체 교통 수단	269.6	21.6	141.6	25.1	38.5	42.8

자료 :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 The 2030 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

표 3-10

FTIP 2030의  
교통 분야별  
투자 계획



주 : 왼쪽부터 2030년까지 기타 투자액, 2030년까지 지속적이고 명확히 계획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액, 2030년 이후 투자액(성능 향상 및 신규 인프라), 2030년까지 유지보수 투자액, 일정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된 프로젝트 투자액, 2030년 이후 투자액(유지보수 투자액).

자료 :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 The 2030 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

그림 3-7

FTIP의 예산 배분

- 한편, 성능 향상 및 신규 인프라 투자(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체 제외)에도 총 636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
- 이 중 251억 유로는 지속성이 있고 명확히 계획된 프로젝트에, 나머지 385억 유로는 위에서 언급한 2가지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된 프로젝트에 투자될 계획임. 신규 투자 또한, 도로와 철도 인프라에 예산의 90% 이상이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배정되어 있음.

- 종합해보면, 전체 예산에서 49.4%가 도로에, 41.3%는 철도에, 9.3%는 운하에 투자될 계획임.
- 2030년까지 인프라 중 교통부문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예정임.
- 특히, 독일의 교통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대신 현재의 인프라를 개선(예산의 약 70% 배정됨)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임.

#### 4) 호주

- 호주 정부는 향후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인프라의 자동화와 첨단화, 그리고 인프라의 재건과 투자를 위한 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호주는 ‘Infrastructure Australia Act 2008’ 발표를 시작으로 후속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음.
  - 특히, 인프라의 재건은 호주의 인프라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호주 정부는 1980~90년대의 인프라 재건 정신을 강조하고 있음.
-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투자 또한 병행하여 추진 중임.
  - 예를 들면,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를 새로운 교통 체계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음.
- 호주 인프라의 재건 계획은 ① 생산적 도시와 지역(Productive Cities, Productive Regions), ② 효율적 인프라 시장(Efficient Infrastructure Markets), ③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인프라(Sustainable and Equitable Infrastructure), ④ 보다 나은 의사결정과 조달 (Better Decisions and Better Delivery) 등의 목표 하에 향후 15년 간 각종 사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호주 정부는 인프라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과정을 통해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 생산성, 그리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sup>41)</sup>
  - 호주 정부는 2015~16년부터 2019~20년까지 사회의 생산성 향상 등을

41) Australian Government (2016. 2), Australian Infrastructure Plan.

위해 인프라에 약 400억 달러(AUD)를 투자할 계획임.

- 특히, 교통 및 기반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됨.

- 도로의 경우 호주의 내국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향후에도 도시 내 이용객과 물류 운송의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Trends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2030(2014)에 따르면, 트럭을 이용한 교통수단은 2030년에 현재보다 약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철도는 도로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를 늘릴 예정인데 2030년까지 현재 대비 2/3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경제연구소인 딜로이트 액세스 이코노믹스(Deloitte Access Economics)는 현재 철도의 민영화를 통해 9,200만 호주달러(AUD)의 수익을 얻고 있지만 2030년에는 약 2.3억 달러까지 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향후 2030년까지 항공 교통의 규모는 현재보다 1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해양 교통의 경우 지난 십수 년 간 급속히 증가해 왔는데 향후 2030년까지 현재까지 해 온 성장의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대중교통은 2004년 이후부터 모든 수도권에서 급속히 성장해 왔는데 2030년까지 이용객이 현재보다 30%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sup>42)</sup>
- 이처럼 빠른 인구 성장 등으로 인해 교통수단은 향후 20년 내에 현재의 2배 이상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따라 호주의 인프라 분야별 향후 투자 계획은 육상 교통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 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표 3-11> 참조).

42) Australian Government (2014), Trends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2030.

# 1.

##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표 3-11

### 호주의 인프라 투자 계획

(단위 : 만 호주달러)

구분	2015 ~ 16년	2016 ~ 17년	2017 ~ 18년 (추정)	2018 ~ 19년 (추정)	2019 ~ 20년 (추정)
교통 보안 (Transport security)	70,489	71,357	70,945	69,516	70,834
육상 교통 (Surface transport)	454,759	499,336	512,569	518,832	524,125
도로 안전 (Road safety)	24,918	24,068	18,881	18,447	18,830
항공(Air transport)	289,935	329,847	290,455	234,635	231,744
소계	840,101	924,608	892,850	841,430	845,533

자료 : Infrastruc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Portfolio(2016), Portfolio Budget Statements 2016~17 Budget related paper No. 1. 13.

## 5) 일본

- 일본은 2012년 제3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2012~2016)을 수립하여 SOC 정책과 관련해 총 9개 과제 18개 시책을 제시해 전략적인 투자를 실시하고 있음.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은 제1차 계획(2003~2007), 제2차 계획(2008~2012), 제3차 계획(2012~2016)이 추진되었으며, 2015년부터 국토형성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제4차 계획(2015~2020)이 추진 중임.
  - 이는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일정에 맞춘 것으로 일본은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사회자본 정비의 기본 방침은 ‘사회자본 스톡효과 최대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인프라 관리’임.
  -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 노후화된 인프라의 보수, 기후재해,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점 발생, 국가 경쟁력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추진되면서 경기 부양 및 자연 재해 대처를 위해 ‘국토강인화계획’을 수립해 향후 10년 간 200조엔을 도로 및 항만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임.
  - 이에 따라 2016년 8월 28조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제시, 2016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인프라 정비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이번 정책으로 도쿄와 나고야, 오사카를 잇는 차세대 고속철인 리니어 중앙 신칸센의 조기 개통 등 ‘21세기형 인프라 정비’ 사업에 10조 7,000억엔이 투입될 예정임.<sup>43)</sup>

## 1. 국가별 인프라 추진 정책 동향

43) 조정식(2016. 9), 국내 SOC 확충 및 노후 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방안,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1) 미국

#### 1) 버지니아 주

- 미국은 인프라 재건을 위하여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재정 투입과 더불어 민간자본 유치가 활발히 진행됨.
  - 주정부 차원에서 교통인프라 재원조달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매년도 배정되는 예산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임.
  - 버지니아주는 유류세 부과방식을 종량제로 변경함.
  - 버지니아주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5~7%에 해당되는 부가세(Sales tax)를 0.5% 수준 증가시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추가재원으로 사용함.
  - ‘SMART SCALE’ 프로그램 시행: B/C분석을 수행하여 타 부문에서 사용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교통부문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기함<sup>44)</sup>.
  - 추가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P3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함.
  - ‘PUBLIC SECTOR OPTION ANALYSIS’를 통하여 민간투자대안(PFI)과 정부투자대안(PSC)간의 비교분석과, 시장테스트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이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적 사업구조 및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모를 결정함.
- 인프라에 대한 요금결정 정책은 다소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이용수단에 대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주민들의 비판의견(요금 저항)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임.
  - P3방식으로 건설되는 도로라도 무료로 이용되는 라인과 유료라인을 함께 적용하여, 요금을 내는 통행자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급행료’ 개념으로 자율적 선택에 의하여 부과함.

44) SMART SCALE은 Virginia DOT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교통사업의 평가와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만 사용됨.

- 요금의 결정방식은 이용차량의 속도 또는 시간대에 따른 가변요금제<sup>45)</sup>를 적용하여, 속도가 빠르게 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의 방식으로 부과함.
  - 그리고, 3인 이상이 함께 동승하면 무료로 통행시켜주는 옵션을 제공하여 버지니아 및 D.C 인근 교통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함<sup>46)</sup>.
- 버지니아주의 P3는 수요위험을 민간투자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방식인 DBFMO(Design-Build-Finance-Operate-Maintain) 형태의 계약을 추진함.
  - 버지니아 도로국장의 의견으로는 “민간투자자본을 활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정부가 지고 있던 수요(재무)위험을 민간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설명함<sup>47)</sup>.
  - 추가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는 장점으로 향상된 운영(톨링 시스템 운영방식)방식의 효율성, 계획과 설계방식의 개선<sup>48)</sup> 등이 있다고 강조함.
- 버지니아주를 포함한 미국의 P3 시장에 한국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P3 사업자 선정방식을 먼저 잘 이해하고 이를 따를 필요가 있으며, 미국 현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임.
  - 2~3개월 전에 National Chamber와 한국 대사관 등이 주관하여 미국의 P3 정책 및 프로젝트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임.
  - VDOT 및 US DOT 홈페이지에 ‘PPTA IMPLEMENTATION MANUAL’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매뉴얼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으로 구상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뉴스가 공시되므로 미국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를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좋은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제안을 통한 개발도 가능함.

45) 빠른 속도를 제공하면 자동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원칙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출퇴근 시간처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46) 부과되는 요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카풀을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이 두 가지 대안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함.

47) 반면, 메릴랜드 주의 정책은 AP(Availability Payment) 방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방식이 건설비용 및 일정초과 위험과 운영비용 초과위험을 민간투자자가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느끼고 있음. 또한 비록 미래 정부부채가 확정되더라도 정부 재정지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음.

48) 버지니아 주는 제도적으로 민간제안방식을 허용함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아직 미국에 P3 프로젝트가 많지 않지만 심각한 인프라 상황에 비하여 투자재정 부족이 심각하여 앞으로 많은 프로젝트(특히 재투자 분야)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버지니아 주의 경우 Hampton 지역과 Northern Virginia 지역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존재하여 이 지역의 신규 인프라 건설을 위한 추가적인 세금을 징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사업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 기업들은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현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는 초기에는 소수지분의 투자파트너로 참여하고, 실적과 경험을 쌓아가면서 점차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임.
- 주 정부의 인프라 투자재원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재무적 수단 중 대표적인 사례가 TIFIA(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와 PABs(Private Activity Bonds)임.
- 미국의 자본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여 차입금 조달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초기의 개발자본 투자자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
  - 투자자본 뿐 아니라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능력을 갖춘 회사가 소수에 불과하므로 시장 경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하여 요구수익률이 높은 것을 문제라고 생각함.

#### 2) 버지니아 주 노퍽(Norfolk)시와 포츠머스(Portsmouth)시 터널 프로젝트

- 버지니아주 노퍽(Norfolk)시와 포츠머스(Portsmouth)시를 연결하고 있었던 미드타운 및 다운타운 터널이 노후화와 용량 부족으로 정체가 심화됨에 따라, 노후화 된 터널을 개량 및 확장하고 연결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임.
- 버지니아 주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한꺼번에 감당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부족했으므로 대규모의 복잡한 사업을 PPP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추진함.



-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위치 : 버지니아주 노퍽(Norfolk) 및 포츠머스(Portsmouth) 시
  - 주주(지분 출자 참여사) : 스칸스카 인프라 개발(Skanska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c), 맥쿼리 홀딩스(Macquarie Financial Holding Limited)
  - 시공사 : 스칸스카 미국법인(Skanska USA Civil Southeast, Inc.), 키윇(Kiewit Construction Company), 위크스마린(Weeks Marine, Inc.)
  - 총사업비 : 20.89억불
  - 주요 사업 내용
    - ▶ 엘리자베스 강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미드타운 터널(New Midtown Tunnel) 신설<sup>49)</sup>
    - ▶ 노퍽(Norfolk)방향 진입구간 확장 및 인터체인지 개선
    - ▶ 포츠머스(Portsmouth) 방향 진입구간 확장 및 인터체인지 개선,
    - ▶ MLK 확장을 통한 런던블러버드(London Boulevard)로부터 I-264까지 고속도로 연결 및 개량,
    - ▶ 기존의 미드타운 터널 및 다운타운 터널 개량
      - 계약방식 : 민간투자사업(DBFOM/Toll Concession)<sup>50)</sup>
    - ▶ 건설기간 : 55개월(2012년 4월~2016년 12월)
    - ▶ 운영기간 : 개통 후 58년
- 요금은 시간별로 다른 수준을 징수하는 가변요금 체계이며, 최근 교통량은 예측치의 80%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 매년 향후 5년간의 수선 및 유지비용을 예측하여 이익배당 전에 별도의 적립 계좌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예측 차년도 100%~4년 후 25% 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함.
  -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의 사용 순서는 건설과 운용비용 사용 → PABs 원리금 지급 → TIFIA에 대한 원리금 지급 → 유지보수 예비비 적립 → 배당금과 투자금 지급 → 초과이익 배분(버지니아주 정부와 배분)임.

49) 기존에 존재하던 동일 루트의 터널은 개·보수 하여 확장된 2개 차로로 사용

50) 민간투자자가 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임

##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ERC를 사용하는 지역주민의 대다수는 큰 불만 없이 본 노선을 사용하지만 약 20%에 해당되는 지역주민은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10%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요금 지불마저 거부하는 층으로 파악되고 있음.

#### 3) 워싱턴 주(州)

- 2017년 기준 워싱턴 주의 경우 국제공항과 워싱턴대학교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경전철 시스템을 확대 건설할 예정임.
  - 도심지에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고 보행자 중심 도시를 조성
  - 기후변화에 대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을 시 전체에 설치
  - 자동차 속도 제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추진
- 시애틀의 교통 부담금(안)에 따른 “Move Seattle”는 총 9년 동안의 투자 계획으로 구성됨. : 총 4개의 부문별 목표 및 투자액 제시(① “안전한 도시”, ② “살 만한 도시”, ③ “상호 연결된 도시”, ④ “활기찬 도시”)
- 안전한 도시(9년 동안 3억5천만 달러) : 심각하고 치명적인 사고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취약한 교량을 지진에 견디도록 보강하여 시애틀 주민과 여행객들의 안전 확보를 꾀함.
  - 시애틀의 도로에서 심각하고 치명적인 사고를 없애기 위한 프로그램 시행
    - ▶ 12-15개의 주요 수송 경로에 대한 안전 프로젝트를 완료하여, 사고가 많은 도로 모두에 대해 이용자들의 안전 개선
    - ▶ 안전교육과 함께, 매년 9-12개의 안전한 통학로(Safe Routes to School) 프로젝트를 완수하여, 시애틀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보행 안전 및 자전거 통학 안전 확보
    - ▶ 횡단보도 재도색 주기를 4년으로 축소하여, 모든 횡단보도가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함.
  - 가장 취약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
    - ▶ 약 50마일의 새로운 자전거 보호 도로, 60마일의 그린웨이를 건설하여, Bicycle Master Plan에 따른 시 전역 네트워크의 절반 이상을 완료
    - ▶ 도심과 마을의 손상된 보도에 대해 최대 225개 블록까지 수리

- ▶시 전역의 교차로 최대 750개까지 연석 경사로와 횡단보도 개선
- ▶발라드(Ballard) 지역 버크-길먼 트레일의 단절 구간 공사 완료
- 교량의 안전 강화
  - ▶교량에서 부분별 보수가 필요했지만 미뤄왔던 부분의 공사를 마무리
  - ▶16개의 취약한 교량에 대해 내진 성능 보강
  - ▶시애틀의 마지막 남은 목재 교량(페어뷰 애비뉴 소재)을 교체하여, 시의 최대 직업 안내 센터 두 곳을 연결
  - ▶우선순위가 높은 교량 교체 공사를 2024년 이후에 개시하도록 계획 및 설계
- 살만한 도시(9년 동안 2억7천5백만 달러) : 지금 유지보수에 투자함으로써 훗날 시애틀 주민들에게 더 큰 비용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비용의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 소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 가장 통행량이 많은 도로 중 250 lane-mile에 대해 유지보수 및 현대화 실시
    - ▶간선도로를 최대 180 lane-mile까지 재포장하여, 시애틀에서 여객과 물자 대부분을 수송하는 가장 붐비는 도로의 35%를 정비 및 현대화
    - ▶시 소속 팀에 의해 수행되는 수리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목표로 정한 65곳을 재포장. 연 평균 7-8 lane-mile의 간선 도로에 해당
  -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직원들의 대중교통용 패스, 바이크 세어 및 카 세어 멤버십 이용 기회 증진
    - ▶신축 건물의 주민, 건물주 및 개발업자가 협력하여 대중교통, 카 세어, 바이크 세어 및 기타 이동 수단에 대한 이용 기회 보장
- 상호 연결된 도시(9년 동안 1억7천만 달러) : 이용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이동 수단 옵션을 그들이 원할 때 제공함을 목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임.
  - 구식 도로를 현대화하여 사람들에게 비용 부담이 적고 편리한 이동 수단 옵션 제공
    - ▶7-10개의 다중 수송 경로(multimodal corridor) 프로젝트 완료. 주요 도로를 재설계하여 보행자, 자전거, 자가운전자 또는 대중교통 이용자 등 모든 이용자를 위한 연결성과 안전성 개선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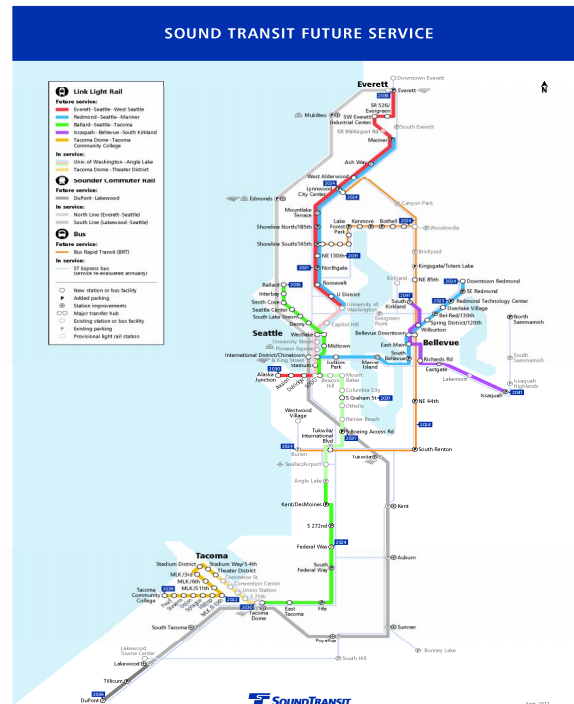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 종합적인 대중교통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버스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주요 위치에서의 병목 현상 제거
- ▶ 매년 시 전역의 주요 수송 경로 5곳에 대해 교통 신호 타이밍을 최적화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자가용, 트럭,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자 및 보행자들에게 편의 제공
- ▶ 양질의 BRT 루트 7개 신설
  - 경전철에 대한 연결성 개선
- ▶ 시애틀 남동부 그레이엄 스트리트(Graham Street)에 새로운 연결(Link) 경전철역을 위한 재정 지원
- ▶ 노스게이트(Northgate)에서 경전철로 연결하는 I-5에 대해 보행자 및 자전거용 교량을 위한 자금 지원
- ▶ 보행자 및 자전거의 경전철역 연결부 구축

그림 3-8

Sound Transit  
(시애틀 시 전철  
시스템)의 미래  
계획



자료 : Sound Transit Future Service

- 더욱 편리해지는 보행과 자전거 이용
  - ▶ 100블록에 달하는 신규 보도를 구축함으로써, 시의 주요 대중교통 경로 중에서 보도가 단절된 부분의 50%를 매음

- ▶ 보도가 없는 주택가 도로를 보행하기에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해 지도록 조성
  - ▶ 시 전역에 1500개의 신규 자전거 보관소 설치
- 활기찬 도시(9년 동안 1억5백만 달러) : 경제 및 사회적 활동으로 활기가 넘치도록 도로와 보도에 투자를 확대함.
- 화물 및 배달 차량을 위한 이동성 개선
    - ▶ 지역 자금을 지원하여 랜더 스트리트 고가도로(Lander Street Overpass) 설계 및 건설
    - ▶ 시애틀의 중량물 운송망의 주요 경로인 이스트 마지널 웨이(East Marginal Way) 수송 경로 구축
    - ▶ 지역 우선 프로젝트에 투자
    - ▶ 20-35개의 지역 우선 프로젝트를 완수하여, 그들 지역에서의 안전, 이동성, 접근성 및 삶의 질 개선
  - 도심의 숲을 가꾸고 범람하기 쉬운 지역에 배수 시설을 확충
    - ▶ 질병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나무를 한 그루 뽑을 때마다 2그루를 새로 심음
    - ▶ 신규 가로수 관리 직원 총원. 가지치기가 필요한 곳에 신속 대응하고(예: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중교통 정류장에서의 정돈 작업) 신호등과 표지판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작업에 중점을 둠
    - ▶ 시애틀 공공사업부(Seattle Public Utilities) 와 협력하여 도로를 포장하고 새로운 보행자용 인프라와 횡단보도를 제공하며, 범람하기 쉬운 사우스 파크(South Park) 및 브로드뷰(Broadview) 지역에서의 배수 시설 문제 처리
- 재원조달 방안
- 기존의 교통 부담금을 대신하여 기존보다 약 2배 인상하는 Move Seattle (Transportation Levy to Move Seattle) 교통 부담금 신규 조성
  - 제안된 부담금 징수는 9년간 지속될 것이며, 연간 9천5백만 달러로 총 약 9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
  - 부담금은 재산세를 통해 납부되며, 시애틀의 중위 가격(\$450,000) 주택 소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유주들은 연간 약 \$275의 추가 부담(세율 약 0.06%)<sup>51)</sup>

#### 4) 워싱턴 D.C. 퍼플 라인(Purple Line) 프로젝트

- Purple Line은 워싱턴 D.C의 북부 외곽을 순환하는 16mile(25.7km) 길이의 경전철 노선이며, 워싱턴 D.C의 중심부로 들어가는(종축) 4개 메트로 노선을 동-서 축으로 연결함.
  - 건설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운영은 2022년 봄부터 시작될 것으로 계획됨.
  - 예상수요는 완공이후 2030년까지 64,500명/일, 2030년 이후 2040년까지 74,000명/일로 추정됨.
  -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하절기에는 7.5분에 1대가 운영되고, 적은 동절기에는 10~11분에 1대가 운영될 계획임.
  - 워싱턴 D.C의 북부 구간을 횡축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내 중심부로 들어가는 구간의 교통(도로)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자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사업비는 약 20억불이 소요될 예정임.
  - 지분투자 회사는 Meridiam Infrastructure Purples(70%), Fluor Enterprises, Inc.(15%), Star America Purple Line, LLC (15%) 임.
  - 건설은 Fluor Enterprises, Inc.(50%), Lane Construction Corporation(30%), Traylor Bros, Inc.(30%)를 담당함.
- P3 계약방식은 AP(Availability Payment)이므로 수요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이며, 계약기간은 총 36년(건설 6년+운영 30년)임.
  -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제안으로 약 1억불 가량의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건설비용 및 기간초과 위험을 민간에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됨.
  - 특히, 운영 및 수선·유지경비를 포함하여 미래 소요될 정부의 비용을 확정

51) 기존 교통부담금은 Bridging the Gap이며 명명되었으며, 마찬가지로 9년간 3억6천5백만 달러의 교통 부담금을 조성함. 2015년 말에 종료됨. 당시 시애틀의 중간 가격 주택 소유주들에게 연간 약 \$1300이 부과됨(세율 약 0.03%).

지을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의 용이성이 확보될 수 있음.

- 민간투자자가 건설과 운영을 모두 담당하므로 전체 투자기간에 대한 운영과 비용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시설물의 품질과 운영을 시공자가 30년간 보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음.
- 시설물의 운영이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 조항에 따라 정부가 지급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수준을 높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5) 애틀랜타 벨트라인(Atlanta BeltLine) 사업

- 애틀랜타 벨트라인 사업은 애틀랜타 중심 지역의 외곽을 둘러싼 22마일(약 35km)의 오래된 도시철도 선로와 다용도 전차, 현대식 노면전차 등을 활용해 인근 45개 지역 간 교통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역 주변을 중심으로 공원, 주택, 공공 예술·문화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애틀랜타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개발사업임.
- 동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1999년 건축학 및 도시계획학을 전공하던 학생 Ryan Gravel이 처음 자신의 논문에서 제시하였는데, 이후 동 아이디어가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2005년에 시 정부에서 「Atlanta BeltLine Redevelopment Plan」이 수립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합작회사 Atlanta BeltLine Partnership이 처음 설립됨으로써 2006년부터 본격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
- 특히 「Atlanta BeltLine Redevelopment Plan」의 수립과 더불어 2005년 11월에 제정된 「The City of Atlanta Ordinance 05-0-1733」으로 애틀랜타 개발청(Atlanta Development Authority)가 사업추진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사업지구를 조세채권의 발행이 가능한 조세할당지구(Tax Allocation District)사업을 주도하는 한편,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2013년 7월 기준 총 2,400백만 달러) 등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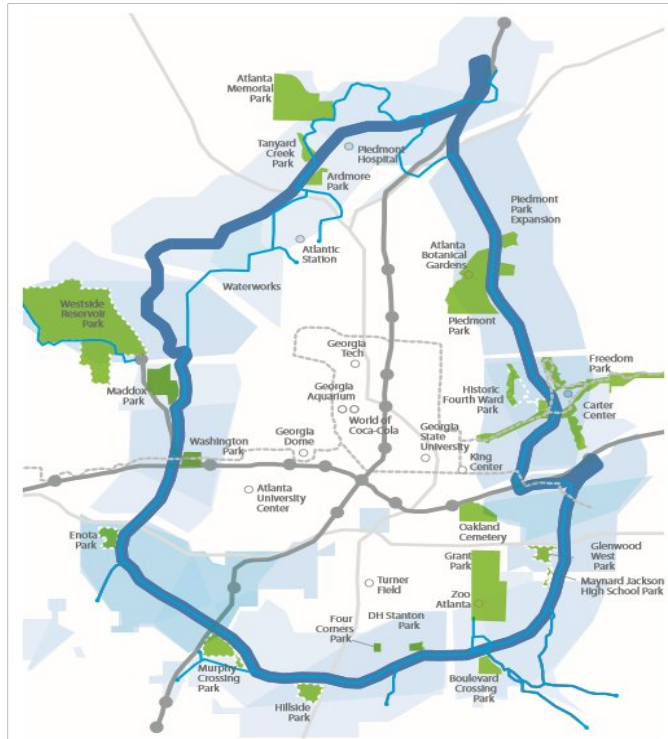
##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그림 3-9

#### 벨트라인 프로젝트



자료 : 온라인 검색결과

- 동 사업은 현재에도 진행 중인 미국 내 가장 큰 종합 도시개발(재생)사업이며, 최종 완료연도는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미 2016년도까지 지역 내에서 총 7,200개의 정규일자리와 26,600개의 건설 일자리, 37억불의 외부 민간 투자자본 유입 등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나타내고 있음.<sup>52)</sup>
  - 향후 동 사업이 완료될 경우 역 내에서 3만개 이상의 정규 일자리와 최대 20억불의 투자유입, 5,600채의 안락한 주택건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6) 캘리포니아 주

#### ① 실리콘밸리 : 적시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성장 위협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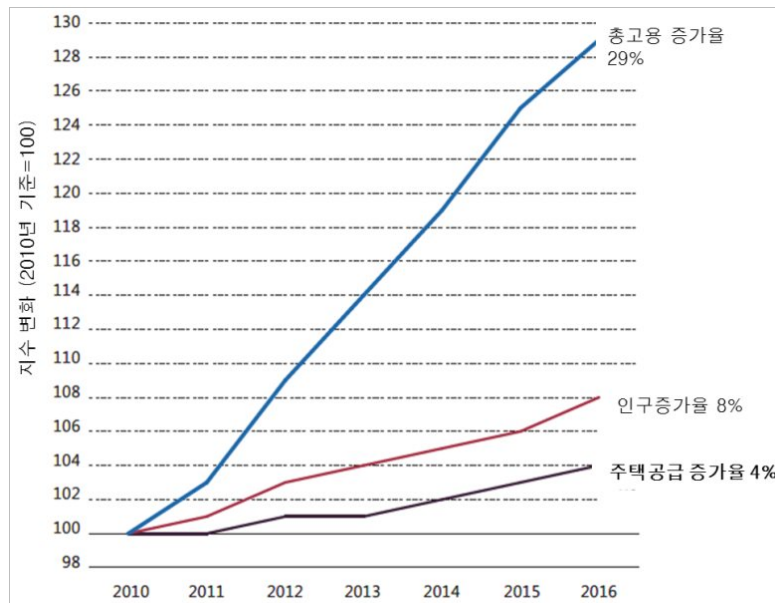
- 미국 실리콘밸리는 일자리 창출의 선두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비용 상승 및 교통난 발생으로 인해 ‘실리콘밸리 엑소더스’ 발생 우려가 제기됨.
  - 실리콘밸리는 벤처캐피탈 투자의 용이함, 우수 대학의 집적 및 광범위한 인재풀, 혁신기업가 정신의 결합으로 여타의 지역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

52) Atlanta BeltLine, Inc.(2017) 「Annual Report 2016」 내용 참고



는 지역임.

- 그러나 실리콘밸리 내 일자리 증가분에 비해 주택공급 증가가 저조하고 주택비용 또한 상승하여 실리콘밸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음.
- 2010~2016년 기간 실리콘 밸리 내 고용 증가 및 인구 증가는 각각 29%, 8%를 기록하였으나 동 기간 주택 공급 증가는 4%에 불과
- 특히 주택 가격과 임대료를 합한 실리콘밸리 내 중위 2017년 한 해에만 10%가 올랐으며, 시애틀(9%), 텍사스 오스틴(6%), 뉴욕(5%), 보스턴(4%) 및 남부 캘리포니아 (3%)등과 비교해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
- 2010~2014년 사이 고용증가율과 주택공급 증가율 격차는 17%포인트에 불과하였으나 2010~2016년 사이 격차는 25%포인트로 확대되었으며 인구 증가율과 주택증가율 격차는 같은 기간 3%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확대
- 한편, 2010~2016년 내 실리콘밸리의 평균 통근시간은 18.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통근 시간에 매일 72분이 소요(뉴욕시 근로자 평균 통근시간은 74분)



자료 : Silicon Valley Leadership Group(2018), Silicon Valley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Project

- 이로 인해 실리콘밸리 거주자 2천548명이 2016년, 캘리포니아의 다른 지역이나 다른 주로 이주했고 새로 유입된 인구는 2천506명에 불과하여 순

그림 3-10

실리콘밸리 내  
고용, 인구 및  
주택공급 증가율

##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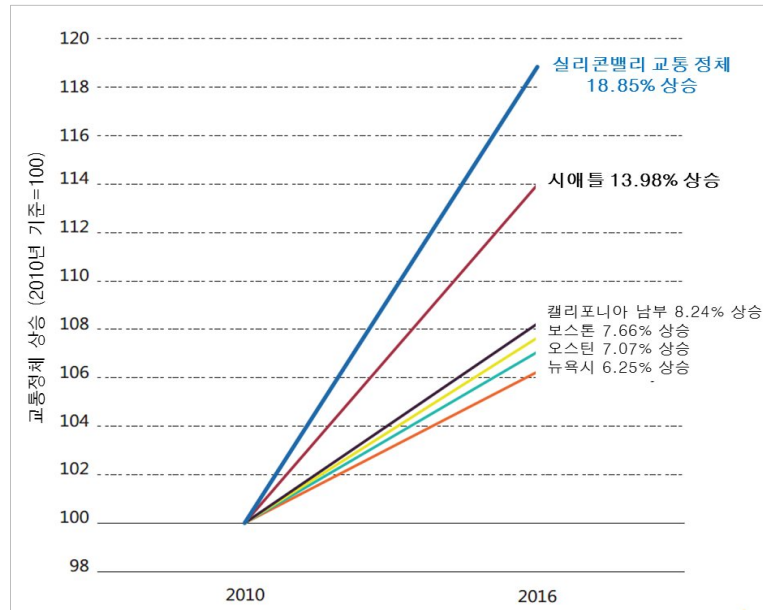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그림 3-11

실리콘밸리 교통  
정책 상승분

감소를 기록<sup>53)</sup>



자료 : Silicon Valley Leadership Group(2018), Silicon Valley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Project

#### ② LA의 인프라 확장을 위한 재원조달 사례

- 캘리포니아 남부의 로스엔젤레스(이하, 'LA')에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심각한 교통 체증을 겪고 있으며, 연간 교통체증으로 인해 소비되는 시간이 1인당 약 8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LA 카운티의 인구는 현재 1천 20만 명 규모에서 향후 40년간 23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체증 및 공기 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 교통 체증 완화와 공기 오염 저감을 위한 고속도로 정비 및 확대, 대중교통망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검토됨.
- 2016년 11월, 미국 LA 카운티는 교통인프라 확장 예산 확보를 위한 소비세 증세 주민투표 결과, 71.15%의 찬성으로 새로운 증세제도 'Measure M' 통과를 발표함.

53) 미국 인구 통계국(US Census Bureau).

- 이에 따라 도입된 증세 규모는 소비세 1달러 당 0.5센트, 비율로는 0.5% 인상에 해당되며, LA카운티는 연간 8억 6,000만 달러(약 9,6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됨.
- ‘Measure M<sup>54)</sup>’은 표면적으로는 교통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하철,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건설 및 운영을 포함하는 장기교통정비계획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그림 3-12

LA의 향후  
40년간 지하철 및  
고속도로 건설과  
투자 계획



주 : 실선은 운영노선, 점선은 건설 예정인 노선을 나타냄.

- LA 카운티에서 수립한 장기교통정비계획 및 ‘Measure M’ 투자계획에 따르면 지하철 건설이 35%로 가장 크고,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이 20%, 고속도로 건설에 17%를 투자하고, 16%는 지역개발에 투자할 예정임.
- ‘Measure M’은 앞으로 40년간 고속도로 정비 및 확장 건설사업 18개, 지하철 연장 및 신규 역사 건설사업 19개 등 37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임.
- LA 카운티의 대중교통 기획, 건설, 운영 주체인 LA County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LACMTA)가 동 사업의 총괄 집행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소비세 인상안의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정부기관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인프라 정비 측면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대기오염 저감 등) 확보를 강조하고 홍보하였으며,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함.
- ‘Measure M’ 정책은 교통체증 완화 및 교통흐름 개선, 대중교통 접근성

54) 향후 40년간의 지하철 노선과 고속도로 확장 계획을 담고 있음.

##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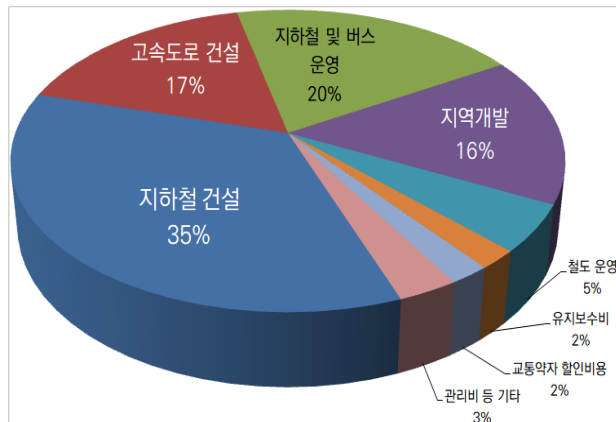
##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향상 및 편의성 개선, 도로 포장 정비, 일자리 창출, 오염 저감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는 점이 71.15%라는 높은 주민 찬성을 얻어낸 것으로 평가함.
- 참고로 본 정비계획을 통해 향후 40년간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에 46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793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그림 3-13

‘Measure M’  
투자계획



자료 : <http://theplan.metro.net/#measurem>.

## (2) 프랑스

### 1) 마세나(Zac Massena) 재개발 사업

- 파리시는 파리 내부와 외곽의 개발 불균형이 심함.
  - 파리시는 서울의 두 개구 정도의 크기(105km<sup>2</sup>)에 200만명 정도가 살고 있는 도시임.
  - 파리시의 경계는 외곽순환도로에 의해 파리 내부와 외부가 분리되어 있으며, 외곽순환도로 내외부의 불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음.
  - 약 15년전 계획된 ‘그랑파리 계획’의 경우 파리시 인근 외곽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세워진 계획이나, 최근 들어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파리 시내 교통 체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나 건축물 보존과 관련한 법이 매우 강하여 도로 확장은 힘든 상황임.
  - 파리 시내 차량의 평균속도는 약 14km/h정도로 서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임.
  - 특히 에펠탑이 위치한 7지구와 개선문이 위치한 8지구는 파리의 중심부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건축물들로 인해 도로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파리는 인프라 확충보다는 주차요금 인상, 자전거 사용 독려 등 차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음.
  - 지하철 노선은 매우 잘 되어 있으나 노후화 정도가 매우 심각함.
- 마세나 재개발 지역(Zac<sup>55)</sup> Massena)는 파리시 남동쪽에 위치한 13지구에 최근에 완성된 재개발 지역임.
  - 마세나 재개발 지역은 약 200년 된 철도 역사 주변을 재개발한 사례로, 기존 철로 및 지원시설 위에 슬라브를 만들어 상판에 새로운 땅을 만들고 개발한 사업임.
  - 파리는 오랜 개발로 인해 큰 규모의 새로운 부지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도시임.
  - 마세나 재개발 지역의 북쪽은 Christian de Portzamparc에 의해 마스터 플랜이 계획되고 완공되었으며, 남쪽 지역은 Yves Lion에 의해 계획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 완공된 북쪽 지역은 대학,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상업시설과 주거지역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
  - 예술의 도시로 알려진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의 경우 설계 미적 기준이 매우 높아 모든 건물들이 개성이 있음. 또한, 파리 시민들은 고층건물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 건물들의 층수가 20층을 넘어가는 경우가 드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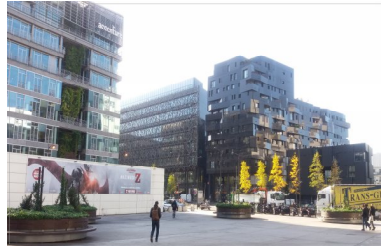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55) Zac은 불어로 재개발 지역을 뜻함.

##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그림 3-14  
마세나 남부  
재개발 지역



- 마세나 북부 재개발지역은 파리시가 15년 전에 낸 공모전을 통해 계획된 재개발지역임.<sup>56)</sup>
  - 기존 파리시는 이 지역을 녹지화하려는 공모전을 냈으나, Yves Lion은 파리 외곽순환도로 하부를 연결하는 제안을 해서 당선되었음.
  - 외곽순환도로 내부에는 약 200만명이 거주하나, 순환도로 인근지역을 합치면 약 1,200만명이 거주함. 하지만 외곽순환도로를 기준으로 내외부 지역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음.
  - 파리시는 Yves Lion의 제안이 있기 전 파리시 외부를 내부로 끌어드리려는 노력이 없었음.
- 파리시는 전통적으로 보수당이, 그리고 외곽지역은 사회주의당이 집권하여 의견수렴에 난항을 겪었음.
  - 15년 전에 공모전에 당선되었으나, 두 지역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사업의 중요성을 서로 인식하고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프랑스 시민들은 대부분 고층 빌딩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이 개발지역에는 몇 개의 고층빌딩을 계획하고 있음.
  - Yves Lion 외곽순환도로 하부에 길을 내고 상권을 만들고 순환도로 외부에 고층빌딩을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외곽순환도로는 파리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로 도로를 막을 수 없는 환경이었음.
  - 이에 파리시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 임시용 도로를 설치하고 하부작업을 진행하였음.

56) 마세나 북부 재개발지역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자료는 진행 중인 사업으로 파리시의 승인이 있어야 공유될 수 있음. 파리시와 연락 후 자료 공유 가능여부를 알려주기로 함.

- 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외곽순환도로 부지가 완성되고 투자자들이 부지를 매입하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예측하고 있음.
- 현재까지 캐나다의 여러 투자자들로 구성된 단체와 파리시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부지조성과 주변 인프라가 완성되면 소규모 부지단위의 공모전이 이루어질 계획임.
- 이 사업은 그랑프랑 계획의 큰 목적과 일관성을 가지며 파리 내·외곽 지역의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정부의 강한 의지와 참여하는 주체(개발업자 등)간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함.

## 2) Zac Clichy-Batignolles 재개발 사업

- Zac Clichy-Batignolles은 파리시 17구의 철도역사 주변을 재개발하고 있는 사업임.
- 13구역에 기 개발된 Massena 재개발 지역과 유사하게 철도역사 주변에 슬라브를 덮어 개발업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임.
- 이 지역의 경우 철도를 중심으로 두 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행자 전용 다리를 설치하는 등 연계성을 중요시하고 있음.
- 이 개발지역은 중앙 공원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기 완공된 파리 중앙법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오피스 시설이 공사 중에 있음.
- 현재 파리에서 가장 비싼 지역으로 알려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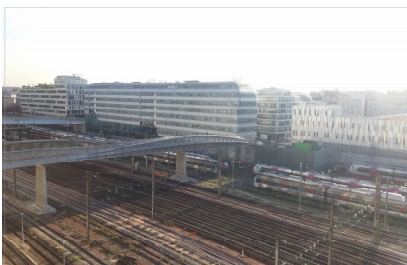


그림 3-15

Zac Clichy -  
Batignolles  
재개발 지역

##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파리의 경우 주택매매에 있어 매매가의 약 10%가 수수료로 소요되어 부동산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매매가 활발하지 않음.

- 파리시내의 부동산 매매가는 매우 비쌌 뿐만 아니라 높은 수수료 문제로 인해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매우 낮음.

- 프랑스는 감리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건축가가 해당 공사과정을 감독하고 준공 후 10년까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 설계를 담당한 설계사무소는 현장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어, 설계도서와 시공과정을 점검함.

- 준공 후 10년 책임이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보험제도(Inherent Defects Insurance 등)가 발달되어 있음.

- 설계비의 약 10%가 보험비로 지급되며, 하자와 관련한 법적 소송 또한 빈번함.

- 프랑스의 경우 기부체납은 존재하지 않음.

- 국내와 달리 프랑스 건물 외부가 보도와 인접하여 있으며, 대부분의 녹지 공간은 내부에 중정 형태로 만들어짐.

- 이로 인해 외부형태는 단순하게 보일 수 있으나 내부에는 휴식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적 체험을 가능케 함.

- 프랑스 설계사무소에서는 대부분 CAD 대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진행함.

- 국내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 공공사업에 BIM사용 의무조항은 없으나 업계의 필요에 의해 BIM이 활용되고 있음.

- BIM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하지만 3D 모델 납품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어 납품은 2D로 이루어짐.

- 발주자가 BIM 모델을 요구할 시 설계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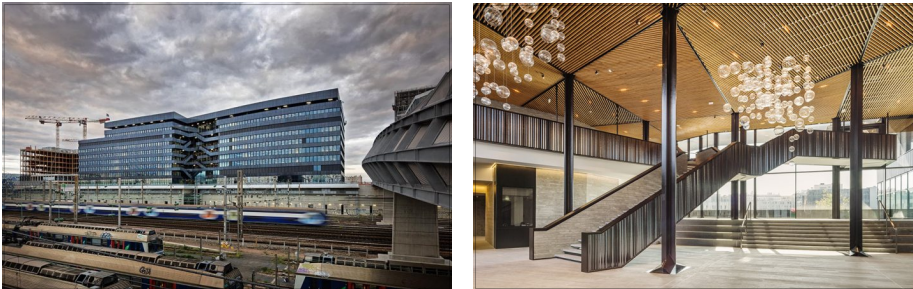
- 즉, 프랑스의 BIM을 활용한 설계는 강제가 아닌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와의 차이가 있음.

- 비록 설계사무소에서 CAD대신 BIM을 사용하고 있으나, MEP와 같은 협력업체의 수준은 아직 2D를 주로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국내 설계업계에 BIM사용 활성화를 위해 프랑스 사례를 보다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BAT는 Zac Clichy-Batignolles내 Chartier-Dalix에서 설계한 준공을 앞둔 오피스 건물임.
- Zac Clichy-Batignolles에서는 모든 오피스 건물에 에어컨 설치를 금하고 있는 특별한 조건이 있음.
- 이에 건축가들은 식물과 환기를 이용하여 에어컨 없이 항상 26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설계를 하였음.
- 또한 모든 오피스 건물은 태양열을 이용하여 일정량의 에너지를 생산하여 야 하며, 빗물처리에 대한 특수조항도 있음.
- 이러한 조건들은 파리 모든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Zac Clichy-Batignolles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임.



자료: Chartier-Dalix 홈페이지(<http://chartier-dalix.com>)

그림 3-16

BAT

### 3) 그랑모토 재개발

- 프랑스 남부지방 그랑모토는 ‘가치없는 땅’으로 인식되었으나, 관광도시로 개발됨.
- 1960년대 자국민이 대부분 스페인에서 휴가를 보내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드골 정부는 지역균형개발 계획을 세워 당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프랑스 남부지역을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 이후 5,200ha(약 1,560만 평)에 이르는 ‘랑독·루시옹’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상지역 6개 중에서 첫 번째로 그랑모토 개발에 착수하여 프랑스 남부지방 그랑모토에서부터 스페인 국경지역에 이르는 180km 해안 지역을 개발
- 1963년 개발 계획 공개 후 여론으로부터 거센 비난에 직면하였으나, 프랑스 정부는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조지 폼피두 수상이 직접

##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피에르 라신(Pierre Racine)을 책임자로 임명하고 건축가 장 발라드가 건축공사의 책임을 맡아 통일성과 독창성을 발휘하여 개발을 진척
- 1974년 랑독·루시옹지역에서 처음 그랑모트라는 관광도시를 선보임.
- 프로젝트 시행 결과 연간 1천만 명의 관광객과 49억 유로(약 6조 원, 2007년 기준)의 관광수입을 창출하는 관광벨트지역으로 변화에 성공함.
-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그랑모도로의 용이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도로망과 항구·국제공항·몽펠리에 철도역을 건설
- 1960년까지만 해도 ‘늪지대이고 모기가 많아 가치 없는 땅’으로 인식되었던 지역을 녹지를 확보한 쾌적한 도시(도심 내 녹지공간 비율 20% 차지)로 조성
- 정주여건을 갖추어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를 개발함으로써 비수기 기간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 (2004년 기준, 그랑모트 거주 인구는 8,500여 명에 이름)
- 그랑모도 개발은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에 기반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역 접근성을 향상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프랑스는 국토개발특별법을 제정해 도시개발을 전폭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막대한 지원을 단행
- 자국민의 관광 수요 흡수 및 북유럽 관광객까지 유인에 성공

그림 3-17

개발 완료 후  
그랑모도 휴양지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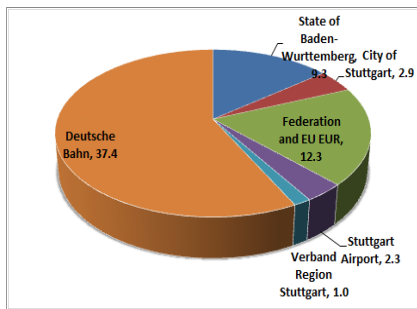
자료 : 정영수(2010), 지역 개발 사례와 경험

### (3) 독일

#### 1) 슈투트가르트-울름(Stuttgart-ULM) 철도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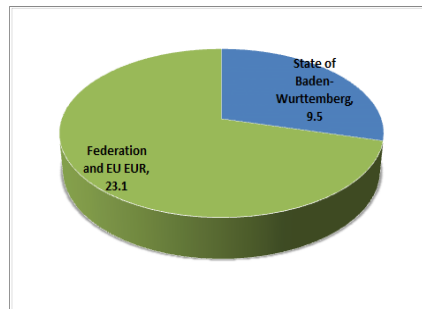
- 슈투트가르트-울름(Stuttgart-ULM) 철도 프로젝트는 크게 슈투트가르트 21(Stuttgart 21)과 벤들링엔-울름(Wendlingen-ULM) 구간의 선로 사업으로 구성된 독일 남서부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와 슈투트가르트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임.
- 슈투트가르트 21은 총 57km의 철로를 신설 및 개량하는 프로젝트임. 총 철로 구간 중 20km는 고속철도로 건설되며, 18개의 교량과 16개의 터널이 신설됨.
- 벤들링엔-울름 구간 사업은 31km의 고속철로를 포함한 총 60km 철도공사 사업임. 이 사업에는 37개의 교량과 9개의 터널이 신설됨.
- 슈투트가르트 21의 총 사업비는 약 65.3억 유로이며, Wendlingen-ULM 구간은 32.6억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로 두 사업 모두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임.

(단위: 억 유로)



<Stuttgart 21, 총 65.3억 유로>

자료 : <http://www.bahnprojekt-stuttgart-ulm.de/>



<Wendlingen-ULM, 총 32.6억 유로>

- 슈투트가르트 21은 기존 도심지에 위치한 지상 철로를 지하화 함으로써 기존 철로 부지에서 재개발 부지를 확보함.
- 철로 지하화를 통해 슈투트가르트 중심지에 약 100헥타르의 재개발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의 약 20%를 공원화하는 계획을 하고 있음.

그림 3-18

독일 철도  
프로젝트 사업별  
예산 조달 현황

##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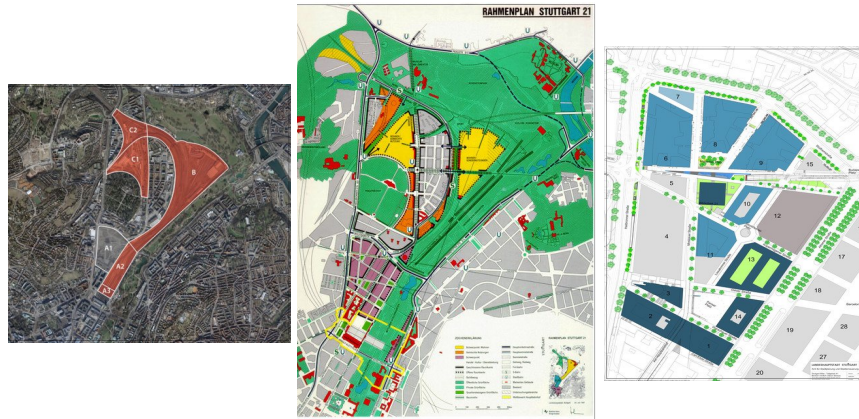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부지의 약 80%는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은 공공에서, 그리고 상업·오피스·주거지역은 민간 개발업자가 개발 중에 있음.

- 도심지 개발 부지는 크게 6개 구역으로 구분되며, 현재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임.
- 개발사업의 전체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Rahmenplan Stuttgart 21’은 1997년 수립되었으며, 인프라, 각 구역의 용도 및 녹지공간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Europa District’으로 명칭 되는 A1지역은 중앙역 부근에 위치하는 재개발 사업의 중심부에 해당하며, 완공된 슈투트가르트 시립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그림 3-19

Stuttgart 21  
도심지 개발 계획



<재개발 부지>

<기본계획>

<A1 지역개발계획>

자료 : <http://www.bahnprojekt-stuttgart-uhl.de/>

- 슈투트가르트-울름 철도 프로젝트는 최고 250km/h의 고속기차를 운행하여 인근 주민의 이동성을 제고하며, 일자리 창출 등에 큰 효과가 있음.
- 슈투트가르트 중앙역과 공항 구간 이동시간이 기존 27분에서 8분으로 단축되는 등 이동성이 향상됨.
-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는 약 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함.
- 고속기차 운행으로 인해 약 1,800만 명의 이동수단이 자동차에서 기차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간 약 70,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

감할 수 있음.

- 슈투트가르트 21의 도심지 개발 사업은 대지가 부족한 복잡한 도심지에 기존 인프라의 재배치를 통해 대규모 공간을 시민들에게 환원해줄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음.

#### (4) 영국

##### 1) 도크랜드(Dockland) 개발 사례

- 도크랜드는 런던 도심의 동쪽 템즈 강가와 워터프론트 일대로, 대영제국 시대부터 20세기 초까지 세계 제일의 항구였으나, 20세기 중반 이후 쇠퇴가 지속됨.
  - 20세기 이후 대형 선박과 컨테이너 산업의 발달로 인해 얕은 수심을 가진 도크랜드 항구는 경쟁력을 상실
  - 이후 시설 노후, 수송형태의 변화,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도크랜드는 점점 쇠퇴하여 1981년에는 부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그후 10년간 일자리가 15만 개 감소하여 지역 실업률이 15%에 육박
  - 인구 감소 이후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또한 낙후화
- 영국 정부는 고용 창출을 위해 1976년 이후 도크랜드 재개발 계획을 추진함.
  - 당시 실업문제 해결이 사회의 가장 큰 이슈였으며, 도크랜드 건설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쇠퇴한 지역 경제 활성화 요구도 컸음.
  - 낙후된 도크랜드 지역 개발과 관련해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 기구인 LDDC (London Docklands Development Corporation)가 「중심시가지 재개발법」(1978년 제정)에 근거해 1981년도에 설립
  - 조달된 자원 규모는 총 126억 파운드으로, 공공분야에서 39억 파운드, 민간분야에서 87억 파운드 조성되었으며, 공공분야의 자원은 LDDC 48%, London Transport 25%, the Isle of Dogs Enterprise Zone 27%로 구성
  - 총면적 약 2200ha(665만 평), 시설면적 230ha(70만 평)의 도크랜드 지역을 5개 지구로 조성하였으며, 주요 인프라 중심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대규모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표 3-12

도크랜드

각 지구별 특징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여 1988년 3월까지 민간투자 44억 파운드 유도

지구	특징
카나리워프 (Canary Wharf)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층 규모 금융센터 빌딩 및 92.9만㎡ 규모의 업무 시설, 400실 규모의 호텔과 상가, 레스토랑, 주점, 기타 위락 시설이 입주</li> </ul>
아일오브 도크(Isle of Do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만2500석 규모의 대규모 실내 스포츠 센터인 London Arena와 해양레포츠 센터 등이 입주</li> </ul>
로얄 도크 (Royal Do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런던시티공항, 3000세대 이상의 주택 등을 건설하여 21세기 형 신 도시를 조성</li> <li>8만4000㎡ 규모의 쇼핑센터 및 요트장, 23만2064㎡ 규모의 과학 및 상업 단지, 2만3000석 규모의 다목적 실내 스타디움, 2만㎡ 규모의 전시관, 500실 규모 호텔 등이 입주</li> </ul>
워핑 (Wapp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세기에 건립된 창고를 이용한 대규모 복합 쇼핑·레스토랑 센터를 입주시켜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li> </ul>
설리 도크 (Surrey Doc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빅토리아 왕조 시대의 창고를 개축해 주택 3500가구를 건설</li> <li>2만 명의 상주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런던 브리지 시티' 오피스가와 쇼핑센터 등을 조성하여 상업·주거시설을 일체화한 형태로 개발</li> </ul>

- 1,400여 개의 국내외 기업이 신규 진입하여 일자리의 숫자도 1981년 2만 7,200명에서 1998년까지 7만여 명으로 증가함.
- 런던 도크랜드 개발 사례는 지속적인 쇠퇴 경험 이후 정부의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성장경로가 급격히 바뀌어, 누구나 거주하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집단재개발을 통해 주거·업무·상업기능을 이상적으로 결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출해내는 것은 물론 도시생산성 극대화에 성공한 사례로 개발의 함의가 큼.

그림 3-20

개발 전후의 워핑  
지구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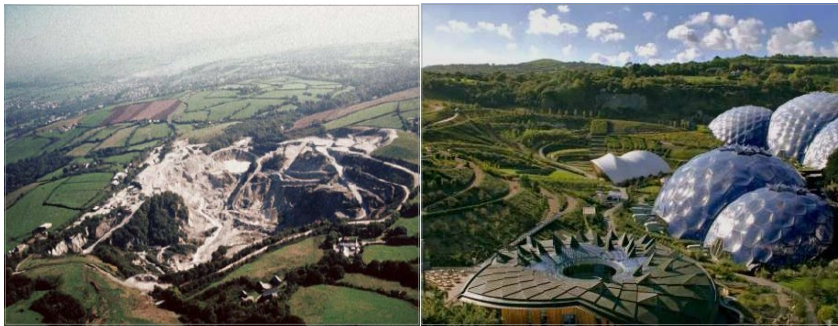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http://innocity.molit.go.kr>)



## 2) 세인트오스텔시 사례

- 세인트오스텔시는 영국 남서쪽 콘월반도의 끝 부근(런던에서 열차로 5시간 거리)에 위치한 舊 탄광도시로, 19세기를 거치면서 탄광산업의 몰락과 더불어 영국 내 주민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빈곤지역으로 전락함.
  - 영국에서 가장 따뜻한 도시이고, 여러 가지 역사적 유물이 많으며, 해안에 가깝다는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탄광 폐기물의 처리 곤란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경험
- 1987년에 세인트오스텔시로 이사한 성공한 사업가 팀 스미트가 1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된 ‘Heligan 공원’(18세기 건축)을 복원, 1992년에 일반에 공개하면서 동 공원이 관광명소로 떠오르기 시작함.
- 이에 고무된 Tim Smit는 지역 건축가인 조나단 볼과 함께 1994년부터 세인트오스텔시 내 버려진 고령토 폐광을 온실식물원으로 바꾸는 사업(일명 ‘에덴 프로젝트’)을 구상, 1998년부터 영국 복권기금과 남서부 지역개발공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했으며 2001년에 처음으로 식물원을 개관함(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투자 금액은 한화로 약 2천 7백억원).



자료 : 온라인 검색 결과

- 동 프로젝트로 인해 2013년까지 전 세계에서 1,6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동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지역 안에서 창출되었으며, 획기적인 환경 개선 또한 이루어짐.

그림 3-21

영국  
세인트오스텔시의  
에덴 프로젝트

##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동 사례는 지역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이 가진 위치 그리고 역사적 장점과 결합되어 지역의 성장경로를 바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5) 아일랜드 더블린

- 아일랜드는 1980년대 이전까지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취업 이민을 택하는 국민이 다수를 이룸.
  -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고금리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
  - 1980~90년대 대학 졸업 이후에도 자국에서 직업을 갖지 못해 아일랜드인은 해외로 이민을 선택
- 이에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개발청(IDA)을 설립하여 전략산업을 육성하였으며, 특히 IT 인프라를 확충하고 클러스터를 구축하였음.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일랜드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기업 활동에 근간이 되는 인프라 확충 시 차별화된 전략적 접근을 시행
  - 아일랜드가 취약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아일랜드 정부는 IT 관련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해 핵심적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 전략을 수립
- 특히 아일랜드 정부는 디지털 허브(Digital Hub) 구축 전략 수립과 성공을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또한 쉽게 극복함.
  - 아일랜드 정부는 1990년대 후반 약 33억 유로를 투자하여 당시 유럽에서 가장 빠르고 값싼 통신망이라 평가되는 'feature rich'를 구축하였으며, 디지털 허브 개발청(Digital Hub Development Agency, 연간 약 65억 원 운영비 소요)을 2003년 설립하여 디지털 허브 개발에 박차를 가함.
  - 디지털 허브 내 입주 업체는 유럽 최고 통신 인프라인 MAN(Metropolitan Area Network) 연결 광섬유망 및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통신 음성 및 광역 데이터 활용이 가능
  - 이에 미국 Microsoft, Oracle, Google, Facebook社, 독일 SAP社 등 등 다수 글로벌 기업이 아일랜드 디지털 허브 내에 몰려들었으며,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40%,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의 60%를 생산

- 1990년대 말 소프트웨어 산업 고용자 수와 수출액 모두 1990년대 초 대비 3배 이상 증가 (고용자 수 및 수출액: '91년 7,793명/2,044백만 유로, '99년 24,891명, 6,520백만 유로)<sup>57)</sup>
- 또한, 일자리를 찾아 해외 이민을 택한 아일랜드인이 모국의 경제성장 이후 역이민 하는 사례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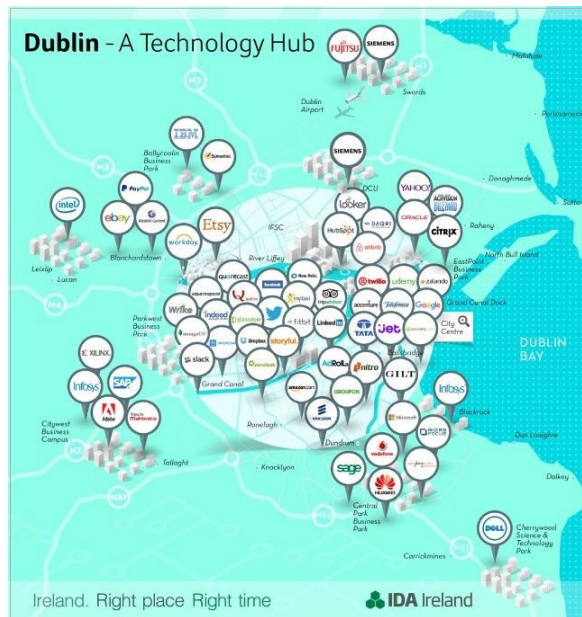


그림 3-22  
더블린 디지털  
허브 내 집적한  
유수 글로벌 기업

자료 : 아일랜드 개발청(<https://www.idaireland.com/>)

- 더블린의 디지털 허브 구축 사례는 지역에 적합한 인프라 투자 전략 수립과 확대를 통해 해당 지역에 기업 집적을 유도하고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6) 벨기에

- 벨기에의 도시 재생은 지방 정부 주도로 추진하며 다양한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지역개발 계획을 통해 도시 재생의 방향과 목적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계획

57)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2

을 더하여 여러 조직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

- 특히, 도시의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재생도 함께 포함하여 도시재생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1) 브뤼셀 도시정책 및 프로그램<sup>58)</sup>

#### ① 지역개발계획(The Regional Development Plan(PRD))

- 브뤼셀 지방정부는 1992년부터 지역개발계획(The Regional Development Plan(RDP)) 수립을 시작으로, 1995년 제도화를 이끌어 냄.
  - 지역개발계획(PRD)은 5년 단위로 수립되며, 도시 계획과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통계획까지 포괄하는 상위개념의 개발계획임.
  - 도시 외곽화, 실업률, 교육시설 부족, 소득 불균형, 지역 계층화 등 브뤼셀 지역의 실질적인 지역 문제들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인구 구성원들의 안정화와 경제 성장을 통한 도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임.
  - 재정기반은 세금 수입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택 공급과 공공 공간의 개선, 사회 보장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외곽으로 떠나지 않고 브뤼셀 도심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주택 개발 및 재생 관련 투자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을 주택 개발 및 재생강화지구(Reinforced Housing and Renovation Development Area, EDRLR)로 별도 지정하여 추가 지원함.
  -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EDRLR 지역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간 사회경제적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함.
- 주택개발 및 재생강화지구(The Reinforced Housing and Renovation Development Area, EDRLR)
  - ‘주택개발 및 재생강화지구(EDRLR)’는 지역 재생을 위해 계획적으로 선택된 지역으로 지구는 거주지로 등록된 주택 블록을 기준으로 지정(산업부지, 도로 등 거주지가 아닌 곳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브뤼셀의 경우 도심

58) 김준우(2015), 벨기에 브뤼셀 도시재생정책, 한국도시설계학회 Urban Review 및 Brussels-Capital Region, Regional Secretariat for Urban Development(2007), Brussels is changing : 10 years of urban policy in the Brussels-Capital Region, Brussels-Capital Region 등을 참고하여 작성

지역 13개 구 안에 거주 환경이 가장 좋지 않은 주택블록을 EDRLR로 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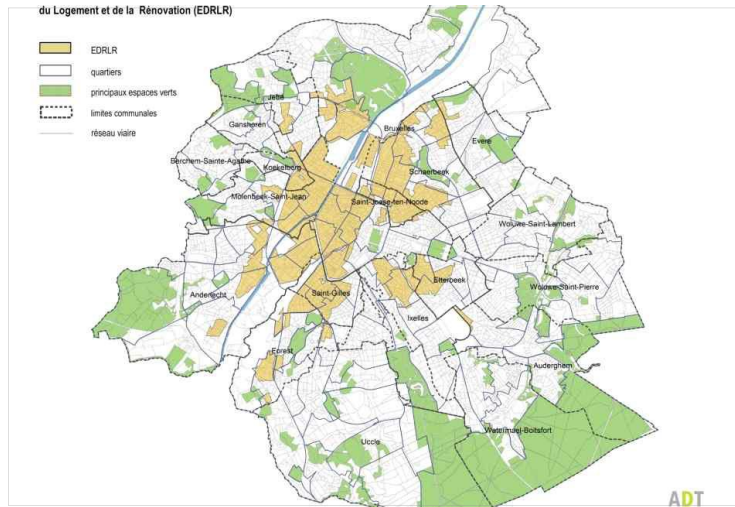


그림 3-23

브뤼셀 주택개발  
및 재생강화지구  
(EDRLR) 현황도

- 2002년 기준으로 EDRLR 지역은 약 33.4만명 인구로 브뤼셀 전체 인구의 34.2%에 해당하며, 브뤼셀 전체 면적에 13.8%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함.
- 해당 지역은 남부 유럽 및 터키, 모로코 이민자들의 집단 주거지로 노동 가능 계층 비율이 평균보다 높으며, 실업률 또한 높은 지역을 지정함.
- 또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 지역에 기반을 둔 공장시설이 떠나거나 문을 닫아 일자리가 적은 지역이기에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소득 수준이 낮고, 주택의 상태 또한 노후화된 지역임.
- EDRLR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 및 지자체 차원, 연방 정부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및 지자체는 주택 리노베이션과 건축입면 개선을 위해 보조금 지원 확대, 주거의 목적으로 주택 구입 시 세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주택 리노베이션 작업에 세금축소, 6년간 토지로 인한 부동산 수입을 동결하였음.
- 주택개발 및 재생강화지구(EDRLR)의 계획은 지구 협약(District Contracts)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지구 협약은 지역 재생, 경제 환경 개선, 공공 공간 및 사회 통합 증대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자체 간의 4년 단위 협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됨.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② 지구 협약(District Contracts)

- 지구 협약은 지방 정부가 주도했던 지역 개선 작업이 지역 구청의 협조 없이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작한 방식임.
- 1991년 도심에서 일어난 폭동 이후에 지방 정부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 재생을 찾고자 하였고, 지구 협약방식을 대안으로 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함.

표 3-13

브뤼셀 도시 재생  
관련 기관

기관	주요업무
지역 개발 및 주택관리청 (AATL)	지역 및 주택 개발에서 정부의 정책 실현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재정 및 개발행정, 도시 재생 사업 및 건축 보존을 담당
지역 관리 기관 (APL)	지방정부 재정을 지자체로 배분하는 역할과 공공성을 고려한 투자를 기초로 3년 단위로 진행(지역단위 조직의 관리도 병행)
브뤼셀 지방 주택협회 (SLRB)	일반적인 소득 수준으로도 거주 가능한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 SLRB는 임대 주택 촉진뿐만 아니라 SISP의 운영 지원
공공 서비스 협회 (SISP)	브뤼셀 내 39,000호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예산 범위 내 공공 서비스 지원, 임대 주택의 임대료 저리 대출 진행
주택 기금(FDL)	일반 소득수준 가구의 주택 구입 및 임대 지원. 지방 정부는 이 기금을 활용하여 주택공급을 위한 투자도 진행. 저금리의 주택 구입 모기지 및 임대 지원 방안에 따른 임대 주택 공급으로도 활용
브뤼셀 지방정부개발 협회 (SDRB)	지역 경제 성장 및 도시 재생을 위한 개발 진행. 주택 공급과 지역 상권을 위해 건물의 활용과 거래를 유도. 낙후 지역 및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주택 개발 및 관리 담당
도시기반시설 및 교통 관리청(AED)	지방정부의 도시 재생 정책을 실현 지원. 대중교통, 공공 관리, 교통, 공공 공간의 재개발, 상하수도 관리, 건축물 보존 등의 업무 담당, 대중교통 및 기반시설 건설 및 관리 보수, 자전거 도로 등의 관리를 통해 도시 재생 프로젝트 지원
브뤼셀 환경 협회(Brussels Environment-BGE)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도심 낙후 공간에 공원 조성 및 관리 등의 도시 재생의 역할 수행. 친환경 건물 제도 및 건축물 에너지 운영 담당. 에너지 보너스 제도, 환경 라이선스 제도, 토지 오염 관리 담당.
연방 교통 공공 서비스부 산하 교통 시설국(DIT/SPFMT)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도로 터널 등의 주요 기반시설 건설 담당.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약을 통해 사업 진행하며 낙후된 지구에 대한 투자 및 지구 협약(District Contracts)와 연계하여 지구 개선 사업에도 참여
사회복지센터 (CPAS)	지역 기반의 복지 지원 기능 및 도시 재생을 위해 부적합 주택의 리노베이션, 철거, 재건축 지원
사회 재산권 에이전시(AISs)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세입자 선택, 임대료 수급, 리노베이션 지원 처리 등의 운영 지원. 주택 소유자들은 AISs에 자신의 소유 재산 정보를 알려주고, AISs는 임대 관리 지원 및 정부 보조금 지원

- 규정을 통해 지역 구청이 구체적인 재생 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함.
-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지역 통합 개발 위원회(Local Integrated Development Committee(CLDI))를 만들고, 이들과 함께 주택개발 및 재생강화지구(EDRLR)별 재생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함.

## 2) 세렝(Seraing)시의 Remorban 프로젝트

- 에너지, 교통, ICT를 도시재생에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재생을 이루고자 Remorban<sup>59)</sup> 프로젝트가 유럽에서 2015년 시작됨. 세 개의 “lighthouse” 도시 및 두 개의 “follower” 도시가 지정되어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 1단계 사업인 lighthouse 도시재생은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평가하는 일종의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인follower 도시 사업은 lighthouse 모델의 경험을 복제(replication)하는 작업임.
- 이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표준화하여 많은 다른 도시들에 적용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단계 사업에 벨기에 세렝시가 포함되어 있음.

Lighthouse 도시	 Valladolid	 Nottingham	 Tepebasi
Follower 도시	 Seraing	 Makovic	

표 3-14  
Remourban  
도시재생  
프로젝트 도시

##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59) 스마트 도시 변화를 가속화 하는 도시재생 모델을 의미하는 REgeneration MOdel for accelerating the smart URBAN transformation의 약어임.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세렌시의 도시재생 마스터플랜(master plan)
  - 세렌은 산업혁명 시기 유럽 전역에 철강을 수출하던 철강 산업의 기지였음. 그러나 과거 산업이 쇠퇴하고 도시의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게 되자 경제적, 사회적 도시재생을 진행해야 할 상황에 이름.
  - 마스터플랜 대상이 되는 지역의 면적은 800헥타르 정도이며 공개 공지, 산업, 상업 및 업무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간 개발전략을 수립함. 계획의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 개발, 민간 투자 유치, 고용 창출임.
  - 도시재생을 위한 첫 번째 작업은 도시 내 도로 구축으로, 도시의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망인 'urban Boulevard'임.
    - ▶ 이를 통해 도시재생을 위한 물자 및 인력의 이동이 원활해지고, 도로 체계가 공간 구획을 통해 도시 요소(urban element)들을 계획·배치함.
    - ▶ 다른 계획에 선행하여 물리적 기반시설을 신설·정비하는 것은 도시재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 현재 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함.
  - 중앙도로 건설 2단계 사업은 2018년부터 진행될 예정임.
    - ▶ Transenster 지역으로부터 Ougrée, Saint-Lambert로 연결됨.
    - ▶ Cockerill Street 와 같이 통합적 녹지 시설, 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가 조성될 예정임.
  - 마스터플랜 상 도로망 구축 다음 순서는 시청에 인접한 Cockerill Street 재개발임.
    - ▶ 보행로, 자전거 도로, 대중 교통망, 주차 시설을 확충·정비
    - ▶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2016년에 착공

## (7) 일본

- 아베 정권의 도시 관련 정책은 3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금융 강화, 도시재생, 규제완화임.

### 1)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

- 일본의 정책 핵심은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 하에서 도시재생이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임을 의미함.
  -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와 업무의 근접성을 높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도시재생과 아베노믹스
  - 아베노믹스에서 도시재생이 절대적인 정책은 아님. 고이즈미 시절부터 도시재생은 중요했고 연속선상에 있음. 다만, ‘특구 정책’ 등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용적률 800%지역을 1500%까지 상향시켜 줌에 따라 일정 수준의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구도를 형성해 줌.
  - 용적률 인센티브는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면, 대부분 특구지역에 한정됨. 또한, 역사성, 지역포용성 등 다양한 기여를 바탕으로 하여 부여하고 있음.
  - 다만, 특구는 중앙정부 차원, 지방정부 차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아베노믹스 이후 PPP시장 급성장
  - 아베정권 이전에는 급식소 등 건축물 중심의 제한적 PPP시장 형성하였으나, 최근에는 누적 PPP시장 4조엔 수준으로 급성장함.
  - 아베 정부 인프라의 신설, 갱신 등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PPP 혹은 PFI 방식 검토를 의무화
- 해외 진출을 위한 기술 수출 전략
  - ‘인프라 메인터넌스 국민 회의’라는 민·관 공동 거버넌스를 창설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음.
  - 국민회의 형식의 포럼 만들어 공공과 민간의 교류·협력 도모
  - 국민회의가 컨설턴트의 역할을 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도입하여 자발적인 스터디 그룹·교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인포럼제도 등의 도입으로 해외 진출 극대화 도모
  - 해외 진출을 통해 일본 건설 인력의 활용 도모 목적도 존재함.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ODA 사업이 아닌 경우 고급 기술을 함께 원하는 중견국가 많아지고 있음.
- 베트남의 경우 중견국가로 승격됨에 따라 유상국가로 전환됨. 이에 따라 고급 기술 전수할 때 수주가 가능한 국가로 변화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은 4~5년 전부터 “고급 기술을 통한 해외 인프라 진출”이라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음.

#### 2) 동경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례

- 동경(tokyo)의 도시재생은 버블붕괴 이후 동경 지가 급락, 불량 채권 증가 이후 지역 활성화를 위한 ‘미치즈쿠리’ 개념이 도입되면서 태동됨.
- 당시장기 저성장에 따라 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던 시기로, 특히, 2003년 록본기힐스가 성공하면서 사회적 인식이 바뀐 영향이 상당함.
- 2001년 도시재생 관련 법률이 크게 바뀌었는데 록본기힐스는 이전 법 체계 하에서 사업이 진행되었고 성공함.
- 록본기힐스 사업 중 법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이후 사업에서는 상당한 시간 단축 등 지원 효과를 발휘함은 물론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함.

표 3-15

동경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례

내용	비 고
오오테마치	중심업무지구 연쇄형 재개발
니혼바시 무로마치	민간주도 도시재생특구
마루노우치, 유라쿠초	도쿄역 인근 도시재생 지구
긴자6	최근 복합쇼핑몰 도시재생 사례
미드타운	최대규모의 도심재개발
토라노몬 힐즈	민관합동 입체도로제도 활용 프로젝트
다이칸야마 (Log Road, T-Site)	도심주거지 재생 및 소규모 특색 있는 상업시설 개발
오모테산도힐즈,히카리에	복합 시설 프로젝트 성공 사례

- 오오테마치: 동경 지요다구 오테마치지구 재생 개발 사업
- 1590년, 에도시대(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후 현재의 마루노우치와 중심지역
- 사업추진방식은 기존 정부 청사 부지를 개발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주변 노후 건물 소유주들이 새 건물에 입주, 매입한 노후 건물을 다시 재건축 하는 ‘연쇄형 재개발방식’ 임.
- 사업의 성공요인: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민간지주, 도쿄도와 지요다구,



도시재생본부와 도시재생기구가 추진체를 구성 협의를 통해 문제점 최소화

• 2006년 도시재생 특별지구로 지정

- ▶오테마치지구전체 개발지역의 평균 용적률 1,200%, 1·2차 재개발지역은 각각 1,590%와 1,470%의 인센티브 용적률이 적용 민간 자본이 관심을 끌 만한 지역으로 변모
-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사업이 활기를 띌 수 있었던 배경
- ▶순환(연쇄)형 개발방식을 채택해 아직도 개발 중인 상태
- ▶오테마치지구는 닛케이빌딩과 JA본사 빌딩, 게이단렌 빌딩 등이 들어서면서 대도시 도쿄에서도 가장 세련된 지역으로 자리매김



자료: 모리빌딩도시기획 제공

그림 3-24

오테마치지구

재생 1-1

개발사업 구역

- 도쿄 미드타운

- 옛 방위성 부지를 6개의 SPC가 개발, 넓은 녹지 공간과 5개의 건물(미드타운 타워, 미드타운 이스트, 미드타운 웨스트, 가든테라스, 파크레지던스)로 구성된 복합도시임.



자료: 모리빌딩도시기획 제공

그림 3-25

도쿄 미드타운

전경

##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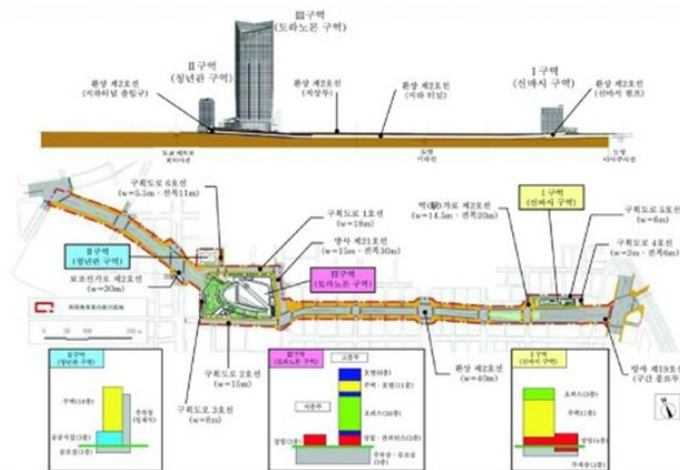
- 총사업비 3,700억엔, 전체 면적 102,000m<sup>2</sup> 으로 2007년 3월 준공됨.
- 민간에 의한 국유지(방위청 용지) 최대 규모의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토지 취득에서 착공까지 2년 3개월이 소요
- 부지의 약 50%를 녹지공간으로 조성, 도심속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본 전통적인 정원을 이미지화함.
- 좁은 도심부지와 높은 땅값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쇼핑의 완벽한 조화로 도심지 휴양지로서의 기능 부여

### - 토라노몬 힐즈

- 도로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일체형 프로젝트: 입체도로제도에 의거, 수도권 상2호선 상부와 인접부지를 통합하여 재개발을 추진한 도시재생프로젝트
- 사업비 2,300억엔(약 2조3천억원), 전체면적 17.069m<sup>2</sup> 로 2014년 5월에 준공됨.
- 민관합동 개발 방식<sup>60)</sup> 적용: 도쿄도는 토지를 제공하고, 모리빌딩은 설계/건설 후 지분 87%를 받음.
- 도시재생특별지구 지정을 통한 프로젝트 추진으로, 도심공동화 지역에 활기 부여

그림 3-26

토라노몬 힐즈  
전체 구역 개념도  
및 재생 개념



자료: 모리빌딩도시기획

60) 건축물의 기획, 건설, 운영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사업자를 지정하여, 시행자와 권리자와의 파트너(코디네이터)로서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재개발 계획에 대해 조언, 제안, 정보공유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 오모테산도 힐즈

- 일본 최초 아파트 재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181억엔, 6,051m<sup>2</sup> 규모로 2006년 1월에 준공됨.
- 설계당시부터 '재건'에 초점을 맞춰 주변지구의 도시적 컨텍스트에 맞춰 재생한 대표적인 도시상업재생 프로젝트
  - ▶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며 주변지구(하라주쿠)와 어울리는 도시공간 재생을 목표로 한 재개발 사업
  - ▶ 재생(아파트와 도시의 기억을 재생)과 조화(주변 환경과의 조화, 옛것과 새것의 조화)가 사업의 주요 컨셉



자료: 모리빌딩도시기획

그림 3-27

오모테산도힐즈  
전경

## (8)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도시 및 인프라 계획을 안정적으로 수행
  - 싱가포르는 한 정부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계획의 일관성이 있으며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데에 방해가 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의 없음.
  - 40-50년 단위의 Concept plan과 그에 맞는 10-15년 단위의 Master plan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글로벌 허브로서의 싱가포르의 역할을 위해 큰 규모의 인프라 사업 투자 진행 활발함.
  - 창이 국제공항(Changi Airport) 터미널 4&5 건설: 공항의 현재 수용력(capacity)이 2배로 증가할 예정임.
  - 투아스 신항만 (Tuas Port) 개발: 싱가포르 서쪽 Tuas를 매립, 도심에 위치한 항만을 확장, 이전할 예정임
  - 투아스 신항만은 6500만TEU 처리가 가능한 대규모 항만임.

## 2.

###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Singapore-Kuala Lumpur High-Speed Rail (HSR) 건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KL을 잇는 철도를 건설함으로써 현재 자동차로 약 6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1시간 반 만에 이동할 수 있게 함.
- 보다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노력 진행
  - 도심 과밀화 방지를 위한 교외화(decentralization): 도심의 과밀화로 인한 혼잡비용 증가 등을 막기 위해 항만과 가까운 서쪽 지역인 Jurong Lake District(JLD)를 개발, 과학과 기술의 요충지로서 새로운 도시를 구축하고 있음.
  - 녹지공간을 위한 지하 공간 활용 : 지하공간의 활용을 높임으로써 공원 등을 비롯한 녹지공간을 증가시키고자 함.
  - 차량이 적은 도시를 위한 대중교통 개발: car-lite city를 만들기 위해 지하철(MRT)과 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자전거 이용 등에 편리한 환경을 제공함.
  - Land Transport Master Plan 2013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도보 10분 이내에 역에 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거리가 20km미만인 경우 85%가 60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며,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75%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데이터를 이용한 보다 효율적인 도시 및 인프라 계획
  - Urban Lab에서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다 효율적인 도시 및 인프라 계획을 위한 대규모의 정보 수집,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싱가포르 건설 산업
  - 싱가포르 건설 산업은 2018년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2018-22년 평균 성장률은 약 2.7%일 것으로 추정됨.
  - 싱가포르 건설 산업의 가치는 향후 약 10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3-16

싱가포르  
건설산업 예측  
(2017~22)

Table: Five-Year Forecast Scenario (Singapore 2017-2022)

	2017e	2018f	2019f	2020f	2021f	2022f
Construction industry value, SGDbn	19.94	20.61	21.60	22.75	23.95	25.29
Construction Industry Value, Real Growth, % y-o-y	2.28	2.09	2.80	2.86	2.77	3.09
Construction Industry Value, % of GDP	4.8	4.7	4.7	4.7	4.7	4.7

e/f = BMI estimate/forecast. Source: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BMI

- 싱가포르 인프라 투자 리스크 분석

- 싱가포르는 성장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매우 낮은 매력적인 인프라·건설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 법과 제도가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용이하도록 형성되어 있음.
- 싱가포르는 위험이 낮고, 위험에 따른 보상도 낮은 편에 속함.

Singapore - Construction Industry Value and Growth Foreca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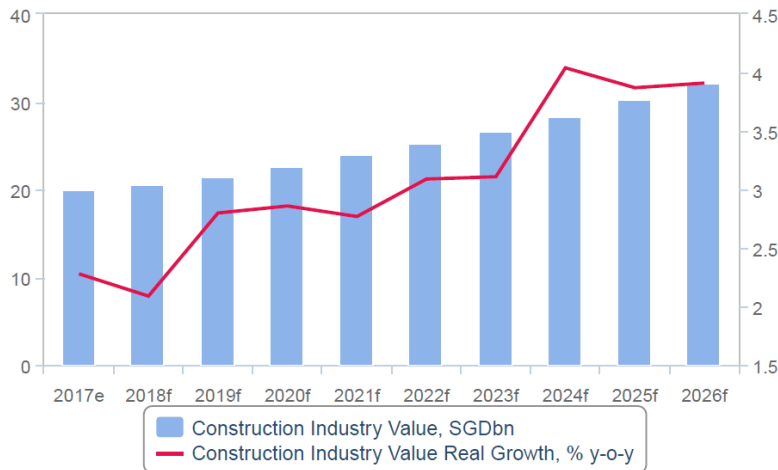


표 3-28

싱가포르 건설  
산업가치와  
성장률 예측

- 싱가포르 정부는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BIM의 활용을 강제(연면적 5,000㎡)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BIM의 활용이 제한적임.

- 발주청 제출 서류는 BIM 결과물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아직 2D 도면의 활용이 보급화되어 있음.
-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로, BIM을 잘 활용할 만큼 숙련되어 있지 못함.
- 2D 도면과 BIM 도면의 불일치성이 존재하여 주요 공정 간의 간섭 현황 검토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창이공항 터미널5의 기초공사에 BIM이 활용됨.

- BIM Doctor 기업은 BasisSoft와의 합작법인을 구성, 창이공항 터미널 5의 기초공사에서 BIM을 활용함.
- 토목공사 중심으로 BIM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단위 패키지 규모도 상당함.

- 4차 산업혁명시대 건설사업에 BIM 기술 가치 창출 제고

2.

주요 도시 및  
지역별  
인프라 정책  
사례

- 현재 프로젝트 수행 인력 및 인프라 수준이 BIM 기술 적용에 한계가 있음.
- BIM 기술에 의한 결과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함.
- 가령 BIM을 통한 도면에 부재 간 중첩 및 불일치성을 관련 실무자의 검토 작업이 필요한 상황임.

### 3. 요약 및 시사점

#### (1) 요약

- 최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SOC 투자 추이를 살펴볼 때, 국가별 투자부문 및 우선순위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투자 증가 추세를 보임.
  - 각 국가들은 기존 SOC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등 개선과 기존 인프라 대체, 미래 인프라 수요에 대비한 신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별 투자가 이루어짐.
- 미국은 주요 인프라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으로(2015년 기준 평균 27년) 이에 대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마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인프라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부가세 및 교통 관련 세금을 인상하여 추가 재원으로 활용함.
  - 노퍽시와 포트머스시 터널 프로젝트 사례에서와 같이 대형 사업의 경우 재정부족의 문제는 PPP 활용을 통해 해결함.
-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도시 쇠퇴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를 차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주로 이루어짐.
  - 독일 슈투트가르트-울름 사업은 복잡한 도심지내에서 인프라의 재배치를 통해 시민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확보하고, 고속철도 운행으로 이동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음.
  - 벨기에 세렝시의 Remorban사업은 도시재생에 에너지, 교통, ICT를 접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개발, 고용창출 등을 목표로 진행함.
- 일본의 경우 국가차원의 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와 지역 계획을 연계하여 전

략적인 투자를 실시함.

- 아베노믹스와 연계한 SOC 시설물의 정비 등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추진을 계획중에 있음.
- 아베 정권의 도시 관련 정책은 크게 금융 강화, 도시재생, 규제완화로, 동경시에서는 특구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아베노믹스 이후 인프라의 신설, 개선사업에 PPP 방식에 대한 검토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정부차원에서 도시 및 인프라 계획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수행 중에 있음.
-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심과밀화에 대비한 교외화 사업과 인프라 시설의 공급량 확대를 위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임.
-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데이터 수집,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인프라 계획을 수립함.

## (2) 시사점

- 국가별 인프라 투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 미국은 경기 변동에 따라 SOC 투자에 대한 증감을 반복해 왔는데 2015년부터는 기존 인프라의 재건을 위해 다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임.
  -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악화로 인해 전체 지출에서 SOC 투자의 비중을 감소하다, 2013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음.
  - 독일은 2014년에 SOC의 투자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2016년 SOC 예산은 크게 증가하여 전체 예산에서 7.1%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SOC 예산 비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함.
- 이러한 주요 선진국들의 SOC 투자 증가세는 최근 SOC 투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3.

### 요약 및 시사점

### 3.

#### 요약 및 시사점

- 해외 선진 국가 혹은 도시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후화된 인프라의 성능 개선 및 신규투자 뿐만 아니라 향후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한 투자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인프라 투자를 양적 측면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 확보 측면에서 검토해야 필요한 시점임.
- 
- 도시쇠퇴 현상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이를 차단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정책수단으로 지역의 현실 및 잠재력에 부합하는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투자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인프라 투자의 적절한 시기도 매우 중요함.
    - 도시쇠퇴가 지나치게 진행되기 전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쇠퇴의 흐름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 이미 지역 내의 잠재력이 대부분 소실된 상황에서는 인프라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
  - 지역별 인프라의 노후화와 인구변동 등에 대비한 필요 인프라 투자 부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정적·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 제4장 충남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1) 도로·도로시설물

##### 1) 도로

- 충청남도는 총 7,122km의 도로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도로연장의 약 6.5%에 해당함.
- 도로 위계별로 보면 고속국도는 430km, 일반국도는 1,275km, 지방도 1,675km, 시도 2,623km, 군도 1,118km를 보유하고 있음
- 도로의 포장률은 약 90.4%로 전국 수준(92.4%)에 비해 조금 낮은 편이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100.0%의 포장률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방도 (86.8%), 시도 (76.9%), 군도(80.5%)의 포장률은 높지 않은 실정임
- 충청남도 소관도로인 지방도는 1,675km로 전국 지방도 18,121km의 약 9.2%에 해당하고, 충청남도 전체 도로연장의 약 23.5%에 해당하며, 시·군도는 3,741km로 전국 시·군도 51,663km의 약 7.2%에 해당하고, 충청남도 전체 도로연장의 약 52.5%에 해당함

####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표 4-2

**충남 도로 지방도  
현황**

(단위: km, %)

구분	전국		충청남도		충남 점유율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합계	108,780	92.4	7,122	90.4	6.5
고속국도	4,438	100	430	100	9.7
일반국도	13,977	99.6	1,275	100	9.1
특별·광역시도	4,761	100	-	-	-
지방도	18,121	91.5	1,675	86.8	9.2
시도	28,867	96.3	2,623	76.9	9.1
군도	22,796	75.3	1,118	80.5	4.9
구도	15,820	99.6	-	-	-

자료 : 국토교통부, 2017년 도로현황조서, 시도별 도로현황. (2016.12.31. 기준)

주 : 포장률은 개통 연장 중 포장연장 비율(%)을 의미함.

- 충남을 통과하는 지방도는 41개(국지도 포함) 노선으로 총 연장은 1,675km이며, 포장도는 1,454km(86.8%), 미포장도는 161km(9.6%), 미개통도는 61km(3.6%)임.

(단위: km, %)

노선 번호	연장	포장도					미포 장도	미개 통도
		소계	2차로 이하	4차로	6차로	8차로 이상		
601호선	27	20	20	-	-	-	7	-
602호선	8	8	-	8	0	-	-	-
603호선	44	42	40	2	-	-	2	-
604호선	60	47	47	-	-	-	12	1
606호선	31	31	31	-	-	-	-	-
607호선	34	34	33	1	-	-	-	-
609호선	56	25	18	3	4	-	28	3
610호선	54	51	51	-	-	-	3	-
611호선	55	43	43	-	-	-	7	6
613호선	35	29	29	-	-	-	-	6
615호선	40	40	28	12	-	-	-	-
616호선	38	36	36	-	-	-	2	-
617호선	36	36	36	0	-	-	0	-
618호선	49	29	29	-	-	-	16	4
619호선	69	54	54	-	-	-	15	-
622호선	17	14	14	-	-	-	4	-
623호선	55	55	55	1	-	-	-	-
624호선	34	28	23	5	-	-	6	-
625호선	53	40	40	-	-	-	12	-
628호선	23	23	14	9	1	-	0	-
629호선	30	30	26	4	-	-	-	-
633호선	14	14	14	-	-	-	-	-
634호선	37	34	32	2	-	-	2	-
635호선	48	48	41	8	-	-	-	-
643호선	30	30	30	-	-	-	-	-
645호선	65	35	34	2	-	-	26	4
647호선	50	46	46	-	-	-	4	-
649호선	38	38	38	-	-	-	-	-
651호선	29	29	25	4	-	-	-	-
691호선	44	44	44	-	-	-	-	-
693호선	9	9	9	-	-	-	-	-
696호선	6	5	-	5	-	-	-	1
697호선	47	47	47	-	-	-	-	-
723호선	32	26	26	-	-	-	6	-
799호선	26	26	26	-	-	-	-	-
국지도 (6개노선)	355	308	221	86		2	9	37
전체연장	1675	1454	1296	151	5	2	161	61

자료 : 국토교통부, “2017년도 도로현황조사”, 2017.

표 4-2

충남 도로 지방도  
현황

##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1.

##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충청남도 시도의 총 연장은 2,623km이며, 이 중 포장도는 2,016km(76.9%), 미포장도는 297km(11.3%), 미개통도는 310km(11.8%)임.
- 시도 포장도 중 2차로 이하 구간의 연장은 1,604km, 4차로 이상인 구간의 연장은 412km로 대부분의 노선이 2차로 이하의 노선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 군도의 총 연장은 1,118km이로 포장도는 901km(80.5%), 미포장도는 188km(16.8%), 미개통도는 30km(2.7%)임.
- 마찬가지로 군도 포장도 중 2차로 이하 구간의 연장은 896km, 4차로 이상인 구간의 연장은 5km로 대부분의 노선이 2차로 이하의 노선임.

표 4-3

(단위: km)

충남 시·군도  
현황

구분		연장	포장도						미포장도	미개통도
			소계	2차로이하	4차로	6차로	8차로	10차로이상		
시도	소계	2,623	2,016	1,604	290	106	13	3	297	310
	천안시	618	573	401	111	46	13	3	-	45
	공주시	220	155	152	3	-	-	-	60	4
	보령시	316	316	263	44	9	-	-	-	-
	아산시	536	233	200	31	1	-	-	99	205
	서산시	221	165	132	27	6	-	-	1	56
	논산시	442	305	244	43	18	-	-	137	0
	계룡시	115	115	58	32	25	-	-	-	-
	당진시	154	154	154	-	-	-	-	-	-
군도	소계	1,118	901	896	4	1	-	-	188	30
	금산군	124	99	99	-	-	-	-	17	9
	부여군	204	153	149	4	-	-	-	44	7
	서천군	159	144	144	-	-	-	-	10	5
	청양군	142	120	120	-	-	-	-	20	2
	홍성군	153	132	130	1	1	-	-	18	3
	예산군	162	130	130	-	-	-	-	31	-
	태안군	175	123	123	-	-	-	-	47	4

자료 : 국토교통부, “2017년도 도로현황조사”, 2017.



자료 : 국토교통부, 전국표준노드링크, 2017.

## 2) 도로시설물(교량·터널)

- 충청남도 지방도(국지도 포함)내에 교량은 446개소로 총 길이는 28,561m, 총 면적은 367,591m<sup>2</sup>이며, 터널은 12개소로 총 길이는 3,791m, 총 면적은 42,247km<sup>2</sup>임.

# 1.

##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표 4-4

### 충남 지방도 교량 및 터널 현황

(단위: m, m2)

노선 번호	교량			터널		
	개소	총 길이	총 면적	개소	총 길이	총 면적
601호선	4	117	1,124	-		-
602호선	9	964	20,035	1	260	3,900
603호선	3	76	842	-		-
604호선	12	522	4,495	-		-
606호선	6	216	2,325	-		-
607호선	2	74	699	-		-
609호선	12	832	17,685	-		-
610호선	13	405	3,470	-		-
611호선	4	86	715	-		-
613호선	7	222	2,209	-		-
615호선	12	613	9,584	-		-
616호선	12	546	5,194	-		-
617호선	11	686	6,241	-		-
618호선	14	1,558	16,687	2	653	6,499
619호선	20	632	6,350	-		-
622호선	4	226	2,142	-		-
623호선	11	1,026	11,874	-		-
624호선	8	228	2,375	-		-
625호선	4	318	3,538	-		-
628호선	9	209	4,725	-		-
629호선	13	997	11,659	1	665	6,118
633호선	2	59	1,053	-		-
634호선	6	196	3,749	-		-
635호선	21	1,629	28,172	3	825	11,442
643호선	9	468	7,383	-		-
645호선	20	1,700	18,513	1	480	4,560
647호선	12	941	11,178	1	160	1,632
649호선	5	124	1,224	-		-
651호선	12	2,509	40,464	-		-
691호선	18	742	7,096	1	498	4,980
693호선	2	208	2,296	-		-
696호선	1	88	1,012	-		-
697호선	19	811	7,453	-		-
723호선	8	348	3,340	-		-
799호선	9	703	7,388	-		-
국지도 (6개노선)	112	7,486	93,302	2	220	3,116
합 계	446	28,561	367,591	12	3,761	42,247

자료 : 국토교통부, “2017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사”, 2017.

- 충청남도 시도내 교량은 총 384개소로 총 길이는 19,778m이며, 총 면적은 266,139m2이고, 군도내 교량은 총 207개소로 총 길이는 9,915m이며, 총 면적은 97,211m2임.

- 충청남도 시도내 터널은 총 14개소로 총 길이는 3,261m이며, 총 면적은 40,921m<sup>2</sup>이고, 군도내 터널은 총 3개소로 총 길이는 1,025m이며, 총 면적은 9,537m<sup>2</sup>임.

(단위: m, m<sup>2</sup>)

구분	교량			터널			
	개소	총 길이	총 면적	개소	총 길이	총 면적	
시도	소계	384	19,778	266,139	14	3,261	40,921
	천안시	91	6,283	117,602	4	760	12,805
	공주시	79	3,882	42,579	5	1,343	15,555
	보령시	46	2,261	30,366	1	641	7,436
	아산시	72	3,031	28,506	1	200	2,000
	서산시	19	770	5,756	-		
	논산시	55	2,509	29,064	2	182	1,870
	계룡시	3	332	5,333	-		
	당진시	19	711	6,932	1	135	1,256
군도	소계	212	9,915	97,211	3	1,025	9,537
	금산군	28	1,088	10,043	1	320	2,976
	부여군	35	1,318	11,563	-		
	서천군	15	690	5,988	-		
	청양군	47	2,375	26,129	2	705	6,561
	홍성군	28	1,267	11,660	-		
	예산군	48	2,336	23,013	-		
	태안군	11	842	8,814	-		

자료 : 국토교통부, “2017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사”, 2017

표 4-5

충남 시·군도  
교량 및 터널  
현황

### 3)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인프라 주요 이슈

#### ① 도로

- 2016년 전국 시·도별 도로시설물(한국도로공사, 국토부 소관 내역 제외) 총 유지보수비용은 1조 4,057억원이며, 충청남도는 1,025억원으로 전국 시·도 중 6번째로 높은 수준

##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1.

##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표 4-6

2016년 시·도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액	일반 국도	특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위임 국도
총액	1,405,790	29,084	110,899	312,528	468,942	204,172	144,256	135,909
서울	53,635	-	16,485	-	-	-	37,150	-
부산	54,584	-	18,853	-	-	1,020	34,711	-
대구	41,746	-	18,817	-	-	1,803	21,126	-
인천	56,432	-	17,046	-	-	12,912	26,474	-
광주	23,624	-	14,831	-	-	-	8,793	-
대전	18,472	-	8,090	-	-	-	10,382	-
울산	29,307	-	16,777	-	-	6,910	5,620	-
세종	10,645	-	-	-	10,645	-	-	-
경기	296,222	19,058	-	55,863	209,786	11,515	-	-
강원	156,493	5,764	-	56,129	26,465	28,531	-	39,604
충북	78,520	1,514	-	31,088	22,936	15,185	-	7,797
충남	102,547	934	-	27,638	43,407	16,657	-	13,911
전북	56,177	441	-	16,177	16,308	12,583	-	10,668
전남	107,982	1,010	-	25,688	21,420	36,823	-	23,041
경북	121,650		-	29,698	32,767	35,992	-	23,193
경남	140,888	363	-	36,147	62,442	24,241	-	17,695
제주	56,866	-	-	34,100	22,766	-	-	-

자료: 국토교통부, "2017년 도로보수현황 조사", 2017.

주 : 한국도로공사, 국토부 소관 내역 제외.

- 충청남도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시설물에 대한 비용이 270억원(전체 유지보수비용의 26.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포장은 237억원(23.1%), 교량은 140억원(13.6%)으로 나타남.
- 도로 위계별로 살펴보면, 시도가 434억원으로 유지보수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도가 276억원, 군도가 167억원, 위임국도가 139억원, 일반국도가 93억원으로 나타남.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액	포장	교량	터널	사면	기타 구조물관 련	안전 시설	자전거 도로	기타
총액	102,547	23,650	13,952	513	639	5,726	26,950	2,161	28,956
	100.0%	23.1%	13.6%	0.5%	0.6%	5.6%	26.3%	2.1%	28.2%
위임 국도	13,911	3,993	1,271	174	81	424	2,544	-	5,424
	100.0%	28.7%	9.1%	1.3%	0.6%	3.0%	18.3%	0.0%	39.0%
일반 국도	934	85	450	139	16	-	244	-	-
	100.0%	9.1%	48.2%	14.9%	1.7%	0.0%	26.1%	0.0%	0.0%
지방 도	27,638	5,170	3,997	59		2,614	6,744		9,054
	100.0%	18.7%	14.5%	0.2%	0.0%	9.5%	24.4%	0.0%	32.8%
시도	43,407	9,770	7,553	141	158	1854	13,289	2,161	8,481
	100.0%	22.5%	17.4%	0.3%	0.4%	4.3%	30.6%	5.0%	19.5%
군도	16,657	4,632	681		384	834	4,129		5,997
	100.0%	27.8%	4.1%	0.0%	2.3%	5.0%	24.8%	0.0%	36.0%

자료: 국토교통부, “2017년 도로보수현황 조사”, 2017.

주 : 기타에는 위험도로개선, 병목지점개량, 재해 및 응급복구, 접도구역관리 기타 내역이 포함됨.

표 4-7

충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현황  
(2016년)

## ② 도로시설물(교량 · 터널)

- 충청남도 내 도로시설물 중 교량 및 터널 만이 노후화에 대한 정보파악이 가능함.
-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도로에는 총 1,042개소의 교량 있으며,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관리가 시급한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량은 288개소로 27.6%에 해당함.
- 도로 위계별로 살펴보면, 지방도의 교량은 68개소(6.5%), 국지도의 교량은 35개소(3.4%), 시도의 교량은 141개소(13.5%), 군도의 교량은 44개소(4.2%)가 해당됨.

## 1.

###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표 4-8

**충남 교량의  
노후화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준공 후 경과시간				합계
		10년 미만	10~20년	20년~30년	30년 이상	
교량	지방도	52	87	127	68	334
		5.0	8.3	12.2	6.5	32.1
	국가지원 지방도	23	23	31	35	112
		2.2	2.2	3.0	3.4	10.7
	시도	23	87	133	141	384
		2.2	8.3	12.8	13.5	36.9
	군도	24	51	93	44	212
		2.3	4.9	8.9	4.2	20.3
	합계	122	248	384	288	1,042
		11.7	23.8	36.9	27.6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17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사”, 2017.

- 교량의 노후 현황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준공 이후 30년 이상이 된 교량 288개소 중 공주시와 논산시가 각각 51개소(점유율 4.9%)를 보유하여 가장 노후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소, %)

구분	준공 후 경과시간				합계
	10년 미만	10년~20년	20년~30년	30년 이상	
계룡시	1	0	0	2	3
	0.1	0.0	0.0	0.2	0.3
공주시	5	23	51	51	130
	0.5	2.2	4.9	4.9	12.5
금산군	13	13	24	16	66
	1.2	1.2	2.3	1.5	6.3
논산시	7	10	27	51	95
	0.7	1.0	2.6	4.9	9.1
당진시	12	19	24	14	69
	1.2	1.8	2.3	1.3	6.6
보령시	9	18	30	10	67
	0.9	1.7	2.9	1.0	6.4
부여군	9	15	30	7	61
	0.9	1.4	2.9	0.7	5.9
서산시	15	13	18	14	60
	1.4	1.2	1.7	1.3	5.8
서천군	0	5	16	7	28
	0.0	0.5	1.5	0.7	2.7
아산시	11	33	40	22	106
	1.1	3.2	3.8	2.1	10.2
예산군	19	19	26	20	84
	1.8	1.8	2.5	1.9	8.1
천안시	6	35	44	45	130
	0.6	3.4	4.2	4.3	12.5
청양군	4	18	42	14	78
	0.4	1.7	4.0	1.3	7.5
태안군	6	6	2	4	18
	0.6	0.6	0.2	0.4	1.7
홍성군	5	21	10	11	47
	0.5	2.0	1.0	1.1	4.5
합계	122	248	384	288	1,042
	11.7	23.8	36.9	27.6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17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사”, 2017.

- 터널은 총 29개소로 준공연도를 기준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량은 2개소 (6.9%)임.

표 4-9

충남 시·군별  
교량 노후화 현황

##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1.

##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표 4-10

충남 터널의  
노후화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준공 후 경과시간				합계
		10년 미만	10~20년	20년~30년	30년 이상	
터널	지방도	3	6	1	-	10
		10.3	20.7	3.4	-	34.5
	국가지원 지방도	-	2	-	-	2
		-	6.9	-	-	6.9
	시도	7	5	2	-	14
		24.1	17.2	6.9	-	48.3
	군도	-	1	-	2	3
		-	3.4	-	6.9	10.3
	합계	10	14	3	2	29
		34.5	48.3	10.3	6.9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17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사”, 2017.

- 터널은 준공 이후 30년 이상이 된 시설물이 총 2개소로 금산군과 청양군에 각각 1개소(점유율 3.4%)가 있음.

(단위 : 개소, %)

표 4-11

충남 시·군별  
터널 노후화 현황

구분		준공 후 경과시간				합계
		10년 미만	10년~20년	20년~30년	30년 이상	
공주시		0	6	1	0	7
		0.0	20.7	3.4	0.0	24.1
금산군		1	3	0	1	5
		3.4	10.3	0.0	3.4	17.2
논산시		2	1	0	0	3
		6.9	3.4	0.0	0.0	10.3
당진시		0	2	0	0	2
		0.0	6.9	0.0	0.0	6.9
보령시		1	0	0	0	1
		3.4	0.0	0.0	0.0	3.4
서산시		0	1	0	0	1
		0.0	3.4	0.0	0.0	3.4
아산시		0	0	1	0	1
		0.0	0.0	3.4	0.0	3.4
예산군		1	0	0	0	1
		3.4	0.0	0.0	0.0	3.4
천안시		4	0	0	0	4
		13.8	0.0	0.0	0.0	13.8
청양군		0	1	1	1	3
		0.0	3.4	3.4	3.4	10.3
홍성군		1	0	0	0	1
		3.4	0.0	0.0	0.0	3.4
합계		10	14	3	2	29
		34.5	48.3	10.3	6.9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17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사”, 2017.

- 충청남도 교통시설(도로·교량·터널·철도·항만)에 대한 노후화 실태 조사는 교량과 터널만이 가능했으며, 나머지 시설물들의 노후화 정보는 없었음. 노후화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원인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현황 및 상태를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없었기 때문임.
- 공사시행 개요를 기록하는 ‘공사대장’ 마저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게 되어 사실상 노후화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됨.
- 노후화 정보는 기존의 사후대응형(고장 발생 후 수리 또는 교체) 유지관리 전략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였기에 따로 관리되지 않았으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산관리 개념의 예방적 유지관리 전략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향후에는 주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정보임.

## (2) 철도 및 항만

### 1) 철도

- 충청남도를 통과하는 철도는 총 7개 노선으로 경부선, 경부고속선, 호남선, 호남고속선, 장항선, 장항화물선, 강경선이 있음
- 고속철은 2개 노선으로 경부 고속선은 연장 398km의 노선으로 서울-부산 간 9개 역을 운행하며, 호남 고속선은 연장 184km의 노선으로 오송-광주송정 간 4개 역을 운행하는 노선임
- 광역철은 3개 노선으로 경부선은 연장 442km로 서울-부산 간 87개역을 운행하며, 호남선은 연장 253km로 대전-목포 간 37개 역을 운행하고, 장항선은 연장 154km로 천안-익산 간 28개 역을 운행함
- 이 외에 장항화물선(연장 42km)과 강경선(연장 58km)이 있음

## 1. 충청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표 4-12  
충남 철도노선별  
현황

(단위 : km, 개소, 대)

구분	구간	연장	역					영업キロ (Route-km)	
			전체	보통역	배차 간이역	무배차 간이역	기타	여객	화물
전체	-	3,873.5	673	339	6	287	41	3,653.6	3,077.0
경부선	서울-부산	441.7	87	62	-	20	5	441.7	439.9
경부 고속선	서울-부산	398.2	9	9	-	-	-	398.2	-
호남선	대전-목포	252.5	37	20	-	15	2	252.5	252.5
호남 고속선	오송- 광주송정	183.8	4	4				183.8	
장항선	천안-익산	154.4	28	17		11		154.4	154.4
장항 화물선	장항- 장항화물	4.2	1			1			
강경선	채운-연무대	5.8	1			1		5.8	5.8

자료 :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제53회 2015 철도 통계연보, 2017.

그림 4-2  
충남 철도 노선도



자료: 충청남도, 충남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2017~2026)(중간보고), 2017. 12.

## 2) 항만

- 충청남도에는 총 7개의 항만이 있으며, 이 중 무역항은 5개 연안항은 2개임
- 무역항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평택·당진항(평택지방해양수산청), 대산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장항항(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충청남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태안항, 보령항으로 구분됨

그림 4-3

충남 항만 위치도



자료: 충청남도, 충남 제2차 지역물류기본계획(2017~2026)(중간보고), 2017. 12.

- 평택·당진항은 당진시에 위치하였으며, 대산항은 서산시, 장항항과 비인항은 서천군, 태안항은 태안군, 보령항과 대천항은 보령시에 위치함
- 충청남도 전체 항만구역은 해상 234,871km<sup>2</sup>, 육상 7,354km<sup>2</sup>이며, 총 74개의 선석이 있음

##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표 4-13  
충남 항만의 일반  
현황

(단위 : km<sup>2</sup>)

구분	위치	지정일자	항만구역		선석수	하역능력
			해상	육상		
전체	-	-	234,871	7,354	106(74)	-
평택·당진항	당진시 석문면, 송악읍	1986. 12.	94,254	6,350	63(31)	8,524 만톤(R/T)/년
대산항	서산시 대산읍	1991. 10.	69,343	365	31	1,351 만톤(R/T)/년
장항항	서천군 장항읍	1968. 01.	4,898	171	2	148 만톤(R/T)/년
태안항	태안군 원북면	1998. 02.	8,245	-	3	1,794 만톤(R/T)/년
보령항	보령시 오천면, 천북면	1983. 08.	34,679	9	4	1,801 만톤(R/T)/년
대천항	보령시 신흑동	1970. 07.	21,825	337	2	4 만톤/년
비인항	서천군 서면	1970. 07.	1,627	122	1	2 만톤/년

주 : ( ) 내는 평택·당진항에서 당진항만 고려.

자료 : 1.충청남도, 해양수산 주요통계, 2016. 12.

2: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2016년, <https://www.spidc.go.kr>.

## 3) 철도 및 항만 인프라 주요 이슈

- 평택·당진항의 경우, 2017년 확정, 고시된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별 배후단지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지속적인 확충 계획이 수립, 진행 예정
- 현재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에 따르면,
- 노후화가 심한 홍원항과 외연도항 등 어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사업이 여전히 실행되고 있지 못함.

## (3) 산업단지

### 1) 현황 및 실태

- 2017년 현재 충남에는 총 150개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이를 산업단



지 유형별로 구분하면 국가산단 5개소, 일반산단 52개소, 농공단지 91개소, 도시첨단 2개소임.

- 이 중에서 2017년 현재 조성이 완료된 산단은 모두 126개소이고 나머지 24개소는 현재 조성 중에 있음.
- 기 조성된 126개 산단 중에서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은 모두 52개소인데, 일반산단이 4개소이고, 그 외 48개소는 모두 농공단지임.
- 특히 농공단지의 경우, 기 조성된 농공단지 86개소의 55.8%가 20년 이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장 오래된 농공단지는 31년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소)

구분	지정 산단수	조성된 산단수	20년 이상 산단	
			산단수	산단 비중
전체	150	126	52	41.3
국가	5	5	0	0.0
일반	52	34	4	11.8
도시첨단	2	1	0	0.0
농공	91	86	48	55.8

자료: 충남 산업단지현황(충남도, 2017)

표 4-14

충남 산업단지  
현황

- 그간 산업단지정책은 주로 신규 조성에 초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기존 산단의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이 낮았음.
- 실제 최근 5년간 새롭게 조성이 완료된 산단은 모두 42개소이고, 현재 조성 중인 산단은 24개소임. 이는 지정 산단의 44.0%에 해당하는 것임.
- 한편 중앙정부는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2016)”을 수립하였으나, 이에는 국가산단과 일반산단과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지역경제와 연계성이 높은 농공단지는 노후산단 리모델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1.

##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표 4-15

충남 시·군별  
노후 산업단지  
현황

- 2017년 12월 현재, 충남지역의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는 모두 62개소에 달함. 이는 전국의 노후 산업단지 428개소 중 14.5%에 달하는 상황

(단위 : 개소)

지역	노후산업 단지 수	단지명
공주시	5	검상, 계룡, 유구, 장기, 정안1
금산군	3	금산, 금성, 복수
논산시	3	가야곡, 연산, 은진
당진시	6	아산국가, 당진, 면천, 석문, 신평, 합덕
보령시	7	고정, 관창, 대천, 웅천, 웅천석재, 주산, 주포
부여군	4	은산, 임천 장암, 홍산
서산시	4	대죽, 고북, 성연, 수석
서천군	2	장항원수, 종천
아산시	8	인주, 둔포, 득산, 배미, 신인, 신창, 영인, 탕정
예산군	5	고덕, 신암, 예덕, 예산, 응봉
천안시	8	천안3, 마정, 천안제2, 천흥, 동면, 목천, 백석, 직산
청양군	4	비종, 운곡, 정산, 화성
태안군	1	태안
홍성군	2	광천, 구항
계	62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 기업체의 휴폐업으로 인해 공장시설이 장기간 미사용되거나 버려지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고, 특히 이는 노후산단에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일부 농공단지에서는 10년 이상 공장시설이 가동되지 않고, 해당 시설이 거의 방치되었거나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단위 : 개소)

표 4-16

충남 산업단지의  
휴폐업 현황

구분	휴폐업 업체수	3년 미만	4년 이상	4년 이상 비중
전체	38	25	13	34.2
국가	0	0	0	-
일반	16	12	4	25.0
도시첨단	0	0	0	-
농공	22	13	9	40.9

자료: 충남 산업단지현황(충남도, 2017)

-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로 부터 ‘2016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
  - 재생사업 선정으로 2022년까지 국비 84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68억원, 민자 10억원 등 모두 1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음.
  - 2018년중 진입도로 확장, 전선 지중화, 가로수 정비, 공원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혁신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진행 예정이었음.
  - 2018년 2월 현재,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 향후 착수까지는 시간 소요 예정.

## 2) 산업단지 정책에 대한 진단 및 대응방향

- 산업단지정책이 신규 조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어 노후화된 산단에 대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역차원에서 산업단지정책은 신규 조성과 기존 산단 재정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
- 산업단지정책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어 농공단지에 대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경쟁력이 있는 노후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농공단지 재생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기존 노후 농공단지와 연접해 신규 산단을 조성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산업단지의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산단 내의 개별 기업체를 재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산단 입주기업체 중 5년 이상 장기 운영되지 않는 공장시설의 재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Adaptive Reuse 접근이 요구됨.
- 산단 및 제조업체 시설을 산업유산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오로지 생산시설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오래된 산업시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치있는 산업시설을 산업유산적 관점에서 활용해야 할 것임.

##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4) 전통시장 및 상가

## 1) 전통시장 정비사업 추진 경과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은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 및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가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전통시장법)
- 전통시장법 지원정책은 1) 전통시장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 2) 시장정비촉진으로 나뉨
- 시장현대화사업은 기존 전통시장을 유지하면서 개선에 목적을 둔 반면, 시장정비사업은 안전상 문제 또는 경쟁력이 없는 전통시장구역을 재정비하여 현대화된 건축물로 대체하는 사업

표 4-17

전통시장법 지원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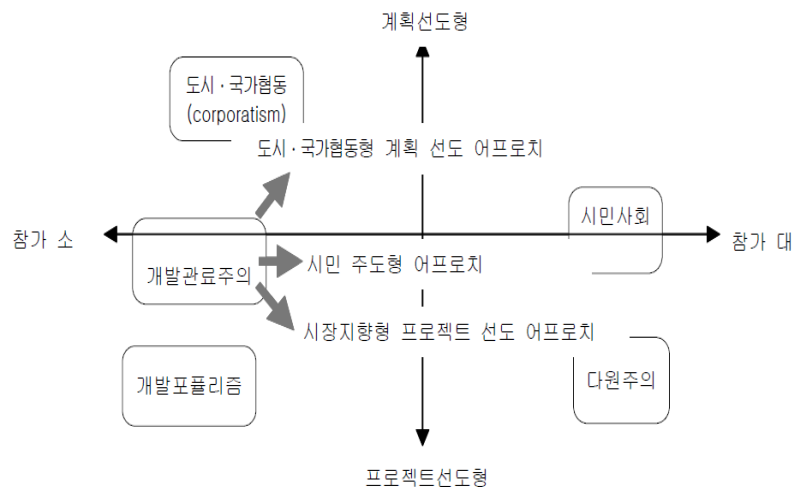
구분	시설현대화사업	시장정비사업
사업 목적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로 영세상인 보호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해당구역 재정비
사업비 확보	공설시장 : 국비 + 지방비 일반시장 : 국비 + 지방비 + 민간자부담	시장정비사업 조합
사업 내용	시설현대화(아케이드 설치, 편의시설) 경영현대화(카드결제,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	전통시장 구역의 재정비 현대화된 건축물로 대체
사업 대상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상업시설, 상인, 고객이 사용하는 공동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	등록시장
사업 주체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 * 공설시장은 지자체장이 시장관리자	토지등소유자, 추진위원회 등 * 시장, 점포,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
법 규정	특별법 제5조~제30조	특별법 제31조~제57조

- 그러나 정부의 재정 여건상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예산은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공공의 재정에만 의존하여 전통시장의 쇠퇴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름.

- 2002~15년까지 전통시장 재정비에 약 2조 5000억원이 투입했지만 전통시장 상거래 현대화와 편의시설 구비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국정감사 지적사항)
  - 또한, 정보 기술의 발전 및 소비자 구매 행태 변화 등 경영환경은 빠르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시의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따름.
- 공공재원의 한계 극복 및 빠른 대응을 위해 민간부문 참여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재원이 합리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사업화 전략 모색이 중요
- 물리적 정비를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고려를 토대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의 자발성, 다양성 등이 요구됨
  - 민간기업 참가가 적고 정부주도로 진행될 경우, 개발관료주의\*, 개발포퓰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개발관료주의 : 엘리트 관료가 중심이 되어 개발을 주목표로 삼아 사회적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구조

\*\* 개발 포퓰리즘 : 대중 회유적인 정치가에 의한 개발지상주의적 통치



출처: 일본의 지방 중소도시 재생정책 및 사례 중 도시재생 어프로치 제작성

그림 4-4  
공공과 민간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사업화 전략

##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시장에 대한 민간 부문참여는 최소한의 수익구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며, 이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를 위해 기존 지원사업과는 달리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고려한 수익모델  
과 참여 방식이 요구됨

2) 전통시장 및 상가 노후 실태

①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2016년 기준)

- 2017년 기준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은, 전통시장(등록·인정시장)  
58개, 상점가 10개, 지하도상점가 1개임.

표 4-18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2016년 기준)

시장형태	순	등록형태	시·군	시장명
전통시장	1	인정	공주시	공주산성시장
	2	인정	공주시	산성시장활성화구역
	3	인정	공주시	유구시장
	4	등록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시장(금산인삼국제시장)
	5	등록	금산군	금산수삼센터
	6	등록	금산군	금산시장
	7	등록	금산군	금산약초시장
	8	인정	금산군	금산인삼쇼핑센터
	9	인정	금산군	금산인삼전통시장
	10	등록	금산군	마전시장
	11	등록	금산군	중부프라자
	12	인정	논산시	강경대흥시장
	13	인정	논산시	강경젓갈시장
	14	인정	논산시	연무안심시장
	15	인정	논산시	연산전통시장
	16	인정	논산시	화지중앙시장
	17	등록	당진시	당진시장
	18	인정	당진시	신평시장
	19	등록	당진시	합덕전통시장
	20	인정	보령시	동부시장
	21	인정	보령시	보령중앙시장
	22	인정	보령시	보령한내시장
	23	인정	보령시	웅천시장
	24	인정	보령시	현대시장(현대상가시장)
	25	인정	부여군	부여5일시장
	26	인정	부여군	부여중앙시장
	27	인정	부여군	홍산시장
	28	등록	서산시	대산종합시장
	29	인정	서산시	서산동부전통시장(동부시장)
	30	인정	서산시	해미시장
	31	등록	서산시	해미종합시장
	32	등록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시장형태	순	등록형태	시·군	시장명
	33	인정	서천군	장항전통시장
	34	인정	아산시	둔포전통시장(둔포시장)
	35	인정	아산시	온양온천시장(온양전통시장)
	36	등록	예산군	고덕시장
	37	등록	예산군	광시시장
	38	등록	예산군	덕산시장
	39	등록	예산군	삼교시장
	40	인정	예산군	역전시장
	41	등록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42	등록	예산군	예산시장
	43	인정	천안시	남산중앙시장
	44	인정	천안시	병천시장
	45	인정	천안시	성정5단지시장
	46	인정	천안시	성환이화시장
	47	인정	천안시	중앙시장
	48	인정	천안시	천안역전시장
	49	인정	천안시	천일시장
	50	인정	청양군	정산시장
	51	인정	청양군	청양전통시장
	52	인정	태안군	안면도수산물시장(구,안면도장터)
	53	인정	태안군	태안서부재래시장
	54	등록	태안군	태안특산물전통시장
	55	등록	홍성군	갈산정기시장
	56	등록	홍성군	광천전통시장
	57	등록	홍성군	홍성상설시장
	58	등록	홍성군	홍성전통시장
상점가	59	상점가	계룡시	금암동상점가
	60	상점가	계룡시	대승빌딩상점가
	61	상점가	계룡시	염사상점가
	62	상점가	당진시	당진원도심상점가활성구역
	63	상점가	당진시	합덕중앙시장상점가
	64	상점가	아산시	배방상점가
	65	상점가	천안시	대흥로상점가
	66	상점가	천안시	두정동상점가
	67	상점가	천안시	천안신부문화거리상점가
	68	상점가	홍성군	명동상점가
지하도 상점가	69	상점가	천안시	천안역지하상가

\* 주. 등록·인정 시장 기준

\* 이하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2016년)

표 4-18(계속)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2016년 기준)

## 1.

###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1.

##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②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노후도는, 매년 상인회장 설문 조사를 통해 5점 척도<sup>61)</sup>로 응답받고 있음.
- 따라서, 노후도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시설물의 상태가 양호함을 의미
- 전통시장 전체 편의시설 노후도는 3.1점이며, 상점가는 3.1, 지하도상점가는 4.0으로, 지하도상점가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전통시장 편의시설 중 외국인 안내센터 4.3점, 유아놀이방 3.8점, 수유센터 3.7점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개, 점)

표 4-19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체  
편의시설 노후도

구분		2015년(N=68)		2016년(N=69)	
		응답수	노후도	응답수	노후도
전통시 장	편의시설 전반적 노후도	58	3.3	58	3.1
	- 고객지원센터	48	3.5	47	3.5
	- 유아놀이방	3	3.7	6	3.8
	- 종합콜센터	3	3.7	7	3.6
	- 고객휴게실	6	3.8	12	3.4
	- 수유센터	-	-	6	3.7
	- 물품보관함	3	3.3	4	2.3
	- 자전거보관함	8	3.4	12	3.3
	- 체육시설	2	3.0	7	3.6
	- 간이도서관	2	3.0	5	2.8
	- 쇼핑카트	8	3.1	11	3.5
	- 외국인 안내센터	-	-	3	4.3
	- 고객동선통로	58	3.5	58	3.5
	- 방송센터	40	3.4	42	3.2
	- 문화교실	3	4.0	4	3.0
	- 공동물류창고	5	3.8	6	3.5
	- 시장전용 고객주차장	46	3.5	48	3.5
상점가	편의시설 전반적 노후도	9	3.1	10	3.1
	- 고객지원센터	5	2.8	6	3.0
	- 유아놀이방	-	-	-	-
	- 종합콜센터	-	-	-	-
	- 고객휴게실	2	3.5	3	4.0
	- 수유센터	-	-	-	-

61) 1점 : 매우불량, 2점 : 불량, 3점 : 보통, 4점 : 양호, 5점 : 매우 양호



구분		2015년(N=68)		2016년(N=69)	
		응답수	노후도	응답수	노후도
	- 물품보관함	2	3.5	3	4.0
	- 자전거보관함	1	4.0	2	2.0
	- 체육시설	1	1.0	1	3.0
	- 간이도서관	-	-	-	-
	- 쇼핑카트	-	-	-	-
	- 외국인 안내센터	-	-	-	-
	- 고객동선통로	9	3.7	10	3.5
	- 방송센터	1	4.0	2	4.0
	- 문화교실	-	-	1	4.0
	- 공동물류창고	1	3	1	3.0
	- 시장전용 고객주차장	3	3.3	3	3.7
	편의시설 전반적 노후도	1	4.0	1	4.0
	- 고객지원센터	1	4.0	1	4.0
지하도 상점가	- 유아놀이방	-	-	-	-
	- 종합콜센터	-	-	-	-
	- 고객휴게실	1	3.0	1	3.0
	- 수유센터	1	3.0	1	3.0
	- 물품보관함	1	3.0	1	3.0
	- 자전거보관함	-	-	-	-
	- 체육시설	-	-	-	-
	- 간이도서관	-	-	-	-
	- 쇼핑카트	-	-	-	-
	- 외국인 안내센터	-	-	-	-
	- 고객동선통로	1	3.0	1	3.0
	- 방송센터	1	4.0	1	4.0
	- 문화교실	-	-	-	-
	- 공동물류창고	-	-	-	-
	- 시장전용 고객주차장	1	3.0	1	3.0

표 4-19(계속)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체  
편의시설 노후도

- 전통시장 전체 소방시설 노후도는 3.5점이며, 상점가는 3.2, 지하도상점가는 4.0 순으로 나타남.

- 전통시장 소방시설은 소화전, 스프링클러, 공영소화기 등 모든 부분에서 3.5점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 1.

###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1.

##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표 4-20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체  
소방시설 노후도

(단위 : 개, 점)

구분		2015년(N=68)		2016년(N=69)	
		응답수	노후도	응답수	노후도
전통시 장	소방시설 전반적 노후도	58	3.4	58	3.5
	- 스프링쿨러	29	3.5	42	3.5
	- 소화전	54	3.6	56	3.6
	- 공용소화기	54	3.4	56	3.5
	- 경보기	42	3.6	50	3.5
	- 화재·가스감지센서	29	3.6	44	3.5
상점가	소방시설 전반적 노후도	7	3.7	10	3.2
	- 스프링쿨러	5	3.4	7	3.3
	- 소화전	5	3.4	7	3.1
	- 공용소화기	7	3.9	9	3.3
	- 경보기	3	3.7	6	3.7
	- 화재·가스감지센서	3	3.3	6	3.5
지하도 상점가	소방시설 전반적 노후도	1	4.0	1	4.0
	- 스프링쿨러	1	4.0	1	4.0
	- 소화전	1	4.0	1	4.0
	- 공용소화기	1	4.0	1	4.0
	- 경보기	1	4.0	1	4.0
	- 화재·가스감지센서	1	4.0	1	4.0

- 전통시장 전체 일반시설 노후도는 3.3점이며, 상점가는 3.2, 지하도상점가는 4.0 순으로 나타남
- 전통시장 일반시설은 냉·난방 시설이 각 3.9점으로 가장 높으며, CCTV와 엘리베이터, 배수시설 등이 각 3.6점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개, 점)

표 4-21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체  
일반시설 노후도

구분		2015년(N=68)		2016년(N=69)	
		응답수	노후도	응답수	노후
전통 시장	일반시설 전반적 노후도	58	3.3	58	3.3
	- CCTV	41	3.7	39	3.6
	- 공동수도시설	9	3.7	9	3.0
	- 공동화장실	56	3.7	58	3.5
	- 아케이드	43	3.5	44	3.3
	- 냉방시설	30	3.4	7	3.9
	- 난방시설	30	3.5	8	3.9
	- 가스시설	49	3.4	50	3.4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7	3.3	7	3.6

구분		2015년(N=68)		2016년(N=69)	
		응답수	노후도	응답수	노후
상점가	- 장애인용화장실	44	3.7	47	3.6
	- 배수시설	58	3.6	58	3.6
	- 실외 가로등	58	3.4	58	3.5
	- 전기배선 시설	57	3.5	58	3.4
	- 건물실내조명	58	3.5	58	3.4
	일반시설 전반적 노후도	9	3.4	10	3.2
	- CCTV	6	3.3	9	3.2
	- 공동수도시설	-	-	-	-
	- 공동화장실	6	3.7	8	3.6
	- 아케이드	1	4.0	-	-
	- 냉방시설	1	4.0	4	3.0
	- 난방시설	1	4.0	4	3.3
	- 가스시설	6	3.2	7	3.4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1	4.0	2	4.5
	- 장애인용화장실	3	3.7	4	4.5
	- 배수시설	9	3.1	10	3.3
	- 실외 가로등	9	3.4	10	3.3
	- 전기배선 시설	9	3.3	10	3.3
	- 건물실내조명	9	3.2	10	3.2
지하도 상점가	일반시설 전반적 노후도	1	4.0	1	4.0
	- CCTV	1	4.0	1	4.0
	- 공동수도시설	-	-	-	-
	- 공동화장실	1	4.0	1	4.0
	- 아케이드	1	3.0	1	3.0
	- 냉방시설	-	-	-	-
	- 난방시설	-	-	-	-
	- 가스시설	1	4.0	1	4.0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	-	-	-
	- 장애인용화장실	1	4.0	1	4.0
	- 배수시설	1	3.0	1	3.0
	- 실외 가로등	1	3.0	1	3.0
	- 전기배선 시설	1	4.0	1	4.0
	- 건물실내조명	1	3.0	1	3.0

- 전통시장 전체 홍보시설 노후도는 3.2점이며, 상점가는 3.5, 지하도상점가는 5.0 순으로 나타남.
- 전통시장 홍보시설은 시장안내도가 3.7점, 이벤트 광장이 3.5점, TV 광고 판과 LED 광고판, 아치/조형물이 각 3.4점 순으로 나타남.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1.

##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표 4-22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체  
홍보시설 노후도

(단위 : 개, 점)

구분		2015년(N=68)		2016년(N=69)	
		응답수	노후도	응답수	노후도
전통시장	홍보시설 전반적 노후도	43	3.5	48	3.2
	- 이벤트 광장	16	3.8	19	3.5
	- 테마거리	10	3.3	15	3.3
	- TV 광고판	7	3.4	8	3.4
	- LED 광고판	25	3.6	25	3.4
	- 시장안내도(배치도)	27	3.9	32	3.7
	- 아치/조형물	23	3.7	27	3.4
상점가	홍보시설 전반적 노후도	6	3.5	8	3.5
	- 이벤트 광장	2	4.0	5	3.4
	- 테마거리	2	3.5	3	3.7
	- TV 광고판	-	-	1	4.0
	- LED 광고판	4	4.0	4	4.3
	- 시장안내도(배치도)	4	3.5	6	3.7
	- 아치/조형물	3	4.0	4	4.3
지하도상점가	홍보시설 전반적 노후도	1	5.0	1	5.0
	- 이벤트 광장	1	4.0	1	4.0
	- 테마거리	-	-	-	-
	- TV 광고판	-	-	-	-
	- LED 광고판	1	4.0	1	4.0
	- 시장안내도(배치도)	1	5.0	1	5.0
	- 아치/조형물	1	2.0	1	2.0

### ③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도 비교

- 2016년 기준 전체 전통시장의 평균 편의시설 노후도는 3.0점이며, 충청남도  
는 전체 평균과 비슷한 3.1점으로 나타남.
- 상점가는 전국 평균 2.9점에 비해 3.1점으로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  
으며, 지하도상점가는 전국 평균 3.2점 대비 3.0점으로 약간 낮은 수준임.

(단위 : 개, 점)

구분		2015년(N=68)		2016년(N=69)	
		응답수	노후도	응답수	노후도
전통시 장	전국	1,439	3.2	1,441	3.0
	- 서울	216	3.2	216	2.9

구분		2015년(N=68)		2016년(N=69)	
		응답수	노후도	응답수	노후도
	- 부산	169	3.0	167	2.8
	- 대구	109	3.2	109	3.0
	- 인천	46	3.8	46	2.8
	- 광주	26	3.1	26	3.0
	- 대전	27	3.1	27	3.0
	- 울산	40	2.7	39	3.0
	- 세종	4	3.8	4	3.5
	- 경기	130	3.3	134	3.0
	- 강원	58	3.1	58	3.0
	- 충북	59	3.4	59	3.1
	- 충남	58	3.3	58	3.1
	- 전북	60	3.3	60	3.2
	- 전남	108	3.5	106	3.2
	- 경북	149	3.3	147	3.1
	- 경남	155	3.2	160	3.0
	- 제주	25	3.8	25	3.4
상점가	전국	135	3.3	157	2.9
	- 서울	33	3.2	36	2.9
	- 부산	6	3.7	7	3.1
	- 대구	5	3.2	7	3.3
	- 인천	2	3.5	2	3.0
	- 광주	8	3.5	9	3.0
	- 대전	9	2.9	11	2.5
	- 울산	7	3.0	9	3.1
	- 경기	14	3.5	21	2.9
	- 강원	4	3.8	5	2.2
	- 충북	2	3.5	2	3.5
	- 충남	9	3.1	10	3.1
	- 전북	11	3.1	11	2.9
	- 전남	9	3.6	10	3.3
	- 경북	6	3.0	7	2.6
	- 경남	8	3.1	8	3.1
	- 제주	2	4.0	2	3.0
지하도 상점가	전국	60	3.8	63	3.2
	- 서울	21	3.7	21	3.2
	- 부산	6	3.7	7	3.4
	- 대구	5	3.6	5	3.2
	- 인천	14	4.1	15	3.4
	- 광주	2	3.0	2	3.0

표 4-23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편의시설  
노후도 비교

#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1.

##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표 4-23(계속)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편의시설  
노후도 비교

구분		2015년(N=68)		2016년(N=69)	
		응답수	노후도	응답수	노후도
	- 대전	2	3.5	2	3.5
	- 경기	5	3.4	6	2.7
	- 충남	1	4.0	1	3.0
	- 전남	1	5.0	1	3.0
	- 경남	2	3.5	2	3.5
	- 제주	1	5.0	1	3.0

- 전체 전통시장의 평균 소방시설 노후도는 3.2점이며, 충청남도도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3.5점으로 나타남.
- 상점가는 전국 평균 3.2점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지하도상점가는 전국 평균 3.7점 보다 높은 4.0점으로 나타남.

(단위 : 개, 점)

표 4-24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방시설  
노후도 비교

구분		2015년(N=68)		2016년(N=69)	
		응답수	노후도	응답수	노후도
전통시장	전국	1,414	3.4	1,440	3.2
	- 서울	213	3.5	216	3.1
	- 부산	168	3.2	167	3.0
	- 대구	109	3.4	109	3.1
	- 인천	46	4.2	46	3.2
	- 광주	25	3.4	26	3.3
	- 대전	27	3.1	27	3.1
	- 울산	38	2.6	39	3.1
	- 세종	4	3.5	4	3.3
	- 경기	130	3.6	134	3.2
	- 강원	57	3.4	58	3.1
	- 충북	57	3.4	59	3.2
	- 충남	58	3.4	58	3.5
	- 전북	59	3.4	60	3.4
	- 전남	105	3.5	106	3.1
	- 경북	142	3.4	146	3.1
	- 경남	151	3.2	160	3.2
	- 제주	25	3.8	25	3.6
상점가	전국	126	3.5	157	3.2
	- 서울	31	3.7	36	3.0
	- 부산	6	3.5	7	3.4
	- 대구	5	3.6	7	3.3

구분		2015년(N=68)		2016년(N=69)	
		응답수	노후도	응답수	노후도
상점가	- 인천	2	4.5	2	3.0
	- 광주	7	3.3	9	3.4
	- 대전	8	3.1	11	2.7
	- 울산	6	3.2	9	2.9
	- 경기	13	4.0	21	3.3
	- 강원	4	3.5	5	2.4
	- 충북	2	3.0	2	3.5
	- 충남	7	3.7	10	3.2
	- 전북	11	3.2	11	3.2
	- 전남	8	3.8	10	3.5
	- 경북	6	2.8	7	3.1
	- 경남	8	2.8	8	3.4
	- 제주	2	4.5	2	3.5
	전국	60	4.0	63	3.7
지하도 상점가	- 서울	21	4.0	21	3.8
	- 부산	6	4.0	7	3.1
	- 대구	5	3.6	5	3.8
	- 인천	14	4.6	15	4.1
	- 광주	2	3.5	2	2.5
	- 대전	2	3.5	2	3.5
	- 경기	5	3.4	6	3.2
	- 충남	1	4.0	1	4.0
	- 전남	1	3.0	1	3.0
	- 경남	2	3.5	2	4.0
	- 제주	1	3.0	1	3.0

표 4-24(계속)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방시설  
노후도 비교

- 전체 전통시장의 평균 일반시설 노후도는 3.0점이며, 충청남도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3.3점으로 나타남.
- 상점가 또한 전국 평균 3.0점 보다 약간 높은 3.2점으로 나타났으며, 지하도상점가는 전국 평균 3.3점 보다 낮은 3.0점으로 나타남.

## 1.

###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1.

##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표 4-25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일반시설  
노후도 비교

(단위 : 개, 점)

구분		2015년(N=68)		2016년(N=69)	
		응답수	노후도	응답수	노후도
전통시장	전국	1,439	3.2	1,441	3.0
	- 서울	216	3.2	216	2.9
	- 부산	169	3.0	167	2.9
	- 대구	109	3.3	109	2.9
	- 인천	46	3.5	46	3.1
	- 광주	26	3.0	26	3.3
	- 대전	27	2.7	27	2.9
	- 울산	40	2.8	39	2.9
	- 세종	4	3.8	4	3.3
	- 경기	130	3.4	134	3.0
	- 강원	58	3.0	58	2.9
	- 충북	59	3.4	59	3.2
	- 충남	58	3.3	58	3.3
	- 전북	60	3.1	60	3.3
	- 전남	108	3.5	106	3.2
	- 경북	149	3.3	147	3.0
	- 경남	155	3.2	160	3.0
	- 제주	25	3.6	25	3.3
상점가	전국	135	3.3	157	3.0
	- 서울	33	3.3	36	2.9
	- 부산	6	3.2	7	3.4
	- 대구	5	3.6	7	3.0
	- 인천	2	4.5	2	3.5
	- 광주	8	3.5	9	3.1
	- 대전	9	3.1	11	2.7
	- 울산	7	2.7	9	2.8
	- 경기	14	3.6	21	2.9
	- 강원	4	3.3	5	2.8
	- 충북	2	3.0	2	3.5
	- 충남	9	3.4	10	3.2
	- 전북	11	3.0	11	2.7
	- 전남	9	4.1	10	3.2
	- 경북	6	3.0	7	3.1
	- 경남	8	3.3	8	3.1
	- 제주	2	4.0	2	3.5
지하도 상점가	전국	60	3.8	63	3.3
	- 서울	21	3.7	21	3.4
	- 부산	6	3.8	7	3.0



구분		2015년(N=68)		2016년(N=69)	
		응답수	노후도	응답수	노후도
	- 대구	5	3.8	5	3.2
	- 인천	14	4.0	15	3.7
	- 광주	2	3.0	2	3.0
	- 대전	2	3.5	2	3.5
	- 경기	5	3.8	6	2.8
	- 충남	1	4.0	1	3.0
	- 전남	1	5.0	1	3.0
	- 경남	2	3.5	2	3.5
	- 제주	1	3.0	1	3.0

표 4-25(계속)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일반시설  
노후도 비교

- 전체 전통시장의 평균 홍보시설 노후도는 3.0점이며, 충청남도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3.2점으로 나타남
- 상점가는 전국 평균이 3.1점인데 비해 충청남도는 3.5점으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하도상점가는 전국 평균 3.2점 보다 낮은 3.0점으로 나타남

(단위 : 개, 점)

구분		2015년(N=68)		2016년(N=69)	
		응답수	노후도	응답수	노후도
전통시장	전국	972	3.4	1,071	3.0
	- 서울	135	3.3	153	2.8
	- 부산	94	3.2	110	2.9
	- 대구	70	3.5	78	3.2
	- 인천	39	3.6	40	2.7
	- 광주	17	3.2	18	3.3
	- 대전	23	3.1	23	3.0
	- 울산	25	3.4	28	3.1
	- 세종	2	3.5	3	3.7
	- 경기	100	3.6	106	3.0
	- 강원	51	3.3	52	2.8
	- 충북	47	3.5	50	3.1
	- 충남	43	3.5	48	3.2
	- 전북	37	3.7	41	3.5
	- 전남	60	3.9	71	3.4
	- 경북	81	3.4	90	3.1
	- 경남	127	3.3	136	2.9
	- 제주	21	3.9	24	3.4

표 4-26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시설  
노후도 비교

##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1.

##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표 4-26(계속)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시설  
노후도 비교

구분		2015년(N=68)		2016년(N=69)	
		응답수	노후도	응답수	노후도
상점가	전국	91	3.5	111	3.1
	- 서울	18	3.1	23	2.9
	- 부산	5	3.2	5	2.8
	- 대구	3	3.3	6	3.0
	- 인천	1	5.0	1	3.0
	- 광주	7	3.3	8	3.3
	- 대전	8	3.4	9	2.9
	- 울산	5	3.4	5	3.0
	- 경기	13	3.9	16	3.3
	- 강원	2	3.0	4	2.3
	- 충북	1	2.0	2	3.0
	- 충남	6	3.5	8	3.5
	- 전북	7	3.3	8	3.1
	- 전남	6	4.5	7	3.1
	- 경북	3	3.3	3	3.0
	- 경남	5	3.4	5	4.0
	- 제주	1	4.0	1	2.0
지하도 상점가	전국	59	3.7	63	3.2
	- 서울	21	3.6	21	3.2
	- 부산	6	3.0	7	3.4
	- 대구	5	3.2	5	2.8
	- 인천	13	4.5	15	3.8
	- 광주	2	3.0	2	3.0
	- 대전	2	3.5	2	3.0
	- 경기	5	3.0	6	2.5
	- 충남	1	5.0	1	3.0
	- 전남	1	5.0	1	3.0
	- 경남	2	4.0	2	3.0
	- 제주	1	4.0	1	3.0

※ 시장별 평가 결과

(단위 : 점)

표 4-27

시장별 평가 결과

시장 형태	시장명	편의시설	소방시설	일반시설	홍보시설
전통 시장	공주산성시장	4	3	3	3
	산성시장활성화구역	3	3	4	3
	유구시장	3	5	4	4
	금산국제인삼시장	1	3	3	2
	금산수삼센터	2	3	3	3
	금산시장	3	2	3	3
	금산약초시장	3	5	3	3
	금산인삼쇼핑센터	3	4	3	3
	금산인삼전통시장	3	3	3	3
	마전시장	3	4	4	3
	중부프라자	4	4	4	4
	강경대흥시장	3	3	3	4
	강경젓갈시장	3	3	3	3
	연무안심시장	4	3	3	3
	연산전통시장	3	3	3	3
	화지중앙시장	4	4	4	4
	당진시장	4	4	4	4
	신평시장	3	3	3	
	합덕전통시장	3	4	2	4
	동부시장	4	4	4	3
	보령중앙시장	3	2	3	4
	보령한내시장	3	3	3	3
	웅천시장	3	4	4	3
	현대시장	3	3	3	3
	부여5일시장	3	4	3	2
	부여중앙시장	3	4	4	
	홍산시장	4	4	4	
	대산종합시장	5	4	4	3
	서산동부전통시장	4	4	4	4
	해미시장	3	4	3	
	해미종합시장	3	4	4	
	서천특화시장	3	4	3	3
	장항전통시장	4	4	4	3
	둔포전통시장	3	4	3	
	온양온천시장	4	4	4	4
	고덕시장	3	3	2	3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표 4-27(계속)

시장별 평가 결과

시장 형태	시장명	편의시설	소방시설	일반시설	홍보시설
	광시시장	2	3	4	
	덕산시장	1	1	2	1
	삽교시장	3	3	3	
	역전시장	4	4	4	
	예산상설시장	3	3	3	3
	예산시장	3	3	3	3
	남산중앙시장	1	3	3	4
	병천시장	2	4	3	4
	성정5단지시장	3	3	3	3
	성환이화시장	3	3	3	3
	중앙시장	3	4	3	3
	천안역전시장	1	2	2	2
	천일시장	3	4	3	3
	정산시장	4	4	4	4
	청양전통시장	4	4	4	4
	안면도수산시장	4	3	4	4
	태안서부재래시장	3	3	3	3
	태안특산물전통시장	4	4	4	4
	갈산정기시장	3	3	3	
	광천전통시장	5	5	3	4
	홍성상설시장	3	3	3	3
	홍성전통시장	1	3	3	3
상점가	금암동상점가	5	4	4	4
	대승빌딩상점가	3	4	3	3
	엄사상점가	3	3	3	4
	당진원도심상점가활성구역	3	3	3	3
	합덕중앙시장상점가	3	4	4	4
	배방상점가	2	2	3	
	대흥로상점가	3	3	3	
	두정동상점가	3	3	3	3
	천안신부문화거리상점가	3	3	3	4
	명동상점가	3	3	3	3
지하도 상점가	천안역지하상가	3	4	3	3

###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비사업 정책 진단

- 2016년 기준으로 충남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전통시장 58개 중 A등급은 5개, B등급 22개, C등급 21개, D등급 8개 그리고 E등급 2개 등임.

수준	A	B	C	D	E	총계
전통시장	5	22	21	8	2	58
상점가	3	5	1	1	-	10
지하도상점가	-	-	1	-	-	1

표 4-28

충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수준 현황

- 전국적으로 E등급은 전통시장이 61개이고, 상점가가 3개가 있음. 이중 충남에는 전통시장 2곳이 E등급임.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통시장	D	개수	277	46	28	36	7	4	1	9	-	19	4	11	8	8	14	35	43	4
		비중	100	16.6	10.1	13.0	2.5	1.4	0.4	3.2	-	6.9	1.4	4.0	2.9	2.9	5.1	12.6	15.5	1.4
	E	개수	61	11	10	8	-	-	1	1	-	7	-	-	2	-	1	8	10	2
		비중	100	18.0	16.4	13.1	-	-	1.6	1.6	-	11.5	-	-	3.3	-	1.6	13.1	16.4	3.3
상점가	D	개수	29	6	1	2	-	-	2	2	-	7	1	1	1	2	1	1	1	1
		비중	100	20.7	3.4	6.9	-	-	6.9	6.9	-	24.1	3.4	3.4	3.4	3.4	6.9	3.4	3.4	3.4
	E	개수	3	1	-	-	-	1	-	-	-	1	-	-	-	-	-	-	-	-
		비중	100.0	33.3	-	-	-	33.3	-	-	-	33.3	-	-	-	-	-	-	-	-
지하도상점가	D	개수	5	1	2	1	-	-	-	-	1	-	-	-	-	-	-	-	-	-
		비중	100	20.0	40.0	20.0	-	-	-	-	-	20.0	-	-	-	-	-	-	-	-
	E	개수	-	-	-	-	-	-	-	-	-	-	-	-	-	-	-	-	-	-
		비중	-	-	-	-	-	-	-	-	-	-	-	-	-	-	-	-	-	-

표 4-29

전국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D, E  
등급 현황

- 현재 시장정비사업대상이 되는 시장은 전통시장(등록시장, 인정시장) 중 상업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보수 및 수선이 불가능한 시장을 대상으로 추진

• 2016년 기준 등록 및 인정 시장은 1,441개로 집계되며, 이중 시장 활성화 수준이 매우 미비한 시장(E등급)은 61개로 파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6년 전통시장 활성화 평가 결과

## 1.

##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1.

### 충남지역

### 주요 인프라

### 실태

- 시장정비사업 승인 후 사업완료까지 평균 5년 4개월 소요(최단 사업기간 2년 10개월부터 최장 사업기간 9년 6개월 소요)
-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은 추진단계별로 다른 법을 준용으로 인해 행정적 지원 체계가 이원화되어 업무 연계성이 미흡
- 또한, 전통시장 개발 규모에 비해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함.
  - 서울시의 경우, 시장정비사업 완료구역의 평균 대지면적은, 3.865m<sup>2</sup>(주택 재개발사업 1만m<sup>2</sup>이상)
  -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에 비해, 토지 등 소유자와 임차상인 등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
- 이와 함께 정비사업 소요비용의 빠른 충당을 위해 주상복합 형태로 정비
  - 정비사업 관련 비용은 대부분 사업추진주체 자체 조달함에 따라, 주택분양을 분양을 통해 빠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 방식으로 개발 선호
  - 재건축 이후, 기존 전통시장의 판매시설 비중이 대폭 감소 (60% → 18%), 입점 상인 대부분 신규 입점상인으로 조사 (서울연구원, 2014년)
  - 시장정비사업이 해당 지역 상인들을 지원하기 보다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결과로 초래할 가능성 존재

## (5)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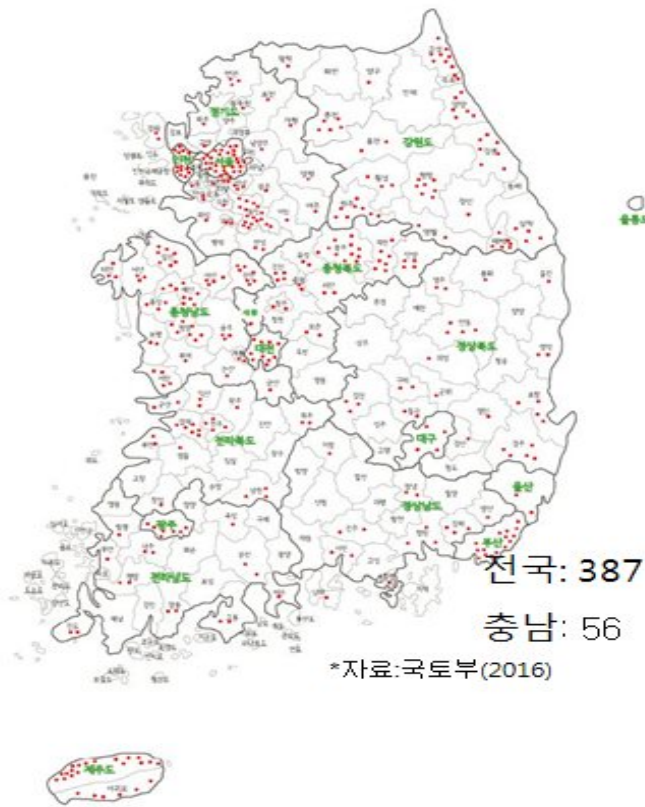
### 1) 실태

#### ① 시군별 현황

- 국토부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을 보면 전국 387곳이 있으며, 이중 충남에는 56곳이 있고, 이는 전국의 14.5%에 해당함.

그림 4-5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충남도청

- 2015.7월 ~ 16년 8월 충청남도 전수조사 결과 전체 56개 현장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예산에 전체 방치건축물의 16.1%(9개), 천안, 청양, 당진에 각각 12.5%(7개)가 밀집 분포

(단위 : %)

구분	합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현장	56	7	3	2	4	3	1	1
비율	100	12.5	5.4	3.6	7.1	5.4	1.8	1.8
구분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현장	7	1	1	4	7	3	9	3
비율	12.5	1.8	1.8	7.1	12.5	5.4	16.1	5.4

자료 : 국토교통부, 충남도청

표 4-30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분포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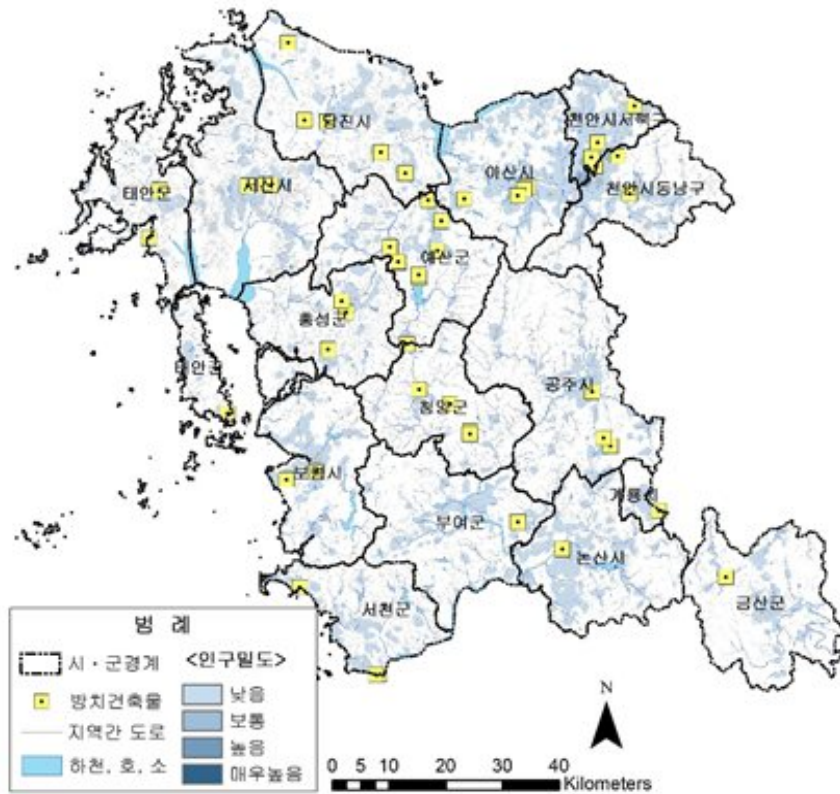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1.

##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그림 4-6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분포



자료 : 충남연구원

### ② 공사 중단 기간별 현황

- 방치기간이 10년 초과인 건축물이 전체의 59%인 33곳에 해당하며 5년 초과 건축물은 전체의 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충남의 공사중단 건축물 방치기간은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 방치기간과 유사한 비율로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보다 건설경기, 경제동향 등 시기에 따른 공사중단 패턴을 보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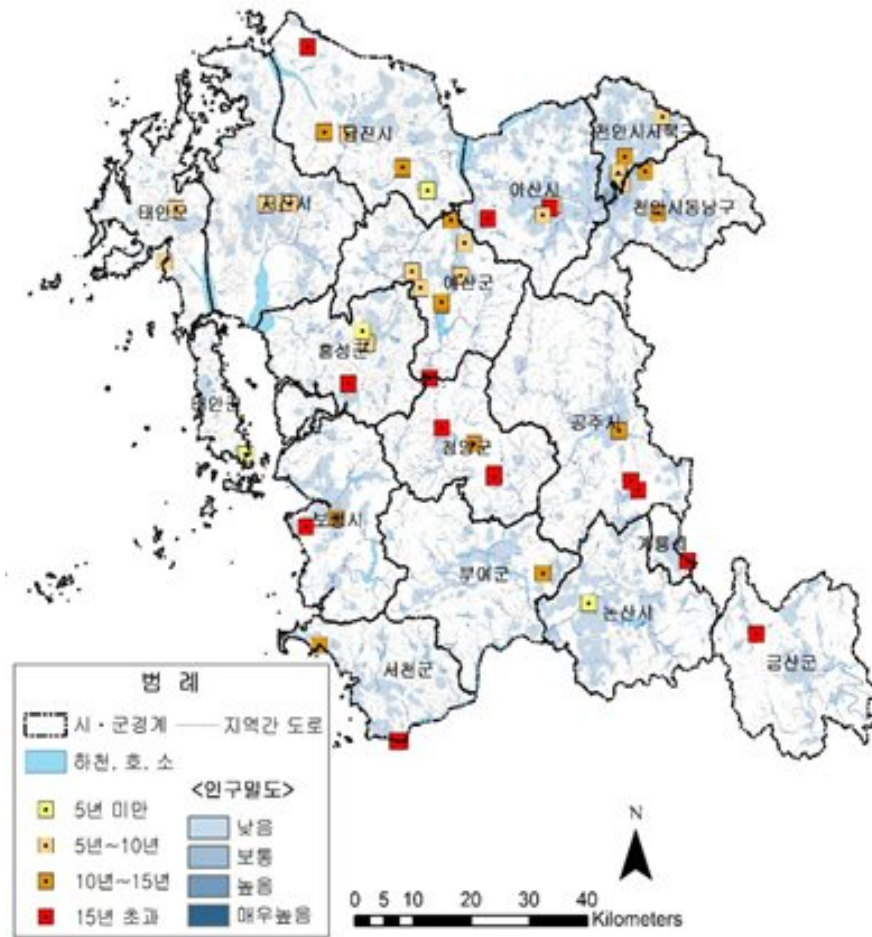
구분	계	5년 (60개월)이하	10년 (120개월)이하	15년 (180개월) 이하	15년 (180개월) 초과
총계	387	31	115	104	137
비율	100	8.0	29.7	26.9	35.4
충남	56	4	19	16	17
비율	100	7.1	33.9	28.6	30.4

표 4-31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공사  
중단 기간별 현황

그림 4-7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공사  
중단 기간별 현황



자료 : 충남연구원

### ③ 용도별 현황

- 방치된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이 전체의 55.3%(31개), 숙박시설 19.6%(11개), 판매시설 17.9%(10개)

##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1.

##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표 4-32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용도별 현황

- 전국 현황에 비하여 충남은 공동주택 용도의 공사중단 건축물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주로 충남의 북부지역에 인접하여 분포된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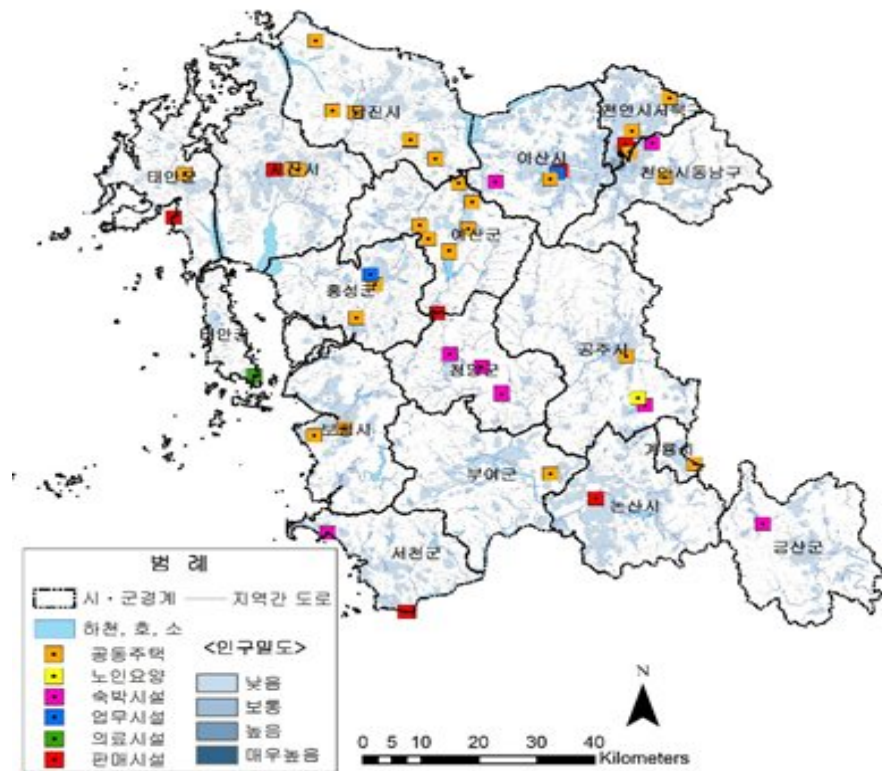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공동주택	노인 요양	숙박 시설	업무 시설	의료 시설	판매 시설	기타
총계	387	121	5	67	14	16	99	65
비율	100	31.2	1.3	17.3	3.6	4.1	25.6	16.8
충남	56	31	1	11	2	1	10	-
비율	100	55.3	1.8	19.6	3.6	1.8	17.9	-

자료 : 충남연구원

그림 4-8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용도별 현황



자료 : 충남연구원

### ④ 규모별 현황

- 방치된 건축물의 규모는 1만㎡~5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7.5%(21개), 1

천㎡~5천㎡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26.8% 순으로 나타남.

- 전국 현황에 비하여 충남은 1만㎡ 이상의 대규모 방치된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방치된 건축물의 용도상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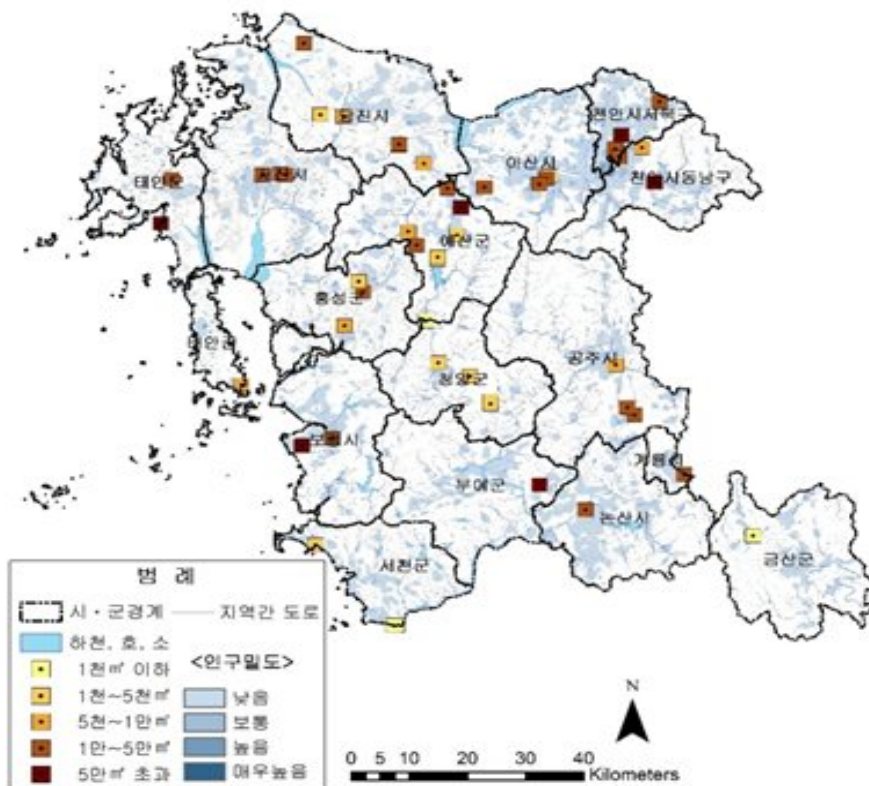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1천㎡ 미만	1천㎡ ~ 5천㎡	5천㎡ ~ 1만㎡	1만㎡ ~ 5만㎡	5만㎡ 초과
총계	387	64	113	67	117	26
비율	100	16.5	29.2	17.3	30.3	6.7
충남	56	6	15	8	21	6
비율	100	10.7	26.8	14.3	37.5	10.7

자료 : 충남연구원

표 4-33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규모별 현황



자료 : 충남연구원

그림 4-9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규모별 현황

# 1.

##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1.

##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⑤ 원인별 현황

- 방치된 건축물의 원인은 자금부족 59%(33개), 부도41%(23개)로 나타남.
- 전국현황과 유사하게 자금관련 문제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분석됨.

(단위 : %)

표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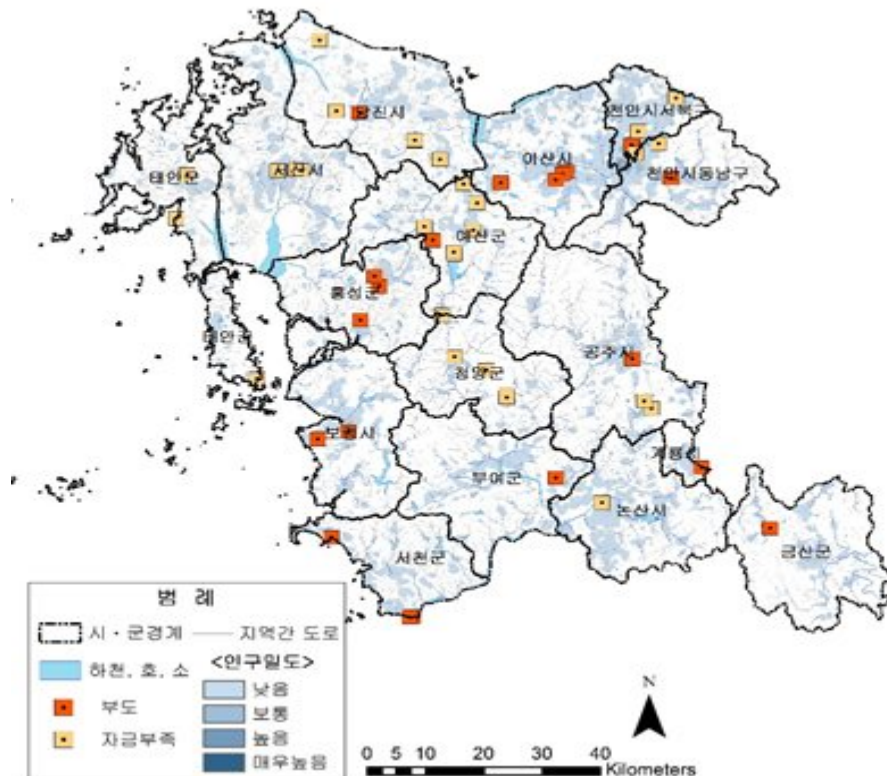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원인별 현황

구분	계	부도	분쟁	소송	자금부족	사업성 부족
총계	387	157	17	33	177	3
비율	100	40.6	4.4	8.5	45.7	0.8
충남	56	23	-	-	33	-
비율	100	41.0	-	-	59.0	-

자료 : 충남연구원

그림 4-10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원인별 현황



자료 : 충남연구원

## ⑥ 안전등급별 현황

-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등급은 C등급이 46.4%(26개), B등급이 21.4%(12개), D등급이 17.9%(10개)
- 전국 현황과 유사하게 B,C,D등급이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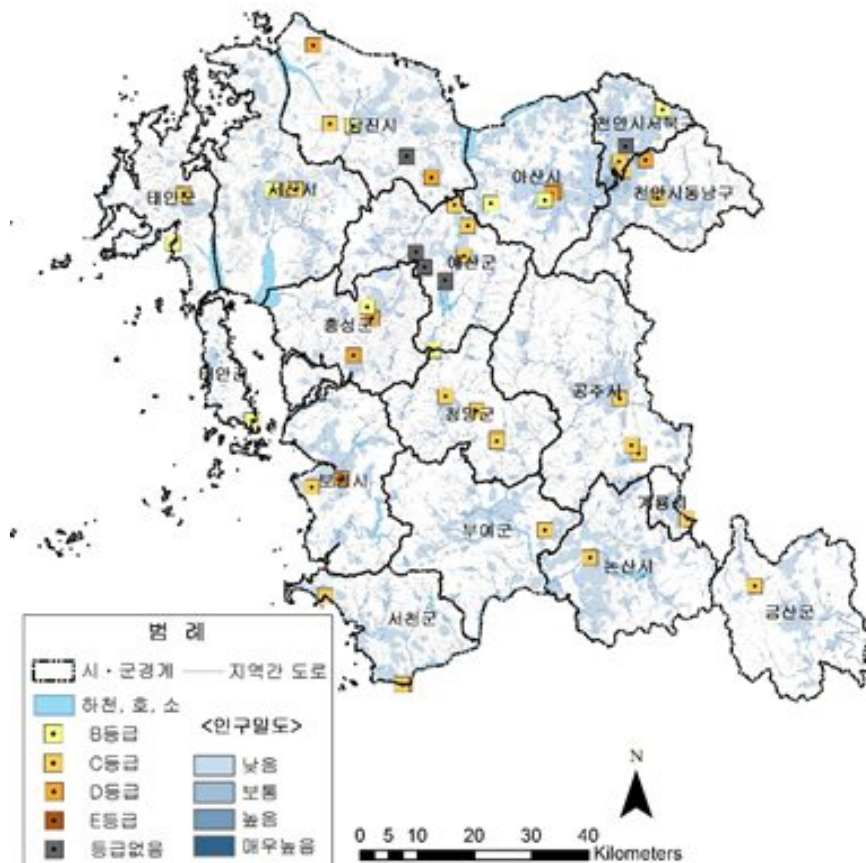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등급없음
총계	387	6	80	189	62	13	37
비율	100	1.6	20.7	48.7	16.0	3.4	9.6
충남	56	-	12	26	10	1	7
비율	100	-	21.4	46.4	17.9	1.8	12.5

자료 : 충남연구원

표 4-35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안전등급별 현황



자료 : 충남연구원

그림 4-11

시군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안전등급별 현황

## 1. 충남지역 주요 인프라 실태

## 2)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상의 문제

- 방치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실태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향후 처리를 위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체계화되어야 하나, 현재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명확한 대응 노력이 부재
- 현행 특별법에 의한 정비 및 활용방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함. 따라서 특별법 상의 정부가 제안한 정비 및 활용 기본방법을 참조하여 충남의 특성에 맞는 정비방법과 유형을 제시할 필요성 있음.
- 정비계획수립 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 제도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도 실질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2. 진단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 진단결과 요약

#### 1) 도로 및 도로시설물

- 도로의 경우,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로의 성능개선에 대한 투자는 미흡
- 도로 유지보수비도 시도에 집중되어 있는 바, 지방도와 군도에 대한 유지보수에 차질이 우려됨.
- 교량, 터널 등도 30년 이상된 노후 교량 및 터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 군도, 지방도 등 충남도내 전체 도로에 설치된 교량의 27.6%가 30년 이상된 교량으로서 관리가 필요
  - 터널의 경우, 현재는 30년 이상된 터널이 금산군과 청양군에 각각 1개소 등 2개(6.9%)에 불과하나, 20년 이상 터널이 전체의 15%를 넘고 있어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피

#### 2) 철도 및 항만

- 충남은 경부선, 경부고속선, 호남선 등 7개 노선의 철도가 통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철도는 중요한 교통수단임.
- 특히, 충남의 경우, 제조업 기반의 산업단지들이 많이 입지해 있는 지역으로서 물류적 수요가 많은 바, 철도역사의 기능 개선과 확충은 지역경제에 있어 중요한 과제임.
- 장항선 복선전철화 등 기능 개선 그리고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연결 등 철도노선의 확장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임.

## 2. 진단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2.

### 진단 결과

### 요약 및

### 시사점

- 충남에 있는 항만은 모두 7개로서 무역항 5개, 연안항이 2개가 소재해 있어 타 광역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진 상황임.
- 평택·당진항은 우리나라 항만 중 가장 성장이 빠른 항만으로서 조속한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 확장이 요구되고 있는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이나 속도가 여전히 느린 상황
- 또한, 노후화가 심한 홍원항과 외연도항 등 지자체 관리의 어항들의 노후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는 바, 지방 어항에 대한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3) 산업단지

- 충남지역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2018년 3월 현재, 24개 산업단지로서 충남지역의 산업단지정책은 주로 신규 단지의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 왔음.
- 상대적으로 산업단지의 정비나 고도화와 관련된 정책적 관심은 매우 낮았음.
- 이로 인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의 휴폐업 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제2일반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로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정비를 위한 세부 정비계획이 마련되고 있지 않음. 당초 2018년 진입도로 확장 등 정비사업들이 착수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요원한 상황
- 특히, 전체 산업단지 중 41.3%인 52개 산업단지가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로서 특히, 농공단지의 경우, 55.8%가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로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4) 전통시장 및 상가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전통시장에 대한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노후화에 대한 상인들과 이용자들의 시각은 노후화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 충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도 평가 결과, 전통시장의 각종 일반, 편의, 홍보 등 거의 대부분 시설에 대한 노후도에 대하여 매우 낮게 평가되어지고 있음.
- 특히, E등급 판정을 받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비사업이 필요. 전통시장 정비사업들이 평균적으로 5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히 착수 필요
- 또한 정비사업의 범위도 특정 시설이 아닌 방재시설 등 종합적인 정비사업이 필요함.

#### 5)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 충남 지역에 있는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56곳으로서 전국의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의 14.5%를 차지하고 있음.
- 방치 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실질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바, 정비 및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정확한 실태 진단이 필요함.
- 또한,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정비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

## 2. 진단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2) 시사점

- 충남지역에 있어 도로 부문의 인프라의 정책적 이슈는 지속적인 도로 확충을 통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산업입지로서의 충남지역의 기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지방도가 많은 충남의 지역적 특성 상 지방도의 확충과 함께 기능의 고도화를 위한 확장 및 포장 등 정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
- 또한, 지속적인 정비를 위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적정 예산의 확보가 필요
- 철도시설의 경우에는 충남 지역 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철도의 노선 확충과 연결구간의 지속적인 확대, 철도 역사의 개발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
- 항만 시설의 경우, 중국과의 수출 및 수입이 증대되고 환황해권 거점 지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항만 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는 중요한 인프라 정책 과제라 할 수 있음.
- 특히, 국가의 항만 정비계획 및 배후단지개발 계획에 포함된 평택·당진항에 대한 조속한 투자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방 어항들에 대한 노후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지방 어항들의 기능 고도화 및 시설의 확충에 초점을 맞춘 지방 어항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
- 전통시장의 노후화에 대응한 종합적인 정비 및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안정적 예산의 확보가 중요함.

- 충남에 있는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중요한 지역의 인프라 정책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전국의 방치 건축물 중 14%가 넘는 건축물들이 충남에 집중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정비 및 활용계획이 수립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음.

## 2.

---

### 진단 결과 요약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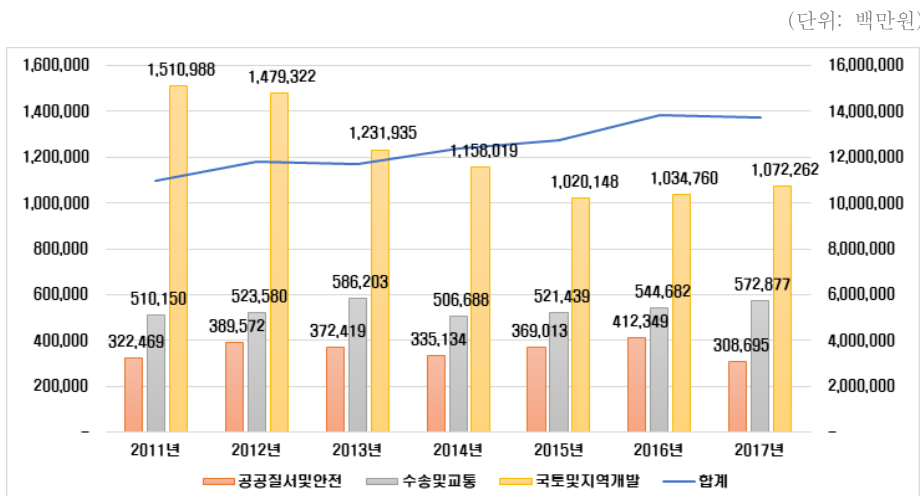
## 제5장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1) 총괄 현황

##### 1) 인프라 관련 예산 편성 추이

- 인프라 시설과 밀접한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의 세출의 증가는 미미한 상황.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도 2016년 소방 예산 증액을 제외하면 미미한 증가세



자료 : 지방재정 365

그림 5-1

충남지역 SOC  
예산 편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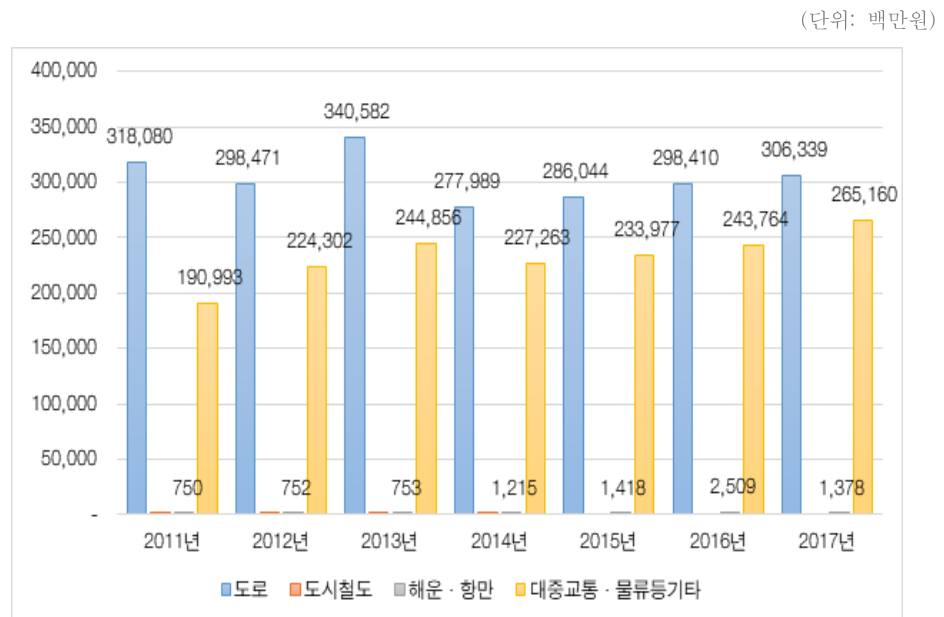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SOC 예산으로 분류되어지는 수송 및 교통 예산은 최근 7년 동안 연평균 2.0%가 상승하는데 그쳐 전체 세출 예산의 연평균 성장률 3.8%에 못 미치고 있음.
-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의 경우에는 최근 7년 동안 연평균 5.6%p씩 감소하여 왔음.

- 수송 및 교통 예산 중에서는 도로예산이 최근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2013년 대비 여전히 낮은 상황. 해운·항만 예산은 최근 항만 개발과 관련하여 다소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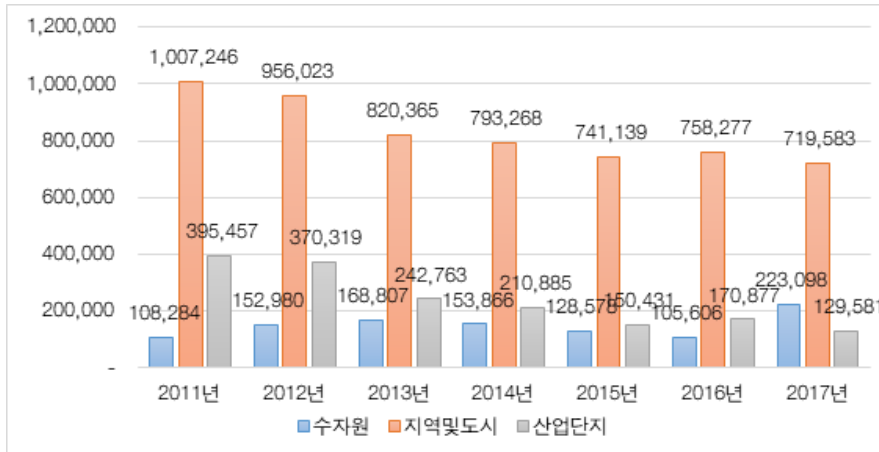
그림 5-2  
SOC 예산 중  
수송 및 교통  
예산 편성 추이



자료 : 지방재정 365

-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중에서는 지역 및 도시와 산업단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그러나, 수자원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최근 7년간 수자원 예산은 연평균 12.8%p씩 증가하여 왔음.
- 반면, 최근 7년간 지역 및 도시 예산과 산업단지 예산은 각각 연평균 5.5%p, 17.0%p씩 감소하여 왔음.

(단위: 백만원)



자료 : 지방재정 365

그림 5-3

SOC 예산 중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편성 추이

## 2) 인프라 투자 자원 현황

- 충남의 세입 예산의 구성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과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구성되는 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져 있음.
- 2017년 충남의 세입예산 총액은 13조 7,115억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28.0%로서 3조 8,378억원임. 이중 지방세 수입은 2조 9,445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총액의 21.5%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괄	10,964,032	11,815,160	11,682,978	12,387,380	12,722,233	13,853,263	13,711,533
지방세수입	1,954,382	2,148,005	2,190,699	2,251,675	2,340,401	2,754,338	2,944,575
세외수입	1,909,794	1,912,903	1,825,181	938,253	842,070	942,270	893,228
지방교부세	2,380,877	2,528,151	2,625,596	2,773,097	2,794,666	2,807,053	2,935,485
조정교부금등	215,007	221,700	243,588	250,280	261,597	315,214	331,321
보조금	4,273,135	4,730,976	4,508,413	4,971,730	5,260,764	5,373,819	5,456,529
지방채	230,836	273,425	289,500	215,845	224,968	200,229	30,5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0	0	0	986,499	997,767	1,460,339	1,119,896

자료 : 지방재정 365

표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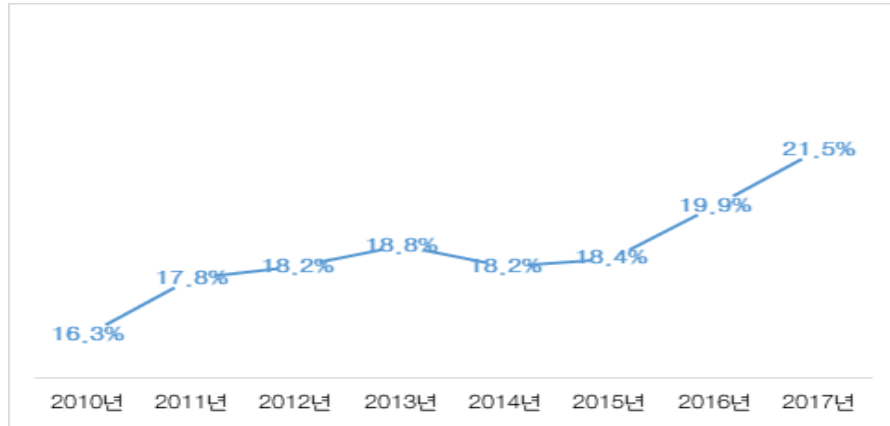
충남 세입 예산  
추이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그림 5-4  
충남 세입 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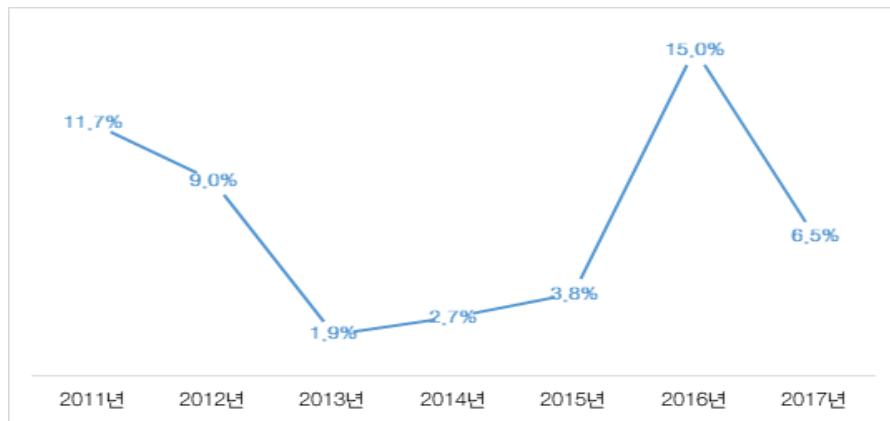
- 지방세 비중은 최근 8년간 연평균 7.9%p씩 증가하여 왔음. 전체 세입예산 대비 비중은 다소 상승하고 있는 상황.



자료 : 지방재정 365

- 자체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 증감률은 2011년~2013년까지 지방세 증가율이 다소 감소하다가, 2015년 이후 큰 폭의 상승 하였으나, 최근 다소 증가율이 축소

그림 5-5  
지방세 수입 비중 증감률 추이



자료 : 지방재정 365

- 충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프라 관련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 등 1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등 총 7개의 특별회계가 운영 중



구분	회계명	개수
기타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청소재도시건설특별회계,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6개
공기업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1개

표 5-2

특별회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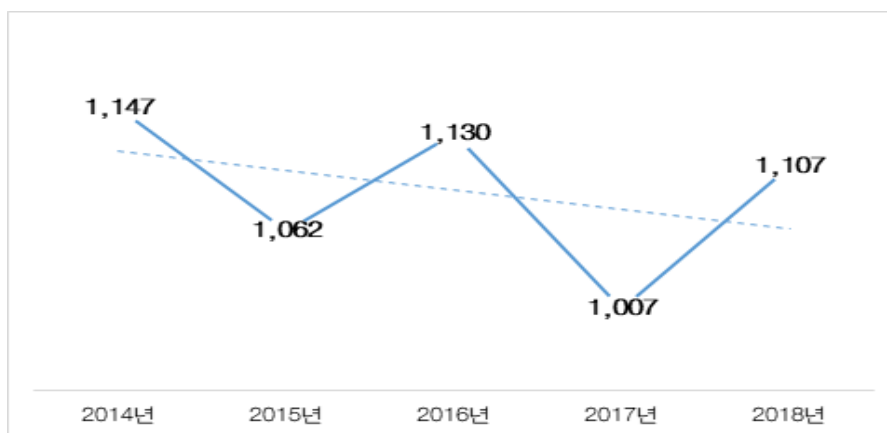
## (2) 주요 부문별 인프라 투자 현황

### 1) 도로 및 교통

#### ① 도로 및 도로시설물

- 2018년 본예산 기준으로 도로 예산은 1,273억원 규모임. 이 중에서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은 총 1,107억원으로 전년대비 99억원 증가한 규모임.
- 최근 5년간(2014~2018년) 예산 편성에 있어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예산은 다소간의 등락폭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단위: 억원)



자료 : 충남도청 재정공시

그림 5-6

도로 및  
도로시설물 예산  
편성 추이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예산 중 주요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를 보면, 최근 지방도 건설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 편성되어지고 있음. 또한, 도로안전시설 확충 예산도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

표 5-3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예산의  
주요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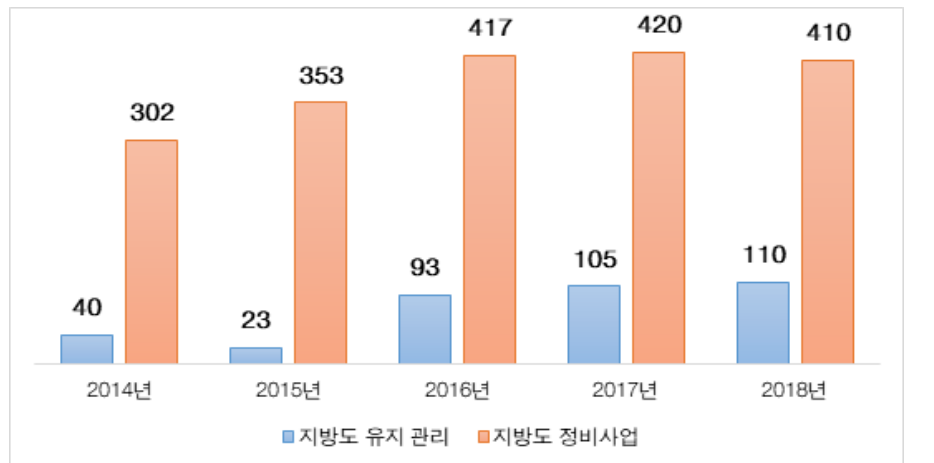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604	507	420	346	421
도로안전시설 확충	182	87	93	72	60
지방도 유지 관리	40	23	93	105	110
지방도 정비사업	302	353	417	420	410

주 : 각년도 본예산 기준  
자료 : 충청남도 재정공시

- 반면에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즉, 신규보다 유지관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5-7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예산 편  
성 추이



주 : 각년도 본예산 기준  
자료 : 충청남도 재정공시

- 충남의 최근 도로부문 투자의 방향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교통안전 위험요인의 제거로 자동차사고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
- 지역최대 현안인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도 38호 노선의 연장 등 신규도로사업의 차질 우려

- 2021년까지 지방도 노후포장 337km 보수에 필요한 396억원을 매년 50억 원씩 지속 투자 및 교량, 터널 등 내진보강이 필요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투자(2018~22년) 등이 예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유지관리 예산의 증대가 불가 피한 상황
-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은 2,774개소로서 현재, 1,234개소가 완료되었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540개소임.
- 신규 도로건설 예산의 축소로 인하여 현재 추진 중인 보령-태안 국도건설사업, 보령-부여 국도 건설사업, 성주 우회도로 등과 향후 예정된 신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 예상

## ② 철도 및 공항

- 최근 5년간 철도 관련 투자 예산은 2018년 예산에 반영된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건설사업 관련 분담금 2억원이 유일
- 현재 추진 중인 충남지역과 관련된 철도시설 사업은 3건으로서, '장항선 복선전철화',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그리고,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등이 건설 추진되고 있음.
- 공항부문에 대한 투자는 현재 없음. 충남은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광역도로써 최근 서산비행장(공군)의 민항 유치사업이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2017.12월)

### ※ 서산공항 민항 유치사업 개요

- 사업비 : 490억원
- 사업내용 :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장 1190만㎡에 49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1.4km)를 설치해 민항으로 이용
- 목표년도 : 2023년 취항 목표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그림 5-8

서산공항 민항 유치사업 계획



자료 : 헬로 TV 뉴스

## ③ 항만·해운 및 해양

- 항만·해운 및 해양 관련 예산 중 시설 투자와 관련된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 다만, 연안정비 예산을 제외하면, 항만 및 해양레저기반 구축 등 해양 개발 부분 예산 투입은 미흡

(단위: 억 원)

표 5-4

항만·해운 및 해양 관련 인프라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항만개발	9	4	7	6	5
연안정비	11	10	12	34	62
해양레저기반 구축	-	19	32	41	32
계	20	33	51	81	99

주 : 각년도 본예산 기준

자료 : 충청남도 재정공시

## 2) 산업 및 경제

-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투자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투자만 증가할 뿐 대부분 감소하고 있는 상황

(단위: 억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산업단지	342	363	385	278	196
지역산업 진흥 및 고도화	124	16	54	68	53
첨단산업 육성·지원	22	61	26	41	42
친환경도시 시범사업	-	-	-	22	78
시장현대화	75	69	33	28	31
계	563	509	498	437	400

주 : 각년도 본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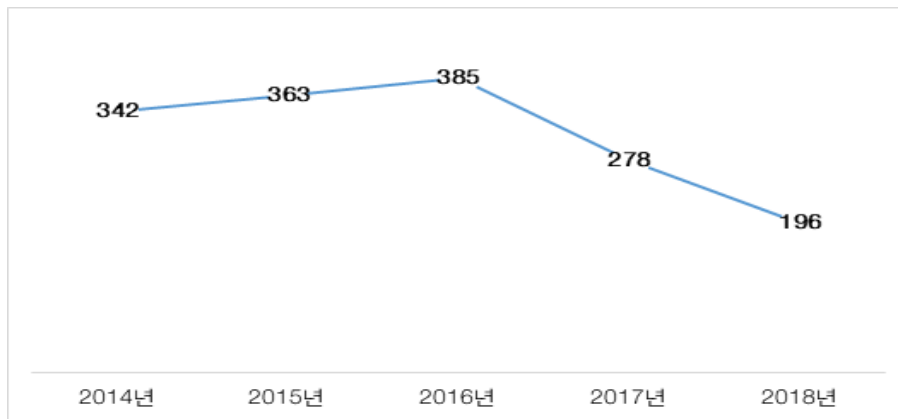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재정공시

표 5-5

산업·경제 분야  
인프라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 특히, 산업단지 예산은 연평균 13.0%p씩 감소하고 있어, 최근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에는 반대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단위: 억원)



자료 : 충청남도 재정공시

그림 5-9

산업단지 조성 관  
련 예산 편성 추  
이

-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도 2014년과 2015년 예산이 집중 투자되었으나, 최근들어 주춤하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 재래시장 화재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과는 역행

### 3) 도시·주택

- 충남 지역의 도시 및 주택 분야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국가 지원사업이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선도사업 추진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1.

##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표 5-6

도시 및 주택  
관련 인프라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	-	-	2	2
취약지역 개조사업	-	-	7	22	24
도시생활환경 개선	9	7	12	11	22
기초생활기반 확충	-	-	-	-	20
도시재생 사업 (선도/일반사업)	-	44	50	17	3
농촌생활환경 정비	46	43	39	41	39
계	55	94	108	93	110

주 : 각년도 본예산 기준  
자료 : 충청남도 재정공시

-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도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예산 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성과 미흡
- 충남의 핵심 거점 지경인 내포신도시, 세종시, 아산신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권역별 개발임.

그림 5-10

충남 권역별  
특화개발 계획



자료 : 충청남도



- 충남지역의 대표적 기업도시는 태안관광레저기업도시 조성임. 동 사업의 경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하여 2007년 실시계획이 승인 되어 본격 착수 → 현재 부지조성공사 중



그림 5-11  
태안관광레저  
기업도시 조성  
조감도

- 충남지역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은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타운(도청 및 유관기관 등) 조성이 진행 중임.



그림 5-12  
내포신도시 조성  
조감도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당초 계획된 공공기관 및 충남대 유치 등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바, 내포 신도시의 편의시설 등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들의 조기 마무리 필요.
-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미착공된 지역의 조기 착공과 각종 기반시설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필요

## 4) 공원·녹지

- 충남은 최근 대규모 도시공원(도시 숲) 조성,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공원 녹지 및 도심공원 조성을 위해 예산 투입을 확대함.

(단위: 억원)

표 5-7

공원·녹지 관련  
인프라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사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방댐 시설	141	149	171	164	131
자연휴양림	16	24	35	32	39
도시숲, 명상숲,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30	28	33	43	39
치유의 숲 조성	-	-	4	8	24
숲길 조성 관리	17	18	16	14	18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도시공원)	43	18	18	12	13
계	247	237	277	273	264

주 : 각년도 본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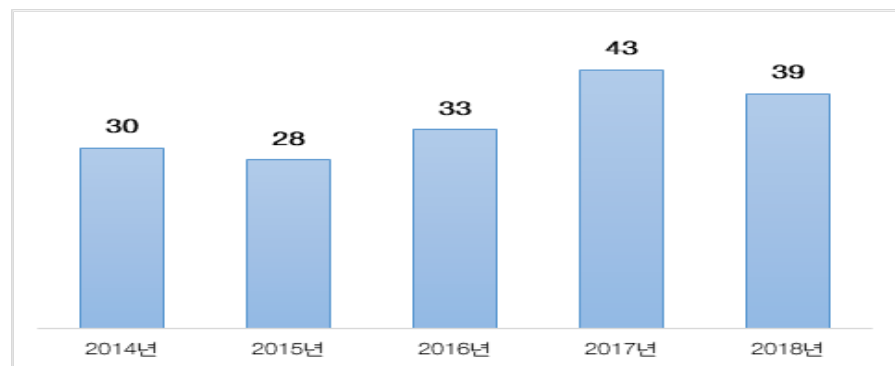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재정공시

- 현재 추진 중인 충남에서 집중 추진 중인 공원·녹지 정책으로는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 확충임.

(단위: 억원)

그림 5-13

도시숲, 명상숲,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예산  
편성 추이



자료 : 충남도청 재정공시 각년도 본예산



- 도시숲, 전통마을숲, 치유의 숲 등 도심 내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자료 : 산림청

그림 5-14

아산 도시숲, 전경

- 또한, 산림자원 보호와 관련, 사방댐 등 산림재해 방지 사업과 산림복원 사업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 중. 그러나, 2018년 사방댐 관련 시설 예산이 대폭 축소
-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휴양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휴양림 보완 및 복합재해 대응 휴양림 조성 등 추진

## 5) 환경

- 충남의 환경 관련 인프라 정책은 금강권역 및 안성천수계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하천정비사업과 노후 하수관거 및 상수도 시설 정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임.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표 5-8  
환경 관련 인프라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사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722	684	730	721	716
소하천 정비사업	181	215	191	202	201
생태하천 복원사업	107	197	177	212	182
노후상수도 정비	-	-	-	73	139
하수관거 정비	748	508	634	665	664
공공하수처리시설	470	393	341	251	246
도시침수대응	316	592	377	209	94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35	336	396	314	314
폐기물처리시설	26	33	18	28	44
계	2,879	2,925	2,846	2,647	2,556

주 : 각년도 본예산 기준  
자료 : 충청남도 재정공시

- 최근 노후 상수도 정비 및 하수관거 정비 예산, 생태하천 정비사업의 증액 편성 등이 있었으나, 실제로 하천정비 및 상·하수도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등 전체 예산은 감소
- 충남은 2016년 10월, K-Water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 충남도내 지원 대상 6개 군 중 3개 군(부여군, 서천군, 보은군)에 대해 국고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착수
  - 충남의 대상 6개군 중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42억원으로 추정
  - 2017~2018년 2년 동안 투입된 총 예산은 212억원 투자
- ※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 수도관 정비, 유량 감시체계 구축 그리고 누수탐지와 복구, 블록시스템 구축 등
- 하수도 정비사업은 노후 하수관거의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 도시침수대응 관련 시설 확충 그리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중점 사업 내용임.

- 2018년 예산안에는 하수관거 정비 및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979억을 투입기로 함.

## 6) 안전

-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우수 저류시설의 설치사업 그리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등이 있으며, 최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이 2017년부터 본격 차수

(단위: 억원)

사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	-	-	11	10
우수 저류시설 설치	251	120	120	52	33
재해위험지역정비(시군 자본)	486	464	344	361	365
재해위험지역정비(도)			10	26	30
계	737	584	474	450	438

주 : 각년도 본예산 기준  
자료 : 충청남도 재정공시

표 5-9

안전 관련 인프라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 2017년 하반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누락, 변동된 시설물 31종에 대한 내진 조사 시행 → 전수조사를 통해 내진보강 계획을 새롭게 수립, 2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 수해 방지를 위한 우수 저류시설의 경우, 급격한 예산 감축으로 인하여 시군 단위의 우수 저류시설 수요에의 적절한 대응 미흡 우려
- 재해위험지역정비를 위한 예산 배정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충남지역의 경우, 소하천, 재해위험저수지 등이 많이 소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
- 충남은 2018년 재해 예방 5개 사업 83개 지구에 대해 1,143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표 5-10

2018년  
재해위험지역  
정비 계획

재해예방사업	주요내용	대상지구	사업비
재해우선개선 지구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주 유구 하천 11km와 교량 3개소 정비 : 85억 2,000만원</li> <li>예산 이티 하천 5.05km·교량 5개소 정비 : 55억 4600만원</li> <li>보령 간치 포장 1527m²·교량 1개소 정비 43억 6600만 원 등</li> </ul>	16개	500억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주 산소골 1개 지구 : 제방 보수, 여수로·비상수문 설치 등</li> </ul>	1개	20억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양 장곡 사면 정비 8억 원, 천안 지산 사면 정비 6억 원, 홍성 하웅 웅벽 설치 6억 원 등</li> </ul>	17개	90억
소하천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령 봉덕(25억 6800만 원), 천안 감절(19억 8800만 원), 금산 신대리(17억 9200만 원), 계룡 검배천(17억 2200만 원) 등</li> </ul>	48개	504억
우수 저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안 불당 1개 지구</li> </ul>	1개	132억
계		83개	

자료 : 충청남도 보도자료

## 7) 문화·관광 및 체육

- 문화·관광 및 체육 관련 예산 편성 추이를 보면, 예산 규모의 변동이 심한 상황. 이는 신도시 개발 등과 연계되어 있는 바, 단기적 수요에 따라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체육시설의 경우, 지방체육시설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최근 축소되고 있는 상황
  - 현재 BTL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설은 천안청당동 생활체육공원, 아산실내 체육관 등 2건
  - 현재 내포신도시에 도립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중. 2019년 착공, 2020년 개관 예정

(단위: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체육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11	4	1	10	11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30	9	13	19	17
	생활체육공원 조성	6	6	6	5	9
	지방 체육시설	79	88	102	69	122
	운동장생활체육시설	28	25	21	28	14
	노인건강체육시설	-	-	2	8	2
	국민체육센터	27	56	32	-	-
	체육시설 민자사업(BTL)	-	-	-	12	11
	소계	181	188	177	139	175
문화	공공도서관 건립	-	9	25	84	80
	작은 도서관	5	4	2	1	0.5
	도립도서관 건립(내포신도시)	162	105	62	53	12
	공립박물관 건립	1	2	5	15	18
	공립미술관 건립	5	2	5	15	-
	생활문화센터 조성	-	-	9	5	7
	문화시설 민자사업(BTL)	18	20	20	19	19
	소계	354	310	285	312	292.5
관광	관광지 개발	2	3	5	10	27
	광역권관광자원개발	28	22	16	17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	-	33	25	23	33
	문화관광자원 개발	43	35	22	68	95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	27	20	3	16	8
	소계	427	403	353	430	447.5
	계					

주 : 각년도 본예산 기준, 2014~2016년 체육시설 민자사업(BTL)은 각 부문에 포함.  
 자료 : 충청남도 재정공시

- 문화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 추이를 보면, 내포신도시에 건립하는 충남도서관(도립)이 완공되었고, 공공도서관 확충과 공공 미술관 및 박물관 건립이 마무리 단계임.
- 현재 추진 중인 문화시설 관련 민자사업은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4건임.

표 5-11

문화·관광·체육  
분야 인프라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그림 5-15

충남도서관 전경



자료 : 충청남도

-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관광자원 개발 등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서부 내륙권 최대의 광역관광개발사업인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 중. 동 사업은 충남·세종·전북 등 시·도 40개 사업에 6167억 원(국비 2627억 원)이 투입 예정. 이중 충남은 11개 사업 2,129억이 투자될 예정(국도 77호 건설사업의 완료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대)

그림 5-16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구간



자료 : 국토교통부

### (3) 중기 인프라 투자 정책 전망

#### 1)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부문별 지출계획

-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향후 5년동안 재정규모는 연평균 2.3%의 성장률을 예정

(단위 : 십억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6,617	6,766	6,934	7,037	7,234	34,588	100	2.3
일반공공행정	1,339	1,288	1,179	1,082	1,020	5,908	17.1	-6.6
공공 질서및 안전	297	310	324	350	355	1,637	4.7	4.6
교육	322	326	333	340	347	1,668	4.8	1.9
문화 및 관광	280	287	251	212	206	1,238	3.6	-7.5
환경보호	362	364	364	356	348	1,794	5.2	-1.0
사회복지	1,887	2,021	2,151	2,427	2,478	10,965	31.7	7.0
보건	136	147	158	206	185	832	2.4	7.9
농림해양수산	1,018	1,021	1,064	1,062	1,073	5,239	15.1	1.3
산업중소기업	347	357	387	426	389	1,907	5.5	2.9
수송 및 교통	284	310	403	233	513	1,742	5.1	16.0
국토 및 지역개발	293	308	296	321	311	1,530	4.4	1.5
과학기술	51,303	24,148	23,405	20,323	8,345	127,524	0.4	-36.5

자료 : 충청남도 재정공시

- 연평균 신장률로 수송 및 교통 분야 16.0%, 보건 분야 7.9%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7.0% 순으로 높음. 반면, 과학기술 분야는 연평균 36.5%p씩 감소 예정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7.5%), 환경보호 분야(-1.0%)도 축소 편성 예정
- 2013~17년 지난 5년간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사회복지 27.4%, 지역경제(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포함) 25.1% 등 사회복지와 경제 분야에 50%를 넘게 지출하여 왔음.

표 5-12

2018~22  
중기지방재정계  
획의 부문별  
투자계획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표 5-13

2013~17 부문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십억원, %)

구분	예산편성 현황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3,950	4,150	4,217	4,557	4,735	21,609	100.0%	4.6%
일반공공행정	342	398	361	501	515	2,117	9.8%	10.7%
공공질서 및 안전	247	228	230	205	116	1,025	4.7%	-17.3%
교육	246	250	258	295	319	1,368	6.3%	6.7%
문화 및 관광	141	155	184	210	240	930	4.3%	14.3%
환경보호	344	352	374	357	328	1,754	8.1%	-1.2%
사회복지	936	1,147	1,205	1,283	1,359	5,931	27.4%	9.8%
보건	75	73	83	115	109	456	2.1%	10.0%
농림해양수산	786	759	769	794	854	3,962	18.3%	2.1%
산업중소기업	71	89	70	95	101	427	2.0%	9.4%
수송 및 교통	209	149	142	153	142	796	3.7%	-9.2%
국토 및 지역개발	228	203	165	157	241	993	4.6%	1.4%
과학기술	7	6	13	13	11	49	0.2%	12.8%

자료 : 충청남도 재정공시(2017년 재정공시자료)

- 지난 5년간의 예산 편성 추이와 비교해 볼 때, 2018~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에는 현재의 사회복지 분야에의 투자 확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함.
- 또한, 환경, 교육,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을 축소 편성하는 한편, 산업·중소기업 분야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예산을 다소 확대 편성하겠다는 방침임.

## 2) 중기 인프라 부문 투자 계획

- 향후 5년간의 분야별 예산 운용계획에 있어 SOC 예산인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예산은 연평균 16.0%로 투자를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임.
  -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경우에도 규모는 크지 않으나, 연평균 1.5%의 투자를 증가시키겠다는 방침임.



(단위 : 십억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송 및 교통	284	310	403	233	513	1,742	5.1	16.0
국토 및 지역개발	293	308	296	321	311	1,530	4.4	1.5

자료 : 충청남도 2018~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14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SOC 투자 계획

- 세부적으로는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도로, 대중교통 및 물류 등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경우에는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자는 큰 변동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

(단위 : 십억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송 및 교통	284	310	403	233	513	1,742	4.7
도로	242	224	334	163	442	1,405	3.8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41	86	69	69	71	337	0.9
국토 및 지역개발	293	308	296	321	311	1,530	4.2
수자원	119	120	121	122	124	606	1.6
지역 및 도시	152	159	145	169	157	782	2.1
산업단지	21	30	30	30	30	142	0.4

자료 : 충청남도 2018~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15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SOC 세부항목별 투자 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는 산업단지 투자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의 부재는 문제

### 3) 주요 부문별 중기 인프라 투자 계획

#### ① 산업·경제 분야

- 2018~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산업·경제 분야의 인프라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의 진흥 및 고도화 등을 위한 인프라의 공급에 집중할 예정임.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표 5-16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산업·경제 분야 인프라 투자 계획

- 먼저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하는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지원,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 등이 있음.

(단위 : 억원)

사업명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36	7	7	7	7	7	국가지원
지역특화(주력) 산업 육성	385	68	70	80	90	77	국가지원
프로바이오틱스산업 플랫폼 구축	120	46	36	16	12	10	국가지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186	31	34	37	40	44	
친환경에너지 타운조성	102	12	30	30	10	20	
신재생 에너지 개발	234	40	40	40	58	56	
첨단 산업 육성	30	10	10	10	-	-	국가지원

자료 : 충청남도 2018~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국가직접지원의 신산업이나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늘어나는 반면, 기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재생 투자 등은 투자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있어서는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및 유통시설의 현대화,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한 투자를 중점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 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에 집중함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정비 등에 대한 예산의 비중은 매우 낮게 책정

(단위 : 억원)

사업명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농림								
농천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593	114	120	120	120	120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37	7.5	7.5	7.5	7.5	7.5		
산지유통시설 지원	148	55	23	23	23	23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	50	10	10	10	10	10		
시설원에 현대화 지원	211	37	40	43	46	46		
농업기반시설 확충	2,536	466	517	517	517	517	기투자 1,040억	
농촌생활환경 정비	5,425	872	1,075	1,205	1,195	1,077	기투자 5억	
소계	9,000	1,561	1,792	1,925	1,918	1,800		
해양·수산								
해양레저 기반 구축	182	34	35	36	36	38		
해양관광자원시설	13	6	7	-	-	-		
항만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3	0.5	0.5	0.5	0.5	0.6		
도서개발 지원	30	3	7	7	7	7	기투자 71억	
지자체관리 어항건설(시설비만 계상)	1,002	150	150	150	272	280	기투자 2,424억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149	13	34	34	34	34		
수산물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249	83	83	83	-	-		
소계	1,628	289	316	310	349	359		
합계	10,628	1,850	2,108	2,235	2,267	2,159		

자료 : 충청남도 2018~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② 안전 시설

-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관련 인프라는 2018~2022년 사이 재해위험지역의 정비 및 시설물의 내진보강, 도심내 소방 시설 확충 등에 중점 투자
- 주요 안전분야 사업으로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이 있으며,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표 5-17

중기지방재정  
계획 상  
농림·해양·수산  
분야 인프라 투자  
계획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표 5-18

중기지방재정  
계획 상 안전  
분야 인프라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재해위험지역정비(시군)	2,198	395	491	419	533	445	
재해위험지역정비(도)	150	30	30	30	30	30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50	30	30	30	30	30	
우수저류시설 설치	173	33	33	34	36	37	
도심지역 소방시설 구축	183	37	37	37	37	37	
소방복합시설 조성	485	30	100	150	150	55	
	3,339	555	721	700	816	634	

자료 : 충청남도 2018~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③ 문화 및 관광, 체육 분야

- 문화 및 관광, 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문화시설 및 관광시설의 확충 그리고 학교 체육 활성화 등 체육시설의 지원 사업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할 계획으로 있음.
-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사업들은 기존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조성 등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과 내포 세계청소년문화센터 등 기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배정
  -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구축 등 지속 추진
- 관광분야의 경우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광지 및 관광자원개발 그리고 최근 안면도 관광지 개발, 원산도 테마랜드 등 기획사업을 3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
- 체육시설 관련 인프라 사업들은 공공체육시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공원, 지방체육시설 등 기존 체육시설 확충 사업과 내포신도시의 충남스포츠클러스터 건립을 위한 예산 배정

(단위 : 억원)

사업명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예술							
내포 해미 세계청소년문화센터	67	35	32	-	-	-	기투자 17억
공공도서관 건립	417	80	84	84	85	85	
공립박물관 건립	79	18	15	15	15	15	
생활문화센터 조성	36	7	7	7	7	8	
문화시설 민자사업(BTL)	96	19	19	19	19	19	
전통사찰 보수정비(시군)	90	18	18	18	18	18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179	239	155	247	264	273	
도지정문화재 보수	125	25	25	25	25	25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55	11	11	11	11	11	
소계	1,964	416	330	390	408	418	
관광							
관광지 개발	51	27	17	7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	33	33	-	-	-	-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65	32	32				
문화관광자원 개발	139	94	31	13	-	-	
안면도 관광지 개발	339	120	219				기투자 111억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306	94	116	96	-	-	
소계	933	400	415	116	0	0	
체육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52	10	10	10	11	11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및 보수보강	50	10	10	10	10	10	
생활체육공원 조성	49	9	10	10	10	10	
지방체육시설 지원	668	126	130	134	138	142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56	11	11	11	11	12	
체육시설 민자사업(BTL)	51	10	10	10	10	11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247	17	106	124	-	-	
소계	1,173	193	287	309	190	196	
합계	4,070	1,009	1,032	815	598	614	

자료 : 충청남도 2018~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19

중기지방재정  
계획 상  
문화·관광·체육  
분야 인프라 투자  
계획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1.

##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표 5-20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산림 및  
공원·녹지분야  
인프라 투자 계획

### ④ 산림 및 공원·녹지 분야

-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산림 및 공원·녹지 분야의 인프라 사업들은 산림자원 보호 및 안전 확보 그리고 도심 내 공원·녹지의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단위 : 억원)

사업명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사방댐 시설	991	131	158	190	231	281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158	32	32	32	32	30	
지자체 자연휴양림	211	40	41	42	43	45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전토마을숲 등 조성사업	207	39	40	41	43	44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61	12	12	12	12	12	
치유의 숲 조성	131	25	25	26	27	28	
계	1,759	279	308	343	388	440	

자료 : 충청남도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시설의 확충을 위한 예산의 지속적인 증액 편성 예정

### ⑤ 환경 분야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환경 분야의 핵심 사업은 상, 하수도 시설 개선, 하천정비를 통한 수질 보전 및 환경 개선, 안전 확보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확충에 있음.
-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관거 정비 등 사업의 경우, 조기 안전 확보 차원에서 국비의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조기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28건의 사업에 총 사업비 116억 9,000억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13.4km의 노후 상수도관 개량공사와 구역별 관망 정비사업을 추진

(단위 : 억원)

사업명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생태하천 복원사업	913	182	183	183	183	183	기투자 212억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184	437	437	437	437	437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239	48	48	48	48	48	
노후 상수도 정비	937	198	198	200	201	140	
하수관거 정비	3,325	665	665	665	665	665	
도시침수대응	472	94	94	94	94	94	
하수처리시설	1,230	246	246	246	246	246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1,568	313	313	314	314	314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889	178	178	178	178	178	
하수처리수재 이용사업	300	60	60	60	60	60	
하수관거 정비 BTL	1,883	377	377	377	376	376	
소각시설 설치	237	45	45	47	49	50	
매립지 정비 사업	57	10	11	11	12	12	
계	8,070	1,624	1,625	1,627	1,628	1,567	

자료 : 충청남도 2018~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21

충기지방재정계  
획 상 환경 분야  
인프라 투자 계획

## ⑥ 도로 분야

- 도로 및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도민 이동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교통복지 향상과 안전하고 편리한 지방도 및 간선도로망 확립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음.
- 도로사업은 강경-연무간 도로 건설사업 등 국가지원 지방도 신규 건설사업 13개 사업 그리고 이천-공주 지방도 확포장 건설사업 등 지방도 정비사업 34개 사업 등 도로 건설 및 확포장 사업 47개 사업의 수행과 도로 안전시설 확충 사업의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
- 지방도 정비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이 많아 기간 내 준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상황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표 5-22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도로 분야 인프라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2,845	1,321	675	425	407	17	기투자 5,939억
도로 안전시설 확충	502	48	76	76	76	225	기투자 1,403억
위험교량 개량(지방도)	150	20	25	30	35	40	
지방도 유지관리	862	165	167	173	178	180	
광역도로 정비사업	30	10	10	10	-	-	기투자 442억
지방도 정비사업	7,748	495	965	2,301	615	3,371	향후 406억
도로 유지보수(지방도)	491	98	98	98	98	99	
도로 유지보수(지방도)	365	73	73	73	73	73	
계	12,993	2,230	2,089	3,186	1,482	4,005	

자료 : 충청남도 2018~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⑦ 하천 정비

- 하천정비사업은 지방하천 정비에 총 3,706억원, 소하천 정비에 1,003억원을 투입할 계획
- 하천정비사업과 재해 예방사업의 연계를 통해 지방하천의 안전도 제고 필요

표 5-23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하천정비 분야 인프라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1,852	356	363	370	378	385	
지방하천 정비사업(시군)	1,304	251	256	261	266	271	
지방하천 정비사업(안성천수계)	550	110	110	110	110	110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	1,003	201	201	201	200	200	
지방하천 재해예방	300	60	60	60	60	60	
지방하천 유지관리	380	76	76	76	76	76	
국가하천유지보수	311	60	61	62	63	65	
계	5,700	1,114	1,127	1,140	1,153	1,167	

자료 : 충청남도 2018~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⑧ 도시 및 지역개발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도시 및 지역개발의 인프라 사업으로는 공주, 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 내포문화권 개발, 충주 유교문화권 종합개발 등 문화권 개발사업과 지역개발 사업 등이 있음.
- 또한, 내포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은 충남지역의 지역개발에 있어 핵심사업임. 따라서 조속히 신도시 형성을 위한 제반 노력 필요

(단위 : 억원)

사업명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충청 유교문화권 종합개발	115	22	93	-	-	-	기투자 52억
공주, 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68	12	13	13	15	15	
내포 문화권 개발	60	4	15	42			
지역개발 지원	867	201	167	167	167	167	
내포신도시 건설	304	93	78	77	57		
계	1,414	332	366	299	239	182	

자료 : 충청남도 2018~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표 5-24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 인프라 투자 계획

## 1. 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2.

###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 2.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 (1) 인프라 사업 총괄

- 현재 추진 중인 핵심 인프라 관련 사업은 지방도 확충 및 정비 사업 등 도로망 확충사업과 내포신도시 「환향해권 중심도시」로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이 대표적임
- 2018년 현재 추진 중인 국토교통국의 주요 부문별 인프라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5-25

2018년  
국토교통국 주요  
인프라 사업 현황

분야	주요 사업명	사업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원도심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	139억원
	충남형 공원 조성사업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시범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새뜰마을 환경개선 사업	
	슬레이트 처리 사업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57억원
	농촌 빈집정비 사업	
	도시재생 일반사업	
	도시재생뉴딜	
도로·도로시설물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155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비	
	위험도로구조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지방도유지관리 등	
	지방도 확포장 사업	
	광역도로 정비사업	
내포신도시	보부상촌 조성	215억원
	백제한옥마을 신축	
	제2진입도로 개설공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2)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 1) 도로 확충 및 정비

- 현재 도로사업은 고속도로 4개 지구, 국도 20개 지구, 국지도 및 광역도로 7개 지구, 지방도 19지구 총 50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

(단위 : 개, km, 억원)

유형	지구수	연장	사업비	비고
고속도로	4	199.5	3,661	추진 2건, 신규 2건
국도	20	111.8	2,231	계속 17건, 신규 3건
국지도 및 광역도로	7	64.5	448	계속 5건, 신규 2건
지방도	19	104.5	410	추진 11건, 신규 8건
계	50	480.3	6,750	

자료 : 2018년 충남 국토교통국 주요업무계획

표 5-26

도로사업 총괄

- 고속도로는 아산~천안 고속도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현재 추진 중이며, 당진~아산 고속도로가 타당성 조사 중이고, 대산~당진고속도로는 실시설계 중임.

No.	사업명	사업량 (km)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비고
1	아산천안 고속도로	21	'15.~'22	11,919	
2	제2서해안 민자 고속도로(서부내륙고속도로)	138	'10-'32	27,000	
3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24	'05-'22	6,502	실시설계중
4	당진-아산 고속도로 건설	17	'21-'25	10,702	타당성 조사

자료 : 2018년 충남 국토교통국 주요업무계획

표 5-27

충남지역  
고속도로  
건설사업 현황

- 국도는 총 20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은 원청교차로 개선공사 등 3건이 예정되어 있음.

## 2.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 2.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표 5-28

충남지역 신규 국도사업 현황

No.	사업명	사업량 (km)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비고
1	정산-신평 국도(39호) 건설	13	'18-'22	615	
2	원청교차로 개선	0.7	'17-'20	150	
3	천안추모공원(23호)교차로 개선	1	'18-'20	45	`

자료 : 2018년 충남 국토교통국 주요업무계획

- 국도 건설사업 중 계속사업은 총 17개 지구로서 전체 사업비는 1조 8,294억 원임.

표 5-29

충남지역 국도 계속사업 현황

No.	사업명	사업량 (km)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비고
1	보령-청양1 국도(36호) 건설	7	'14-'21	719	
2	보령-청양2 국도(36호) 건설	5	'14-'21	858	
3	보령-태안1 국도(77호) 건설	8	'10-'20	4,641	`
4	보령-태안2 국도(77호) 건설	6	'10-'20	2,064	
5	염성-용두 국대도 건설	6	'14-'20	654	
6	국립생태원 국도(21,29호) 건설	8	'17-'21	775	
7	학봉-공암 국도(32호) 건설	5	'16-'23	868	
8	보령-부여 국도(40호) 건설	13	'16-'23	1,863	
9	덕산-고덕IC 국도(40호) 건설	6	'15-'22	516	
10	서북-성거 국대도 건설	4	'17-'23	1,220	
11	남당항진입 국도(40호) 건설	2	'16-'20	167	
12	주포-오천 국도(40호) 건설	7	'16-'20	103	
13	장암-임천 국도(29호) 건설	3	'17-'21	79	
14	성주우회 도로(40호) 건설	5	'17-'21	498	
15	연산-두마 국도(1호) 건설	7	'17-'21	2,121	
16	공주IC-송선 국도(36호) 건설	3	'17-'20	863	
17	신온-창기 국도(77호) 건설	2	'18-'22	285	

자료 : 2018년 충남 국토교통국 주요업무계획

- 국지도 및 광역도로는 7지구에 총 연장 64.5km로서 총 사업비는 448억원 규모임.
  - 신규는 2건으로 성환~입장(국지도), 신도안~세동(광역도로)임.
  - 계속사업은 총 5건으로 선장~염치, 청양~신양IC, 이호~양곡, 당진~서산, 산성~구례 등임.
- 지방도 건설사업은 19지구에 총 연장 104.5km로서 총 사업비는 410억 원

이 투자됨.

- 신규사업은 두마~노성 등 5개소이며, 현재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은 기지시~한진 등 2개소와 산동~상덕 도로 건설사업 등 합쳐 8건의 사업이 추진 중
- 공사 중인 사업은 서산~부석 등 8개소이고, 보상이 진행 중인 사업은 대술~정안 등 3개소임.

- 2021년까지 지방도 노후포장 337km에 대하여 396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매년 50억 원이 지속 투자될 예정임.
- 그 밖에 위험도로 9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준공, 4, 추진 중 5)이 추진 중에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5.8억원), 교통사고 잦은곳(회전교차로 설치 포함) 5개소(9.4억원)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정비 15개소(13.4억원), 옐로 카펫 시범사업 30개소(1.5억원), 지방도변 마을주민보호구역(Village Zone) 정비 추진 7개소(3.5억 ) 등 정비사업이 추진 중

## 2) 도시·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 현재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도시재생 시범사업 4곳을 포함하여 저소득가구 주택 정비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음.

단위 : 개소, 억원

유형	사업대상	사업비 (2018년)	비고
도시재생 일반사업	2개 시군	43	
도시재생뉴딜 지역역량강화사업	12개소	6	
농촌 빈집정비 사업	천안시	3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설사업	400가구	3	
쌈지주차장	3개소	20	
충남형 공원 조성	3개소	12	
계		87	

자료 : 2018년 충남 국토교통국 주요업무계획

표 5-30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

## 2.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 2.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은 15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지원 : 우선적으로 4개 단지, 400세대(보령 90, 서산 60, 논산 200, 홍성 50) 지원
  -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원도심 빈집 등을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 주차난 해소 및 도심지 경관 개선
  - 충남형 공원조성은 시군비 50% 매칭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및 안전 취약, 주민활용도가 낮은 기존공원 등을 개선
- 지역개발사업은 충남 지역개발계획 수립 확정에 따라 총 99개 사업 4조 2,820억원을 투자할 예정

(단위 : 개소, 억원)

표 5-31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유형	사업대상	사업수	사업비	비고
발전촉진지역	6개군	35개	12,194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거점육성지역	9개 시·군	64개	30,626	

자료 : 2018년 충남 국토교통국 주요업무계획

- 발전촉진지역 6개 군의 12개소에 대하여 201억 10백만원을 투자하여조기 지원 추진
- ※ 금산군 2개소 818백만원, 부여군 2개소 550백만원, 서천군 2개소 23억 85백만원, 청양군 1개소 250백만원, 예산군 3개소 142억 34백만원, 태안군 2개소 18억 73백만원 등

### 3)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 내포신도시 사업은 산업단지, 기반시설 그리고 업무시설 등이 복합화된 신도시 개발사업임.

구분	내용
지리적 위치	홍성군 홍북읍, 예산군 삽교읍 일원(995만㎡)
총 사업비	2조 5,692억 원
사업기간	'07.7. ~ '20.12.
시행자	충남개발공사, LH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12월 말 현재 22,741명(유동인구 3,000여 명)</li> <li>- 기관·단체 이전 : 이전 완료 93개소, 이전 진행 중 12개소</li> <li>- 정주환경 조성 : 기반조성·인구유입에 맞춰 필요시설 지속 확충 중</li> </ul>

표 5-32

## 내포신도시 사업 개요

- 현재 도시기반조성사업 3단계가 진행 중이며,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
- 현재 도시기반시설 조성은 기반조성 및 인구 유입에 맞춰 필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공급 : 10개 단지 10,981세대(준공 9,272, 공사중 1,709)</li> <li>■ 교육시설 : 7개교 설립(유2, 초2, 중1, 고1)/ '18년 4개 학교 개교</li> <li>■ 진입도로 : 3개 노선 개통(공사중 : 제2진입도로, 첨단산단 진입도로)</li> <li>■ 공공편익시설 : 공원 37개소, 광장 14개소, 체육시설 25개소</li> <li>■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 1~2단계 사업완료, 3단계 사업 추진, 시험 가동 중</li> <li>■ 집단에너지시설 : 사업자와 사용연료 변경 협의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의진행 중</li> <li>■ 민간편익시설 : 병의원 14개소, 약국 4개소, 중소형마트 22개소 등 268개소</li> </ul>
--

- 현재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등 제4차 5개년계획에 미반영된 사업들의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필요. 또한 내포신도시 내 대학유치 조속히 마무리 필요

## 2.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 2.

###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 4) 철도

- 현재 충청지역과 관련된 철도 사업은 13지구에 737.9km로서 총 사업비 규모는 6,617억원임.
  - 공사중(2) : 서해선 복선전철, 장항선 2단계 개량
  - 설계중(3) : 장항선 복선전철, 충청권철도, 천안~청주공항
  - 사전타당성조사(4) : 아산석문산단선 등 / 역신설 추진(4) : 삽교역 등
- 이 중에서 실제 추진 중인 철도 사업은 총 10개 사업임. 이 중에서 실제 진행 중인 사업은 3건임.

(단위 : km, 억원)

표 5-33

충남지역 철도  
인프라 사업 현황

유형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90	'09-'20	36,568	공사중
장항선 2단계 개량 사업	32	'10-'20	8,498	공사중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119	'18-'22	5,289	설계중
천안건널목 개선 사업	1식	'16-'21	277	
천안-청주 복선전철 사업	58	'14-'22	8,216	설계중
천안역개선 개선 사업	1식	'18-'20	170	타당성 조사
삽교역 신설	1식	'18-'20	171	타당성 조사
독립기념관 전철 연장	8	'18-'25	2,600	
가수원-논산 호남선 개량	29	'18-'25	4,596	
중부권횡단 철도 건설	330	'18-'30	37,000	

자료 : 2018년 충남 국토교통국 주요업무계획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준공시기를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

#### 4) 기타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현황

- 기타 주요한 인프라 사업들은 다음과 같음. 현재 충남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거 및 도시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비고
•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L=13.96km	2,486	
• 동산리 도로 개설공사	L=565m	500	
• 원도심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	3시군	2,000	
• 충남형 공원 조성사업	3시군	1,200	
• 충남형 정주환경 모델 시범사업	1개소	800	
• 내포신도시 백제한옥마을 신축지원	15동	300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400가구	300	
•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200가구	1,200	
• 새뜰마을 환경 개선 사업	4개 시군	3,025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4개 시군	4,694	
• 슬레이트 처리 사업	1,600동	5,376	
• 농어촌도로 확포장등 정비사업 지원	7지구	9,255	
• 지방도유지관리 등	35건	13,907	
• 공영주차장 조성	5개소	8,400	
• 광역도로 정비사업	2개소	998	

표 5-34

기타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 2.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 3.

#### 충남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 3. 충남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 (1) 인프라 투자 정책의 문제점

##### 1) 인프라 투자 예산의 지속적 축소

- 충남은 그동안 인프라의 주요 투자 부문인 SOC 투자 분야 즉, ‘수송 및 교통’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왔음.
- 최근 5년(2013~17년) 동안 일반 회계 세출분야 SOC 부문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수송 및 교통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 편성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 관련 예산도 2017년 증액 편성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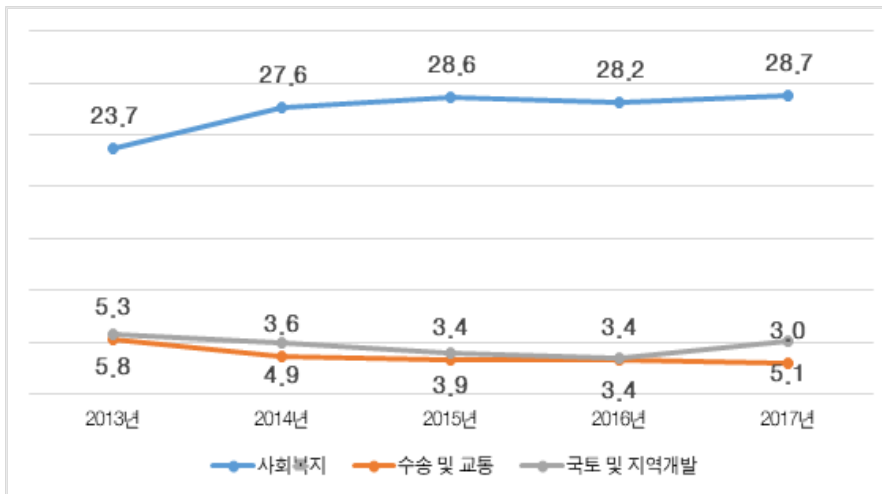
표 5-35

세출 예산 편성  
현황(일반회계)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950,000	100.00	4,150,000	100.00	4,217,000	100.00	4,557,000	100.00	4,735,000	100.00
일반공공행정	342,316	8.66	398,409	9.60	360,500	8.55	500,739	10.99	514,683	10.87
공공질서 및 안전	246,936	6.25	227,664	5.49	229,934	5.45	204,904	4.50	115,690	2.44
교육	246,066	6.23	249,876	6.02	257,805	6.11	295,392	6.48	318,579	6.73
문화 및 관광	140,538	3.56	155,417	3.74	184,371	4.37	209,503	4.60	239,707	5.06
환경보호	343,808	8.70	351,764	8.48	374,310	8.88	356,608	7.82	327,531	6.92
사회복지	936,359	23.71	1,147,279	27.64	1,205,333	28.58	1,282,719	28.15	1,359,341	28.71
보건	74,772	1.89	73,296	1.77	83,405	1.98	115,284	2.53	109,295	2.31
농림해양수산	785,979	19.90	759,496	18.30	768,800	18.23	794,076	17.43	853,552	18.03
산업·중소기업	70,655	1.79	89,456	2.15	70,142	1.66	95,207	2.09	101,196	2.14
수송 및 교통	209,175	5.30	149,188	3.59	142,270	3.38	153,415	3.37	142,159	3.00
국토 및 지역개발	227,716	5.76	202,755	4.89	164,976	3.91	156,997	3.44	240,775	5.09
과학기술	6,655	0.17	5,771	0.14	12,784	0.30	12,533	0.27	10,762	0.23
예비비	47,331	1.20	43,012	1.04	52,162	1.24	52,908	1.16	57,552	1.22
기 타	271,694	6.88	296,617	7.15	310,208	7.36	326,715	7.17	344,178	7.25

- 이러한 SOC 예산의 감소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의 예산 편성 기조가 사회복지 투자를 늘려 왔기 때문임. 즉, SOC 예산 감축은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복지 예산의 전체 세출예산 대비 비중은 2013년 23.71%에서 2017년 28.71%까지 크게 확대되었음.
- 수송 및 교통 예산의 전체 세출예산 대비 비중은 2013년 5.30%에서 2017년 3.00%로 감소

(단위 : %)



자료 : 충남도청 재정공시(2017년)

그림 5-17

사회복지 및 SOC 예산의 전체 세출 대비 비중 추이

- 이러한 SOC 예산 감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는 반대로 지역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도로 등 인프라 공급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지역민의 삶의 질에 있어 인프라 시설 수준이 직결되는 바, 지역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 부작용 우려

## 2) 인프라 정책 부재로 목표 달성 미흡

-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인프라 투자의 목표를 명확히 세우지 않아 왔음.

## 3.

충남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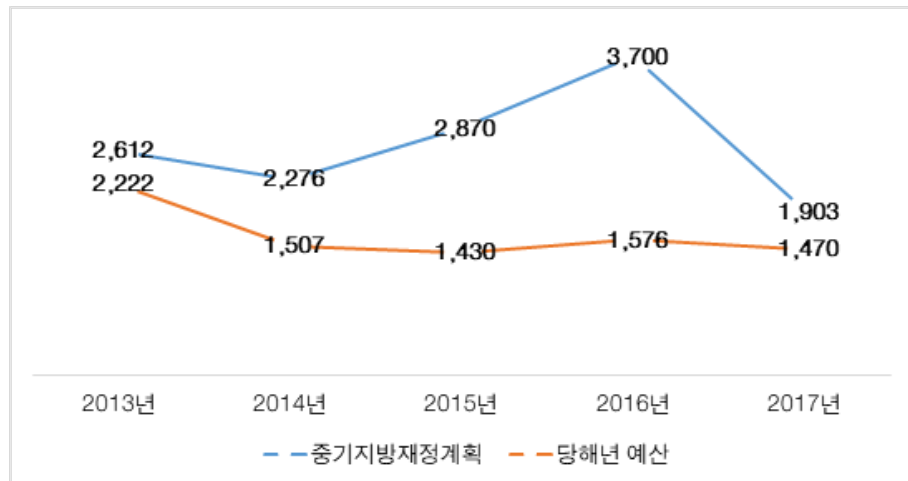
## 충남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 이러한 인프라 투자정책의 정책목표의 불투명성은 결과적으로 그때 그때의 사회,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단기적인 정책 현안 및 이슈, 단기적인 인프라 시설 수요에 대응하는데 급급해 왔음.
- 그러다보니, 당초 재정계획 상 인프라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계획연도가 완료된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수송 및 교통 분야의 투자계획과 실제투자액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단위 : 억원)

그림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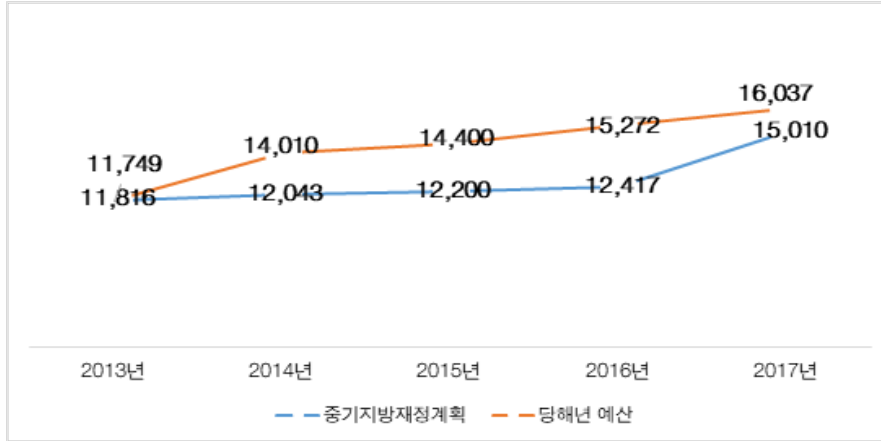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수송 및  
교통 분야 실제  
투자액 현황



자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각년도 예산서

- 수송 및 교통 부문이 실제투자액이 투자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계획 대비 실제 투자액이 더 많이 투자되어 왔음.

(단위 : 억원)



자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각년도 예산서

그림 5-19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사회복지  
분야 실제 투자액  
현황

- 인프라 투자에 대한 목표 수립과 실행 간의 격차는 당초 인프라 투자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할 수 밖에 없음. 결국, 인프라 투자에 따른 여타 긍정적인 경제적인 파급영향이 이연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지역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2) 인프라 사업 추진의 문제점

### 1) 인프라 사업의 공기지연 및 사업 추진 미흡

-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핵심 도로 인프라 투자사업들이 시행되지 못하였거나 공기가 늦어져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
  - 당진~아산 고속도로,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경제적 타당성 부적합,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인 ‘선장~염치 지방도 건설사업’(당초 2010~2017), 대술~정안 지방도 도로개설사업(2014~2017년) 등이 다수의 공사가 지연 중
  - 지방도 615(당진-석문), 지방도 618호(내포신도시-세종시), 지방도 645호(계룡-논산) 등 다수의 지방도 사업들도 열악한 충남의 재정여건으로 제 때

### 3. 충남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 3.

#### 충남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착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도로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인프라 사업들도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 상황
  - 아산~석문 산단선 철도 건설사업, KTX 논산 훈련소 역 신설, 천안~청주 복선전철 사업, 천안건널목 개선사업, 충청산업문화철도 등이 현재 지연되고 있거나, 사업기간 내 준공이 불투명한 상황
  - 지역개발사업들의 속도도 느린 상황으로 충남의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여전히 표류 중
-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후 인프라의 성능 개선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여 지역민의 안전 위협
  - 노후 상, 하수도 시설(상수관로, 하수관거 등)에 대한 개선 사업도 높은 누수율과 안전 저해에도 불구하고, 조기 시설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
  - 노후 산업단지의 증가, 포장도로의 성능 저하 문제 등 다양한 노후 인프라 문제에 대한 투자 미흡으로 산업, 경제적 경쟁력 저하와 지역민들의 안전 확보 미흡

#### 2) 신규 인프라 사업 추진 미흡

-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대부분 기존 진행 중인 인프라 사업들의 완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중장기 사업들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신규 인프라 수요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
- 최근 도시 안전과 관련된 관심 증대로 인하여 노후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재생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인프라 사업 추진 애로

- 특히,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 상·하수관로의 정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이나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이에 대응한 적절한 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움.
- 또한, 최근 지진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사회적 재난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방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에 대응한 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음.

### 3.

---

#### 충남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 제6장 지역 인프라 투자 수요 분석 및 대응방향

---

### 1. 지역민 설문조사 개요

#### (1) 설문조사 목적 및 설계

##### 1) 조사 목적

- 본 설문조사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인프라 시설의 실제 사용자인 충남도민이 체감하는 인프라 실태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향후 인프라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함.
- 이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충남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관련 정책과 개발계획의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2) 조사 설계

- 본 조사는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2주간 전문조사기관인 (주)리서치뱅크를 통해 온·오프라인 패넌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시행함.
- 조사대상의 경우 2017년 12월 기준 충청남도의 주민등록상 지역민<sup>62)</sup>을 모

---

6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1. 지역민 설문조사 개요

표 6-1

## 설문조사 개요

집단으로 하여 5개구별 1차 층화추출을 통해 표본을 설정하였으며, 2차 층화 추출의 어려움으로 연령 분포는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총 529명이 응답함.

구분	내용
조사대상	충남지역의 15개 시·군 지역민 전체
표본 수	529(유효 응답부수 기준), 15개 시군별 인구비중으로 할당
조사방법	온라인 방식 자기 기입식 조사
조사기간	2018년 2월 22일 ~ 3월 7일
조사기관	조사대행 : (주)리서치뱅크, 조사분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 설문조사 내용

- 지역 내 주요 인프라 시설의 전반적인 성능
- 부문별 지역 내 인프라 시설의 지역 경쟁력 향상 연계 정도
- 부문별 지역 내 인프라 시설의 지역 주민 생활 및 삶의 질 영향 정도
- 부문별 지역 내 인프라 시설의 전반적 노후도 및 안전 수준
- 지역 내 인프라 시설의 현행 투자 적정 수준
- 부문별 지역 내 인프라 시설의 향후 투자방향
- 인프라 시설 관련 정책과 제반 활동 평가
- 주요 자원 확보 방안 및 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의견
- 전반적인 인프라 시설의 충족도 및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
-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현안
- 지역 성장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프라 투자
- 지역 인프라 정책 현안 및 향후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 2. 설문조사 결과

### (1) 응답자 기본 정보

- 전술한 조사 설계방법에 따라 총 529명의 유효설문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함.

구분		사례수	%
전체		529	100.0
성별	남자	253	47.8
	여자	276	52.2
연령별	20대	64	12.1
	30대	184	34.8
	40대	180	34.0
	50대	79	14.9
	60대	22	4.2
거주지역	충남	529	100.0
세부지역	천안시	148	28.0
	공주시	25	4.7
	보령시	24	4.5
	아산시	71	13.4
	서산시	39	7.4
	논산시	28	5.3
	계룡시	9	1.7
	당진시	34	6.4
	금산군	8	1.5
	부여군	15	2.8
	서천군	10	1.9
	청양군	4	0.8
	홍성군	22	4.2
	예산군	18	3.4
	태안군	10	1.9

표 6-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 충남 인프라 만족도 평가

#### ○ 충남 지역 인프라 시설의 전반적 성능(품질, 용량, 편의성) 수준 평가

- 거주 지역의 주요 인프라 시설의 전반적인 성능(품질, 용량, 편의성) 수준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 분석 결과, 2.95점으로 나타나 보통(3.00점) 이하로 성능 수준을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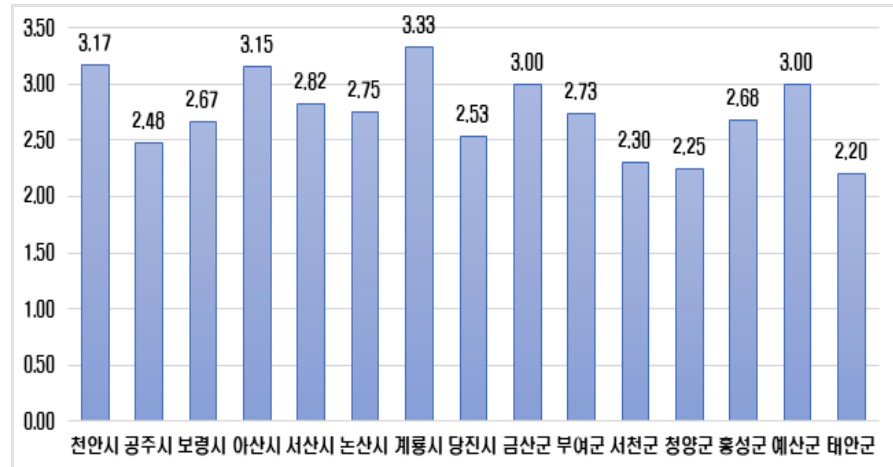
2.  
설문조사  
결과

## 2. 설문조사 결과

- 지역별로는 성능 수준에 대한 평가가 차이를 보이고 있음. 계룡시, 천안시 그리고 아산시 등에서는 각각 3.33점, 3.17점, 3.15점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인프라 성능 수준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평가. 그러나, 태안군, 청양군 그리고 서천군 등의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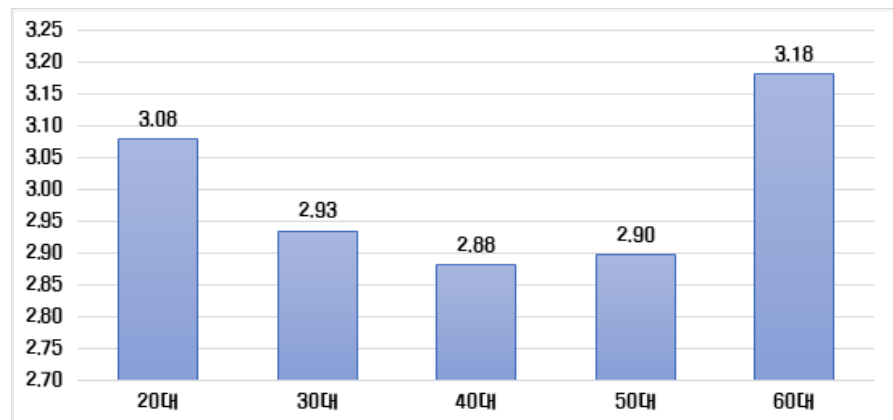
그림 6-1  
시군별 인프라  
성능 수준 평가  
결과



- 연령별로는 30~60대에서 인프라 성능 수준에 대해 보통 이하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20대와 60대는 보통 이상으로 평가

(단위 : 점)

그림 6-2  
연령대별 인프라  
성능 수준 평가  
결과



## ○ 충남 지역 인프라 시설별 전반적 성능(품질, 용량, 편의성) 수준 평가

- 각 부문별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성능 수준을 평가할 결과, 상대적으로 상·하수도 시설, 터널 및 교량, 주거시설, 안전시설, 교육시설, 공원/녹지 등 시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반면에 공항, 주차장, 재해방지시설, 의료시설 등 시설에 대해서는 매우 낮게 평가를 하고 있음.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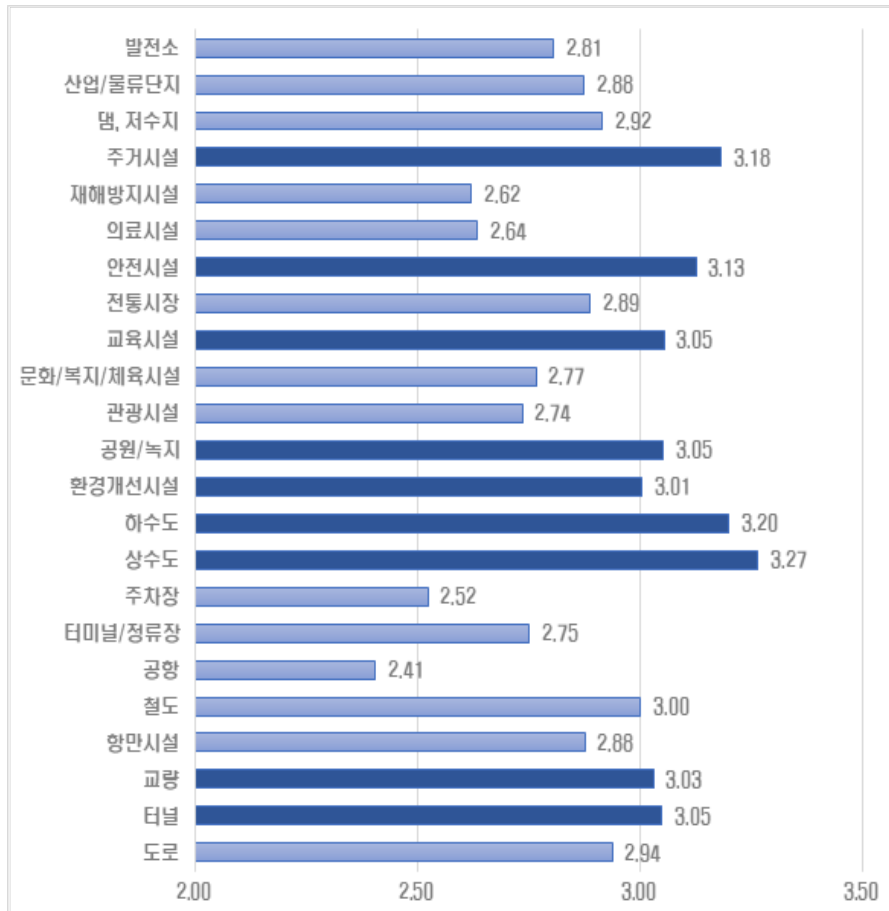


그림 6-3

인프라 시설별  
성능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

- 문화/복지/체육시설, 관광시설 등과 산업경제 관련 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 시설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

- 또한, 보통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들도 지역간 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바, 특히, 철도, 주거시설, 공원녹지 등은 전체적으로는 보통

## 2.

###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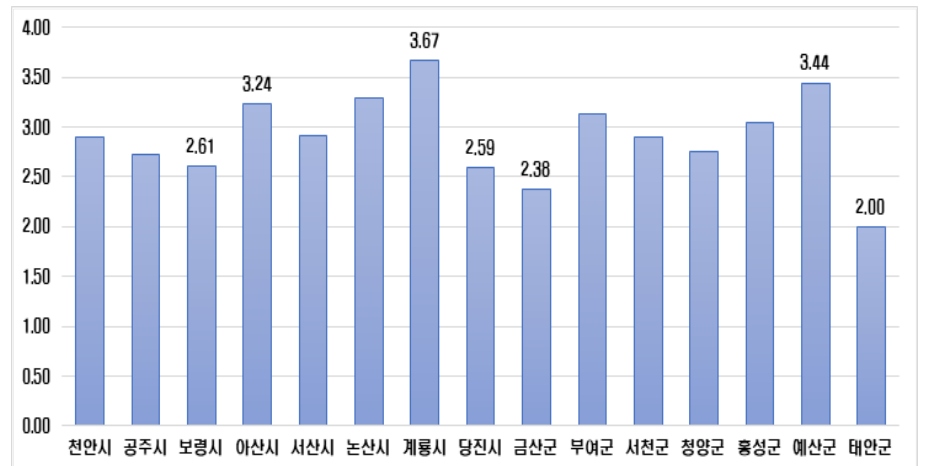
## 2. 설문조사 결과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으나, 지역의 평가에 대한 표준편차 값을 구해 보면, 각각 0.66, 0.50 그리고 0.43으로 크게 나타는 바,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짐.

- 공원/녹지의 경우, 계룡시, 예산군, 아산시의 경우, 보통 이상으로 성능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태안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등에서는 성능 수준을 낮게 평가

그림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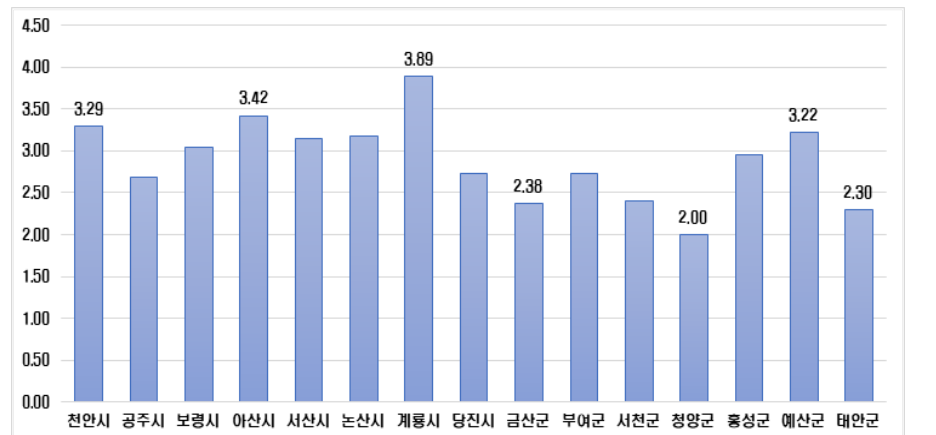
시군별  
공원녹지 시설의  
인프라 성능 수준  
평가 결과



- 주거시설의 경우에도 전체 평가는 3.18점으로 보통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으나, 지역간에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표준편차 값 0.50). 특히, 청양군, 태안군, 금산군, 서천군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거시설의 성능 수준을 낮게 평가

그림 6-5

시군별  
주거시설에 대한  
성능 수준 평가  
결과



- 또한, 철도의 경우에도 전체 평가 점수는 3.00점이나, 지역 간 성능 수준의 평가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예산군, 계룡시, 천안시, 아산시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청양군, 공주시, 서산시, 금산군 등 지역에서는 낮게 평가(표준편차 값 0.66)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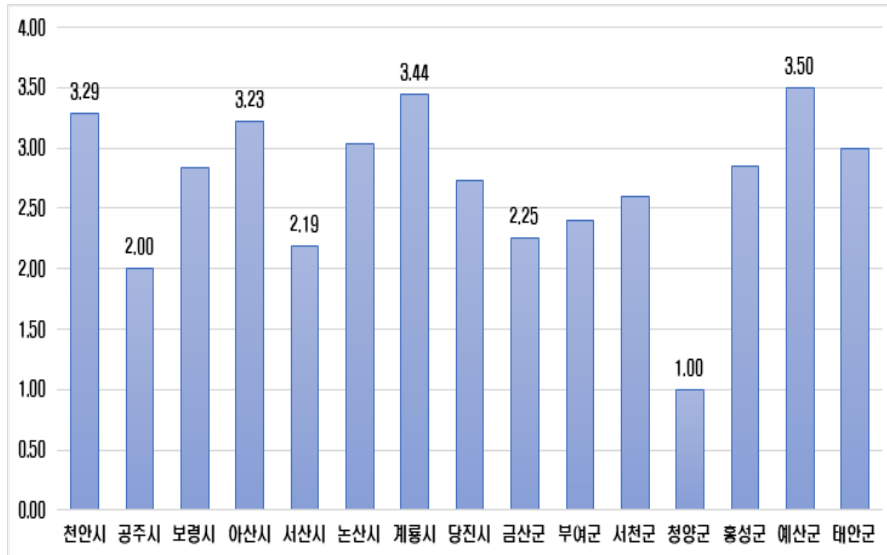


그림 6-6

시군별  
철도부문에 대한  
성능 수준 평가  
결과

- 종합적으로 볼 때, 거주지역 내 인프라 시설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성능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 성능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되는 인프라 시설도 시군별로는 평가에 큰 차이가 있음. 특히, 청양군, 금산군, 태안군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인프라 시설에 대해 성능 수준이 낮다고 평가됨.

## ○ 충남지역 인프라 시설과 지역경쟁력과의 연관성 정도에 대한 평가

- 지역 내 인프라 시설의 수준이 지역경쟁력(지역 경제 성장)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리커트 척도 5점 만점) 결과, 3.56점으로 평가하여 충남도민들은 인프라 시설들이 지역 경제 성장 등 경쟁력 향상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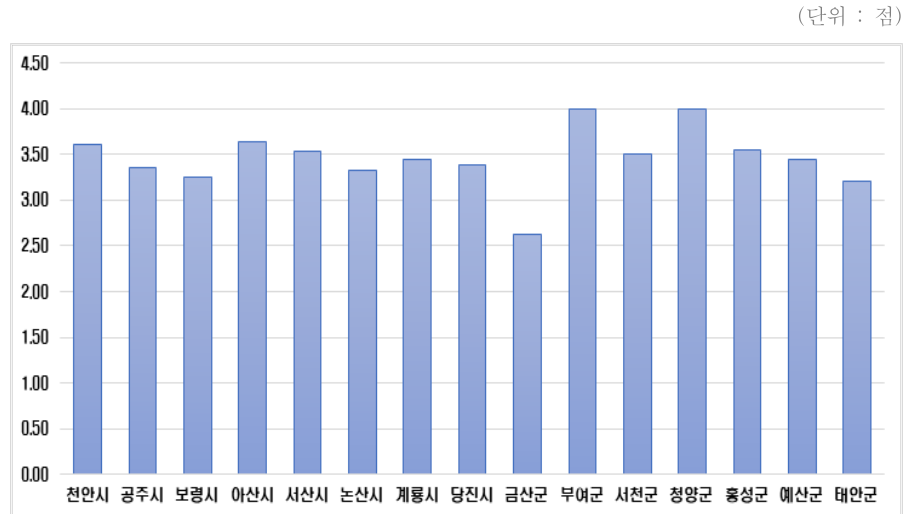
## 2. 설문조사 결과

## 2. 설문조사 결과

그림 6-7

시군별 지역경쟁력과 인프라 시설간 연관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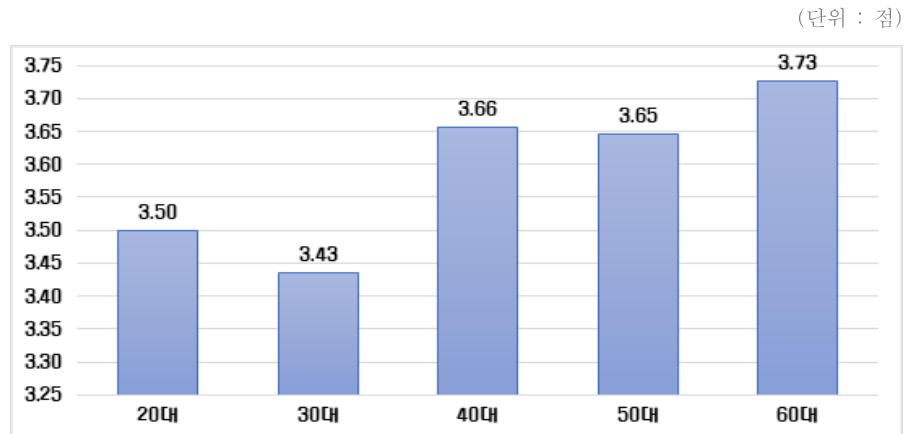
- 시군별로도 금산군을 제외하고 모든 시·군에서 지역경쟁력 향상과 인프라 시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 모든 연령대에서 인프라 시설과 지역경쟁력 향상 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특히, 40~60대까지 더욱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그림 6-8

연령대별 지역경쟁력과 인프라 시설간 연관성에 대한 인식



### ○ 충남지역 인프라 시설물별 지역경쟁력과의 연관성 정도에 대한 평가

- 모든 인프라 시설물에 대하여 보통 이상의 지역경쟁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특히, 충남도민들은 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생활인프라와 도로가 지역 경쟁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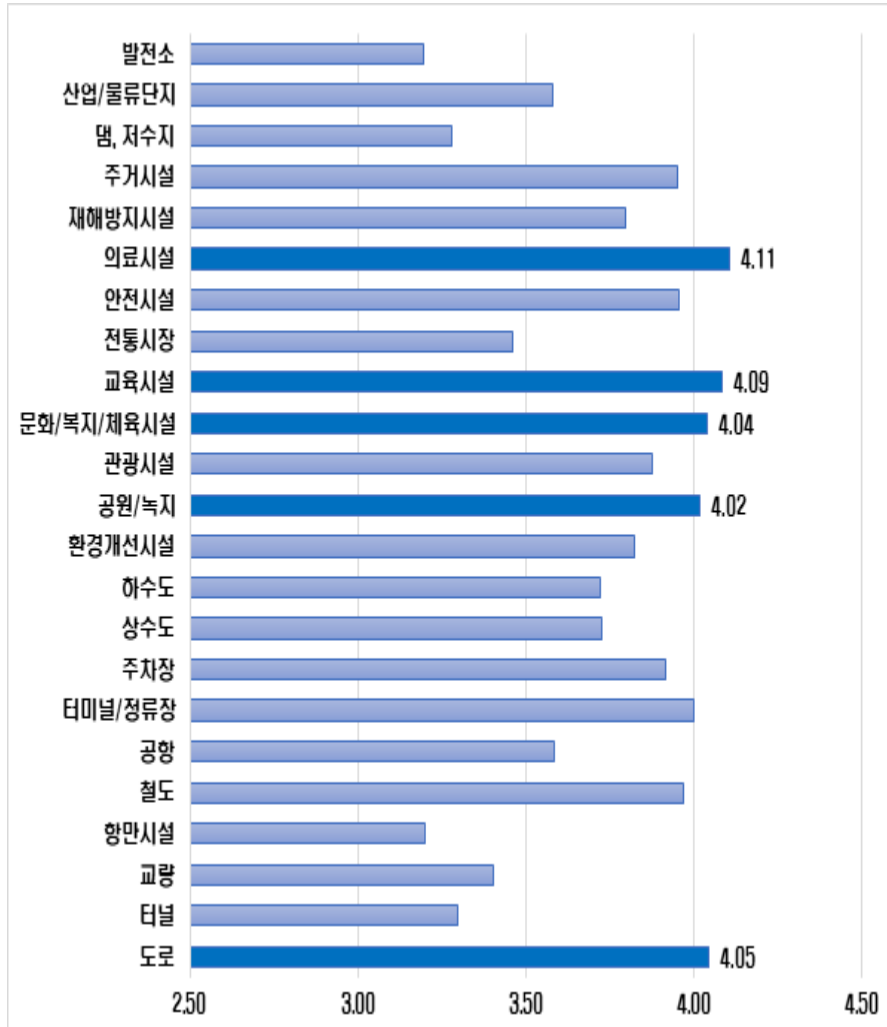


그림 6-9

인프라시설별  
지역경쟁력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 의료시설이 지역경쟁력 향상에 밀접하다는 평가에 있어서도 지역간에 인식도가 다소 차이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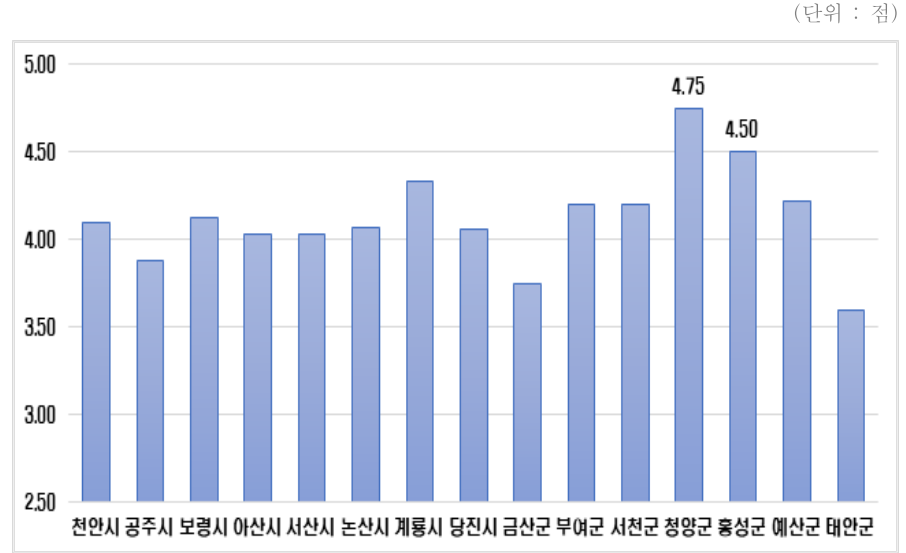
특히, 청양군, 홍성군 등에서는 각각 4.75점, 4.50점으로 평가하여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 설문조사 결과

## 2. 설문조사 결과

그림 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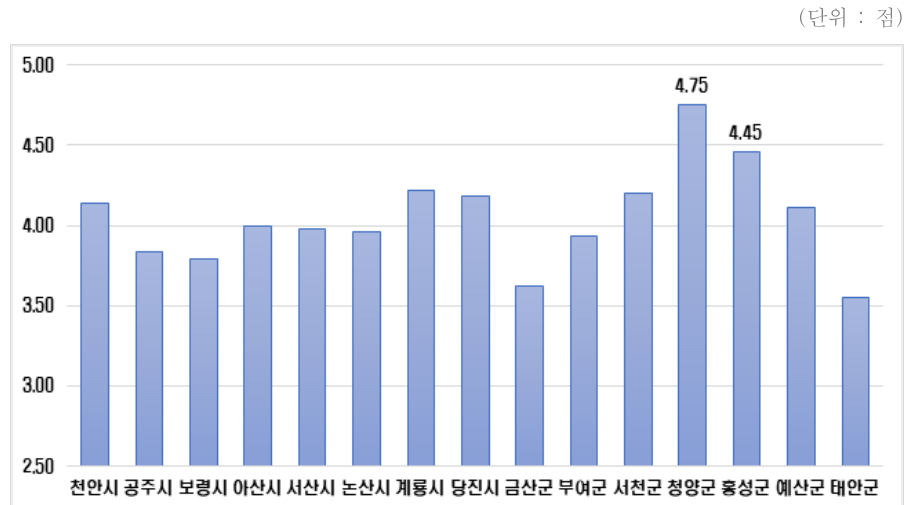
시군별 의료시설  
의 지역 경쟁력과  
의 연관성 인식



- 교육시설도 마찬가지임. 청양군, 홍성군 등지에서 지역경쟁력 향상에 있어 밀접한 인프라 시설로서 지적하고 있음.

그림 6-11

시군별  
교육시설의 지역  
경쟁력과의  
연관성 인식



- 도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청양군, 계룡시, 태안군 등지에서는 지역경쟁력 향상에 있어 도로의 연관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적인 도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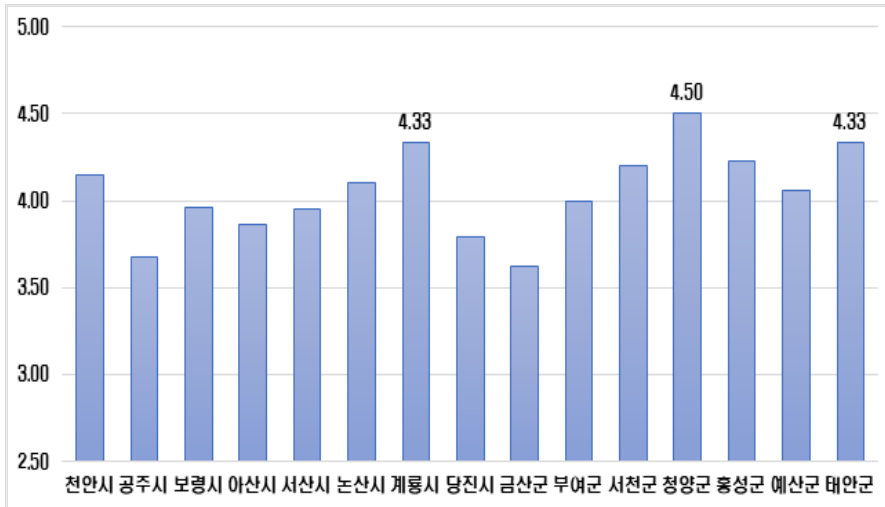


그림 6-12

시군별 도로의  
지역 경쟁력과의  
연관성 인식

- 터미널/정류장 시설도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바, 홍성군, 서천군, 태안군 등에서는 터미널/정류장 시설을 중요한 지역경쟁력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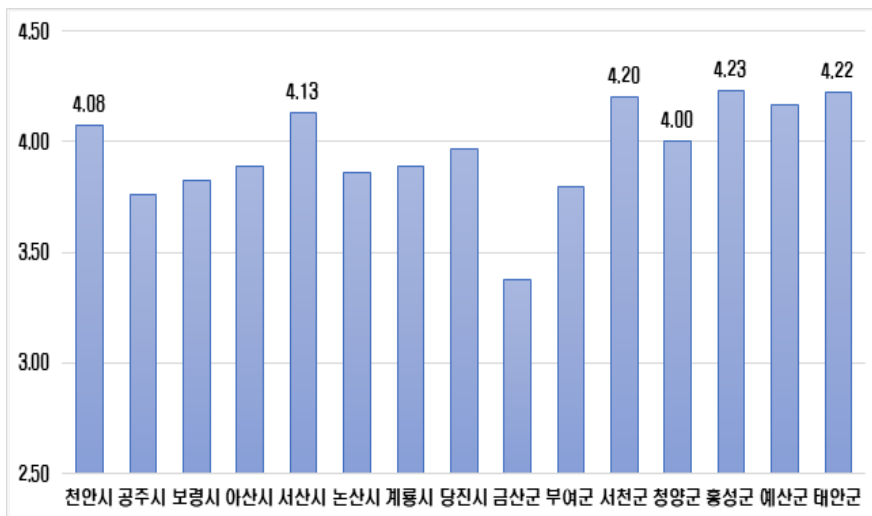


그림 6-13

시군별  
터미널/정류장시  
설의 지역  
경쟁력과의  
연관성 인식

## 2.

### 설문조사 결과

## 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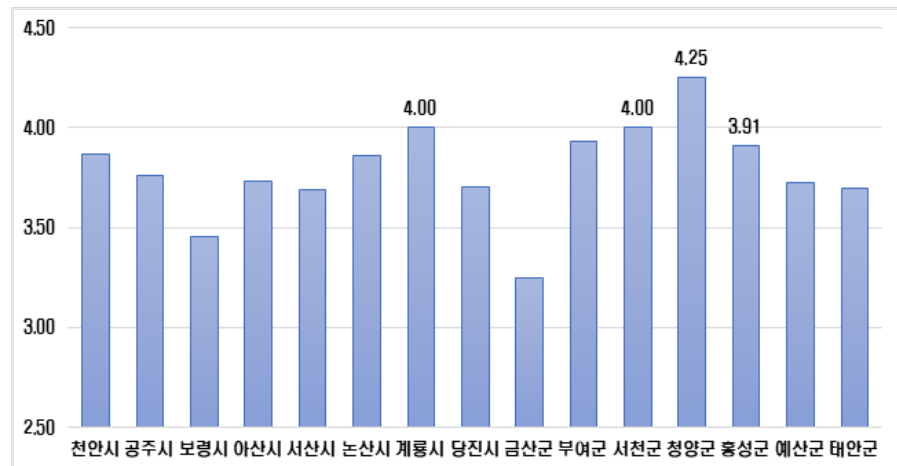
### ○ 충남지역 인프라 시설 수준과 삶의 질(행복수준)과 연관성 정도

- 충남도민들은 충청남도에 위치한 인프라 시설의 수준이 충남도민들의 생활 또는 삶의 질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3.82점으로 매우 높게 인프라 시설 수준과 생활 또는 삶의 질과 연관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특히, 앞의 설문에서 인프라의 성능 수준과 지역경쟁력 간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점수인 3.56점 보다 높게 나타나 충남도민들은 인프라 시설이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됨.
- 지역별로는 청양군, 계룡시 그리고 서천군 등지에서는 보다 삶의 질에 있어 인프라 시설의 연관성에 대하여 더 크게 평가하고 있음.

(단위 : 점)

그림 6-14

시군별  
인프라시설과  
삶의 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 ○ 충남지역 인프라 시설 수준과 삶의 질(행복수준)과 연관성 정도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프라 시설별로 그 수준이 삶의 질(행복수준)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모든 시설물들이 보통 (3.0) 이상을 응답하여 충남도민 대다수가 삶의 질과 각 인프라 시설물 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시설물별로는 삶의 질과 인프라 시설간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의료시설, 교육시설, 공원·녹지, 문화·복지·체육시설 그리고 안전시설 등의 인프라 시설물들이 상대적으로 더 삶의 질과 연관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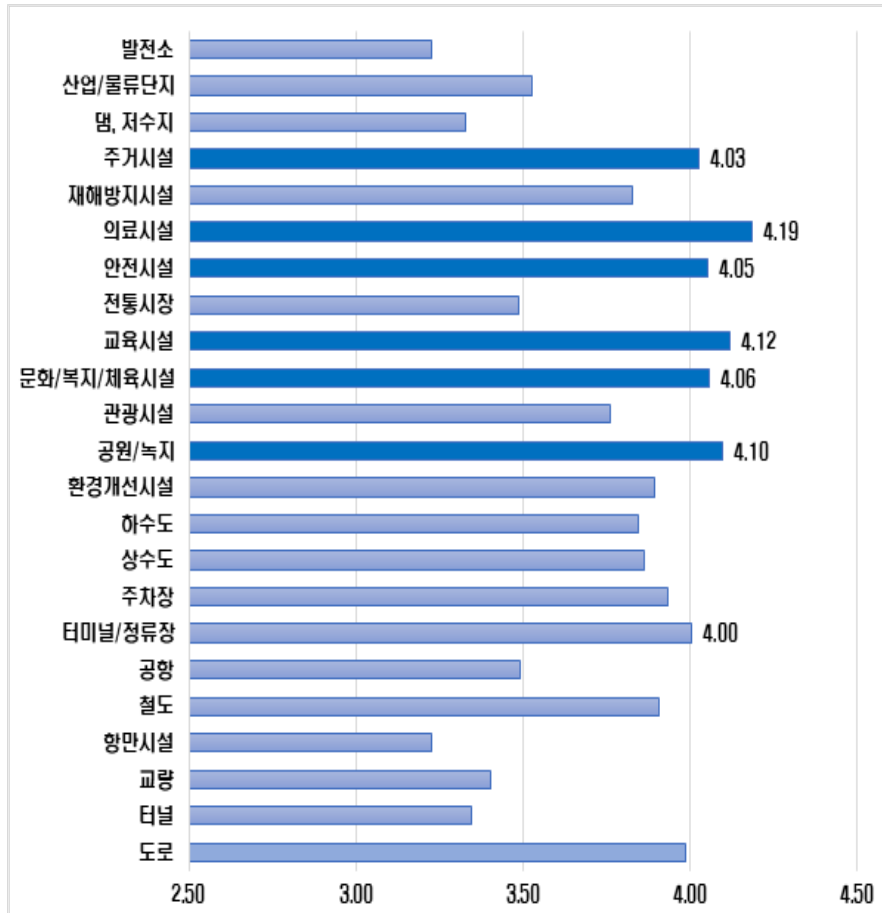


그림 6-15

인프라시설물별  
삶의 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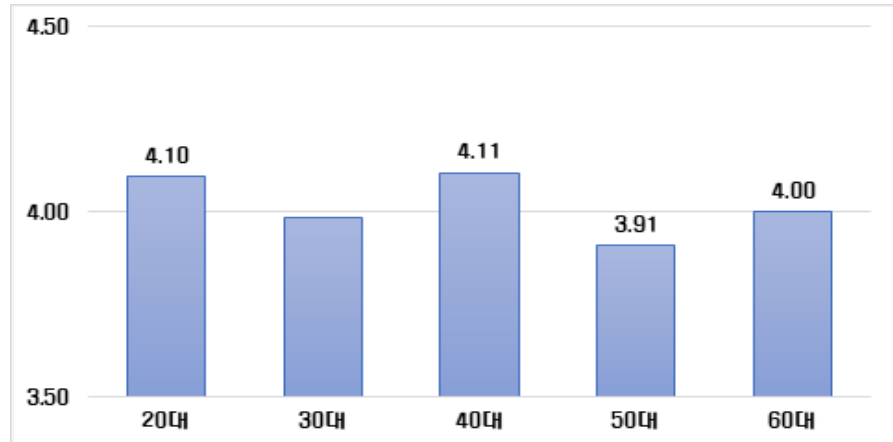
- 또한 연령별로는 각 시설물들에 대하여 삶의 질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다소 시각상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대의 경우에는 주거시설, 공원녹지, 관광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생활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보다 높게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고 있음.

## 2. 설문조사 결과

## 2. 설문조사 결과

그림 6-16

연령대별 주거시설의 삶의 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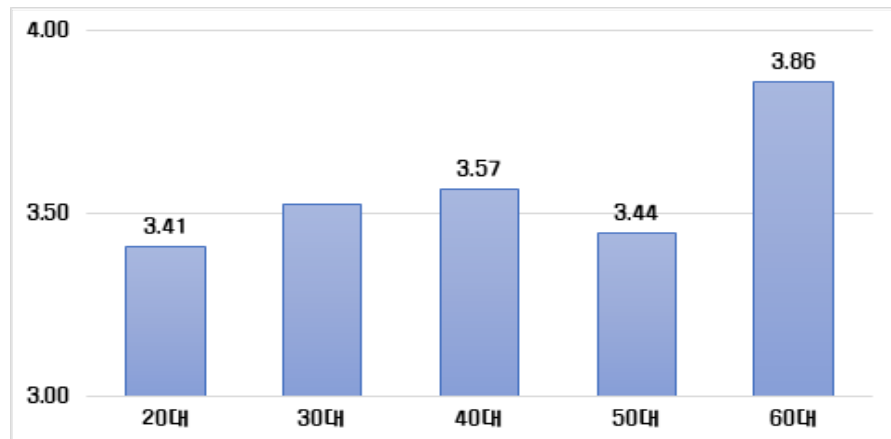


- 반면, 40~60대 연령에서는 상·하수도시설, 전통시장, 재해방지시설, 안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과 산업/물류단지 등 산업경제 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그림 6-17

연령대별 산업/물류단지의 삶의 질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 ○ 충남지역 인프라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도 및 안전수준에 대한 평가

- 거주지역의 주요 인프라 시설물의 전반적인 노후도와 안전수준에 대한 설문 의 리커트 척도 5점 척도 분석 결과, 충남도민들은 3.07점으로 비교적 양호 하게 평가를 하였음.

- 그러나,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계룡시, 아산시, 홍성군 그리고 천안시 등이 인프라 시설물의 전반적인 노후도와 안전수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청양군,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등의 지역주민들은 인프라 시설물에 대하여 노후되었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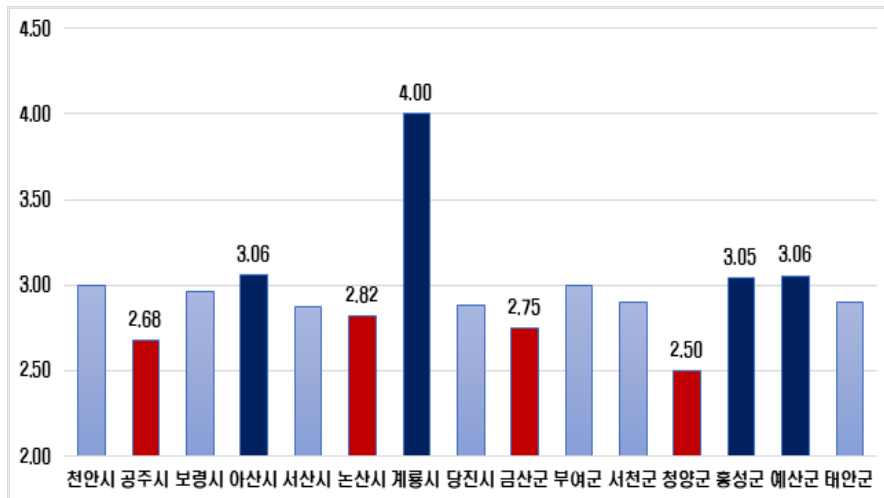


그림 6-18  
시군별 인프라의  
노후도 및  
안전수준에 대한  
설문 결과

- 그러나,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상대적으로 인프라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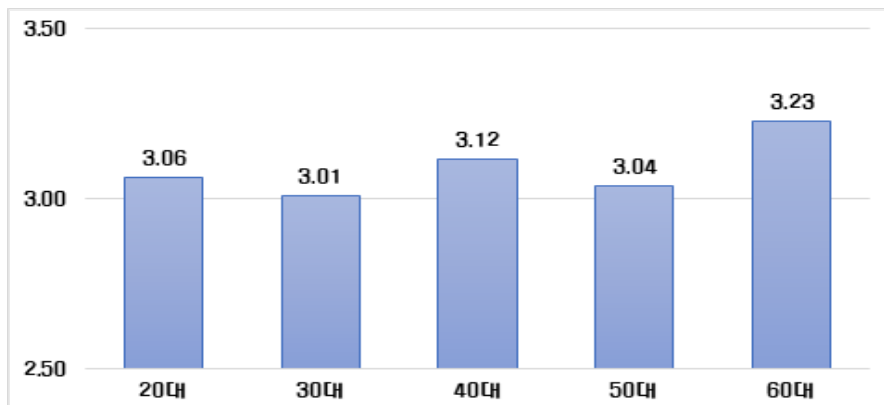


그림 6-19  
연령대별  
인프라의 노후도  
및 안전수준에  
대한 설문 결과

## 2. 설문조사 결과

## 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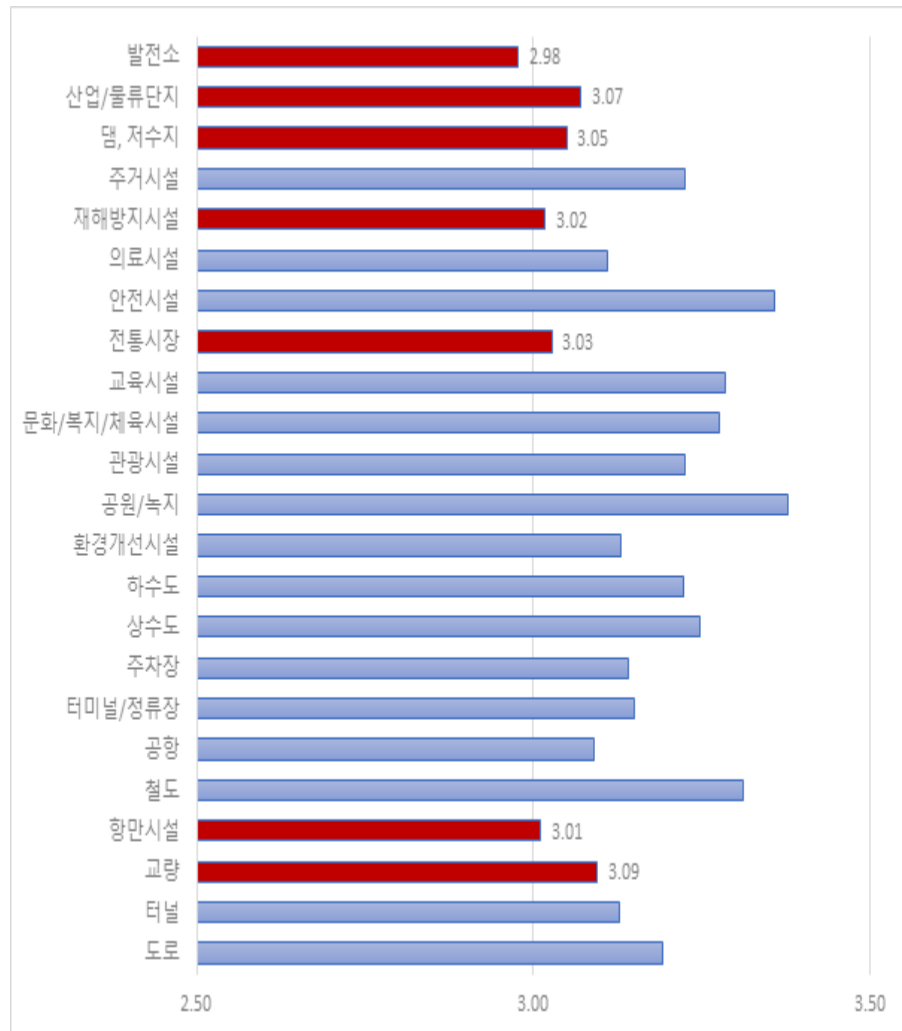
### ○ 충남지역 인프라 시설별 전반적인 노후도 및 안전수준에 대한 평가

- 거주지역의 인프라 시설별 노후도 및 안전수준에 대한 평가의 질문의 경우, 발전소 시설에 대하여 보통 이하의 평가를 하였고, 상대적으로 항만시설, 전통시장, 재해방지시설 그리고 댐/저수지 등에 대하여 노후화되었고,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단위 : 점)

그림 6-20

충남 인프라 시설  
별 노후도와 안전  
수준 평가 결과



- 철도시설의 경우, 전체 평가는 3.31점으로 보통 이상의 노후도와 안전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금산군, 당진시 그리고 부여군 등에서는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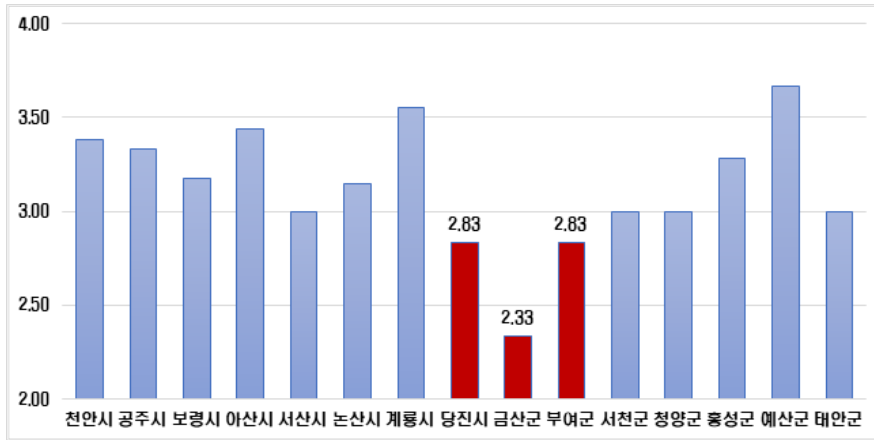


그림 6-21

충남 시군별 철도의 노후도와 안전 수준 평가 결과

- 교육시설의 경우에도 전체 평가는 3.28점으로 보통 이상의 노후도와 안전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태안군, 당진시 그리고 서천군 등에서는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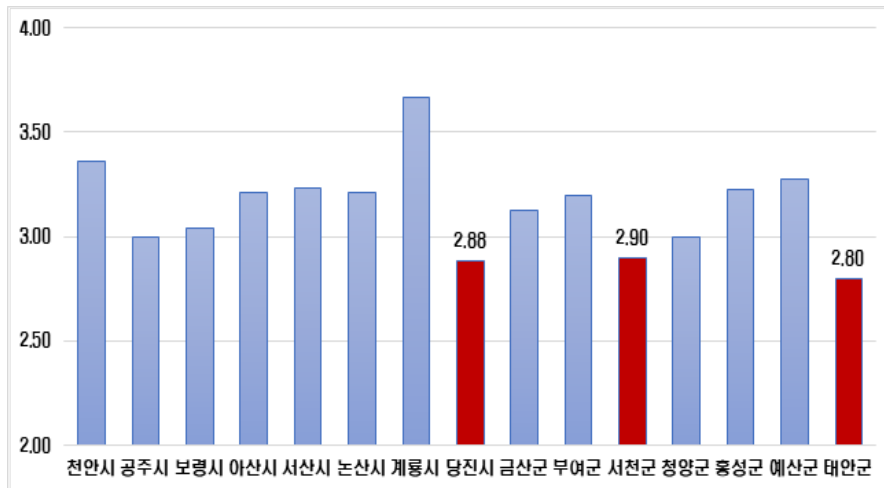


그림 6-22

충남 시군별 교육 시설의 노후도와 안전수준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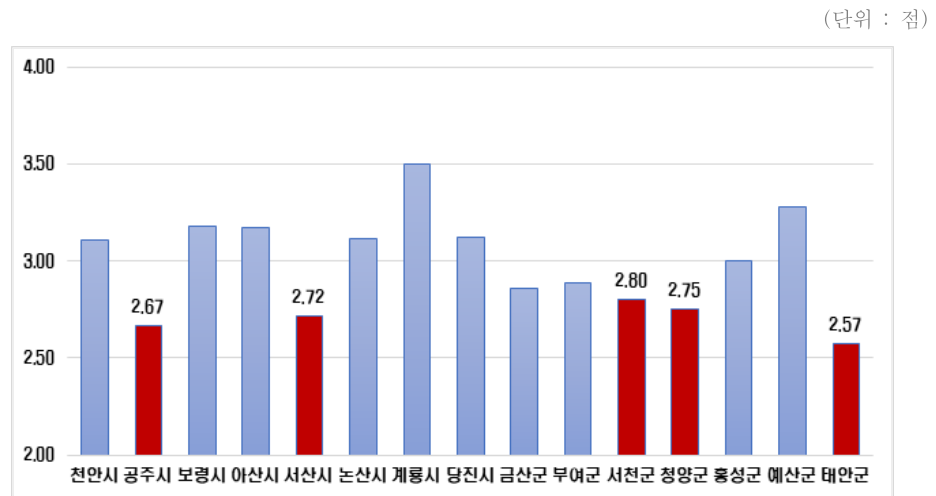
- 산업/물류단지의 경우에도 3.07로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으나, 태안군, 공주시, 서산시, 청양군, 서천군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산업/물류단지에 대하여 노후화되었고,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 2. 설문조사 결과

## 2. 설문조사 결과

그림 6-23

충남 시군별 산업/물류단지의 노후도와 안전수준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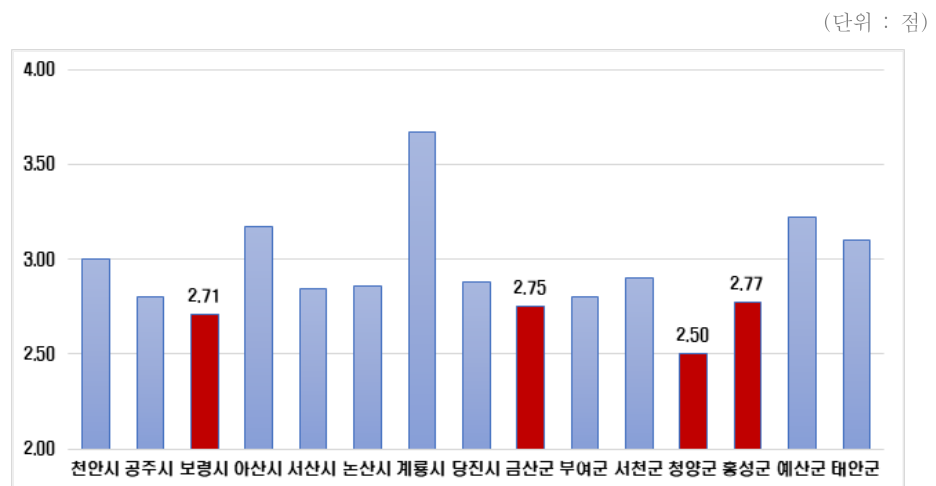


### ○ 충남지역 인프라 시설의 사회적 재난(화재, 교통사고, 오염, 붕괴, 기타사고 등)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인식

- 충남지역의 주요 인프라 시설의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의 결과, 3.03점으로 보통 정도로 안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그러나, 지역별로는 차이가 컸는데, 청양군,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인프라 시설들이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24

충남 시군별 사회적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인식



- 연령대별로는 상대적으로 40~60대 연령대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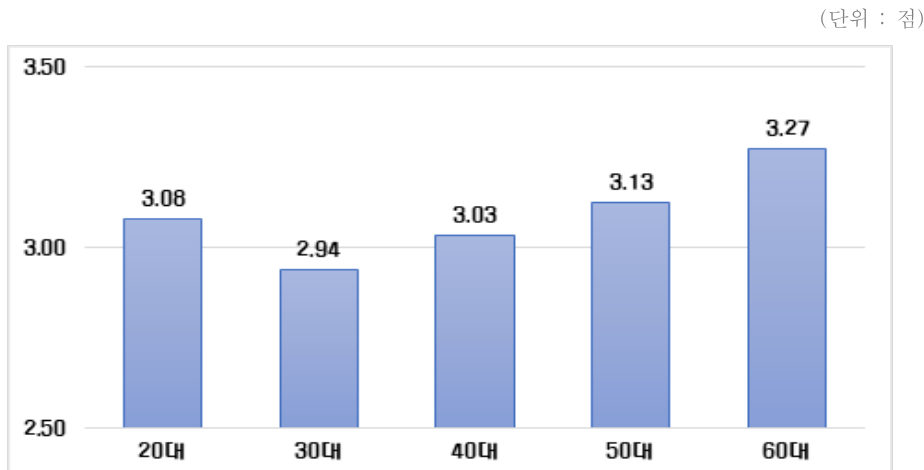


그림 6-25  
충남 연령대별  
사회적재난으로부  
터의 안전 인식

- 사회적 재난의 유형별로 우려되는 재난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에서의 폭발이나 화재’가 67.7%(복수응답)으로 가장 위협이 된다고 도민들은 생각함. 다음으로 ‘환경오염’ 52.4% 그리고 ‘대형 교통사고’ 45.23%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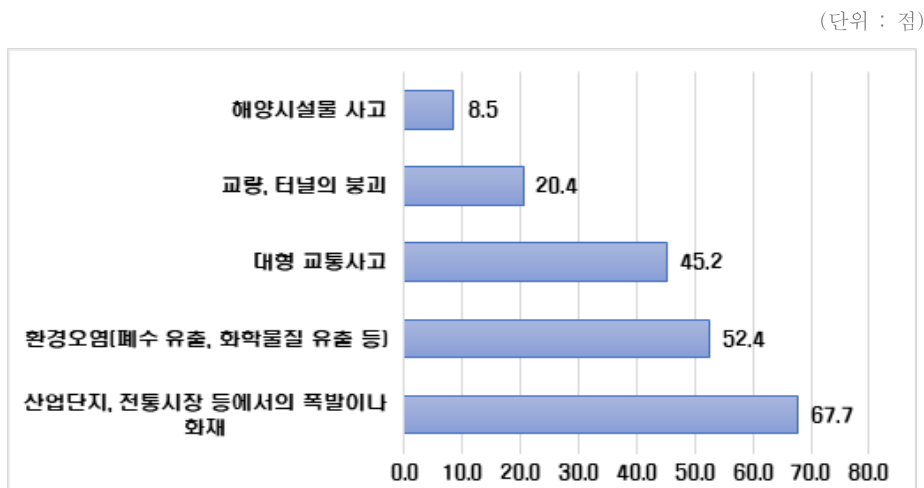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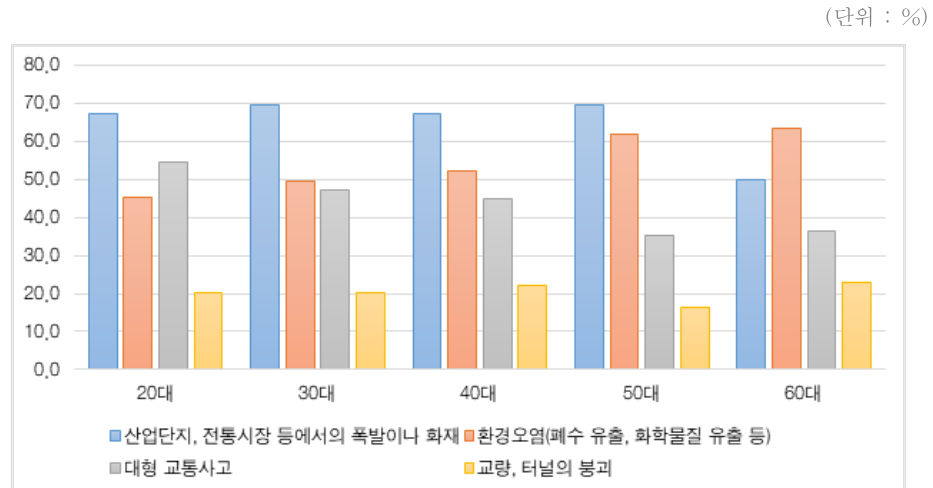
그림 6-26  
사회적재난 유형  
중 위협의  
우선순위 평가

- 연령대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 바, 50대, 60대에서는 환경오염(폐

## 2. 설문조사 결과

## 2. 설문조사 결과

그림 6-27  
충남 연령대별  
사회적 재난 유형  
중 가장 위협이  
되는 재난



### ○ 충남 인프라 시설의 자연재해(지진, 풍수해 등)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인식

- 충남의 주요 인프라 시설의 지진,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의 결과, 3.05로 보통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인식의 차이가 보여지는 바, 계룡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청양군(2.50점), 홍성군(2.55점)으로 상대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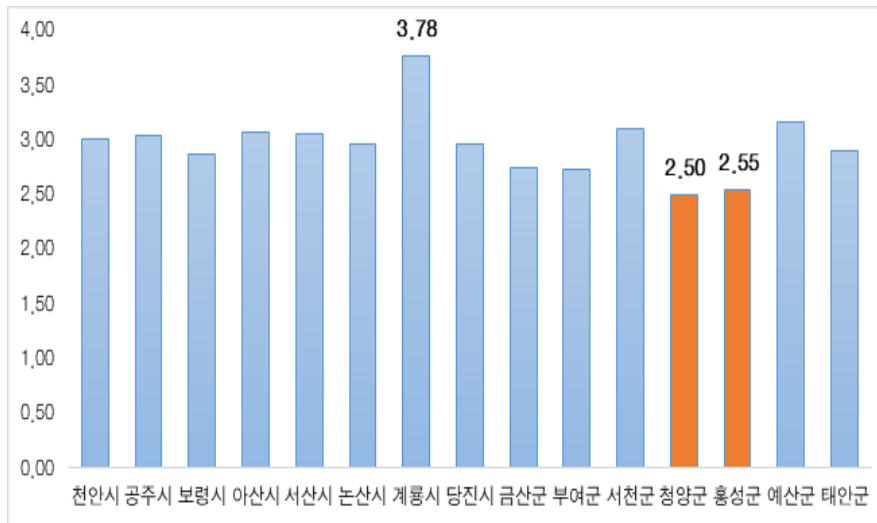


그림 6-28

충남 연령대별  
사회적 재난 유형  
중 가장 위협이  
되는 재난

- 연령대별로도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에 대하여 인식도 상의 차이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활동이 많은 30~50대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았음.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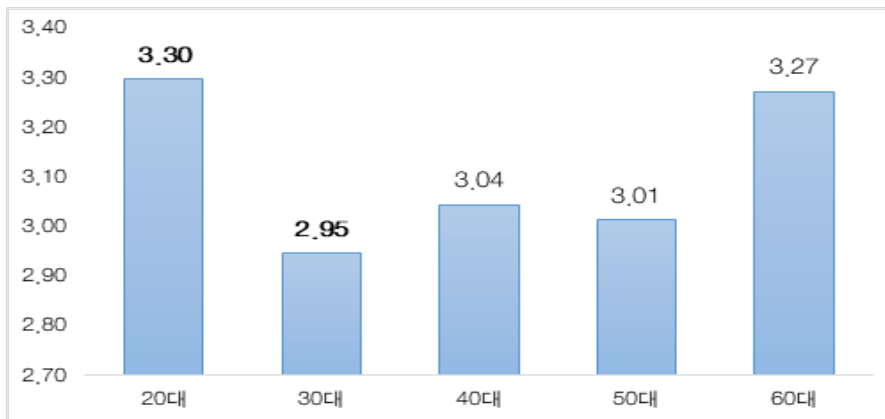


그림 6-29

충남 지역별  
자연재해로  
부터의 안전 인식

-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위협이 되는 자연재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는 '지진에 따른 건물붕괴나 화재, 지진으로 인한 해일 등(49.9%)'이 가장 위협이 되는 자연재해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태풍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57.3%)', '홍수 또는 호우로 인한 피해(28.0%)'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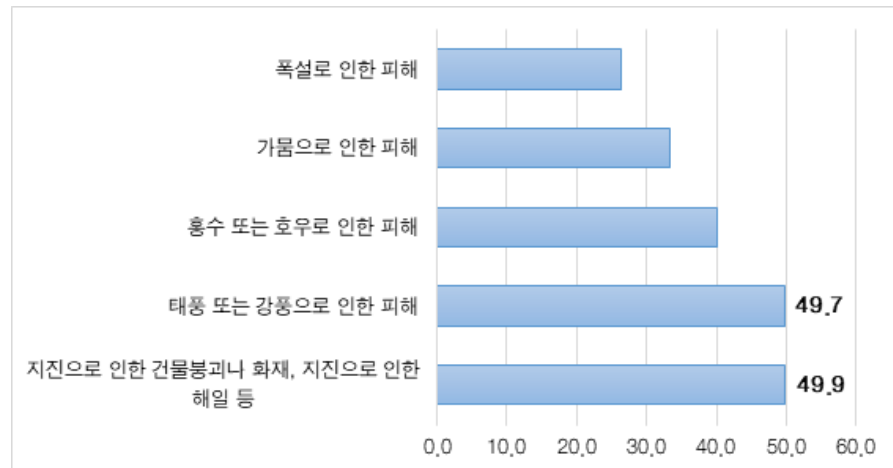
## 2. 설문조사 결과

## 2. 설문조사 결과

그림 6-30

충남 자연재해 유형 중 가장 위험이 되는 재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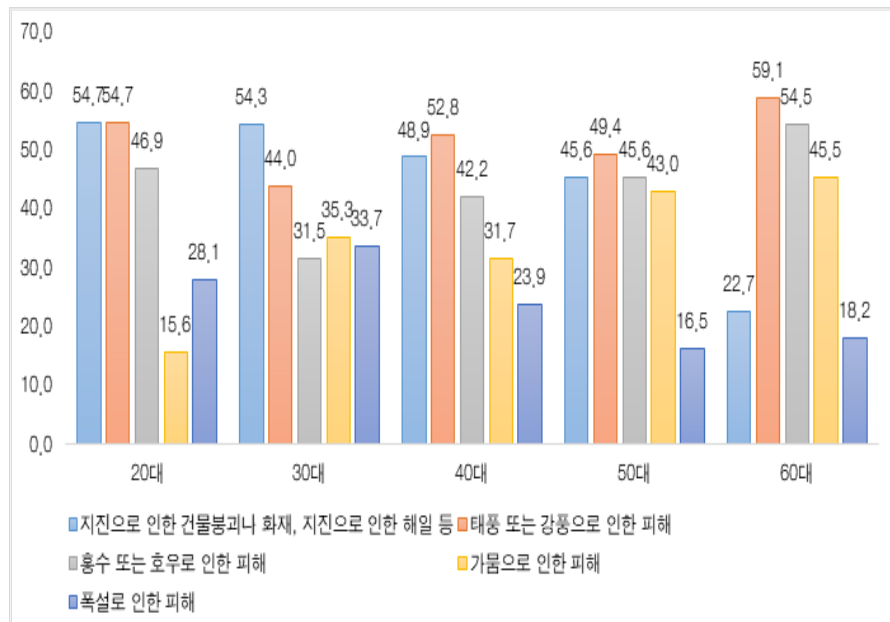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는 다소 인식상 차이가 있었는데 20~30대가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나 화재, 지진으로 인한 해일 등’이 가장 우려가 되는 재난으로 제시한 반면, 40~6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태풍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재해로 인식하고 있었음.

그림 6-31

충남 연령별 자연재해 유형 중 위험이 되는 재해

(단위 : %)



## ○ 충남 현행 인프라 시설 투자수준에 대한 평가

- 충남도민들은 지역의 인프라 시설의 현행 투자 수준에 대하여 2.72점으로 평가하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지역의 현행 인프라 투자 수준에 대해 보통 이하로 평가하고 있음. 특히, 청양군(2.00점), 홍성군(2.41점)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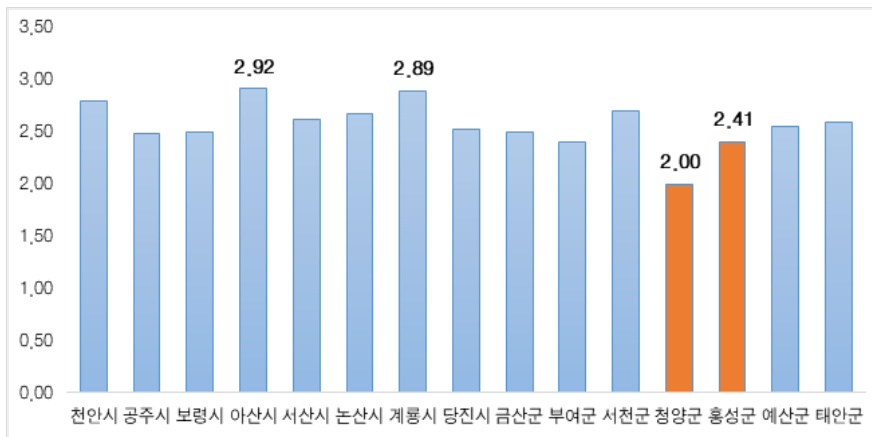


그림 6-32

충남 지역별 현행  
인프라 시설 투자  
수준에 대한 평가

- 또한, 전 연령대에서 인프라 시설 투자 수준에 대해 보통 이하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60대에서 현행 인프라 투자 수준이 더욱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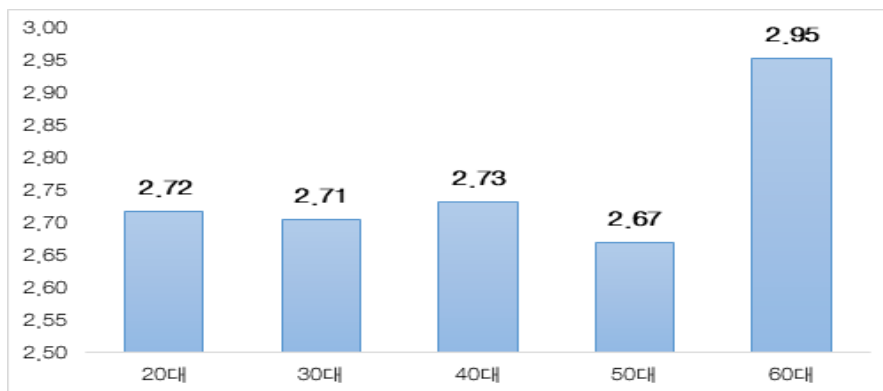


그림 6-33

충남 연령대별 현  
행 인프라 시설  
투자 수준에 대한  
평가

## 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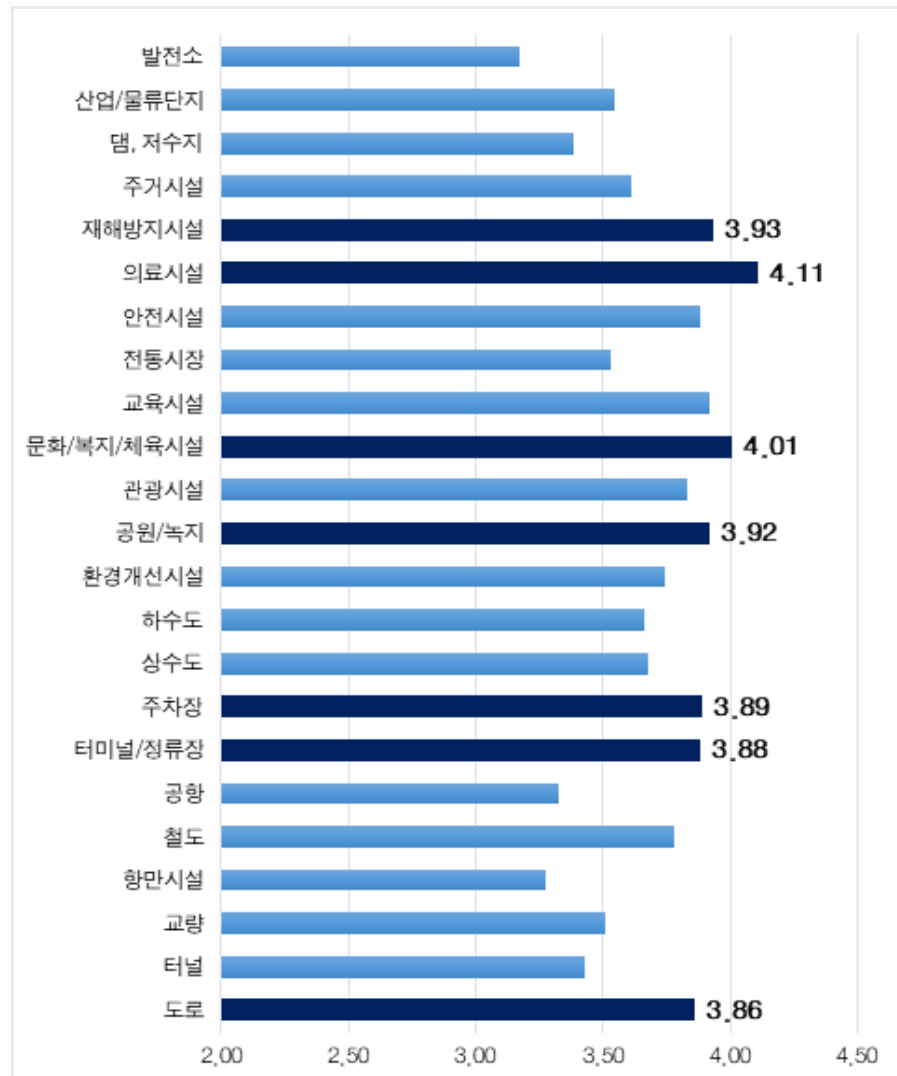
## 2. 설문조사 결과

### ○ 충남지역 인프라 시설별 향후 투자 필요성에 대한 평가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인프라 시설별로 향후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모든 인프라 시설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단위 : 점)

그림 6-34  
충남 인프라  
시설별  
투자방향에 대한  
의견



- 의료시설(4.11점), 문화/복지/체육시설(4.01점)이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라고 인식. 또한, 재해방지시설(3.93점), 공원/녹지(3.92점), 주차장(3.89점), 터미널/정류장(3.88점) 순으로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설이라고 제시



- 지역에 따라서 인프라 시설별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도로의 경우, 청양군(4.25점), 태안군(4.10점), 홍성군(4.09점) 등에서는 투자 필요성이 매우 높은 시설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서산시(3.54점), 서천군(3.60점), 보령시(3.63점)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에 대해 낮게 평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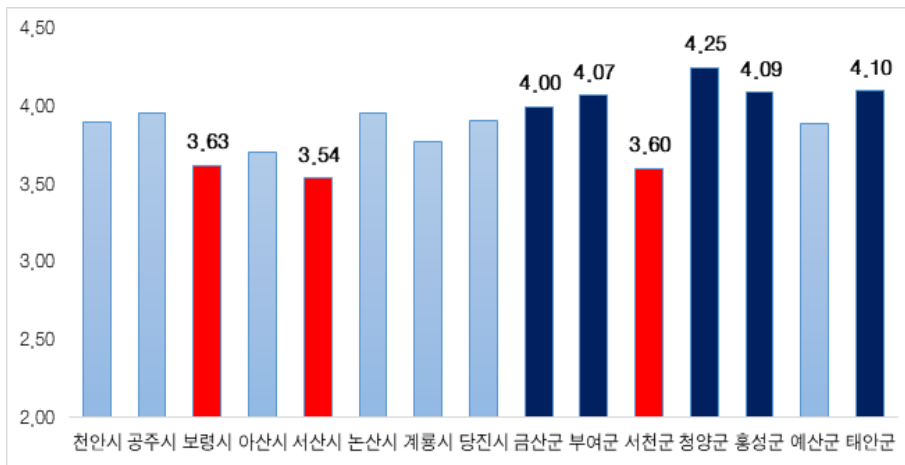


그림 6-35

충남지역 지역별  
도로부문 투자  
필요성 인식 정도

-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 필요성 인식도 지역간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항만시설의 중요성이 큰 지역인 태안군(4.10점), 보령시(3.79점) 등에서는 투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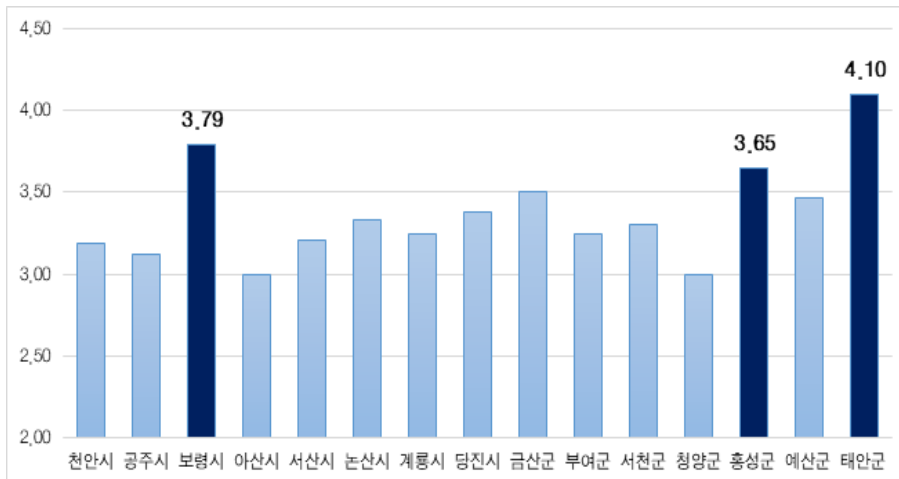


그림 6-36

충남지역 지역별  
항만시설 투자  
필요성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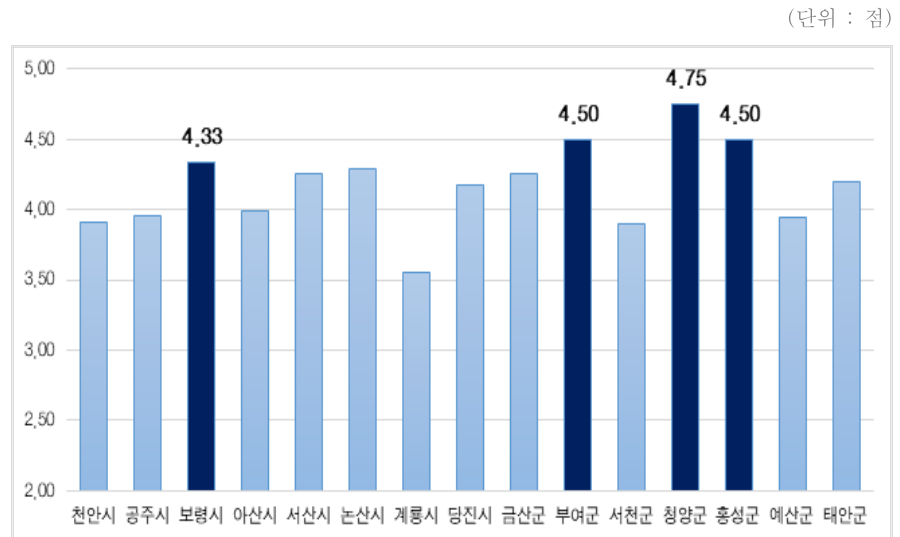
## 2. 설문조사 결과

## 2. 설문조사 결과

- 의료시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역간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컸는데(표준편차 0.30), 청양군(4.75점), 부여군(4.50점), 홍성군(4.50점), 보령시(4.33점) 등에서는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시설로 의료시설을 제시

그림 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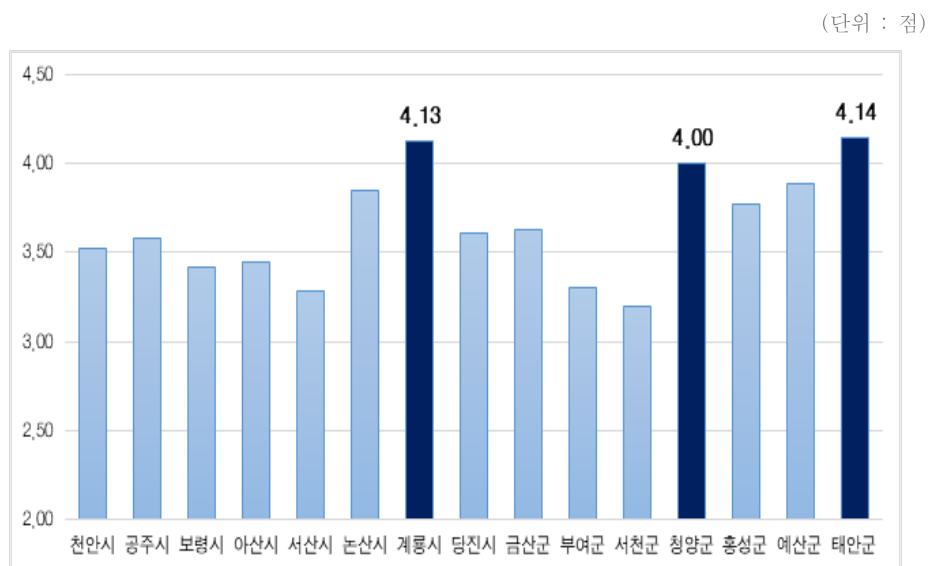
충남지역 지역별  
의료시설 투자 필  
요성 인식 정도



- 산업/물류 단지의 경우에도 지역간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컸는데(표준편차 0.30), 청양군(4.75점), 부여군(4.50점), 홍성군(4.50점), 보령시(4.33점) 등에서는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시설로 의료시설을 제시

그림 6-38

충남지역 지역별  
산업/물류단지 투  
자 필요성 인식  
정도



## ○ 충남지역의 주요 인프라 시설 관련 정책과 제반활동에 대한 평가

- 충남의 주요 인프라 시설과 관련한 정책과 제반 활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2.90점으로 보통 이하로 평가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인프라 시설 관련 정책과 제반활동에 대하여 평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계룡시(3.22점), 아산시(3.08점) 그리고 서천군(3.00점) 등에서는 보통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으나, 반면에 금산군(2.25점), 청양군(2.25점), 태안군(2.40점) 등에서는 매우 낮게 평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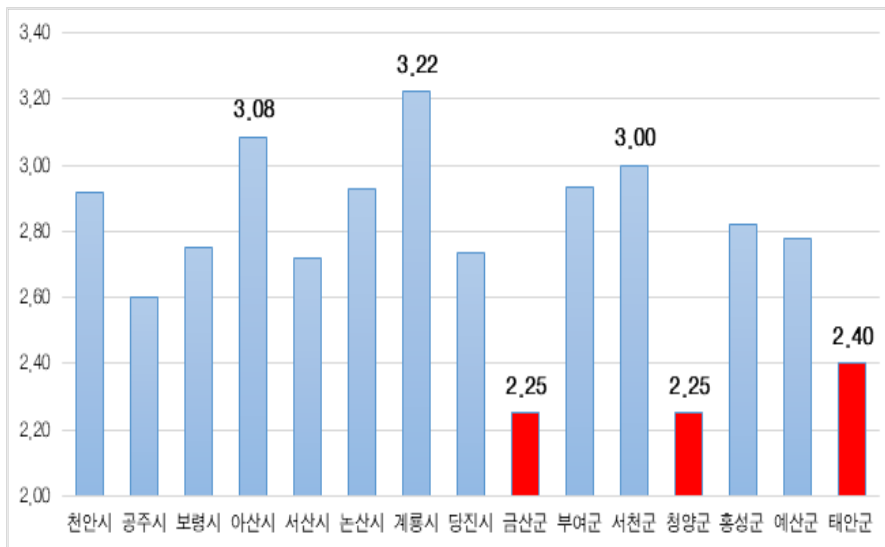


그림 6-39

충남 인프라 시설  
정책과 제반활동  
평가

## ○ 인프라 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

- 충남에서 인프라 시설물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자원 확보방안에 대한 설문 결과, '중앙정부 및 상위 지자체 재정지원 확대'가 45.6%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자원조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다음으로 '민간투자의 적극적인 유치(24.0%)', '기존 예산 내 인프라 투자의 비중 확대(15.7%)'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시설물 사용료의 인상'에 대해서는 2.3%로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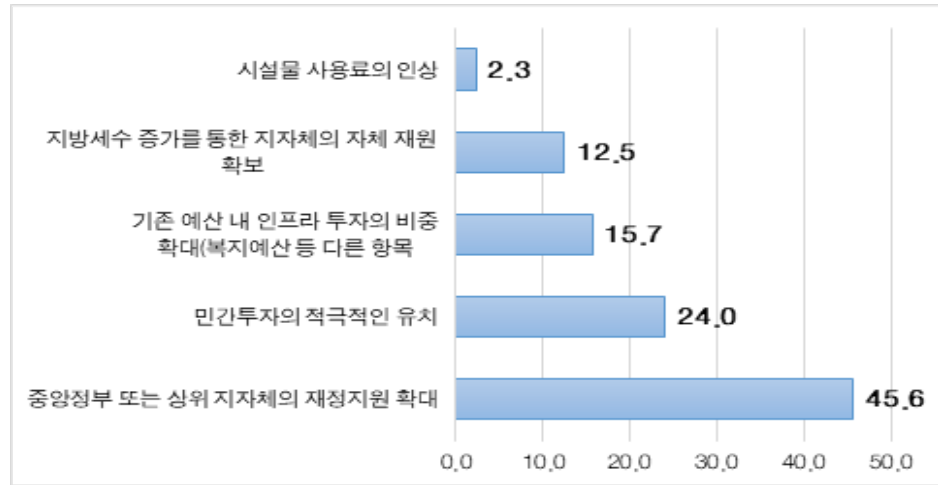
2.  
설문조사  
결과

## 2. 설문조사 결과

그림 6-40

인프라 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에 대한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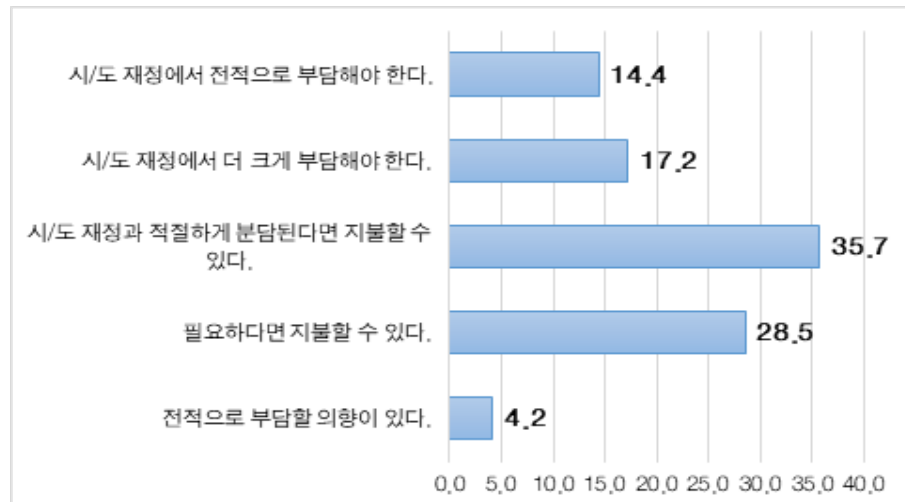


- 주요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대하여는 ‘시/도 재정과 적절하게 분담된다면 지불할 수 있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필요하다면 지불할 수 있다’는 응답이 28.5% 차지
- ‘시/도 재정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12.4%)’나 ‘전적으로 부담할 의향이 있다(2.7%)’는 상대적으로 적게 응답하여 전적으로 시/도나 개인의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음.

(단위 : %)

그림 6-41

충남도민의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인식



## ○ 타 광역 시·도 대비 충남 인프라 시설의 충족도

- 타 광역 시·도에 비해 전반적인 인프라 시설의 충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부족하다는 의견(매우 부족하다+부족하다)이 38.1%인데 반하여 충분하다는 의견이 13.3%로 나타나 충남도민들은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5점 만점의 리커드 척도로 측정한 값은 2.82점으로 보통 이하로 평가하고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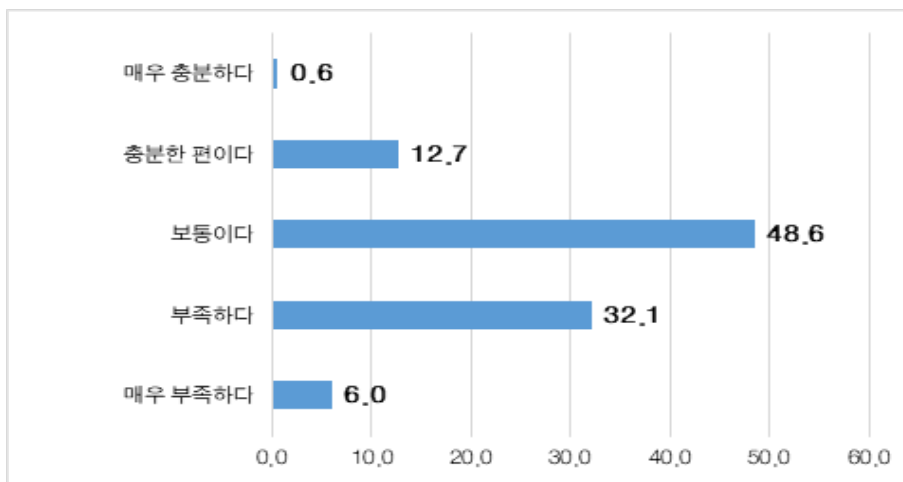


그림 6-42

타 광역시·도 대비  
충남의 인프라  
시설의 충족도  
인식

- 부족한 편이라고 느끼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에 필수적인 문화 및 생활 인프라의 부족’이 4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타 지역에 비해 느린 지역의 성장 속도’ 17.8%, ‘일자리 부족 등 지역경제의 위축’ 16.3%의 순으로 응답

## 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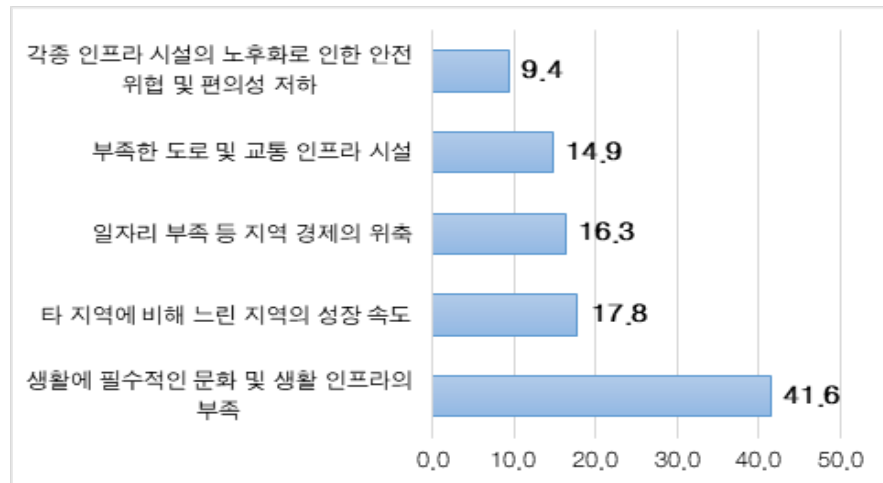
## 2.

### 설문조사 결과

그림 6-43

충남의 인프라 시  
설의 충족도가 부  
족하다는 인식의  
사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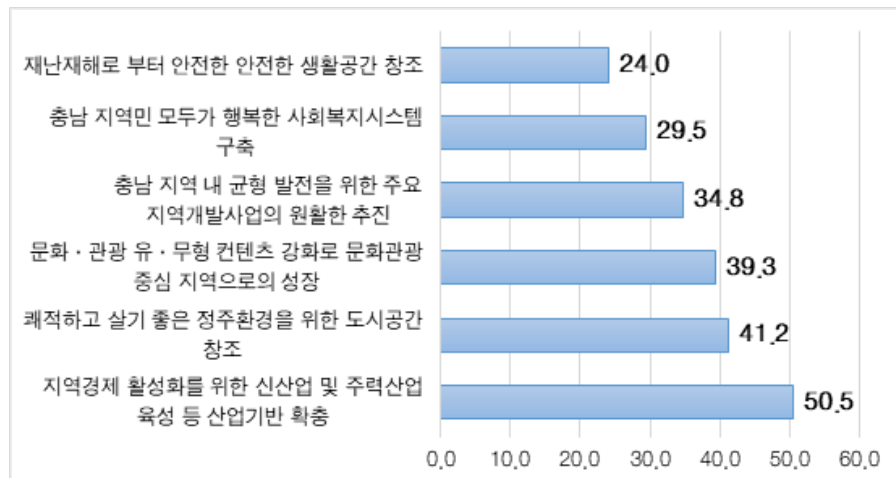
### ○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 현안

- 충남의 향후 한창해관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있어 충남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및 주력산업 육성 등 산업기반 조성’이 50.5%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응답

(단위 : %)

그림 6-44

충남의 지속가능  
한 성장을 위한  
정책 현안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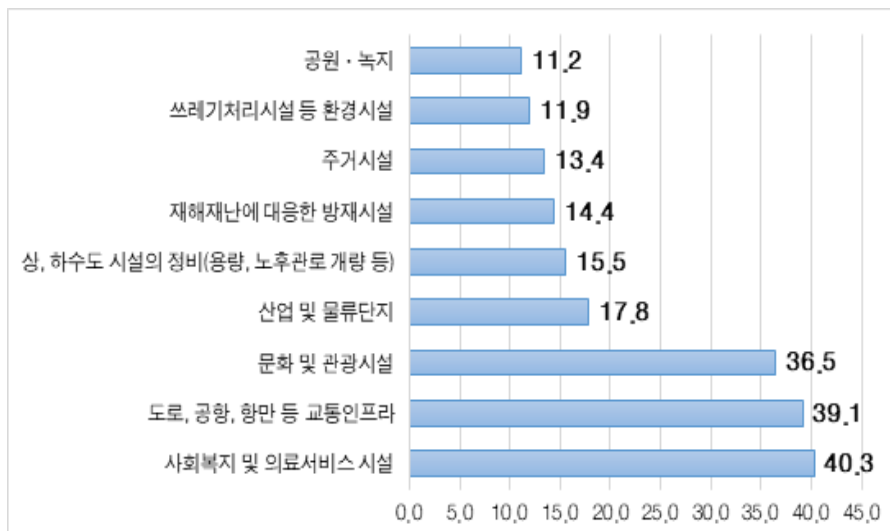
주 : 복수응답

- 다음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위한 도시공간 창조’ 41.2%, ‘문화·관광 유·무형 콘텐츠 강화로 문화관광 중심지역으로의 성장’ 39.3%, ‘충남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의 순으로 나타남.

## ○ 충남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프라 투자 분야

- 충남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프라 투자 분야에 대한 설문 결과,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시설’이 40.3%로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도로, 공항, 항만 등 교통인프라’ 39.1%, ‘문화 및 관광시설’ 36.5%, ‘산업 및 물류단지’ 17.8%, ‘상, 하수도 시설의 개선’ 15.5%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주 : 1순위와 2순위 합계

- 1순위로만 한정할 경우, 도로, 공항, 항만 등 교통인프라가 25.7%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프라 분야로 제시되었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시설 18.3%, 문화 및 관광시설 16.1%, 상·하수도 시설의 정비 8.9% 순

그림 6-45

충남의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적인 인프라  
투자 분야

## 2. 설문조사 결과

## 2.

###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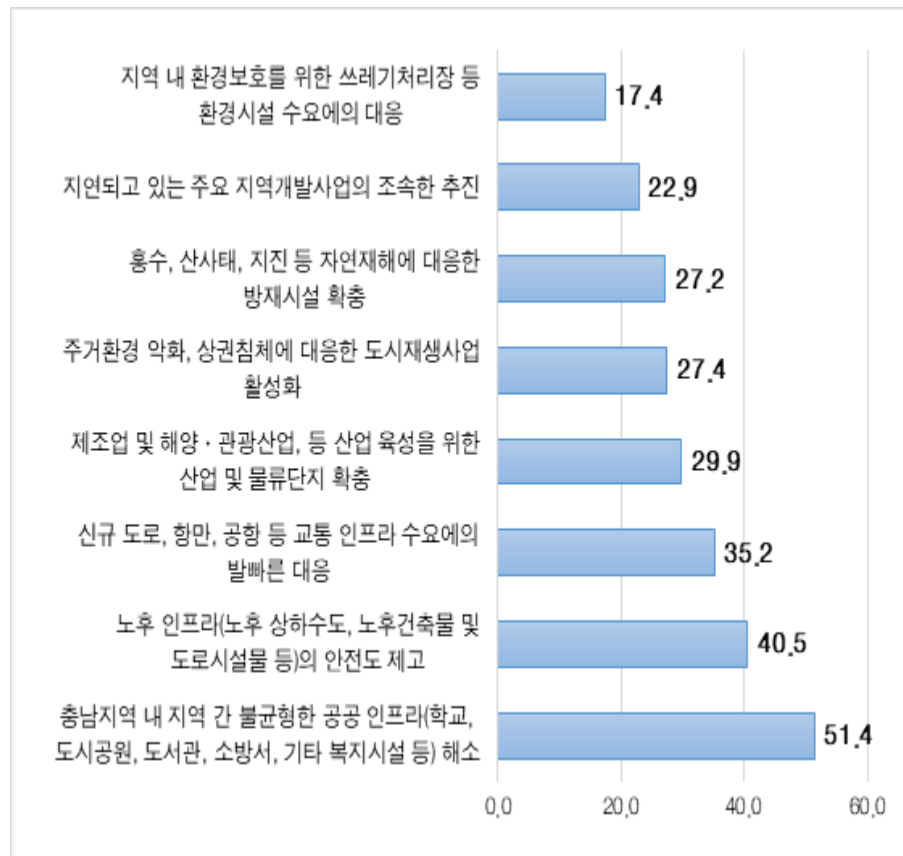
#### ○ 향후 중점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인프라 투자정책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 결과, '충남지역 내 지역간 불균형한 공공 인프라 해소'가 51.4%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인프라 투자정책 방향으로 제시되었음.
- 다음으로 '노후 인프라의 안전도 제고' 40.5%, '교통 인프라 수요에의 발빠른 대응' 35.2%,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및 물류단지 확충' 29.9%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6-46

충남의 향후 중점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주 : 복수응답



## 제7장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 및 핵심사업 발굴

### 1. 지역 인프라 투자정책의 기본방향

#### (1) 인프라와 지역 발전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은 1987년 Brundtland Report가 발표된 이래로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하여 국 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됨.
- 정희성(2002)의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의 구성요소와 정책수단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지표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범주	정책지표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보전	환경용량 보전
		자원기반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경제발전	경제성장과 안정
		생태-효율 제고
		정책통합성 제고
	사회개발	민주적 참여확대
		빈곤문제 해결
		환경정의 구현

자료 : 정희성(2002) ; 저자 편집

표 7-1

지역발전  
설정지표 사례

1.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기본방향

# 1.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기본방향

표 7-2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개념과 요소

- EC(2012)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하여 ‘경제적 번영’, ‘사회적 포용’, ‘환경적 지속가능성’, ‘재난위험감소’ 등의 개념적 차원을 포함시킴.

개념적 차원	내 용
경제적 번영 (Economic prosperity)	지역 경제의 성장과 혁신의 토대를 제공하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의 기반을 마련
사회적 포용 (Social inclusion)	주거, 환경, 낙후지역에 대한 적정서비스 공급을 통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활력을 마련하고, 거주민의 육체적 건강과 사회적 유대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
환경적 지속가능성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자연-인공-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환경을 보호하여 후손들의 미래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전
재난위험 감소 (Disaster risk reduction)	사회적 또는 자연적 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가경제의 피해를 최소화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기본조건은 양질의 인프라 시설 이라고 할 수 있음.
  - 위에서 도시발전의 개념과 요소로 설명된 경제적 번영, 사회적 포용, 환경적 지속가능성, 재난위험 감소 등의 요소들은 모두 충분한 인프라 시설에 달성될 수 없는 속성들임.
- ‘인프라(Infrastructure)’란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facilities)이나 제도(institution)등을 통칭함.
  - 협의적 의미로는 주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항만, 댐, 등의 물리적 시설(hard infrastructure)를 의미하며, 본 연구는 협의의 인프라를 대상으로 함.
  -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프라는 공공재의 일반적인 속성인 ‘비 배제성(non-excludable)’과 ‘비경합성(non-rivalrous)’을 가지므로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는 재화이므로, 기본적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함.
- 따라서, 인프라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물리적 요소지만, 시장에서 공급되는 재화가 아니므로 정부 재량(정부정책)에 의하여 투자항목과 금액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인프라 시설물을 건설하기 시작함.
- 각 시기별로 경제성장 단계가 달랐으므로 인프라 투자의 주요 목적과 전략은 수정됨.
- 예를 들면, 2000년대까지는 '광역권 또는 지역거점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주요 목표였지만 2010년대부터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같이 미시적으로 실효성 있는 인프라 투자목표가 제시됨.

구분	목적	투자기준	공간전략	수도권 개발	지역개발
1960년대 ~70년대	산업화 및 경제성장 촉진	효율성	상대적 우위지역 집중거점 개발	대도시 집중억제	특정지역 개발
1980년대	지역격차 해소	형평성	지방 중심도시 위주 분산형 거점개발	지역 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
1990년대	지역경쟁력 강화	효율성 +형평성	집적경제 추구 지방 광역권 개발	대도시권 정비 및 성장관리	광역 개발방식
2000년대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 역량강화	효율성 +형평성	공간분산전략, 5+2광역 경제권 발전전략	대도시권 정비 및 관리	선택-집중 개발 광역경제 권 개발
2010년대	지역 연계 증진지역 경쟁력강화	효율성 +형평성	거점개발 촉진 주민 삶의 질 개선	도시재생 성장관리 지방연계 강화	지역수요 맞춤지원

표 7-3

우리나라의  
시기별 인프라  
투자전략

## (2) 지역 인프라 투자 축소에 따른 문제점

- 지역에 있어 인프라 투자의 축소는 장, 단기적으로 지역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
  - 첫째,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들의 만성적 공기지연을 초래하고, 추진 예정인 사업들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지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추가적인 공사비 등 부담도 증가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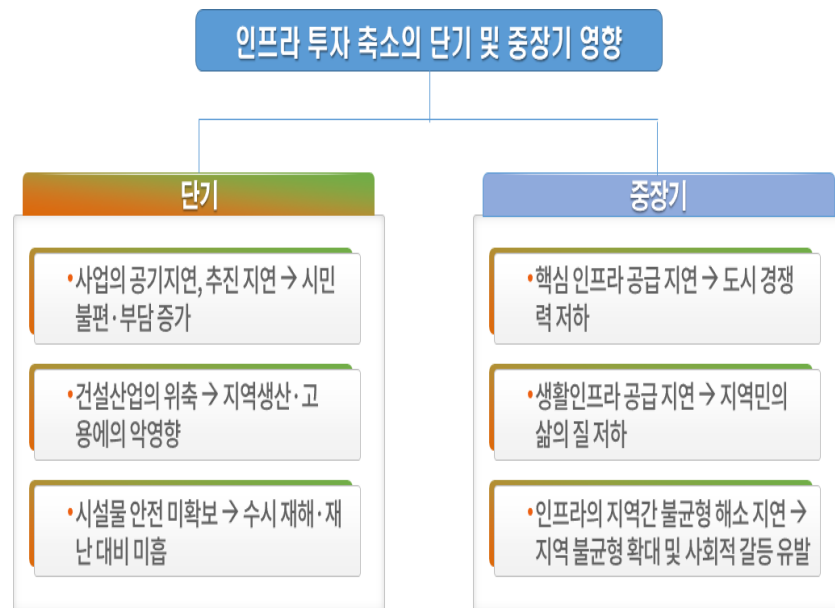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기본방향

# 1.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기본방향

- 둘째, 건설산업의 위축에 따라 지역 내 생산, 고용에의 부정적 영향으로 단기적인 지역경제 위축 우려
  - 셋째, 도시안전에 필수적인 시설물 안전 확보 미흡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재해 및 재난 대비 미흡
- 중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
- 첫째, 인프라 축소에 따른 도시 경쟁력의 저하임. 글로벌 도시들의 경쟁력에 있어 인프라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인프라 투자 축소는 도시의 경쟁력을 저하시킴.
  - 둘째, 인프라 투자 축소에 따른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의 문제임. 생활환경과 관련된 제반 인프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함.
  - 셋째,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재의 지역 내의 인프라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됨.

그림 7-1

인프라 투자 축소의 문제점



### (3)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기본방향

- 충남이 지향하고 있는 향후 지역 발전 방향과 인프라 실태, 향후 지역의 경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
- 이를 위해 향후 충남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물류 분야의 혁신적인 인프라 전략이 요구되어짐.
  -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람과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교통 환경 개선 추진
  -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해 산업 및 물류 환경 개선 추진
  -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인프라의 전략적 투자로 지역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 안전을 위협하고, 과도한 교통혼잡비용을 발생시키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개선 그리고 물류 인프라 확대 필요
- 둘째, 충청남도도가 향후 발전모델로 지향하고 있는 행복하고 새로운 충남 실현을 위한 인프라의 투자가 필요
  - 충남의 경제적 강점을 극대화함으로써 풍요로운 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역적 제반 인프라 수요에 대응
  - 충남의 GRDP 및 부가가치생산을 높일 수 있는 산업, 경제의 성장 기반 구축 필요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즉, 산업단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 등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의 협력 유도를 위한 집적 산업입지 구축 등이 필요
- 셋째,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삶의 공간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확대가 필요
  - 향후 인프라 투자에 있어 지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기

## 1.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기본방향

## 1.

###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기본방향

위한 전략적인 투자는 인프라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함.

- 청정 충남 시대를 열기 위한 상·하수도 시설 개선,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 인프라 확충 필요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 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재 인프라의 확충과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

- 넷째, 지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지역민 친화적인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

- 지역민 특히, 서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서민친화적인 지역 생활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생활의 터전이 되는 주거시설 및 생활권 환경 정비가 필요
- 지역민들이 지역생활에 있어 필요로 하는 공공 복지, 의료 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 필요

- 다섯째, 다시 찾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제반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경쟁력있는 관광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
- 국토의 중심지에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의 확충과 유지관리
- 지역민의 문화예술의 생활화 유도과 문화예술의 산업화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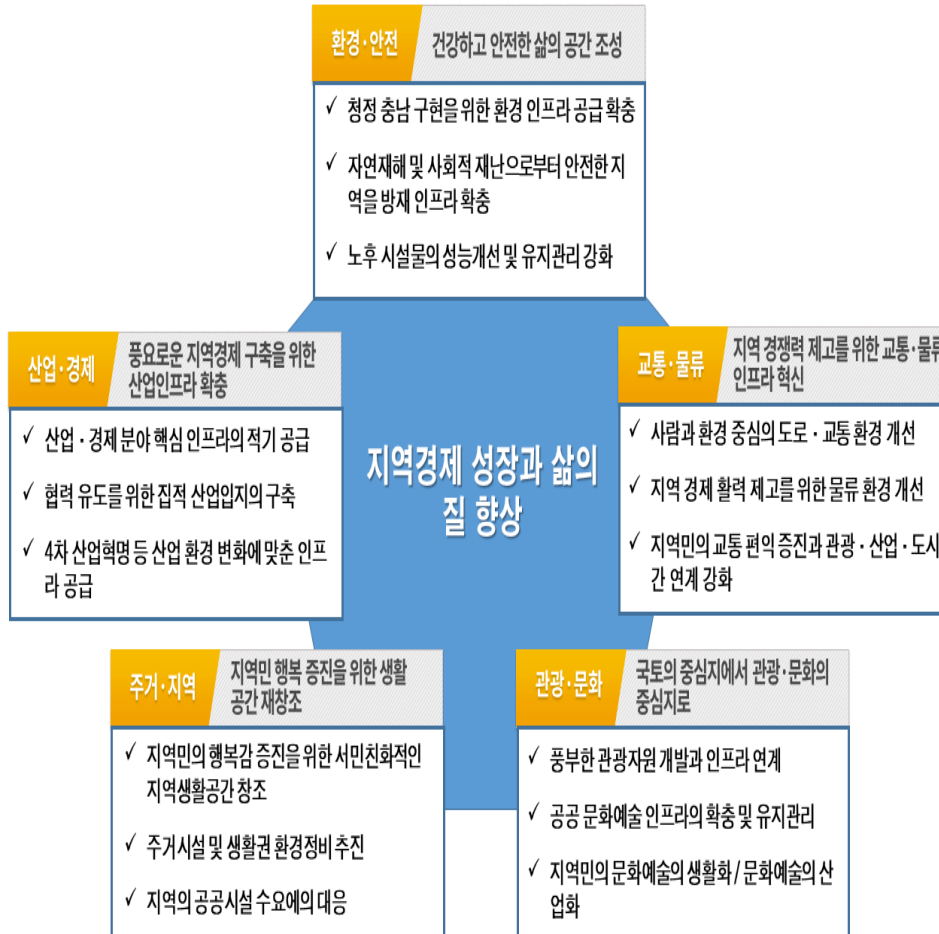


그림 7-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목표 및  
정책방향

# 1.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기본방향

## 2.

###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지역 인프라 투자정책 및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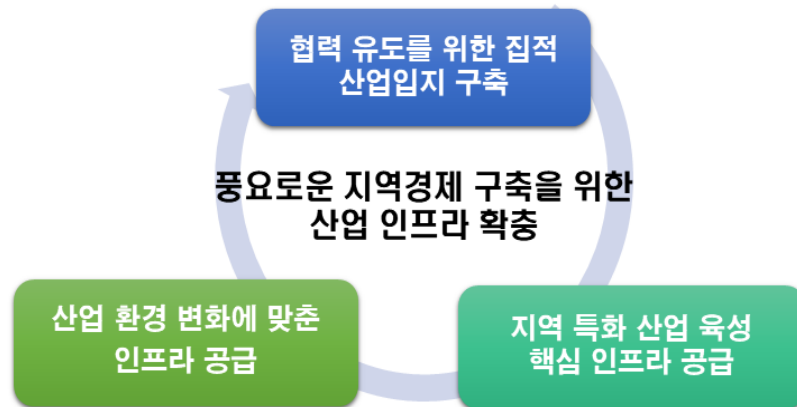
### (1) 풍요로운 지역경제 구축을 위한 산업인프라 확충

#### 1) 추진 목표

- 산업·경제 분야 핵심 인프라의 적기 공급 ⇒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기능 활성화
- 기업간, 산업간 협력 유도를 위한 집적 산업입지의 구축 ⇒ 산업·물류 시설의 확충과 고도화
-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춘 인프라 공급 ⇒ 경쟁력 있는 신산업 육성

그림 7-3

산업·경제 인프라  
확충의 목표와  
전략





## 2) 추진 정책 및 프로젝트

### 산업·경제

### 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

#### ○ 사업 추진 배경

- 충남은 산업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지역으로서 제조업의 육성을 위한 R&D 연구 기반 확충은 중요한 과제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제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 필요
  -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합연구의 증대 필요성 증대
- 수도권 중심의 R&D 집중현상 완화에 있어 충남지역은 입지상의 이점을 활용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추진에 적합
  - 지리적으로 충남 위로는 판교, 아래로는 대덕, 세종 등 R&D 집적지역과 인접해 있어 주변부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전략적 거점
- 제조업 중심인 충남지역의 산업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상황
  -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으로 인한 저성장 체제로의 진입에 따른 내생적 발전의 준비가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
  - ※ 충남, 2010년 성장률 11.8% (전국 1위) → 2015년 3.4% (전국 7위)
- 충남과 같이 제조업 중심인 중국 심천지구의 경우, 가치망을 기반으로 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구축하고 홍콩과의 시너지 효과 발생
  - 중국 심천지구는 중국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 산업도시로서 중국 경제의 새심장으로 일컬어짐.

#### ○ 사업내용

- 대상 부지는 천안아산역 주변 도시지원시설 부지로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대 137,498㎡(약 41,600평)임.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그림 7-4  
천안아산역 주변  
R&D 집적지구  
대상부지



자료 : 충남도청

- 부지의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서 토지매입 가격은 약 1,290억원 규모임.
- 동 사업은 7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정사업비는 총 3,000억원 규모임.

단계	과제 (HW,SW)	중앙 부처	사업내용	추정사업비 (단위 : 억원)			
				합계	국	지	민
합			계	3,000	1,900	860	240
1단계 (내발 적 발전 기반 마련)	①충남 지식융합 진흥원 설립 (HW)관리, 교 류센터	산 업 부	국내외 지역혁신자원 네트워크 허브 - 지역진흥/기반구축 사업	1,000	700	300	
	②사업화 멘토링 센터 (HW)기업지원	중 기 청	사업화모색, 공공/민 간 금융지원 - 선도벤처연계 창원 지원사업	500	350	150	
	③HW 엑셀레이 터 (펀드)금융지원	미 래 부	R&D 사업화 실행, 팜 랩운영 - 산학협력실용화/기 술사업화	300	100	100	100
2단계 (산업 지원 확대)	④ICT 융합 R&D 센터 (HW)제 조 업 지원	산 업 부 미 래 부	신산업 기술사업화 지 원 스마트 팩토리 지원 - ICT기술사업화/ICT 기반 조성사업	500	300	100	100
	⑤산학융합 플라 자 (SW) 기업중심 산학연	미 래 부 산 업 부	산학융합 사업화 활성 화 지역대학 R&D 스포크 집적화 - 지역진흥 기반구축 사업 - 산학협력실용화/기 술사업화	100	50	30	20
3단계 (인력 자원 화)	⑥연합캠퍼스 (SW)제조혁신 특화	중 기 청 교 과 부	제조혁신 인재양성/컨 설팅 글로벌 창업 -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	100	50	30	20
	⑦레지던스 랩 (HW)청년유치	교 과 부	청년연구원 유치 기반 구축 -신진 연구인력 양성	500	350	150	

자료 : 충남도청

- 각 사업의 연계성은 다음과 같음.

표 7-4

천안아산역주변  
R&D 집적지구  
세부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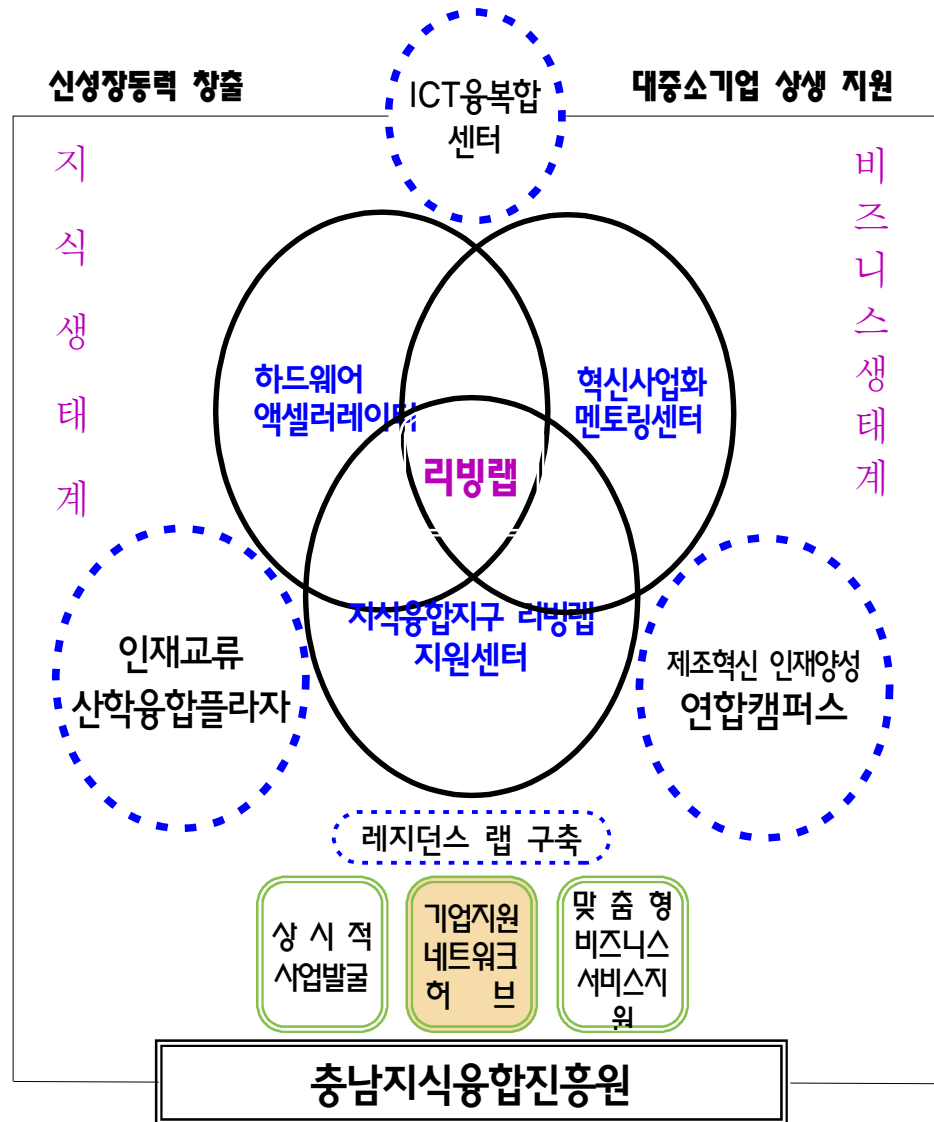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그림 7-5

천안아산역주변  
R&D 집적지구  
세부사업 연계도



- 「지식융합진흥원」은 지식융합지구 R&D 및 사업화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됨.
- 기업지원 네트워크 허브 기능 : 충남 및 지식융합지구 내의 기업, 대학, 기업지원기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산-산, 산-학 협력 유도
- 지역산업 다각화를 위한 연관 산업 확대 지원
- 바우처를 활용한 수요맞춤형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 지원 의뢰기업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
- 타겟산업 전략기획형 상시적 사업발굴 시스템 구축

- 「혁신사업화 멘토링 센터」는 지역 가젤기업의 발굴 및육성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이 목적
  - IT 기업가들이 직접 창업기업들을 멘토링하는 창업보육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및 자문기능 등 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 기업 지원 펀드 자금의 운용 : 신성장기반 확충 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구조 고도화 사업전환 자금 등 운용
  - HW 엑셀레이터 : 아이디어 원스톱 창업 지원 시스템 구축
- 「ICT 융합 R&D 센터」는 제조혁신 R&D와 생산지원 서비스역량강화 위한 ICT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ICT 융복합으로 주력산업 연관 신산업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함.
  - 스마트 팩토리 R&D 실험실(Model Factory) 운영
  - 스마트 팩토리 사업화 센터 운영
  - IoT 기반 스마트 창작제품 제작소 운영
  - I 4.0 교육센터 운영
- 「전문인력교류 산학융합플라자」는 지역대학별로 특성화된 R&D역량을 네트워킹, 지역기업 혁신을 주도하고 산학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기술 혁신생태계 구축하기 위함.
  - 지역대학 R&D 스포크 집적화 지원사업 : 산학융합 사업화 활성화 지원사업, EDP협의체 구축
  - 공동장비활용 기술시험 지원센터 구축
  - 특허거래 센터 유치
- 「인재양성 연합캠퍼스」는 지역산업을 지속성장을 위한 우수인력 확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혁신과 지역성장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함.
  - 제조혁신 인스트럭터 양성 및 중견중소기업 제조혁신 컨설팅 지원, 현장개선컨설팅 등 수행
- 연구원용 「레지던스 랩」 구축은 수도권 우수인력 확보와 유치를 위한 청년정주여건 확보를 위해서임.

## 2.

###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4시간 연구환경이 구비된 레지던스 주거시설 구비하여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 ○ 기대효과

- 산·학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주도하는 통합적 기관 설립으로 지식융합지구의 리빙랩 구심점 역할
- 지역수요 맞춤형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제조혁신 기반 조성으로 충남 주력제조업의 구조고도화 기여
- IoT 기반 스마트 제품 창작의욕 고취, 창업 활성화로 산업의 다양성 확보 및 산학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기술 혁신생태계 구축

## ○ 사업 추진 배경

-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성 증대
  - 제조업 선진국의 지능정보기반 제조업의 플랫폼화 및 서비스화에의 적극적인 대응
  -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스마트 팩토리 보급 솔루션 개발 필요
- ※ 중소기업 79.2% 스마트공장 도입의사 없음 : 인력,자금부족, 기술력부재 (중소기업중앙회, '15.10)
- 충남지역은 국내 선도산업인 자동차 부품 분야에 있어 핵심지역으로 실증 테스트 베드의 구축으로 선도지역으로 부상 필요
  - 타 시도에 비해 단일 산업의 집적도가 높고 산단이 비교적 늦게 생성되어 스마트 공장적용이 비교적 수월한 분야 적용 필요
- ※ 충남 자동차 부품산업 업체수 1,109, 종사자 47,616, 매출액 26.3조원(전국 213.7조 규모)

## ○ 사업 내용

- 미래기술융합센터 및 테스트 베드 구축사업은 천안 성환 국립축산과학원 이전부지 등을 활용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5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 사업비 500억원은 국비가 300억원, 지자체가 100억원 그리고 민간투자자 100억원으로 구성 예정

## 2.

###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그림 7-6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부지 전경



자료 : 충남도청

- 주요사업으로는 지능형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개발 및 보급으로서 지능형(ICBM+MI) 중소형 제조 플랫폼 원천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 빅데이터 구조화, I/O센서, 보급형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을 수행함.
- 또한, 지능형(ICBM+MI) 제조 플랫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교과 과정을 개설하고, 국내외 인턴쉽 및 국제 협력 프로그램 등을 수행할 예정
- 자동차 부품분야의 마더공장(MOTHER FACTORY)로서 실증하게 되는데, 제조 CPS업종 분야별 마더공장 사업에 참여함.
  - ※ 정밀기계(구미, '17년), 의료기기(울산, '17년), 제약화장품(안산 '18년)
- 본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서 '천안아산역 역세권 R&D 집적지구 구축사업'과 함께 천안의 대표공약으로서 제시되어졌음.

#### ○ 기대효과

- 우리나라 수출 주력 산업인 ICT 제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



## ○ 사업 추진 배경

-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산업 현장 중심형 국제컨벤션 센터의 건립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충남지역의 경우, 국내 주요 기간산업이 생산 클러스터를 이루고 국가 생산을 주도하고 있어 타시도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전시+회의+현장방문+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현지 중심형 국제컨벤션 센터의 최적지로 평가되어지고 있음.
  - 또한, 충남지역은 제조업 및 교통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융합산업 인프라 조성에 있어 매우 유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짐.
  - 특히, 천안아산역 주변지역은 교통 접근성 측면의 강점 활용이 필요하나, LH 지구 축소로 대부분 주거용도 이용 중에 있음. 산업 육성을 위해 컨벤션 산업 등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충남의 핵심 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및 관광, 레저 등 지식기반산업의 거점 인프라로서 활용 가능
- ※ 천안아산역은 경부고속철도상 서울(30분) 등 전국 모든 지역과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

## ○ 사업 내용

- 최근 완료된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건립 기본계획, 규모, 운영방식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이 공개되었음.
- 동 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지인 충남(중부권)의 장점을 바탕으로 한 산업 - 기업 중심의 국제컨벤션 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임.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특히, 산업지원형 컨벤션 센터의 개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바, 기존의 국제업무단지형(코엑스), 리조트형(제주국제), 텔레포트형(부산) 등과 차별화한다는 방침

- 동 기본계획에 따르면 충남 국제컨벤션센터는 건축비 1,684억 원을 투입, 천안아산역 인근 연구·개발(R&D) 집적지구(천안 불당·아산 탕정지구) 내 4만 5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7만250㎡ 규모로 건립한다는 내용임.
-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이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50으로 투자 예정
- 용역 수립 전 최초 계획에 따르면, 건축면적 6,000㎡ (연면적 35,000㎡) 부지체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였으나, 확대되었음.

그림 7-7

충남 국제컨벤션 센터 조감도



자료 : 충청남도

- 국제컨벤션 센터 내에 주요 예정되는 시설은 주요 산업 대중소기업 제품 및 투자 상설 전시장 (12,000㎡), 국제 컨퍼런스 회의장 (4,000㎡ / 1,000석 규모) 및 기타 산업시설로서 투자 지원 원스톱 지원 및 산업기술 교류 센터, 산업지원 리빙랩 센터 (제품 실증 및 상용화 테스트) 등임.
- 동 사업은 지식융합지구와 병행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KTX역사 내 공공용지

를 활용하여 복합 콤플렉스를 조성할 예정

- 충청남도는 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을 신청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후 사업을 집행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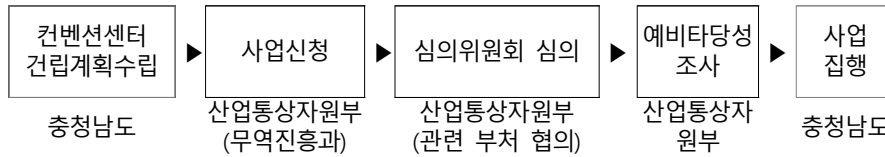


그림 7-8

충남 국제컨벤션  
센터 사업 추진계  
획

## ○ 기대 효과

- 수도권(서울) 중심의 국내·국제 회의가 집중됨에 따라서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하여 국내·국제 회의 개최를 분산시킴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를 기대
- 산업현장형 컨벤션 센터구축으로 수출 및 투자와 바로 연계되는 산업관련 서비스 산업 창출 가능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 사업 추진 배경

- 현재 대산 지역은 개별 입지를 통한 석유화학업체 밀집으로 체계적인 관리 어렵고, 국가세수 대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황. 또한, 대산지역 내 공업용수량 부족 예상 및 전력공급망 불안정 지속
- 대산지역의 정밀화학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정밀화학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 특히, 대산2일반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시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경쟁력 확보 필요
- 2016년 10월,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는 고부가 정밀화학산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대산 산업단지를 ‘석유화학 특화산업단지’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발표
- 2018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산2산업단지와 4지역 용지, 주변부지 총 200만㎡를 첨단화학 특화단지로 신규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을 받을 전망
  - 충남과 서산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하는 합동지원반 출범(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과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개선 논의)
- 충남의 지역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측면에서는 영세하고 지역적으로 산재한 정밀화학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R&D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규모를 대형화하고 지역적으로 집적화 필요
  - ※ 2015년 기준 정밀화학 전체의 98.5%가 300인 미만 기업(50인 미만 73.1%)
- 산업통상자원부의 고부가 정밀화학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충청남도 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

## ○ 사업 내용

-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기존 대산2산업단지와 4지역 용지, 주변 부지 총 200만㎡를 첨단화학 특화단지로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000억원 추정
- 사업의 핵심 목적은 기존 입주기업의 부지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며 플라스틱·정밀화학 중소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첨단화학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음.
- 사업의 위치는 대기업이 입주해 있고 여유 부지가 있는 대산지역으로서 투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일반산단부지(대산2산단, 1,142천㎡)와 인근 공업용지(대산4지역 1,164천㎡) 확보할 예정



자료 : 충청남도

그림 7-9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  
위치도

-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단지를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산4지역을 산단으로 지정하고 대산2산단과 연계 개발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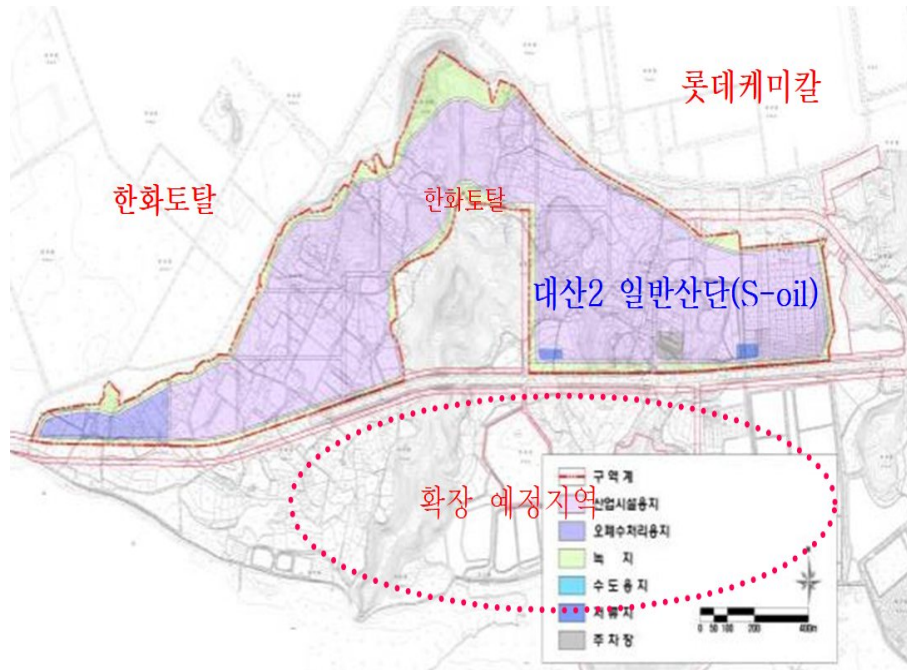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그림 7-10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  
부지조성계획



자료 : 충청남도

- 주요 수요처인 중국과 가까워 석유화학 대기업과 중소화학업체가 약 2~5조원의 신규 투자 의향 표시한 상태임.
  - H사는 NCC 생산량 확대를 위한 설비를 위해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L사는 기초원료 설비 3조원을 투자 의향을 표시
  - 계면활성제 회사인 N사 등은 대산지역 첨단화학 전용 산단 조성 시 투자 의향을 표시

#### ○ 기대 효과

- 정밀화학제품의 거대 시장인 중국에의 수출 거점으로 육성 가능
- 화학업종 기업의 인프라 구축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며, 현재의 석유화학업체 밀집 단지의 효과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지진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석유화학단지의 안전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로 고부가가치의 정밀화학제품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

## ○ 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

-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서해안 지역의 가뭄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수자원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 그동안 그동안 정부의 물부족 대응 정책으로 댐과 지표수의 활용을 통한 용수 공급에 집중해 왔던 바, 사실상 한계에 다달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져 왔음.
- 충남의 경우에는 대산임해지역 공장증설 및 신규단지 조성에 따른 장래용수 증가로 2020년까지 87천m<sup>3</sup>/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전망
- 2015년 가뭄으로 인한 제한 급수 등 물 위기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현재 충남의 보령댐 광역상수도 이외 추가 수원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원 확보가 충남 산업의 최대 현안
- 이에 따라 물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대산임해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사업이 추진되어져 왔음. 지난 2016년 10월, 서산시와 K-Water, 그리고 대산단지 내 8개사가 함께 기본협약을 체결
- 동 사업은 2017~2019년까지 3년 동안 2,200억 원(국비 30·K-water 70%)을 투입, 대산단지 8개 기업에 하루 10만m<sup>3</sup>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음.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서해안 지방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 지원과 고부가가치 선도형 물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산단지 해수담수화 사업과 함께 태안, 홍성 등의 해수담수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이에 따라 3개 지구의 해수담수화사업과 함께 연구단지 및 산업단지를 포함하는 「서해 해수담수화사업 집적단지」 조성 논의가 본격화됨.

### ○ 사업 내용

- 「서해 해수담수화사업 집적단지」는 현재 예비타당 조사 중인 ‘대산산업단 해수담수화사업’과 태안, 홍성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포함한 해수담수화 사업과 서산시 대산을 일원에 해수담수화산업 연구단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해수담수화사업 집적 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임.
- 서산 대산, 태안, 홍성 등 3개 지역 해수담수화사업에 추정 사업비 4,600억원과 집적단지 조성에 5,000억원 등 9,600억원 규모임.

(단위 : m<sup>3</sup>, 억원)

표 7-5

서해  
해수담수화사업  
집적단지  
연도별 사업비  
투입 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해수담수화사업	대산임해산업단지 해수담수화사업	2017~19	100천m <sup>3</sup> /일(공업용수)	2,200
	태안지역 해수담수화사업	2019~20	30천m <sup>3</sup> /일(생활용수)	800
	홍성지역 해수담수화사업	20'21~22	50천m <sup>3</sup> /일(생활용수)	1,600
집적단지	해수담수화사업 집적단지	2018~27	50만m <sup>3</sup> 에 해수담수화산업 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5,000

자료 : 충청남도

- 대산임해산업단지 해수담수화사업은 대산단지에 위치한 기업에 하루 10만 t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200억원이 투입될 예정
  -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하는 용수공급방법인 해수담수화 시스템을 마련해 대산단지에 위치해 있는 입주기업에게 물을 공급할 예정



그림 7-11

대산산단 및  
해수담수화사업  
부지 전경



자료 : 충청남도

- 태안지역 해수담수화사업은 태안지역에 하루 3만 t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는 800억원임.
- 홍성지역 해수담수화사업도 홍성지역 등에 생활용수를 하루 5만 t을 공급
- 사업비는 3개의 해수담수화사업 모두 국가와 K-water가 각각 30:70으로 분담할 예정
- 충남과 K-water는 대산 및 태안, 홍성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조기 추진 정부 건의할 예정임. 이와 함께 서해 해수담수화산업 집적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고, 정부에 제안할 계획

#### ○ 기대 효과

- 서해안 지역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가뭄 등 물 위기 대응
- 해수담수화사업의 확대로 물산업 육성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일자리 창출 기대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 사업 추진 배경

- 충남은 국방 관련 정책기관 및 연구소 집결지로 국방산업 육성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음.
  - 3군 본부, 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항공대, 건양대학교 등 소재
  - 군 관련 인프라가 모여 있으며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1~2시간 내 접근할 수 있어 군 물자 신속공급이 가능
- 논산·계룡 지역은 대전 인접 도시로서 고급 기술인력과 자원이 풍부한 지역
  -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원(ADD), 대덕특구 및 과학벨트와의 기술적 협력과 연계 가능
- 국방산업발전 및 안정적 국방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필요
  - 국방과학연구원(ADD) 등 국방분야 R&D 성과 사업화 등을 위한 특화 산업 용지 확보 필요
- 국방기술과 신개념무기체계를 연계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논산·계룡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내륙지역 성장거점을 마련 필요
- 국방산업단지 조성의 목적은 방위산업은 지역산업이 아닌 국가산업이므로 전국에 산재한 전력지원체계 생산업체와 연구기관 등을 한곳에 집적화해 자주국방을 도모 필요
- 전국의 국가산단 중 70%가 영·호남 임해지역에 집중돼 있는데다 특히 무기체계산업은 진주·사천 국가항공산단, 창원, 부산, 구미 등 영남권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충남 지역에 국방산업단지의 조성은 큰 의미가 있음.

## ○ 사업 내용

-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 8월, 국방 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본구상 및 추진 전략 수립과 함께 본격 논의되기 시작
- 이후 2015. 8월, 국방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및 수요조사를 시행하였고, 2017년 2월,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착수
- 국방산업 특화 산업단지의 예정부지는 논산, 계룡 지역으로 1,000천m<sup>2</sup>(약 30만평) 내외임.



자료 : 충청남도

그림 7-12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위치도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표 7-6

국방산업단지  
연도별 사업비  
투입 계획

-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800억원으로 전액 민간투자로 유치한다는 계획임.

(단위 : 억원)

재원별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합 계	806	5	1	800			
국 비	1		1				
도 비	5	5					
시군비							
민 자	800			800			

자료 : 충청남도

- 국방부는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나 예산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
- 국방산업단지의 유치업종으로는 전력지원(비무기)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무기체계도 병행검토
  - ※ 타당성 조사결과, 100만㎡ 규모, 무기체계 이외 전력지원체계 산단 조성 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정부 공약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충남에서는 2019년까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

### ○ 기대 효과

- 충남·대전지역 국방 관련기관(계룡대, 국방대학교, 육군훈련소,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의 밀집에 따른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 가능
- 국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 사업 추진 배경

- 가로림만은 2016년 7월, 국내 최대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실효적 관리체계의 확보 및 가로림만의 생태가치의 확산 필요성 증대
- 서산의 산업이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자동차 등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생태계가 불안요인이 상존
- 국가해양정원은 서산의 산업생태계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순천만 이상으로 생태관광지로 키울 수 있다는 풍부한 잠재력 보유
- 수도권외의 풍부한 배후수요 및 중국 유커 유치자원 활용을 통한 해양생태·관광의 신 해양문화 창출

## ○ 사업 내용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충남 서산시 ~ 태안군 가로림만 일원으로 조성 면적은 91.237km<sup>2</sup> 내임.



자료 : 충남연구원

그림 7-13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 부지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표 7-7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  
연차별 사업비  
투입 계획

-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연간이며, 추정 사업비는 정원조정 1,300억원, 주변개발 1,100억원 등 2,500억원임.

(단위 : 억원)

재원별	총사업비	'17년	'18년	'19년	'20년	'21이후	비고
합 계	2,500	2	0	10	20	2,468	
국 비	2,498			10	20	2,468	
지방비	2	2					

자료 : 충청남도

- 동 부지에 도입되는 시설로는 자연환경 자원 기반 공간별 배치(해양, 갯벌, 하천, 연안)를 지향하여 국제 갯벌보호센터, 점박이물범 보호센터, 해양생태 자원관, 갯벌체험관, 갯벌정원, 화합의 다리 등을 설치할 계획

그림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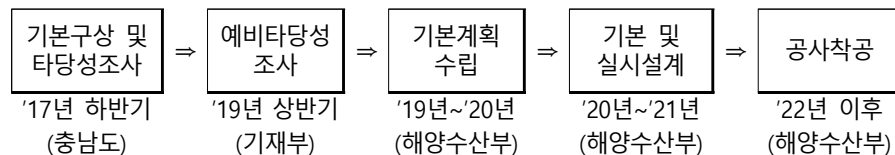
가로림만  
개발계획(안)



-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며,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 7-15

사업추진절차



## ○ 사업 추진 배경

- 천안 서북구 일대에 위치한 제2일반산업단지는 1992년 조성된 이후 조성된 이후 천안시 서북구 일원 82만 3천㎡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업체 63개사가 입주해있음.
- 천안 제2산단은 KTX 경부선, 경부선 철도,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교통 요충지라고 불릴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단지임.
- 그러나, 입주기업들의 업종이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데다 대부분 소기업으로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
- 특히, 주요 진입도로가 좁아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주차공간도 부족해 대부분의 차들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길이 막혀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음.

## ○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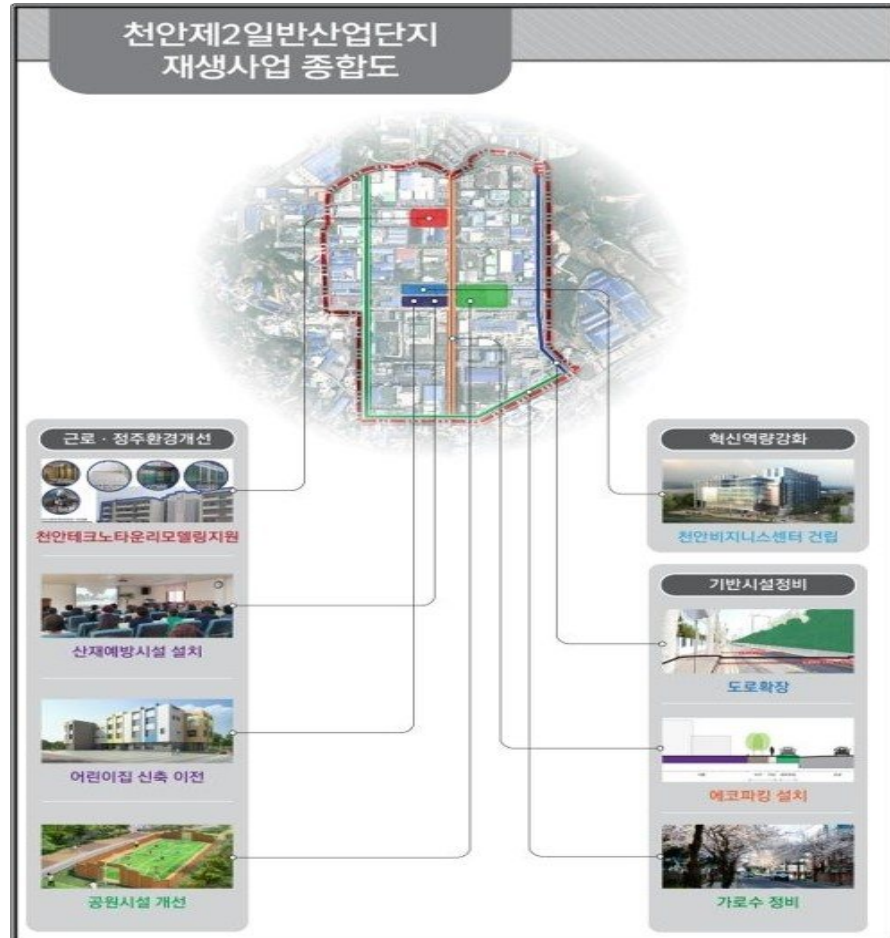
- 2017년부터 6년간에 걸쳐 국비 124억 원과 지방비 138억 원, 민자 127억 원 등 총 389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주된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입주기업들의 재배치하고 신성장 유망 업종 등을 추가 유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진입도로 확장 및 주차장 신설 등 기반시설 확충하는 사업임.
- 또한, 기업지원센터와 기업연구소, 성장 유망 벤처 등이 들어서게 되는 천안 비즈니스센터 건립도 추진함.
- 재생사업과 함께 차세대 디스플레이, 정보기술 융합형 자동차 부품, 친환경

## 2.

###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그림 7-16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합도



자료 : 천안시

#### ○ 기대효과

- 2022년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생산액이 2조8천억원, 근로자 수 6천명으로 현재보다 각각 38%, 32%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충남 첫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신성장동력 산업 거점 산단이자,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최우선하는 상생산업단지의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



## (2)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 인프라 혁신

### 1) 추진 목표

- 사람과 환경 중심의 도로·교통 환경 개선 ⇒ 지역민들의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물류 환경 개선으로 산업 활력 제고 ⇒ 지역 육성 산업의 경쟁력 제고
- 관광·산업·도시 간 연계 강화 ⇒ 미래지향적 지역 공간 확보를 위한 교통 인프라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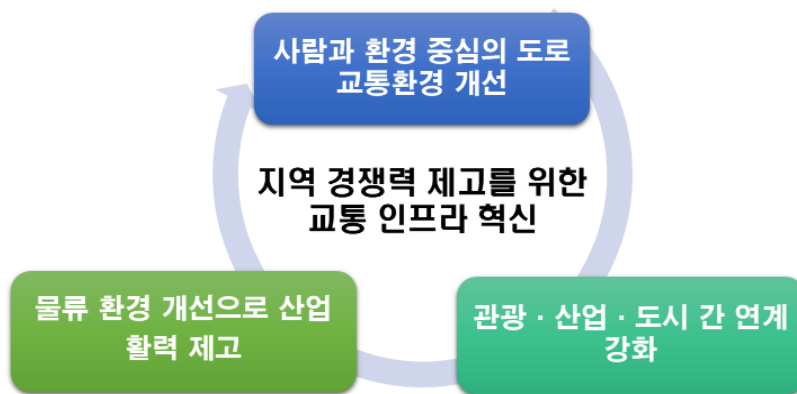


그림 7-17  
교통·물류 분야  
인프라 확충의  
목표 및 전략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추진 정책 및 프로젝트

## 교통·물류

## 장항선 복선전철화 조기 추진

## ○ 사업 추진 배경

- 장항선은 충남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임에도 단선 비전철 노선으로 디젤기관차가 운행하는 저속철도인 상황
  - 장항선은 1931년 개통된 뒤 천안, 아산, 서천 등 충남지역 주요 도시를 관통하는 교통 대동맥으로 기능을 해왔지만 시속 70km이하의 저속 철도여서 고속 철도망 구축 필요성이 지속 제기

※ 현행 천안 ~ 익산(2시간 16분) ⇨ 복선전철시 1시간 8분(68분 단축)

- 천안 ~ 신창구간이 '08년에 완료되었고, 익산 ~ 대야 구간이 '20년 복선 완료될 예정 ➡ 누락구간(신창 ~ 대야)의 복선전철 건설사업 반드시 필요

※ 복선노반 구축이 ' 20년 완료되므로, 신규 복선전철 사업비의 13% 수준

- 천안 ~ 신창구간이 '08년에 완료되었고, 익산 ~ 대야 구간이 '20년 복선 완료될 예정 ➡ 누락구간(신창 ~ 대야)의 복선전철 건설사업 반드시 필요

## ○ 사업 내용

-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충남 아산 신창에서 전북 익산 대야에 연결되어지는 구간의 복선전철화 사업임.
-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충남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으로서 충남의 지역 발전 및 산업입지 여건 변화에의 발빠른 대응에 있어 핵심 사업
- 복선전철의 총 연장은 121.6km로서 2022년까지 총 사업비는 6,76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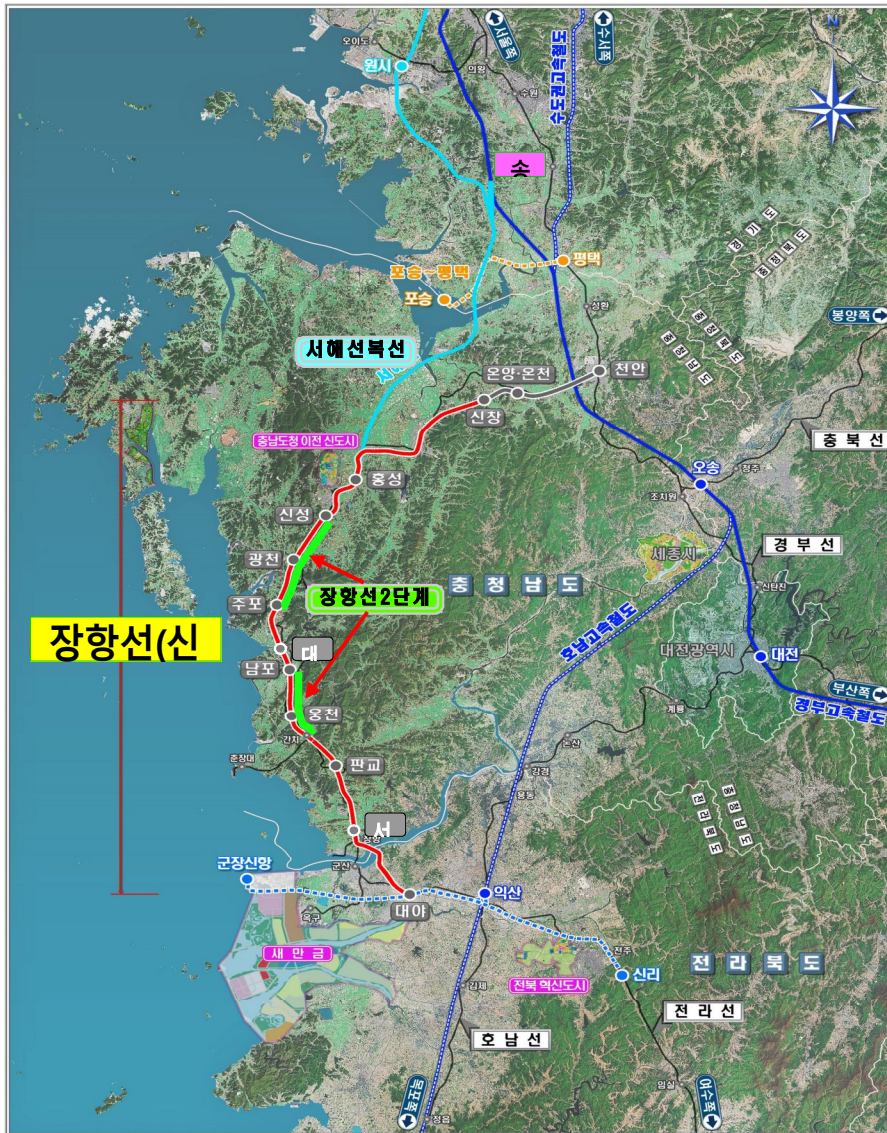
(단위 : 억원)

재원별	총사업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합 계	6,765		50	200	2,170	2,170	2,175	
국 비	6,765		50	200	2,170	2,170	2,175	
도 비								
시군비								

자료 : 충청남도

표 7-8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 계획



자료 : 충청남도

그림 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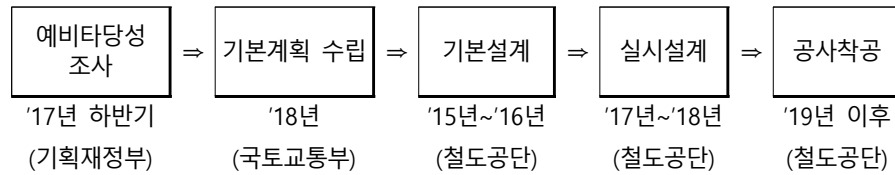
장항선 복선전철  
화 사업 위치도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그림 7-19

사업추진절차

- 2017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으로 있음. 2018년에 국비로 기본계획비 5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년내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



### ○ 기대 효과

- 장항선 복선전철화는 지역민에게 양질의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동성 및 접근성 개선, 충남 도내 사회적·경제적 교류 활성화로 지역 간 소통이 강화 예상
- 특히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천, 보령, 홍성 등 서남부권 지역의 개발 역량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함께 기업의 물류 수송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제공으로 지역 내 기업유치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
-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산~천안 및 대산~당진,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도 연계되어 2020년을 전후해 충청남도 광역교통망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사업 추진 배경

-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백제문화권(공주, 부여, 보령, 청양)과 세종 및 경부선, 충북선을 연결하여 철도 관광객 유치 및 지역균형발 도모 필요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2015년 7월)로 관광객 증대 및 백제 문화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
- ※ 신라문화권(경주시) : 경부선 철도 경유로 문화·관광 사업 발전기여
-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
- 동 사업은 북 오송을 거쳐 태백선을 잇는 철도망으로 동쪽으로 태백선부터 서쪽으로 보령선이 잇게 되어 동서가 이어지게 됨에 따라 지역 발전의 혁신적인 계기를 도모할 수 있음.

### ○ 사업 내용

-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에는 세종 조치원역~세종 신도시~충남 공주~충남 부여~충남 보령을 잇는 철도로서 총 연장이 89.2km의 단선 전철로 계획된 사업임.
- 추정사업비는 1조 8,760억원이며, 당초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2024년 착공 예정

(단위 : 억원)

재원별	총사업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합 계	18,760		50	300	300	18,110	
국 비	18,760		50	300	300	18,110	

표 7-9

충청산업문화철도사업의 사업비 투입 계획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그림 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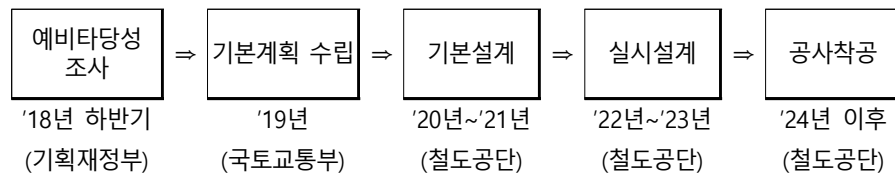
충청산업문화철도 사업의 노선도



- 추정사업비는 1조 8,760억원이며, 당초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2019년에 기본계획을 수립, 2024년 착공할 예정

그림 7-21

충청산업문화철도 사업 추진계획(안)



### ○ 사업 내용

- 충청산업문화철도는 철도 교통을 통한 충청 서남부 내륙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나아가 물류 환경 개선에 따른 기업 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장항선, 경부선, 중앙선과의 연계를 통해 동서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 돼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이 기대
- 충청도내에서 가장 낙후되고 인구감소로 도시축소 위험이 높은 지역인 공주, 보령, 부여, 청양 4개 시군의 균형발전에 기여

## ○ 사업 추진 배경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중부권 동서연결 단절구간 해소로 국가철도네트워크 효과 제고 가능
  - 서해선, 경부선, 충북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 등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체계 강화 필요성 증대
- 기존 남북축 중심의 교통물류망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부권 내륙지역 동서 광역입체교통망 확충으로, 새로운 물류체계 확보로 21세기 지속가능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18년 예산에 사전타당성 용역비 정부예산 3억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
-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은 남북축 위주의 교통시설에서 벗어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침체되어 있는 중부권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국가경제 성장의 동력으로써 역할 수행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에는 노선 전체 중 156.6km(46%)만 신설·개량 대상으로 반영되었음.
  - 아산석문산단선(36.5km), 대산항선(18.7km), 장항선(삽교~신창, 23.1km), 경북선(점촌~영주 56km), 문경·점촌선(문경~점촌, 22.3km)

## ○ 사업 내용

-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서산~천안~영주~봉화~울진을 잇는 총연장 340km의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약 8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

## 2.

###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표 7-10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사업비 투입 계획

재원별	총사업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합 계	85,000		50	300	300	84,350	
국 비	85,000		50	300	300	84,350	

자료 : 충청남도

- 위치 상으로는 충남(대산~예산~천안)~충북(청주)~경북(영주~울진)에 이르는 구간임.

그림 7-22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노선도



자료 : 충청남도

- 정차역은 14개로 직접 영향권의 수혜 인구는 175만 명, 간접 수혜 인구는 250만 명이 예상
- 중부권 횡단철도가 건설되면 우리나라의 철도망 구축계획 상 남북 6축(서해선, 호남선, 중부내륙선,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의 철도망과 동서 6축(서울-



속초선, 원주-강릉서, 충북-태백선, 동서 내륙선, 광주-포항선, 경전선)의 6X6 국가 철도망이 완성

#### ○ 기대 효과

- 경부와 호남 축 중심의 KTX 철도 수혜가 중부 내륙권까지 확대되며, 낙후 지역이 재생과 국토균형 발전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
  - 서해안과 동해안 통행시간이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는 것으로 현재 천안에서 문경까지 철도를 이용하면 120분이 걸리지만, 횡단철도가 건설되면 50분으로 줄어들게 됨.
  - 또한 중부 동서내륙권까지 KTX 고속철도 수혜를 받게 돼 낙후지역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
- 동서 간 화물 물류비 절감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로 기업유치와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 사업 추진 배경

- 전국 주요 철도역사 중 천안역은 일반철도기준 이용객 규모 7위, 유일한 선상임시 역사이며, KTX 개통 이전보다 이용객 1.8배 증가(37,589인/1일, 2015년 기준)
- 현재 천안역은 대합실 용량과 휴게편의시설 부족, 보행 연결통로 협소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크고, 철도·전철과 기타 대중교통 간 복합연계 환승 기능이 미비
- 또한, 선로 등 철도 관련 시설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어 선로로 인한 동·서 지역 간 단절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현재의 철도시설 재배치를 통한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 제기

### ○ 사업 내용

- 천안역사는 비좁고 불편한 임시 천안역사를 증, 개축하는 사업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져 왔는 바, 조속한 착수가 필요한 상황
- 위치 상으로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기존 천안역으로서 면적으로는 5,274.4 m<sup>2</sup> 규모의 부지
- 추정 사업비는 170억원으로서 천안역사(임시역사)의 증·개축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임.

(단위 : 억원)

표 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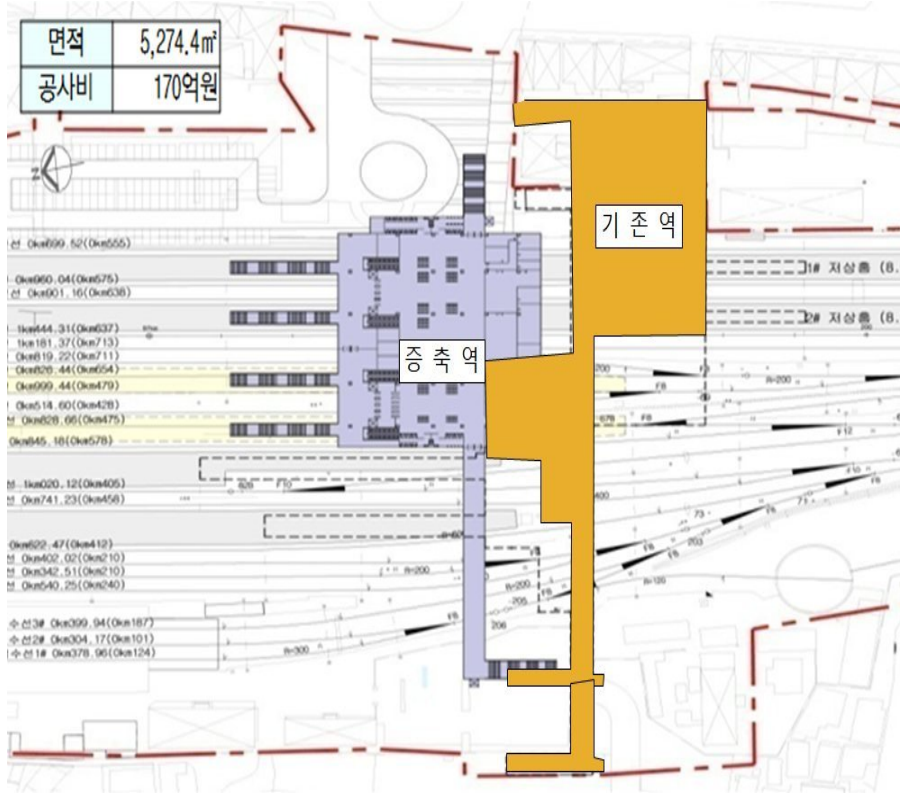
천안역 개선사업  
사업비 투입 계획

재원별	총사업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합 계	170	10		50	110		
국 비	170	10		50	110		

- 국토교통부는 천안역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천안역 증·개축사업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그림 7-23

천안역 개선사업  
사업비 투입 계획



자료 : 충청남도

-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18년에 설계비 5억원을 반영하고, 2019년 이후에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

## ○ 기대 효과

- 천안역사의 재정비 사업을 통해 천안역의 철도시설의 재배치를 기본으로 하여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원도심 활성화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
- 천안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균형적 발전 기대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 사업 추진 배경

- 독립기념관은 국민성금에 의해 1987년 건립된 이후 매년 100만명 이상 방문하여 현재까지 4천5백만명 이상이 다녀갔으나, 매년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 개장초기 6,626천명/년에서 2014년 1,464천명/년으로 매년 감소

- 독립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개편과 교육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이 즐겨 찾는 나라사랑 정신함양의 역사·문화교육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

- 수도권 전철의 연장 건설로 독립기념관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충남에서는 독립기념관 수도권 전철 연장을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천안시 도시철도사업으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음

### ○ 사업 내용

- 독립기념관 까지 수도권 전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청수동~삼룡동~독립기념관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연장하여야 함.

- 총 연장은 8.0km로서 2개 역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300억원이 소요

표 7-12

독립기념관  
수도권 전철  
연결사업의  
사업비 투입 계획

(단위 : 억원)

재원별	총사업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고
합 계	3,300		20	100	100	3,080	
국 비	3,300		20	100	100	3,080	

- 충남에서는 18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2019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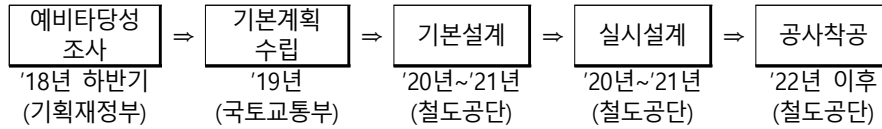


그림 7-24

사업 추진 절차



그림 7-25

독립기념관 수도권 전철 연결사업  
위치도

자료 : 충청남도

- 기존의 경부선을 활용하여 천안역과 연결함으로써 독립기념관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신설

## ○ 기대 효과

- 우리문화와 민족정신을 알리고 배우는 공간으로 민족적 자존심이 서려있는 독립기념관 활성화
- 신설되는 2개 역사 인근의 지역 개발을 견인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발전에 기여 예상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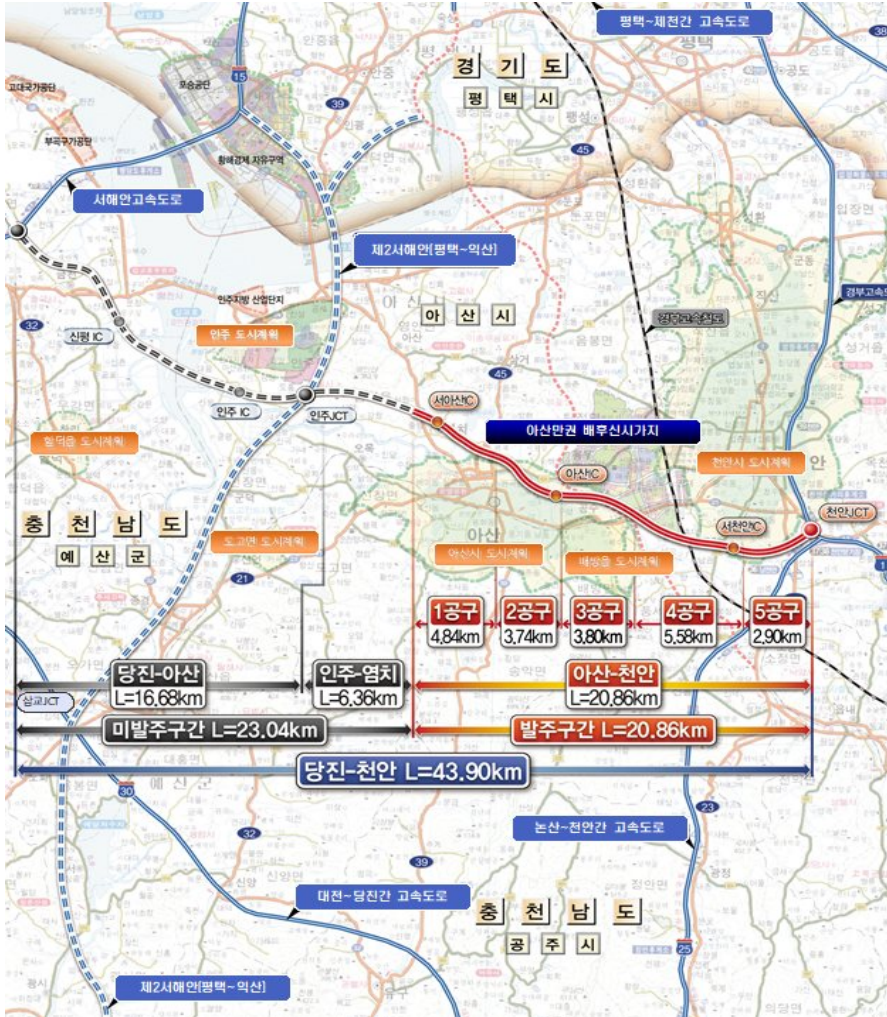
### ○ 사업 추진 배경

-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43.9km,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로 총 사업비 1조 9,97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임.
- 전체 구간 중 천안~아산 20.95km 구간은 지난 2015.12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당진~아산 구간은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으로 인해 장래 계획구간으로 남아 착공되지 않고 있음.
- 수차례에 걸쳐 당진~아산 고속도로의 조기 착수를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음.
-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해대교 단절 시 극심한 교통정체 발생 등 대안이 부재한 상황. 실제로 '15. 12월 서해대교 케이블 낙뢰로 절단 및 파손되는 사고 발생 시 서해대교를 전면 통제함에 따라 교통 정체가 심각하였음.
- 서해대교 단절에 대응, 대체도로 건설을 통해 국가긴급상황 등에 능동적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 동 사업은 경부고속(천안~안성), 평택~음성(서평택~평택)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사업

### ○ 사업 내용

- 당진~아산 고속도로의 구간은 당진시 신평면에서 아산시 인주 측, 제2서해안 고속도로에 연결
- 당진~아산 고속도로는 총 연장 16.8km로서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조 70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임.





자료 : 충청남도

그림 7-26

당진~아산  
고속도로 위치도

## ○ 기대 효과

- 국간선망(7×9) 동서 5축 건설로 물류비용 절감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유도
  - 동서 5축 조기 구축, 서해 무역·연안항 및 국가 산업 벨트축 활성화
- 경부고속(천안~안성), 평택~음성(서평택~평택) 상습 교통정체 해소 및 충남 서북부 산업지대와 내륙 연결, 물류수송 원활 도모
- 서해대교 단절 시, 우회노선 확보로 국가 재난 대응방안 마련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 사업 추진 배경

- 국도 38호선은 충남 서산에서 강원도 동해를 잇는 총 연장 313.7km의 도로로서 가로림만으로 인해 태안군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을 저해해 왔는 바, 연결함으로써 지역간 단절 해소로 낙후 지역의 개발 촉진 필요
- 가로림만의 태안 이원~서산 대산간 교량 건설로 서해안권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대산~이원을 연결함으로써 21C 환황해권시대에 대비하여 서해안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안면도, 태안기업도시 등)과의 접근성 향상이 시급한 실정
- 가로림만 단절 구간 연계로 대산항, 관광자원(안면도, 천수만, 원산도 등)에의 접근성 향상과 국토 공간 활용의 효율성 도모 필요. 교량 건설 시 1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사업완료시 1시간 단축(현재 73.0km → 교량건설 2.5km)

- 국도 38호 노선 연장을 통하여 고속도로에의 접근성을 향상 필요(현재 서산 IC까지 34분 소요에서 대산~단진·대산 IC로 접근함에 따라 13분 소요)

※ 태안군 고속도로 접근시간 23개 시군 대비 약 2.6배 열악

- 고속도로 접근거리 : 23개 시군(평균 11km), 태안군 29km ⇨ 약 2.6배
- 고속도로 접근시간 : 23개 시군(평균 13분), 태안군 34분 ⇨ 약 2.6배
- ↳ 태안군과 규모가 비슷한 전국 23개 시·군 비교

### ○ 사업 내용

- 서산시와 태안군 가로림만 해상이 연결돼 있지 않아 약 79.4km를 우회해야



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효율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도 38호 노선 연장 사업은 국도 38호선과 지방도 603호선을 연결해, 수도권 등지에서 태안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사업임.



자료 : 충청남도

그림 7-27

국도 38호 노선  
연장 구간 위치도

- 동 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충남의 SOC 최대 현안 사업임.

## ○ 기대 효과

- 서산시와 태안군 지역 간 단절 해소로 충남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
- 서천~보령~태안~대산을 잇는 서해안권 관광 인프라 구축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 사업 추진 배경

- 서해안권의 급속한 산업화 진행에 따라 평택·당진항과 내륙을 연결하는 산업 물류망은 이미 포화 상태이나 진입도로 건설사업 지연

※ 평택·당진항 물동량 급증 중 ( ' 09년 5,132만톤 → ' 16년 11,295만톤)

- 평택·당진항으로 직접 진입하는 통로가 없어 항만과 내륙물류수송에도 심각한 지장 초래
- 평택·당진항은 동일 항만 내에서도 서해안고속도로 또는 국도38호로 우회하여 진입하고 있어 급증하고 있는 산업물동량 처리에 한계
- 평택·당진항을 통한 중국 등 해외수출입 기반 활성화와 남부내륙권과 항만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서는 항만 진입도로 건설이 시급한 상황
-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충남도가 지난 대선에서 10대 현안을 제시한 가운데 사업순위 1번으로 요구할 만큼, 충남 미래의 발판에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어짐.

### ○ 사업 내용

- 평택·당진항 진입도로는 위치상으로 당진시 신평면과 당진항 내항 서부두를 연결하는 도로사업임.
- 사업의 총 연장은 교량 2.42km를 포함하여 총 3.1km로서 교량 및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까지 국비로 조달된 총 사업비 2,23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 서해안권 산업 물류 도로망 확충과 병목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서해대교 교통

난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에도 사업추진 중이었으나, 매립지 관할구역 문제와 연관되어 '15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등 지연되어 왔음.



그림 7-28

평택·당진항 진입  
도로(신평~내항  
간) 위치도

자료 : 충청남도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었고, 2015년 5월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2017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상황

- '11. 7.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반영(국토부)
- '15. 5. : 교통량분석 등 도로건설 타당성조사 용역(해수부) ⇒ B/C 1.09
- '16.12. : '16년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 '17. 1.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타(PIMAC) 예타 착수

- 2018년 기획재정부 예산에 평택·당진항 연륙교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착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 ○ 기대 효과

- 항만과 국토의 내륙을 연결하는 물류망을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평택·당진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항만으로 이동하는 대형 화물차량 분리로 상존하는 교통사고 위험 해소와 위기상황 시 서해안권 대체도로 활용이 가능, 안정적인 물류망 확보

※ 진입도로 건설시 남부권에서 평택·당진항 이동거리 16.1km 단축, 지역 간 갈등 조기 해소

그림 7-29

평택·당진항 진입  
도로에 따른 이동  
거리 비교표

구 분	현 재	진입도로 이용 시(△16.1km)
이동경로	송악I.C → 서평택I.C → 국도38호선 → 내항(서부두)	송악I.C 부근 → 연육교 → 내항(서부두)
소요거리	15.2km → 8.5km → 3.7km 총 거리 : 27.4km	4.1km → 3.7km → 3.5km 총 거리 : 11.3km
노 선 도		

자료 : 충청남도

## 2.

###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 사업 추진 배경

- 충남의 해삼양식은 전통 수산업 수준에 있어 체계적인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 필요성이 지속 제기
  - 국제 해삼시장 진출 등 산업적 관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삼산업의 육성은 시급한 상황
  - 특히, 한·중 FTA체결로 인하여 해삼의 대중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 대중국의 건축·자숙 해삼 시장의 유통규모는 약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 충남도내 해삼 양식 여건은 해삼 서식의 최적 환경인 환황해 냉수대지역으로서 체계적인 산업 기반 구축을 통하여 해삼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이 요구되어짐.
  - 특히, 태안은 전국 생산 순위 2위이고, 보령도 3위에 있는 등 해삼 생산량이 매우 많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해삼 양식 및 유통을 위한 복합\단지의 개발은 충남의 지역경제에 큰 도움 예상
- ※ 전국 해삼생산 순위 : 경남 통영 1위, 태안 2위, 보령 3위

### ○ 사업 내용

- 현재까지 가시화되는 사업규모는 향식, 가공 및 유통판매, R&D 및 연구기반 시설 등으로 구성된 10개의 클러스터의 구축, 한국해삼공사 설립 등 창조적 융복합 시설 5개 등 15개 사업임.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그림 7-30

해삼산업  
복합단지의 목표  
및 전략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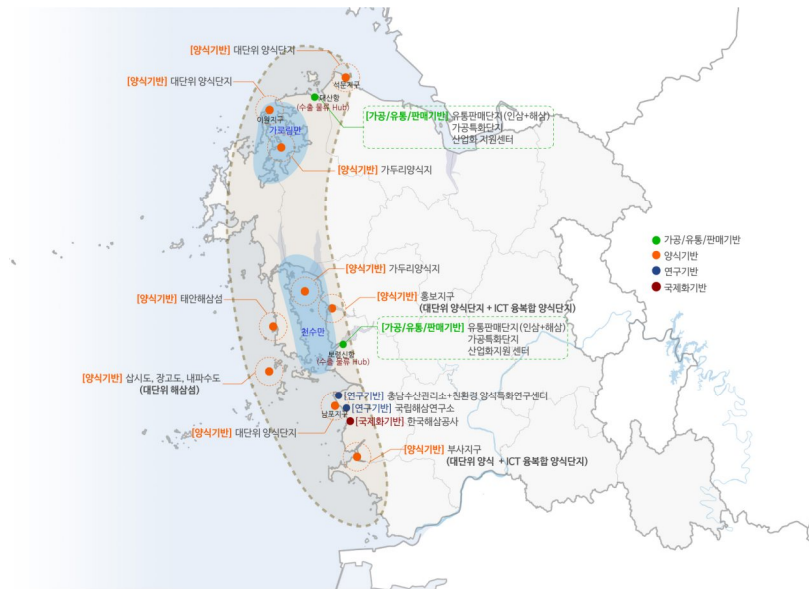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 사업대상 부지는 충남 도내의 서해안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해면과 육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그림 7-31

해삼산업  
복합단지의  
사업부지 현황



자료 : 충청남도

- 추정되는 사업비는 국비 3,475억원, 도비 590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5,210억원 규모임.

(단위 : 억원)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5,210	3	232	315	462	4,197
	3,475		165	190	270	2,850
	590	3	25	47	82	432
	275		25	40	52	157
	870		17	37	57	757

자료 : 충청남도

표 7-13

해삼산업  
복합단지의  
연차별 사업비  
투입 계획

- 2015.12월 수립된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과 2016년 1월, 충남경제비전 2030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음. 2018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빠르면 2020년부터 착수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조성한다는 계획임.
- ‘대단위 양식단지’는 홍보지구, 부사지구 등 충남 내 유희 간석지 및 남포, 이원 일원 330,579㎡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양식단지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임.
- ‘ICT 융복합 양식단지’는 충남 해안지역에 ICT 융복합 양식단지를 300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임.
- ‘해삼 가공특화단지’는 보령 및 해안 일원 33,058㎡ 부지에 200억원 투입하여 해삼가공 전문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 또한, 대산항 또는 보령신항 인근에는 165,290㎡ 부지에 해삼의 유통 및 판매거점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0억원 규모임.
-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 ‘해삼·인삼 융·복합 밸리’는 충남 서해안 일원에 2,000억원을 들여 해삼·인삼 유통물류센터, 건강·보양 시범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임.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또한, 대중국 수출 제품의 규격화 및 표준화, 수출 마케팅 등을 전담하는 한국해삼공사의 설립에 1,000억원, 그리고 해삼산업의 전방위적인 육성을 지원하는 국립해삼연구소 설립에 300억원이 투입될 예정

#### ○ 기대 효과

-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보양시장을 한국인삼과 해삼을 통해 진입 및 점유율 확대
- 충남이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인 수산분야 성공모델 제시 (3농혁신 성공모델 창출)
  - 수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유도 3농 혁신 성공모델 구축
- 지역의 선제적 제안으로 국가정책 패러다임 전환 유도
  - 한국해삼공사설립, 국제해삼시장 설립, 새로운 관광시장 발굴을 통한 국부 창출
- 전통산업의 무한 잠재력을 국가적 신성장 동력화 모색
  - ‘인삼+해삼’ 중심의 융복합 밸리 조성 및 국제 해삼·인삼 도매시장 개설로 보양관광의 중심지로 성장 기대



## ○ 사업 추진 배경

- 당진항은 전국 항만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만으로서 물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당진항은 자연조건이 우수하여 건설비, 항로준설비용 등이 저렴하고, 대형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전혀 없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항만으로서, 적당한 수심과 고속도로 및 국도와 같은 배후교통망 등 항만입지여건이 뛰어나 항만 경쟁력이 타 항만에 비해 크게 우수
- 그러나, 항만하역 및 예선업 등 항만역무 제공 사업체도 당진지역 업체의 점유율이 낮고 항만배후지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항만부가가치 창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2020년 당진항 1억 t 시대를 대비하고 항만경쟁력을 높이고 항만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당면과제인 항만배후 복합물류단지 조성 및 다목적 일반부두 확충 등 항만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될 필요가 있음.

## ○ 사업 내용

- 당진 복합물류단지 조성 부지는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880 일원으로서 조성면적은 682,591㎡임.
-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320억원 규모로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조성
-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물류단지 시설 용지로 60.5%, 지원시설 용지로 11.2%, 공공시설용지 28.3%로 구성되어짐.
  -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주택 건설용지는 공원, 완충녹지 등을 통해 물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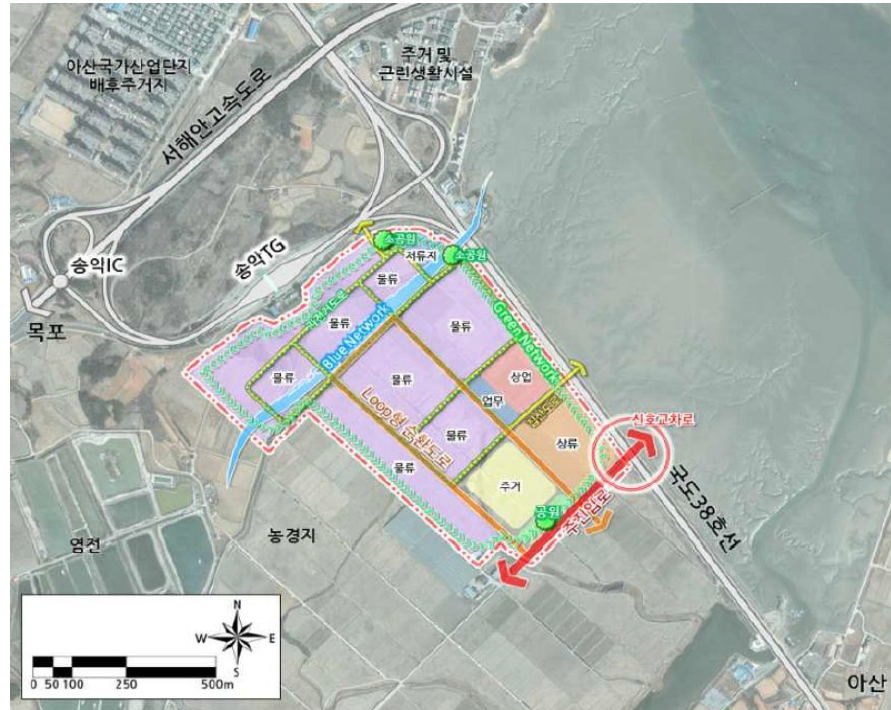
## 2.

###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그림 7-32

당진  
복합물류단지  
구성계획

설 용지와 분리하여 배치하고 상업, 업무시설은 인접 배치함.



자료 : 충청남도

- 당진 복합물류단지 주 진입로는 국도 38호선과 연결하고 송악 IC와는 800m 이상 이격거리 확보를 통해 교차 간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

#### ○ 기대 효과

- 충청권의 물류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물류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 창출
- 당진, 평택항과 연계함으로써 항만물류 클러스트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3)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민의 삶의 공간 조성

#### 1) 추진 목표

- 청정 충남 구현을 위한 환경 인프라 공급 확충 ⇒ 건강한 지역민의 삶의 공간 확보
-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방재 인프라 확충 ⇒ 안전 인프라로 선제적 대응
- 노후 시설물의 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 강화 ⇒ 노후 인프라로 인한 안전 위협에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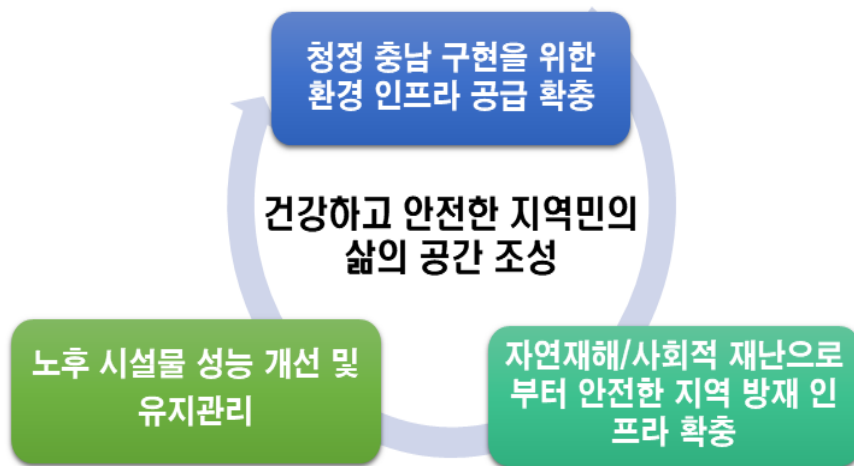


그림 7-33

환경·안전 분야  
목표 및 전략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추진 정책 및 프로젝트

## 환경·안전

## 안흥항 내진보강

## ○ 사업 추진 배경

- 2014년 태안 앞바다에서 규모 5.1의 지진 감지. 2013년에는 서해안에서 석 달째 크고 작은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음.
- 2013년 당시 지진은 백령도 인근과 보령 해역에서 집중돼 무려 140회에 달 하였고, 일부에서는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들이 제시 된 바 있음.
- 충남 서해안에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12.5회씩 발생해 동해 7.3 회, 남해 5.6회보다 지진위험지대로 꼽힘에 따라 섬의 방파제 등 안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이 중요

## ○ 사업 내용

- 태안 안흥항은 국가어항으로서 2015년 국가 어항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에 따 라 보강설계 용역이 발주되었음.
- 국가 어항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2017년 7월, 정부추 경예산에서 10억원을 확보하게 됨.
- 사업범위는 안흥항의 동방파제(550m)와 서방파제(109m)에 대한 내진안전성 검토결과, 안전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구간임.
- 방파제 사석 층과 기초지반에 시멘트 몰탈충전 등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평 가결과, 추가보강이 절실한 구간은 동방파제 277m 구간과 서방파제 42m 구 간임.

- 이에 따라서 추가 보강이 절실한 동·서 방파제 319m 구간의 내진보강을 2020년까지 총 사업비 총사업비 120억원의 국비를 들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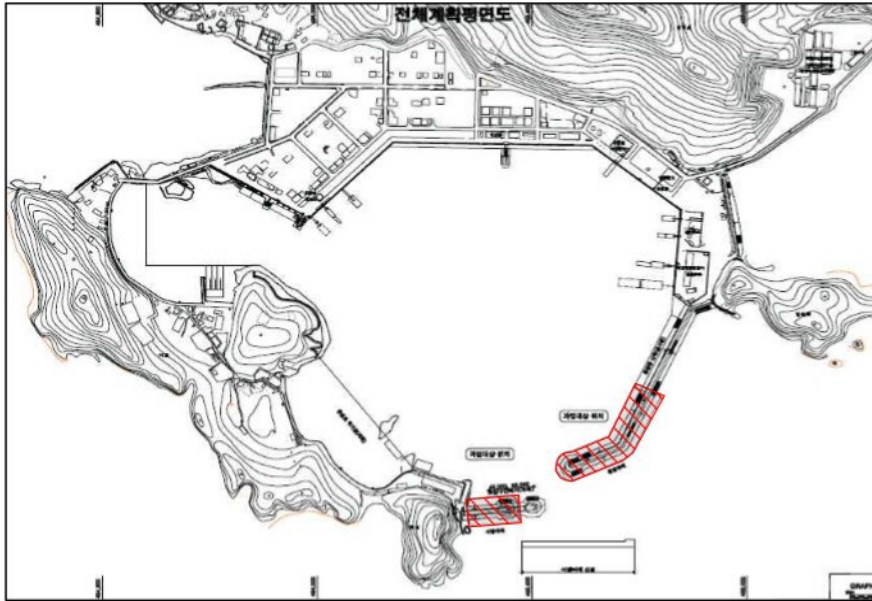


그림 7-34

안흥항 내진보강  
대상 구간

주 : 위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이 금번 내진보강 대상  
자료 : 충청남도

- 2018년에 착수를 위하여 사업비를 국가에 요청하였으나,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
- 안전한 어업을 위해 지진 발생 시 바다의 기초 보호장치인 방파제를 유지·내진보강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음.

## ○ 기대 효과

-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안심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사업 추진 배경

- 환경부는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파손 등 결함으로 인해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를 실시
- 하수관에 의한 지반침하는 하수관의 특성 상 대부분 소규모로 발생.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 환경부의 조사 결과 충남 지역은 400km에 대한 조사결과, 하수관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모두 61km 구간으로 이중에서 긴급한 사업물량은 25km, 일반 사업물량은 37km로 조사되었음. 이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는 총 6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7-14

환경부 하수관로  
조사 광역시도별  
조사결과

구분		수행 결과					
		사업물량(Km)			사업비(억원)		
		계	긴급	일반	계	긴급	일반
합 계		5,850	1,507	4,343	65,837	19,803	46,033
1	서울	610	217	393	10,407	2,917	7,490
2	부산	125	31	94	983	244	739
3	대구	156	40	116	1,761	524	1,237
4	인천	56	17	38	651	252	400
5	광주	310	29	280	1,299	261	1,039
6	대전	278	53	225	3,337	735	2,601
7	울산	112	73	39	1,473	1,023	450
8	세종	4	0.4	3.4	20	9	11
9	경기	2,212	381	1,830	24,681	4,637	20,044
10	강원	171	37	134	2,244	871	1,373
11	충북	177	73	104	2,260	1,088	1,171
12	충남	61	25	37	655	267	388
13	전북	199	58	141	1,829	871	958
14	전남	144	38	106	1,645	410	1,235
15	경북	633	201	433	6,542	3,128	3,414
16	경남	548	221	327	5,657	2,468	3,189
17	제주	54	14	40	393	98	295

자료 : 환경부

- 지반침하의 원인은 다양하나, 최근 도심지의 노후 하수관로 손상에 의한 지반침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구분	'12	'13	'14	'15	'16
계	10	15	59	151	238
특·광역시	-	3	35	125	198
시·군	10	12	24	26	40

표 7-15

노후 하수관로  
손상에 따른  
지반침하 현황

- 지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지반 침하의 원인이 되는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사업 내용

- 1차적으로 환경부의 진단결과 긴급 보수가 필요한 25km 구간에 대한 조속한 정비 추진 필요
-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267억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조치가 필요. 또한, 단계적으로 잔여구간에 대한 정비(37km, 388억원) 필요
- 하수관거 정비에 매년 1,500억원 가까이를 지출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에 있어 국비 조달의 우선 원칙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우선적으로 시행 필요
- 이와 함께 충남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하수도 보급률(74.3%)을 기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하수도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태안군 등에 대해 하수도시설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기대 효과

-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지역민의 안전 확보 및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 사업 추진 배경

- 4대강 사업 이후 훼손되어진 금강 하천 생태계의 친환경적 복원 방안 마련이 필요
- 금강 정비사업 이후 수 환경 모니터링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수질(COD) 악화, 유수성 어류 개체수 급감, 정수성 어류 개체수 증가 및 조류발생 기간 증가
- ※ 2012년 백제보 물고기 대규모 폐사사고 발생
- 금강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친수공간 조사결과, 관리구역의 재조정이 필요. 하천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친수시설 설치 및 방치로 생태계 악영향 → 친수 공간 활용방안 전면 재검토 및 개선 필요. 즉, 활용도가 높은 공간 → 국민 활용공간으로 집중 투자, 활용도가 낮은 공간 → 과감한 재자연화
- (구)장항제련소 오염토지 매입 구역에 대한 활용계획이 부재한 상황으로 환경테마 지역으로 조성, 활용함으로써 오염토지의 생태복원의 대표사례로서 활용 필요

### ○ 사업 내용

- 금강 생태복원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4개 사업 총 7,8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이중 시설사업은 친수공간 재자연화 사업 800억원, 금강 하구 생태 물길 복원사업 8km, 4,000억원, 장항제련소 브라운필드 환경테마 단지 조성 2,000억원 등 6,800억원임.
- 금강 친수공간 재자연화 사업은 금강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친수공간(친수·복원·보전지구)을 하천 자연화 복원 목표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인공시설 철거, 토종식물 식재, 생태교란종 퇴치 등이 주 사업내용으로 800



역원이 소요 예정

- 금강하구 생태물길 복원사업은 금강 하구둑으로 막힌 금강과 바다의 자연순환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강 길산천 ~ 솔리천 하구 8km, 솔리천 하구둑 개방을 주 내용으로 함. 사업비는 4,000억원 규모임.
- (구)장항제련소 오염토지(브라운필드) 환경테마단지 조성 사업은 오염토지를 복원하여 생태계 복원의 대표적 연구단지로 조성(1,217,072㎡)하는 것을 목표로 토양정화 실증화단지, 하천생태복원 실증화단지(생태물길 연계), 한반도 토종식물 연구시설, 환경체험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2,000억원 규모임.



그림 7-35

(구)장항제련소  
인근 송림숲단지  
전경

- 현재 (주)장항제련소 부지는 현재 2차 정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금강 친수공간 재자연화 사업	800억원	인공시설 철거, 토종식물 식재, 생태교란종 퇴치 등
금강하구 생태물길 복원사업	4,000억원	금강 길산천 ~ 솔리천 하구 8km, 솔리천 하구둑 개방
(구)장항제련소 오염토지 환경테마단지 조성	2,000억원	토양정화 실증화단지, 하천생태복원 실증화단지(생태물길 연계), 한반도 토종식물 연구시설, 환경체험단지 조성

표 7-16

금강 생태복원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시설관련 사업  
개요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 정부 제안('17.1.). 주내용은 보 상시 개방, 하천 유속 회복을 통한 수생태계 복원 및 방치된 친수시설의 재자연화를 통한 하천 생태계 복원 등
- 충남에서는 현재 금강의 하천생태계 회복방안 마련을 위한 도 차원의 연구를 추진 중에 있음.

#### ○ 기대 효과

- 금강 생태계 복원 클러스터 조성으로 오염된 환경(하천, 토지)을 복원하여 국민에게 되돌려 주고, 환경분야 공공부문 일자리와 사업추진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 ○ 사업 추진 배경

- 보령시 최서단의 외연도는 상록수림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서해안 최고의 관광도서로 최근 주목받고 있음.
- 외연도항은 기본시설이 1994년 완공된 이후 20년 이상 경과돼 지구온난화, 태풍, 지진발생시 취약한 상태임에 따라 재정비 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2012년에는 태풍 곤파스의 피해를 입어 일부 방파제가 붕괴돼 응급복구해 사용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항구가 연간 1~2씩 침수되는 등 관리에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 사업 내용

- 외연도항이 어항 자체로서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어항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항내 정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
- 외연도항 정비는 우선 서방파제 250m 구간에 150m를 보강해 400m로 늘리는 것과 부잔교 신설 등이 주 사업내용임.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비			투자계획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기투자	'18년	향후	
합계	327	327			30	297	
공사비	294	294			20	274	
보상비	-	-			-	-	
기타	33	33			10	23	

자료 : 충남도청

표 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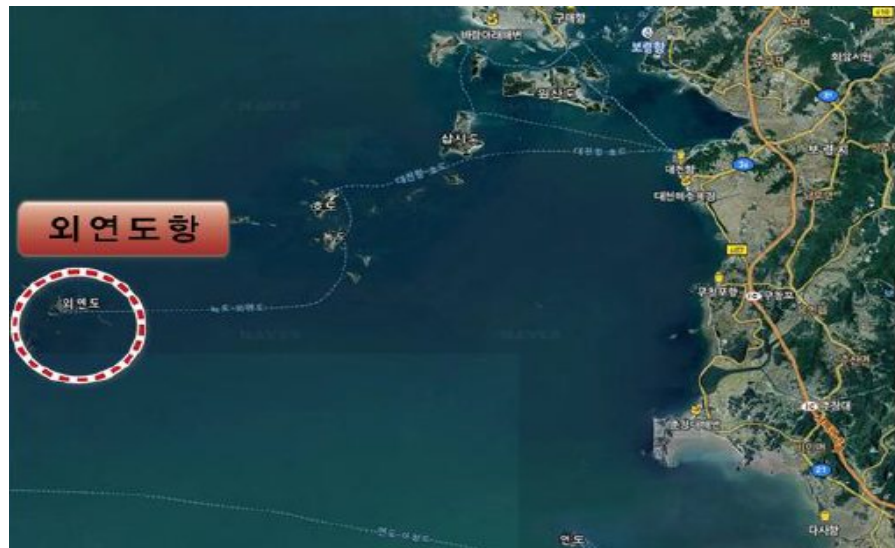
외연도항 재정비  
사업의 투자계획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사업기간은 약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27억원 규모로 1971년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어 2014년 정비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되었음.
- 국비 10억원이 확보되었으나, 환경부 협의 등 행정적 절차로 인하여 2018년 예산투입은 불분명한 상황

그림 7-36

외연도항 위치도



### ○ 기대 효과

- 기존 어항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항내 정온도를 향상을 통하여 외연도항의 어항 자체로서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기여

## ○ 사업 추진 배경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 빈도가 잦아지고 특히 충남 서북 부지역은 기상 가뭄에 취약하다. 간척지가 많아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강우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 유역면적 또한 부족해 저수지 등 안정적인 수원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계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지역은 물이 충분한데도 활용할 수 없어 가뭄에 시달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이러한 차원에서 충남은 미래 발판사업으로 수계 간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음. 수원 다변화정책으로 아산호~삽교호~대호호 12.8km 구간을 용수로로 연결을 필요

## ○ 사업 추진 배경

- 사업은 아산호~삽교호~대호호 12.8km 구간을 용수로로 연결하는데, 용수로 는 개거 3.8km, 터널 2.4km씩 건설될 예정
- 2021년까지 8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비			투자계획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기투자		향후	
합계	830	830		25	160	645	
공사비	641	641			60	581	
보상비	114	114			93	21	
기타	75	75		25	7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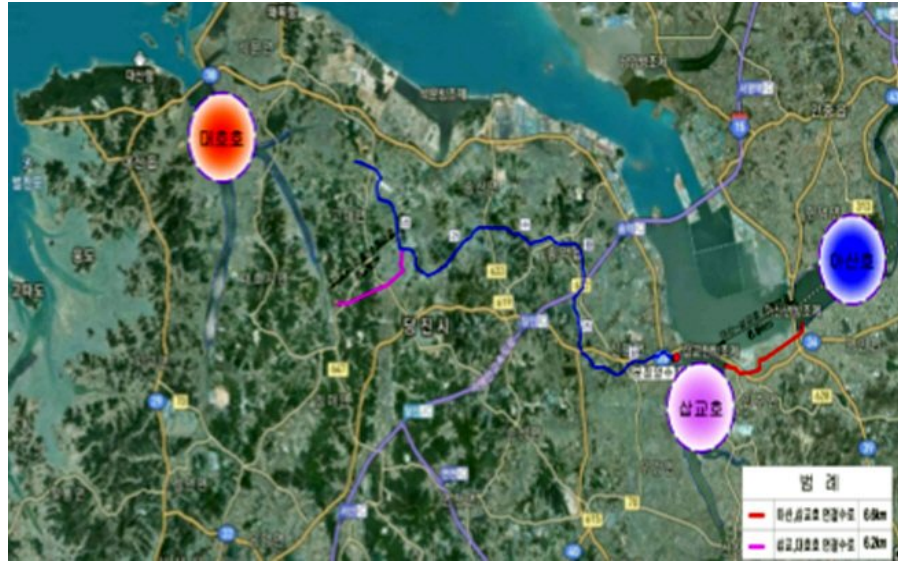
자료 : 충남도청

표 7-18

아산호~삽교호~  
대호호 수계  
연결사업의  
투자계획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그림 7-37  
아산호~삽교호~  
대호호 수계 연결  
사업의 위치도



- 2017년 5월 열린 국무조정실 제3차 통합 물관리 상황반 회의에서는 신규사업 타당성이 논의되었으며, 6월에는 사전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농림식품부와 협의해 기획재정부 제출함. 긴급사업인 만큼 지난 7월 정부 추경에 기본조사비 25억원을 반영시킴
- 공업용수 대책으로 대산단지 해수담수화시설(2200억원)과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129억원)과 함께 추진 예정

### ○ 기대 효과

- 충남 서북부권 상습 가뭄지역이라는 점에서 아산호와 삽교호, 대호호 수계연결을 통한 효율적인 용수배분을 통하여 충남 서북부지역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용수원 확보로 기대
- 아울러 충남 전체의 산업의 발전과 인근 지역의 지역 개발에 있어 중요한 계기될 전망

## ○ 사업 추진 배경

- 생활하수를 모아 고도의 위생과정을 거친 하수처리 수는 물고기가 살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화됨. 문제는 정화된 물이 하천으로 방류돼 그대로 바다로 흘러드는 것임.
- 이에 따라 충남도는 시·군마다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 수를 농업 또는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충남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음. 최근 1년 누적 강수량이 전국 대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다각적인 용수공급방안 대책이 필요해 수자원의 재처리는 더욱 시급함.

## ○ 사업 내용

- 장기적인 가뭄 등을 고려해 재이용사업이 시급한 시·군을 우선 선별하였음. 하수처리 수 재이용시설은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예산군 등 도내 5개 시·군에 추진됨.
- 총사업비는 국비 314억원과 지방비 134억원을 매칭 모두 448억원이 소요될 예정임. 하수처리 수가 하천방류에는 문제가 없지만, 식용 작물 재배와 직접 사람, 동물이 이용하려면 추가적인 재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
- 지역별로 천안에서 성환하수처리수 하루 1만9500t씩 재이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59억원(국비 41억원 포함)이 필요.
- 아산도 아산하수처리수 2만t(사업비 155억원), 논산은 연무하수처리수 6200t(사업비 37억원), 홍성은 홍성하수처리수 4000t(42억원), 예산은 예산하수처리수 1만5000t(사업비 155억원)씩을 각각 재이용한다는 내용임.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표 7-19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m³,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18년			향후계획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계	448	314	134	107	74	33	341	240	101
천안시 성환 하수처리수 재이용 (19,500/30,000)	59	41	18	33	23	10	26	18	8
아산시 아산 하수처리수 재이용 (20,000/72,000)	155	109	46	6	4	2	149	105	44
논산시 연무하수처리수 재이용 (6,200/8,400)	37	25	11	2	1	1	135	25	10
홍성군 홍성 하수처리수 재이용 (4,000/17,000)	42	29	13	15	10	5	27	19	8
예산군 예산 하수처리수 재이용 (15,000/22,000)	155	109	46	51	36	15	104	73	31

자료 : 충청남도

- 이와는 별도로 추진 중인 보령시 대천동 하수처리수 방류수 재처리시설(하루 1만t) 설치 사업도 조속히 추진 필요(국비 90억 지방비 39억 등 129억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추진 중)
- 하수재처리시설에서 보령시 주교면 보령·신보령 화력발전소까지 8km에 관로를 설치해 보령과 신보령화력의 탈황 용수로 공급됨.

### ○ 기대 효과

- 충남지역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사업은 상시적인 물 부족 대응 대책으로서 효과가 클 것임.
- 타 지역이 민자사업 등을 이용하여 추진 중인데 반해, 충남은 국비와 지방비를 이용하여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 안정적이고 빠른 사업 추진을 기대



#### (4) 국토의 중심지에서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 1) 추진 목표

- 풍부한 관광 자원 개발과 인프라 연계 ⇒ 백제문화권 문화재와 해양/내륙 자원 등의 인프라 개발 확대
- 공공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 ⇒ 공공 문화예술 시설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민 수요에 맞는 기능 확대
- 지역민의 문화예술 생활화 및 산업화 ⇒ 미래지향적 지역 공간 확보를 위한 교통 인프라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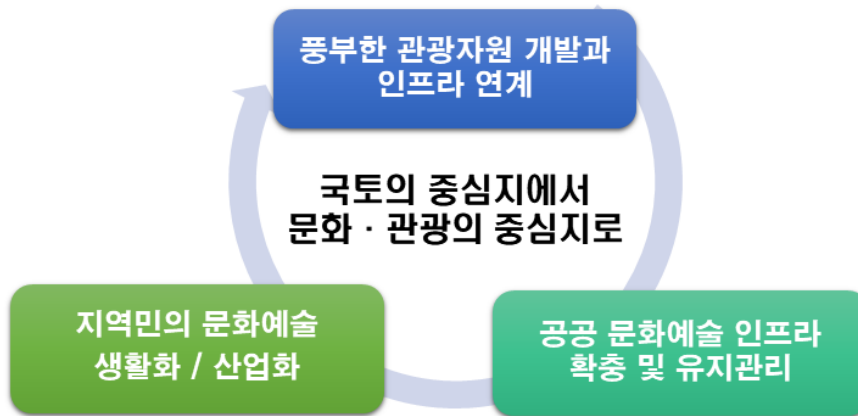


그림 7-38

관광·문화 분야 인프라 투자 목표 및 전략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추진 정책 및 프로젝트

## 관광·문화

##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사업

## ○ 사업 추진 배경

- 백제는 세번에 걸쳐 수도를 옮겼으며, 그중 공주, 부여와 익산을 중심으로 많은 유산을 남김. 그러나 문화유산이 여러지역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이고 일관된 관점에서의 종합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한계가 있어왔음.
- 고도로 지정되어 있는 부여, 공주, 익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고도본존육성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복원이 최근 추진 동력을 얻고 있음.
- 세계인들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도록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보존관리 필요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최소한의 복원·재현, 유적 발굴조사 및 정비를 통한 백제 문화 가시화, 유적 상호간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백제 문화의 중심지인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 등을 세계적인 역사도시로 재탄생시킴으로서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유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 사업 내용

- 대상이 되는 위치는 공주, 부여, 익산 등 지역으로서 핵심유적 18개소(공주 6, 부여 12)와 익산 8개소(전북)를 포함하여 총 26개소임.
- 사업비는 공주 및 부여지역만 10,370억원으로서 국비 7,259원, 지방비 3,111억원임. 익산을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는 14,027억원임.

-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38년까지 장기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최소한의 복원·재현, 백제문화 가시화, 유적간 연계 강화 등임. 특히, 공주는 공산성 등 관청, 부여는 왕흥사 등 사찰, 익산은 왕궁리 유적을 중심으로 한 왕궁 복원에 초점이 맞추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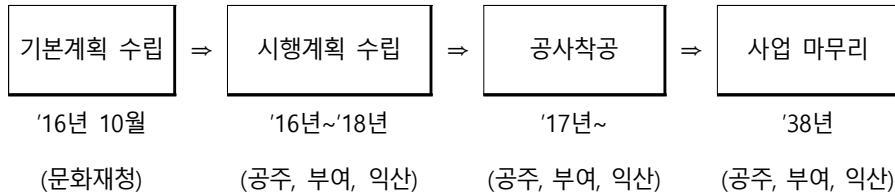


그림 7-39

사업 추진 절차

- 2015년 3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준비단 발족하였으며, 같은 해 7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서 2016년 10월, 백제왕도 보존·관리사업 시행계획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음.



공주 공산성 관청복원

부여 왕흥사지 복원

그림 7-40

공주 공산성  
및 부여 왕흥사지  
복원 조감도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표 7-20

백제왕도  
복원사업의  
재정투자계획

- 재정투자계획에 따르면 2019년 이후부터 연마다 1,000억원 규모의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재원별	총사업비	기 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2038년
합 계	10,370	294	547	964	977	992	6,596
국 비	7,259	202	383	656	667	650	4,701
도 비	1,556	46	82	154	155	171	948
시군비	1,555	46	82	154	155	171	947

### ○ 기대 효과

-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사업은 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관광자원의 활용도 제고
- 약 20년에 걸치는 장기 사업으로서 백제문화권 지역의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예상

### ○ 사업 추진 배경

- 전국 8권역 광역관광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남, 전북, 세종지역의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개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  
 ※ 전국8개권역 광역관광개발 : ①동해안권 ②남해안권 ③서해안권 ④한반도 평화생태권 ⑤백두대간 생태문화권 ⑥3대 문화권 ⑦중부내륙권 ⑧지리산권
-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및 환황해경제권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거점사업을 선정, 우선적으로 추진  
 ※ 거점사업 : 논산 근대역사문화촌(강경), 예산 예당호착한농촌 체험 세상 조성 등

### ○ 사업 내용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충남, 세종, 전북, 내륙지역(19개 시군)을 포괄하는 사업으로서 관광자원개발사업 29건 그리고 진흥사업 11건 총 40건임.
- 총 사업비는 6,167억원으로 국비 2,627억, 지방비 3,455억 그리고 민자 85억임. 이중에서 충남 7개 시군 11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129억원으로 국비 949억원 그리고 지방비 1,146억원 그리고 민자 34억원임.
- 2015년 5월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2016년 12월 2017년 정부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7.5억원이 반영되었음. 현재는 5건에 대한 기본설계 등이 추진 중이며, 2026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착공	사업 마무리
'15년 5월 (문체부)	'17년 (해당 시군)	'17년 (해당 시군)	'17년~'18년 (해당 시군)	'20년 이후 (해당 시군)

자료 : 충남도청

그림 7-41

사업 추진 절차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표 7-21

충남지역 11개  
사업 현황

- 충남의 사업은 천안 대한독립만세길 이외에 10개 사업으로서 천안 대한독립만세길,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예산 예당호 착한 농촌체험세상, 부여 백제역사 너울옛길, 청양 매운고추 체험나라 등이 2018년 예산이 반영되었음.

(단위 : 억원)

사 업 명	총 사업비(억원)				2017년 (국비)	2018년 (국비)
	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7개 시군 11개 사업	2,129	949	1,146	34	47.5	52
천안 대한독립만세길	97	38	59		15	15
논산 논산 근대역사 문화촌	205	63	108	34	15	15
예산 예당호착한농촌 체험세상	552	257	295		10	10
부여 백제역사 너울옛길	141	71	71		2.5	5
청양 매운고추 체험나라	101	50	50		5	7
공주 백제문화 이음길	139	58	81		-	
금산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45	18	28		-	
부여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99	42	57		-	
예산 덕산온천 휴양마을	441	213	228		-	
논산 호국문화 체험단지	87	43	43		-	
논산 산노리 자연문화 예술촌	222	96	126		-	

자료 : 충청남도

-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무엇보다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원활한 국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 바, 충남도는 국비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 각 사업들마다 연계사업들이 함께 추진되어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 차원에서 함께 모색되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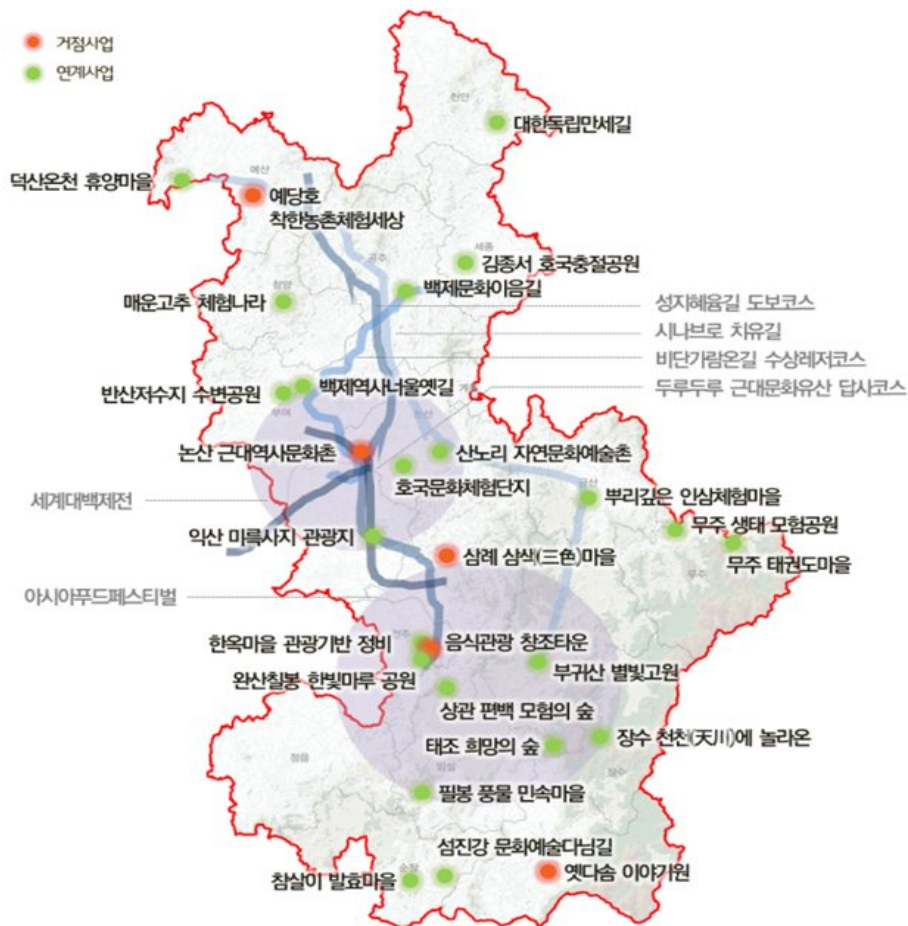


그림 7-42

충남지역 11개  
사업의 위치도

자료 : 충남도청

## ○ 기대 효과

- 현재 사업지들은 원도심과 인접해 있고, 백제문화 유적들과 연계가 쉬워 인접지역의 발전 및 관광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 사업 추진 배경

- 충청, 경기, 호남을 아우르는 충청(기호) 유학은 조선왕조 사상의 근간이며, 조선 유학의 정수를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영남유교와 차별화됨.
- 안동지역을 중심으로(유교랜드, 국학진흥원 등) 추진된 영남유교문화권 개발 사업과 달리, 충청도내 전 시·군의 유교 문화유산 개발로 사업추진방식 차별화 추진
  - ※ 영남유교문화권 개발사업(2000 ~ 2010) : 총 15,208억원 (국 4,133 지 4,198 민 6,877)

### ○ 사업 내용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총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3,300억원 규모임.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기본계획 확정(2016. 6월)된 이후 공감대 형성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2016. 8월) 등을 개최하여 조기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 중
- 천안 2개 사업, 공주 2개 사업 아산 2개 사업 등 15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3개의 거점사업과 15개의 연계사업으로 구성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기본구상 및 계획 (문체부, 2016. 6월) 수립 후 2017년 정부예산확보를 추진 하였으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중복으로 확보치 못한 상황



(단위 : 억원)

시군별	세부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3,300	1,556	1,744	
천안	천안 암행어사 출두野	218	99	119	
천안	천안 담헌천문달빛마당	70	23	47	
공주	충청감영 생생마을	109	55	54	
공주	금강누정선유(船遊)길	71	33	38	
보령	토정비결 체험관	193	96	97	
아산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85	40	45	
아산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154	67	87	
서산	밤하늘산책원	170	79	91	
논산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거점)	460	230	230	
계룡	사계문화 체험관	122	52	70	
당진	여민동락 역사누리	191	78	113	
금산	한의학령마을	214	100	114	
부여	금강누정선유(船遊)길	324	162	162	
서천	문헌사색원	183	92	91	
청양	선비충의문화관	111	53	58	
홍성	홍주천년 양반마을(거점)	188	94	94	
예산	추사서예창의마을(거점)	223	98	125	
태안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214	105	109	

표 7-22

시군별 사업명 및  
투자계획

자료 : 충청남도



그림 7-43

충남 18개 사업의  
위치도

## ○ 기대 효과

- 충청권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유교문화자원의 발굴·보존을 통해 영남유교문화권과 차별되는 문화·관광 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사업 추진 배경

- 「해양 라이프 케어(life-care)산업」이란 인간의 생애주기(life-cycle)별 헬스케어(health care), 웰니스(wellness), 힐빙(heal-being), 항노화(anti-ageing), 뷰티(beauty) 서비스를 상호연계한 융·복합산업임.
- 인구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만성질환자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출 증가로 라이프-케어 산업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 ※ 웰니스 관광산업 ' 17년까지 매년 9.1%씩 증가, 소비액은 68백억불, (' 12, 웰니스 투어리즘)
- 라이프-케어 산업은 고령화사회에 의료비 절감효과와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산업이므로 미래산업으로 육성 성공 전망
  - ※ 국민 1인당 의료비 연평균 7.2% 증가(OECD 국가 평균 2.0%) → 3배 높음
-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해양자원을 개발하여 오래전부터 휴양·관광·의료 융 복합 공간 조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 ※ (독일) Kurort(치유·휴양단지) 350여개소 운영, 연 45조 시장, 45만명 고용 창출
- 따라서 해양 헬스케어, 해양 의약바이오, 해양 뷰티산업 등을 상호 연계한 「해양 Life-care Complex(복합단지)」조성을 토대로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 및 클러스터 기반 마련 필요
- 특히, 충남은 머드, 해수, 염지하수, 해조류, 천일염 등의 특성화된 해양치유 자원과 온천, 휴양림 등 힐링 관광자원과 수도권 및 중국 관광객 접근성 최적으로 해양 라이프케어산업 성공 여건 충분

## ○ 사업 내용

- 사업의 위치는 충남 서해안 일원임.
- 사업내용은 해양헬스케어 시범단지, 해양재활·치유센터, 해양뷰티센터 설립 등 해양 라이프케어 콤플렉스를 건립하는 것임.



자료 : 충청남도

- 현재 추진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3년) 세부과제 '해양치유관광광산업 육성' 반영, 1단계 사업으로 해양치유관광광산업의 과학적 근거 마련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R&D 추진 중(3억원, 2017~19년)

그림 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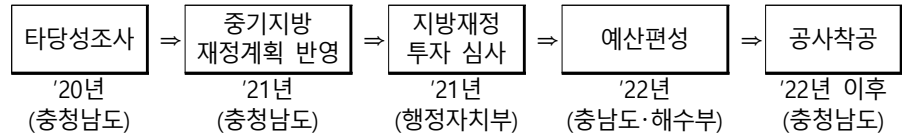
해양치유관광광산업  
유치 여건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그림 7-45  
사업 추진 절차

- 이에 따라서 충남은 2020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2년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



- 사업비는 1,000억원으로 국비 200억, 지방비 200억 그리고 민자로 600억을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임.

(단위 : 억원)

표 7-23

해양라이프케어  
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비 투자계획

재원별	총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비고
합 계	1,000			300	700	
국 비	200			100	100	
지방비	200			100	100	
민 자	600			100	500	

자료 : 충청남도

### ○ 기대 효과

- 충남의 머드, 해수, 염지하수, 해조류, 천일염 등의 특성화된 해양치유자원과 온천, 휴양림 등 힐링 관광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들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지역관광산업 기대
- 인접 지역의 지역발전과 충남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기대

### ○ 사업 추진 배경

- 급속한 어민의 고령화, 어촌지역 경제활동 인구감소로 소규모 어촌의 폐촌 가속화, 내륙지역과 차별화된 전통적인 어촌민속문화 보존 절실
- 그동안 수산물 생산 위주의 정책으로 수행되어, 문화·복지를 포함한 생활전반에 걸친 정책추진의 한계를 보임
- 서해안의 잠재적인 자원(갯벌, 어구, 어법 등)을 활용한 전통어촌민속마을(촌)을 재현하여 전통문화 교육 및 관광콘텐츠로 활용
- 충남은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 인접 및 대중국 교류 확대로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예상,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도약 가능

### ○ 사업 내용

- 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은 충남 연안 어촌 또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
-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00억원으로 국비 173억, 도비 113억, 시군비 114억이 투자됨.

(단위 : 억원)

재원별	총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이후	비고
합 계	400	16	77	127	180	
국 비	173	8	25	25	90	
도 비	113	4	26	26	45	
시군비	114	4	26	26	45	

자료 : 충남도청

표 7-24

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의  
사업비 투자계획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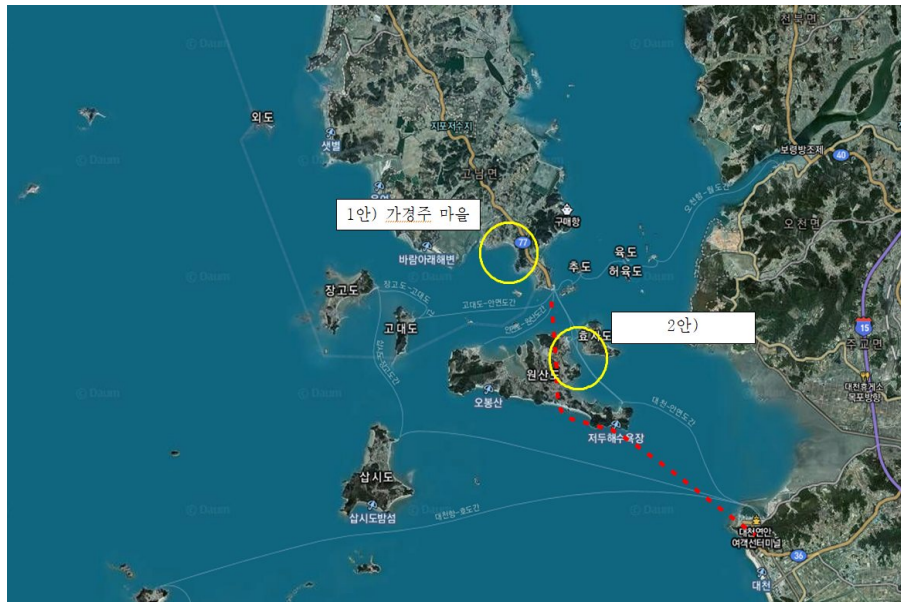
- 사업내용은 어촌가옥단지, 어촌민속박물관 건립 등을 통하여 전통적인 어촌의 전통민속문화 보존과 체험현장을 조성한다는 것임.

### ※ (2단계) 1단계 어촌가옥단지 및 박물관 조성후 민자유치 별도 추진

- 어촌체험, 생태관광 콘텐츠 발굴(독살체험, 갯벌생태체험, 염장체험, 전통배체험등)
- 체류형 체험관광 코스 발굴, 체험가이드 육성 및 프로그램 개발
-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활용 부가수입 창출 및 국제관광객 유치 홍보
- 중학생 자유학기제 및 어린이 관광객 중심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

- 정부는 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은 잊혀져가는 어촌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의 미선정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음.

그림 7-46  
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의  
위치도



자료 : 충청남도

##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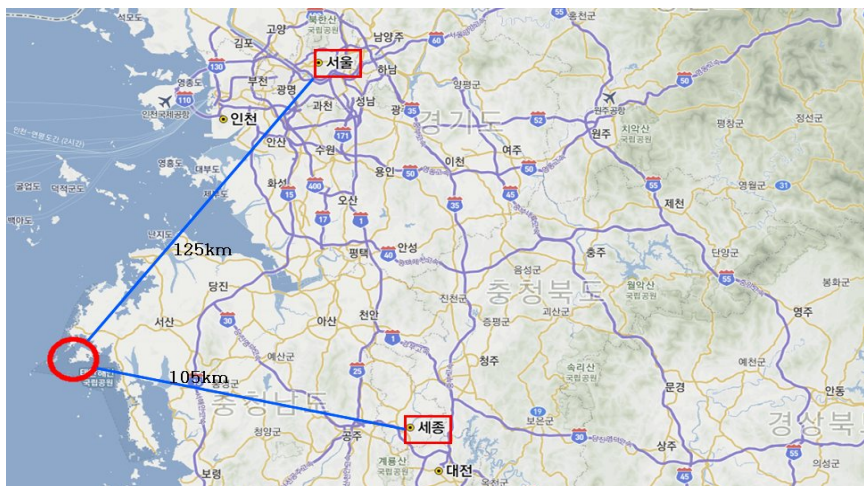
- 「한국 어촌민속마을 조성」을 통하여 사라져 가는 전통어촌문화를 보존·복원 하고 충남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 ○ 사업 추진 배경

- 급속한 어민의 고령화, 어촌지역 경제활동 인구감소로 소규모 어촌의 폐촌 중국의 1帶1路 정책과 관련하여, 중국과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유리한 지역 (320km)에 해양레저산업 집중 육성 필요
- 고대 중국 해상실크로드의 역사성을 테마로 설정하여 스토리화하고 한·중 교류의 역사문화를 가미하여 중국관광객 유치에 대비
- 고대부터 국제교류의 통로인 ‘해상실크로드’를 복원하여 서해안 최대의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최적지로, 대산항 국제여객선 입항, 해미 비행장 개장 등의 관광수요에 대비한 국제적 규모의 해상관광테마 특구 조성 필요

## ○ 사업 내용

- 사업부지는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일원으로서 시설이 들어서는 총 면적은 270,000m<sup>2</sup>임.



자료 : 충청남도

그림 7-47

태안 해상관광  
테마특구 위치도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표 7-25

태안  
해양관광테마  
특구사업내용

- 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설사업은 마리나항과 테마파크 그리고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관문을 설치 등임.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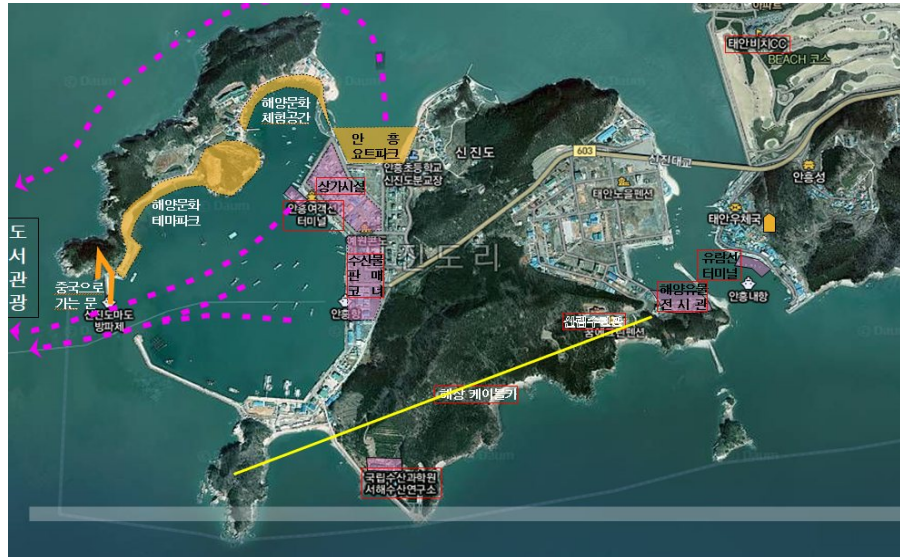
구 분		규 모	예산액	비 고
금 액			1,600	
해양레저	마리나항	140,000m <sup>2</sup>	470	요트, 보트, 카누
	테마파크	100,000m <sup>2</sup>	450	Sea 파라다이스
해양문화	체험공간	30,000m <sup>2</sup>	600	미래해양체험과학관
	서해의 관문	1식	40	서해로 나가는 문
도서관광	유람선	5척	20	도서관광 접안시설 지원
	여객선	1척	20	접안시설 지원

자료 : 충청남도

- 시설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1,560억으로서 2021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

그림 7-48

태안 해상관광  
테마특구 구상도



자료 : 충청남도

### ○ 기대 효과

- 서해로 나가는 대륙의 관문에 해상실크로드 테마특구 조성함으로써 관광산업 확장의 거점 확보
- 해외관광객 유치대비,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 (5) 지역민 행복 증진을 위한 생활공간 재창조

### 1) 추진 목표

- 서민친화적인 지역 생활공간의 재창조 ⇒ 서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생활공간의 정비
- 주거시설 및 생활권 환경 정비 추진 ⇒ 지역민의 삶에 직결된 주거와 생활인프라의 정비 및 확충
- 지역의 공공시설 수요에의 대응 ⇒ 복지, 주거, 교육 등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확충 및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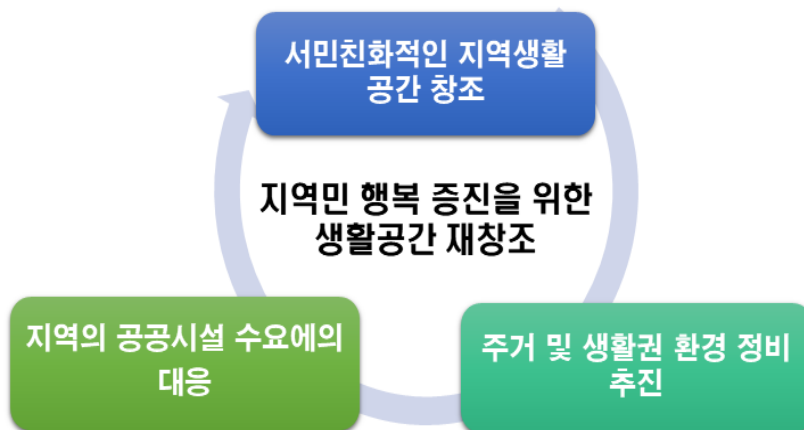


그림 7-49

주거·교육 부문  
인프라 목표 및  
전략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추진 정책 및 프로젝트

## 주거·교육

## AI 구제역 체험형 교육홍보센터 건립

## ○ 사업 추진 배경

- 2003년 이후 국내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반복 발생하여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음.
- 농가 차단방역 의식 미흡으로 AI 재발 농가 속출. 전국적으로 '03~'17년까지 AI 발생농장 888호 중 94호에서 중복 발생(10.6%)함. 충남의 경우에도 '03~'17년까지 AI 발생농장 112호 중 9호에서 중복 발생(8%)
- 이론 위주의 형식적 교육으로 차단방역의 현장적용에 한계가 있는바, 공무원 교육원에서 가축질병관리 실무과정을 연 2회 실시하나 농가는 제외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에도 농가대상 AI와 구제역 교육을 2년에 1회 정도 돌아가면서 실시하나 이론 위주로 시행하고 있음.

- 농가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AI 전시 및 홍보 시설의 부재

## ○ 사업 내용

-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3년간 총 사업비 140억원(전액 국비)을 투입하여 추진
- 위치는 충청남도 홍성군 일원에 교육센터를 건축하는 것으로 연면적은 6,400㎡임. 시각적이고 체험적인 교육을 위한 AI 교육·홍보센터의 건립

## ○ 기대 효과

- 축산농가에 대한 맞춤형 교육으로 차단방역 습관화 정착을 유도하고, 농장 단위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통한 AI 예방 및 피해 최소화
- 인수공통전염병인 AI 예방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 및 가금산업 발전에 기여

## ○ 사업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을 기반으로 ICT등 정보화 기술과 융합 되는 기술혁명의 새로운 시대 도래
- 융합기술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분야 산업의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특히, 분야별·산업별 분절된 현 인력양성 교육시스템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인력 부족
- 예를 들어 자율형전기자동차 산업에 있어 자동차, 배터리, ICT 및 AI등 각각의 전문가는 있으나 산업 전반을 아우를 고급인력은 부족함.
- 충남도는 타시도 대비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스마트팩토리 등 4차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  
※ 제조업 대 기타산업 비중 : (충남)제조업 6 : 기타 4, (전국)제조업 4: 기타 6
- 충남도내 기업들에 4차 산업혁명 유관 분야의 지원과 동시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인력양성 센터” 설립을 통한 우수 인력 배출 필요

## ○ 사업 내용

-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 센터는 기존 인력양성사업과 같이 단기에 배출되는 인력이 아닌 4차 산업혁명 관련학과(전기·전자·컴퓨터·메카트로닉스 등)의 학부졸업생 및 석박사급 인재들에 높은 수준의 융복합 교육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
- 스마트팩토리 학과, 센서산업 등 소재분야 및 공통과정(코딩)운영. 전문가양성과정이므로 단기(6개월~1년)과정이 아닌 최소 2~4년 과정 운영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교육내용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계의 인력수요조사(전공 및 분야 등)를 통해 융복합 학과·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 및 연구 수행  
※ (예시) 스마트팩토리 학과 : 공장자동화(전기·메카트로닉스)+센서개발(전자과)+ICT개발(컴퓨터)
-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센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00억원으로 소요되는 부지는 23,140㎡, 건축연면적 43,966㎡ 규모로 추정하고 있음.

### ○ 기대 효과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산업구조개편이 이루어져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관련분야의 인재 집중 양성

## ○ 사업 추진 배경

- 현재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4곳이 지정되어 진행 중에 있음. 충남도는 매년 4곳 이상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 그러나, 현재 도시재생 사업 관련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재생 일반사업의 진행도 차질없이 추진되어질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충청남도의 도시재생사업의 수요는 모두 102건으로서 우선순위에 따른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필요

## ○ 사업 내용

- 시·군별 도시재생 수요조사에서 각 지역별로 취합된 도시재생사업 수요는 100건임.

구분	합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사업수	102	18	9	5	31	6	8	2
구분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사업수	5	1	3	2	2	6	2	2

자료 : 충남도청

표 7-26

시군별 도시재생  
수요 현황

- 이들 사업들은 해당 지역에서 추진하는 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재생 사업들로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추진 필요
- 이들 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주택, 시설물의 개량, 공동주차장 및 소공원 등 생활편의시설의 확충 등이 중점을 두고 있음.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표 7-27

#### 시군별 도시재생 사업 신청 현황

- 따라서 현재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농촌 환경정비사업, 새뜰마을 환경정비사업,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 모색 필요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의 반영

신청유형	시군	사업명	주요내용	대상지(동)	면적(m)
우리동네 살리기	천안시	대학인거리활성화사업	(사업내용) 대학교 밀집지역의 노후 단독주택 주거지를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공간 확보 등 (단위사업)청년창업및쉐어하우스구축,중소기업과일자리연계프로그램추진등	안서동	50,000
우리동네 살리기	천안시	충절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충절로 부근의 노후 주거지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거지 재생 (단위사업)문화예술등복합주차타워,마을기업양성,임대주택건립	신부동	50,000
주거정비 지원	천안시	법원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법원부지이전에 따른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 정비를 통해 가로 및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가로주택정비,마을관리사무소,공동편의시설등	신부동	50,000
주거정비 지원	천안시	남부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철도변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 정비를 통해 가로 및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 가로주택정비,마을관리사무소,공동편의시설등	성정동	50,000
일반근린형	천안시	성정1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 거리조성 등 (단위사업) 상가활성화, 마을기업, 골목환경개선 등	성정동	80,000
일반근린형	천안시	주공5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골목시장 활성화와 마을기업 육성 등 추진 (단위사업) 상가활성화, 마을기업, 골목환경개선 등	성정동	50,000
우리동네 살리기	천안시	원성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 정비를 통해 가로 및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편의시설 설치 등	원성동	30,000
일반근린형	천안시	축구센터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 정비를 통해 가로 및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 공공주차장, 커뮤니티 공간, 간판정비	원성동	130,000
우리동네 살리기	천안시	봉명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 정비를 통해 가로 및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 편의시설, 보행환경 정비, 셉테드 등	봉명동	10,000
중심시가 지형	천안시	일봉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특성화 상가복합시설 설치 및 중소기업 연계 일자리 창출 (단위사업) 공구거리 활성화, 경사지및통화로 개선	일봉동	150,000
일반근린형	천안시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소규모 주거지 개발 등 (단위사업) 재래시장, 편의시설 조성, 노후주거 정비	성환읍	260,000
일반근린형	천안시	독립기념관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문화관광자원 활용 골목시장 활성화와 마을기업 육성 등 추진 (단위사업) 방문객 유치시설, 경관시설, 상점활성화	목천읍	280,000
중심시가 지형	천안시	아우내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문화관광자원 활용 골목시장 활성화와 특화거리 조성 (단위사업) 인도설치, 간판개선, 조명개선, 테마거리	병천면	210,000
일반근린형	천안시	중앙고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 정비를 통해 가로 및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 커뮤니티 시설, 학생동아리, 천변개선	원성동	120,000
경제기반형	천안시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오룡경기장 공공부지를 활용한 경제거점 조성 (단위사업) 공공임대주택, 체육시설, 편의시설, 보행환경 정비, 셉테드 등	오룡동	30,000

## 2.

###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신청유형	시군	사업명	주요내용	대상지 (동)	면적 (㎡)
일반근린 형	천안시	봉명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역세권 주거지 기능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등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 셉테드 사업, 청년임대주택, 공공청사 활용사업, 마을기업 양성	봉명동	110,000
중심시가 지형	천안시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전통시장의 기초 인프라를 개선하여 상권 활성화 유도 (단위사업) 복합주차타워 건립, 남산공원 정비, 사회적기업 등 양성	중앙동	250,000
경제기반 형	천안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코레일 LH, 천안시가 협력을 통해 천안역세권 주변에 고용기반확충 등 일자리 창출허브 구축 (단위사업)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청년클러스터, 창업지원 센터 등	외촌동	500,000
일반근린 형	공주시	제민천 골목공동체 5.5.1. 뉴딜사업	(사업내용) 제민천 주변 침체 상권과 주거지를 장소중심적 재생으로 5개 특화지구 11개사업 추진 (단위사업) 제민천 뉴딜센터, 아형 골목길 정비사업, 주차 장정비, 숙박시설 정비 지원사업, 나태주 문학 도전숙 조성 사업, 제민천 프롬나드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공모사업 주 거환경개선 지원사업(CPTED) 방식	반죽동  중동	15만
일반근린 형	공주시	옥룡캠퍼스 내일로 조성사업	(사업내용)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부활로 낙후된 주변 상 권 활성화 및 주민활동공간 마련 (단위사업) 옥룡캠퍼스 주변상권 활성화사업, 주차장정비,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노후주거지역 정비 등	옥룡동	18만
주거정비 지원	공주시	대추골 행복마을 조성사업	(사업내용) 옥룡동 대추골 주변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주 거정비와 주민공동체 활성화 추진 (단위사업) 행복마을 공동체, 텃밭본부 건립, 주말농부시장, 마을축제 등 주민역량강화 추진, 걷고싶은 프롬나드길 조성 L=1.0km, 안전마을 조성 1식 등	옥룡동	8만
주거정비 지원	공주시	마나리길 행복마을 정비사업	(사업내용) 노후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 노후주택 개량사업 1식, 기반시설 확충사업 1 식, 지역주민 공동센터 및 놀이공간 조성 1식 등	교동	8만
주거정비 지원	공주시	향교길 전통마을 정비사업	(사업내용) 노후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 노후주택 개량사업 1식, 기반시설 확충사업 1식, 지역주민 공동센터 및 전통마을 조성 1식 등	교동	10만
주거정비 지원	공주시	큰샘마을 정비사업	(사업내용) 노후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 노후주택 개량사업 1식, 기반시설 확충사업 1식, 지역주민 공동센터 및 큰샘 복원 1식 등	봉황동	15만
주거정비 지원	공주시	은계골 문화마을 정비사업	(사업내용) 노후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공산성 진입로 정비 등 (단위사업) 노후주택 개량사업 1식, 기반시설확충사업1식, 지역주민공동센터및공산성은계골정비식	옥룡동	9만
일반근린 형	공주시	유구 직물단지 활성화사업	(사업내용) 유구장터 및 직물단지 주변 침체 상권과 주거지 를 장소중심적 재생 (단위사업) 유구자카드 단지 정비, 전시홍보시설 및 주민편 의시설 정비, 유구장터 활성화 및 상인지원사업 추진 등	유구읍 석남리	11만
주거정비 지원	공주시	녹천 문화마을 정비사업	(사업내용) 노후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천변 프롬나드 길정비 등 (단위사업) 노후주택 개량사업 1식, 기반시설 확충사업 1식, 지역주민 문화센터 및 주변정비 1식	유구읍 녹천리	12만
우리동네 살리기	보령시	철길에코마을 조성사업	(사업내용) 지역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공간성 활용(옛 궁 타, 상징조형물 설치) 지역 정체성 부여 공촌천과 마을담장 활용 꽃 재배로 마을공동사업 발전 생태 마을 가로경관 개선, 폐가정비 및 공동 텃밭 조성으로 주민	공촌동	49,000

표 7-27 (계속)

시군별 도시재생  
사업 신청 현황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표 7-27 (계속)

#### 시군별 도시재생 사업 신청 현황

신청유형	시군	사업명	주요내용	대상지 (동)	면적 (㎡)
일반근린 형	보령시	원동 골목 르네상스사업	공동체 활성화 (단위사업) 상정조형물 설치, 수변정원 조성, 궁촌천 독을 이 용 야생화 식재, 궁촌2길 오수하수 관거정비, 마을 담장내 입체정원 조성, 골목길 바닥포장, 폐기철거, 공동텃밭조성, 위험담장보수, 쌈지공원 조성	대천	140,294
			(사업내용) 보령경찰서부지 활용 역사문화공간조성, 지역역 사(광산, 보부상등) 테마공원 문화체험 거점단지 조성, 주민 참여 근현대 역사골목 조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거점 조성 건기쉬운 걷고싶은 거리조성, 5일장 및 김특화 골목 조성 (단위사업) 경찰서 부지내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시 조성, 디 자인골목길 조성, 지역역사 테마공원 조성, 마을사랑방, 마 을카페, 마을공방 조성, 무장애환경디자인 사업, CPTED범죄 예방사업, 5일장 및 김특화 골목 조성사업	1·2동	
일반근린 형	보령시	신축동 나폴리향 재생사업	(사업내용) 활기찬 어촌마을 정주기능 강화, 장소마케팅 및 지역 스토리텔링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농촌주거지 정 주기능 강화, 노후주거 및 낙후된 마을 인프라 개선, 신규마 을 조성 및 공동체 거점 조성, 인적자원 육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외부 인적자원 유입을 통한 특화된 지역문화경제 활성화, 지역 인적자원 발굴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 발 (단위사업) 머드축제 연계 테마공원조성, 마을사랑방, 마을 카페, 마을공방 조성, 건기쉬운-걷고싶은 거리 조성, 공폐가 활용 레지던시 운영, 어촌마을 경관 생활사 골목조성, 노후 주거지 개선 등	대천5 동	119,000
일반근린 형	보령시	평신지역 도시 재생사업	(사업내용) 꺼리가 있는 거주기능 강화, 공동체 활동 거점 조성, 노후 주거환경 개선, 인적자원 육성 및 커뮤니티 활성 화, 주민공동체 활동 강화(SW), 지역특화 주민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자원 육성	대천	약
				3동	120,000
중심시가 지형	보령시	원도심 도시 재생사업	(사업내용)중심시가지 재생사업 시민공동체활성화거점,근대역사탄광문화촌청년창업공간,시 장레지던시 (단위사업) 자전거공원 및 놀이터 조성, 복혜숙 영화의 거 리조성, 관촌수필 거리조성, 도시락카페, 음악이있는시장, 시 민참여 프리마켓 설치, 주민쉼터조성, 예술 테마시장 레지던 시 운영, 등	대천	약
				1,2동	190,000
일반근린 형	아산시	낙원지구 도시재생 사업	- 청년 . 예술가 활동 거점조성 - 지역주민 및 사회적 경제활동 거점 조성 - 골목 특화거리 조성 - 소공원 .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 기존 우리시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온양 1동 (온천 천일원)	100,000
우리동네 살리기	아산시	창고말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가로환경개선 (단위사업) 보행환경정비, 셉테드 설치 등	온양2 동	26,000
우리동네 살리기	아산시	온궁지구 도시재생 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학교 주변 가로 환경개선 (단위사업) 등하교길 통학로개선, 셉테드 설치 등	온양1 동	56,000
우리동네 살리기	아산시	아고지구 도시재생 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학교 주변 가로 환경개선 (단위사업) 등하교길 통학로개선, 셉테드 설치 등	온양1 동	59,000
주거정비 지원	아산시	문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소규모 주거지 개발 등 (단위사업) 재래시장, 편의시설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온양1 동	72,000
우리동네 살리기	아산시	여의정1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가로환경개선 (단위사업) 보행환경정비, 셉테드 설치 등	온양2 동	29,000
우리동네	아산시	여의정2지구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가로환경개선	온양2	42,000



신청유형	시군	사업명	주요내용	대상지 (동)	면적 (㎡)
살리기	아산시	도시재생사업	(단위사업) 보행환경정비, 셉테드 설치 등	동	29,000
우리동네 살리기		제일타워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가로환경개선 (단위사업) 보행환경정비, 셉테드 설치 등	온양2동	
우리동네 살리기	아산시	장굴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가로환경개선 (단위사업) 보행환경정비, 셉테드 설치 등	온양2동	32,000
우리동네 살리기		풍기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학교 주변 가로 환경개선 (단위사업) 등하교길 통학로개선, 셉테드 설치 등	온양6동	
주거정비 지원	아산시	온천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가로환경개선 (단위사업) 보행환경정비, 셉테드 설치 등	온양1동	83,000
우리동네 살리기		신선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가로환경개선 (단위사업) 보행환경정비, 셉테드 설치 등	온양3동	
우리동네 살리기	아산시	충무1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학교 주변 가로 환경개선 (단위사업) 등하교길 통학로개선, 셉테드 설치 등	온양3동	45,000
우리동네 살리기		충무2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학교 주변 가로 환경개선 (단위사업) 등하교길 통학로개선, 셉테드 설치 등	온양3동	
주거정비 지원	아산시	변두리1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가로환경개선 (단위사업) 보행환경정비, 셉테드 설치 등	온양3동	70,000
주거정비 지원		변두리2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학교 주변 가로 환경개선 (단위사업) 등하교길 통학로개선, 셉테드 설치 등	온양3동	
주거정비 지원	아산시	권곡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가로환경개선 (단위사업) 보행환경정비, 셉테드 설치 등	온양3동	75,000
우리동네 살리기		너더리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가로환경개선 (단위사업) 보행환경정비, 셉테드 설치 등	온양5동	
우리동네 살리기	아산시	황토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학교 주변 가로 환경개선 (단위사업) 등하교길 통학로개선, 셉테드 설치 등	온양4동	49,000
우리동네 살리기		백이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가로환경개선 (단위사업) 보행환경정비, 셉테드 설치 등	온양4동	
우리동네 살리기	아산시	실옥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가로환경개선 (단위사업) 보행환경정비, 셉테드 설치 등	온양4동	30,000
우리동네 살리기		못마루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가로환경개선 (단위사업) 보행환경정비, 셉테드 설치 등	온양3동	
우리동네 살리기	아산시	숫골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가로환경개선 (단위사업) 보행환경정비, 셉테드 설치 등	온양5동	35,000
우리동네 살리기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가로환경개선 (단위사업) 보행환경정비, 셉테드 설치 등	온양2동	
우리동네 살리기	아산시	신동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노후 소규모 주거지정비를 통해 가로환경개선 (단위사업) 보행환경정비, 셉테드 설치 등	온양3동	60,000
주거정비 지원		오류동 1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소규모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특색에 맞는 도시 재생사업을 단계별로 공모 추진 (단위사업) 마을주차장, 썬치 공원조성	배방읍 공수리	
주거정비 지원	아산시	오류동 2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소규모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특색에 맞는 도시 재생사업을 단계별로 공모 추진 (단위사업) 마을주차장, 썬치 공원조성	배방읍 공수리	65,000
우리동네 살리기		모산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소규모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특색에 맞는 도시 재생사업을 단계별로 공모 추진 (단위사업) 마을주차장, 썬치 공원조성	배방읍 공수리	
우리동네 살리기	아산시	복수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소규모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특색에 맞는 도시	배방읍	40,000

표 7-27 (계속)

시군별 도시재생  
사업 신청 현황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표 7-27 (계속)

#### 시군별 도시재생 사업 신청 현황

신청유형	시군	사업명	주요내용	대상지 (동)	면적 (㎡)
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재생사업을 단계별로 공모 추진 (단위사업) 마을주차장, 쌈지 공원조성	복수리	
주거정비 지원	아산시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소규모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특색에 맞는 도시 재생사업을 단계별로 공모 추진 (단위사업) 마을주차장, 쌈지 공원조성	온양6 동	70,000
주거정비 지원	아산시	온주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 소규모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특색에 맞는 도시 재생사업을 단계별로 공모 추진 (단위사업) 마을주차장, 쌈지 공원조성	온양6 동	65,000
우리동네 살리기	서산시	읍내지구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가칭)	- 노후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 정비후 임대주택 공급 - 생활편의시설(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소공원 공동주차 장) 등 확충 - 복합커뮤니티센터(마을회관, 작은도서관 등) 건립 - 경관디자인사업 등	읍내동	48,500
우리동네 살리기	서산시	부석지구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가칭)	- 노후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 정비 - 생활편의시설(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소공원 공동주차 장) 등 확충 - 복합커뮤니티센터(마을회관, 작은도서관 등) 건립 - 경관디자인사업 등	부석면	50,000
우리동네 살리기	서산시	석림지구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가칭)	- 노후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 정비 - 생활편의시설(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소공원 공동주차 장) 등 확충 - 복합커뮤니티센터(마을회관, 작은도서관 등) 건립 - 경관디자인사업 등	석남동 석림동	45,000
주거정비 지원	서산시	동문1지구 주거환경정비사 업(가칭)	- 노후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 정비 - 생활편의시설(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소공원 공동주차 장) 등 확충 - 복합커뮤니티센터(마을회관, 작은도서관 등) 건립 - 경관디자인사업 등	동문1 동	76,000
우리동네 살리기	서산시	동문2지구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가칭)	- 노후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 정비후 임대주택 공급 - 생활편의시설(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소공원 공동주차 장) 등 확충 - 복합커뮤니티센터(마을회관, 작은도서관 등) 건립 - 경관디자인사업 등	동문2 동	53,200
우리동네 살리기	서산시	해미읍내 지구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가칭)	- 노후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 정비후 임대주택 공급 - 생활편의시설(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소공원 공동주차 장) 등 확충 - 복합커뮤니티센터(마을회관, 작은도서관 등) 건립 - 경관디자인사업 등	해미면	40,000
일반근린 형	논산시	논산중심 재생지구 (가칭)	(사업내용) 침체된 논산시의 기존 도심 내에 유휴자원(폐공 장, 노후 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창출 하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을 정비하여 도심 내 활력 부여 (단위사업) 청년창업공작소 조성, 기존 공장을 활용한 문화 플랫폼 조성, 거리정비, 전통시장(화지중앙시장) 환경개선사 업	화지동 반월동	143,000
일반근린 형	논산시	강경역사 재생지구 (가칭)	(사업내용) 강경에 산재된 역사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여 도심 활력 기대 (단위사업) 강경터미널 조성, 공용자전거 설치사업 강경 근대역사길 정비, 역광장 정비	대흥리 남교리	120,000
일반근린 형	논산시	연무산업 재생지구 (가칭)	(사업내용) 침체된 전통시장을 정비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 여 호국요람인 연무지역의 도시이미지 제고 (단위사업) 노후주택 정비, 녹색주차장 설치, 시장광장 설	안심리 마산리	142,000

신청유형	시군	사업명	주요내용	대상지 (동)	면적 (㎡)
주거정비 지원	논산시	연산관광 재생지구 (가칭)	치, 공공임대주택 건설, 호국공원 조성 (사업내용)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에 있는 연산지역을 연산역과 연계한 관광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침체된 도심환경 개선 (단위사업) 오토캠핑장 조성, 노후주택정비사업 자전거도로 설치,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청동리	62,000
우리동네 살리기	논산시	논산대교 재생지구 (가칭)	(사업내용)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대상지 내에 기반시설 개선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도모 (단위사업) 소방도로 확보, 리모델링 지원, 공용주차장 조성, 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원설치	대교동	50,000
우리동네 살리기	논산시	논산화지 재생지구 (가칭)	(사업내용) 논산중심재생지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가로환경 및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여 삶의 질 개선 (단위사업) 가로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선사업 오픈스페이스 조성, 수변공원 조성	화지동	22,000
우리동네 살리기	논산시	논산반월 재생지구 (가칭)	(사업내용) 물리적으로 노후된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정주환경 개선 (단위사업) 노후주택개선사업, 빈집정비, 공용주차장 설치	반월동	25,000
우리동네 살리기	논산시	논산부창 재생지구 (가칭)	(사업내용) 학교 밀집지역 인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도모 (단위사업) 생활가로 정비, 공용주차장 조성, 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 노후주택 정비	부창동	14,000
우리동네 살리기	계룡시	두계재생 사업	(사업내용) - 노후주택 및 시설 개량 - 공동체활성화를위한시설보강 - 마을 기반시설 정비 및 확장 등 (단위사업) - 노후주택 18동외 기존 공동체문화공간에 대한 확장 정비 공사 - 노인 실버존 및 테마파크 조성 - 마을인근 하천 자연숲과 연계한 영유아 체험 놀이동산 조성 등	두계리	1,580,833
우리동네 살리기	계룡시	엄사재생 사업	(사업내용) - 노후주택 및 시설 개량 - 공동체활성화를위한시설보강 - 마을 기반시설 정비 및 확장 등 (단위사업) - 노후주택 18동외 기존 공동체문화공간에 대한 확장 정비 공사 - 노인 실버존 및 테마파크 조성 - 마을인근 하천 자연숲과 연계한 영유아 체험 놀이동산 조성 등	엄사리	2,515,906
일반근린 형	당진시	당진 1동 도시재생 사업	- 당진1동 일원은 구 군청사 및 경찰서 등 공공기관 이전과 당진시 외곽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구도심은 쇠퇴 가속 -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구 군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한 원도심의 오아시스 같은 장소로 누구나 쉬고 즐기고 볼거리가 풍부한 공간으로 제공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공원조성, 주차장 조성 등	당진 1동	10만
일반근린 형	당진시	송악기리지 도시재생사업	- 기지시리 구시장 주변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주거환경이 낙후됨. 주차장 근린공원의 부족, 외곽의 도시개발로 상대적으로 구도심 등 가속화 쇠퇴 가속화 - 골목길 조성사업 어린이들의 통학환경 및 안전을 위한	기지시리 일원	14만

표 7-27 (계속)

시군별 도시재생  
사업 신청 현황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표 7-27 (계속)

#### 시군별 도시재생 사업 신청 현황

신청유형	시군	사업명	주요내용	대상지 (동)	면적 (㎡)
경제기반 형	당진시	부곡국가산업단 지도시재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li> <li>- 기지시리줄다리기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재생과 주차장, 공원, 안전시설물 확충 등</li> </ul>	부곡리 일원	30만
일반근린 형	당진시	합덕읍 도시재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지역 일원에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지만 문화, 여가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하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된지 오래 되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산업단지 재생필요</li> <li>- 생태적인 요소를 확충하여 산업단지의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고 친환경적인 생태구조를 가진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전환 필요</li> <li>- 인근지역과 같이 성장, 상생할 수 있는 계획수립 필요</li> </ul>	합덕 공용 버스 터미널 일원	100만
일반근린 형	당진시	당진 2동 도시재생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주택 밀집, 당진천으로 접근시설 미흡, 공실 건축물 등의 문제점이 있음.</li> <li>- 주택 밀집지역을 고려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당진천 변에 보행로 정비와 식생 형성을 통해 주거와 상업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에 활성화를 불러 놓으자 함.</li> <li>- 공원조성, 천변보행로 정비, 안전한 통학길 조성 등</li> </ul>	당진2 동 주민센 터 일원	12만
일반근린 형	금산군	전통시장 재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시설 건축, 시장 리모델링</li> <li>- 광장 및 노외주차장 조성</li> <li>- 수변공원 설치 등</li> </ul>	금산읍 하옥리	58,700
우리동네 살리기	부여군	근대화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량주택 정비(70호), 지붕(슬레이트개량(20호)</li> <li>- 소방도로개설(L=200m, 6.0m)</li> <li>- 섀테드 정비</li> <li>-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정비</li> <li>- 마을안길 정비 (L=700m, B=3m)</li> <li>- 근대화마을조성주변주거환경정비등을통해활력있는마을분위기조성</li> </ul>	규암면 외리	47,000
주거정비 지원	부여군	정림사지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량주택 정비(24호), 지붕(슬레이트개량(45호)</li> <li>- 소방도로개설(L=100m, 6.0m)</li> <li>- 섀테드 정비</li> <li>-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정비</li> <li>- 정림사지 주변도로 의열로 정비 (L=500m, B=14m)</li> <li>- 정림사지, 부여향교, 의열사 주변정비 등을 통해 백제 고도 분위기 조성</li> </ul>	부여읍 동남리	70,000
중심시가 지형	부여군	부여읍 중심지 도시재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여시장 + 버스 터미널(중심거점)+백강문화광장 + 이색창조거리 + 부여중앙시장 + 정림사지 등 보행축 주변정비</li> <li>-전통시장및부여시가지주보행축정비를통하여상권활성화및일자리창출,백제역사관광기반시설확충</li> </ul>	부여읍 구아리	190,000
주거정비 지원	서천군	행복나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내용) 열악한 정주기반시설 개선, 커뮤니티시설 확보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li> <li>(단위사업) 행복나눔지원센터, 도로 및 주차장 확충, 주민역량강화사업 등</li> </ul>	서천읍 군사리	55,000
우리동네 살리기	서천군	소사리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내용) 쇠퇴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마을경쟁력 제고,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게스트하우스 확충(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연계)</li> <li>(단위사업) 마을길 정비, 주택개량사업, 빈집 리모델링 등</li> </ul>	장항읍 성주리	36,000

신청유형	시군	사업명	주요내용	대상지 (동)	면적 (㎡)
우리동네 살리기	청양군	교월리 살기좋은 동네만들기	(사업내용)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급경사지 낙후 마을의 노후주택 정비지원 및 최소한의 차량진입이가능한 소방도로 개설하여 화재시 인명, 재산피해를 줄이고 살고싶은 마을로 동네로 가꾸기사업임 (단위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동주차장, 생활편의시설 등 설치	교월리	98,700
주거정비 지원	청양군	읍내리 주거환경정비사 업	(사업내용) 청양읍 저층노후주거 밀집지역의 주택개량, 주민편의시설 설치,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 (단위사업) 고령자주택 개발 및 공급사업 마을공부방 설치 사업, 어린이집 설치 사업 건축협정 시범사업 청년 임대주 택사업 등	읍내 1,2	127,814
일반근린 형	홍성군	홍주 천년역사 중심지재생	(사업내용) 홍성군의 역사·문화자원과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홍성읍 중 심지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골목상권 활력 증진 (단위사업) 홍주읍성 관광, 문화, 상업 복합시설 개발 사업 홍주천년 역 사문화 특화거리 조성 사업 일제 적산가옥 활용 사업 노후 주거지 환경 정비 사업, 청년 창업주택 공급 사업 등	오관 1,2,3,4 리	150,000
우리동네 살리기	홍성군	오관4리 환한 동네 만들기	(사업내용) 홍성읍 저층노후주거 밀집지역의 주택개량, 주민편의시설 설치,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 (단위사업) 고령자주택 개발 및 공급사업 마을공부방 설치 사업 어린 이집 설치 사업 건축협정 시범사업 청년 임대주택사업 등	오관 4리	42,000
우리동네 살리기	홍성군	고암 환한 동네만들기	(사업내용) 홍성읍 저층노후주거 밀집지역의 주택개량, 주민편의시설 설치,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 (단위사업) 고령자주택 개발 및 공급사업 마을공부방 설치 사업 어린 이집 설치 사업 건축협정 시범사업 청년 임대주택사업 등	고암리	50,000
우리동네 살리기	홍성군	고암2리 환한 동네만들기	(사업내용) 홍성읍 저층노후주거 밀집지역의 주택개량, 주민편의시설 설치,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 (단위사업) 고령자주택 개발 및 공급사업 마을공부방 설치 사업 어린 이집 설치 사업 건축협정 시범사업 청년 임대주택사업 등		50,000
우리동네 살리기	홍성군	오관 환한 동네만들기	(사업내용) 홍성읍 저층노후주거 밀집지역의 주택개량, 주민편의시설 설치,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 (단위사업) 고령자주택 개발 및 공급사업 마을공부방 설치 사업 어린 이집 설치 사업 건축협정 시범사업 청년 임대주택사업 등		50,000
우리동네 살리기	홍성군	신진 환한 동네만들기	(사업내용) 광천읍 저층노후주거 밀집지역의 주택개량, 주민편의시설 설치,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 (단위사업) 고령자주택 개발 및 공급사업 마을공부방 설치 사업 어린 이집 설치 사업 건축협정 시범사업 청년 임대주택사업 등		50,000
일반근린 형	예산군	예산군 일반근린형도시 재생사업	· 주사활력거리 조성사업 · 주사특화거리 조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향연 기획, 빈 점포 임대 사업 등	예산읍 예산리 일원	150,000

표 7-27 (계속)

## 시군별 도시재생 사업 신청 현황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신청유형	시군	사업명	주요내용	대상지 (동)	면적 (㎡)
		(가칭)	· 예산장터 조성사업 · 예산장터 운영 마을기업 육성 등 · 예향의 고을 조성사업 · 근대문화유산 발굴, 추사법상 전문점 조성 등		
우리동네 살리기	예산군	뒷마루마을 조성사업(가칭)	· 뒷마루 마을 조성사업 · 노후지역 집수리, 아트갤러리 조성 등	예산읍 예산리 일원	50,000
우리동네 살리기	태안군	우리동네 살리기(가칭)	(사업내용)노후단독, (단위사업) 공동주차장, 생활편의시설, 소공원 등 설치	태안읍	10,000
중심시가 지형	태안군	태안읍 시가지 도시재생(가칭)	(사업내용) 도시환경 정비사업 (단위사업) 공동주차장, 생활편의시설 등 설치	태안읍	23,000

- 현재 도시환경개선 및 도시재생 관련 2018년 예산은 87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수요 지역에 대응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는 매우 한계가 있는 상황

표 7-28  
2018년  
도시재생분야  
예산 현황

유형	사업대상	사업비 (2018년)	비고
도시재생 일반사업	2개 시군	43	
도시재생뉴딜 지역역량강화사업	12개소	6	
농촌 빈집정비 사업	천안시	3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설사업	400가구	3	
쌈지주차장	3개소	20	
충남형 공원 조성	3개소	12	
계		87	

-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 ①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

## ○ 사업 추진 배경

- 「우리나라 3면이 바다」 균형발전 필요하나 일부지역 중심 불균형 발전. 특히, 해양수산 관련 「국책·공공기관 및 대학」 대부분 부산 집중
- 충남은 풍부한 해양수산자원 보유,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부재로 해양수산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무, 산학연 협업 불가능하고, 또한 해양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미래 인재육성 절실하고 시급
- 4차 산업혁명 등 해양수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 필요 :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연구역량 및 인적인프라 확충이 선결과제
- 현 해양수산대학 운영 현황 ⇒ 해양신산업 주도 인력양성 한계 내재. 해양·해사분야 인재 육성 : 국립 한국해양대학·목포해양대학 중심 기관사·항해사 등 해사 기술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
- 수산분야 인재육성 : 국립 부경대·군산대·전남대(여수캠퍼스) 중심. 수산산업(어선·양식·질병관리) 기술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
- 충남 서해안은 풍부한 해양수산자원 보유, 해양수산대학 설립 최적지

## ○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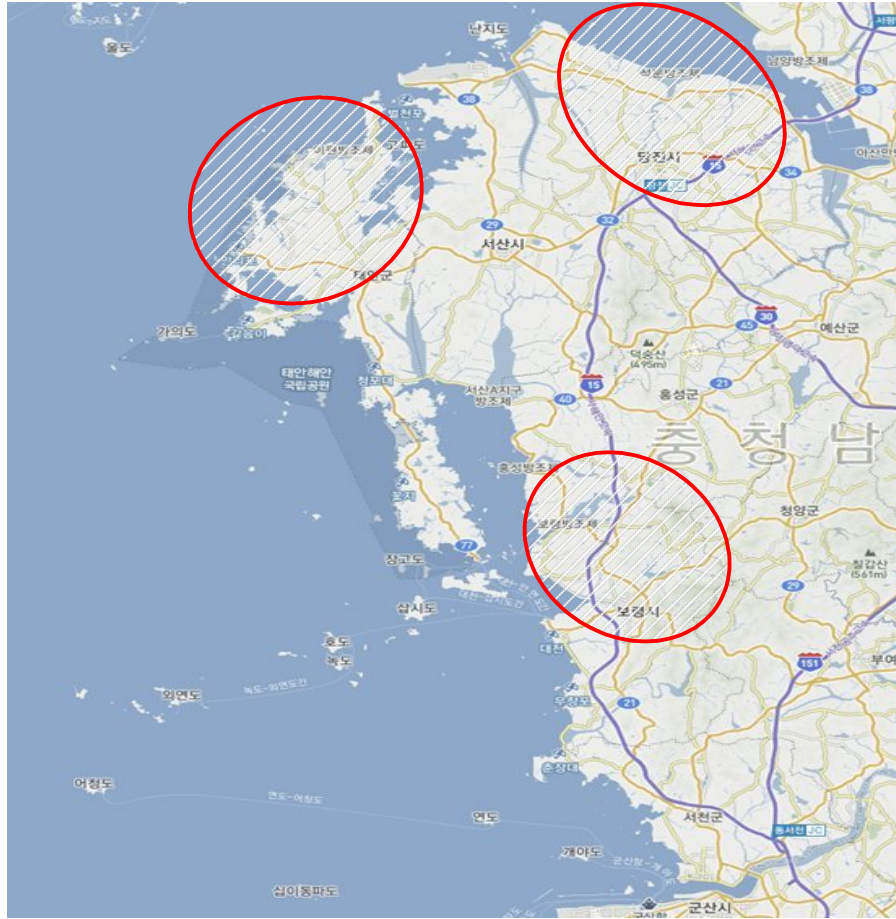
- 설립 위치는 충남 서해안 일원으로서 대학 설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552억원(국비 500, 지방비 52)으로 추정
- 사업기간은 2018년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한다는 계획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그림 7-50

국립해양수산물대학  
잠정 입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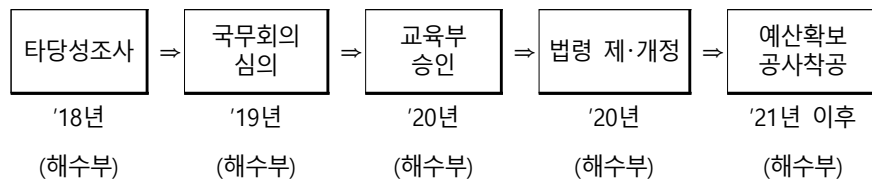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청

- 2018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0년 교육부 승인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임.

그림 7-51

국립해양수산물대학  
사업추진절차



- 재정투자계획은 아래 표와 같음. 21년 이후 예산 확보 후 추진한다는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임.



재원별	총사업비	기 투자	'18년	'19년	'20년	'21년	비고
합 계	552		2				
국 비	500		2			488	
지방비	52					52	
민 자							

표 7-29

국립해양  
수산대학교 설립  
사업비 투입계획

## ②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설치

### ○ 사업 추진 배경

- 대규모 간척지의 환경문제, 해양재해·재난대응지원, 중국과의 해양과학기술 협력 등 서해권역 해양과학기술 수요 증대
- 안산본원 부산이전 계획에 따라 서해권역 연구거점 공백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서해분원 설치 필요
- 전국에서 충남도가 해양수산발전 기반(인프라) 가장 취약
  - 해양수산관련 국책 및 공공기관 전무, 대학 등 관련학과 미약
  - 국책·공공기관 대부분 부산에 집중, 정책의 균형성 필요
  - 부산소재 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7개
- 충남은 「인천·경기·전북·전남」 등 서해연안 시·도 접근성 양호하며, 세계 최고의 갯벌 보유, 천수만·가로림만 등 우수한 자연생태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영토관리 및 대중국 해양수산 관련 연구 최적지임.

### ○ 사업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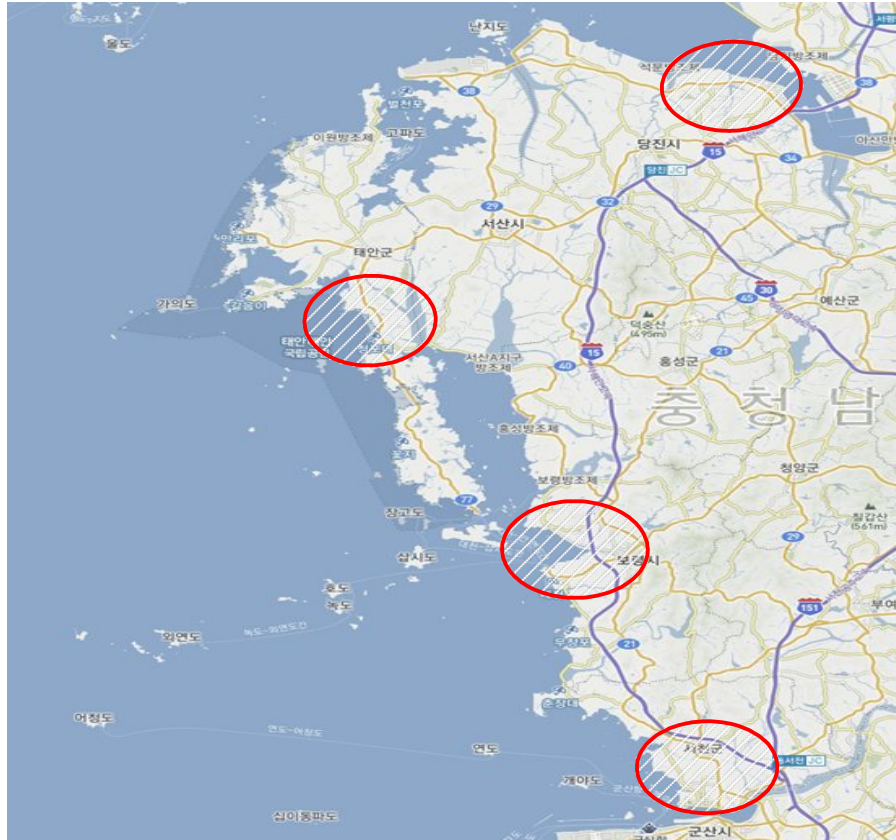
-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25년 까지로서 분원설치에 소요되는 추정된 사업비는 200억원(국비)임.
- 사업내용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서해분원 설치 및 건립임.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그림 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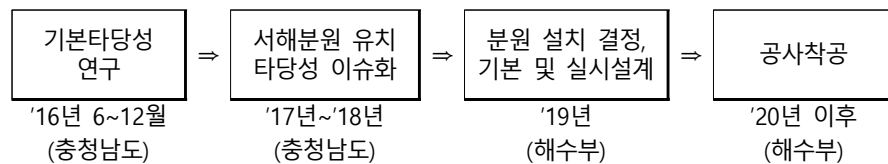
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설치  
잠정 부지



- 사업내용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서해분원 설치 및 건립하는 것임.
- 2016년 기본타당성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해분원의 유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2019년 해수부에서 분원 설치 결정이 나면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착공한다는 방침

그림 7-53

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설치  
사업추진절차



- 재정투자계획은 2019년 설계비를 반영하여 20년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에 착수한다는 계획임.

(단위 : 억원)

재원별	총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합 계	200		10	190		
국 비	200		10	190		
지방비						
민 자						

자료 : 충남도청

표 7-30

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설치  
사업비 투자 계획

### ③ 기대 효과

- 국립해양수산대학교 및 KIOST 서해분원의 설치를 통하여 국가의 해양수산 정책 균형적 발전 도모와 서해안지역 해양수산 발전 기대

## 2.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프로젝트

### 3.

#### 부문별 프로젝트 요약 및 기대효과

### 3. 부문별 프로젝트 요약 및 기대효과

#### (1) 부문별 인프라 정책 및 프로젝트 요약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역 내 핵심 정책 및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정리하였음.
- 첫째, 우선순위 측면에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성장 등 지역경제에의 파급 영향이 큰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굴, 제시하였음.
- 둘째, 그동안 지역 내의 숙원사업이지만,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제외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
- 셋째,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후 인프라에 대응한 재생과 재정비 등 미래의 인프라 수요를 반영하였음.
- 넷째, 지역에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정책의 방향에 최대한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였음.
- 다섯째, 지역민의 수요와 연계, 지역 내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지역별 안배에 중점을 두었음.
- 제시된 핵심 정책 및 프로젝트는 분야별로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표 7-31

본 연구의 인프라  
프로젝트 개요

분야	사업명	예정사업 기간	사업비	비고
산업 · 경제	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	2018~22년	3,000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미래기술융합센터·테스트 베드 구축	2018~22년	500	민자 100억 포함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2018~22년	1,684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	2017~22년	2,000	추후 중국자본투자 2~4조원 예상
	서해 해수담수화사업 집적단지	2018~27년	9,600	
	국방산업단지 개발	2016~20년	806	현재 설계비 5억 투입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2018~23년	2,500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2017~22년	389	
	소계		20,479	
교통 · 물류	장항선 복선전철화 조기 추진	2018~22년	6,765	
	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 추진	2019~24년	18,760	'18년 기본계획비 50억 반영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2019~미정	42,700	충남 신설구간 170.85km 반영

분야	사업명	예정사업 기간	사업비 (억원)	비고
교통 · 물류	천안역 개선사업	2018~21년	170	천안역 증개축만 포함, 기타 지역개발은 별도
	독립기념관 수도권전철 연결	2018~미정	3,300	
	당진~아산 고속도로	2018~미정	10,702	천안~아산구간 기착공(2015.2월)
	국도 38호노선 연장 및 교량 건설	미정	2,000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2018~23년	2,235	
	해삼산업 복합단지	2018~20년	5,210	세부 15개사업로 구성
	당진 복합물류단지	2016~20년	1,320	
	소계		93,162	
환경 · 안전	안흥항 내진보강	2018~20년	120	여타 충남 국가어항 내진보강 순차 시행 필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시설 확충	2018~	655	긴급 및 일반보수 구간 우선 비용
	금강 생태복원 클러스터 조성	2018~미정	6,800	전체 사업중 시설비만 계상
	외연도항 재정비	2019~24년	327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 연결	2018~21년	830	
	충남지역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018~21년	448	5개 시·군 대상
	소계		9,180	
문화 · 관광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사업	2017~38년	10,370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2017~26년	2,129	충남지역 11개사업만 반영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018~	3,300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해양 라이프케어단지 조성사업	2020~25년	1,000	
	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	2018~22년	400	
	태안 해상관광테마특구 조성사업	2018~21년	1,560	
	소계		18,759	
주거 · 도시	AI 구제역 체험형 교육홍보센터 건립	2018~20년	140	
	4차 산업 대응인력 양성센터 건립	미정	1,500	'18년 기본계획비 50억 반영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2018~	2,000	도시재생 지역단위개발사업의 평균 사업비를 바탕으로 추정(20억)
	국립 해양수산대학교 건립	2018~25년	552	
	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설치	19~20년	200	
	소계		4,392	
총계			145,972	

표 7-31 (계속)

본 연구의 인프라  
프로젝트 개요

### 3. 부문별 프로젝트 요약 및 기대효과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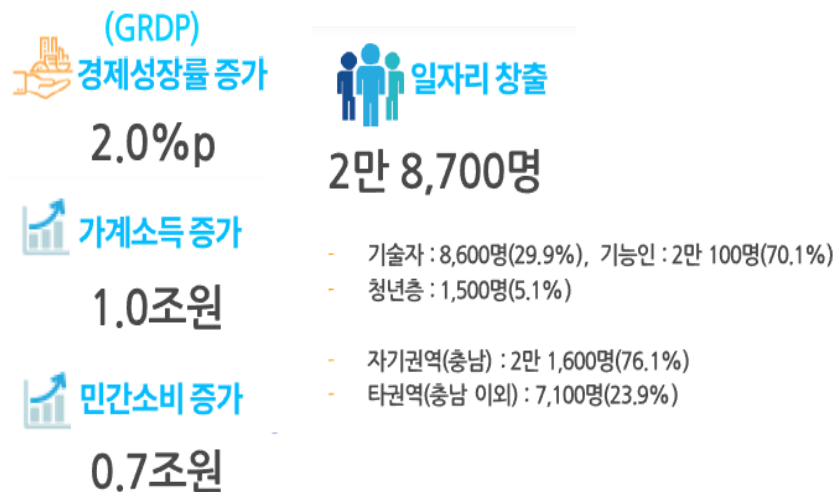
#### 부문별 프로젝트 요약 및 기대효과

#### (2)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프라 정책 및 프로젝트 추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14.6조원의 인프라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20만 1,030명으로 추정되며 투자예정기간인 7년간 연평균 2만 8,700명의 일자리 창출 가능
- 보다 구체적으로 인력의 창출 효과를 구분해 보면, 기술자의 일자리 창출은 연평균 8,600명, 기능인력은 20만 131명임. 특히, 해당 인력 중 청년층 인력의 일자리 창출은 1,500명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에서 동일한 금액의 인프라 투자로 인한 투자기간 7년간의 연평균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2.0%p 기대
- 또한, 14.6조원의 인프라 투자 증가로 인한 가계소득의 증가분은 7년간을 기준으로 연평균 1.0조원으로 추정되며, 민간소비지출은 0.7조원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되었음.

그림 7-54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주 : 취업유발계수는 한국은행(2017), 2014년 기준 지역사업연관표 이용 추정

## ※ 충남 경제비전 2030 관련 100대 중점사업

전략	중점사업
1. 청년 혁신 인재 양성	충남 청년조례 제정 및 청년위원회 조성
	충남 유스개런티(청년 보장) 추진
	청년 창의 공동체 C.Camp(Creative Chungnam) 조성
	청년 공유형 주거공동체 조성
	청년 혁신 디딤돌(근로+교육) 일자리 창출 사업
2. 인재와 일자리 선순환 환경 조성	지역산업 맞춤형 공동훈련기관 확대 및 다양화
	충남형 인재 발굴
	단계별 충남 표준임금체계 구축(로드맵 및 시범사업 추진)
	충남 여성 HRD정책 총괄시스템 구축
	충남 시니어 소상공인 성공창업 통합지원사업
3. 다변화된 미래성장산업 육성	전문직 은퇴자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재능기부)
	향토자원기반 6차 산업화 및 농촌창업 지원
	ICT기반 스마트 팜 구축
	로컬푸드 종합가공 유통센터 및 실물공장 구축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기반 구축
	미래에너지 충남 수소경제사회 구현 기반 구축
	수소에너지 자립항구 시범사업
	친환경 에너지산업 벨트 조성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사업
	주민참여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시범사업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 허브 구축사업
	고감성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클러스터 구축
	철강소재 고품질화 및 가공지원 플랫폼 구축
	고기능성 화학소재 개발 및 R&BD집적화단지 조성
	해양헬스케어 시범단지 조성
	수생바이오매스 실증단지 추진
	해삼융합양식클러스터 구축
	의생학연구센터 구축
	디자인 중심의 생활경공업 기업 투자 유치
	식품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동물 식의약 신제형 플랫폼 구축
	바이오 건강노화 산업 육성
	인공지능(AI)테스트 플랫폼 활용지원 센터 구축
	충남 ICT 융합 문화콘텐츠 센터 운영
	충남 문화디자인 융합전략센터 조성
	지식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및 집적화 지구 조성
	본사 이전기업 지원제도 마련

표 7-32

충남 경제비전  
2030 관련 100대  
중점사업

3.  
부문별  
프로젝트  
요약 및  
기대효과

### 3.

#### 부문별

#### 프로젝트

#### 요약 및

#### 기대효과

표 7-32 (계속)

충남 경제비전  
2030 관련 100대  
중점사업

전략	중점사업
4. 효과적 기업지원체제 구축	충남 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 지원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충남 북부권 지식산업서비스특화지구 조성
	세종-천안-청주 연구개발 특구 조성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TIPS 프로그램 운영 사(창업기업사) 유치
	지역기반의 적정기술 개발 및 사업화 추진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기술 통계기반 구축
	중소중견기업 대상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시장친화적 정책금융제도 개선
	도민간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및 재도전 펀드 조성
	시군 단위 서민금융 상담창구 개설
	충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영업점 확대
5. 행복한 삶을 이끄는 정주환경 조성	중소기업제품 품질 향상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전원형 전문가 마을(혁신빌리지) 조성
	가로림만 고품격 전문지식인 종합정주타운 조성
	상생산업단지 사업 확대 추진
	지역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관리계획 수립
	농공단지 리모델링 사업
	주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행복더하기학교
	자립형 마을 복지 행복마을 사업
	충남 전역 긴급 응급의료 체계 구축
6.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관광 육성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백제역사문화도시 사업
	동아시아 문명교류길 조성
	3대 문화권(내포, 유교, 백제문화권) 개발 및 지원
	서해안-금강 L자형 생태휴양관광벨트 조성
	동아시아 이동철새 및 갯벌관광허브 조성사업
7. 서민경제와 공동체 경제 지원	아름다운 관광 미향 조성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마케팅 사업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 플랫폼 조성
	특색있는 전통시장 만들기
	명품 골목상권 조성



전략	중점사업
8. 시군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개편
	시군 단위 경제산업발전전략 수립 및 컨설팅 지원
	(천안) 바이오/문화, K-뷰티테마파크 조성
	(공주) 문화/관광, 역사·문화 도심재생사업
	(보령) 관광/휴양, 머드랜드 조성
	(아산) 연구/개발, R&D연구개발 융복합집적지 조성
	(서산) 자동차/물류, 자동차 산업클러스터 조성
	(논산) 국방/과학,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계룡) 국방/과학, 국방모범도시 조성
	(당진) 철강/레저, 왜목항 거점 마리나 조성
	(금산) 인삼/건강, 인삼·약초 허브 조성
	(부여) 문화/관광, 역사문화 중심 관광도시 조성
	(서천) 해양/관광, 해양 수산 기능성 소재 산업육성
	(청양) 바이오/관광, 자연 생태 녹색 관광거점 조성
	(홍성) 문화/컨벤션, 내포 복합문화레저타운 건립
	(예산) 문화/관광, 예당호 착한농촌체험 세상
	(태안) 해양/관광, 만리포 관광거점 조성
9. 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 촉진	아산만권 아시아 투자산업지역 조성
	외국인전용산업단지 조성
	외국인 정주여건 확충
	창업 및 중소기업 아시아 시장 개척 지원
	대북 교류협력 시범사업 추진
10. 세계와 연결되는 하늘길 바닷길 조성	당진항, 대산항, 보령신항 3대 특화항만 조성
	서산비행장 민항기 취항 및 국제항로 개설
	당진 대산항 고속도로 건설
	제2서해안, 보령-울진,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당진-대산항 인입철도 및 서해안 복선, 서해산업철도
	시군간 연결 국도 확포장

표 7-32 (계속)

충남 경제비전  
2030 관련 100대  
중점사업

3.  
부문별  
프로젝트  
요약 및  
기대효과

○ 사업 추진 배경

- FTA·TPP, 중국의 뉴노멀화 등 세계경제의 다변화에 따른 충남지역의 산업 거점 재창조 필요성 증대
- 국가 차원에서도 산업 혁신 창출을 위한 산업 및 R&D 인프라 확충 필요성 증대
- 이를 위하여 충남북부와 수도권의 아산만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산업거점 육성 및 산업/R&D 인프라의 확충

○ 사업 내용

- 서산(가로림만)~천안·아산(경기남부)을 연계하는 아시아 최고의 산업집적지 조성
  - 7개 산업단지 특성화된 한중경제협력단지 벨트 구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등 인프라 확충

표 7-33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

단지명	면적/천㎡	특화업종	기간	비고
대산석유화학	15,610	석유·수소·유기화학	'18~	60개사
석문국가	12,017	금속소재 및 레저(관광)	'15~	
송산일반	19,360	금속소재 및 철강	'16~	아산국가, 현대제철, 당진철강
인주일반	3,407	지능형 자동차 부품	'15~	
탕정일반	4,471	디스플레이(OLED)	'18~	삼성(아산디스플레이시티 1, 2)
천안3일반	2,329	비금속 광물 및 화학제품	'15~	
천안5일반	1,511	전기전자, 이차전지	'15~	

- 대산항·당진항 항만확충 및 항만과 연계된 다수단(Multi-Model) 내륙 교통망 확충
  - 당진항 석문부두 3선석(3만톤급 2, 5만톤급 1), 송산부두 2선석(3만톤급 1, 5만톤급 1)
  - 당진항 서부두(내항) 13선석(일반부두 9선석(3만톤급 9), 다목적부두 4선석(2천TEU급 4) 및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여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과 배후 산업 활성화
  - 대산~당진, 당진~천안 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대산항·당진항 인입 철도 등 연계 교통망 확충
  - 장기적 서산비행장 민항기 취항 및 중국과의 열차페리 및 해저터널



그림 7-55

아산만 프로젝트  
개요

- 천안아산 거점을 중심으로 북부권 지식산업서비스 특화지구 조성
  - 창업 후 벤처기업 공간조성(지식산업혁신센터 500실) 및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 과학벨트 기능지구 SB-Plaza와 연계 R&D 혁신 거점화 추진
- 충남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재도전 펀드 조성 등의 창업·벤처, 산학연 인프라 확충
  - 지역내 창업과 기술사업화, 기술교류 등 산학연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3.  
부문별  
프로젝트  
요약 및  
기대효과

### 3.

#### 부문별 프로젝트 요약 및 기대효과

R&D 창출 사업화 모델 발굴

- 충남도 R&D 로드맵 수립, on-line 과학기술정보시스템 구축, 산학연관 니즈-시즈 매칭데이 운영 등 R&D 산학연관 생태계 기반 마련

- 기업가정신혁신센터 운영 및 창업지원

-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자, 대학의 「글로벌 기업가센터」졸업자(청년창업자 등) 등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 및 글로벌 CEO 육성

표 7-34

아산만 프로젝트  
관련 사업 현황

No.	사업명	비고
1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기반 구축	2,500억, 예타 추진중
2	미래에너지 충남 수소경제사회 구현 기반 구축	
3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 허브 구축사업	
4	고감성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클러스터 구축	
5	철강소재 고품질화 및 가공지원 플랫폼 구축	
6	고기능성 화학소재 개발 및 R&BD집적화단지 조성	천안아산 3,200억
7	충남 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 지원	
8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9	충남 북부권 지식산업서비스특화지구 조성	
10	세종-천안-청주 연구개발 특구 조성	
11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12	TIPS 프로그램 운영 사(창업기업사) 유치	
13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기술 통계기반 구축	
14	중소중견기업 대상 히든 챔피언 육성사업	
15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16	아산만권 아시아 투자산업지역 조성	
17	외국인전용산업단지 조성	
18	외국인 정주여건 확충	
19	창업 및 중소기업 아시아 시장 개척 지원	
20	당진항, 대산항, 보령신항 3대 특화항만 조성	1조 9075억원
21	서산비행장 민항기 취항 및 국제항로 개설	
22	당진대산항 고속도로 건설	6,631억원
23	제2서해안, 보령-울진,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6조 7,896억원
24	당진-대산항 인입철도 및 서해안 복선, 서해산업철도	

- 총사업비는 17조 4,3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23개 사업 중 19개 사업이 추진 중

### ○ 사업 추진 배경

- 기후 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 미래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육성 필요성 증대
- 미래 자원인 해양신산업의 발굴과 육성 필요성 증대에 따라 지리적으로 충남의 에너지 및 해양신산업 육성 최적지로서 부상 예정

### ○ 사업 내용

- 지역산업과 연계한 융합형 수소산업 육성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 FCEV(Fuel Cell Electric Vehicle,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시험인증센터(예산), 부품기술개발지원센터(천안), 수소스테이션(5곳) 구축, 수준별 인력양성, 개발부품 탑재 차량실증 등. 총사업비는 2,324억원(2017~2021)임.
  - 청정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기반 구축 및 Complex 시범단지 조성 등 → 총사업비 324억원
- 충남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 충남 수소경제사회 구현전략 수립 → 수소경제사회 미래상 제시, 전략 및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016년)
  - 수소경제사회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5억원) →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분야별 전구가로 “Hy! 충남 수소포럼” 구성, 수소생산·저장·이용 기술 개발을 위한 산악연 연구협약 추진,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친환경·탄소저감형 에너지 생산체계 구축
  - 화력발전 소재 부품, 연관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대소형 발전

### 3. 부문별 프로젝트 요약 및 기대효과

부품 소재 산업단지 구축 및 Pilot-plant 추진

- 화력발전 설비 및 부품 소재 분야의 CO2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 청정화력 및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유치 및 에너지산업 산학 협력체계 구축

- 화력발전설비 연계 인력양성 및 관련 신산업 육성

- 차세대에너지 R&D 플랫폼 구축 및 마이스터고 유치 등 인력 양성
- 화력발전소 폐열을 활용한 복합산업(미세조류, 바다온실) 육성 → 수생바이�매스 실증단지 조성 : 생산기지, 기술지원센터, 생산지원센터 등의 테스트베드 구축

그림 7-56

청색산업 육성 프로젝트



- 국립생태원 및 해양자원기반의 생태해양산업 R&D Complex 조성

- 의생학 연구센터 건립 및 팍랩 운영 및 지원, 해양 신소재 R&D 산업집적지 조성(※자연의 동식물을 용내내어 친자연적 화합물이나 소재 연구)

- ICT 융복합 해삼양식플랜트 구축을 통한 동북아 해삼클러스터 조성
  - 갯벌(전국의 14.4%)과 간석지(57,415ha, 전국대비 88%)를 활용한 ICT융합 양식플랜트 조성
  - 종묘에서 가공까지 전단계 산업화 기반 확충, 국제 해삼도매시장 개설 및 인삼연계 유통허브 조성
- 해양치유(헬스케어) 산업 기반 조성
  - 해양자원 활용 휴양·치유·건강증진 공간(헬스케어타운) 조성 및 해외 관광객 유치 추진(안면도관광지, 태안관광레저기업도시,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등 주요 거점 해안휴양도시 연계)
  - 해양헬스케어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2016년 추진)
- 서해안 및 내륙을 연계하는 관광벨트 조성
  - 가로림만~천수만~금강을 연계하는 거점 연계형 서해안 관광레저산업 육성
  - 「국가 거점 마리나항만」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거점으로 육성 및 「국제적인 해양레저스포츠」 중심 지구 육성

No.	사업명	비고
1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기반 구축	2,500억원
2	미래에너지 충남 수소경제사회 구현 기반 구축	
3	수소에너지 자립항구 시범사업	
4	친환경 에너지산업 벨트 조성	
5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사업	
6	주민참여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7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시범사업	
8	해양헬스케어 시범단지 조성	
9	수생바이오매스 실증단지 추진	
10	해삼융합양식클러스터 구축	
11	의생학연구센터 구축	
12	가로림만 고품격 전문지식인 종합정주타운 조성	
13	백제역사문화도시 사업	
14	동아시아 문명교류길 조성	
15	3대 문화권(내포, 유교, 백제문화권) 개발 및 지원	
16	서해안-금강 L자형 생태휴양관광벨트 조성	
17	동아시아 이동철새 및 갯벌관광허브 조성사업	
18	아름다운 관광 미향 조성	

표 7-35

청색산업 육성  
프로젝트 관련  
사업

3.  
부문별  
프로젝트  
요약 및  
기대효과

#### ○ 사업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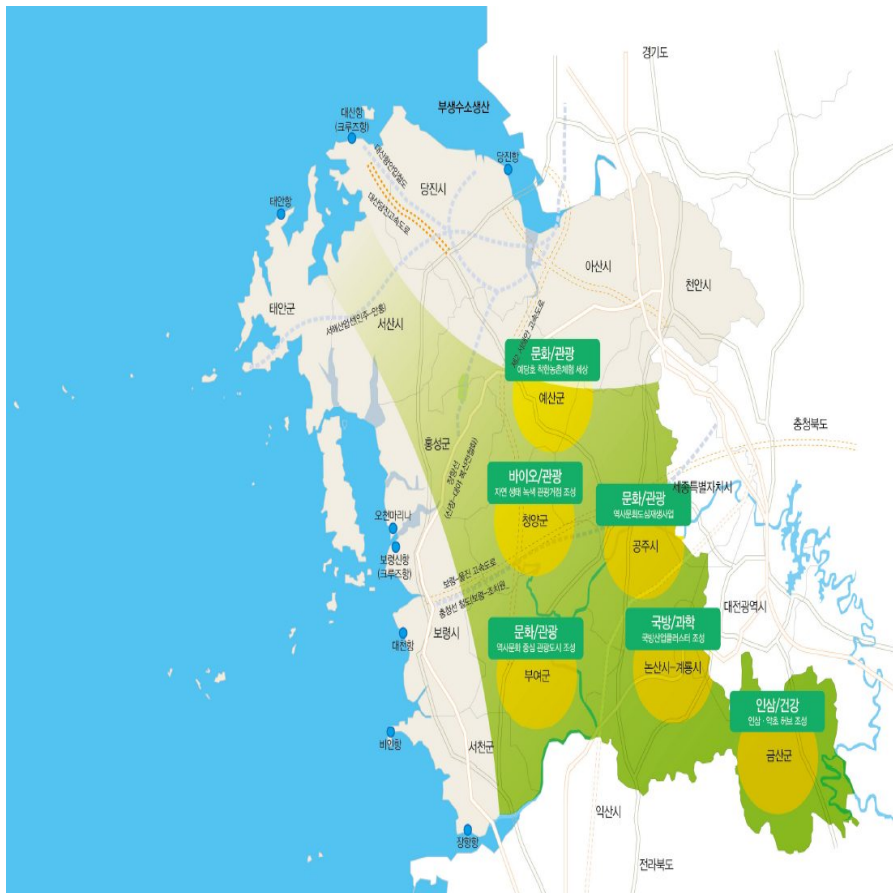
- 도시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원형 정주-복지체계의 모색 필요
- 충남지역의 특화된 경제체계의 구축과 육성 모색

#### ○ 사업 내용

- 귀촌 문화예술인·과학기술인 등 지역참여 전원형 혁신빌리지 조성
  - 공동 공간 및 전시/예술 창작활동 등의 커뮤니티형 혁신빌리지 조성 및 신개념 업무지구로서의 새로운 복합주거문화단지 조성
  -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거주와 업무, 휴양과 레저가 복합된 신개념의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금융 등의 전문가단지 조성)
  - 다큐마을(Docs Village) - 다큐멘터리 감독마을 시범사업 추진
- 주거, 보건-복지, 교육, 환경 등의 지역에 대한 패키지 정주환경 개선 지원
  - 깨끗한 충남만들기(216~2021 / 1,006억원), 도랑살리기(도랑 60개소 복원, 9억원, 2016년),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확대 추진
  -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더하기 학교 추진
  - 자립형 마을복지 행복마을 사업(보건-복지통합사업) 및 충남 전역 긴급의료체제 구축
- 공동체 경제지원을 위한 충남 사회적경제 플레임스 조성 및 아카데미 운영
  - 사회적경제 소셜프렌차이즈 모델 발굴, 사회적경제 상설 프리마켓 형성 등 사회적 기업들이 융합과 협업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공간 조성
  - 학생, 주민 등 일반인, 종사자·전문가를 위한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및 관



- 지역기반의 적정기술 발굴 및 사업화 유도
  - 충남적정기술에너지한마당 개최 지원, 교육 지원, 시범사업 지원
  -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적정기술 확산추진활동을 추진, 적정기술 도입 마을(가칭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 시·군별 지역특생에 맞는 3농 혁신 특화사업(지역혁신모델) 개발 및 추진
  - 읍면단위 지역 혁신사업 및 지역농협 구상 등의 지역특화모델 개발 및 추진(2016년)



-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공익활동가 양성 및 지원
  - 기관 및 단체(농어촌 마을, 도시재생지구, 전통시장, 기업)등의 프로젝트

### 3.

#### 부문별 프로젝트 요약 및 기대효과

표 7-36

#### 행복공동체 프로젝트 관련 사업

제안 및 일자리 수요 제안을 바탕으로 청년혁신가 창며·지원(지자체 임금 지원)

- 마을기획, 홍보, 코디네이터, 기업, 마케팅, 홍보, 기획 등의 분야에서 일터 기반 학습

No.	사업명	비고
1	향토자원기반 6찬산업화 및 농촌창업 지원	2,500억원
2	ICT기반 스마트 팜 구축	
3	로컬푸드 종합가공 유통센터 및 실물공장 구축	
4	식품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5	지역기반의 적정기술 개발 및 사업화 추진	
6	충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영업점 확대	
7	중소기업제품 품질 향상 및 디자인 개발 지원	
8	전원형 전문가 마을(혁신빌리지) 조성	
9	가로림만 고품격 전문지식인 종합정주타운 조성	
10	상생산업단지 사업 확대 추진	
11	지역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관리계획 수립	
12	농공단지 리모델링 사업	
13	주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행복더하기학교	
14	자립형 마을 복지 행복마을 사업	
15	충남 전역 긴급 응급의료 체계 구축	
16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17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마케팅 사업	
18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 플랫폼 조성	
19	특색있는 전통시장 만들기	
20	명품 골목상권 조성	

## 제8장 정책과제 및 시사점

### 1. 인프라 투자역량 및 투자확대를 위한 제언

#### (1)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재원 확보

##### 1)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재원 확보의 필요성<sup>63)</sup>

- 2018년도 정부 예산 총액은 428.8조원으로 전년대비 28.3조원(7.1%)이 증가하였으나, SOC 예산<sup>64)</sup>은 19조원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감소(-14.2%)하였음.
  -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아동수당 신설 및 노인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소득주도 성장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함.
  - 이에 반해 도로, 철도와 같은 SOC 시설, 수시시설 개·보수와 같은 농업생산 시설, 하수관로 정비 등의 환경기초시설 등은 구조조정을 통해 큰 폭으로 감축됨.
- 반면, 앞선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충청남도는 인프라 투자와 지역경제 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민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확충을 요구하고 있어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63) 한국건설산업연구원(미발간), 경기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연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실정에 맞게 재작성함.

64)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체계 상 인프라 시설 사업과 관련된 예산 총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기에 부문 기준 SOC예산(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부문)을 기준으로 제시함.

# 1. 인프라 투자 역량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

- 그러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sup>65)</sup> 상의 SOC 예산에서는 연평균 7.5%씩 축소시켜 2021년에는 16.2조원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기에 향후 국가재정을 활용한 대전시의 인프라 투자재원 마련은 요원한 상황임.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정부는 2017~2021년 기간 동안 SOC 예산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3이 삭감시킬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21년 SOC 예산 규모는 사회복지 예산의 1/10 수준으로 위축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지방재원 또한 전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 등 타 분야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되면서 SOC 예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현 체계 내에서의 향후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자체 재원 조달은 어려운 상황임.
- 최근 7년간(2011~2017년) 충청남도의 전체 예산은 연평균 3.8% 증가하였으나,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연평균 0.2%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의 경우에는 연평균 5.6%p씩 감소하였음.
- 충청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년)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SOC 분야(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예산은 전체 재원의 약 8.3%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 이는 전국 평균 16.7%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의 제한적 투자만이 계획되어 있음.
- 그러므로 7장에서 제시한 핵심 인프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시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 지역 인프라 사업의 투자 재원은 중앙정부 재원, 중앙정부의 보조와 함께 투입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민간자본 등으로 구분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 재원별 투자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음.

65) 대한민국정부(2017),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2)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 자원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과제

### ① 중앙정부 SOC 예산의 적정 수준 유지

- 국토교통부 SOC 예산상의 신규사업 예산은 2012년 5,624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15년 이후에는 신규사업 예산이 1,000억원 대에 머물러 있으며, 2018년의 경우에는 383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단위: 건, 억원)

구분	전체		도로		철도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78	5,624	24	683	-	-	-	-
2013	96	2,506	33	1,055	4	175	59	1,276
2014	82	2,072	17	153	6	345	59	1,574
2015	28	1,898	24	846	4	1,052	-	-
2016	45	1,030	22	359	2	221	21	450
2017	60	1,845	22	1,080	6	269	32	496
2018	32	383	3	6	-	-	29	377

자료 : 국토교통부 각 연도별 보도자료

표 8-1

SOC 예산상  
신규사업 예산  
편성 추이

-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통 및 물류 부문의 투자확대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지역의 핵심적 사안임.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교통·물류시설들은 대부분 국가가 주도해야 할 사업으로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만이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임.
- 더구나 교통 및 물류 부문은 대부분 광역 간을 연결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지역인프라 사업이기에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SOC 투자 정책의 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대통령 공약 사업을 포함한 지역 핵심사업의 추진 및 적정 기한 내 완료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신규 SOC 재정투자의 확대는 필수적임.
- 정부의 급격한 SOC 예산 축소는 지방자치단체의 SOC 사업을 위축하는 부

## 1. 인프라 투자 역량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

정적 연쇄효과가 불가피하기에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해 안정적 SOC 재정투자가 유지되어야 함.

## ②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존치

- 교통 인프라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1994년 목적세인 교통세로 도입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8년 12월 31일 폐지될 예정임.
  - 정부는 2012년 목적세 폐지 방침에 따라 교통세뿐만 아니라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였지만, 교육세는 영구세로 전환되었고, 농어촌특별세는 2024년 6월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도입될 때에는 2.5조원이 징수되었다가 2016년 14.2조원(예산안 기준) 규모로 확대됨.
  - 2007년부터 세수의 80%는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 15%는 환경개선특별회계, 3%는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2%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입됨.
  - 교통 인프라 시설 투자에 사용되는 교특회계는 2016년에 16.4조원<sup>66)</sup> 규모로 교특회계 예산의 평균 80% 이상이 교통·에너지·환경세로부터 전입됨.
- 이렇듯 교통 인프라 시설 투자에 사용되는 교특회계 재원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폐지될 경우 교특회계의 핵심 재원이 없어지므로 지역 인프라의 핵심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는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의 투자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은 자명함.
-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지속적 존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지역 핵심 교통인프라의 계속적 확충과 정비를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안정적 재정 확보 장치가 필요함.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조세 체계는 단일세로 농특세나 교육세와 같이 다른 세액에 부과(sur-tax)하지 않으며, 세입과 세출의 연계가 어느 정도 일치하기에 목적세 고유의 기능을 유일하게 발휘하고 있음.

66) 기획재정부(2016), 2016 나라살림

- 미국, 독일 등에서도 SOC 예산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1950년대부터 현재 까지 목적세를 유지하고 있음<sup>67)</sup>.

### ③ 예비타당성조사 방식 개선

- 지역 핵심 인프라 사업의 상당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수행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상당부문 포함되어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로 작용 중임<sup>68)</sup>.
-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에 적용되는 방법론과 기본 가정들은 매우 중요하나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경제성분석 기간의 결정, 사회적 할인율 수준, AHP설문 대상의 범위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항목들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또는 검증 절차가 부재함.
  - 건축물의 내용연수(40~50년)에 비해 타당성분석의 내용연수(도로 및 철도 평균 30년)가 너무 짧으므로 편익이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이에 따라 평가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학계, 전문가, 정책담당자, 시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설물 종류별 성능(효율성)지수를 측정하고, 성능이 미달되는 분야/지역부터 투자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상향식 투자 의사결정 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도로의 경우 구간별 속도, 안전도, 쾌적성 등의 성능지수를 실사를 통해 측정하여 성능이 미달되는(정체, 노후화 또는 사고위험) 구간부터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가는 방식을 뜻함.

67) 미국은 1956년부터 연료세, 자동차세, 타이어세를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운영 중, 독일은 1955년부터 휘발유세,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운영 중임.

68)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건설분야)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으로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함. 기획재정부(2017), 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④ 지역 인프라 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 지역인프라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완공되기를 원하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추진을 활성화해야 하는 사업적 특성을 갖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업(국가직접시행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스스로의 가용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역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sup>69)</sup>는 2003년 56.3%에서 2017년 51.1%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재정자립도<sup>70)</sup>의 경우에도 2003년 84.9%에서 2017년 74.9%로 하락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2016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5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243개 중 11개로 4.5%에 불과한 실정이며, 95.5%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59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과 같은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중 지역개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자체사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국고보조사업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여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예산구조 추이를 보이고 있음.

69)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 (자체수입/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100%

70)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음, {(자체수입+자주재원)/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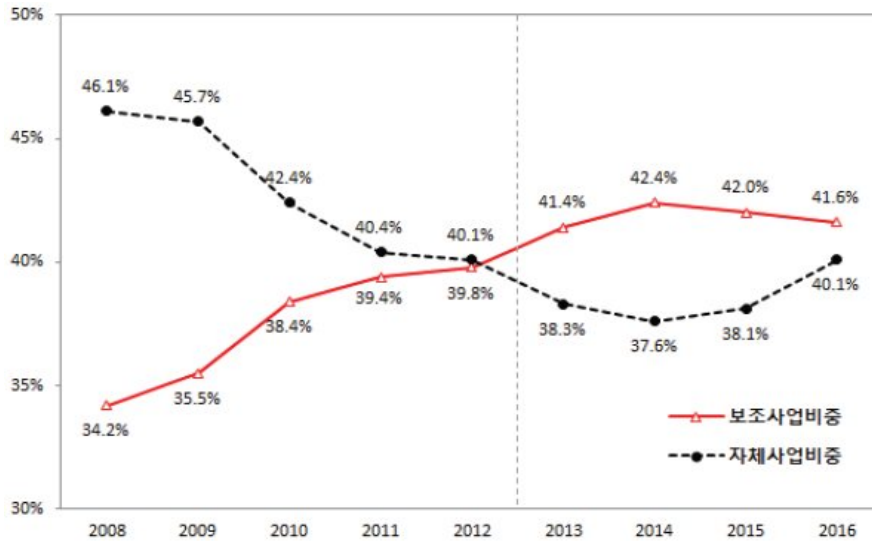


그림 8-1

지자체 자체사업  
대비 보조사업  
비중 추이

주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순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계산

자료 : 행정자치부(지방재정연감) / 하능식 외, 중장기 지방세제 발전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6

- 더구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정 후에도 지방(지방교육 포함) 실질재정사용액(재정지출책임성)은 58.1%에 불과하여 재원조달과 재정지출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임.
  - 2015년 기준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75.4 : 24.6으로 재원조달 책임성인 지방세 비율은 24.6% 수준임.
-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인프라 개발 사업에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해당하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신규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1. 인프라 투자 역량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

# 1. 인프라 투자 역량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

표 8-2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대상 지자체  
사업의 재원조달  
현황

지역	사업명	총사업비 (억원)	재원조달(억원)					
			국비	시(도)비	군(구)비	민자	채권	기금
서울	통합선착장 조성	300	150	150	-	-	-	-
부산	식만~사상간 도로건설사업	3,132	1,396	1,736	-	-	-	-
대구	대구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치크로그리드 구축사업	490	265	30	-	195	-	-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1,197	762	141	-	-	77	217
(동구) 인천	북합문화체육센터 건립	324	100	75	146	-	-	-
광주	용두-담양대전간 도로확장	300	77	223	-	-	-	-
경기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403	300	100	3	-	-	-
	(수원) 수원야구장 리모델링	470	135	57	278	-	-	-
강원	(정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41	120	24	97	-	-	-
충북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1,184	-	70	160	954	-	-
충남	(천안) 천안지역단위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 설치	228	140	10	10	68	-	-
전북	(전주) 서곡광장~송천동간 중로(1-10) 개설공사	378	-	5	303	-	70	-
경북	(포항) 구 포항역~효자역 구간 폐철도부지 공원화	132	50	15	67	-	-	-
	(안동) 경북 생강 출하조절센터 건립	290	60	18	42	170	-	-
경남	(밀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50	120	10	11	-	-	9
제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	440	264	132	-	-	-	44

자료 : 지방재정365

- 이러한 현실을 종합 고려할 때,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역인프라의 개선 및 확충 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의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배분에 있어 재정력이 낮거나 저개발 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현행 국고 지원은 사업 유형에 따라 대체적으로 정률로 지원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차등적인 국비 지원<sup>71)</sup>으로 국고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

71) 국고의 차등 지원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재정 지표(재정 규모, 재정 자립도 등), 사회경제적 여건, 개발 낙후도, 사업의 국가적 중요도 등을 고려 가능함.

음<sup>72)</sup>.

유 형	상세 구분	지원 기준 및 내용	국가 재정 부담 비율
도 로	고속도로	신설/확장 사업비	50%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전액 지원, 보상비가 총공사비의 30% 초과시 초과분 보조	공사비
	광역도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도로	최대 50% (1,000억원 한도)
	대도시권 혼잡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공사비 50%
광역교통 시설	주차장, 공영차고지	광역 기능의 주차장 및 「운수사업법」 규정 상의 공영차고지	30%
철도	광역철도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	75%
	도시철도	도시교통 권역에서 건설·운영	60%(서울 40%)
공항	공항	공항시설	100%
항만	항만 배후도로	항만 이용 교통량 25% 이상, (B/C) 1.0 이상	최대 50%
	항만 기반시설	지원 가능 항목 및 지원 규정만 제시	지원 규정
산업단지	국가 산단	진입도로	100%
		용수시설	전액 지원 (접경지역 제외한 수도권 제외) 100% (2008년 이후 30%)
		하·폐수시설	전액 지원(면적 구분 없음) 100% (수도권 50%)
	지방 산단	진입도로	면적 30만㎡ 이상 산단, 수도권 제외 지원 기준 : (330만㎡ 미만) 신설 6km(4차로), 확장 6차로 / (330만㎡ 이상) 신설 8km(6차로), 확장 8차로 100%
		용수시설	
		하·폐수시설	전액 지원(면적 구분 없음) 100% (수도권 50%)
	농공 산단	진입도로	용지 매수비, 도로 포장 및 구조물
		용수시설	공동 이용 건축물, 전력통신, 용수, 기타 시설 지원 규정
		하·폐수시설	일바농어촌 50%, 추가지원농어촌 70%, 우선지원농어촌 100% 50~100%

자료 : 조남건·박종일(2013), 중앙과 지방의 인프라 투자비용 부담 체계 개선 방안, 국토연구원

72)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5), 지역 인프라의 실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표 8-3  
사업종류별  
국가재정분담비  
율 현황

## 1. 인프라 투자 역량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

더구나 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목적과 운영방식이 다르지만, 실제 운영 시에는 대부분 조건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sup>73)</sup>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담 능력이 없어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에 중앙정부의 부담비율 상향과 보조금 차등 지원 등의 현실적 대책 마련은 국토균형발전에 있어 꼭 선결해야 할 사항임.

### 3)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충남 차원의 정책과제

#### ①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성화<sup>74)</sup>

-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핵심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내지 공동의 노력 없이는 추진과 성공이 거의 불가능함.
  - 따라서 국가발전과 지역개발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 조정하고 계약방식을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성화 검토가 필요함.
- 이는 지역의 핵심 인프라 개발사업의 특성 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 이해관계나 관심이 큰 사업들로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임.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동반자적인 관계로 변하게 되고 투자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지역이 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하는 등 전략적 접근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
- 지역발전투자협약제 시행 시 해당 제도를 통해 시행되는 지역 인프라 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반영을 의무화함으로써 협약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약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발전사업에 대해 우선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함.

73) 특히 국고보조금의 경우 사업별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운영되어, 재정 지원의 불균형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안고 있음.

74) 이원섭(2011),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실천방안,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 ② 도시재생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운용

-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광역자치체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 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이에 따라 중앙정부(국토부)의 도시재생지역 선정 유무와는 별개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기에 전라북도 또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용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꾀하여야 함.

- 단,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유형이 다음과 같이 상이하기에 이를 종합 고려하여 충남 재정 현실에 적합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서울특별시는 도시재생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759억원을 사용할 계획임.
  - 서울특별시의 도시재생기금은 과밀부담금 시 귀속분 50%(주택사업특별회계 재충계정)를 통해 조성하였음.
  - 도시재생기금은 향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 1. 인프라 투자 역량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

에 의거한 거점공간 매입 및 활용, 주민협의체 추진 사업 등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사업지를 위해 사용될 예정임<sup>75)</sup>.

- 경기도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해 4,263.4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이중 사업을 위해 2,525.2억원을 사용할 예정임.
  - 경기도의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지역특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를 통해 조성함.
  -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경기도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sup>76)</sup>.

#### 4) 정부·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사업(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원 마련

-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은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을 위해 지난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음.
  - 2016년 12월 말까지 우리나라 전체에서 협약 체결 후 추진 중인 민자사업은 총 699건, 총 투자비 106조원 규모임.
  - 총 투자비 기준으로, 도로가 45.0조원(42.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철도 19.8조원(18.7%), 환경 14.0조원(13.3%), 교육 10.0조원(9.5%) 순임.
- 민자사업은 부족한 정부의 SOC 재원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지만, 현재 축소되어 사업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실정임.
  - 민자사업의 사업 건수 및 총 투자비 규모는 2007년 사업 건수 121건, 총투자비 10.6조원 규모에서 2016년 6건, 1조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됨.

75) 서울특별시의 도시재생기금 사용계획은 2018년 339억원 → 2019년 355억원 → 2020년 355억원 → 2021년 355억원 → 2022년 355억원이 예정됨.

76)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사용계획은 2018년 163.5억원 → 2019년 451.2억원 → 2020년 719.1억원 → 2021년 566.0억원 → 2022년 625.4억원이 사용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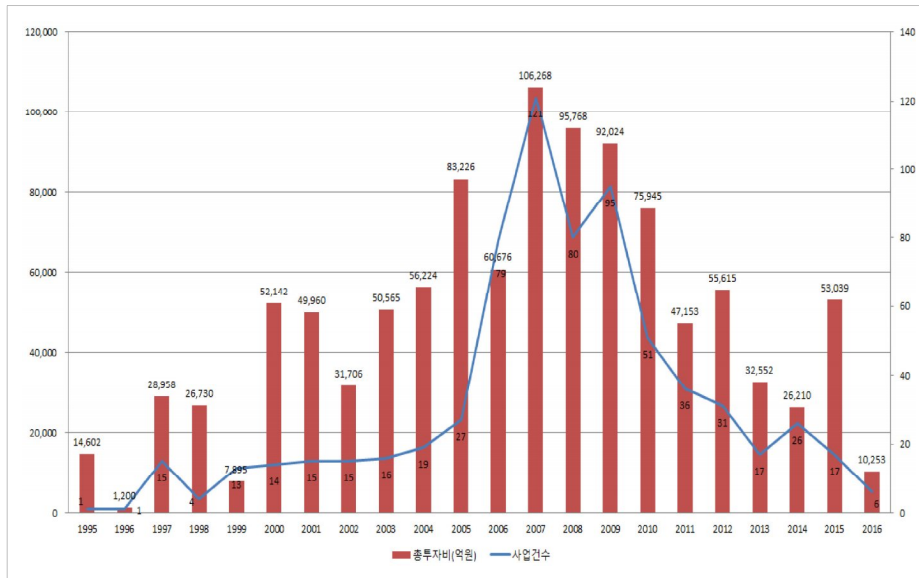


그림 8-2

민간투자사업  
추진 건수 및  
금액 추이

자료 : KDI 공공투자센터(2017), 2015년도 KDI 공공투자센터 연차보고서

- 이를 개선하고 민자사업 추진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 ① 민자사업 정상화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명확한 의지 표명(상호 신뢰구축)

- 불확실한 정부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정부와 지자체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민자사업은 장기 투자 사업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장기 투자를 유치할 수 없으므로 민자정책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필요함.

#### ② 민간투자 대상사업 기준 재정립

- 기존 민간투자 대상 사업은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이었으나,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이 필요함.
  -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 대상 시설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어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시장 환경을 법률을 통해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1.  
인프라 투자  
역량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

# 1. 인프라 투자 역량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

- 열거주의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모든 민자사업은 사전에 다양한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함으로 무분별한 민자사업의 추진은 충분히 제어 가능함.
-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모든 사업들은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이후에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BTL 사업의 경우는 주무 부처와의 협의와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사업 한도액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임.

## ③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 최근 BTO 사업에 대한 정부고시사업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투자 재원이 마련되어 있어도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이 고시되지 않아 민간투자가 일어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따라 풀링(Pooling)에 의한 전체 사업 평가와 민간투자 목표예산 사전 배분 절차에 의하여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꾸준히 고시하는 의지가 필요함.
-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구분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후에 적격성 조사(Value-for Money, VFM)<sup>77)</sup>를 통과한 사업에 한하여 일정 비율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형태로의 민간투자 목표예산 사전배분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당해 연도에 필요로 하는 총 SOC 투자 규모를 상정하고 목표예산을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식(재정:민자 = 80:20)

## (2) 인프라 사업 발굴 및 투자관리 조직 보완, 관련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

- 충남의 인프라 투자 정책을 발굴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이 필요함.
- 이는 인프라 사업 대부분은 계획 및 수립 주체, 추진운영주체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산하기관에 흩어져서 사업이 추진되기에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인프라 사업 발굴 및 투자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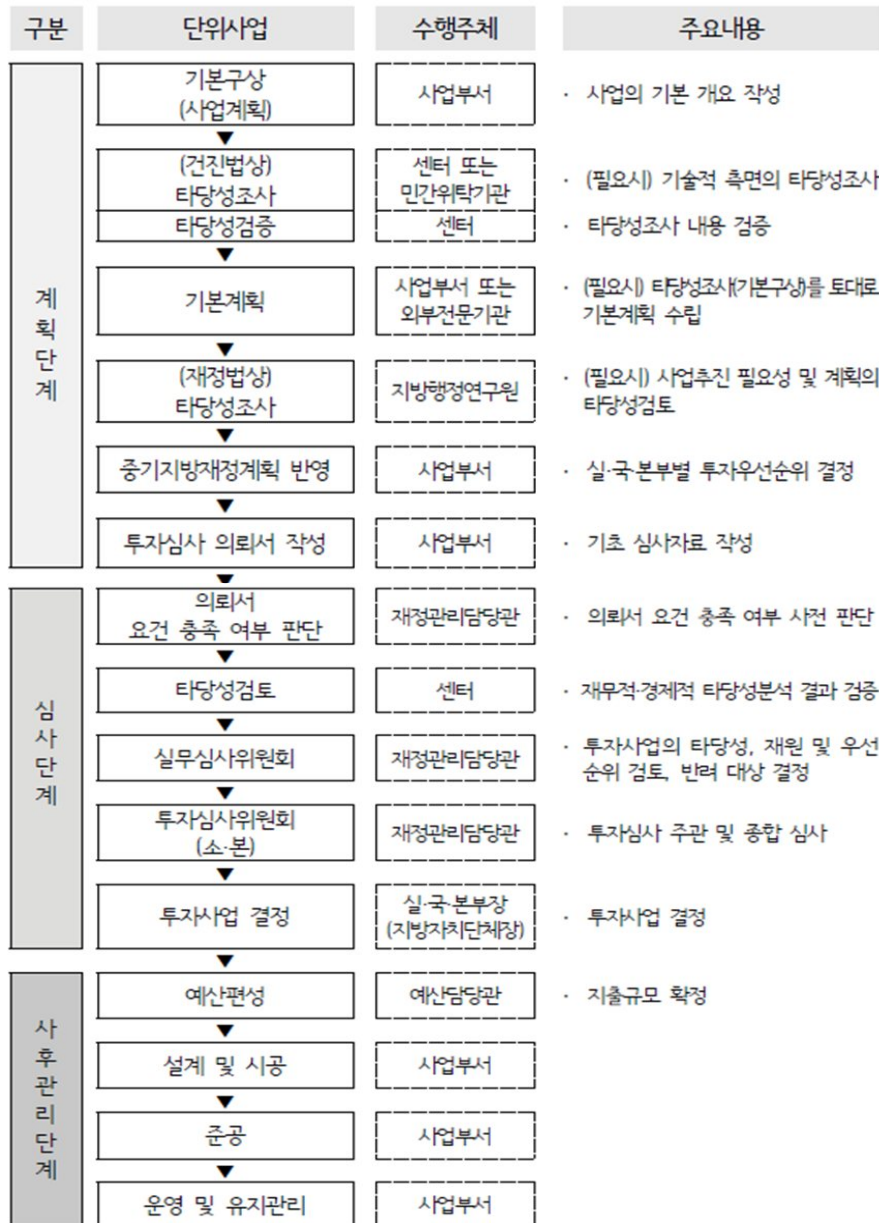
77) 정부실행 대안과 비교하여 민간투자 대안이 적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임.



-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 3월 기준 전국 7개 광역시·도에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가 운영 중임.
- 서울특별시의 경우 다음 <그림 8-4>와 같이 공공투자사업 추진절차 별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림 8-3

공공투자사업  
추진절차



자료 : 박영민·이세구(2015),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효율화 방안

1.  
인프라 투자  
역량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

# 1. 인프라 투자 역량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

-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각 센터별로 설립근거, 규모, 주요 역할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 근거가 조례에 규정된 곳은 3개소(서울, 부산, 제주)가 있으며, 조례를 통해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곳은 4개소(경남, 울산, 충북, 대구·경북)가 있음.
  - 조례에 의해 설립 근거를 갖추지 못한 지방공공투자센터의 경우에는 대부분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따라 조례상의 설치근거가 부재한 지방공공투자센터의 경우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조사 통과를 주요 지원 업무로 수행하는 상황임.
  -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운영은 검토하는 사업 단위의 용역비 형태로 예산이 지급되기에 수의계약이 어려우므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의견 개진에 한계를 안고 있음.
- 따라서 충남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조례에 근거해 설립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초기에는 충남연구원 산하 센터로 설립하여, 경상비 최소화 등을 꾀하는 것을 고려 가능하며, 조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인적 분할 방식으로 별도의 충남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추진을 꾀할 수 있을 것임.
  - 필요 시 경상남도과 대구광역시 사례와 같이 전라남도 등 인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련 센터 설립 추진 또한 고려 가능함.

## (3)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 진단과 재투자 실행체계 구축<sup>78)</sup>

- 노후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의 지원만을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 확보 노력이 필요함.

78) 한국건설산업연구원(미발간), 경기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연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충남의 실정에 맞게 재작성함.

- 다음은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 진단과 재투자 실행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가능 방안임.

#### ① 중앙정부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및 노후인프라 시설에 대한 관리 확대

- 2018년 3월 현재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이 의원입법으로 제안(2017.11.15.,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sup>79)</sup>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기반시설 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감독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반시설 유형별로 최소유지관리 기준을 설정·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또한 해당 법률에서는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함.
- 이 외에도 체계적인 인프라 시설 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관리주체에게 조사·진단, 보수·보강, 성능개선 비용 등을 보조·융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를 부과하는 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기반시설 사용자에게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성능개선 충당금의 경우 관리·운영 수익금, 일반회계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함.

#### ②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의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필요

- 2018년 3월 현재 서울특별시 및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는 다

79) 해당 법률에서 정의한 기반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공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고 시 광범위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14종(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여객터미널, 하천, 댐, 수도, 저수지, 하수도,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공동구)임.

# 1. 인프라 투자 역량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

음과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시설의 안전도 개선을 위한 조례를 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지역 내 위치한 인프라의 성능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sup>80)</sup>.

- 서울특별시('16.7.14. 제정) : 「서울특별시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 부산광역시('17.11.1. 제정) : 「부산광역시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 전라남도('17.11.2. 제정) : 「전라남도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17.12.27. 제정) :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표 8-4

지자체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촉진  
조례의 내용 비교

구 분	서울	전남	부산	대구
적용 대상 시설물	「시특법」 제2조제1호 시설물 및 간선 이상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 경과 시설물	「시특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중 30년 경과 시설물	「시특법」 제2조제1항 시설물,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와 부속물, 교통안전시설 등, 무인교통 단속용장비 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과 하천복개구조물, 하수도법에 따른 공작물 등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	규정	규정	실태조사는 규정, 보고서는 미규정	미규정
종합관리 계획의 수립	규정	규정	규정	‘종합관리계획’과 유사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규정
성능개선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규정	미규정	미규정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규정	규정	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있으나, 관리자를 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
의회보고	규정	규정	미규정	교통관리계획 수립 시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외 시설물은 미규정

-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충남의 경우 또한 노후시설물이 개별 시설물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나, 대부분 시설물이 노후시설물 관리 및 성능개선이 제대

80)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라남도 순천시가 최초로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를 지난 2017.3.31. 제정함.

로 이어지고 있지 않기에, 타 광역시·도 벤치마킹을 통한 해당 조례의 제정과 이를 통한 관리가 필요함.

③ 지방자치단체 : 특별회계 설치, 민자사업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우선 배정 고려

-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설안전 특별회계」 설치 검토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인프라의 안전 확보·성능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시설물 안전 및 성능개선사업에 민간투자사업 활용 확대 고려가 필요함.
  - 교량, 도로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개선(내진, 노후시설 개선) 사업 추진 시 민자사업 활용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음.
  - 학교시설 안전 및 성능개선사업의 경우는 학교 복합화 및 그린학교사업과 연계하여 BTL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함.
- 시설물 안전 및 성능개선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우선 배정이 필요함.
  - 도시철도, 도로 및 하수관로 등 시민생활에 직결된 주요 인프라 시설의 안전 향상과 성능개선을 위해 예산 항목 조정 검토 또한 필요한 범위만큼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4) 도시재생 사업 추진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 다변화 필요

- 현재, 중앙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주거문제 해소,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정부는 연간 100개로 5년간 500개소 추진을 목표로 연간 10조원(재정 2조원, 기금 5조원, LH·SH 등 공사 3조원)을 5년간 50조원을 투입할 계획임.
  - 2016년 16개 지역을 선정, 2017년 68개 지역이 선정, 2018년도부터는 매년 90~100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선정할 계획임.

1.  
인프라 투자  
역량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

# 1.

## 인프라 투자 역량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

표 8-5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구분

사업목표	노후 주거지 정비		구도심 활력 거점 조성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단독 주택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혼재	상업, 창업, 관광, 문화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면적(m <sup>2</sup> )	5만 이하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20만 내외	50만 내외
사업유형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선정주체	광역지자체			중앙(국토교통부)	

- 이에 따라 대부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관내 노후 도심지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재원의 제약이 있는 상태임.
- 도시재생사업은 특성상 사업기간이 길고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지만 회수는 사업후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특성을 갖고 있어, 공공과 민간의 조화된 협력과 공공의 안정적인 자원조달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앞서 제시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적극적 활용과 더불어 지자체 차원에서의 자주적 자원조달이 필요한 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자원조달에 대한 검토와 제도 신설이 필요함.

### ①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ing, TIF) 도입 검토

- TIF는 도시정비사업 내에서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재정기법임.
  - 노후도심지와 같이 공공이 지원이 없으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역에서 재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공공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임.
  - TIF는 특정지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공공재원을 그 지역이 개발되었을 경우 발생하게 될 미래 세수의 증가분을 활용하여 조달하는 방법임.
- TIF의 기본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sup>81)</sup>.
  - 특정구역의 재개발로 인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총세수를 예측하고, 재개발 이전부터 발생한 기존의 세수를 제외한 세수의 순증가분만을 일정기간 동

81) 이삼수 외(2013), TIF와 BID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자금조달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6집 제1호.

안 별도로 모아서 그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법임.

- 지방자치단체는 세수의 순증가분을 담보로 수익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하거나, 개발업자로 하여금 초기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한 후 개발 사업으로 증가된 세수입을 매년 개발업자에게 일정 부분씩 변제할 수도 있음.

- 195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는 TIF를 입법화하여 도시재생 사업에서 활용하고 있음.

- TIF는 1960~1970년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던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자원조달수단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달된 제도임.
- 세율을 높여 재원을 확충하는데 따른 조세저항을 피하면서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환경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할 수 있게 됨.

지자체	개 요
클라크카운티 (워싱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쇼핑센타를 건설하는 민간기업이 자치단체에서 간선도로와 연결하는 접근도로를 정비해주도록 요구</li> <li>- 자치단체는 도로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입채(Revenue Bonds)를 발행하여 조달하고 상환재원으로 쇼핑센타로부터 발생될 매상세 세수분을 이용</li> </ul>
데이븐포트 (아이오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지역의 도로, 편익시설의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아이오와주 경제진흥기금(RISE)로 부터 10년 상환조건으로 250만 달러 차입</li> <li>- TIF세수를 차입금 반환, 도로, 편익시설 공사에 충당하기 위해 TID설정(1986)</li> </ul>
프린스조지 카운티 (매릴랜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주차장 개선, 고속도로 개선 등을 위해 1980년 이후 10지구에 대해 TID를 설정, TIF수입을 담보로 일반보증채권으로 발행</li> <li>- TIF수입금도 채무상환에 한정되지 않았으며 일반재원으로도 충당, 1987년도 예산가운데 TIF수입 규모는 800만 달러 규모</li> </ul>
울란도 (플로리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재개발에 필요한 하수도, 교통시설 개량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재개발 트러스트 본드를 설립, 1,900만달러 규모의 수입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도심재개발지역에 569에이커 규모의 TID 지정</li> <li>- 1981년 1월보다 증가한 재산세의 95%를 기금으로 만들어 채권상환에 충당</li> </ul>

자료 : 고준환 외(1996), 외국의 도시계획·개발제도, 일본 도시개발제도 비교연구회 편, 국토연구원

- ② 저소득층주택 세금감면 프로그램(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 도입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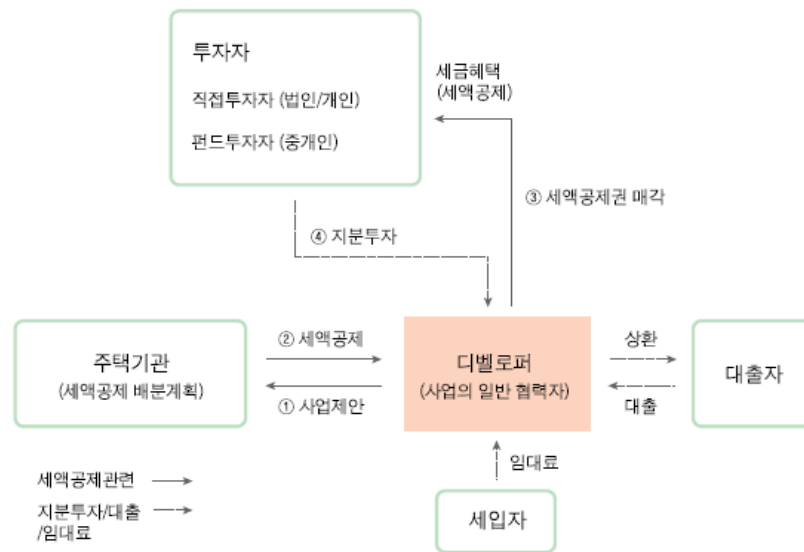
표 8-6

조세담보금융  
활용 사례

## 1. 인프라 투자 역량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

# 1. 인프라 투자 역량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

그림 8-4  
저소득층주택  
세금감면  
프로그램 개념도



- 미국의 대표적 주택건설 보조금정책인 LIHTC는 정부의 조세정책을 통해 민간부문이 대량의 임대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개발하는 민간 개발업자에게 조세를 감면해 줌으로서 대량의 장기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방식임.
- 1986년 「세금개혁법」에 명시된 이후 미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이 Section 42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여 2014년까지 280만 호 이상의 주택이 LIHTC에 의해 공급되었음<sup>82)</sup>.

- LIHTC의 기본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sup>83)</sup>.
- 미국의 LIHTC 제도는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 건설을 위한 지원금을 연방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공공이 연방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권리(tax credit)를 임대주택 개발업체에 배분하는 방식임.
- 미 국세청(IRS)은 매년 각 주의 대표 주택기관에게 세액공제액을 할당하고, 이를 자격을 갖춘 임대주택 개발업체에 이를 배분함.
- 각 주(州)는 2003년 이후 연간 주민 1인당 1.75 달러의 비율로 공제액 상한을 설정함(예를 들어 인구 1,000만명인 주는 연간 1,750만 달러에 상당하는 세액 공제액을 연방정부로부터 배분받게 됨).

82) 이재춘 외(2016), 주거지원정책 참여자간 협력체계 연구, 국토연구원

83) 장경석(2008), 세액공제를 활용한 미국의 임대주택 공급방안, 부동산포커스, 한국감정원



- 개발업체는 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권리(예: 10년간 조세면제)를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개발비용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조세감면 권리를 유동화 하여 투자 상품으로서 투자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 가능한 LIHTC에 대한 연구와 시범사업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 과제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충청남도 지역의 인프라 투자 극대화는 결국 충남도민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인프라 투자 사업이 국비 보조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업 보호·육성은 매우 중요함.
-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의 건설산업의 현황과 지역건설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정책 운영 실태를 되짚어보고 그 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프라 투자 사업 시행 시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음.

### (1) 충남지역 건설산업의 위상과 현황

- 건설업은 전국 지역별 격차가 다소 존재하나, 대다수의 광역시·도에서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에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큰 산업임.
- 충청남도를 비롯한 강원도, 제주도 등 대부분의 광역시·도의 경우 건설산업은 지역 내 총생산에서 4위안에 드는 업종임.

## 2.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 과제

## 2.

### 지역

### 건설산업

### 활성화 지원

### 정책 과제

표 8-7

광역지자체별  
상위 5위 내  
산업 생산 현황

지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강원도	공공행정 및 국방	건설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전라남도	제조업	공공행정 및 국방	농림어업	건설업	전기 및 수도
전라북도	제조업	공공행정 및 국방	농림어업	건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경상남도	제조업	공공행정 및 국방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경상북도	제조업	공공행정 및 국방	건설업	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
충청북도	제조업	공공행정 및 국방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충청남도	제조업	공공행정 및 국방	건설업	전기 및 수도	농림어업
제주도	공공행정 및 국방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7), 차기 정부의 건설 및 주택 정책과제

- 더구나 충청남도의 건설산업은 지역경제(GRDP)의 약 20.2%를 차지, 지역 내 건설업 종사자는 약 7만 8천여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6.3%를 차지하는 지역경제 중추 산업임.
- 하지만 충남지역 내 건설수주액은 최근 전국적 건축수주액의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정체이거나 하락하고 있는 상태임.

(단위: 조원)

표 8-8

전국 대비  
충청남도  
건설수주액(경상)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국	112.5	103.9	109.1	89.8	95.3	89.4	77.9	90.6	134.5	145.8
충청남도	8.9	10.5	6.5	5.7	8.0	9.1	5.5	6.9	8.1	7.2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0년('07~'16년)간 충청남도 지역 토목공종 수주액 연평균 증가율(CAGR)은 -1.2%에 불과하여 전국 0.3%를 크게 하회하고 있어 건축공사 물량도 크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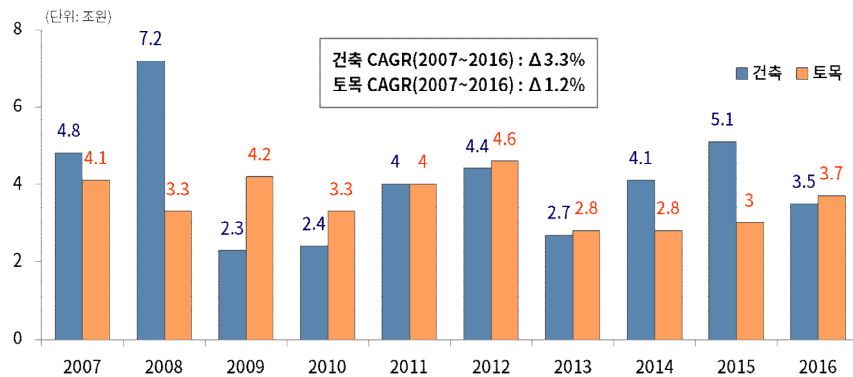


그림 8-5

충남지역 공종별  
(건축, 토목) 건설  
수주액 추이

- 이러한 수주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지역 내에서 발주하는 공사 임에도 지역건설기업이 해당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해당 지역에 공사현장을 두고 있는 공사 중에서 해당 지역에 본사가 위치한 건설업체가 수주한 비중인 역내공사 수주 비중<sup>84)</sup>의 경우, 충남은 최근 7년 평균 21.2%로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	73.5%	67.9%	72.3%	70.2%	72.8%	72.9%	72.9%
부산	21.6%	20.5%	24.1%	26.0%	28.2%	19.3%	28.6%
대구	30.5%	33.3%	31.1%	29.6%	30.2%	24.4%	32.1%
인천	43.2%	42.0%	44.0%	57.7%	42.1%	37.1%	50.8%
광주	40.1%	40.8%	33.5%	29.0%	38.8%	42.8%	40.3%
대전	24.5%	31.6%	32.0%	41.4%	36.3%	35.4%	34.7%
울산	42.3%	38.9%	48.7%	53.7%	40.3%	28.4%	50.1%
경기	24.0%	20.9%	21.4%	24.7%	27.2%	13.7%	26.2%
충북	35.2%	40.0%	35.2%	38.0%	40.4%	27.2%	40.0%
충남	24.7%	18.6%	21.1%	20.2%	19.1%	19.8%	24.6%
전북	46.0%	38.1%	41.4%	37.7%	48.2%	45.2%	42.9%
전남	32.0%	34.4%	50.7%	54.2%	52.2%	51.6%	55.7%
경북	40.2%	47.9%	41.8%	46.1%	38.6%	37.0%	35.6%
경남	42.9%	42.7%	37.9%	43.1%	41.5%	39.0%	34.9%
제주	50.7%	57.4%	56.9%	45.8%	54.7%	56.3%	55.2%
강원	26.2%	38.9%	21.8%	36.6%	34.7%	33.9%	28.9%

표 8-9

전국 광역시·도별  
역내 공사 수주  
비중 추이

자료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미발간)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 재인용

$$83) \text{ 역내공사 수주 비중} = \frac{\text{역내업체의 역내공사수주금액}}{\text{역내의 총 발주금액}}$$

## 2.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 과제

## 2.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 과제

- 더구나 충남 지역건설업체의 경우 역내 발주공사의 의존도가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 지역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이 매우 시급함.
- 해당 지역 내 위치한 역내업체의 총 수주금액 중 역내업체의 역내공사 수주금액 비를 의미하는 역내공사 수주 의존도<sup>84)</sup>의 경우 충청남도는 최근 7년 평균 0.47로 지역건설업체 대부분이 지역 내 공사물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표 8-10

전국 광역시·도별  
역내 공사 수주  
의존도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	0.22	0.22	0.18	0.21	0.25	0.18	0.19
부산	0.55	0.56	0.50	0.62	0.38	0.47	0.54
대구	0.65	0.68	0.56	0.58	0.62	0.57	0.47
인천	0.36	0.23	0.31	0.21	0.26	0.25	0.31
광주	0.52	0.31	0.36	0.38	0.31	0.13	0.27
대전	0.36	0.50	0.46	0.38	0.28	0.27	0.29
울산	0.68	0.60	0.75	0.78	0.79	0.77	0.70
경기	0.45	0.40	0.47	0.50	0.48	0.49	0.51
충북	0.80	0.79	0.77	0.70	0.69	0.74	0.68
충남	0.51	0.45	0.46	0.40	0.44	0.51	0.52
전북	0.77	0.72	0.76	0.65	0.73	0.67	0.62
전남	0.49	0.50	0.44	0.43	0.31	0.28	0.30
경북	0.37	0.48	0.43	0.44	0.38	0.36	0.51
경남	0.65	0.59	0.57	0.62	0.72	0.65	0.72
제주	0.88	0.87	0.90	0.87	0.88	0.85	0.84
강원	0.72	0.74	0.73	0.58	0.77	0.65	0.73

자료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미발간)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 재인용

- 이러한 현황을 종합하였을 때, 수주물량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건설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만이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며,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가능함.
-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일부 국책사업을 제외한다면, 인프라 투자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지역 건설시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역내 지역건설업체가 수주

$$84) \text{ 역내공사 수주 의존도} = \frac{\text{역내업체의 역내공사수주금액}}{\text{역내의 총 발주금액}}$$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충청남도청을 비롯한 충청남도내 공공발주자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제도의 발굴이 필요함.

-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부터 운영되어온 지역공동도급, 지역제한입찰 등 지역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의 경우 그간 지역건설산업의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에는 그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해당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건설산업 특성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사업 역량과 자금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제도·정책 운영 현황

### 1) 지역건설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관련 제도 운영 현황

- 본 절에서는 지역건설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 시 운영 중인 관련 제도들을 살펴보았음.

#### ○ 종심제·종평제 입찰자 선정 시 지역경제기여도 평가항목 운영

-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심제)<sup>86)</sup>로 공공공사 발주 시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평가항목 중 지역경제기여도 평가 제도를 운영 중임.
- 지역경제기여도 평가 제도란 일반 및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내 사회적 책임 분야 중 지역경제기여도 항목을 통해 0.6~0.8점 내외의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임.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 응찰한 입찰자가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하였다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 현장 소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

86) 지난 2016년 정부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기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심제·종평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관련 제도를 운영 중임

## 2.

### 지역

### 건설산업

### 활성화 지원

### 정책 과제

표 8-1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방법 중  
지역경제기여도  
심사 산식

라 가점을 부여하기에 지역건설업체 사업 참여 기회 확대가 가능함.

$$\text{평점} = \frac{\text{지역업체 비율}}{20\% \times A} \times \text{배 점}$$

주 :

- 1)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지역업체 비율 산정 시 제외
- 2) A는 발주기관이 해당 공사현장 소재지역의 지역업체 현황과 공사규모 및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0.25~2 사이에서 결정

- 현재 충청남도에 위치한 공공발주기관은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발주 시 해당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 1994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지역제한입찰제도와 함께 실질적으로 지방소재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물량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지역건설업체 보호 정책임.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란 해당 공공공사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014년 이후 245억원) 미만인 사업을 대상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계약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임<sup>87)</sup>.
  -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은 4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최대 49%까지 상향할 수 있음.
- 충청남도의 경우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통해 도지사로 하여금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청 등 지자체 공공발주공사의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공사금액의 4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8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제29조 제2항

- 또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조례를 통해 지자체 공공발주공사의 하도급 또한 공사대금의 50% 이상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역시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지역제한입찰제)

-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일정 금액 미만의 공공 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역내 소재 건설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임.
- 국가발주 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제 대상 공사는 일반건설공사 82억원, 전문건설공사 7억원임(추정가격 기준).
-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건설공사의 경우 7억원 미만임. 단, 혁신도시 건설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0억원 미만이며, 전기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포함되지 않은 그밖에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억원 미만임.
- 현재 충청남도청 및 충청남도에 위치한 국가·지방 공공발주기관의 경우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제한경쟁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PQ 심사 기준 상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우대 제도(지역업체참여도 평가)

-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PQ 심사 기준 상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우대 제도는 사전 입찰참가자격 심사(PQ) 시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참여비율에 따라 일정비율의 점수(5점 이내)를 가산해주는 제도임.
-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제가 중소기업의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해 주는 제도라면, PQ심사 기준 상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우대 제도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지역경제기여도 심사와 함께 중대형 공사에서의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우대하는 제도임.

### 2)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검토

- 2018년 현재 충청남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모두 지역건설업체

## 2.

### 지역

### 건설산업

### 활성화 지원

### 정책 과제

표 8-12

#### 전국

#### 지방자치단체

#### 지역건설산업

#### 활성화 지원 조례

#### 제정 현황

(광역시·도 기준)

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구분	조례명	제정일자	최근 개정일자
서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0.07.15.	2018.01.04.
부산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006.04.12.	2017.11.01.
대구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2011.03.10.	2014.03.03.
인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2008.10.20.	2017.12.29.
광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2007.03.31.	2016.03.01.
대전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2016.12.29.	2017.07.07.
울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2008.12.31.	2017.12.2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013.05.10.	2016.12.20.
경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2009.04.21.	2017.11.13.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017.09.29.	2017.09.29.
강원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007.12.28.	2017.12.29.
충북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006.11.17.	2013.12.27.
충남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007.07.30.	2017.02.28.
전북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2008.06.13.	2018.03.30.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015.10.12.	2015.10.12.
전남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2007.12.31.	2017.06.20.
경북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2010.02.25.	2017.03.02.
경남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2008.05.08.	2015.08.1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007.03.07.	2017.03.29.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주요 내용을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충남도지사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지역건설산업 보호 제도들을 열거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운



영 구성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에서 규정한 세부 내용과 이에 대한 이행 실태를 주요 조문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첫째, 대다수 타 시·도의 경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에 대한 정책평가(매년 또는 2년 단위)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도정(또는 시정)에 반영하는 절차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충청남도 의 경우 조례에 해당 내용이 부재하여 정기적 계획 수립 및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충청남도 조례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 49% 이상(종합건설업),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전문건설업), 민간사업인 경우 지역건설업체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 확대 등을 적극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타 시·도의 경우 현행 상위 규정<sup>88)</sup>을 통해 최대 49% 이하의 범위 내에서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은 모든 시·도가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지역업체 하도급비율의 경우 상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부산을 비롯한 3개 광역시·도의 경우 충청남도 조례에서 명시한 60% 보다 높은 지역 업체 우선하도급 비율을 조례로 권장하고 있어 타 시·도 수준으로의 개정 검토가 필요함.

(단위: %)

구 분	강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50	X	70	60	60	70	60	60	50	60	50	60	50	70	60	50	60

표 8-13  
광역시·도별  
지역건설산업  
의무 공동도급 및  
하도급비율

### 3) 충남 내 대형사업에의 지역건설사 참여 확대 정책

- 충청남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들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바,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를 통하여 건설단계에서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8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 2.

### 지역

### 건설산업

### 활성화 지원

### 정책 과제

- 이들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업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이에 따라 지역건설업체 우대 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앞에서 제시한 인프라 사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연계사업에까지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특히, 발주단계에서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가 가능한 공사들의 경우,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분리하여 발주함으로써 지역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중규모의 도시재생사업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업체간 공동도급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함.

### (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1) 지역 중소건설기업의 경쟁력 제고

- 현재 충청남도에 위치한 종합건설사는 그 규모가 타 지역에 위치한 건설기업에 비해 열악하며, 대부분 중소기업임.
- 이에 따라 지역 중소건설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 확대 및 지역 내 강소건설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용이 필요함.
  - 지역 중소건설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경영관리 역량 강화와 지역별 맞춤형 기술력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함.
  - 지역 중소건설기업이 향후 시장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시장 및 상품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및 새로운 시장 진출노력에 대한 자금 및 경영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의 강소기업 지원과 같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역 내 ‘강소건설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지역 내 ‘지역강소기업인증’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강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검토가 필요함.

구분	지원사업	지원 내용
취업지원	맞춤형 채용 지원 서비스 제공	■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일자리정보 별도 DB 관리, 기업정보 제공 등
기업홍보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 청년서포터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정보 발굴·홍보
	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 네이버를 통한 기업정보 제공 ■ 워크넷-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홍보
재정금융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우대	■ 강소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 보증우대/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 등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 안정장려금 등 지원선정 시 우대	■ 가점(5점)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 선정 시 우대	■ 우선 지원(최대 10억원, 연리 1.5%)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	■ 산재예방 시설·장비 구입 자금 우선지원 및 1천만원 추가지원
선정선발 우대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우대	■ 강소기업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시 가점부여 (2개로 인정)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우대	■ 자격요건 중 부적격 사유 예외(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일반기업의 경우 50인 이상만 참여 신청 가능)
	중소기업탐방 기업 선정 시 우대	■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탐방기업 발굴시 우선 배정
	청년채용박람회 참여 우대	■ 우선 참여

자료 : 고용노동부(2018), 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 2) 부실·부적격업체 퇴출

- 부실·부적격업체는 지역 내 한정된 물량으로 인하여 지역 건설산업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태점검의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방안임.
  -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화 차원에서 실태점검을 위한 행정인력의 확충과 실질적인 실태조사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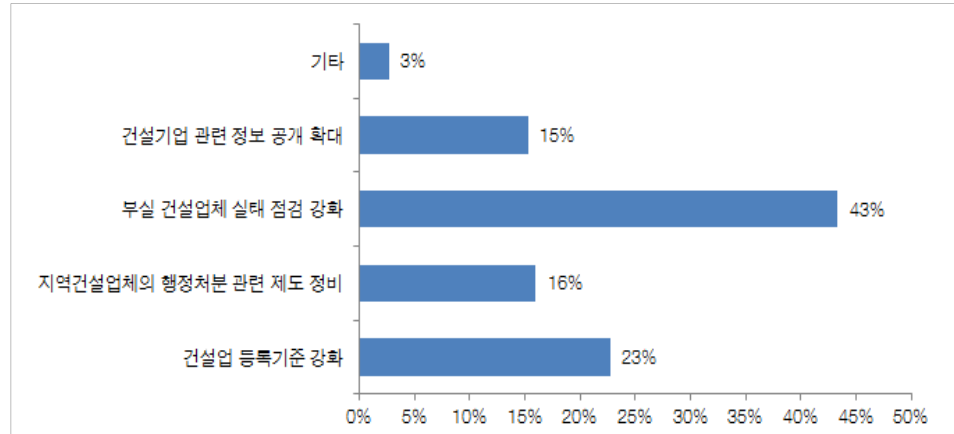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지원내용

2.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 과제

## 2.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 과제

그림 8-6

부실·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 : 서울 소재 건설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6), 서울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 3) 기타 충청남도의 정책적 지원 강화

-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청의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첫째, 지역건설산업의 현황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이를 기초로 한 단·중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실행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둘째, 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직(전담팀) 신설을 통한 체계적 지원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조직 신설 초기에는 건설교통국 지역정책과 내 지역건설활성화팀을 신설하며, 향후 조직의 역할이 확충될 경우 별도 과 신설 수준으로의 격상이 필요함.
  - 전담팀의 역할은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관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운영,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지원 활동 발굴 및 추진, 민간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인·허가 지원(One-Stop 인·허가 서비스 등),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 마련 등임.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강상혁·이영환, 영미 선진국 인프라 평가 체계의 이해와 국내 도입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
- 감사원, 취약계층 주거공급 실태 감사결과, 감사보고서, 2017.
- 고준환 외, 외국의 도시계획·개발제도, 일본 도시개발제도 비교연구회 편, 국토연구원, 1996.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 국토교통부, 2016년 전국 도시 쇠퇴 현황, 2017.
- 국토교통부, 교통량정보제공 시스템 통계 연보 자료(2012~2016), 2018.
- 국토교통부,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 2018.
- 국토교통부,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 2016.
-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2016.
- 국토교통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 2016.
- 국토교통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 2016.
- 국토교통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2017.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2016 도시계획현황, 2017.
- 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2001~2020, 2010.
- 국토해양부·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변경), 2016.
- 국회입법조사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2015.
- 기획재정부, 2016 나라살림, 2016.
- 김동열,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 과제,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3.
- 김준우, 벨기에 브뤼셀 도시재생정책, 한국도시설계학회, 2015.
- 나경연·박철한, 인프라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7.
-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 조사, 2017.
- 대한민국 정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
- 대한민국 정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2005.
- 대한민국 정부,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2007.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17.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관광단지 현황, 2016.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지정현황, 2016.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2016년 말 기준), 2017.
- 박영민·이세구,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효율화 방안, 2015.
- 박용석 외,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및 정책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7.
- 삶의 질 향상위원회,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 만족도 조사, 2017.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비전 2030 중장기발전 전략계획, 2016.

이원섭,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실천방안,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2011.

이재춘 외, 주거지원정책 참여자간 협력체계 연구, 국토연구원, 2016.

장정식, 세액공제를 활용한 미국의 임대주택 공급방안, 부동산포커스, 한국감정원, 2008.

조남건·박종일, 중앙과 지방의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 체계 개선 방안, 국토연구원, 2013.

조정식, 국내 SOC 확충 및 노후 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방안,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6.9.

지역발전위원회, 2017년 균형발전 주요통계집, 2017.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정책백서, 2017

충청남도, 2013 충남 사회지표 조사보고서, 2014

충청남도, 2014 충남 사회지표 조사보고서, 2015

충청남도, 2015 충남 사회지표 조사보고서, 2016

충청남도, 2016 충남 사회지표 조사보고서, 2017

충청남도, 2017 충남 사회지표 조사보고서, 2018

충청남도, 사회경제 비전 2030, 2016

충청남도, 2018 주요업무보고, 2018

충청남도, 충남신도시개발방향, 열린충남, 2007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분석 및 추진방안, 2016

충남연구원, 충남지역행복생활권 실태분석과 추진방향

통계청, 자동차 등록 통계자료(2013~2017), 2018.

하능식 외, 중장기 지방세제 발전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프라의 질적 제고 방향과 전략, 201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 미발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기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연구, 미발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지역 인프라의 실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201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차기 정부의 건설 및 주택 정책과제, 2017.

한국건설산업연구원·서울대학교,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 방향 연구, 2013.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통계(2017년 3분기 전국산업단지현황), 2018.

한국에너지관리공단, 2017년 에너지통계 핸드북, 2017.

환경부, 2015 하수도 통계, 2017.

환경부, 2016 상수도 통계, 2017.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2018.

해양수산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2016.

행정안전부, 지방채 시장 활성화 방안, 2010.

행정자치부,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

KDI 공공투자센터, 2015년도 KDI 공공투자센터 연차보고서, 2017.

KDI한국개발연구원, 지역낙후도지수 개선방안, 2013.

## 외국 문헌

ARTBA(American Road & Transportation Builders Association), Analysis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FY2017 Budget Proposal for Transportation, 2016.  
Atlanta BeltLine. Inc., Annual Report 2016, 2017.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Infrastructure Plan, 2016.2.  
Australian Government, Key Australian infrastructure statistics 2016, 2017.  
Australian Government, Trends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2030, 2014.  
Brussels-Capital Region, Regional Secretariat for Urban Development, 2007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 The 2030 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  
Infrastruc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Portfolio, Portfolio Budget Statements 2016~17 Budget, Related Paper No. 1. 13., 2016.  
OECD, National Index of Wellbeing, 2016.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Investing in American Infrastructure  
Silicon Valley Leadership Group, Silicon Valley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Project, 2018.  
UN, World Happiness Report(2014~2016), 2017.  
White Hous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2016 Economic Report of President, 2016.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Survey, 2017.

## 홈페이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http://nlic.go.kr>  
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통통(전통시장 통계자료), <http://www.sijangtong.or.kr>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국토교통부,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 <http://rsis.kr>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시즌2 홈페이지, <http://innocity.molit.go.kr/v2>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http://taas.koroad.kr>  
충청남도, 통계로보는 충청남도, <http://www.chungnam.go.kr>  
충청남도, 예산/재정, <http://www.chungnam.go.kr>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http://legal.seoul.go.kr>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http://saemangeum.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http://www.fms.or.kr>  
한국철도공사, 기차역 정보, <http://info.korea.com>





## 부록 1. 설문지

---

## 주요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현재 인프라 시설(도로, 교량, 지하철, 상하수도, 학교, 체육 시설 등)의 안전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정책 및 투자 방향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은 설문 조사를 수행 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조사 개요 [설문 조사지에서는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조사 주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 방식
<b>■ 조사 대행 기관 :</b> ㈜리서치뱅크		-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유효 응답자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하여 표집] - 조사 기관 : 2018년 2월 22일 - 3월 7일 [2주간] -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 조사 - 조사 내용 :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관련 인식 조사

### 작성자 개요

성별 ( )	1. 남자 2. 여자	나이 ( )	1. 20대 이하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거주 지역 ( )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1.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인프라 시설의 전반적인 성능(품질, 용량, 편의성)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우수하다
- ② 우수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우수하지 않다
- ⑤ 전혀 우수하지 않다

1-1 그렇다면, 귀하는 다음 시설의 성능 수준(품질, 용량, 편의성)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용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	④ 불만족 한다	⑤ 매우 불만족 한다	⑥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
1. 도로						
2. 터널						
3. 교량						
4. 항만시설(갑문, 계류, 방파제 및 호안 등)						
5. 지하철						
6. 철도						
7. 공항						
8. 터미널/정류장						
9. 주차장						
10. 상수도						
11. 하수도						
12. 환경개선시설(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13. 공원/녹지						
14. 관광시설(관광단지및유원지등)						
15. 문화/복지/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체육관)						
16. 교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17. 전통시장						
18. 안전시설(소방서,경찰서등)						
19. 의료시설(병원, 요양원 등)						
20. 재해방지시설(우수관,빗물저류조,지진대응,주민피난 시설)						
21. 주거시설(주택,아파트등)						
22. 댐 및 저수지						
23. 산업/물류단지						
24. 발전소(원전 포함)						

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인프라 시설의 수준이 지역 경쟁력 향상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밀접하다
- ② 밀접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밀접하지 않다
- ⑤ 전혀 밀접하지 않다

2-1 그렇다면, 귀하는 다음 시설의 수준이 지역 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⑥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
1. 도로						
2. 터널						
3. 교량						
4. 항만시설(갑문, 계류, 방파제 및 호안 등)						
5. 지하철						
6. 철도						
7. 공항						
8. 터미널/정류장						
9. 주차장						
10. 상수도						
11. 하수도						
12. 환경개선시설(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13. 공원/녹지						
14. 관광시설(관광단지및유원지등)						
15. 문화/복지/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체육관)						
16. 교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17. 전통시장						
18. 안전시설(소방서,경찰서등)						
19. 의료시설(병원, 요양원 등)						
20. 재해방지시설(우수관,빗물저류조,지진대응,주민피난시설)						
21. 주거시설(주택,아파트등)						
22. 댐 및 저수지						
23. 산업/물류단지						
24. 발전소(원전 포함)						

3.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인프라 시설의 수준이 지역 주민의 생활 또는 삶의 질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밀접하다
- ② 밀접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밀접하지 않다
- ⑤ 전혀 밀접하지 않다

3-1 그렇다면, 귀하는 다음 시설의 수준이 지역 주민의 생활 또는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⑥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
1. 도로						
2. 터널						
3. 교량						
4. 항만시설(갑문, 계류, 방파제 및 호안 등)						
5. 지하철						
6. 철도						
7. 공항						
8. 터미널/정류장						
9. 주차장						
10. 상수도						
11. 하수도						
12. 환경개선시설(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13. 공원/녹지						
14. 관광시설(관광단지및유원지등)						
15. 문화/복지/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체육관)						
16. 교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17. 전통시장						
18. 안전시설(소방서,경찰서등)						
19. 의료시설(병원, 요양원 등)						
20. 재해방지시설(우수관,빗물저류조,지진대응,주민피난시설)						
21. 주거시설(주택,아파트등)						
22. 댐 및 저수지						
23. 산업/물류단지						
24. 발전소(원전 포함)						

4.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노후도 및 안전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⑥ 매우 안전하다
- ⑦ 안전하다
- ⑧ 보통이다
- ⑨ 안전하지 않다.
- ⑩ 전혀 안전하지 않다.

4-1 그렇다면, 귀하는 다음 시설의 노후도 및 안전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안전 하다	③ 보통 이다	④ 안전 하지 않다	⑤ 매우 안전 하지 않다	⑥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
1. 도로						
2. 터널						
3. 교량						
4. 항만시설(갑문, 계류, 방파제 및 호안 등)						
5. 지하철						
6. 철도						
7. 공항						
8. 터미널/정류장						
9. 주차장						
10. 상수도						
11. 하수도						
12. 환경개선시설(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13. 공원/녹지						
14. 관광시설(관광단지및유원지등)						
15. 문화/복지/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체육관)						
16. 교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17. 전통시장						
18. 안전시설(소방서,경찰서등)						
19. 의료시설(병원, 요양원 등)						
20. 재해방지시설(우수관,빗물저류조,지진대응,주민피난시설)						
21. 주거시설(주택,아파트등)						
22. 댐 및 저수지						
23. 산업/물류단지						
24. 발전소(원전 포함)						

4-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시설물이 사회적 재난(화재, 교통사고, 오염, 붕괴, 기타사고 등)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전하다
- ② 안전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안전하지 않다
- ⑤ 전혀 안전하지 않다

4-3 아래 사회적 재난 유형 중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발생이 우려되는 재난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에서의 폭발이나 화재 | ② 교량, 터널의 붕괴 |
| ③ 대형 교통사고                 | ④ 해양시설물 사고   |
| ⑤ 환경오염(폐수 유출, 화학물질 유출 등)  | ⑥ 기타( )      |

4-4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시설물은 자연재해(지진, 풍수해 등)로부터의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안전하다
- ② 안전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안전하지 않다
- ⑤ 전혀 안전하지 않다

4-5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위협이 되는 자연재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지진으로 인한 건물붕괴나 화재, 지진으로 인한 해일 등 | ② 태풍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 |
| ③ 홍수 또는 호우로 인한 피해                | ④ 폭설로 인한 피해        |
| ⑤ 가뭄으로 인한 피해                     | ⑥ 기타 ( )           |

5.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인프라 시설의 현행 투자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 ② 충분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충분하지 않다
- ⑤ 전혀 충분하지 않다

5-1 그렇다면, 귀하는 아래 시설에 대한 **향후 투자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용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 하다	③ 보통 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매우 필요하지 않다	⑥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
1. 도로						
2. 터널						
3. 교량						
4. 항만시설(갑문, 계류, 방파제 및 호안 등)						
5. 지하철						
6. 철도						
7. 공항						
8. 터미널/정류장						
9. 주차장						
10. 상수도						
11. 하수도						
12. 환경개선시설(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13. 공원/녹지						
14. 관광시설(관광단지및유원지등)						
15. 문화/복지/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체육관 등)						
16. 교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17. 전통시장						
18. 안전시설(소방서,경찰서등)						
19. 의료시설(병원, 요양원 등)						
20. 재해방지시설(우수관,빗물저류조,지진대응,주민피난시설)						
21. 주거시설(주택,아파트등)						
22. 댐 및 저수지						
23. 산업/물류단지						
24. 발전소(원전 포함)						

6.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인프라 시설과 관련한 **정책과 제반 활동**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요 인프라 시설물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방세수 증가를 통한 지자체의 자체 재원 확보
- ② 중앙정부 또는 상위 지자체의 재정지원 확대
- ③ 민간투자의 적극적인 유치
- ④ 시설물 사용료의 인상
- ⑤ 기존 예산 내 인프라 투자의 비중 확대(복지예산 등 다른 항목 예산 비중 축소)

8.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요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부담할 의향이 있다.
- ② 필요하다면 지불할 수 있다.
- ③ 시/도 재정과 적절하게 분담된다면 지불할 수 있다.
- ④ 시/도 재정에서 더 크게 부담해야 한다.
- ⑤ 시/도 재정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 다음은 충남지역의 인프라 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

9. 충남지역의 타 광역 시, 도에 비해 전반적인 인프라 시설의 충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충분하다
- ② 충분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족하다
- ⑤ 매우 부족하다

10. (위 문항에서 ④ 또는 ⑤에 응답한 경우) 전반적인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부족한 도로 및 교통 인프라 시설
- ② 생활에 필수적인 문화 및 생활 인프라의 부족
- ③ 각종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위협 및 편의성 저하
- ④ 일자리 부족 등 지역 경제의 위축
- ⑤ 타 지역에 비해 느린 지역의 성장 속도

11. 충남지역이 환황해권 중심지로서의 성장하는데 있어 충남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

-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및 주력산업 육성 등 산업기반 확충
- ②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창조
- ③ 문화·관광 유·무형 콘텐츠 강화로 문화관광 중심 지역으로의 성장
- ④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위한 도시공간 창조
- ⑤ 충남 지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⑥ 충남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한 주요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12. 충남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프라 투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도로, 공항, 항만 등 교통인프라
- ② 주거시설
- ③ 상, 하수도 시설의 시설(용량, 노후관로 개량 등)
- ④ 쓰레기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 ⑤ 문화 및 관광시설
- ⑥ 산업 및 물류단지
- ⑦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시설
- ⑧ 공원·녹지
- ⑨ 재해재난에 대응한 방재시설

13. 다음은 충남지역의 인프라 정책 관련 현안입니다.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가능) ?

- ① 노후 인프라(노후 상하수도, 노후건축물 및 도로시설물 등)의 안전도 개선
- ② 신규 도로, 항만, 공항 등 교통 인프라 수요에의 발빠른 대응
- ③ 제조업 및 해양·관광산업,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및 물류단지 확충
- ④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한 방재시설 확충
- ⑤ 충남지역 내 지역 간 불균형한 공공 인프라(학교, 도시공원, 도서관, 소방서, 기타 복지시설 등) 해소
- ⑥ 지역 내 환경보호를 위한 쓰레기처리장 등 환경시설 수요에의 대응
- ⑦ 주거환경 악화, 상권침체에 대응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 ⑧ 지연되고 있는 주요 지역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부록 2. 세미나 발표자료

---

# 충청남도 인프라 실태진단 및 시사점

2018. 05. 08

임 준 홍  
(충남연구원)

## CONTENTS

- 1 인구감소와 지역인프라
- 2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 3 지역인프라에 대한 도민의식
- 4 시사점과 정책과제

# CONTENTS

01

인구감소  
와  
지역 인프라

02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03

지역  
인프라에  
대한  
도민의식

04

시사점  
과  
정책과제

인구감소와 지역인프라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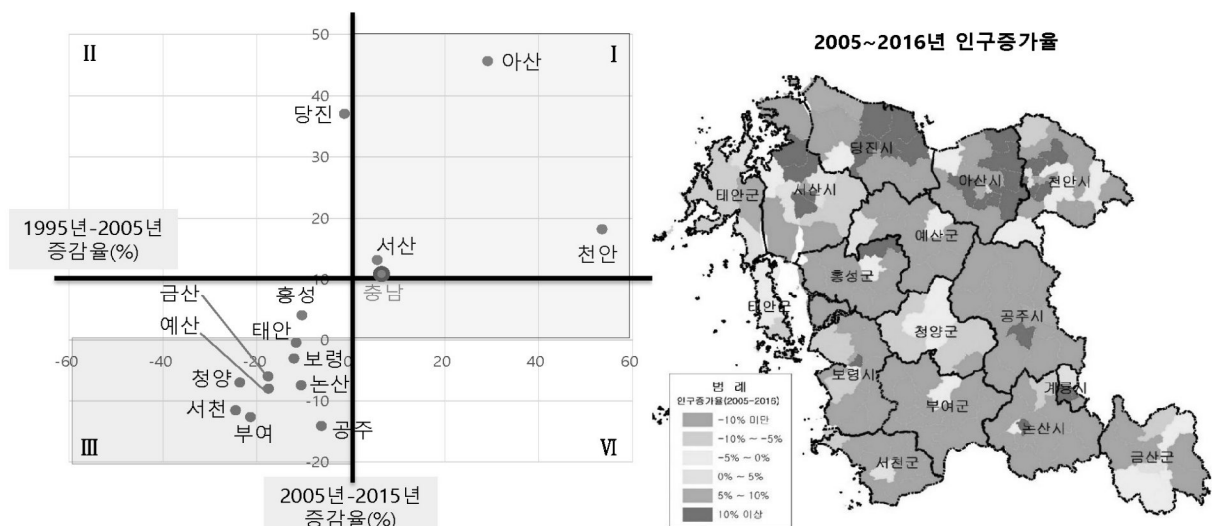
지역 인프라에 대한 도민의식

시사점과 정책과제

## 충남의 인구감소 실태

수도권 인접 도시만 증가, 대부분 도시는 인구 감소

2005~2016년 163개 읍면(전체 읍면의 82.3%)에서 인구 감소



\* 자료 : 임준홍 외(2017)

4/32

## 인구감소를 넘어 지속적인 축소가 예상되는 충남이 도시들

### 2040년 읍면동별 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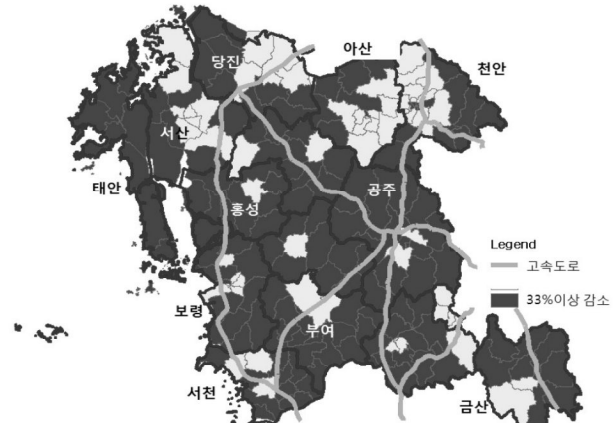
도심(동지역)의 34.2%가 현 인구보다 1/4 감소  
 농촌지역(면지역)의 90.4%가 현 인구보다 1/4 감소

인구감소는 농촌지역을 넘어 도심지역에서 발생 !!!

### 2040년 충남 읍면동별 인구 추계

지역구분	2010~2040년 33% 이상 감소 지역	2010~2040년 25% 이상 감소 지역
동지역 (38개 지역)	12(31.6)	13(34.2)
읍지역 (25개 지역)	12(48.0)	14(56.0)
면지역 (136개 지역)	118(86.8)	123(90.4)
전체 (199개 지역)	142(71.4)	150(75.4)

\* 자료: 임준홍 외(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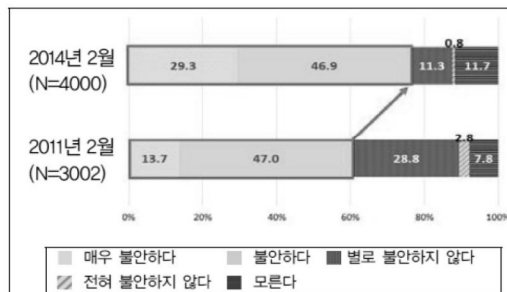
\* 자료: 임준홍 외(2014) 인구가 1/3(33%) 이상 감소지역 5/32

## 인구감소시대의 지역 인프라

### 집중적 도시화를 넘어 인구감소시대에 대비한 지역(도시) 인프라의 인식 전환 필요

우리나라는 1980~1990년대 개발된 인프라와 건축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최근 들어 국민안전과 도시·지역경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후건축물의 재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대

-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비율(기획재정부, 동수기준):  
 2000년 27% ⇨ 2005년 34% ⇨ 2015년 39%
- 30년 이상 경과된 인프라(국토교통부, 2013):  
 수자원 20.5%, 교량 8%, 도로·철도 6.3%



\* 자료: 국토교통부, 2015, 국토교통부 「국민의식조사(인터넷 アンケート)」 / 차미숙(2016) 재인용

## 일본의 노후 인프라 정비 정책

\* 자료: 차미숙(2016) 재인용

일본은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집중 개발된 사회자본 일제히 노후화  
인구감소 및 고령화시대 대비한 인프라 현명한 이용 촉진

→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일체적 대응

→ 2015년 사회자본 정비 원년

국토형성계획 구체화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수립

まち・ひと・しごと 지방창생종합전략 수립

국토교통성: 부동산증권화수법, 공공시설을 활용한 광역연계,  
리노베이션 등을 통해 지역만들기  
공공시설 효과적인 활용 촉진

지역만들기(まちづくり)를 위한 공공시설 유효 활용 가이드라인 시정촌 배포(14.8)



※ 지역 만들기를 위한 공공시설(PRE)의 유효 활용 가이드라인

1단계 (도시현상 파악, 지역만들기 방향 정립: 지역만들기 마스터플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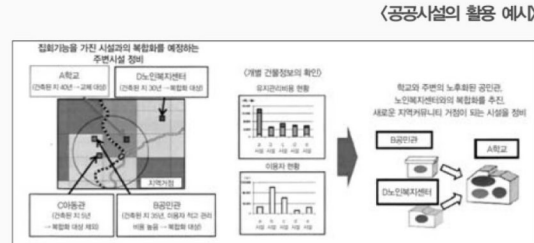
2단계 (PRE 정보의 정리 일원화: 총량면적개별 파악)

3단계 (PRE에 관한 기본방향 정리)

4단계 (PRE의 구체적인 실태 검토: 거점에 필요한 도시  
기능 정리, 배치상황 확인, 각 PRE의 활용방향 검토)

5단계(개별 사업내용 검토)

\*각 단계마다 검토해야할 내용과 방법(활용가능 통계자  
료, 분석방법 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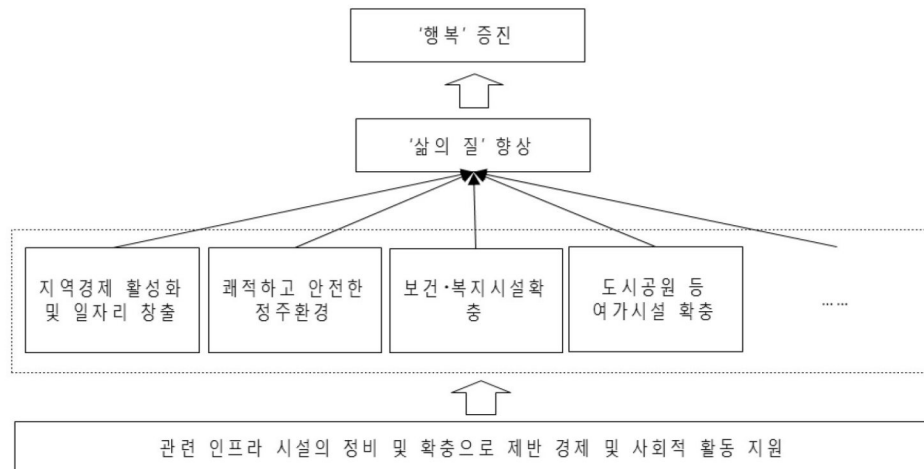
7/32

## 도민행복과 지역 인프라

정부는 2018년 SOC 예산을 2017년의 22.1조 원보다 20% 감소한 17.7조 원으로 계획  
국회에서는 동 예산을 19.0조 원(전년대비 14.0% 감소)으로 최종 확정하며 급격히 축소

충남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환경에 대한 실태 진단 요구

→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필요 / 선별적 체계적 관리 필요



8/32

## CONTENTS

01

인구  
감소와  
지역  
인프라

02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03

지역  
인프라에  
대한  
도민인식

04

시사점  
과  
정책과제

인구감소와 지역인프라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지역 인프라에 대한 도민인식

시사점과 정책과제

### 충남,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 도로 및 교통

도로 : 타 광역도보다 높은 반면, 시·군도의 포장률은 낮고, 폭원도 좁은 상황  
도로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노후화 진전  
⇒ 도로 유지관리비 급속히 증대 우려

구분	전국		충청남도		충남 점유율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합계	108,780	92.4	7,122	90.4	6.5
고속국도	4,438	100	430	100	9.7
일반국도	13,977	99.6	1,275	100	9.1
특별·광역시도	4,761	100	-	-	-
지방도	18,121	91.5	1,675	86.8	9.2
시도	28,867	96.3	2,623	76.9	9.1
군도	22,796	75.3	1,118	80.5	4.9
구도	15,820	99.6	-	-	-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련 유지관리비 비용지출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도로 유지보수비용은 1,025억원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수준)

교량 : 30년 이상 교량이 전체의 27.6%를 차지(※20년 이상은 64.5%를 차지)

터널 : 충남도내 소재 29개 중 20년 이상 터널은 17.2% 차지

철도 : 고속철 2개, 광역철 3개, 기타 2개 노선, 시·군간 철도 연계성이 낮아 확충 요구가 지속  
장항선이 유일한 주요도시 연결철도이나, 단선이며, 저속철도로서 현저히 기능이 떨어짐

\* 철도 이용자 : 계룡, 천안, 보령 및 예산군 등 일부 지역에 집중

문화 및 관광 등과 연계한 철도의 이용도 제고

항만 : 당진항, 대산항의 가파른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항만 확충은 부족, 노후화된 국가어항 정비 미흡

10/32



##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 산업 및 경제

산업단지 : 총 150개(지정면적 109,068천㎡, 고용인원만 13만 8천여명)  
 농공단지의 55.8%가 20년 이상 등 노후 산업단지가 큰 비중 차지  
 → 최근 5년간 새롭게 조성이 완료된 산단 42개소, 현재 조성중 산단도 24개소  
 ⇒ 현 산업단지정책이 신규조성에만 초점  
 폐업 업체수는 38개 업체, 이중 4년 이상 장기 휴폐업업체도 34.2%(2017)

구분	지정 산단수	조성된 산단수	20년 이상 산단	
			산단수	산단 비중
전체	150	126	52	41.3
국가	5	5	0	0.0
일반	52	34	4	11.8
도시첨단	2	1	0	0.0
농공	91	86	48	55.8

전통시장 :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 그러나, 시설 노후화는 지속  
 58개 전통시장 중 C등급이 21개소, D등급 8개소, E등급도 2개소  
 → 현재 D등급인 8개소 등에 대한 우선적인 현대화 사업이 시급

수준	A	B	C	D	E	총계
전통시장	5	22	21	8	2	58
상점가	3	5	1	1	-	10
지하도상점가	-	-	1	-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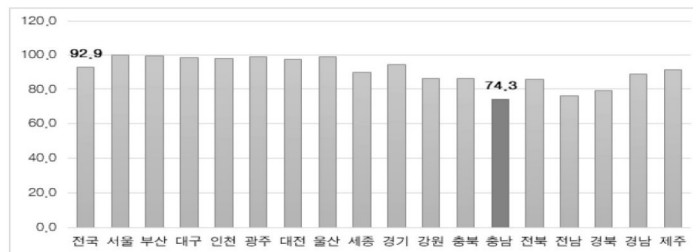
11/32

##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 환경 및 안전

상수도보급률 : 전국 최저, 일부 시·군지역은 50%에도 미달하는 상황. 또한, 노후화도 급속히 진전  
 유수율은 2015년 기준 80.0%로 전국 평균 84.0%에 미달  
 경년별로는 전체 상수도관 중 19.5%가 20년을 초과한 상태로서 노후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

전국	충남	도 지역								비고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7.9	89.6	90.2	95.6	86.6	90.2	93.1	100	
96.5	84.4	시 지역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100	100	99.9	98.6	99.8	99.9	98.1	87.7	

하수도보급률 : 전국 최저, 계획연장 대비 73.1%  
 하수도 재이용률도 14.7%에 불과. 제주, 대전보다 낮은 수준



하천(국가+지방) : 500개소의 제방정비 필요구간 중 31.5%가 아직 미정비  
 소하천 중 미정비 상태인 소하천은 1,176개소, 연장 1,633km임

12/32

##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 주거 및 생활

교육시설 : 유, 초, 중 · 고교 가운데 30년 이상된 학교건물은 1,411개동

이중 보강 및 개축이 시급한 C등급 건물은 25개동임

\* 폐교는 44개교, 이중 63.6%인 28개교가 미활용

\* 내진보강 대상 학교건물 2,113동 가운데, 534동만 내진보강(2017)

\* 내진화율은 25%에 불과(2017)

주택 : 20년 이상된 주택 42.1%(전국 평균 43.8%)

30년 이상의 주택 21.4%(전국 평균 16.3%)

\* 단독주택비중 33.5%(전국 평균 24.3%) 대비 크게 상회

구분	주택	20년 이상된 주택		30년 이상된 주택	
		주택수	비율	주택수	비율
전국	16,367	7,164	43.8	2,669	16.3
서울	1,164	1,173	42.0	373	13.4
부산	738	546	46.9	248	21.3
대구	942	339	45.9	116	15.8
인천	487	425	45.1	105	11.2
광주	358	205	42.2	70	14.4
대전	469	241	51.5	62	13.1
울산	358	149	41.7	38	10.7
세종	81	15	18.0	8	9.4
경기	3,694	1,252	33.9	269	7.3
강원	570	278	48.7	130	22.8
충북	557	269	48.4	111	20.0
충남	754	317	42.1	162	21.4
전북	687	360	52.4	176	25.6
전남	748	439	58.8	254	33.9
경북	995	528	53.0	272	27.3
경남	1,135	536	47.2	232	20.4
제주	195	90	46.2	44	22.7

13/32

##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 주거 및 생활

주택 : 빈집 7만 4천호로서 전체 주택의 9.8%(전국 평균 6.5%)

구분	주택	빈집		30년 이상된 빈집	
		주택수	비율	주택수	비율
전국	16,367	1,069	6.5	314	29.3
서울	1,164	79	2.8	17	21.8
부산	738	87	7.4	22	25.8
대구	942	30	4.0	7	22.5
인천	487	47	5.0	8	17.5
광주	358	27	5.5	7	25.1
대전	469	26	5.6	5	18.1
울산	358	21	6.0	3	15.9
세종	81	16	20.3	1	3.9
경기	3,694	145	3.9	14	10.0
강원	570	59	10.4	17	28.4
충북	557	55	9.9	16	28.3
충남	754	74	9.8	23	30.7
전북	687	74	10.8	30	40.3
전남	748	103	13.8	51	49.0
경북	995	108	10.9	50	46.3
경남	1,135	99	8.7	40	40.4
제주	195	18	9.5	4	20.0

14/32

##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 노후 건축물

노후 건축물 : 시·군별로 큰 차이

특히, 군지역에서 노후도가 심함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중이 부여군 47.8%, 청양군 43.7% 금산군 33.1%

시군	전체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노후 건축물 면적	비율	연면적	노후 건축물 면적	비율
천안시 동남구	20,045,494	2,377,860	11.9%	8,749,411	1,172,162	13.4%
천안시 서북구	27,700,248	1,370,291	4.9%	11,962,096	599,429	5.0%
공주시	9,713,091	1,738,154	17.9%	3,814,053	1,003,149	26.3%
보령시	7,995,938	883,870	11.1%	2,931,368	426,913	14.6%
아산시	26,225,508	1,875,352	7.2%	10,997,733	1,039,757	9.5%
서산시	13,808,865	1,512,051	10.9%	6,068,434	903,139	14.9%
논산시	10,074,127	1,779,400	17.7%	3,827,611	1,064,339	27.8%
계룡시	2,759,709	99,363	3.6%	1,321,685	34,573	2.6%
당진시	20,308,674	622,132	3.1%	8,895,048	307,302	3.5%
금산군	4,887,781	921,073	18.8%	1,771,875	586,535	33.1%
부여군	6,020,649	1,854,860	30.8%	2,408,154	1,150,656	47.8%
서천군	4,093,982	769,800	18.8%	1,501,771	396,185	26.4%
청양군	2,907,229	738,878	25.4%	1,179,790	515,070	43.7%
홍성군	9,378,527	554,300	5.9%	3,508,714	262,310	7.5%
예산군	8,137,788	1,462,922	18.0%	2,941,855	881,920	30.0%
태안군	5,120,434	651,450	12.7%	2,284,400	441,338	19.3%

15/32

##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 산업 및 경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 56개 현장(전국의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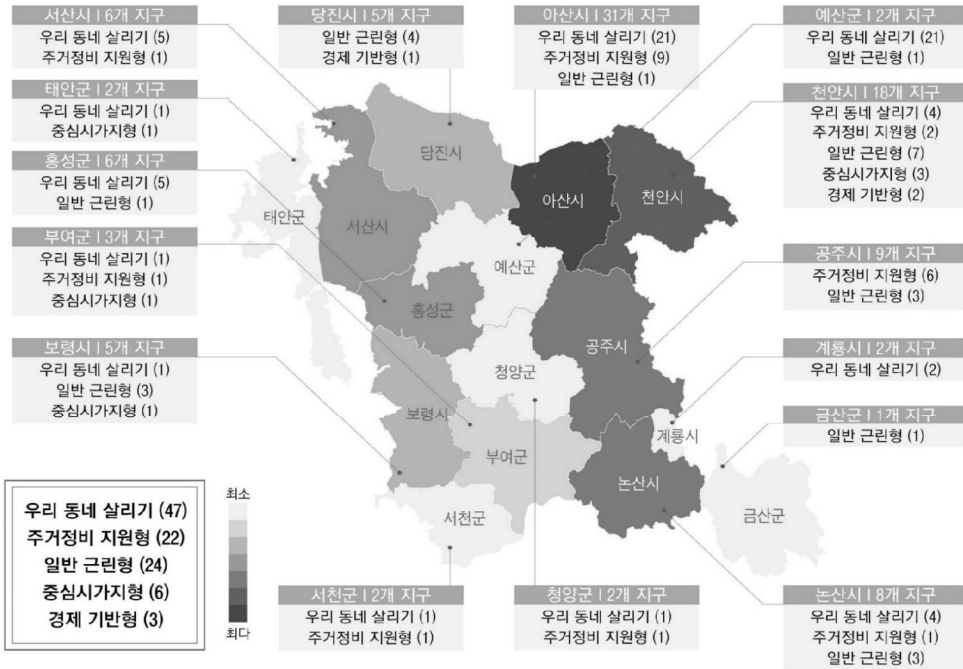
예산군, 천안시, 당진시 등에 집중

→ 분포지역과 용도 등에 따른 전략적 활용 필요



16/32

## 충남이 도시재생 뉴딜 수요



17/32

## CONTENTS

01

인구  
감소와  
지역  
인프라

02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03

지역  
인프라에  
대한  
도민인식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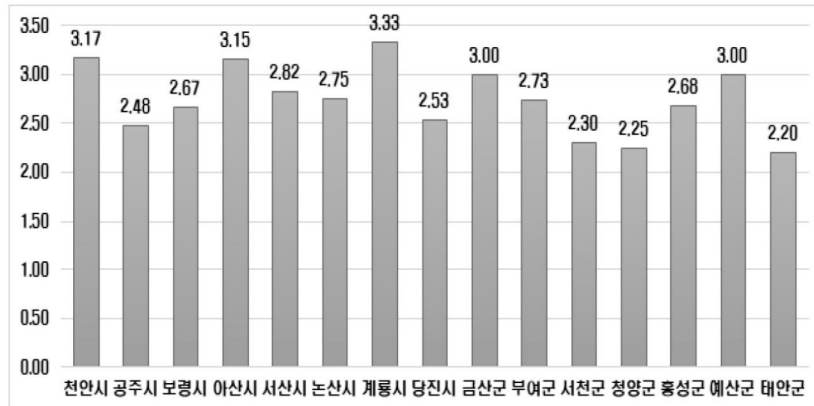
시사점  
과  
정책과제

## 인프라에 대한 지역민 인식 \*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529명)

### 시군별 인프라 성능 수준 평가

계룡시, 천안시, 아산시 등에서는 각각 3.33점, 3.17점, 3.15점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인프라 성능 수준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평가.

그러나, 태안군, 청양군 그리고 서천군 등의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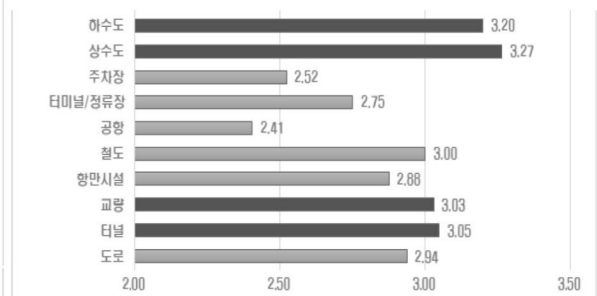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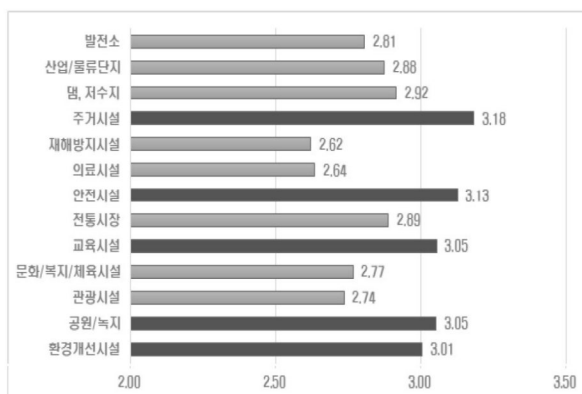
19/32

## 인프라에 대한 지역민 인식

### 인프라 시설별 성능 수준에 대한 평가

상대적으로 상·하수도 시설, 터널 및 교량, 주거시설, 안전시설, 교육시설, 공원/녹지 등 시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반면에 공항, 주차장, 재해방지시설, 의료시설 등 시설에 대해서는 매우 낮게 평가를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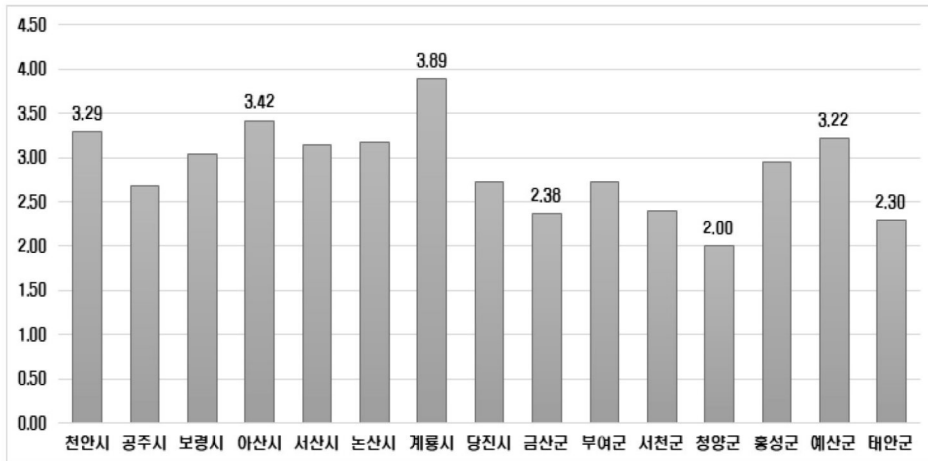
20/32

## 인프라에 대한 지역민 의식

### 시군별 주거시설에 대한 성능 수준 평가

전체 평가는 3.18점으로 보통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으나, 지역간에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표준 편차 값 0.50).

특히, 청양군, 태안군, 금산군, 서천군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거시설의 성능 수준을 낮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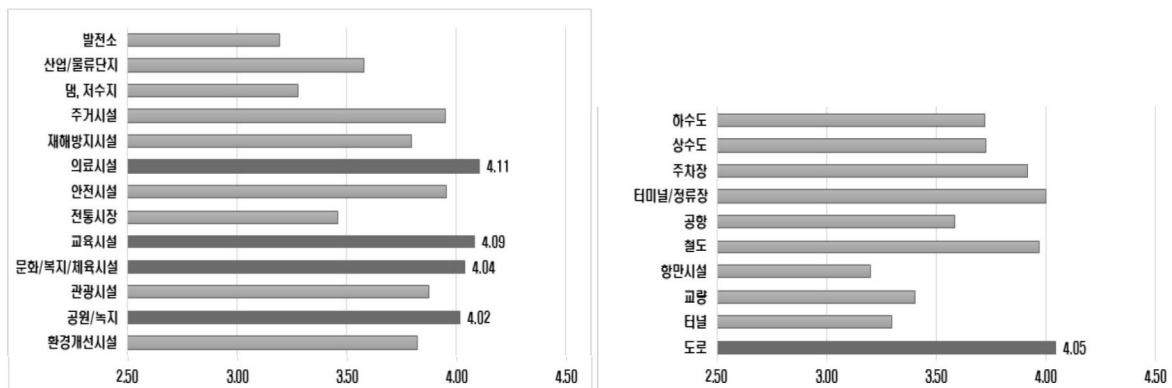
21/32

## 인프라에 대한 지역민 의식

### 인프라시설별 지역경쟁력과의 연관성

모든 인프라 시설물에 대하여 보통 이상의 지역경쟁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특히, 충남도민들은 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생활인프라와 도로가 지역 경쟁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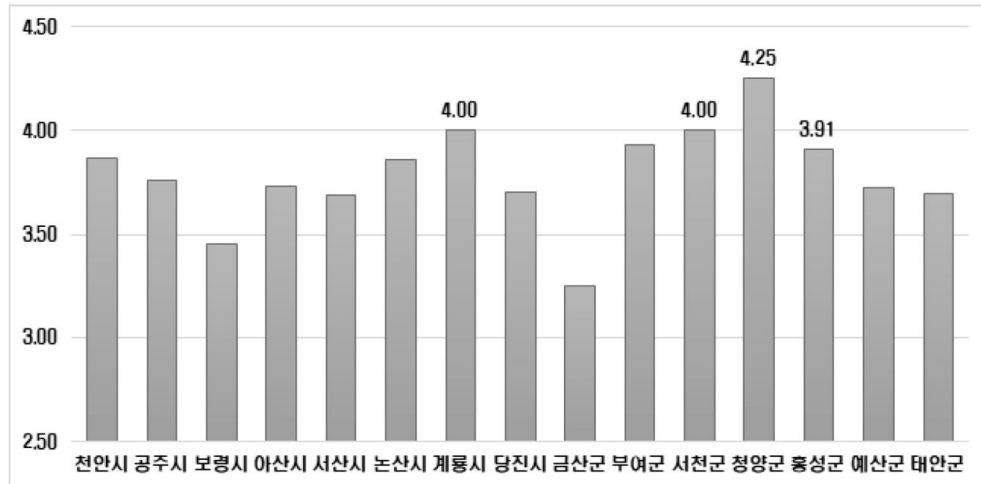


22/32

## 인프라에 대한 지역민 인식

### 인프라시설과 삶의 질과의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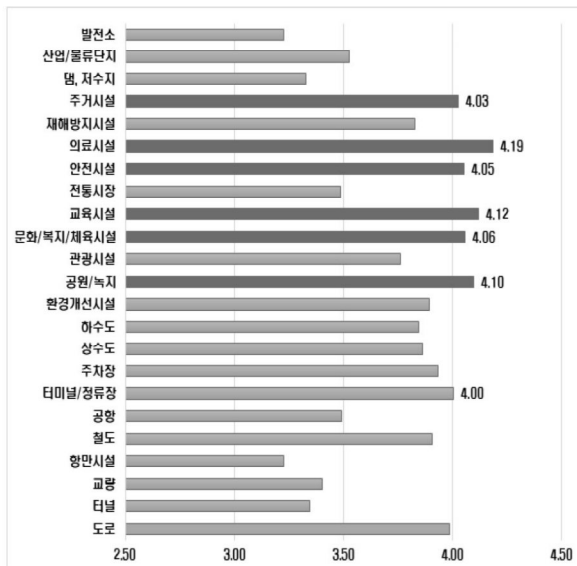
삶의 질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3.82점으로서 매우 높게 인프라 시설 수준과 생활 또는 삶의 질과 연관성이 있다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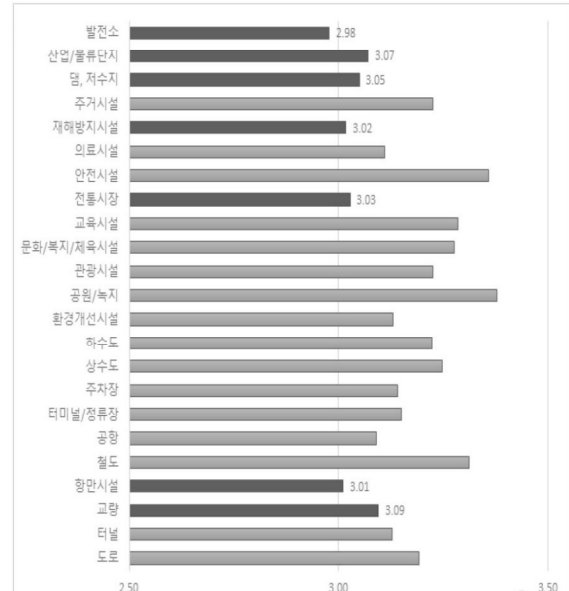
23/32

## 인프라에 대한 지역민 인식

### 인프라시설물별 삶의 질과의 연관성



### 인프라 시설별 노후도와 안전수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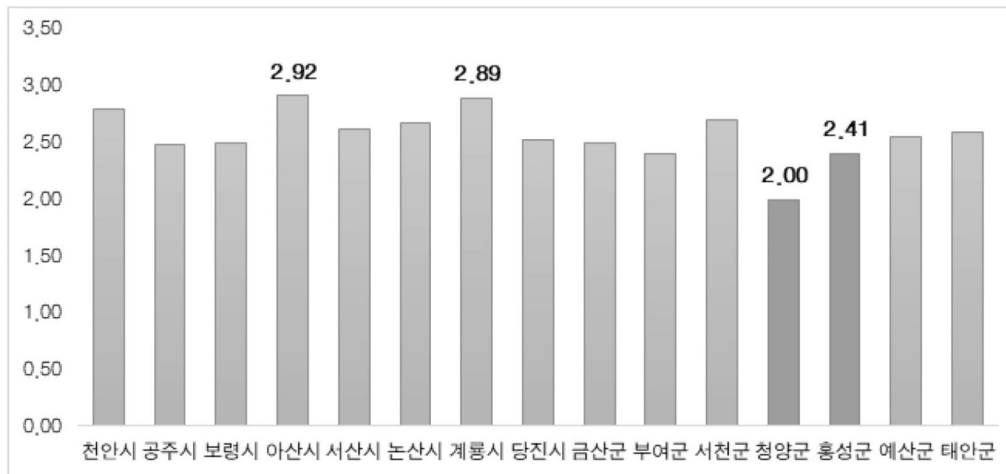


24/32

## 인프라에 대한 지역민 인식

### 지역별 현행 인프라 시설 투자 수준에 대한 평가

충남도민들은 지역의 인프라 시설의 현행 투자 수준에 대하여 2.72점으로 평가하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낮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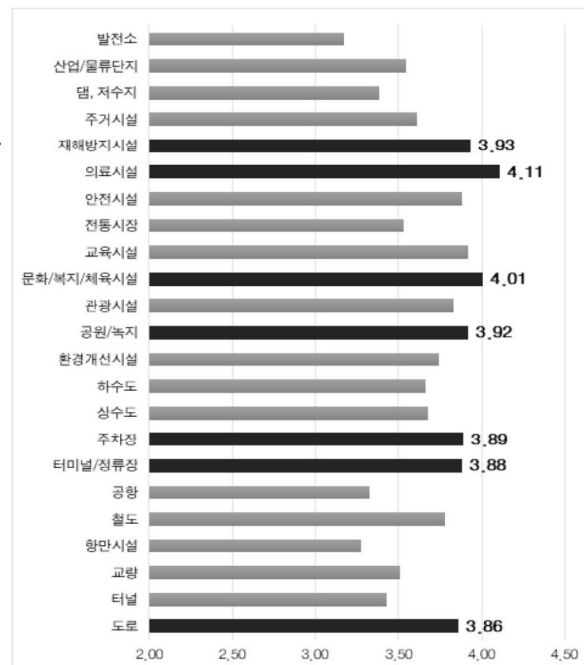


25/32

## 인프라에 대한 지역민 인식

### 인프라 시설별 투자방향

모든 인프라 시설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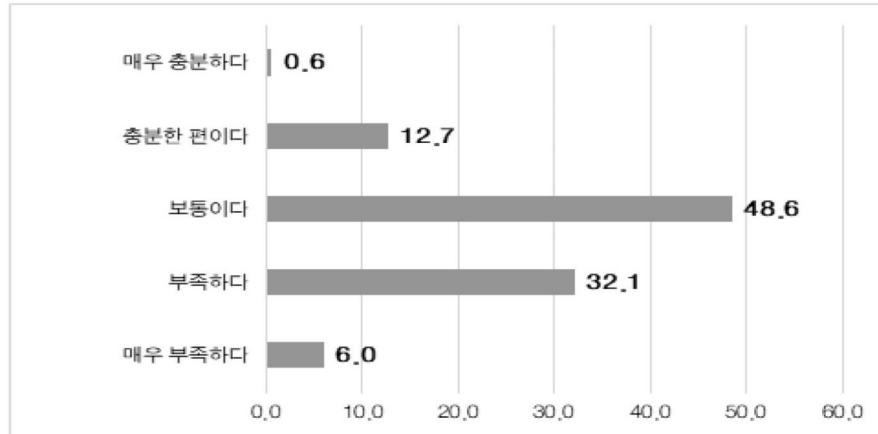
26/32



## 인프라에 대한 지역민 인식

### 타 광역시·도 대비 충남의 인프라 시설의 충족도

타 광역시·도에 비해 전반적인 인프라 시설의 충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부족하다는 의견(매우 부족하다+부족하다)이 38.1%인데 반하여 충분하다는 의견이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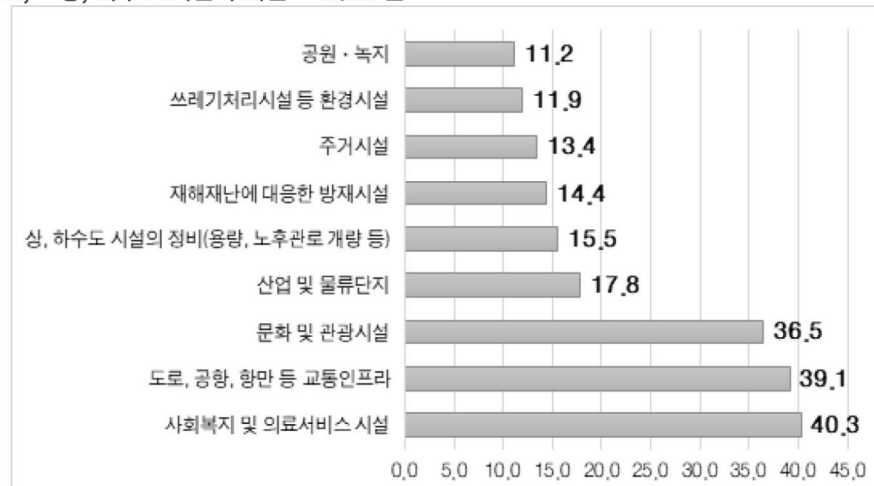
27/32

## 인프라에 대한 지역민 인식

### 충남의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적인 인프라 투자 분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프라 투자 분야는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시설' 이 40.3%로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로, 공항, 항만 등 교통인프라' 39.1%, '문화 및 관광시설' 36.5%, '산업 및 물류단지' 17.8%, '상, 하수도 시설의 정비(용량, 노후관로 개량 등)' 15.5%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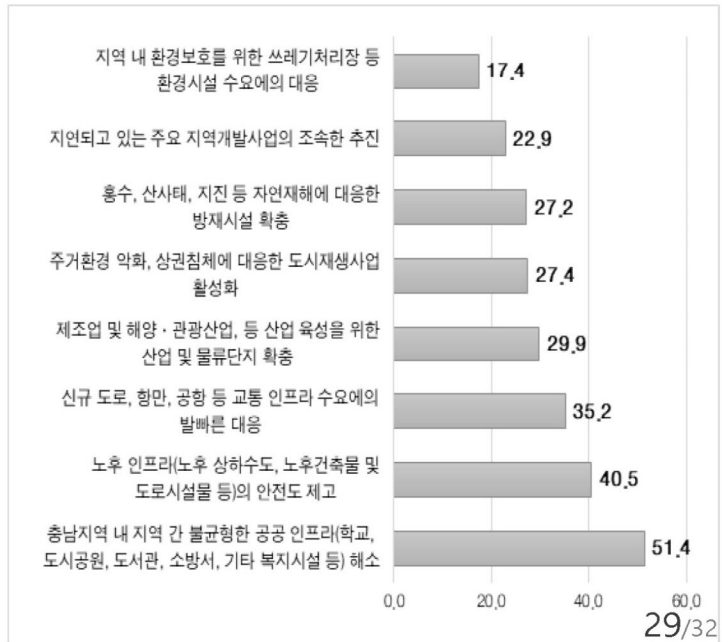


28/32

## 인프라에 대한 지역민 인식

### 충남의 향후 중점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충남지역 내 지역간 불균형한 공공 인프라 해소'가 51.4%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인프라 투자정책 방향으로 제시



## CONTENTS

01

인구  
감소와  
지역  
인프라

02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03

지역  
인프라에  
대한  
도민인식

04

시사점  
과  
정책과제

## 시사점과 정책과제

- [ 도로 ]** 지방도가 많은 충남의 지역적 특성 상 지방도의 확충과 함께 기능의 고도화를 위한 확장 및 포장 등 정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지속적인 정비를 위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적정 예산의 확보
- [ 산업단지 ]** 논공단지 정비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산업단지 재생에 대한 준비
- [ 전통시장 ]** 노후화에 대응한 종합적인 정비 및 현대화 사업 필요
- [ 공사중단건축물 ]** 입지특성과 도시재생 뉴딜 등과 연계한 활용, 정비기금 확보, 중앙-광역-기초 역할 분담 명확화
- [ 정책과제 ]** 도민(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속적인 노후인프라 관리와 투자  
교통인프라, 사회복지-의료서비스 등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과제 발굴

31/32

# 감사합니다.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 충청남도 인프라 투자 방향 및 정책과제

2018. 5. 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ontents

- I. 논의 배경
- II. 충청도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 III. 해외 주요국 및 도시의 인프라 투자 동향
- IV. 충남 인프라 투자 정책 동향 및 평가
- V.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 VI. 정책과제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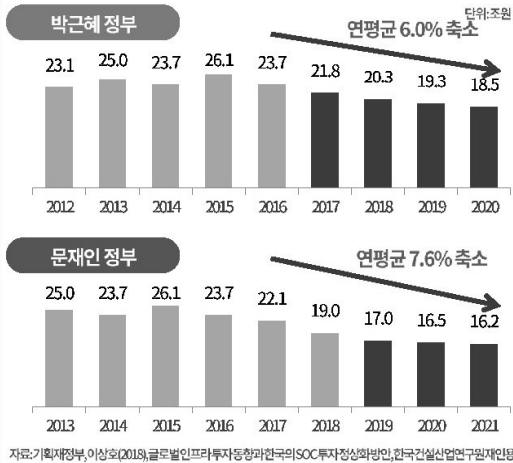
## 1. 논의 배경

정부는 지속적으로 SOC예산 축소 기조 유지

인프라예산의 지속적 삭감에 따른 투자자원 미확보 → 미래 경제성장동력 상실, 단기 산업생산액 및 일자리 감소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추이와 계획

박근혜 정부 SOC 예산 축소 계획 → 문재인 정부 축소 규모 확대



국토교통부 SOC 예산 중 신규사업 예산

구분	전체		도로		철도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78	5,624	24	683	-	-	-	-
2013	96	2,506	33	1,055	4	175	59	1,276
2014	82	2,072	17	153	6	345	59	1,574
2015	28	1,898	24	846	4	1,052	-	-
2016	45	1,030	22	359	2	221	21	450
2017	60	1,845	22	1,080	6	269	32	496
2018	32	383	3	6	-	-	29	377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별 보도 자료

국토교통부 SOC 예산 중 신규사업 예산 감소,  
2018년 383억원으로 급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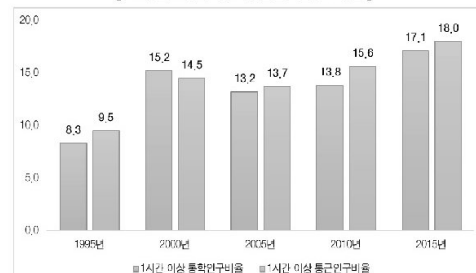
## 1. 논의 배경

우리나라 인프라의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

평균 통근시간은 58분, 교통혼잡비용 1년에 33.4조원

- 세계은행 'Global Rankings 2016', 인프라 수준은 3.79점 20위(싱가폴 4.2, 일본 4.1 등), 물류 경쟁력 3.69점 25위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은 33.4조원, GDP의 2.13%
- 우리나라 평균 통근시간은 58분, OECD 주요국 중 가장 긴 시간 소요

[1시간 이상 통학/통근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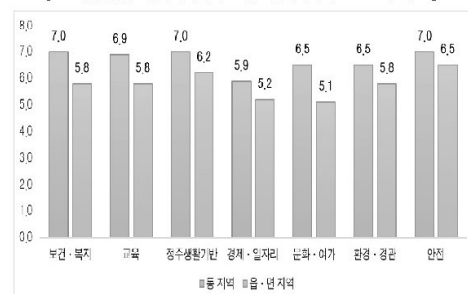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1시간 이상 통근/통학 인구 비율)

- 도시와 농어촌의 삶의 질 수준은 격차가 여전

- 2017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개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 7대 부문 모두 농어촌지역이 만족도가 낮음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삶의 질 향상 위원회(2017)

-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칠레(11.9명), 미국(10.9명) 다음으로 매우 높은 수준

3

## 1. 논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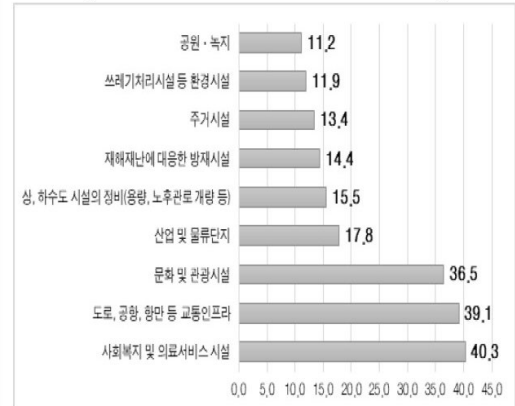
그렇다면, 충남의 교통 및 물류 인프라 여건은 어떠한가?

### 충남의 교통여건은 더욱 열악

- 충남의 시·군 도로포장률은 80% 미만, 폭원 12m 미만의 소로(小路)가 전체의 48.0%를 차지
  - 25m 미만의 중로(中路)까지 포함 시 전체 80.4% 차지
- 교량 중 30년 이상이 전체의 27.6% 차지(20년 이상 교량 64.5%)
  - 20년 이상 터널 17.2% 차지
- 충남 내 유일한 철도인 장항선은 단선, 저속 철도 → 철도의 교통 부담률 저하
  - 고속철 2개, 광역철 3개, 기타 2개 등 7개의 노선이 있으나, 시·군간 연계성이 매우 낮은 상황
- 당진항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물동량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확충은 늦어지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어항 등의 노후화 심각, 원활한 정비사업이 수행되고 있지 못함

- 충남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529명), 충남도민들이 생각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프라로서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시설” 다음으로 “도로 및 교통 인프라” 제시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인프라 투자 분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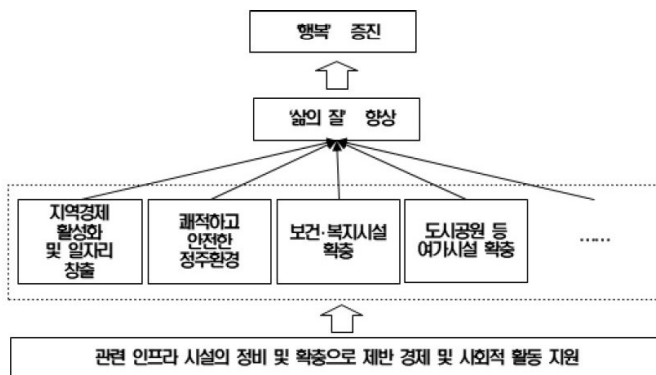
## 1. 논의 배경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의 정비 및 확충이 기반

지역민이 체감하는 ‘행복’의 중요한 요인은 ‘삶의 질’ 향상 → ‘인프라’와 매우 밀접한 관계

- 충청남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생활기반 시설, 충분한 문화·여가 활동의 지원, 보건·복지시설 확충 등 인프라 투자 필요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인프라 투자 분야]



#### 충남도민의 인프라 투자 중요성 인식

※ 충남도민 대상, 인프라 투자와 삶의 질, 지역 경쟁력 간의 관계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529명 응답)

- 인프라 투자와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해 3.82점(5점 만점)으로 평가 →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
- 인프라 투자와 지역경쟁력 향상과의 연관성에 대해 3.56점으로 평가 → 지역경쟁력 향상에 있어 인프라 투자는 깊은 관련 인식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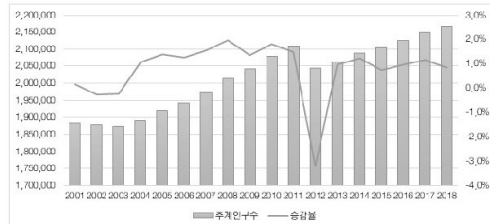
## 2. 충남도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 등 사회, 경제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성장 및 직결된 인프라 수요 증대 예상

### 2015년부터 인구 감소세 전환, GRDP 증가율 축소

- 충남 인구는 2012년 세종시 분리 이후 축소. 그러나, 이후 급격한 증가로 2016년 세종시 이전 수준 회복. 그러나 증가율은 2012년 이전 수준 못미침.

[충남 추계인구수 및 증감률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지역 내 총생산(GRDP) 증가율은 전국평균을 상회, 그러나 실제로 증가율은 2010년 이후 다소 축소
  -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0%로서 전국 평균에 4.2%에 비해 높고, 제주, 경기, 충북, 강원 다음으로 높음.

### 충남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기업체 수 증가

- 충남의 산업구조 중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제조업 비중으로 9개 광역도 중 가장 높음.
  - 전국 평균 26.5% 대비 충남의 제조업 비중은 44.9%로서 매우 높음
- 충남지역의 기업체 수는 최근 3년간('14~'16) 지속 증가, 일자리 여건도 개선
  -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2016년 기준 77.1개로 전국 평균을 상회. 특히, 2013년까지는 전국평균 하회
  - 구인배수(신규구인인원/신규구직건수) 변화 : 2007~2011년 0.79 → 2012~2016년 0.86

→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성장세로 사회, 경제적인 인프라 수요의 증대 예상

→ 특히, 높은 제조업 수준을 감안,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에 대한 수요 더욱 높아질 전망

6

## 2. 충남도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충남의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 등에 의한 지역 안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큰 상황

###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지속

- 전국 9대 광역도 중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은 '07~'16년까지 10년간 충북 다음으로 적은 피해 발생

[전국 9대 광역도 자연재해 발생 현황(금액)]

(단위 : 억원)

지역	재산	인명	시설	농림	교통	지진	계
경기	39,316	1,013,741	6,691	1,091	317	-	1,061,156
강원	21,792	471,951	43,765	2,143	2,023	-	541,674
충북	18,027	105,041	11,550	1,161	18	1	135,798
충남	181,258	187,522	10,909	3,238	17,785	-	400,712
전북	338,368	326,090	11,567	2,324	1,012	-	679,461
전남	985,940	255,158	12,495	3,266	11,099	2	1,267,960
경북	426,444	124,023	15,114	2,564	18,155	13,782	600,082
경남	731,959	436,492	1,159	1,727	688	8	1,172,043
제주	348,327	4,735	5,902	1,916	245	-	351,125

자료 : 각년도 재난연감

- 그러나 자연재해 중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한 피해는 타 광역도들보다 높은 상황
  - 충남 전체의 안전등급은 3등급으로 중위권. 그러나 서산시, 보령시, 청양군 등 지역은 종합안전등급에서 9~10등급으로 매우 낮음.
- 사회적 재난(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도 지속

- 충남지역 최근 6년간 연평균 화재발생건수는 2,900여건 발생. 인구 1만명당 화재발생건수 강원도 다음으로 높음

[최근 6년간 화재로 인한 피해 현황]

(단위 : 원천, 전, 만)

연도	발생건수	피해액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망	부상	이재	
2010년	2,994	27,140	135	26	92	250
2011년	3,089	17,956	124	18	117	207
2012년	3,098	21,740	95	17	107	165
2013년	2,784	24,509	108	13	82	210
2014년	2,838	20,476	86	26	70	206
2015년	3,031	17,281	62	17	45	232

자료 : 국가통계포털

- 특히,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커서 충남의 안전사고 안전등급은 4등급(전체 5등급)

→ 지속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성 및 높은 사회적 재난 피해 등을 감안 시, 방재시설 및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 필요

→ 각종 시설의 노후화 증가로 인하여 각종 자연 사회적 재난 피해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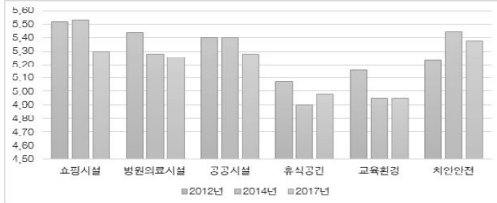
## 2. 충남도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충남지역의 인프라는 충분한가? 생활인프라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

### 충남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인프라 부족

-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

[충남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결과(2017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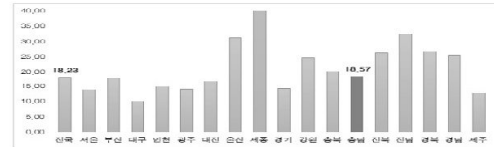
- 쇼핑시설, 병원의료시설, 공공시설 등 거의 모든 시설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전국 최저의 상수도, 하수도보급률을 기록

- 상수도 보급률 84.4%로 전국 평균 96.5%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
- 하수도 보급률 74.3%로 전국 평균 92.9% 대비 크게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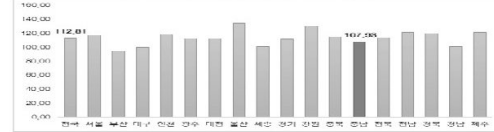
- 도시공원, 체육시설, 의료시설 등 충남도민들의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

[도시공원 조성면적 비교(단위: 천m<sup>2</sup>)]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 십만명당 체육시설 수(단위: 개소)]



자료: 국가통계포털

→ 충남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인프라의 부족에 대응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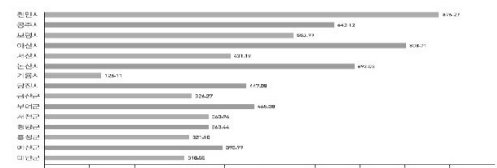
## 2. 충남도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충남지역의 인프라는 충분한가? 충남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의 지역간 격차 심화

### 인프라 시설의 지역간 격차도 큰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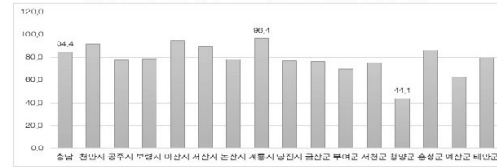
- 도로연장에 있어서 시간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 아산시, 논산시에 비해 금산군, 태안군, 홍성군 등 열악한 상황

[충남 시군별 도로연장 현황(단위: km)]



- 상수도 보급률도 지역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계룡시가 96.4%인데 비해 청양군은 44.1%에 불과

[충남 시군별 상수도 보급률 현황(단위: 천m<sup>2</sup>)]



자료: 국가통계포털

- 특히, 도시 조성 시기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경우, 노후 건축물 비중 높은 상황

[충남 시군별 노후 건축물 비중]

시군	연세 건축물			수거물 건축물		
	연면적	노후건축물 면적	비율	연면적	노후건축물 면적	비율
천안시	20,045,494	2,377,800	11.9%	8,749,411	1,172,162	13.4%
천안시 서북구	27,700,248	1,370,291	4.9%	11,962,096	599,429	5.0%
공주시	9,713,091	1,738,154	17.9%	3,814,053	1,003,149	26.3%
보령시	7,995,938	883,870	11.1%	2,931,368	426,913	14.6%
아산시	26,225,508	1,875,352	7.2%	10,997,733	1,039,757	9.5%
서산시	13,808,865	1,512,051	10.9%	6,068,434	903,139	14.9%
논산시	10,074,127	1,779,400	17.7%	3,827,811	1,064,339	27.8%
계룡시	2,759,709	99,363	3.6%	1,321,685	34,573	2.6%
당진시	20,308,674	622,132	3.1%	8,895,048	307,302	3.5%
금산군	4,887,781	921,073	18.8%	1,771,875	586,535	33.1%
태안군	6,020,649	1,854,860	30.8%	2,408,154	1,150,658	47.8%
서천군	4,093,982	769,800	18.8%	1,501,771	396,185	26.4%
예산군	2,907,229	738,878	25.4%	1,179,790	515,070	43.7%
홍성군	9,378,527	554,300	5.9%	3,508,714	262,310	7.5%
예산군	8,137,788	1,462,922	18.0%	2,941,855	881,950	30.0%
태안군	5,120,434	651,450	12.7%	2,284,400	441,328	19.3%

자료: 2016년 건축물 대장 집계

→ 도내에서의 지역간 공공 인프라 양적, 질적 차이는 지역 내 불균형발전과 갈등 유발 → 인프라 공급의 균형 유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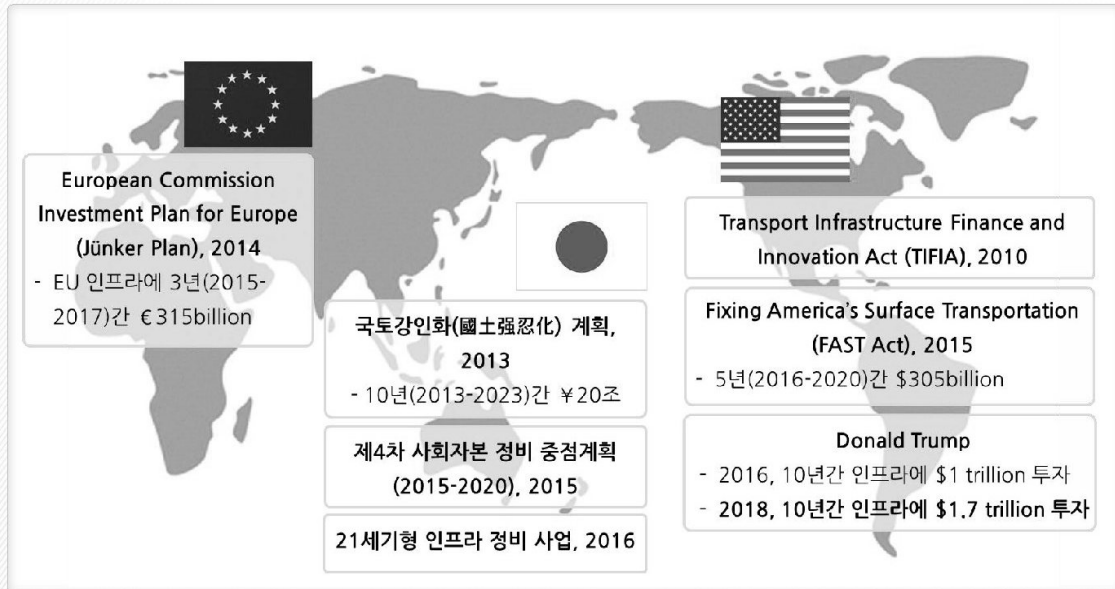
9



### 3. 해외 주요국 및 도시의 인프라 투자 동향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최근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주력

주요국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



10

### 3. 해외 주요국 및 도시의 인프라 투자 동향

최근 주요국의 도시와 지방정부에서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 지속 추진

주요국의 도시 및 지방정부 지역발전을 위한 재생 프로젝트 개발 및 재원조달방안 다양화

01	미국 버지니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정부 차원에서 교통인프라 재원조달 방안 다양화: 유류세 부과 방식 변경, 'SMART SCALE' 프로그램 시행 등 추진</li> <li>P3(Public-Private-Partnership) 프로그램 활용: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활용, 재투자 분야 프로젝트로 점차 확대 추진</li> </ul>
02	프랑스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세나(Massena) 재개발사업: 마세나역을 포함한 23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사업 발굴. 수익성이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시설에 들어간 비용을 수익성이 높은 시설에서 보완하는 방식</li> <li>레오펜테(Réinventer Paris) 파리: 파리 도시재생사업, 방치되거나 이용률이 낮은 공유지, 공공시설의 활용방안을 공모를 통하여 진행</li> <li>Zac Clichy-Batignolles 재개발사업: 철도를 중심으로 분리된 두 지역의 연계성 강화(보행자 전용 교량) 및 공공, 민간 건축물 유치</li> </ul>
03	독일 슈투트가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슈투트가르트-올름 프로젝트: 슈투트가르트 21과 벤들링엔-올름 선로사업으로 구성. 대지가 부족한 도심지에 기존 인프라의 재배치를 통해 대규모 공간의 확보와 개발</li> <li>지하화와 고속철도 유치 등을 통해 주민의 이동성 제고와 일거리 창출 도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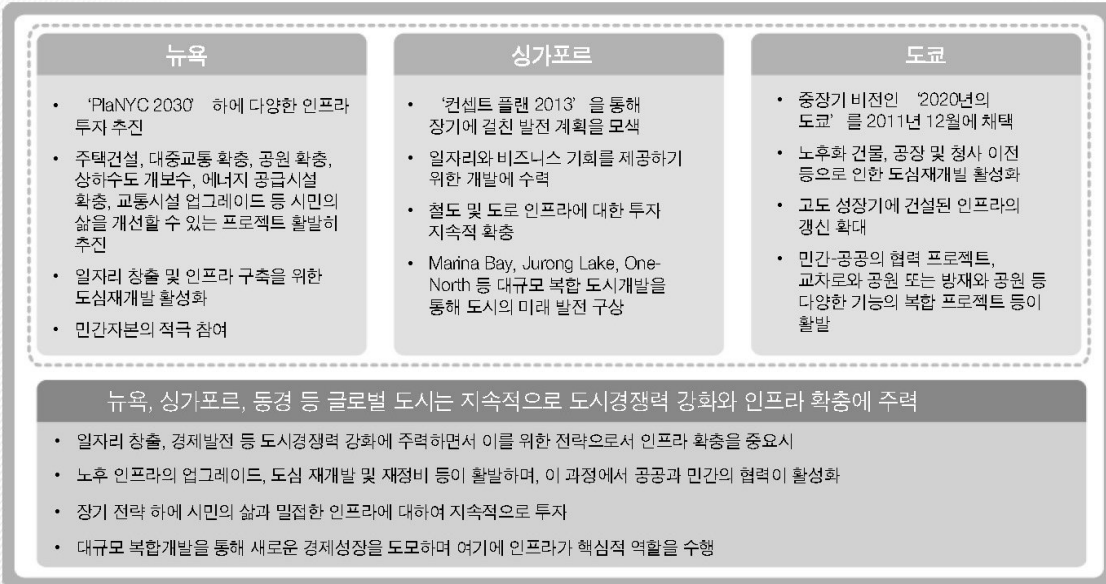
→주요국의 도시 및 지방정부에서는 제한된 도시공간의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음. 특히,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

11

### 3. 해외 주요국 및 도시의 인프라 투자 동향

뉴욕, 싱가포르, 도쿄 등 세계 주요도시들은 중장기적인 발전전략 하에 체계적인 도시개발 추진

세계 주요도시들은 도시발전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 전략적으로 도시발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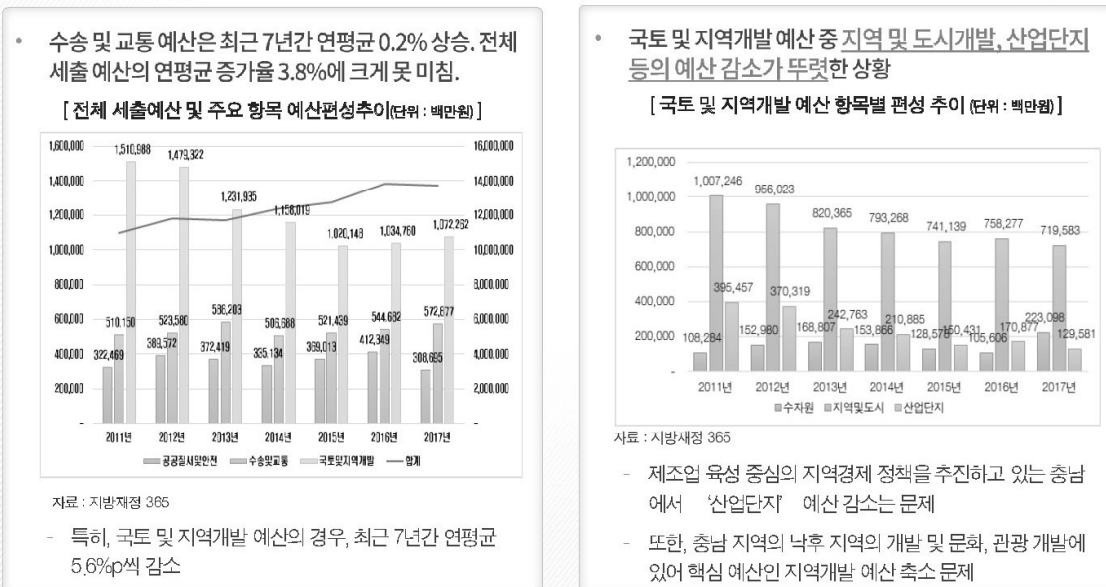


12

### 4. 충남 인프라 투자 정책 동향 및 평가

수송 및 교통 등 SOC 예산의 축소 경향은 지역경쟁력 약화 초래 우려

충남지역의 최근 인프라 예산은 지속 축소 편성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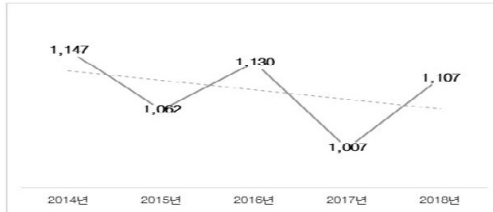
#### 4. 충남 인프라 투자 정책 동향 및 평가

##### ■ 도로 및 교통 분야

##### 도로 예산 중 신규 도로 건설 예산의 지속적 축소.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의 증가

- 최근 5년간(2014~2018)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예산은 등락폭은 있으나, 지속 축소

[도로 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자료: 충남재정공시

- 특히,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도로안전 확충 예산 감소 뚜렷

[도로부문별 예산편성 추이 (단위: 억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604	507	420	346	421
도로안전시설 확충	182	87	93	72	60
지방도 유지 관리	40	23	93	105	110
지방도 정비사업	302	353	417	420	410

-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진행 중, 그러나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540개소에 달하는 상황(2017년)

- 도로시설물 중 충남도내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2,774개소. 이중, 1,234개소 원료, 540개 보강 필요

- 2017년 현재 충남도내 지방도 중 우선적으로 노후 포장 도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337km에 달하는 상황

- 신규도로건설예산의 축소로 '보령-태안 국도건설사업', '보령-부여 국도 건설사업', '성주우회도로' 등 신규 예정사업의 추진차질 우려

→충남지역의 낮은 폭원, 지역간 이동성의 한계 등을 감안 시 신규 건설 예산의 축소는 문제

→문화 및 관광 중심지를 지향하는데 있어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지원은 지역경제 성장에 악영향 우려

14

#### 4. 대전 인프라 투자 정책 동향 및 평가

##### ■ 산업·경제 / 도시·주택 분야

##### 산업단지 수요 대응 적정 예산 편성 미흡

- 산업 및 경제 인프라 투자는 2014년 이후 전체적으로 축소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산업·경제분야 주요 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산업단지	342	363	385	278	196
지역산업 진흥 및 고도화	124	16	54	68	53
첨단산업 육성지원	22	61	26	41	42
친환경도시 시범사업	-	-	-	22	78
시장현대화	75	69	33	28	31
계	563	509	496	437	400

주: 각년도 분예산 기준  
자료: 충남재정공시

- 노후 산업(특히 농공단지) 증가에 대응한 예산 편성 미흡
- 신규 조성중인 산업단지들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예산 확보 필요

→산업, 경제 분야 인프라에 대한 예산 축소는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정책에 차질 우려

##### 원도심 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 본격 예산 투입

- 충남은 최근 주택 및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 중이나, 그 금액 비중이 현저히 낮은 상황

[도시·주택분야 주요 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노후광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	-	-	2	2
취약지역 개조사업	-	-	7	22	24
도시상하수관 개선	9	7	12	11	22
기초상하수관 확충	-	-	-	-	20
도시재생 사업 (선도/일반사업)	-	44	50	17	3
농촌생활환경 정비	46	43	39	41	39
계	55	94	108	93	110

주: 각년도 분예산 기준  
자료: 대전시 예산/재정

- 농어촌 지역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개발에 있어 우선적인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

→현재 진행중인 도시재생시범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충남형 공원 조성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

→1차 조사된 102개의 도시재생 수요 등 도시재생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대응 필요

15

## 4. 충남 인프라 투자 정책 동향 및 평가

### ■ 환경/안전 분야

#### 현재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하천정비 및 노후 상·하수관로 정비 사업 적정 예산 투입 필요

- 충남은 주요 환경사업으로 생태하천 정비사업 등 하천정비사업과 노후상수도 및 하수도시설 정비임.

[주요 환경 정비 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사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722	684	730	721	716
조여진 정비사업	181	215	191	202	201
생태하천 복원사업	107	197	177	212	182
노후상수도 정비	-	-	-	73	139
하수관로 정비	748	508	634	665	664
공공하수처리시설	470	393	341	251	246
노시정수내용	316	592	377	209	94
노여정수내용 하수도 정비	335	336	395	314	314
폐기물처리시설	26	33	18	28	44
계	2,879	2,925	2,846	2,647	2,556

충남 6개군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 소요 사업비는 2,042억 원. 그러나 2017~2018년 투입된 예산은 212억원에 불과

- 하천 제방 보강 및 신설 필요구간 1,141km, 소하천 미정비 1,176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예산으로는 많은 시간 소요 예상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예산을 2017년부터 10억내외의 규모로 편성 중이나, 크게 미흡한 상황

[시설 안전 관련 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사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	-	-	11	10
무주·저류시설 설치	251	120	120	52	33
세제임대시설(시·군·구·읍·면·동)	486	454	344	361	365
사해위험지역정비(하·상수관로)	-	-	10	26	30
계	737	584	474	450	438

주: 각년도 본예산 기준  
자료: 충남 재정공시

- 2018년 재해예방사업으로 1,143억원을 투입 예정. 그러나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

→충남은 소하천, 재해위험저수지 등이 많이 소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방재예산 편성이 요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하천정비사업, 노후 상·하수도 정비 등은 충남도민 안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 필요

16

## 4. 충남 인프라 투자 정책 동향 및 평가

### ■ 공원·녹지/공공시설 분야

####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계획 수립 필요

-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도시숲, 명상숲 등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의 확충에 집중

[주요 공원·녹지 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사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연대 조성	141	149	171	164	131
자연휴양림	16	24	35	32	39
도시숲, 명상숲,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30	28	33	43	39
치유의 숲 조성	-	-	4	8	24
숲길 조성 관리	17	18	16	14	18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도시공원)	43	18	18	12	13
계	247	237	277	273	264

주: 각년도 본예산 기준  
자료: 대전시 예산/재정

- 일부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속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생활권 내 소규모 녹지공간을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대규모 공원 조성사업도 조속 검토 필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조속 마무리 필요

#### 공공시설에 부족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미흡

- 문화·관광, 체육 관련 시설 투자는 크지 않은 상황

[주요 문화·관광·체육 분야 예산 편성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체육	충남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11	4	1	11
	수영장·체육시설	30	9	13	17
	생활체육공원 조성	6	6	6	6
	지방 체육시설	79	66	102	69
	충남체육진흥재단	28	29	21	28
	충남건강체육시설	-	-	2	0
	국민체육센터	27	56	54	0
	체육시설 민간사업(RTI)	181	188	177	179
	수계	304	308	373	373
	충남체육센터 건설	0	0	25	84
문화	충남문화재단	5	4	2	1
	충남문화재단	162	105	62	53
	충남문화재단	1	2	5	15
	충남문화재단	5	2	5	15
	충남문화재단	5	2	5	15
	충남문화재단	5	2	5	15
	충남문화재단	5	2	5	15
	충남문화재단	5	2	5	15
	충남문화재단	5	2	5	15
	충남문화재단	5	2	5	15
관광	충남문화재단	5	2	5	15
	충남문화재단	5	2	5	15
	충남문화재단	5	2	5	15
	충남문화재단	5	2	5	15
	충남문화재단	5	2	5	15
	충남문화재단	5	2	5	15
	충남문화재단	5	2	5	15
	충남문화재단	5	2	5	15
	충남문화재단	5	2	5	15
	충남문화재단	5	2	5	15
계	427	403	353	430	447.5

주: 각년도 본예산 기준  
자료: 대전시 예산/재정

→문화·관광, 체육 등 공공시설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규모의 축소는 문제

→특히, 지역 내 불균형한 공공시설을 감안, 재검토 필요

17

## 4. 충남 인프라 투자 정책 동향 및 평가

###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인프라 투자 전망

#### 중장기적인 인프라 투자계획도 확대 가능성 낮은 상황

-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향후 5년 동안 재정 지출규모는 2.3%의 성장률 예정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 십억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성장률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6,617	6,765	6,934	7,037	7,234	34,588	100	2.3
일반공공행정	1,339	1,288	1,179	1,082	1,020	5,908	17.1	-6.6
공공 질서및 안전	297	310	324	350	355	1,637	4.7	4.6
교육	322	325	333	340	347	1,668	4.8	1.9
문화 및 관광	280	287	251	212	206	1,238	3.6	-7.5
환경보호	362	364	364	355	348	1,794	5.2	-1.0
사회복지	1,887	2,021	2,151	2,427	2,478	10,965	31.7	7.0
보건	136	147	136	206	185	632	2.4	7.9
농림수산	1,018	1,021	1,054	1,062	1,073	5,239	15.1	1.3
산업중기기업	347	357	387	426	389	1,907	5.5	2.9
수송 및 교통	284	310	403	233	513	1,742	5.1	16.0
국도 및 지역개발	293	308	296	321	311	1,530	4.4	1.5
과학기술	51,303	24,148	23,405	20,323	8,345	127,524	0.4	-36.5

자료: 충남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 향후 5년간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인프라 관련 예산은 전체 재정규모 대비 8.9%를 차지할 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SOC예산 투입계획 (단위: 십억원, %)]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송 및 교통	284	310	403	233	513	1,742	4.7
도로	242	224	334	163	442	1,405	3.8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41	86	69	69	71	337	0.9
국토 및 지역개발	293	308	296	321	311	1,530	4.2
수자원	119	120	121	122	124	606	1.6
지역 및 도시	152	159	145	169	157	782	2.1
산업단지	21	30	30	30	30	142	0.4

자료: 충남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 2013년~2017년 수송 및 교통분야의 평균 예산편성 실적은 -9.2%였다는 점에서 향후 수송 및 교통분야의 매년 16.0%증가는 긍정적
- 그러나, 지역 및 도시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개발수요에의 대응 미흡 우려

18

## 4. 대전 인프라 투자 정책 동향 및 평가

### ■ 중기 핵심 인프라 투자 방향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완공 위주로 투자 예정

- 도로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을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

사업명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수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2,845	1,321	675	425	407	17	기투자 5,939억
도로 안전시설 확충	502	48	76	76	76	225	기투자 1,403억
외곽권역 개발(지방도)	150	20	25	30	35	40	
시군도 양시원기	862	166	167	173	178	180	
광역도로 정비사업	30	10	10	10	-	-	기투자 442억
지방도 정비사업	7,748	495	955	230	615	337	향후 406억
도로 양자(국·시·군·도)	451	98	98	98	98	99	
도로 유지보수(지방도)	365	73	73	73	73	73	
계	12,993	2,230	9	6	2	5	

- 산림 및 공원녹지 분야에 있어서는 사방댐시설 확보에 집중 투자 예정

사업명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수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사방댐 시설	991	131	158	190	231	281	
지반유출 및 낙물판 조성	158	32	32	32	32	30	
지자체 자연환경과	211	40	41	42	48	45	
시·군·도 산지, 현상화, 원도비분류 등 조성사업	207	39	40	41	43	44	
생태안 상의 공업 조성	61	12	12	12	12	12	
치유의 숲 조성	131	25	25	26	27	28	
계	1,759	279	308	343	388	440	

-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노후하수관 및 상수도시설 정비 예산을 본격 투입 예정

사업명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수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하수도 정비사업	913	183	183	183	183	183	기투자 21.2억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184	437	437	437	437	437	
소규모 수도시설 개발	239	48	48	48	48	48	
노후 상수도 정비	937	198	198	200	201	140	
하수관거 정비	3,325	665	665	665	665	665	
도시상하수도	472	94	94	94	94	94	
하수처리시설	1,230	246	246	246	246	246	
농어촌하수도 정비	1,568	313	313	314	314	314	
연간하수처리시설	889	178	178	178	178	178	
하수처리시설 대용량	300	60	60	60	60	60	
하수관거 정비	1,883	377	377	377	376	376	
소규모 시설 설치	237	45	45	47	49	50	
대용량 정비 사업	57	10	11	11	12	12	
계	8,070	1,624	1,625	1,627	1,628	1,567	

- 지역개발 지원 예산의 편성 등 지역 및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추진 예정. 내포신도시 조기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

사업명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수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충청 유교문화기 중심개발	115	22	93	-	-	-	기투자 52억
공주, 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68	12	13	13	15	15	
내포 문화기 개발	60	4	15	42			
지역개발 지원	867	201	167	167	167	167	
내포신도시 건설	304	93	78	77	57		
계	1,414	332	366	299	239	182	

19



#### 4. 충남 인프라 투자 정책 동향 및 평가

인프라 투자 예산 축소는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 우려

##### 충남의 인프라 투자 축소 지속

[대전시 예산 편성 추이 (단위: 백만원)]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950,000	100.00	4,150,000	100.00	4,217,000	100.00	4,557,000	100.00	4,735,000	100.00
일반공공행정	342,316	8.66	398,409	9.60	360,500	8.55	500,739	10.99	514,683	10.87
공공질서 및 안전	246,936	6.25	227,664	5.49	229,934	5.45	204,904	4.50	115,690	2.44
교 육	246,066	6.23	249,876	6.02	257,805	6.11	295,392	6.48	318,579	6.73
문화 및 관광	140,538	3.56	155,417	3.74	184,371	4.37	209,503	4.60	239,707	5.06
환경보호	343,808	8.70	351,764	8.48	374,310	8.88	356,608	7.82	327,531	6.92
사회복지	936,359	23.71	1,147,279	27.64	1,205,333	28.58	1,282,719	28.15	1,359,341	28.71
보 건	74,772	1.89	73,296	1.77	83,405	1.98	115,284	2.53	109,295	2.31
농림해양수산	785,979	19.90	759,496	18.30	768,800	18.23	794,076	17.43	853,552	18.03
산업·중소기업	70,655	1.79	89,456	2.15	70,142	1.66	95,207	2.09	101,196	2.14
수송 및 교통	209,175	5.30	149,188	3.59	142,270	3.38	153,415	3.37	142,159	3.00
국토 및 지역개발	227,716	5.76	202,755	4.89	164,976	3.91	156,997	3.44	240,775	5.09
과학기술	6,655	0.17	5,771	0.14	12,784	0.30	12,533	0.27	10,762	0.23
예비비	47,331	1.20	43,012	1.04	52,162	1.24	52,908	1.16	57,552	1.22
기 타	271,694	6.88	236,617	5.71	310,208	7.36	326,715	7.17	344,178	7.25

•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지난 5년간 '수송 및 교통' 예산은 지속 축소. 2013년 전체 예산 대비 5.3%에서 3.0%로 축소

• 반면, 사회복지 투자는 2013년 23.7%에서 2017년 28.7%까지 대폭 확대

• 결국, 인프라 투자 축소는 사회복지 투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

• SOC 예산 감축은 지역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도로 등 인프라 공급을 더디게 하는 원인



→ 현재 충청남도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상 지속적인 인프라 시설 수요 발생 불가 → 인프라 공급 지연은 지역 경쟁력 약화를 가속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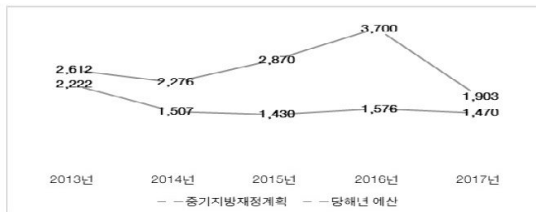
20

#### 4. 충남 인프라 투자 정책 동향 및 평가

인프라 투자 정책의 부재 → 인프라 투자의 정책적 목표 달성 미흡

현행 인프라 투자 정책으로는 재정계획 수립 시 의도한 인프라 투자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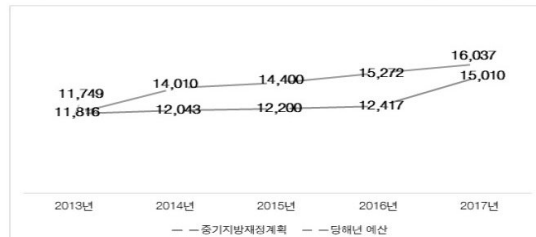
[수송 및 교통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투자액 추이(단위: 억원)]



• 인프라 투자 정책의 목표 불명확 → 사회, 경제적 단기 현안 및 이슈로 인한 잦은 목표 변경, 단기 인프라 시설 수요 대응에 급급

• 실제로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실제 투자액을 비교해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자 계획 대비 실제 투자액은 낮고,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화

[사회복지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투자액 추이(단위: 억원)]



• 반면, 사회복지분야 투자는 당초 목표 대비 크게 상회하는 예산 집행



→ 당초 재정계획 상 인프라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 인프라 투자 정책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

21

#### 4. 충남 인프라 투자 정책 동향 및 평가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공기 지연 및 사업 착수 지연으로 지역민 불편 가중

지역의 숙원사업인 도로 및 교통, 도시개발 등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

- 인접지역발전과 교통혼잡도 완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도로사업들이 지속 공기 지연 및 사업 착수 지연

선장~염치 지방도 건설사업	준공목표년도 2017년 → 2018년 사업비 축소로 준공 미정
대죽~정안 지방도 건설사업	2017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2년 이상 지연 예상
지방도 615호, 지방도 618호, 지방도 645호	2012년~2013년 착공 예정 → 현재도 미착공된 상태

- 도로사업뿐만 아니라 주요 철도 및 기타 지역개발사업도 표류 중

아산~석문 산단선 철도건설사업	현재 지연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 준공이 불투명한 상황
KTX 논산후련소역 신설	
충청산업문화철도	

- 이밖에도 당초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한 당진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등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현재 진행 중. 기한 내 준공을 위해 선남은 기간 적기 투자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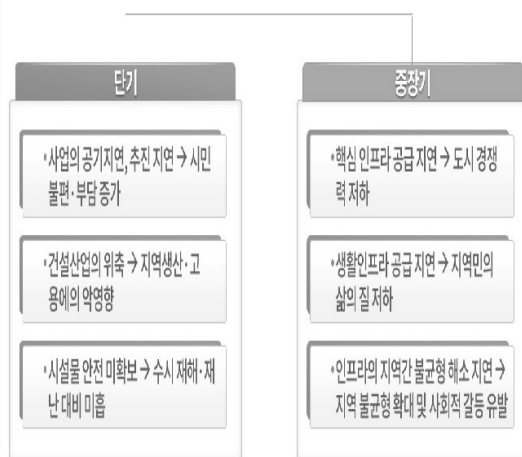
22

#### 5.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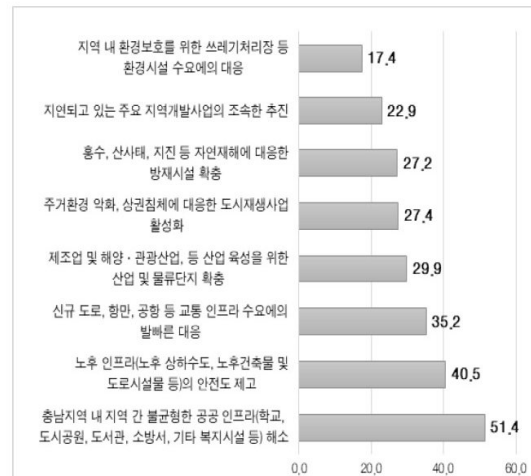
충남의 인프라 투자 축소는 장, 단기적으로 충남지역과 충남도민에게 악영향

단기적으로는 시민불편 가중 및 지역생산/고용 악영향,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경쟁력 및 삶의 질 저하

인프라 투자 축소의 단기 및 중장기 영향



[충남도민이 생각하는 인프라 투자 정책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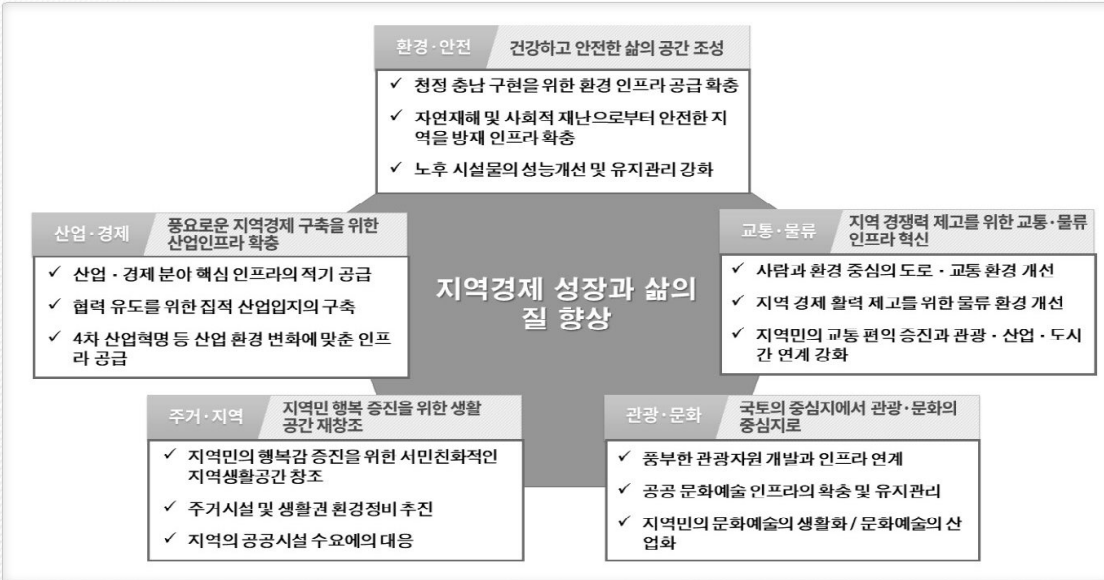


23

## 5.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인프라 투자의 목표는 지역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

### 충남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문별 인프라 공급의 방향 설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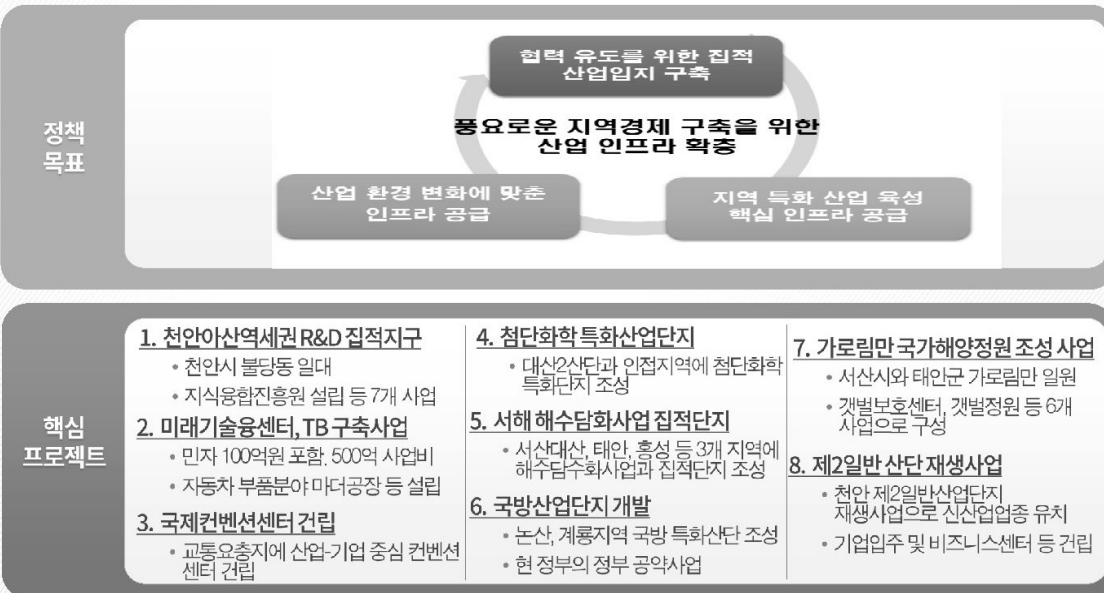


24

## 5.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 ■ 산업·경제 분야

### 제조업 등 산업경제의 요충지에 걸맞는 산업/경제 인프라 구축



25



## 5.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프로젝트  
예시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 사업추진배경

- 가로림만은 2016년 7월, 국내 최대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실효적 관리체계의 확보 및 가로림만의 생태가치의 확산 필요성 증대
- 국가해양정원은 서산의 산업생태계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순천만 이상으로 생태관광지로 키울 수 있다는 풍부한 잠재력 보유

#### 사업추진현황

-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며,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충남 서산시 ~ 태안군 가로림 만 일원으로 조성 면적은 91,237km<sup>2</sup> 내임.

#### 사업추진내용

-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연간이며, 추정 사업비는 정원조성 1,300억원, 주변개발 1,100억원 등 2,500억원임.
- 자연환경 자원 기반 공간별 배치(해양, 갯벌, 하천, 연안)를 지향하여 국제 갯벌보호센터, 점박이물범 보호센터, 해양생태 자원관, 갯벌체험관, 갯벌정원, 화합의 다리 등을 설치할 계획
- 사업비는 총 2,500억원 투입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산 및 태안 지역의 경제성장 유도과 갯벌자원의 효율적 활용  
→충남지역에 특화된 해양개발의 선도사업임.

26

## 5.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 ■ 교통·물류 분야

#### 교통 체증 해소 및 안전 확보, 물류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정책  
목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도로  
교통환경 개선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 인프라 혁신

물류 환경 개선으로 산업  
활력 제고

관광 · 산업 · 도시 간 연계  
강화

핵심  
프로젝트

#### 1. 장항선복선전철화조기추진

- 충남 주오도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의 복선전철화

#### 2. 충청산업문화철도건설사업

- 세종 조치원역~충남 보령을 연결하는 단선 전철 건설사업

#### 3.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조기추진

- 서산~천안~영주~봉화~울진을 잇는 총연장 340km의 복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

#### 4. 천안역 개선사업

- 임시 천안 역사의 증, 개축

#### 5. 독립기념관수도권 전철 연장

- 2개역사의 신설 및 선로 건설사업

#### 6. 당진~아산고속도로조기착공

- 당진시 신평면~아산시 인주 16.8km

- 교통정체 해소 및 서북부개발

#### 7. 국도38호선연장및교량건설

- 가로림만 단절구간의 연결

#### 8. 평택당진항진입도로

- 급증하는 물동량 증가에의 대응 사업

#### 9. 해삼산업복합단지개발

- 해삼 양식 및 가공, 유통, 판매 시설 집적 개발

#### 10. 당진 복합물류단지

- 당진항 내에 복합 물류시설을 조성
- 충청권 물류 수요의 해소

27

## 5.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프로젝트  
예시

### 국도 38호 노선 연장 및 교량 건설

#### 사업추진배경

- 국도 38호선은 충남 서산에서 강원도 동해를 잇는 총 연장 313.7km의 도로로서 가로림만으로 인해 태안군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해당 지역의 개발을 저해해 왔는바, 연결함으로써 지역간 단절 해소로 낙후 지역의 개발 촉진 필요
- 대산항, 관광자원(안면도, 천수만, 원산도 등)에의 접근성 향상과 국토 공간 활용의 효율성 도모 필요, 교량 건설 시 1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사업추진내용

- 서산시와 태안군 가로림만 해상이 연결돼 있지 않아 약 79.4km를 우회해야 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효율이 유발 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도 38호 노선 연장 사업은 국도 38호선과 지방도 603호선을 연결해, 수도권 등지에서 태안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충남의 SOC 최대 현안 사업임.



→서산시와 태안군 지역 간 단절 해소로 충남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  
→서천~보령~태안~대산을 잇는 서해안권 관광 인프라 구축

28

## 5.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 ■ 환경·안전 분야

#### 환경 인프라 및 방재 인프라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안전한 삶의 공간 확보

정책  
목표

청정 충남 구현을 위한  
환경 인프라 공급 확충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민의  
삶의 공간 조성

노후 시설을 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

자연재해/사회적 재난으로  
부터 안전한 지역 방재 인  
프라 확충

핵심  
프로젝트

#### 1. 안홍항내진보강

- 태안 안홍항의 동방파제 구간의 내진보강사업
- 동·서 방파제 319m 구간의 내진보강을 2020년까지 완료

#### 2.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시설 확충

- 긴급/일반 하수관로 정비구간 61km 우선 반영
- 부족한 하수시설의 지속적 확충

#### 3. 금강 생태복원클러스터 조성

- 천수공간 재자연화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구성
- 사업비는 총 6,800억원 규모

#### 4. 외연도항 재정비사업

- 1994년 완공된 노후 외연도항을 재정비
- 서방파제 보강 및 부잔교 신설

#### 5. 아산호-삼교호-대호호 수계연결

- 아산호-삼교호-대호호 12.8km 구간을 용수로로 연결
- 830억원 사업비 소요

#### 6. 충남지역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예산군에 추진
- 2018년 1개사업 본격 착수

29

## 5.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프로젝트  
예시

###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 연결

#### 사업추진배경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 빈도가 잦아지고 특히 충남 서북부지역은 기상 가뭄에 취약하다. 간척지가 많아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강우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 유역면적 또한 부족해 저수지 등 안정적인 수원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계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지역은 물이 충분한데도 활용할 수 없어 가뭄에 시달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사업추진현황

- 2017년 5월 열린 국무조정실 제3차 통합 물관리 상황반 회의에서는 신규사업 타당성이 논의
- 2017년 6월에는 사전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농림식품부와 협의해 기획재정부 제출
- 긴급사업인 만큼 지난 7월 정부 추경에 기본조사비 25억원을 반영시킴

#### 사업추진내용

- 수원 다변화정책으로 아산호~삽교호~대호호 12.8km 구간을 용수로로 연결을 모색 중
- 해당 사업은 아산호~삽교호~대호호 12.8km 구간을 용수로로 연결하는데, 용수로는 개거 3.8km, 터널 2.4km 씩 건설될 예정
- 2021년까지 8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
- 공업용수 대책으로 대산단지 해수담수화시설(2200억원)과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129억원)과 함께 추진 예정

→충남 서북부권 상습 가뭄지역이라는 점에서 아산호와 삽교호, 대호호 수계연결을 통한 효율적인 용수배분을 통하여 충남 서북부지역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용수원 확보로 기대

→아울러 충남 전체의 산업의 발전과 인근 지역의 지역 개발에 있어 중요한 계기될 전망

30

## 5.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 ■ 문화·관광 분야

#### 풍부한 지역의 관광자원의 활용 및 지역의 문화 경쟁력 제고

정책  
목표

풍부한 관광자원 개발과  
인프라 연계

국토의 중심지에서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지역민의 문화예술  
생활화 / 산업화

공공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

핵심  
프로젝트

#### 1.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

- 공주, 부여, 익산 등 지역내으로 충남은 18개소 건설
- 공주, 부여지역만 10,370억원

#### 2.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 충남, 세종, 전북, 내륙지역을 포괄하는 사업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의거 진행 중

#### 3.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여관광개발

- 천안 담현천문달빛마당 등 18개 사업으로 구성
- 천안2개, 아산 2개 사업 등 15개사업 모두 해당

#### 4. 해양라이프케어단지 조성사업

- 충남 해양치유 자원과 관광자원의 연계 목적사업
- 해양헬스케어시험단지 등 건립

#### 5. 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

- 서해안의 잠재적인 자원을 활용한 전통어촌민속마을 재현
- 어촌가옥단지, 어촌민속박물관 등 건립

#### 6. 태안해상관광테마특구 조성

-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일원에 마리나항, 테마파크 등 조성
- 해외관광객 유치기 목적

31

## 5.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프로젝트  
예시

### 어촌민속마을 조성 사업

#### 사업추진배경

- 급속한 어민의 고령화, 어촌지역 경제활동 인구감소로 소규모 어촌의 폐촌 가속화, 내륙지역과 차별화된 전통적인 어촌민속문화 보존 절실
- 그동안 수산물 생산 위주의 정책으로 수행되어, 문화·복지를 포함한 생활전반에 걸친 정책추진 한계
- 서해안의 잠재적인 자원(갯벌, 어구, 어법 등)을 활용한 전통어촌민속마을(촌)을 재현하여 전통문화 교육 및 관광콘텐츠로 활용

#### 사업추진현황

- 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은 잊혀져가는 어촌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의 미선정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음.
- 충남은 사업을 구체화하여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제안할 예정

#### 사업추진내용

- 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은 충남 연안 어촌 또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
-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00억원으로 국비 173억, 도비 113억, 시군비 114억이 투자됨.
- 사업내용은 어촌가옥단지, 어촌민속박물관 건립 등을 통하여 전통적인 어촌의 전통민속문화 보존과 체험현장을 조성한다는 것임.
- 1단계 조성 후 민자유치로서 2단계 세부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

→ 「한국 어촌민속마을 조성」을 통하여 사라져 가는 전통어촌문화를 보존·복원하고 충남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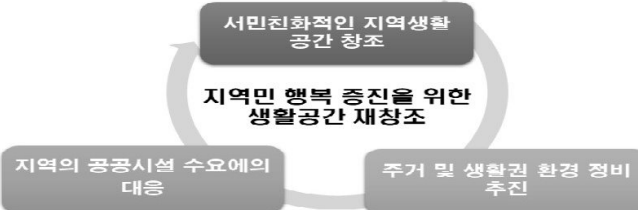
32

## 5.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 ■ 주거·도시 분야

#### 충남도민들의 주거 및 정주환경의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유도

정책  
목표



핵심  
프로젝트

#### 1. 시구체역 체험형 교육홍보센터 건립

- 홍성군 일원에 체험형 교육홍보센터 건립
- 농가 및 국민대상 교육, 홍보시설

#### 2. 4차 산업 대응 인력 양성 센터 건립

-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센터 건립
- 양성센터 사업비 1,500억원

#### 3.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 현재 시범사업을 확장, 도시재생사업 수요에 대응
- 현재 충남 1차 신청된 건수는 102건

#### 4. 해양연구교육인프라 구축

- 현재 해양수산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수요 증부
- 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수산대학 등 구축

33

## 5.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프로젝트  
예시

### 4차 산업 대응인력 양성 센터 건립

#### 사업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을 기반으로 ICT 등 정보화 기술과 융합되는 기술혁명의 새로운 시대 도래
- 융합기술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분야 산업의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특히, 분야별·산업별 분절된 현 인력양성 교육시스템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인력 부족
- 자율형전기자동차 산업에 있어 자동차, 배터리, ICT 및 AI 등 각각의 전문가는 있으나 산업 전반을 아우를 고급인력 부족

#### 사업추진현황

- 충남은 타 시도 대비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스마트팩토리 등 4차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
- 제조업 대 기타 산업 비중 : (충남)제조업 6 : 기타 4, (전국)제조업 4 : 기타 6
- 충남은 사업을 구체화하여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제안할 예정

#### 사업추진내용

- 스마트팩토리 학과, 센서산업 등 소재분야 및 공통과정(코딩)운영. 전문가양성과정이므로 단기(6개월~1년)과정이 아닌 최소 2~4년 과정 운영
- 교육내용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계의 인력수요조사(전공 및 분야 등)를 통해 융복합 학과·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 및 연구 수행
- (예시) 스마트팩토리 학과 : 공장자동화 (전기·메카트로닉스)+센서개발(전자과)+ICT개발(컴퓨터)
-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센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00억원으로 소요되는 부지는 23,140㎡, 건축연면적 43,966㎡ 규모로 추정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산업구조개편이 이루어져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관련분야의 인재 집중 양성

34

## 5.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프로젝트 종합 : 교통/물류 63.8%, 산업/경제 14.0%, 환경(상하수도 등) 6.3%, 주거/교육/복지 3.0%, 문화/관광/체육 12.9%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 78.8%, 노후 인프라 프로젝트 21.2%

-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는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등 23건 제시
- 노후 인프라 프로젝트는 외연도항 재정비사업 등 11건 제시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 교통/물류 ■ 산업/경제 ■ 환경 ■ 주거/교육/복지 ■ 문화/관광/체육



[노후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 교통/물류 ■ 산업/경제 ■ 환경 ■ 주거/교육/복지 ■ 문화/관광/체육



35



## 5.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분야	사업명	예정사업 기간	사업비 (억원)	비고
산업 · 경제	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	'18~'22	3,000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미래기술융합센터·테스트 베드 구축	'18~'22	500	민자 100억 포함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18~'22	1,684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	'17~'22	2,000	추후 중국자본투자 2~4조원 예상
	서해 해수담수화사업 집적단지	'18~'27	9,600	
	국방산업단지 개발	'16~'20	806	현재 설계비 5억 투입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18~'23	2,500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17~'22	389	
	소계		20,479	
교통 · 물류	장항선 복선전철화 조기 추진	'18~'22	6,765	
	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 추진	'19~'24	18,760	'18년 기본계획비 50 억 반영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19~미정	42,700	충남 신설구간 170.85km 반영

36

## 5.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분야	사업명	예정사업 기간	사업비 (억원)	비고
교통 · 물류	천안역 개선사업	'18~'21	170	천안역 증개축만 포함, 기타 지역개발은 별도
	독립기념관 수도권전철 연결	'18~미정	3,300	
	당진~아산 고속도로	'18~미정	10,702	천안~아산구간 기착 공(2015.2월)
	국도 38호노선 연장 및 교량 건설	미정	2,000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18~'23	2,235	
	해삼산업 복합단지	'18~'20	5,210	세부 15개사업으로 구성
	당진 복합물류단지	'16~'20	1,320	
	소계		93,162	
환경 · 안전	안흥항 내진보강	'18~'20	120	여타 충남 국가어항 내진보강 순차 시행 필요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시설 확충	'18~	655	긴급 및 일반보수 구 간 우선 비용
	금강 생태복원 클러스터 조성	'18~미정	6,800	전체 사업중 시설비 만 계상
	외연도항 재정비	'19~'24	327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 연결	'18~'21	830	
	충남지역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8~'21	448	5개 시·군 대상
	소계		9,180	

37

## 5.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분야	사업명	예정사업 기간	사업비 (억원)	비고
문화 · 관광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사업	‘17~’38	10,370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17~26	2,129	충남지역 11개사업 만 반영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18~	3,300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해양 라이프케어단지 조성사업	‘20~’25	1,000	
	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	‘18~’22	400	
	태안 해상관광테마특구 조성사업	‘18~’21	1,560	
	소계			0
주거 · 도시	AI 구제역 체험형 교육홍보센터 건립	‘18~’20	140	
	4차 산업 대응인력 양성센터 건립	미정	1,500	‘18년 기본계획비 50 억 반영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18~	2,000	도시재생 지역단위개 발사업의 평균 사업 비를 바탕으로 추정 (20억)
	국립 해양수산대학교 건립	‘18~’25	552	
	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설치	‘19~’20	200	
	소계			0
총계			145,972	

38

## 6. 정책과제 및 기대효과

중앙정부의 지역 인프라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지원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조달방안의 다양화

중앙정부의 효율적 예산 배분 및 지방정부 지원 확대, 지방정부의 자주권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01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인프라의 확충과 정비를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장치 필요 : 교통·에너지·환경세 등</li> <li>시설물 종류별 성능(효율성)지수를 측정 → 성능미달 분야/지역부터 투자 우선순위배분</li> <li>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의 부담비율 상향 조정으로 지원 강화 : 국가보조금, 특별 교부세 등</li> </ul>
02 민간투자사업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자 대상 사업의 현행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li> <li>정부고시사업(민간투자 사업 사전 고시) 활성화</li> <li>부족한 인프라 투자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rehabilitation) 유형의 민자 사업 활성화</li> </ul>
03 지방세 총량과 과세자주권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부여 권한 이양</li> <li>지방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방채 발행 효율화</li> <li>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활성화 : 국가발전과 지역개발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조정하고 계약방식을 통해 공동 추진</li> </ul>

39

## 6. 정책과제 및 기대효과

중앙정부의 지역 인프라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지원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의 다양화

노후 인프라 투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법규 마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유도

04

### 노후 인프라의 재투자 실행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의 실효성 제고 필요(안정적·정기적 재원 조달 부문 포함)
-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안전 특별회계」 설치 검토

05

###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확보

- 실질적인 시공참여 유도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내실화, 공공 공사 분할발주 등 역량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 보호 육성 정책 운영 필요
- 공사비 정상화 및 공사 품질 확보: 적정 수준의 기초금액 산정 및 예정 가격 작성 시 합리적 이유 없는 금액 삭감 금지, 기초금액이 부당하게 산정된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실효성 제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 계획을 1~2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 필요, 정기적인 계획 수립·이행체계 및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포함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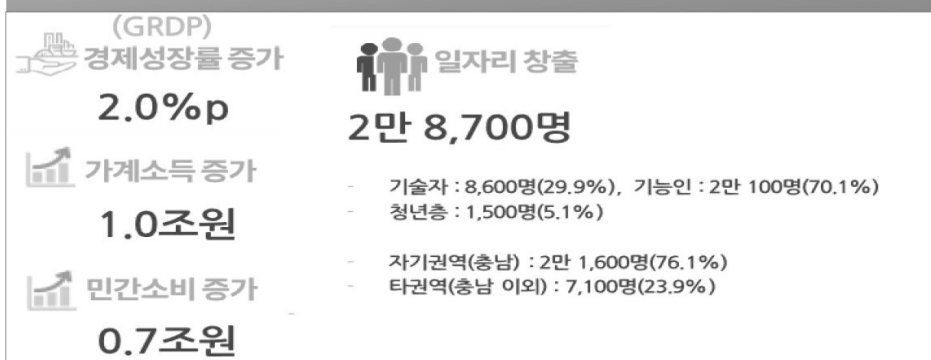
## 6. 정책과제 및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추가적인 14.6조원의 인프라 투자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연평균) 충남 GRDP 증가율 2.0%p ↑, 일자리 2만 8천여개 창출

- 인프라 투자 규모 추정: 14.6조원(향후 7년간 연평균 2.1조원) 추가 투입시 사회적 취약계층(건설기능인력)의 일자리 보호 및 가계소득 증진에 효과적

충남 핵심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집행 시 경제적 파급효과



41





